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주제 해설  
기초자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1. 12

(주)역사문화사



# 제 출 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귀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주제  
해설 연구”의 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2. 1

주요연구기관 : (주) 역사문화사

연구책임자 :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호(전국대 강의교수)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정우열(경운대 교수)

한상인(경일대 교수)

이학준(한림대 교수)

강위원(전 경일대 교수, 사진학, 역사문화사 대표)

교정·교열: 성주현 (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상임연구원)

감수: 장석홍(국민대 교수), 강규형(명지대 교수)



# 목 차

연구개관 .....	1
------------	---

## 대한민국의 태동

I. 대한민국의 태동 .....	9
1.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	12
1)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	14
(1) 서양 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	15
• 조선인의 서양 문물 접촉 .....	15
•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선 출몰 .....	17
•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	19
• 동학의 개창 .....	21
•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	23
•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	25
•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	27
• 병인양요 .....	29
• 신미양요 .....	32
(2)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	34
• 개화파 .....	34
•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	36
• 강화도조약 .....	38
• 수신사, 조사시찰단 .....	40
• 영선사 .....	43
• 서구열강과 통상조약체결 .....	45
•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	47
• 근대문물의 수용 .....	50

(3) 개화운동과 국권위기 .....	52
• 정국의 동요와 외세의 간섭 .....	52
• 신문명예의 문호개방 .....	54
•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정국 .....	56
• 갑오개혁 .....	58
•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 .....	60
2)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	62
(1) 독립협회의 개혁운동 .....	64
• 독립협회 .....	64
•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	66
• 의회설립 운동 .....	69
(2) 대한제국 선포와 대한국 국제 공포, 광무개혁 .....	72
• 대한제국의 선포 .....	72
• 독립협회 해산과 대한국 국제 공포 .....	75
• 광무개혁과 부국강병 노력 .....	77
• 철도와 전기의 시대 개막 .....	80
3) 캡슐 .....	82
(1) 캡슐 : 태극기의 유래 .....	82
• 태극기 .....	82
• 애국가 .....	85
• 무궁화 .....	87
4) 국권상실의 충격 .....	89
(1)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	92
• 영일동맹 .....	92
• 대한제국의 중립화운동 .....	94
• 러일전쟁 .....	96
• 가츠라태프트 밀약 .....	99
•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	102
• 일본의 독도 침탈 .....	105
• 헤이그 특사 파견 .....	107
•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	110

(2) 국권회복운동 .....	113
•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	113
• 을사의병 .....	116
•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정미의병- .....	118
• 애국계몽운동 .....	121
•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	124
• 국채보상운동 .....	127
•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	129
•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	131
• 장인환 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	134
• 안중근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	137
<b>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b>	<b>140</b>
1)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	142
(1)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와 수탈정책 .....	143
• 일본의 한국병합 .....	143
•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	145
• 지방행정구역개편 .....	147
• 토지조사사업 .....	149
• 경제수탈 .....	151
(2) 일제의 민족분열과 황민화 정책 .....	153
• 일제의 민족분열정책 .....	153
• 일제의 황민화정책 .....	155
(3) 일제의 대륙침략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	157
• 중일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	157
• 정신동원 .....	159
• 인력동원 .....	161
• 물자동원 .....	163
2)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	164
(1) 3·1운동 .....	166
• 제1차 대전의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	166

• 광무(고종)황제 승하 .....	168
• 3·1운동의 발발 .....	170
•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의의 .....	173
(2) 국내민족운동 .....	176
• 문화운동 .....	176
• 언론운동 .....	179
• 교육운동 .....	182
• 학생운동 .....	185
• 여성운동 .....	187
• 의열투쟁 .....	190
• 소년운동 .....	193
• 농민운동 .....	195
• 노동운동 .....	198
• 물산장려운동 .....	201
• 사회주의운동 .....	204
• 6·10만세운동 .....	207
• 신간회 .....	209
3)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	211
(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	213
• 각지의 임시정부 수립운동 .....	213
• 대한민국임시헌장 .....	215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	217
•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	219
•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	222
• 국민대표회의 .....	224
• 민족유일당운동 .....	227
•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	230
•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	233
(2) 중경시기의 임시정부 .....	235
• 중경 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 .....	235
• 좌우합작정부 수립 .....	237

(3) 해외독립운동 .....	239
•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	239
•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	241
• 봉오동, 청산리 대첩 .....	243
•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	245
•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	247
•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 .....	249
•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	251
• 조선의용대 .....	253
•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	255
•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	257
•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운동 .....	259
•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	261
• 미주지역 독립운동 .....	263
• 대한인국민회 .....	265
• 구미위원부 .....	268
•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	271
•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	274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	277
• 일본지역 독립운동 .....	279
•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	281
4) 캡슐 : 대한민국 국호제정과 임시헌법 .....	283
• 국호의 변천사 .....	283
• 대한민국 국호 제정 .....	284
• 대한민국임시헌법 .....	287
<b>3. 1945년 8·15광복 .....</b>	<b>289</b>
1) 1945년 8·15광복 .....	291
(1) 중경임시정부의 국내진공 및 건국 준비 .....	291
• 광복군 .....	291
•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전개 .....	293
•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	295
• 대한민국건국강령 .....	297

• 광복군의 OSS 연합작전 훈련과 참전 .....	299
(2) 국내의 동향 .....	301
• 건국동맹 .....	301
• 일제 말기의 국내동향 .....	303
• 제주도 - 최후의 일제거점 구축 .....	305
(3) 서구열강의 독립확인 .....	307
• 카이로 선언 .....	307
• 알타회담 .....	309
• 포츠담 선언 .....	311
(4) 일본의 패망과 광복의 환희 .....	313
• 일본의 패망 .....	313
• 광복의 환희 .....	315
2)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	316
(1) 미소의 한반도 점령과 38선 설정 .....	317
• 소련의 참전 .....	317
• 38선 .....	319
•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소련의 한반도 정책 .....	321
• 미국군의 남한 진주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	323
(2) 임시정부의 환국과 국내 제단체들의 움직임 .....	325
• 임시정부의 환국 .....	325
•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	327
• 한국민주당 .....	329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331
• 조선공산당 재건 .....	333
(3) 미군정기 사회 .....	335
• 해외동포의 귀환 .....	335
• 해방정국의 혼란 .....	337

##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II.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	341
1.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	344
1)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	347
(1)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	349
• 냉전 .....	349
• 모스크바삼상회의와 북한체제의 구축 .....	351
•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	353
•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	355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	357
•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	359
• 북한임시헌법초안 .....	361
• 남한체제의 구축 .....	363
• 미소공동위원회 .....	365
•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	367
2) 5·10선거와 헌법제정 .....	369
(1) 5·10총선거 실시 .....	370
•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문제 UN상정 .....	370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	372
• 총선 및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갈등 .....	374
• 남북협상 .....	376
• 5·10총선거 .....	378
(2)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	380
• 제헌의회의 구성 .....	380
• 대한민국 제헌헌법 .....	382
• 제헌헌법의 정치체제 .....	384
• 제헌헌법의 경제체제 .....	386
• 제헌헌법의 사회문화 규정 .....	388

3) 대한민국 정부수립 .....	390
(1) 대한민국의 출범 .....	391
• 제헌국회의 대통령 선출 .....	391
• 3부요인 선출 .....	393
• 정부조직법과 초대내각 구성 .....	395
•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	397
• 첫 국무회의 .....	399
•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	401
• 국군창설 .....	403
(2) 대한민국 출범 초기 상황과 북한정권 수립 .....	405
• 제1공화국 경제정책 .....	405
• 반민특위 구성과 활동 .....	407
• 정부출범 초기 혼란 .....	409
• 북한정권 수립 .....	411
• 북한초대내각 구성 .....	413
(3) 대한민국정부 UN 승인 .....	415
• 유엔 대한민국 정부 UN 정식 승인 .....	415
<b>2. 6·25전쟁과 전후 복구 .....</b>	<b>417</b>
1)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	419
(1)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	420
•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	420
• 중국의 공산화 .....	422
• 김일성의 남침 준비 .....	424
• 6·25남침 .....	426
•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	428
• 유엔군 창설 .....	430
• 한강방어선 .....	432
• 학도의용군 .....	434
• 낙동강 방어선 .....	436
• 인천상륙작전 .....	438
• 서울수복 .....	440
•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	442

•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	444
• 흥남철수작전 .....	446
•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	448
•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	450
(2) 전쟁피해 .....	452
• 6·25전쟁의 피해 .....	452
(3) 휴전 .....	454
• 휴전회담 .....	454
• 휴전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과 정책 .....	456
• 휴전반대운동 .....	458
• 휴전협정 .....	460
(4)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462
• 거제포로수용소 .....	462
• 반공포로 석방 .....	464
• 한미상호방위조약 .....	466
2)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	468
(1) 전쟁과 삶 .....	469
• 전쟁속의 사람들 .....	469
• 전쟁과 문화 .....	471
• 전후의 사회변화 .....	473
3)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	475
(1) 전후 복구 .....	476
• 전후복구사업 .....	476
• 전후 경제재건 .....	478
• 전후 원조 경제 : 삼백산업, 미 잉여농산물원조협정 .....	480
(2) 한국군 현대화 작업 .....	482
• 미 군사고문단 .....	482
• 국군증강 .....	484
• 교육훈련기관 정비 .....	486
• 맨 플리트 장군 .....	488

(3) 독도영유권 .....	490
• 독도 영유권 .....	490
• 이승만 라인 .....	492
<b>3. 근대국가 토대 구축 .....</b>	<b>494</b>
1)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	496
(1) 농지개혁 .....	497
• 농지개혁 .....	497
(2)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의 토대구축 .....	499
• 경제개발3개년계획 .....	499
• 원자력연구소 설립 .....	501
2) 1950년대 사회 문화 .....	503
(1) 1950년대 사회 문화 .....	504
• 인구폭발 .....	504
• 교육의 확대 .....	506
• 사회문화상 .....	508
• 서구문물의 전면적 유입 .....	510
• 전쟁 속에서도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	512
3)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	514
(1)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	515
• 발취개헌 .....	515
• 사사오입개헌 .....	517
• 민주당 탄생 .....	519
• 진보당 사건 .....	521
• 경향신문 정간 .....	523
• 제4대 정부통령 선거 .....	525
• 3·15부정선거 .....	527
(2) 4·19혁명 .....	529
• 마산 3·15의거 .....	529
• 4·19혁명 .....	531

4)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	533
(1) 내각책임제 개헌과 민주화 운동 .....	534
• 3차 헌법 개정 .....	534
•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	536
• 장면정부 .....	538
•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	540
• 4·19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	542
•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	544
(2) 5·16군사정변 .....	546
• 5·16군사정변 .....	546
• 국가재건최고회의 .....	548
•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	550
• 대통령 선거 .....	552
• 제6대 국회의원선거 .....	554
• 제3공화국 출범 .....	556
5) 캡슐 .....	558
• 대한민국의 저력과 교육의 힘 .....	558
• 여성, 차별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	562

##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b>Ⅲ.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b>	<b>569</b>
<b>1. 경제개발과 산업화 .....</b>	<b>571</b>
1)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	573
(1) 경제기획원 설립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574
• 경제기획원 .....	574
•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및 그 수정 .....	576
(2) 한일회담과 한일수교 .....	578
• 한일회담 .....	578

• 한일관계기본조약 .....	580
• 6·3한일회담반대시위 .....	582
• 대일청구권 문제 .....	584
• 한일수교와 차관도입 .....	586
(3)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	588
•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	588
• 수출제일주의 정책 .....	590
•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금융제도 .....	592
•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594
• 100억불 수출 달성 .....	596
• 울산공업센터 .....	598
• 마산수출자유지역 .....	600
(4) 사회간접자본 확충 .....	602
•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	602
•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	604
• 사회간접자본 확충 .....	606
• 경부고속도로 .....	608
• 다목적댐 건설 .....	610
• 에너지 확보 .....	612
• 도시가스 건설 .....	614
(5) 제3공화국의 국제관계 .....	616
• 남북체제경쟁과 국제외교 .....	616
• 베트남 파병 .....	618
• 제3세계 국가 외교 .....	620
• UN 외교 .....	622
2)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	624
(1)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	625
• 과학기술처 발족 .....	625
•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	627
•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	629
• KIST 설립 .....	631
• 대덕연구단지 조성 .....	633

• 한국과학원 설립 .....	635
•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	637
• 기능인력 양성 .....	639
• 기능경진대회 .....	641
(2) 식량자급, 생명과학, 통일벼 등 .....	643
• 통일벼와 식량 자급화 .....	643
• 생명과학 .....	645
3) 산업역군의 해외 진출 .....	647
(1) 파독 광부와 간호사 .....	648
• 서독 광부 파견 .....	648
• 서독 간호사 파견 .....	650
•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방문 .....	652
(2) 해외건설과 근로자 .....	654
• 베트남진출 .....	654
• 제1차 석유과동 .....	656
• 원유확보비상대책 .....	658
• 중동진출 .....	660
• 중동건설공사 .....	662
• 플랜트 수출 .....	664
• 주베일항만공사 .....	666
•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지역 진출 .....	668
• 리비아 대수로 사업 .....	670
4)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	672
(1) 베트남 파병 .....	673
• 베트남 파병 .....	673
(2) 자주국방의 확립 .....	675
•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 .....	675
•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	677
• 방위세법 제정 .....	679
• 한미 동맹 체제 .....	681

(3) 북한의 안보위협 .....	683
• 북한의 4대 군사노선 .....	683
• 당포함 피격 .....	685
• 1·21청와대 기습사건 .....	687
• 푸에블로호 사건 .....	689
•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	691
• 대한항공납치 사건 .....	693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695
(4) 국가안보 의식 강화 .....	697
• 반공의 시대상 .....	697
• 향토예비군 .....	699
• 민방위대 조직 .....	701
<b>2.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b>	<b>703</b>
1)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	705
(1) 도시화의 진전과 생활환경의 변화 .....	706
•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 .....	706
• 강남개발과 한강 다리 .....	708
• 신도시 개발 .....	710
• 아파트문화 .....	712
• 핵가족화, 가족계획 .....	714
(2) 새마을 운동 .....	717
• 새마을운동 .....	717
• 농촌사회의 변화 .....	719
• 농어촌 전화사업 .....	721
• 농촌근대화10개년 계획 .....	723
(3) 산림녹화 .....	725
• 경지정리사업 .....	725
• 산림녹화 .....	727
• 주요 도시 그린벨트 지정 .....	729
•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	731

2) 성장의 그늘 :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	733
(1) 초기 산업화와 근로대중의 형성 .....	735
• 노동집약적 산업과 근로대중의 형성 .....	735
• 근로자 소득수준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	737
(2)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의 생활 .....	739
• 저임금 고노동의 노동현장 .....	739
• 도시빈민의 생활 .....	741
• 인력시장 .....	743
• 노동운동 .....	745
• 노동탄압 .....	747
3) 70년대 대중문화 .....	749
(1) 대중문화의 시대 .....	751
• 영화 .....	751
• 음악 .....	753
• 방송 .....	755
• 패션과 대중 .....	757
• 프로스포츠 .....	759
• 드라마 .....	761
• 금지곡, 금지도서 .....	763
<b>3.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b>	<b>765</b>
1)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 한강의 기적 .....	767
(1)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국가 기간산업의 성장 .....	768
• 70년대 한국 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768
• 전자산업 육성 .....	770
• 자동차산업육성 .....	772
• 조선공업육성 .....	774
• 철강·기계 산업 육성 .....	776
• 석유화학산업 육성 .....	778
(2)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성과 .....	780
• 통계로 보는 경제 성장 .....	780

• 정부, 기업, 국민의 합작으로 이루어낸 경제발전 .....	782
<b>4.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b>	<b>784</b>
1) 1980년대 민주화운동 .....	786
(1) 3선 개헌과 10월 유신 .....	787
• 3선 개헌 .....	787
• 3선 개헌 반대운동 .....	789
• 유신헌법, 유신체제 .....	791
• 통일주체국민회의 .....	793
• 김대중 납치사건 .....	795
• 유신반대 운동 .....	797
• 긴급조치 1~9호 .....	799
(2) 부마항쟁과 박정희 대통령 시해 .....	801
• YH사태와 김영삼 의원 제명, 부마사태 .....	801
• 10·26대통령시해사건 .....	803
(3)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민주화운동 .....	805
• 12·12군사반란 .....	805
• 서울의 봄 .....	807
• 전국비상계엄확대 .....	809
• 5·18민주화운동 .....	811
• 제5공화국 헌법 .....	813
• 제5공화국 출범 .....	815
(4) 6월 민주항쟁 .....	817
•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	817
•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	819
• 6·10항쟁 .....	821
• 6·29선언 .....	823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825
2) 민주주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	827
(1) 중산층의 성장 .....	828

• 중산층의 성장 .....	828
• 중산층 문화의 형성 .....	830
(2) 각 부문 자유화, 민주화 조치 .....	832
• 통행금지 해제 .....	832
• 정치민주화 .....	834
• 평화적 정권교체 .....	836
• 경제민주화 .....	838
• 지방자치제 실시 .....	840
• 해외여행 자유화 .....	842
(3) 각종 시민단체의 형성 .....	844
• 시민단체의 형성과 활동 .....	844
3) 남북관계의 명암 .....	846
(1)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	848
• 남북적십자회담 .....	848
• 7·4남북공동성명 .....	850
• 남북회담 .....	852
• 남북고위급 회담과 기본합의서 .....	855
• 남북비핵화공동선언 .....	858
•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	860
•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	863
• 남북교류 .....	865
• 이산가족 찾기 .....	868
• 금강산 관광 .....	870
• 개성공단 .....	872
• 아웅산 테러사건 .....	874
• KAL기폭파사건 .....	876
• 남침땅굴사건 .....	878
•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	880
•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	882
• 금강산 총격사건 .....	884
• 천안함 폭침사건 .....	886
• 연평도 포격사건 .....	888

4)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	890
(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	891
• 이승만 .....	891
• 윤보선 .....	893
• 박정희 .....	895
• 최규하 .....	897
• 전두환 .....	899
• 노태우 .....	901
• 김영삼 .....	903
• 김대중 .....	905
• 노무현 .....	907
• 이명박 .....	909

##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b>IV.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b>	<b>913</b>
<b>1.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b>	<b>916</b>
1)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	918
(1) 스포츠의 영웅들 .....	920
• 한국 스포츠의 영웅들 .....	920
(2) 서울올림픽 .....	922
• 88올림픽 유치전 .....	922
• 88올림픽 개최 .....	924
• 88올림픽의 성과 .....	926
(3) 2002 한일월드컵개최 .....	928
• 2002월드컵 유치전 .....	928
• 2002월드컵 개최 .....	930
• 월드컵 길거리응원 .....	932
(4) 대한민국 그랜드 슬램 달성 .....	934

• 대한민국 그랜드 슬램 달성 .....	934
2)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	936
(1)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	938
• 문화유산,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 .....	938
(2) 대중문화 한류 .....	940
• 한류 .....	940
• 한류음악(K-POP) .....	942
• 한류 드라마 .....	944
• 전통문화와 한류 .....	946
• 한류의 경제적 효과 .....	948
(3)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인 .....	950
•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인 .....	950
3)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	952
(1) 국가별 해외 한인사 .....	954
• 중국 동북지방 .....	954
• 미국, 캐나다 .....	956
• 멕시코, 쿠바 .....	958
• 남미 .....	960
• 일본 .....	963
• 연해주 .....	965
• 사할린 .....	967
• 중앙아시아 .....	969
• 코리아타운 .....	971
• 재일동포 .....	973
• 형태별 이주 .....	975
• 해외봉사단체 .....	977
<b>2.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b>	<b>979</b>
1) 첨단기술의 발전 .....	981
(1) 반도체 기술 1위의 역사 .....	982

• 반도체 기술 .....	982
(2)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	984
• 국내 최초 개발 휴대폰 .....	984
• 무선호출기와 시티폰 .....	986
• 세계 최초 기술 개발 휴대폰 .....	988
•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성장 .....	990
• 휴대폰 수출 .....	992
(3) 첨단기술 개발 .....	994
• 우주항공 산업 .....	994
• 첨단 과학기술 .....	996
• 생명과학 .....	998
• 원자력기술 .....	1000
• 첨단토목기술 .....	1002
• 쇄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	1004
• 하이브리드 자동차 .....	1006
2) 삶의 질 향상 .....	1009
(1) 복지제도의 변화 .....	1010
• 의료보험제도 .....	1010
• 국민연금 .....	1012
• 기타복지제도 .....	1014
• 주5일 근무 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	1017
•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	1019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	1021
•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	1023
(2) 국민 생활의 변화 .....	1025
• 교육 .....	1025
• 주택 .....	1027
• 환경 .....	1029
• 문화 .....	1031
• 경제 .....	1033
• 체육 .....	1035

3)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	1037
(1) 경제선진국으로의 성장 .....	1038
• 세계 속의 한국경제 .....	1038
<b>3. 대한민국의 미래 .....</b>	<b>1040</b>
1) 대한민국의 미래 .....	1042
(1) 다문화 사회 .....	1044
•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과제 .....	1044
(2) 환경을 위한 노력 .....	1046
• 자연보호운동 .....	1046
• 대체에너지 개발 .....	1048
• 친환경 유기농업 .....	1050
• 녹색성장 .....	1052
• 생태계 복원 .....	1054
(3) 개도국 지원 .....	1056
• 개도국 지원 .....	1056
(4)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 .....	1058
•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	1058
(5) 글로벌 지도력 .....	1060
• UN사무총장 .....	1060
• G20정상회의 .....	1062
(6)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	1064
• 세계선도 국가 대한민국 건설 .....	1064

## 일러두기

1. 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주제 해설 연구”의 최종결과보고서는 기존 연구를 수렴하여 최대한 객관성과 균형된 시각을 갖추고자 했다.
2. 본 최종결과보고서 소주제의 경우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작성하였다.
3. 본 최종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정리하였다.

예)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강화도조약

개화파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 강화도조약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 연구개관

## I. 추진목적

이 연구용역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가. 전시물, 전시설명을 위한 설명자료 수집 및 연구, 정리
- 나. 전시 안내 및 내용에 대한 텍스트북 형식으로 정리
- 다. 전시주제의 분야별 역사 정리
- 라. 관람객 수준에 맞는 설명 자료 확보

## II. 추진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설명문 연구용역사업은 박물관 측에서 제시한 과업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다.

- 대주제(20매) 4개
- 중주제(10매) 13개
- 키워드 (7매) 38개
- 히스토리 캡슐(30매) 4개
- 키워드 당 15~20개 소항목(10매) 총 700개 내외의 원고작성
- 소항목과 관련한 관련 사진자료 500장(캡션 포함)

## III. 추진방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설명문 연구용역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진행한다.

- 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 내용이 정확하고, 균형감 있으며, 명료하게 관람객에게 전달되어 박물관 건립목적을 달성하도록 함
- 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자료 콘텐츠를 구축하여 향후 보완, 확장,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함
- 다. 원고작성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항목은 정의, 배경, 발달, 전개, 결과, 의의, 핵심어, 참고문헌 등으로 소제목 하에 정리한다.
- 라. 대주제, 중주제, 키워드는 위의 소제목 구분을 하지 않는다.
- 마. 사진은 엑셀화일로 리스트와 썸네일 형태로 사진을 정리하고, 원본사진은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여 사진의 엑셀 리스트, 원본 사진, 원고의 사진자료 표시와 일치시킨다.

#### IV. 추진방향

전시 주제별(대주제·중주제·키워드 등) 해설문 작성에는 역사박물관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을 따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 역사박물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서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 목적, 전시 방향 등 충분히 숙지한다.
- 역사적 해석·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의 서술 지향
  -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 최대한 반영한다.
- 주제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해설문 작성
  - 참고문헌·자료 첨부(저작권 저촉 유의), 필자 명시한다.
- ‘히스토리 캡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 역사 기술

#### V. 연구추진

##### 1. 소항목 선정

집필 소항목은 역사박물관의 전시 내용과 메시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항목, 중항목, 키워드는 역사박물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토의되어 전시기획안으로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소항목의 선정작업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전체적인 역사상을 형상화해야 하는 일이다. 항목 조정작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의 개항 이전의 역사에서 지나치게 피동적, 수세적, 강대국의 희생 제물이 된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만 서술된 인식에서 탈피하여 우리 안에 성장발전의 동력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둘째, 개항 이후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근대사회로의 역사발전의 면모를 드러내고, 또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도 드러낸다.

셋째, 외세의 국권침탈에 저항하는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에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 헌신, 희생을 드러냄으로써 국민국가의 의식과 정신이 한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낸다.

넷째, 일제하 끈질긴 독립운동의 정신을 부각한다.

다섯째,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해방 후의 혼란 속에서 자유경제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을 세웠으며, 북한정권의 경우 남한의 단독선거 이전에 이미 독자적인 정권수립과정을 시작했음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드러낸다.

일곱째, 6·25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알게 하고, 전쟁의 과정과 그 후 유증, 전후 복구과정을 알게 한다.

여덟째, 해방 이후 많은 정치적 혼란이 있었으나 6·25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유지되었던 점도 부각한다.

아홉째, 산업화의 소중한 경험과 성취의 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균형된 이해를 하도록 한다.

열째, 현재의 발전상을 서술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 2. 항목검토 조정

역사박물관 실무진은 역사문화사의 소주제안을 놓고 이를 확충하여 대주제 4, 중주제 13, 키워드 37, 소주제-1 160, 소주제-2 702개 합 916개 항목의 소주제안을 마련했다. 이 소주제안을 놓고 2011년 9월 19일(월) 소주제 검토조정회의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토한 바로는 이 소항목 목록은 박물관 측과 (주)역사문화사가 먼저 검토한 다음에 회의 전에 자료를 배포하여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9월 21일 오후 3시에 박물관에서 역사박물관 실무진과 역사문화사 책임연구자와 소주제 조정회의를 하기로 하고 모임을 마쳤다.

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회의실에서 역사박물관의 관계자들과 전시소주제 조정정리작업을 하였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모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기본 원칙으로, 첫째, 전시설명이므로 세세한 소주제의 나열을 지양한다. 둘째, 개개의 사건 하나하나보다 우리 역사의 흐름과 그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모임에서 침삭된 소주제 목록을 정리하여 역사박물관에서 역사문화사에 제공하였고, 역사문화사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안을 만들어 9월 23일(금) 오전 역사박물관에 보냈다. 역사박물관측은 이 안을 자문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2011년 9월 23일(금) 오후 4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회의실에서 박물관 실무진과 관계위원들, (주) 역사문화사 책임연구원과 함께 제2차 소주제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에는 박물관 측과 (주) 역사문화사가 사전 조정안을 검토자료로 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평가, 결정되었다.

첫째, 수정보완된 소주제 안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되었다.

둘째, 여전히 세세한 사건 항목들은 통합하여 큰 흐름을 보여 준다는 원칙에 충실한다.

셋째, 일부 항목은 수정, 보완, 보충하였다.

넷째, 사진자료 500매의 원본사진을 요구하는 데는 이 연구용역 예산으로 볼 때 무리가 있다. 사진자료는 해당 항목에 어떤 사진자료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정시행한다. 원본 사진 자료 확보는 이 용역사업에서 요구하지 않고, 박물관이 별도 계획에 의해 수집한다.

### 3. 집필자 선정 및 집필

2011년 10월 1일(토) (주) 역사문화사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설명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협의하여 전시 소주제 단위로 필자선정을 했다. 집필지침과 집필양식, 본보기 글을 제공하고, 분량은 3-4개의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0매로 하며, 11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원고를 완료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세부 주제에 있어서는 집필과정에서 추가 합류한 연구자가 있게 되었다.

### 4. 감수

집필된 필자들의 원고는 책임연구원의 1차 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을 거쳐, 수정된 원고에 대해 해방전 독립운동사 부분은 장석홍(국민대 교수), 해방이후 현대사 부분은 강규형(명지대 교수)이 맡아 내용감수를 하였다. 감수에서 지적된 사항은 필자들이 수정 보완 또는 재작성하였다. 이후 역사박물관의 검토 의견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5. 교정교열

감수 후 수정보완을 끝낸 원고는 성주현 책임연구원이 교정·교열을 보아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다.

## 6. 편집

교정·교열을 끝낸 원고는 순서를 맞추고 역사박물관에서 제시한 편집 양식에 따라 모든 원고의 양식을 통일적으로 재편집하였다. 여기에는 항목체계 표시, 본문 구분 표시, 참고문헌 표시 등이 새롭게 정리되었다.

또한 사진수집을 담당한 두 연구자의 엑셀 프로그램상의 사진 리스트를 하나로 통합하며, 모든 제목을 재검토 정리하고, 전시소주제와 맞추었으며, 리스트상의 제목을 원본 파일의 제목과 원고의 【사진자료】 제목을 일치시켰다.

## 7. 결과

이상의 사업추진과정과 방향, 목표, 방침에 의해 작업된 결과물을 2011년 12월 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제출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완료하였다.



I

# 대한민국의 태동



##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다. 농업과 농촌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인정과 덕치의 정치, 문반 무반의 양반 관료제, 과거를 위한 유교철학과 인문교육, 조상 제사를 비롯한 유교적 생활문화 속에서 500년간 이어온 국가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다. 조선의 세계관에는 중국이 중심에 있었고, 일본과 여진 등 주변 국가 또는 민족은 주변적, 부수적인 요소로서 결정적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적어도 서양세력이 동아시아로 뻗어오기 전까지 체제는 왜란과 호란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원래의 유교적 지배체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복원력을 보였다.

###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조선

서양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원료공급과 상품시장을 연결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구축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가 서구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서구 열강의 탐욕은 중국과 동아시아로 뻗어왔다. 거대한 중국이 서구제국에 유린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함포외교에 무릎 꿇고 개항했다. 조선의 해안에 서구제국의 함선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서양의 상품시장으로 개방을 강요하는 압력이 조선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 대외 위기의식과 개항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고수해 왔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함에 따라 친정을 시작한 고종은 대외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생각하고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여 항구를 개방했다. 그해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여 근대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받은 고종과 대신들은 크게 자극받았다. 일본과 같이 당대에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하는 전망이 서게 되었다.

### 내부 문제와 외세 개입

1882년 임오군란은 고종 측근의 부패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여 근대화를 힘있게 추진하려 했던 고종은 측근의 부패로 인해 충격과 도전받게 되었다. 다시 대원군이 권좌에 복귀했다. 고종과 민비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청국 군대를 불러들였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 왕권과 왕실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외세를 불러들이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것이 결국 왕조를 비극으로 몰아갔다. 한번 들어온 외국 군대는 쉽사리 물러가지 않았고, 내정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다.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청국군을 불러들이자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였다.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서 맞부딪혀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이어 러일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패퇴시키고 조선의 국권을 유린했다.

###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3·1운동**

왕과 위정자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의병운동을 조직하여 직접 무장투쟁을 했으며, 학교 설립과 신식교육을 보급하고, 언론 등을 통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양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일본의 무단통치 10년 만에 3·1운동의 거대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터져 나왔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은 근대화를 위해 일본의 2등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주적 독립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 민주적 절차의 공화제 국가라는 대한민국 건국 방향을 확고하게 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런 원칙 위에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고자 했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일제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이는 쉽지 않았다. 마침내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미 OSS와 합동작전을 준비하던 광복군은 원폭 투하로 인한 일본의 조기항복으로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주도적으로 독립국가 수립의 기회를 놓쳤다. 강대국에 의해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 **사회주의 사상 유입과 좌우의 분열**

제국주의의 강력한 통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강력한 사상, 강력한 조직이 요구되었다. 3·1운동 이후 강력한 항일투쟁을 위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었다. 사회주의 사상 연구와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해 갔으나 수차 일제 관헌의 탄압을 겪으면서 괴멸상태에 빠져 잠복했다. 해외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연대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독립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좌와 우로 분열되었다. 좌익과 우익은 신간회에서처럼 때로 합작을 하기도 했으나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광복이 될 때까지 실현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한반도가 미소 양국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점령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부는 미소 양군의 점령하에 있는 조국에 개인자격으로 환국해야 했다.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건국동맹을 조직하여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조직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소의 군정세력과 다양 다기한 국내세력이 얽혀 견제했던 까닭에 임시정부를 비롯한 어느 세력도 해방공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질서 있는 건국을 준비

할 수 없었다.

### 38선의 설정과 분단

독일·이탈리아·일본의 나치즘과 파시즘 등 전체주의국가에 대항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미국과 소련은 종전국면에 들어서면서 전후 세계질서를 놓고 대결국면으로 옮겨갔다. 소련은 동유럽을 위성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유럽 부흥계획(마셜플랜)을 주도하며 반소전선을 이끌었다.

미군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고 지원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먼저 진입하게 된 소련군의 한반도 장악을 막기 위해 38선을 제안했다. 이로써 38선은 분단선이 되어 남과 북을 갈라놓았다.

### 해방정국의 혼란

해방이 되자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의 치안과 대중정치조직을 주도했다. 남한에 상륙한 미군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수립한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경임시정부 모두를 인정하지 않은 채 총독부 지배기구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1945년 말,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찬탁과 반탁,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미 군정이 좌익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조선공산당은 '신전술'로 미 군정에 대항했다. 중도세력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다. 미 군정도 좌우합작을 통해 중간파 정치세력으로 과도입법의원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간좌파가 빠짐으로써 좌우합작은 좌절되었다.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남북 간의 분단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좌우익의 극한적인 대립은 테러로 나타났다.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등이 테러에 의해 숨졌다.

이러한 정치과잉의 혼란 속에 해외 거주 국민들이 귀환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3년간 공식 귀환자는 일본에서 110만 명, 만주에서 30만 명, 중국에서 7만 명, 기타 지역이 3만 명 등 총 150만 명이 넘었으나, 비공식적인 귀환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귀환 해외한인은 300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소련군 점령지역인 사할린 한인의 귀환은 원천봉쇄되었으며, 시베리아나 동남아 전선에 배치되었던 일부 한인들은 연합국의 포로 혹은 '전쟁범죄인'으로 취급 받아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분단과 미 군정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좌우 및 각 정파의 대립과 갈등, 격정과 혼란 속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1945년 8·15광복
-------------------------------------	--------------

19세기 들어 조선 해안에 서구제국의 이양선이 나타나 탐사, 교역, 선교허용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중국에서 아편전쟁(1차 1840~1842)이 일어나자 중국은 물론, 조선과 일본을 격동 속으로 몰아갔다. 청국의 약화를 틈타 러시아는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조선의 문란한 정치와 거듭된 자연재해는 변경 주민들의 만주, 연해주로 집단이주를 촉발했다.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 쇄국정책을 추진했던 대원군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었으나 원남전 정수, 서원철패 등으로 민심을 잃고 실각했다. 친정을 하게 된 고종은 운요호사건을 계기로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약을 체결하여 개항했다. 고종은 일본과 청국에 수신사, 영선사 등을 보내 서구와 일본의 사정을 알며,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신문물 수용과 부국강병정책을 추진하고 미국 등 서구제국과 차례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유생들은 줄기차게 개항반대상소를 했다. 특히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전해지자, 경상도 유생 이만도의 「영남만인소」 등 유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위정척사운동으로 나아갔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은 민씨세력과 대원군의 싸움으로 얽히게 되었다.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은 권좌에 복귀하여 새 제도를 폐기하고 구제도를 복구시켰다. 이에 청국이 개입하여 대원군을 납치하여 중국에 연금하고, 민씨일파의 지원하며, 외교, 내정, 군사부문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민씨정권은 청국에 의지하는 사대당이 되었으며, 청국의 경제적 침투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김옥균 등 젊은 관료들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화정책을 가속화하고자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청국군의 개입으로 정변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조선정부의 청에 대한 의존은 심화되었다.

1894년 전라도 고부의 지방관 탐학이 발단이 된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정부가 청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청국군이 상륙하자 일본도 파병하여 민씨정권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내세워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한편, 청국에 대해 전쟁을 도발했다.(청일전쟁). 이에 동학군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다시 봉기했다. 그러나 일본군과 관군의 탄압으로 패배하였다. 개화파 신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약 5개월간 208건의 개혁안을 처리하였다. 여기에는 청과의 종주관계 청산, 정부조직 개편, 과거제 폐지, 재정의 일원화, 화폐제도 개혁, 양반신분제 타파, 천민신분제 폐지, 공사노비 혁파, 조혼 금지와 과부제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한 개혁이 포함되었다. 이후 제2차, 제3차 개화파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세를 굳히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나서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에 반대하여 요동반도를 포기했

다.(삼국간섭) 이에 민비일파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친러파 정권을 세웠다. 일본은 민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시 김홍집의 친일파 정권을 세웠다. 개화파 정권이 태양력 채용, 단발령 시행 등의 개화정책을 시행하자 명성황후 살해와 단발령에 반발하는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1896년 2월 고종은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고 친러파 정권을 수립하였다.(아관파천) 이로 인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각종 이권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서구제국은 기회균등을 요구하며 조선의 철도, 광산, 삼림 등의 이권을 가져갔다.

나라의 형편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자 1896년 독립협회가 조직되어 정치·사회개혁운동을 전개했다. 독립협회는 자주독립권 확립과 자주독립 의식 고양,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고종의 환궁과 외국에 이권 양여 반대 및 회수운동을 벌였다. 1898년 독립협회는 종로에서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 운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된 자발적인 만민공동회로 이어졌다. 독립협회는 이후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는 의회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897년 1년 만에 환궁한 고종은 국가의 위상을 일신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국왕을 황제로 고쳐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으며 다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광무개혁) 이 시기 토지조사사업인 양전사업과, 상공업 육성, 신식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황제권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독립협회의 의회설립 요구도 민선을 삭제하고 관선으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바꾸어 수용하였으나 이마저 1899년 5월에 해체하여 자문기구화하고, 1899년 대한제국의 헌법적인 「대한국 국제(國制)」를 반포하여 황제의 전제권을 법적으로 선포하였다.

만주와 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도발하고 군대를 한국에 진주시켰다.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굳혀간 일본은 일본인 고문을 통한 내정간섭을 강화하고, 카츠라태프트밀약, 제2차 영일동맹을 맺은 후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보호국화하였으며, 1910년 8월 국권을 병탄하였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하여 전국에서 의병전쟁이 일어났으며,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애국지사들의 조직인 신민회가 조직되고, 학교설립, 학회와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과 언론·출판·역사연구 등의 애국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군사권과 경찰권을 장악한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 한계를 느낀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은 1908년을 전후하여 만주와 연해주에서 합류하여 해외동포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장인환·전명운·이재명 의사가 친일외국고문과 친일파를 처단하고, 안중근은 침략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으나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캡슐: 태극기의 유래 국권상실의 충격
--------------------------------	-------------------------

19세기에 들어 조선 해안에 낫선 모양의 ‘이양선’이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다. 이양선들은 탐사, 교역요구, 선교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은 절대 접촉 금지령이었다.

이 시기 서양인들의 기록에서 두 얼굴의 조선이 있었다. 하나는 권력의 위계가 높을수록 이방인에 거칠고 강경하게 거절하는 조선이었다. 반면에 때에 썩 누더기를 걸치고 고된 노동으로 얼굴이 검게 그을렸으며,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낚아 올리며 깨진 살림 도구가 전부인 오두막에 살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이며, 격의가 없었다. 그들은 이방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공존하는 지혜를 보여 주었다. 민중의 개방성 속에 근대가 숨쉬고 있었다. 호기심과 천진함, 선의와 열림이 거기 있었다.

운요호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외개방을 시작한 조선은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에 충격과 자극을 받고 근대화를 서둘렀다. 개항 이후 1, 2차 수신사 파견을 통해 일본의 발전상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확인한 고종과 대신들은 개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에 이어 미국과 서양 각국과의 통상수호조약이 차례로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쇄국과 은둔을 청산하고 세계 속으로 문호를 활짝 열었다.

개항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낳았다. 개항과 개혁 반대 상소가 빗발쳤고, 임오군란, 갑신정변은 양쪽 정치세력이 결부되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어 조선의 주주성에 큰 상처를 주며 뒤흔들었다.

그런 와중에서 기독교의 선교가 허용되고 신식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개화꾼’이 생겨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정세변화가 사회불안을 야기하여 보국안민, 광제창생의 깃발을 든 동학사상이 급속히 민간 사이에 퍼져 나갔다. 동학농민운동 수습을 위해 불러들인 청국군은 일본군의 파병을 불러왔다. 양국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격돌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청국을 물리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조선을 장악하고자 했다.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동학농민운동 뒷수습을 위해 일본의 영향을 받는 개화파 정부가 들어서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왕과 그 측근들은 일본세력을 제어하지 못하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여 러시아 쪽의 힘을 끌어들었다.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은 조선의 자주성을 더욱 약화시켜 열강의 이권의 각축장이 되었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성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1876년 개항 이전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통하여 서양문명을 접했고, 중국 중심의 화이관과 성리학 일변도의 사유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을 찾고 형성하기 시작했다.

**【배경】** 왜란과 호란의 두 차례에 걸친 전란으로 조선후기 사회는 전면적으로 피폐하고 학문과 과학기술도 침체하였으나, 전란을 수습하고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기하면서 영조대에는 마침내 찬란한 문화중흥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조선의 지식인들이 사신단의 일행으로 북경에 가서 받은 문화적 충격은 엄청났다. 넓은 도로, 넘쳐나는 재화, 웅장한 건축, 고딕식 서양 성당, 서점마다 쌓여있는 서책들이 조선지식인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게 했다. 각종 서책과 사치성 소비재들이 서울로 흘러들어왔다. 사물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외부로 눈길을 돌리면서 객관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예가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수용되었고, 천주교까지 자생적으로 수용했다.

실학자들은 중국에서 한역(漢譯)한 서구 과학서를 통해서만 아니라, 중국에 와 있던 예수회 수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서구 과학지식과 문물의 도입에 힘썼다. 서양천문학의 영향은 조선학자들에게 새로운 우주체계를 형성하고 지구중심의 지전설을 받아들여 중국 중심적 사상에서의 벗어났다.

**【전개】** 의리와 도덕 일변도의 성리학적 세계에 홍대용 같은 실학자들이 ‘성리란 곧 일용에 흠여져 있는 것’이라며 현실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의리의 학문(성리학)과 경제의 학(실용적 학문)을 병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동도서기, 즉 동양의 도(가치관)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천주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종교와 과학기술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규경(1788~1860)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정통 학문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학

(學)과 술(術), 체(體)와 용(用)의 관계로 규정하여 이 둘을 겸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19세기 후반 남명철(1817~1863)은 이규경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 자신 철저한 유학자이면서 서양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인정하고 이에 큰 관심을 가졌다. 최한기(1803~1877)는 나아가 이(理)는 기(氣) 속에 내재해 있다고 보고 성인의 도의 핵심은 실용에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조선사상계에서 도와 기, 성리학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분리해서 인식하게 되고, 실용과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매년 1~2회 시행되어 온 청국 사신파견과 일본 사행을 통한 견문을 통해 서양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심화되었다.

최한기는 1840년대 청에서 저술된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보고 이를 토대로 세계지리책인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서양 열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미국에는 국왕이 없으며, 대통령은 민선으로서 임기가 4년이며, 여론에 따라 정치한다는 것과, 상하 양원의 의회제도, 법원, 국방, 병원 등 폭넓은 내용을 기술했다.

**【결과·의의】** 1866년 병인양요와 제너럴 셔먼호사건, 1871년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멸시감이 자리 잡게 되고, 대원군의 고립정책이 강화되고 화친을 주장하고 개화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소수로 몰리게 되었다.

**【핵심어】** 서양 과학 기술/동도서기론/세계관/홍대용/이규경/남명철/최한기/박지원

**【참고문헌】**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휴머니스트, 2007); 元載淵, 「조선후기 西洋認識의 변천과 對外開放論」(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朴星來, 「韓國近世의 西歐科學 受容」, 『東方學志』 20(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8); 전용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 『東方學志』(延世大 國學研究院, 200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사 31-서구 문화와의 만남-』(2010).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선 출몰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선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자본주의 열강은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의 확보를 위해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며 동아시아로 진출하여 조선에 위기의식과 변화의 필요성을 자극한 시대상황을 말함

**【배경】** 1653년 8월 15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상선 스페르웨르호가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 제주도 대정현에 좌초했다. 배에 탔던 선원 중 하멜 일행이 1666년 9월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표류기를 써서 서양세계에 조선을 알렸다. 이후 조선의 해안에 서양 이양선들이 빈번히 출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서양제국이 무역과 산업화로 세계를 지배해 가는 글로벌화 시대로 진입했으며, 조선도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전개】** 그 후 조선 해안에 낮선 모양의 서양배를 가리키는 ‘이양선’이 나타는 일이 잦았다. 이들은 탐사, 교역요구, 선교 등의 목적을 띠고 조선 해안에 나타났다. 이양선을 통해 개방과 통상, 기독교의 포교허용 등을 요구하자 조선은 얼어붙었다. 쇄국 정책을 지속해 온 조선은 이양선을 타고 온 외방인과의 접촉을 금했고, 이를 어긴 사람들은 국법을 적용하여 처형하였다. 이에 관리나 민간인들은 서양인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공포심을 가졌다. 특히 아편전쟁 등 청에서 벌어지고 있던 서양의 위협이 전해 오면서 더욱 외국에 대해 폐쇄적이었고, 국민들에게는 대외접촉을 엄격히 금지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조선 해안에 출몰한 이양선은 다음과 같다.

**주요 이양선 출몰기록**

- 1787.05 프랑스 페루즈 탐사대, 제주도와 울릉도 탐사
- 1791.08 영국 해군장교 제임스 콜넛트의 아르고노트호, 제주도 주변 해역 탐사
- 1797.08~09 영국 군함 프로비던스호, 청진·영흥만·용당포(동래) 등 동해안 탐사
- 1816.09 영국 군함 알세스트호·리라호, 황해도·충청도·전라도 앞바다 측량

1832.06~07 영국 동인도회사 상선 애머스트호, 황해·충청 해안 출현, 통상요구, 성경전달  
 1845.06~08 영국 군함 사마랑호, 제주도·거문도 탐사. 거문도, 해밀턴 항이라 명명  
 1848. 조선 근해에 많은 이양선이 나타남  
 1849. 여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트호, 동해서 고래잡이 중 독도 발견, '리앙쿠르 섬'으로 명명

**【결과】** 서구열강들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근해를 지나는 상선을 통해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외부의 압박은 크게 높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주의와 성리학에 묶여 있었던 조선은 청나라의 천주교 공인 소식에 놀랐으며, 서구세력이 종교를 강요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서학·서교·서양을 사학(邪學)·이단·금수와 동일하게 인식했다. 정조 사후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1801년 신유사옥, 1839년 기해사옥 등 서학을 탄압하면서 조선은 쇠국과 양이의 틀 속에 갇히고 말았다.

**【의의】** 이 시기 서양인들의 기록에서 두 얼굴의 조선이 있었다. 하나는 권력의 위계가 높을수록 이방인에 거칠고 강경하게 거절하는 조선이었다. 반면에 때에 쫓겨 누더기를 걸치고 고된 노동으로 얼굴이 검게 그을린 민중들은 이방인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이며 격의가 없었다. 그들은 이방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공존하는 지혜를 보여 주었다. 호기심과 천진함, 선의와 열림이 거기 있었다.

**【핵심어】** 중화주의/화이관/19세기 이양선/글로벌화/천주교 탄압/로드 애머스트호

**【참고문헌】**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하)』(분도출판사, 1980);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현실문화, 2009); 장영숙, 『고종 44년의 비원』(너머북스, 2010).

**【사진자료】** 001. 1871 미국 아시아 함대 콜로라도 호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선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19세기 서구열강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도전 받은 청국은 근대적 변혁에 실패하여 서구와 일본에 의해 반식민지로 전락한 반면 일본은 전면적인 근대적 변혁을 통해 제국으로 발돋움했다.

**【배경】** 19세기에 들어서자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어왔다. 영국은 중국에서 차(茶) 수입으로 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중국에 팔아, 아편을 단속하는 청나라에 아편전쟁(1차 1840~1842)을 일으켰다. 아편전쟁은 중국, 조선, 일본을 격동 속으로 몰아갔다. 청국의 약화를 틈타 러시아는 아무르강 이북 시베리아와 우수리강 동편 연해주를 차지하여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전개】** 1856년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이 개방했음에도 기대만큼 대중국무역이 확대되지 않자 영국은 애로우호를 빌미로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제2차 아편전쟁, 1856~1860) 영불 연합군은 텐진을 점령하여 천진조약을 맺었다. 천진조약은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배상금 지급, 항구개방 확대, 아편무역 합법화 및 기독교 공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천진조약 체결 후에도 후속 조치가 미진하자 1860년에는 황제의 별궁 원명원을 약탈하고 북경을 점령했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에 충격을 받은 중국변, 이홍장 등 관료들은 양무운동(1862~1895)을 통해 봉건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부문을 근대화하여 무장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1894~1895년의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하여 대만을 빼앗기고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하는 데서 그 한계가 나타났다.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유럽의 무기·기술만을 도입하려는 양무운동(洋務運動)의 한계를 깨닫고 강유위(康有爲)·담사동(譚嗣同)·양계초(梁啓超) 등은 변법유신(變法維新)운동을 일으켜,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고 서방의 공업과 과학기술 및 상업과 교육제도를 수용하여 정치와 산업, 교육 등을 근대화하고자 했다. 이들의 운동은 서대후 중심의 수구파의

반격[무술정변]으로 100일 만에 끝났다.

1900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며 농민들이 의화단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8개국 연합군(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이 수도 북경을 점령했다. 청국은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하였다. 결국 낡은 체제는 1911년 10월 손중산을 중심으로 한 중국동맹회가 호북성 무창에서 일으킨 혁명에 의해 끝났다.

19세기 서구 세력이 밀려올 때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역시 조선처럼 쇠국정책을 했으나, 네덜란드에 대해서만은 나가사키를 통해 교역을 허용했다. 네덜란드는 일본이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 난학이 번성했다.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켰을 때 네덜란드는 일본의 개항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한 일본은 결국 1854년 1월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매튜 갈브레이드 페리 함대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개항을 하게 되었다. 이후 7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막부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1867년에는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전면적인 근대화 정책은 서양세력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의 젊은 무사집단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근대국가를 모델로, 학제·징병령·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 통일적 국가를 이룩하였으며, 또 관영공장을 설립해 총포·조선 공업과 외화획득을 위한 비단 제품 공업, 수입대체 효과를 노린 방직산업에 힘을 쏟았다. 금융·통화 제도를 확립하고 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발달의 바탕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쏟은 결과 석탄 생산 16배, 철도 100배, 수출입량은 4배가 증가했다. 1889년에는 독일을 모델로 한 '대일본제국헌법'을 공포하여 입헌체제를 수립하였다.

**【의의】** 아편전쟁 이후의 외국세력의 직접적 개입으로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청국은 구체제를 일신하지 못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전하여 반식민지 상태로 떨어졌다. 일본은 외세의 직접 위협을 겪지 않으면서 급속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근대산업국가로 변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은 서구에 대해서는 수평적 관계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수직적 지배복속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핵심어】** 아편전쟁/양무운동/변법자강운동/명치유신

**【참고문헌】** 葦津珍彦, 「明治維新と清韓兩國の近代化」, 『神道史研究』 13-5・6(神道史學會, 1965); 金濟璟, 「日本の 政治的 近代化와 明治維新-韓國的 狀況과의 比較考察 序說-」, 『東亞論叢』 16-人文·社會科學篇-(1979); 曹廣海, 「近代國家形成期の 政治·行政改革 比較 研究; 朝鮮末 甲午更張·日本 明治維新·清末 戊戌變法運動을 中心으로」, 『정신문화연구』 3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伊藤 信 외, 『詳說 日本史研究』(山川出版社, 2008).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동학의 개창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성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1860년 4월 5일 수운 최제우가 시천주(侍天主) 신앙에 기초하여 창도한 종교로 1905년에 손병희에 의하여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원인·배경】** 1800년 이후 60년간 조선은 세도정치와 부정부패의 만연, 홍수·지진·역병 등이 잇따르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삼남지방에서 광범한 민란(1862)이 일어났다. 이러한 때 중국에서는 애로우호사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양선 출몰, 서양 천주교의 전파 등으로 사회에 불안감이 크게 일어났다.

**【발발】** 최제우(1824~1864)는 여러 해 동안 떠돌아다니며 세상의 각박함과 어지러움을 알고, 이는 천명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천명을 알기 위해 1856년 여름 천성산에 들어가 구도를 시작했다. 이후 이듬해 적멸굴(寂滅窟) 49일 기도, 울산 집에서의 공덕담기, 1859년 10월부터는 경주 구미산 용담정에서 수도를 하였다. 이러한 수도 끝에 1860년 4월 5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동학이라는 새 종교를 창도하였다.

**【전개】** 1861년부터 최제우는 그의 가르침을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자 주문에 담아 나라를 지키는 보국과 백성을 편안케 하는 안민의 사상으로 전파했다. 그는 무학의 서민들이 입도할 수 있고 입도한 그 날부터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동학의 교세가 날로 커지자 조정에서는 동학포교를 금지시키고, 1864년 3월 10일 교조 최제우를 사도난정죄목으로 처형했다.

제2대 교주 최시형(1827~1898)은 체포를 피하여 강원도와 경북 해안지대 또는 산간지대에 은거하면서 신도들을 결집시켰고, 개접제(開接制), 1884년 육임제(六任制)로 신도의 조직화, 교리연구, 경전간행을 계속했다. 이에 교세가 비약적으로 커지자 1885년 충청도 보은군 장내리로 본거지를 옮기고 1892년부터는 교조의 신원운동을 전개했다. 1892년 11월 제1차 공주신원운동, 제2차 전주 삼례 신원운동에 이어 1893년 2월 40여 명의 대표가 서울에서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는 제3차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 측의 탄압이 다시 가중되자 다시 신원운동을 계획, 3월 10일 보은의 장내리에 수만 명의 신도를 집결시켜 대규모 척왜양의 시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놀란 조정에서 선무사 어윤중을 파견, 탐관오리를 파면하자 자진 해산하였다.

**【결과】** 교세가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 등 삼남 각지로 번져, 접포(接包)의 교단조직이 생겼다. 이러한 교단 조직이 동학농민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의의】** 동학사상은 인간을 한울님 같이 보는 혁명적인 인권사상이며, 조선 말의 내정 모순과 외세침략의 시대불안을 타고 급격히 전파되어 내정개혁과 외세배격의 정치적·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핵심어】** 동학/동학사상/천도교/최제우/최시형/동학농민운동

**【참고문헌】** 金庠基, 「東學과 東學亂」(大成出版社, 1947); 崔東熙, 「東學의 思想과 運動」(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0); 崔東熙, 「韓國東學 및 天道敎史-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 6(1970); 신일철, 「동학사상의 이해」(사회비평사, 1995);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최제우」(1998).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성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1860년대 후반 조선의 정치문란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살길을 찾아 함경도 평안도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로 들어가 정착하여 동포사회를 형성하게 된 일

**【배경】**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 동안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 외척들의 세도정치가 이어지면서 조선의 양반관료정치는 말폐 증상을 보였다. 과거제는 문란해졌고, 관직은 돈으로 사고팔았으며, 토지세, 군포, 환곡의 3정 문란 등으로 농촌사회를 피폐하게 했다. 이에 1862년 민란이 일어나 전라, 경상, 충청의 3남 지방을 휩쓸었다. 농민들 중에는 아예 국경을 넘어 간도나 연해주로 집단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연해주 이주】** 1863년 북한 지방에 가뭄이 휩쓸자 함경도 평안도 지방민들이 집단적으로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하였다. 1867~1869년 사이에 연해주의 두만강 건너편 티진해, 안치해, 시디미의 3개 마을을 형성한 이주민수는 1,800명에 달했다. 1869년 대기근 때 11~12월 사이에 4,500명이 넘어갔다. 1870년대에도 한인들의 이주는 계속 이어져 수이푼, 슈판, 레푸강가와 수찬 계곡 등에 정착해 가 남부 연해주지역에 시닐리코프, 코르사코프, 푸틸로프카, 크로우노프카 등의 촌락들이 계속 생겨났다.

1888년 조로육로통상장정이 체결되면서 러시아 당국이 그 이전 이주 한인에 대해 러시아 국적과 가족당 15데샤치나(4만 5천 평) 토지를 지급하는 등의 정착지원정책을 썼다. 대체로 시베리아 철도가 개통되던 1900년까지는 연해주 개척에 한인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만주 이주】** 만주는 청 왕조의 발상지여서 봉금지역으로 설정하여 조선인의 거주를 금하였으나, 1850년을 전후하여 집단적인 월경현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이른 새벽에 강을 건너와 농사를 짓고 저녁에 되돌아가는 조경모귀(朝耕暮歸) 방법이, 후에는 이른 봄에 강을

건너와 농사지은 후 가을에 수확하여 돌아가는 춘경추귀(春耕秋歸)의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1860년대 조선북부 지역에 연속적인 재해가 발생하자 수천 명이 집단적인 이주를 개시하였다. 당시 청조는 한인 이주민들이 청국에 귀화될 것이라 그들의 거주를 묵인하여 왔다.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하여 연해주를 장악한 러시아가 두만강 하류 일대에서 계속 국경문제를 도발하자 청조는 봉금을 폐지하고 북간도지역을 개방하여 이민을 받아들여려 했을 때 이미 한인 이주민들에 의해 대거 개척되고 있었다.

1880년부터 조선 지방관부의 묵인하에 계획적으로 개척을 시작하여 북간도지역에는 한인 촌락이 형성되고, 함경자사가 지권을 발급하고 조세까지 받아들였다.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청조가 조선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되자 조선 정부는 간도지역의 한인이주민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한인 이주민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한인들의 만주이주는 급증하였다. 1910년 만주지역의 한인 이주민 수는 22만 명이었으나 1911년에는 256,000명, 1920년에는 459,000명, 1930년에는 607,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의의】** 세도정치 60년간의 부패와 문란, 자연재해의 거듭됨으로 인해 살길을 찾아 만주 연해주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국권을 잃었을 때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동포사회가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다.

**【핵심어】** 세도정치/간도/연해주/월경농업/집단 이주/한인촌

**【참고문헌】** 玄圭煥, 『韓國流移民史』(서울: 語文閣, 1973);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탐구당, 1996);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 및 회화 민족운동사』(교문사, 1994); 尹政熙, 『間島開拓史』, 『韓國學研究』 3, 별집(인하대학교, 1991); 柳光烈, 『間島小史』(여강출판사, 1986); 朴昌昱, 『中國朝鮮族歷史研究』(延邊大學出版社, 1995); 김춘선, 『한국독립운동사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사진자료】** 002. 독립운동기지로 건설된 서간도 유하현의 한인이주촌 전경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성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조선 제25대 왕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왕손 흥선군은 둘째 아들 명복을 제27대 고종으로 즉위시키고, 섭정의 대권을 행사하여 세도정치 60년간 쇠락한 왕권과 국정을 쇄신하는 개혁을 단행한 일

**【배경】** 조선중기 이후 당파가 권력투쟁 집단이 되면서 결집력을 강화해 왔고, 유력가문이 크게 성장한 가운데 국왕권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 영정조 이후 어린 왕이 연이어 왕위에 오르자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 외척세력들이 국정을 좌우하면서 국정문란과 부패가 심하게 자행되었다. 1862년 삼남지방에 퍼져나간 민란은 이러한 정치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전개】** 1863년 조선 제25대 철종(1831~1863, 재위 1849~1863)이 후사 없이 죽자 왕손인 흥선군 이하응이 궁중 최고 어른으로 익종비(翼宗妃)였던 조대비와 긴밀히 연락하여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으로 국왕에 즉위시키고 대비로부터 섭정의 대권을 위임받았다. 대원군은 이후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세도정치 60년간 쇠락한 왕권과 국정을 쇄신하는 다음과 같은 정치를 폈다.

1. 세도정치를 분쇄하고 쇠락해진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하였다. 왕권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를 착수하였다.
2. 당색과 문벌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였다. 당쟁의 본거지가 되어온 서원을 대폭 철폐하여 정리하였다.
3.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무토궁방세(無土宮房稅)의 폐지, 양반·토호의 면세전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세하였으며.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폐지, 진상제도의 폐지, 은광산의 개발 허용 등 경제·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4. 군포제를 호포제라는 균일세로 개혁하여 양반도 세부담을 지도록 하였다.
5. 사회의 악습 개량에 힘쓰고 복식을 간소화했으며 사치를 금하였다. 『대전회통』, 『육전

조례(六典條例)』·『양전편고(兩銓便攷)』 등 법전을 편찬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6. 세도정치 기구화되어 왔던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하였으며, 삼군부를 두어 정부와 군무를 분리하였다.

**【결과·의의】** 대원군의 이와 같은 개혁은 세도정체의 폐해를 시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왕권의 위엄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무리하게 원납전을 징수하고 문세를 거두었으며, 소유자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거목(巨木)·거석(巨石)을 징발하고 역역(力役)을 부담시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한때 러시아의 남하에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편으로서 천주교도와 제후를 피한 일도 있었으나 정적들에게 이용되어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천주교도 박해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후 6년간(1866~1872)에 걸쳐 8,000여 명의 천주교도를 처형하는 대박해를 하였다. 이것이 침공의 구실을 주어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General Sherman號事件) 등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았으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극복하고 쇠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쇠국의 강화는 능동적인 개방을 지연시켰고, 이후 외세에 의해 주권이 위협에 처하게 하였다.

**【핵심어】** 대원군/홍선대원군/고종/내정개혁/서원철폐/쇠국정치

**【참고문헌】**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1』(인물과사상사, 2007);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부국 강병 정책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제방, 『홍선대원군 명성황후』(지문사, 2003); 이선근, 『대원군의 시대』(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사진자료】** 003. 홍선 대원군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성 출몰	●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19세기에 들어서 조선 해안에 외국 상선과 군함들이 출몰하기 시작하였고, 1860년 7월 청나라가 서양제국에 굴복한 상황에서 대원군이 쇄국정책으로 서양제국의 통상 압력과 무력 침략을 저지하려 하였다.

**【배경】** 19세기 초 이래로 조선의 해안에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 등 구미 열강의 상선과 무장함대들이 빈번하게 출몰하였다. 1860년 7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4개국 군대가 북경의 관문인 천진과 대고항 사이로 상륙하여 황실 별궁 원명원 등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였다. 청나라는 천주교 공인, 항구와 내지의 통상 개방, 조계지 설치 등과 함께 손해 배상 6백만 냥을 치르고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석 달 뒤인 12월이 되어서야 사신을 통해 서울에 알려지자 조정과 민심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서울에는 백성은 물론 조정 신하들까지 피난행렬이 꼬리를 이었다.

러시아는 중국의 약화를 틈타 1858년 아이훈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으로 흑룡강(아무르강) 이북의 시베리아 지역과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 지역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확보하고,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동방진출은 일본과 영국 등 서구에게 위기의식과 러시아의 남하 저지에 공조하게 하였다.

**【전개】** 이러한 상황에서 대원군 이하응이 정권을 잡았다. 대원군은 중국이 위태롭게 된 것은 문호를 개방한 때문이라 믿었다. 때문에 위정척사사상에 의거하여 청나라와의 의례적인 사대적 외교관계 이외의 모든 대외관계를 차단하였다.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정부가 들어서 조선과의 교류를 원했다. 대원군은 일본을 서양 오락개와 같이 취급하여 전통적인 교린관계마저 거부했다.

1866년 대원군은 천주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붙잡혀 처형되었다. 그해 8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며 행

패를 부리자 평양 군민들이 불태워버렸다. 서양의 위협이 현실화 된 사건이었다.

**【결과】**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고, 폐쇄적인 정책을 더욱 굳게 하였다.

**【의의】** 19세기 후반의 시기는 조선이 서구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직면한 시기로서 국가 체제를 혁신하고 경제적 군사적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었으나,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을 격리함으로써 왕실과 왕조의 위기를 막아보고자 하였다. 서구와 근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조선 내부에 있었으나, 화이적(華夷的) 명분론(名分論)에 입각하여 억눌려 개혁과 개방을 지연시킴으로써 안으로는 반봉건의 민중봉기가, 밖으로는 개방을 강요하는 외국의 무력도발 앞에서 위기를 심화시켰다.

**【핵심어】** 1860년대/북경합락/청국/대원군/저네럴 셔먼호 사건/쇄국정책

**【참고문헌】** 이항로, 『화서집(華西集)』; 성대경, 「대원군 정권 성격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姜在彦, 「朝鮮の攘夷と開化」(平凡社, 1977); 장영숙, 『고종 44년의 비원』(너머북스, 2010).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병인양요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성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1866년 9월 18일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극동전대 피엘 구스타프 로즈(Roze, P.G, 魯勢)가 이끄는 6척의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했다가 조선군 양헌수 부대에 의해 격퇴되어 1866년 11월 21일 종결된 전투.

**【원인·배경】** 전통적으로 유교국가로서 자급자족적 농업국가인 조선은 외국과의 교역은 사치를 조장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하고도 해로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조선은 중국과의 의례적인 조공관계나 대마도를 통한 일본과의 부정기적인 무역 외에는 대외고립주의를 지켜왔다. 1700년대 후반 청나라에 간 조선사신단의 일원이 북경의 천주교와 접촉하여 조선에서 자생적인 천주교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폐지하면서 문화적 충돌을 일으켰다. 1801년, 1839년 천주교 금압과 박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9년에는 천주교 신자가 약 17,000명으로 늘어났다.

1863년 어린 고종의 왕위에 오르면서 부친인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실권을 잡았다. 1866년 러시아 선박이 동해안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조선의 조정에 관직을 갖고 있던 천주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신장시킬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베르뇌 주교에게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조선이 동맹을 맺는 협상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대원군은 천주교 '수괴'들을 은신처에서 끌어낼 계략으로 이 안에 호감을 표했다. 1866년 2월 베르뇌 신부가 서울에 오자 그를 체포하여 처형했다. 또한 다른 천주교 신부와 신자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발발】** 베르뇌 주교는 1866년 3월 7일 참수되었다.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정책은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과 약 1만 명에 이르는 천주교인을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처형을 모면한 3명 중 한 명인 리텔(Felix-Claire Ridel) 신부가 낚시배를 타고 중국 천진으로 탈출하였다. 이때 마침 일본 나가사키에 기지를 두고 있던 프랑스 극동전대 피엘 구스타프 로즈(Pierre-Gustave Roze, 魯勢)제독이 천진에 와 있었다. 리텔 신부의 학살소식을 들은 로즈

제독은 조선에 대한 보복 원정을 결심했다. 북경주재 프랑스 영사 대리 헨리 디 벨로네(Bellonett, H.D., 伯洛)가 강력히 후원했다.

로즈는 본격 원정에 앞서 그해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군함 3척을 이끌고 서울 양화진 서강까지 와서 강화도와 서울로 진입하는 항강 수로탐사를 하고 돌아갔다. 예비원정 결과 큰 배와 제한된 병력으로 요새화된 서울을 공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강화도를 점령하기로 했다. 그는 수확기에 서울로 통하는 수로의 입구를 봉쇄하면 조선조정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개】** 10월 11일 로즈 제독은 라게리에르호를 기함으로 하여 보급선 2척, 포함 2척과 호위함 1척에 함재 대포 10문, 총병력 1,000명, 향도 및 수로 안내인으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선일(崔善一)·최인서(崔仁瑞)·심순녀(沈順汝) 등 3명을 대동하고 중국 산둥반도 지푸항을 출발했다. 10월 16일 170명의 병력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강화부를 점령했다.

조선정부는 이에 순무영(巡撫營)을 설치, 대장에 이경하(李景夏), 중군에 이용희(李容熙), 천총(千總)에 양헌수(梁憲洙)를 임명했다.

프랑스군은 10월 26일에 문수산성을 공격하였다. 프랑스군의 화력을 당해낼 수 없어 강화도의 관리·군인·백성이 모두 피난했기 때문에 강화도는 프랑스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다. 양헌수는 화력면에서 절대 열세인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제압하기 위해 549명의 부대로 11월 7일 덕포에서 야간에 도하작전으로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을 점거하였다. 조선군이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Ollivier)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하였다. 11월 9일 올리비에에는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격했으나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60~7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퇴했다.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뿐이었다.

**【결과】** 프랑스군은 상륙 이래 거의 한달 동안 강화도를 점거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했기 때문에 정족산성을 재공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해 11월 10일 함대를 철수하고 말았다.

원정을 끝내고 청국으로 돌아간 로즈는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적 보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사 벨로네를 비롯한 북경의 모든 외교관들은 개항협상도 벌이지 못했고, 정족산성 패배 후 철수했으며,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그의 원정을 실패로 간주하였다.

**【의의】** 병인양요는 조선이 서양 열강과 치른 최초의 무력충돌이자 승리한 전투이나, 프랑스의 패퇴로 말미암아 조선 조정에 근대화 없이 외부의 침입을 격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하여 조선의 쇄국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어】** 병인양요/로즈제독/대원군/양헌수/강화도/정족산성

**【참고문헌】** 달레 저, 최석우·안응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韓國天主教會史)』(분도출판사, 1980); 「로즈함대(艦隊)의 내침(來侵)과 양헌수(梁憲洙)의 항전(抗戰) 1866」, 『동양학(東洋學)』 13(1983);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of 1866, Wikipedia.

**【사진자료】** 004. 강화도 초지진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위기

**【소항목】** 신미양요

조선인의 서양문물 접촉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서양인의 조선 접촉과 이양성 출몰	서양세력의 침략 경계
동아시아의 위기와 청국과 일본의 대응	병인양요
동학의 개창	● 신미양요
민생의 파탄과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정의】** 1871년 6월 1일 포함외교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기 위해 미국 아시아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와 벌어진 전투

**【원인·배경】** 1866년 8월 20일(음 7.11) 미국인 프레스턴 소유의 상선 제너럴셔먼호 (General Sherman號)가 중국 천진으로부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평양 군민들이 응징하여 불에 태워버렸다.

**【발발】** 미국은 포함 외교로 조선을 개항시키기로 작정하고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 (John Rodgers)가 기함 콜로라도호(Colorado號)를 비롯하여 군함 5척으로 1871년 5월 16일 조선원정 길에 올랐다. 로저스는 조선 측이 평화적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무력시위 및 군사작전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상조약을 맺기로 계획했다.

**【전개】** 1871년 6월 1일 로저스 미국 함대는 인천 앞바다에 와서 서울로 가기 위한 수로를 탐색하기 위해 강화해협을 탐측하겠다고 조선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강화해협 탐측 항행을 강행하였다. 함대가 손돌목에 이르자 연안 강화포대는 미국 함선에 대해 포격을 가했다.(손돌목 포격사건)

미국 대표는 조선 측에게 미군 함대에 대한 포격을 비난하면서 조선 대표를 파견해서 협상할 것, 포격사건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 조건을 거부하면 10일 후에 보복상륙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조선 측은 미군 함대가 조선당국의 정식 허락 없이 항행한 것은 주권침해요, 영토침략행위라고 규탄하면서 협상 및 사죄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평화적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포병대·공병대·의무대, 사진촬영반 등을 포함하여 10개 중대로 상륙군 부대를 편성하고, 6월 10일 초지진(草芝鎭)을, 6월 11일에는 덕진진을 점거하였다. 이어 진무중군 어재연(魚在淵)이 이끄는 조선 수비병 600여 명이 배치되어 있는

광성보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수륙 양면에서 포격하여 광성보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는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이었으나, 조선군은 전사자 350명, 부상자 20명이 난 결사적인 항전이었다.

**【결과】** 미군은 조선군의 결사항전과 조선정부의 통상거부로 인해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7월 3일(음 5.16) 중국으로 철수하였다.

**【의의】** 미군의 강화도 내침은 조선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고,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고 대외고립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핵심어】** 신미양요/병인양요/강화도/존 로저스/John Rodgers/제너럴 셔먼호/초지진/덕진진/광성보/어재연

**【참고문헌】** 金源模, 「近代韓美交涉史」(弘盛社, 1979); 「The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 www. wikipedia; 「Annual Report of the Navy Secretary On the Operations of the Department for the Year 1871」; 「Marine Amphibious Landing in Korea 1871」; 「John Rodgers(Johnson)」-R.E.

- 【사진자료】** 005. 1871 신미양요 광성보전투에서 전사한 조선군들  
006. 신미양요 당시 미군의 포로가 된 조선군  
007. 어재연 수자기와 미해군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개화파

● 개화파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강화도조약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1870년을 전후하여 김옥균·박영효 등이 중심이 되어 청의 내정간섭을 배격하고 내정을 혁신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했던 정치 집단

**【배경】** 오경석은 역관으로서 1853년 4월 북경행을 시작으로 13차례나 중국을 오갔다. 그는 서양열강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중국을 보고 해국도지(海國圖志)·영환지략(瀛環志略) 등의 책을 구입하여 친우 유흥기와 함께 연구하고, 서울 북촌 양반층의 영민한 자제들에게 개화사상을 교육시켜, 혁신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1860년 영불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점령되자 조선의 위기의식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박규수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인데, 1861년 1월 중국에 위문사절단의 부사 자격으로, 1872년 진하사(進賀使)의 정사(正使)로서 오경석을 대동하고 중국에 다녀왔다. 그는 두 차례 중국사행을 통하여 중국의 양무운동을 보고 개국(開國)·개화 필요성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귀국 후 흥선대원군에게 개국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으나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자 1874년 9월에 사직하고 국정의 제일선에서 물러나 그의 사랑방에 출입하는 박영교·김윤식·김옥균·박영효·유길준·서광범 등 젊은 양반자제들에게 개화사상을 가르쳐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을 기르게 되었다.

**【활동】** 개화사상을 교육받은 청년 중 김옥균은 22세 때인 1872년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고 1874년에 홍문관 교리로 임명되어 관리로 나가게 되자 동지들을 모아 스승들에게 소개하여 계몽과 교육을 받게 하고 함께 개화사상을 공부하며 결속을 다져 나갔다. 이들 중에는 양반 출신뿐만 아니라 무관, 중인, 승려, 보부상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있었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외국과의 통상 교섭이 본격화되자,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할 관료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화파들은 중견 관료로 진출하여 국왕과 다른 최고위 관료들을 움직여 가면서 자주부강한 근대국가 건설과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을 들면 ① 신식 행정관서로서 통리기무아문(1880), 기무처의 설치(1882) ② 일본국정 시찰단(1881), 영선사(1881), 보빙사(1883) 파견 ③ 신식육군

의 창설(1881). 해관의 설치(1883) ④ 근대학교인 원산학사, 영어학교 동문학의 설립(1883) ⑤ 근대신문 한성순보 창간(1883) ⑥ 우편제도 창설(1883) ⑦ 치도국(治道局)의 설치와 경찰제도의 창설(1883) 해외 유학생의 파견(1881~1884) 농무목축(農務牧畜) 시험장의 설치(1884) 26개 근대상공업 기업체의 설립(1881~1884) 등과 같은 것이었다.

**【경과·변천】** 1882년 7월 임오군란이 일어나 민비수구파가 청국에 구원을 요청했다. 청국은 조선에 3,000명의 군대를 파병하여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실권자인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하여 유폐하고, 군대를 철수시키지 아니한 채 심한 내정간섭을 자행하였다.

청국은 개화당의 개화운동이 궁극적으로 청국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보고, 개화당을 탄압하고 개화운동을 저지하였다. 그 결과 개화당은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분화되었다.

개화파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화된 이후에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만을 '개화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개화당은 청국의 속방화정책에 대하여 '독립'을 매우 강조하였기 때문에 '개화당'을 당시에 '개화독립당'이라 불렀으며, 이에 반하여 청국에 의존하여 집권한 민비수구파를 '사대수구당'이라고 불렀다.

**【의의】** 개화파는 서세동점의 국가위기상황에서 위로부터의 변혁 주체로 등장하여 근대 국가 건설과 개혁을 위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개화파의 궁극 목표가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것을 안 청군의 내정간섭과 탄압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켜 '3일천하'로 끝나 대부분 몰락하게 되었다.

**【핵심어】** 개화파/갑신정변/김옥균/박영교/박영효/유길준/서광범/오경석/유홍기(유대치)

**【참고문헌】** 李光麟, 『甲申日錄』; 『開化黨研究』(一潮閣, 1973); 李光麟,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89); 姜在彦, 『開化思想·開化派·金玉均』, 『朝鮮史研究論文集』 4(1968); 愼鏞廈, 『金玉均의 開化思想』, 『東方學志』 46·47·48合輯(1985); 李完宰, 『初期開化思想研究』(民族文化社, 1989).

**【사진자료】** 008.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1880)

009. 개화파 동지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개화파	영선사
●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강화도조약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조선 26대 왕 고종이 1863년 12세 어린나이에 즉위하여 부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섭정을 하였으나 고종이 장성하면서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며 쇄국정책을 중단하고 개항과 근대화를 추진한 정책

**【배경】** 고종은 즉위 당시 12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형식의 취하면서 실제로는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총람, 대신 섭정하였다. 대원군은 천주교 탄압, 쇄국 정치, 병인양요 및 신미양요를 통한 대외 군사적 침공에 성공적인 대응을 하였으나, 경복궁 중건, 원남전 징수, 당백전 발행 등의 무리한 정책과 서원철폐로 유림들의 원성을 샀다.

**【경과】** 악화된 대원군에 대한 여론을 업고 민비와 노대신들은 유림을 앞세워 대원군의 하야를 주장하였다. 계기는 1873년 경복궁 중건 비용을 원남전 형식으로 강요하고, 서원철폐, 청나라 돈을 수입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을 들며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한 최익현의 2차 상소를 기회로 그해 12월 대원군을 하야시키고 국정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쇄국정책을 강화해온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자 일본이 단절된 외교관계를 복원하고자 서계를 보내 왔다. 고종은 서계 상의 표현문제로 인해 일본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은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박규수 등의 소수파의 의견을 옹호하며 문호개방과 부국강병으로 정책방향을 돌렸다.

1875년 5월초 일본은 운요호 등 군함 2척을 파견하여 부산항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9월 20일 강화도 초지진(草芝鎭)에 상륙을 기도하다 포격을 받았다.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초지진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영종진(永宗鎭)에 상륙하여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한 뒤 포격행위에 대한 사죄, 조선 영해 자유항해 및 측량, 강화도 부근 항구 개항을 요구하며 전권사절과 함께 군함 6척을 부산항에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고종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강화도에 일본군과 공방전을 치른 신현의 보고와 의견을 자세히 들은 뒤, 일본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또한 조선의 근대화에 일본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 협상을 허락하였다. 그 결과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연무당(鍊武堂)

에서 2월 26일(병자 2월 초2일)자로 미리 기입한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다. 고종은 일본이 수호조약 체결로 외교관계가 복원된 것을 계기로 사절단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해 오자 일본의 상황을 조사할 목적을 겸하여 1876년과 1880년 2차에 걸쳐 수신사를 파견하고 다시 1881년 1월 박정양 등으로 조사사찰단을 임명 일본의 신문물 제도를 조사하도록 파견했다.

김홍집을 수신사로 한 제2차 수신사의 파견 때 청의 외교관 황준헌에게서 받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의 내용이 청국, 미국, 일본 등과 외교관계를 강화할 것을 담고 있어 조야에 논의가 증폭되었다. 1880년 개화정책추진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1881년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38명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청국에 보내 국방기술을 배워오게 했으며, 1882년 4월 미국과의 조미수호조약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등 서구제국과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882년 6월 개화정책의 추진과 맞물려 척족의 부정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이 발단이 되어 구식군인들이 고종의 척족 민경호 집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창덕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가 가까스로 홍계훈 등의 도움으로 여주 일대에 피신하는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고 김윤식 등이 청에 파병을 요청함으로써 청의 군대와 이에 대응하여 일본 군대가 파견되었다. 청의 개입으로 대원군이 피납되어 북경 보정부에 연금되고 고종은 다시 실권을 회복했다. 8월 동도서기노선을 표방하고 전국의 척화비를 철거했다. 11월에 통리기무아문을 다시 설치하고, 내무를 담당하는 통리내무아문을 설치하였다.

1883년 대미 사절단으로 보빙사 일행을 미국에 파견하고 그들의 견문을 참고하여 이듬해 10월 우정총국을 창설했다. 우정총국 낙성식을 기해 갑신정변이 발생했다.

**【결과·의의】** 고종의 친정 이후 개화정책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화를 둘러싸고 개화파와 수구파간의 대립과 갈등은 임오군란, 대원군의 권좌복귀와 피납, 갑신정변 등의 격동과 회오리를 몰고 왔으며, 권력의 회복을 위해 또는 권력의 획득을 위해 외국군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외세의 간섭이 내정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고 근대화 정책이 요동치게 되었다.

**【핵심어】** 고종/대원군/고종친정/대원군 하야/임오군란/갑신정변

**【참고문헌】** 安鍾哲, 「親政前後 高宗의 對外觀과 對日政策」, 『韓國史論』 40(1998); 金炯洙, 「高宗의 親政과 開國政策研究-1873~1876년-」(梨花女大 碩士論文, 2002); 尹素英, 「1870년 전후 조선의 對日認識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5(2003); 연갑수,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일지사, 2008); 장영숙, 『고종 44년의 비원』(너머북스, 2010).

**【사진자료】** 010. 서울 세종로거리 외국 공사관 경비병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강화도조약

개화파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 강화도조약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1876년 2월 26일자로 강화부(현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강화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원인·배경】** 1873년 12월 쇄국정책을 강화해온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자 개화파들이 세력을 잡게 되었다. 이 기회를 타서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군함으로 위협하여 조선을 개방시키고자 1875년 5월 초 운요호 등 군함 2척을 파견하였다. 운요호(함장 이노우에[井上良馨])는 6월 14일 부산항에서 무력시위를 한 후 1875년 9월 20일 강화도 초지진에 상륙을 기도하였다.

강화도 수비병은 사전 통고 없이 침입해오는 일본의 보트에 포격을 가하였다. 일본군은 초지진에 맹렬한 보복포격을 가하고 영종진에 상륙하여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한 뒤 9월 28일 나가사키로 귀환하였다. 전투에서 일본 측은 경상자 2명뿐이었다.

**【전개】** 1876년 1월 15일 일본은 포격행위에 대한 사죄, 조선 영해 자유항해 및 측량, 강화도 부근 항구 개항을 요구하며 전권사절과 함께 군함 6척을 부산항에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육군도 즉시 파병할 수 있도록 시모노세키에 대기시켰다. 2월 11일부터 본교섭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13개조의 조약안을 제시했다. 조선 정부는 2월 19일 6개 부대조항을 포함하여 수정안을 보내며 문안 협의에 들어가 2월 25일 타결을 보았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연무당에서 2월 26일(병자 2월 초2일)자로 미리 기입한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 비준서를 조선의 신현과 윤자승, 일본의 특명전권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부전권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서명하여 교환했다.

**【결과】** 강화도조약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양국은 조인 15개월 후 수시 상대국 수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상주할 수 있으며, 제4·5조 인천·부산·원산 3개항의 개항, 개항장 내에 일본인의 상행위 허용, 이를 위한

토지 가옥임대 권리, 제6조 선박의 해난구조, 제7조 일본이 조선연해를 자유로이 측량, 해도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조선 개항장에 일본의 영사 파견, 제10조 조선에서 일본인의 치외법권 보유 등이었다.

**【의의】** 이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약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조항은 조선과 일본, 중국 사이에 해석의 차이를 낳았다. 일본은 조선을 중국 중심의 화이체제(華夷體制)로부터 분리하여 침략의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활용했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 척사위정세력과 개화세력 사이에 첨예한 국론분열이 일어났다.

**【핵심어】**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운요호사건/개항/개화파/위정척사파/강화도/초지진/신헌/윤자승/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참고문헌】** 姜周鎭, 「開化期の 政治外交」, 『韓國學』 7(중앙대 부설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5); 김원모, 『근대한미교섭사(近代韓美交渉史)』(홍성사, 1979); 최영희, 「강화도(江華島)조약의 체결(締結)과 그 영향(影響)」, 『한국사』 16(1981); 金基赫, 「江華島條約의 歷史的 背景과 國際的 環境」, 『국사관논총』(1991);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新版 日本外交史辭典』(山川出版社, 1992).

- 【사진자료】** 011.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최신예 군함 운요호.  
012. 강화도조약 때 강화 연무당에서 회담하는 조선과 일본 대표들  
013.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조선전권 대신 신헌  
014. 18830110 개항한 인천항  
015. 18761217 개항 무렵 부산항  
016. 1890 개항 무렵 원산항 (1890년대)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수신사, 조사시찰단

개화파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강화도조약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1876년 4월 강화도조약 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1차 1876년, 2차 1880년의 2차례에 걸쳐 파견한 사신단과 1881년 일본의 제도문물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일본 시찰단

**【배경】** 임진왜란 이후 고종 초년까지의 260여 년 동안 10여 차례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냈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태도가 오만불손하다 하여 흥선대원군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비(閔妃) 측이 정권을 잡자, 일본은 한국의 개항과 국교 재개를 위해 운요호(雲揚號)사건을 도발하여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일본은 초대외교 형식으로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해 주도록 간청했다.

**【경과】**

제1차 수신사 파견(1876):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고종 친정하 민씨 정권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조참의 김기수(金綺秀) 이하 일행 76명의 제1차 수신사가 1876년 4월 4일 서울을 출발했다. 수신사 일행은 약 2개월간의 일본 시찰을 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일황(日皇)과 만나고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三條實美), 이토(伊藤博文), 이노우에(井上馨) 등 일본 정계 요로부터 연회에 초대를 받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또 원로원(元老院)·의사당(議事堂)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육해군의 군사시설과 훈련 상황, 박물관·소방 조련 등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화한 모든 시설을 관람했다. 수신사 김기수는 6월 1일 서울에 돌아와 고종에게 보고하고 견문기인 『일동기유(日東記游)』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를 남겼다. 이 일은 고종과 명성황후, 측근 대신들이 대일관계와 국제정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수신사(1880) 파견: 개항 후 일본과의 관계에서 부산에 이어 원산과 인천항의 개항, 부산의 관세 배상, 미곡금수(米穀禁輸) 해제 등 여러 난제가 쌓여갔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절충하고 일본정부의 진의와 개화 실정도 탐색해 보기 위해 1880년 김홍집(金弘集)을 수신사로 총 58명의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김홍집 일행은 5월 28일 서울을 출발

하였다. 일본측의 접대는 전과 다름없었으나 관세개정(關稅改正), 미곡금수, 개항, 주경문제(駐京問題) 등의 현안에 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김홍집은 정계를 비롯해 교육계·재계 등 각 방면의 인사들과 친분을 나누고, 일본정부의 각 기관과 시설을 견학하여 일본의 발전상과 세계정세를 살피며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김홍집은 주일 청국공관에서 청국공사 하여장(何如璋), 구미 전문가인 참찬관(參贊官) 황준헌(黃遵憲)과 여러 차례 필담(筆談)을 나누었다. 그리하여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朝鮮策略)』을 받아 그해 11월에 귀국한 김홍집은 고종에게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조선책략』과 다른 신서(新書)를 바쳤다. 『조선책략』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의 외교정책을 써야 하며, 그 외에 구미 여러 나라와 수호·통상하며 산업과 무역의 진흥을 꾀하고 서양 기술을 배워 부국강병책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미국은 강대·공명·정의의 나라이며, 기독교는 주자학·양명학(陽明學)과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 책은 고종을 비롯해 척신과 대신들 및 신진청년층에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조선책략』 내용이 알려지자 개화·혁신에 반대하는 유림 측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상소가 답지하였다. 고종은 미봉책으로서 척사윤음(斥邪綸音)을 전국에 반포하여 유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한편, 유배·강제 축출·주륙 등 탄압책을 취해 개화와 척사의 갈등은 날로 커져 갔다.

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 두 차례의 수신사의 파견을 통해 국제정세와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종과 정부 대신들은 유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881년 1월 11일 조준영(趙準永)·박정양(朴定陽)·어윤중(魚允中)·홍영식(洪英植) 등 양반가 젊은 인재들 중심의 일본 조사시찰단(일명 신사유람단) 38명(위원 12명, 수행원 26명)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70여 일 동안 이들은 일본의 내무·농상무·외무·대장·문부·사법(司法)·공부(工部)·육군·세관(稅關) 등 국정 전반을 조사하고 연구했다. 귀국 즉시 그들은 각자의 여행기인 문견기록과 함께 시찰보고서를 작성해 고종에게 제출하였다. 이들 기록은 100여 책에 달했다.

**【의의】** 개항 이후 1, 2차 수신사 파견을 통해 외국의 발전상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파악한 고종과 대신들은 개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일본 파견은 한국 근대화의 모형을 청국보다 일본에서 구하고자 한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

**【핵심어】** 수신사/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김기수/김홍집/조준영

**【참고문헌】**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한밭출판사, 1982); 이현중, 『한국개항장연구』(일조각, 1975); 조항래, 『개항기 대일관계사연구』(형설출판사, 1973); 조항래, 「대일수호후(對日修好後)의 병자(丙子, 1876) 수신사행(修信使行)에 대하여」, 『朝鮮學報』 84(1977);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진자료】** 017. 1879 제1차 조사시찰단으로 파견된 김기수  
018. 187603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제1차 조사시찰단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영선사

개화파	●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강화도조약	조선시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1881년 9월 김윤식을 단장으로 하여 무기제조기술을 배우고 무기 구입, 미국과의 통상조약 교섭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유학생 38명과 수행원을 이끌고 청나라로 간 사절

**【배경】** 신무기를 비롯한 서구문물의 도입은 개항 직후부터 고종과 초기 온건개화파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수신사(修信使)와 조사시찰단의 일본 파견,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설치 등 일련의 개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나라에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 무기 수입 및 미국과의 통상조약 교섭을 위해 유학생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되었다.

**【경과】** 영선사의 파견은 1879년 8월에 영중추부사 이유원(李裕元)이 청나라의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直隸總督兼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에게 타진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정부는 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홍장이 광서제(光緒帝)의 재가를 받았다. 조선 정부는 필요한 무기 제조법 전수와 40명의 군인을 유학시키는 문제, 조선군 3만 명의 무장에 필요한 각종 무기를 교섭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맹렬한 반대가 있어 고종은 우선 공도(工徒)를 파견해 무기제조법의 학습만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영선사의 구성은 유학생 38명, 그밖에 관원·통사(通事, 통역관)·수종(隨從, 하인) 등 모두 69명이 정식 인원이며, 유학생의 수종도 14명이 있었다. 유학생 38명은 중인(中人) 이상의 신분인 학도(學徒) 20명, 천인 신분인 공장(工匠)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영선사 일행은 그 해 9월 26일 출발해 11월 17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유학생들은 청나라 교육장에 분산 배치되었다. 학도(學徒)들은 주로 화학·전기·제도·화학제조법 및 외국어 등 이론적인 분야를, 공장(工匠)들은 제련·기계조작법 및 기계모형의 제조 등 실무적인 분야를 주로 배웠다. 그러나 1882년 5월 초까지 유학생의 반수인 19명이 병이나 재능 부족, 기타 다른 이유로 중도 귀국하였다. 또 영선사행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비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1882년 6월 18일 임오군란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학습이 중단되었다. 김윤식은 학도 2명

을 대동하고 7월 7일 귀국하고 천진에는 유학생 15명이 남아 있었다. 김윤식은 9월 24일에 다시 청나라로 가서 10월 16일 잔류 유학생을 인솔해 11월 1일 인천으로 귀국했다.

영선사로서 김윤식의 사명 중에는 미국과 국교를 맺기 위한 사전교섭도 있었다. 미국과 연대 전략인 '연미론(聯美論)'은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 나오며, 이홍장도 계속 중용했다. 김윤식은 1881년 11월 28일부터 1882년 3월 4일까지 모두 8차에 걸쳐 조미수교 협의 회담을 가졌다.

**【결과】** 청나라의 무기제조법 유학은 태반의 중도 귀국에 재정난이 겹치는데다 국내 변란 등으로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1883년 3월 삼청동 북창(北倉)에 최초의 기기창(機器廠)을 창건하는 기초가 되었다. 또한 미국과의 국교 사전교섭은 1882년 4월 6일, 제물포에서 조미수호조약 체결로 나타났다. 김윤식은 영선사로서 천진에 머물고 있는 동안 “연미에 관한 일이 심중팔구였으며 학습에 관한 일은 한 둘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며 연미에 관한 사명에 집중했다.

**【의의】** 영선사의 청국 파견은 고종의 외교 다변화, 근대화와 국방의지의 확고함을 보여준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빈곤했고, 적절한 예산 계획이 없었으며, 임오군란에서 보는 바처럼 국내정치의 부패가 부국강병책의 발목을 잡았다.

**【핵심어】** 영선사/김윤식/이홍장/북창/기기창/조미수호조약/임오군란

**【참고문헌】** 김윤식, 『음청사(陰晴史)』; 박일근, 『근대한미외교사』(박우사, 1968); 권석봉, 「영선사행(領選使行)에 대한 일고찰-군계학조사(軍械學造事)를 중심(中心)으로-」, 『역사학보』 17·18합집, 1962; 전해중, 「통리기무아문 설치의 경위에 대해」, 『역사학보』 17·18합집, 1962;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서구열강과 통상조약체결

개화파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강화도조약	조선시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조선이 대외 문호를 닫은 쇄국정책을 끝내고 일본과의 조일 수호통상조약에 이어 미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구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일

**【배경】** 1876년 조선은 쇄국정책을 청산하고 일본과 조일수호통상조약(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에 1, 2차 수신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서구의 문명을 파악하였다.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은 일본 주재 청국 외교관 황준현의 『조선책략 朝鮮策畧』을 들여왔다. 『조선책략』은 러시아 방어책으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親中國 結日本 聯美國)’을 제시하였다. 수신사의 보고와 『조선책략』은 조야에 구미와의 수교와 통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조선이 일본과의 수호통상조약을 맺자 미국, 영국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이 조선과 외교 및 통상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청국은 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청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선이 서구제국과 외교통상관계를 맺도록 권장했다. 이에 서구제국들은 청국의 중재를 통해 조선과 외교통상 관계를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개】**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고, 부산항을 개항하자 미국정부는 로버트 윌슨 슈펠트(Robert Wilson Shufeldt, 1822~1895)를 전권위원으로 하여 조선과 수호조약을 맺고자 일본을 통해 교섭해 왔으나 조야의 만국공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청국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은 조선에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이 구미 여러 나라와 수호통상을 권고하고 있었다. 슈펠트는 이홍장에게 조선과의 수호통상을 알선해주기를 청했다. 1881년 11월 영선사로서 청나라에 도착한 김윤식은 청국에서 미국과 외교통상관계를 맺기 위해 이듬해 3월 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882년 5월 22일(음 4월 6일) 제물포에서 조선의 전권위원 신헌, 김홍집과 미국의 전권위원 슈펠트 간에 체결되었다.

1882년 8월 23일 조선의 주정사(奏正使) 조영하(趙寧夏)와 청나라의 직예총독(直隸總督) 이홍장(李鴻章) 사이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었다. 청국은

이 장정에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반영하고자 집요하게 노력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제1차 수신사 김기수(金綺秀)가 일본에 갔을 때 주일영국공사 파크스(Parkes, H. S.)가 교섭을 시도했고, 1881년에 영국 군함 페거서스호(The Pegasus號)가 조선을 방문하고 교섭을 시도했으나 두 번 다 실패하였다. 그해 5월 조미조약이 체결되자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Wade, F. F.)는 청나라에 적극적인 알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나라는 미국과의 통상조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수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조선에 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그 결과 1883년 11월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 선후속약(善後續約)의 조인을 보았다. 독일과도 1883년 11월 각각 「조독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영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국내 내륙지방에서의 상행위를 인정하였다. 1884년 6월 이탈리아와 「조이수호통상조약(朝伊修好通商條約)」이 조인되고, 1884년 7월에 러시아와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이 조인되었으며, 프랑스와도 1886년 5월 「조불수호조약(朝佛修好條約)」이 조인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 구미 여러 나라는 자국 생산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저율관세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도 저율관세와 미국에게 일방적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각 세율은 우리 정부가 3개월 전에 통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 관세 자주권을 확보했다.

**【의의】** 조선은 서구제국과 통상조약을 통하여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세계의 일원으로서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이로써 무역에서 일본의 독점을 배제하였고, 종주권을 고집하고 있던 청나라와도 1882년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1899년에 맺은 조청통상조약을 통하여 근대적 무역관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핵심어】** 조선책략/조미수호통상조약/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조영수호통상조약/조이수호통상조약/조로수호통상조약/조불수호조약/수호통상조약/수호조약

**【참고문헌】** 金鍾圓,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해, 『歷史學報』 31·32合輯(1966); 박일근, 『근대한미외교사』(박우사, 1968); 李普珩, 「歐美諸國에 대한 通商修好條約締結」, 『한국사』 16(국사편찬위원회, 1975); 崔文衡, 「韓露修交的 背景과 經緯」, 『韓露關係 100年史』(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崔文衡, 「韓英修交와 그 歷史的 意義」, 『韓英修交 100年史』(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개화파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강화도조약	● 조선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1883년(고종 20) 7월 조선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

**【배경】**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듬해 미국 공사 푸트(Foote, L. H.)가 조선에 부임하였다. 조선에서도 전권공사를 미국에 주재시켜야 했으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푸트 공사는 조선정부가 답례사절로서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여 조선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었다.

**【내용】** 개화파의 영수 김옥균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민씨 척족 가운데 젊은 실세인 24세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추천했다. 이리하여 보빙사는 정사 민영익(閔泳翊), 부사 홍영식(洪英植, 27세), 서기관으로 개화파의 핵심인 서광범(徐光範, 24세), 수행원으로 일본 게이오 의숙에서 유학한 유길준(兪吉濬, 26세), 수신사 박영효를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온 변수(邊燾, 24세), 영선사 김윤식과 함께 중국 천진에 가서 영어를 배운 역관출신 고영철(高永喆, 30세), 무관 현홍택(玄興澤, 25세)과 최경석(崔景錫), 통역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중국인 오례당(吳禮堂)으로 구성했다.

보빙사 일행은 일본에서 미국 사행임무를 안내할 사람으로 주일 미국공사 빙햄(John A. Bingham)의 천거를 받아 외국참찬관 겸 고문관이란 직함으로 일본어에 능통한 미국인 퍼시벌 로웰(Percival Rowell)을 현지 특채했다. 여기에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 미야오카 츠네지로(宮岡恒次郎)를 로웰의 개인비서로 채용해 동행함으로써 보빙사 일행은 모두 11인이 되었다. 보빙사 일행 중에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이나 영어를 일어로 통역하면 일본 유학생 출신이 이를 우리말로 읊기는 이중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일행을 안내한 로웰은 명문가 출신으로 동생 로렌스 로웰은 하버드대 총장, 여동생 애미 로웰은 여류시인이었다. 그 자신도 하버드대 출신으로 일본에서 여행과 저술을 하던 중 보빙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화성연구와 명왕성을 발견하는 등 천문학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그해 12월 한국을 방문하여 견문한 것을 바탕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저술했다.

보빙사 일행은 7월 26일 인천을 출발하여 일본을 거쳐 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워싱턴을 거쳐 뉴욕에서 9월 18일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서(Arthur, C. A.)를 접견하고 한글로 작성된 국서와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보빙사 일행은 도포에 갓을 쓰고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통 예법에 따라 큰절로 예를 포함으로써 미국 측을 놀라게 했다. 그 뒤 보빙사 일행은 40여 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세계박람회, 방직공장, 농장, 의약제조회사, 해군 연병장, 병원, 전기회사, 철도회사, 소방서, 신문사, 조선공장, 육군사관학교 등을 방문 시찰하였다.

귀국 때 홍영식 등은 태평양을 거쳐 바로 귀환하였으나, 민영익·서광범·변수는 미국정부의 배려로 미국 군함 트렌튼(Trenton)호를 타고 6개월간 유럽을 거쳐 세계일주 끝에 5월 31일 귀국했다.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갑신정변의 발발 때까지 유학하였다.

**【결과】** 보빙사의 미국 방문은 서양 국가에 최초의 외교사절 파견이라는 점과 더불어 워싱턴에서 내무성 교육국장 이튼(Eaton, J.)을 방문하여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소개받고, 우편제도, 전기시설, 농업기술 등을 둘러 본 것이 돌아와 우정국 설치, 경복궁의 전기설비, 육영공원, 농무목축시험장 등의 설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육영공원 설립 시 주한미국공사 푸트를 통하여 보빙사들이 만난 국장 이튼에게 의뢰, 뉴욕의 유니온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신학생 헐버트(Hulbert, H. B.)·번커(Bunker, D. A.)·길모어(Gilmore, G. W.)의 3명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또한 보빙사 일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볼티모어에서 가우처(Goucher) 박사를 만났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가우치 박사는 감리교의 조선선교를 위해 뉴욕 감리교 선교부에 선교기금을 회사하여 조선에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을 파견하게 되었다. 보빙사들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물관(The Smithsonian Institution)에 조선약용식물의 표본을 기증하여 최초의 문화교류를 기록하였고, 귀국할 때 타작기, 벼베기기계, 저울 등 농기구 18종을 구입하여 왔다.

**【의의】** 1883년 보빙사의 미국방문은 최초의 영어권 방문 외교사절로서 외교사와 은둔의 나라 조선에 문명의 새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보빙사들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세계 일주를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교육·우편·전기·산업시설 등의 신문명 도입과 개신교의 전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역사의 진행에 따라 점차 긴밀하게 형성되어간 한미관계의 시발이 되었다.

**【핵심어】** 보빙사/견미사절단/민영익

**【참고문헌】** 손정숙, 「한국 최초 미국 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

학』 29(2007); 김원모, 「조선 보병사의 미국사행」, 『한미수교사』(1999); 한철호, 『친미개화파 연구』(국학자료원, 1998); 김원모, 「견미 조선보병사 수원 최경석 오예달 로우엘 연구」, 『동양학』 27(1997);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진자료】** 019. 188309 문호개방 후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보병사 일행  
020. 1888 워싱턴주재 주미공사관 직원  
021. 워싱턴 주미공사관[대조선주차미국화성성둔공사관]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항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

**【소항목】** 근대문물의 수용

개화파	영선사
고종의 친정과 개방정책	서구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강화도조약	조선시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수신사, 조사시찰단	● 근대문물의 수용

**【정의】** 개항 이후 외국 견문과 외국인의 내왕, 신식교육의 보급, 외국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활동에 편리한 서양식 복장의 채용, 서구식 건축과 전기, 전화 및 교통시설이 도입, 확산되어 생활상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일

**【배경】** 개항 이후 일본 및 서구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왕실과 사회 상층부부터 서구적 생활문화를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도와 문물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전기, 통신, 교통 등 각종 시설이 들어오고, 궁궐과 관청, 은행과 학교 등 공공건물들이 서양식으로 지어져 위용을 자랑하며 거리의 모습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전개】** 1896년 4월 육군복장이 구미식 군복으로 바뀌었고, 1900년대에서 191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관복이 양복화되면서 상류층에서 양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종의 단발에 프록코트와 실크햇 착용과, 1901년 1월 순종이 양복차림의 일행 70명을 거느리고 한 지방시찰은 복장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다. 1902년에는 한홍양복점이 한인에 의해 처음 개설되었다. 여성들은 1899년에 장옷을 폐지하는 대신 우산을 지니도록 청하는 상소를 시작으로 여성 복제개량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세기 말 각국과 외교통상관계가 열리면서 서울 정동일대는 러시아·영국·일본·미국 등 각국 영사관이 많고, 이화학당·배재학당 등이 있어 서구인들의 왕래가 많아 근대문화의 진원지로 인식되었다.

1800년대 후반 경복궁에 전기불을 밝히는 것으로 전기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는 석유, 램프, 성냥이 들어와 등잔, 남포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전화는 1896년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개통되었는데, 김구는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감옥에서 형집행 직전에 고종의 특사령이 전화로 전달되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날은 전화가 개통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공중용 시외전화는 1902년 3월에 서울~인천 간에 개통되었다.

1899년 서울의 중심지에 전차가 다니게 되었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기차가 운행되고, 이왕직(李王職)과 총독부에서 1911년에 미국산 포드형 승용차를 1대씩 구입한 것이 자동차

운행의 시초로서, 최초의 운전자 윤권은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운전기술을 배워 황실 운전사가 되었다.

자전거는 윤치호(尹致昊)가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전한다. 그는 1883년과 1895년 미국에서 귀국하였는데, 자전거를 언제 들여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자전거 상인들은 자전거 보급을 위하여 많은 상금이 걸린 자전거대회를 자주 열었다.

1895년(고종 32) 11월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서구식 이발이 시작되었다. 그날 고종은 대신들과 함께 첫 이발을 하게 되었다. 여자들의 머리는 더 오랫동안 옛 모양을 고수하였다.

1895년 각급 학교가 설립되어 체조와 운동경기를 하게 되었고, 매년 각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었다. 학교운동회는 학교 연합운동회로 발전하여 1905년부터 1909년에 이르러서는 운동회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의의】** 개화와 위정척사의 심각한 내부 갈등을 수반하면서 진행된 근대화 작업은 한편에서는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경박한 문화로서 배척의 대상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에 편리함으로 인해 근대를 깊이 받아들이게 했다.

**【핵심어】** 근대화/근대문물/양복/전기/전화/전차/자동차/자전거/단발령/이발/운동회

**【참고문헌】** 『한국사』 18(국사편찬위원회, 1973);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韓國服飾文化史)』(교문사, 1981); 『서울六百年史』 5(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83); 유희경 외, 大韓帝國時代 文武官服飾制度(한국자수박물관출판부, 1991); 임숙자, 『한국생활문화 100년』(도서출판 장원, 1995);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화운동과 국권위기

**【소항목】** 정국의 동요와 외세의 간섭

● 정국의 동요와 외세의 간섭	갑오개혁
신문명에의 문호개방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정국	

**【배경】**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침략은 점차 노골화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은 밖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면서, 안으로는 봉건적 사회체제를 극복하여 자주적 근대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서구문명을 수용하는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화정책은 기존의 성리학 봉건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선사회에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전개】** 조선의 보수 유생들이 제국주의 침략과 정부의 개화정책을 반대하여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위정척사운동은 개항을 전후하여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 등의 논리로 서양과 일본의 통상 및 개항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는 한편 구식군대를 차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식군인에게 지급된 군료에 쌀과 모래가 섞여 있었다. 1882년 6월 군인들은 격분하여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은 사대당을 몰아내고 혁신정부를 수립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 갑신정변 결과 조선은 일본의 강요로 배상금 지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조선에 대한 청국의 내정간섭이 심해짐에 따라 청일 양국의 조선에 대한 주도권 쟁탈은 더욱 강화되었다.

**【의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 위정척사운동은 외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외세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애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갑신정변은 중국에 대한 전통적 외교관계 청산, 봉건제도를 타파하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짐으로써 보

수세력의 장기집권과 개화세력의 위축으로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운동이 약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최창규, 『한국의 사상』(사문당, 1973); 김의환, 『의병독립운동사』(박영사, 1974); 홍순창, 『한말의 민족사상』(탐구당, 1975); 이택휘, 『한국정치사상사』(전통문화연구회, 1999); 이택휘, 「조선후기 척사논의의 전개와 그 의의」, 『조선조 정치사상연구』(평민사, 1987); 권석봉, 「임오군변」, 『한국사』 16(국사편찬위원회);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 【사진자료】** 023. 18820723 임오왜란 당시 도망치는 일본공사  
024. 1882 일본으로 피신한 일본 하나부사와 공사관원 일행  
025. 18841204 우정총국  
026. 갑신정변의 주역(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화운동과 국권위기

**【소항목】** 신문명에의 문호개방

정국의 동요와 외세의 간섭	갑오개혁
● 신문명에의 문호개방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정국	

**【정의】** 개화운동이 전개되면서 신교육의 도입으로 신식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개신교가 수용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은 근대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배경】** 개항 이후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였던 외교사절들에 의해 신식교육기관이 소개되고 유학생이 파견되었다. 1883년에는 신식교육기관이 서울과 원산에 설립되었다.

**【내용】**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학교인 동문학(同文學; 혹은 동문학교)이 설립되었으나 일종의 통역관 양성소였다. 이어 원산에 원산학사(元山學舍)가 세워졌는데 민간인들이 주동이 되고 개화파 관료들이 지원하여 기존의 서당을 개량하여 설립하였다. 교수과목은 외국어, 세계 지리와 역사, 자연과학 등 근대식 과목도 있었다. 이후 정부는 육영공원을 설립하여 양반고관 자제에게 영어와 지리 등 근대학문을 교육하였다. 또한 개신교를 수용한 신홍계층들은 개신교 교리를 통한 청교도정신을 새 도덕과 윤리로 삼았고, 자유와 평등사상에 매료되었다. 정부요인들 중에서도 개화당 인사들이 선진국의 문명을 받아들여려는 방편으로 개신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신교는 미국선교사들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선교를 강화하자 단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파고들었다. 그들은 낡은 전통과 인습에 매여 있는 한국민 속으로 들어가 전도뿐만 아니라 교육·의료사업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개화운동에 헌신하였다.

**【결과】** 신교육을 받고 개신교를 수용한 신홍계층들은 개신교의 교리를 통한 청교도정신을 자기들의 새 도덕과 윤리로 삼았고, 자유와 평등사상에도 매력을 느꼈다. 그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한편 개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갑오개혁 이후 하나의 큰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의의】** 서양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동문학·원산학사 등 신식학교가 설립되어 신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교육기관은 육영공원이다.

**【핵심어】** 신식학교/동문학/원산학사/육영공원/개신교 수용/교회/개화운동/갑오개혁/사회세력

**【참고문헌】**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일조각, 1969);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연세대학교출판부, 1971);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일조각, 1969);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 【사진자료】** 027. 1895 한성사범학교  
028. 1886 이화학당 학생들  
029. 1885 배재학당 학생들  
030. 1900 구한국군대 훈련 광경(1)  
031. 1900 구한국군대 훈련 광경(2)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화운동과 국권위기

**【소항목】**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정국

정국의 동요와 외세의 간섭	갑오개혁
신문명에의 문호개방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
●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정국	

**【정의】** 동학의 인간평등사상과 사회개혁사상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였다. 동학은 대규모 농민세력과 규합하여 반봉건 반외세의 항쟁으로 바뀌어갔다.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에 의해 실패하였다. 이후 일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명성왕후를 시해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배경】**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과 지배층의 농민수탈로 인하여 조선의 농촌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농민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식이 더욱 성장하였으며 농민층의 불만이 팽배해진 가운데 사회변혁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었다.

**【내용】**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인간 중심의 평등사상을 내세우며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종교로 발전하였다. 동학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호응하여 대규모 농민세력을 규합하였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은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 아래 호남, 호서, 영남, 강원, 경기, 황해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는 청군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군도 출병하였다. 이에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청일 양군의 철병을 요구하였지만 일본군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청국과 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 한편 낭인을 사주하여 명성왕후를 시해하였다. 이로 인해 유생들은 1895년 을미의병을 일으켜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의의】**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개혁운동, 반침략적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사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을미의병은 일제의 침략에 대한 최초의 의병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핵심어】** 동학농민운동/동학/전주화약/청일전쟁/반봉건·반외세/청일전쟁/천진조약/명성황후

**【참고문헌】** 김의환, 『근대조선 동학농민운동사의 연구』(화천서원, 1986); 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일조각, 1983);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일조각, 1993);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최문형 외 저, 『명성황후 시해사건』(민음사, 1992); 신국주, 「민비시해사변에 관한 연구」, 『동국사학』 17(1982).

- 【사진자료】** 032.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개남  
033. 동학농민군이 돌린 사발통문  
034. 동학농민군의 백산봉기 기록화  
035. 189412 들것에 실려 호송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036. 18940612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  
037. 189409 청일전쟁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에 패배하고 붙잡힌 청국포로  
038.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살해된 경복궁 옥호루  
039. 1904 명성황후의 시신을 불태운 소정각 앞  
040. 단발한 고종  
041. 18951115 단발령이 공포된 후 단발당하는 광경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전시항목】** 개화운동과 국권위기

**【소항목】** 갑오개혁

정국의 동요와 외세의 간섭	● 갑오개혁
신문명예의 문호개방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정국	

**【정의】**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다.

**【배경】** 정부는 1894년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에 실패하자 청국에 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친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군을 조선에 즉각 출병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조선의 독립과 내정개혁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김홍집을 앞세운 신정권을 수립하였다.

**【전개】** 갑오개혁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아관파천까지 3단계로 추진되었다. 제1차 개혁(1894.7.27~12.17)은 김홍집·김윤식 등 개화파 관료들이 군국기무처를 통해 약 210건의 개혁안을 의결하여 실시하였고, 제2차 개혁(1894.12.17~1895.7.6)은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 총 213건의 개혁안을 입안하여 시행코자 하였다. 제3차 개혁(1895.7.7~1896.2.11)은 김홍집과 유길준 등이 140여 건에 달하는 개혁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갑오개혁은 정치면에서 개국 연호의 사용, 왕실과 정부 사무의 분리, 과거제도의 폐지 등이 이루어졌고, 경제면에서는 국가재정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정사무를 일원화하였다. 사회면에서는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봉건적 폐습이 폐지되었다. 군사면의 개혁은 훈련대 창설과 확충, 사관양성소의 설치 등이 시도하였다.

**【결과】** 갑오개혁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방하여 조선의 전통적인 체제를 혁파하고 근대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여 했던 개혁운동이었지만 일본의 침략기반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의의】** 갑오개혁은 조선후기 실학에서 발원하여 갑신정변의 전통을 이어받아 추진되었던 조선왕조 최후·최대의 개혁운동으로서 독립협회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선구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핵심어】** 갑오개혁/갑신정변/동학농민운동/독립협회운동/애국계몽운동의 선구

**【참고문헌】**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원유한, 「갑오개혁」, 『한국사』 17(국사편찬위원회, 1981).

**【사진자료】** 042.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을 요구하는 오오토리 공사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 【키워드】**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 【전시항목】** 개화운동과 국권위기
- 【소항목】**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

정국의 동요와 외세의 간섭	갑오개혁
신문명예의 문호개방	●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정국	

**【정의】** 1896년 2월 11일 친러세력과 러시아공사가 공모하여 비밀리에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긴 사건. 아관파천(俄館播遷) 또는 노관파천(露館播遷)이라고도 한다.

**【배경】** 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 거처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친일정권이 무너지고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Weber, K. I)도 민비세력에 접근하여 친러정책을 권유하였다.

**【전개】** 을미사변 이후 일본은 친일내각을 성립시켜 '단발령' 실시와 함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명성왕후 시해사건으로 고조된 민중들의 반일감정은 '단발령'을 계기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의병봉기를 촉발하였다. 의병을 진압할 수 없어 중앙의 친위대까지 동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경비에 공백이 생겼고, 이 기회를 틈타 친러파들이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여 실행하였다.

**【결과】**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주권과 이권이 손상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고종 환궁 여론이 비등하였다. 전국의 유생들이 상소운동을 개시하고 장안의 시전들이 철시를 단행하는 등 여론이 거세어지자, 러시아공사관 파천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 경운궁(현재의 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의의】** 러시아공사관 파천은 을미사변을 통해 불법적으로 조선의 정권을 장악한 일본 세력에 대한 친러세력의 반발로 일어난 사건으로 국왕의 무능과 나약함, 그리고 정부지도자들의 서로 세력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났다. 결국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으로 인해 조선의 자주성과 국력은 크게 손상되었고 열강의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었다.

**【핵심어】**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고종/을미사변/친일내각/단발령/의병봉기/고종의

환공/자주성과 국력 손상/열강의 경제적 침탈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8(탐구당, 1981);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김원수,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과 러시아의 대한정책」, 『한러관계 100사』(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이민원, 「아관파천기의 한로교섭」,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1990).

**【사진자료】** 043. 서울 정동의 러시아공사관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캡슐: 태극기의 유래
●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국권상실의 충격

개항 후 근대화를 추진한 개화파 또는 개화파나 수구파 모두 중화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국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지위에 놓아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1884년 갑신정변 때도 그러했고, 10년 뒤 갑오개혁 때에는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으로, 대군주를 '황제'로 격상시키려고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일국의 국왕이 외국공사관에 1년간 몸을 의탁함으로써 이런 노력들이 중단되었고, 국가 위신이 심히 훼손되었다.

1897년 2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한 후 개화파 세력과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운동을 다시 추진하여 1897년 10월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에 선포하였다. 아관파천 후에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한 듯 했으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열강이 한국의 광산·철도·전신·삼림·어장 등 각종의 귀중한 이권을 침탈하였다. 전제적 국왕은 국민의 의견이나 여망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다수의 귀중한 이권들을 열강에게 양여하였다.

1896년 7월 20일 독립협회는 독립문·독립공원·독립관 건립을 표방하면서 창립되었다. 국민 의식 계발을 위해 독립협회는 매주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연회·기관잡지와 『독립신문』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근대적 자주독립사상과 민주 공화사상을 포함한 자유민권사상과 자주적 근대화 사상을 널리 보급하였다. 이렇게 국민의식을 계발해온 독립협회는 1898년 1월부터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요구 반대, 한러은행 설치 반대 등 주권과 국가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대중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러시아와 일본 등 외세를 한반도에서 후퇴시켜 수년간 세력 균형을 이루게 했으며, 개화독립사상과 민주주의사상 및 공화주의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시작하여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분출하는 국민들의 참정욕구를 만민공동회라는 형태로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었고, 이런 활동들로서 이후 애국운동의 주체세력을 양성하였으며, 애국계몽운동·일부의 의병운동·여성해방운동·자강운동·민족문화운동·항일독립운동의 원류를 이루었다.

그중의 운동의 하나가 1898년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고종친유 이후의 6일간을 제외하고 42일간 철야 시위로 전개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의회설립운동이었다. 의회설립운동을 무산시킨 광무황제와 그 측근들은 이후 대한제국 국제 반포 등으로 절대왕정을 추구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황제와 그 측근들이 회유, 제압당하면서 손쉽게 국권을 강탈당

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전시항목】** 독립협회의 개혁운동

**【소항목】** 독립협회

● 독립협회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의회설립운동
-----------------------	--------

**【정의】** 19세기 말 외세로 인한 국권위기 앞에서 1896년 7월부터 1898년 12월까지 한국의 자주독립과 입헌주의, 자주 근대화를 추구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단체.

**【배경】** 온건개화파의 김홍집 내각이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에 의하여 붕괴되고 한국인들은 아관파천 후에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한 듯 했으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열강이 한국의 광산·철도·전신·삼림·어장 등 각종의 귀중한 이권을 침탈하였다. 전제적 국왕은 국민의 의견이나 여망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다수의 귀중한 이권들을 열강에게 양여하였다.

**【전개】** 개혁파들은 서재필(徐載弼)이 귀국하자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을 보게 되었다. 개혁파들은 이어서 서재필의 자문을 받으면서 1896년 7월 20일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독립협회의 창립세력은 기본적으로 갑오개혁의 주동인물들의 모임인 건양협회(建陽協會) 세력과 외교계 관료들이 많았던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세력과 자주개화정책을 추구하는 독립파 개혁적 관료세력 등이 모인 것이었다.

서재필은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어 고문의 역할을 하였다. 회장에는 건양협회 계통인 안경수가 선출되었다. 독립협회는 창립 후 고급관료 주도기(1896년 7월 2일~1897년 8월 28일), 민중진출기(1897년 8월 29일~1898년 2월 26일), 민중주도기(1898년 2월 27일~1898년 8월 27일), 민중투쟁기(1898년 8월 28일~1898년 12월 25일)의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독립협회는 독립문·독립공원·독립관 건립을 공식적인 창립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문은 『독립신문』과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등을 통하여 국민의 성금을 모집하면서 3,825원의 예산으로 1896년 9월 6일 서재필로 하여금 독립문 건립을 담당하도록 계약하였다. 설계는 서재필이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모델로 기본설계를 하고, 독일 공사관의 러시아인 기사 사바친(Sabatini)이 세부 설계를 했으며 공역은 한국인 기사 심의석(沈宜碩)이 담당하였다. 석공은 한국인 고급 기술자들이 담당하고 역사(役事)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을 5~6천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 성대하게 거행한 후 1897년 11월 21일 준공하였다. 독립관(獨立館)은 종래 중국 사신을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고 묵게 하던 영빈관인 모화관을 개수한 것이었다. 독립관은 1897년 5월 23일 개수가 완공되어 독립협회의 사무실과 집회장소로 사용되었다.

② 독립협회는 독립관이 건립된 후 1897년 8월 29일부터 매주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을 계몽하였다. 토론회는 모두 34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자들의 집단적 의식 형성과 독립협회의 사상의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③ 독립협회는 토론회·강연회·기관잡지와 『독립신문』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근대적 자주독립사상과 민주 공화사상을 포함한 자유민권사상과 자주적 근대화 사상을 널리 보급하였다.

④ 독립협회는 제정 러시아가 1898년 1월 부산 절영도를 조차(租借)하려 하고, '러한은행'을 설치해서 탁지부 재정을 예치 관리하며 재정고문과 기기창 고문을 파견하자 이것이 대한제국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침략 정책이라고 보고 1898년 2월 21일부터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과·의의】** 19세기 말 열강이 이권침탈과 식민지화 침략정책을 본격화하여 대한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던 시기에 민간단체로서 독립협회가 정치 사회운동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 등 외세를 한반도에서 후퇴시키고, 개화독립사상과 민주주의사상 및 공화주의 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시작하여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그 이후의 애국운동의 주체세력을 양성하였으며, 애국계몽운동·의병운동·여성해방운동·자강운동·민족문화운동·항일독립운동의 원류를 이루었다.

**【핵심어】** 독립협회/독립문/독립신문/서재필

**【참고문헌】** 유영렬, 「독립협회의 민족사상연구」, 『사학연구』 22(1970); 「독립협회의 민족운동 전개과정」, 『사충』 17·18(1973); 강재언,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 『조선사연구회논문집』 9(1972); 신용하, 『독립협회연구』(일조각, 1976); 이광린,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진단학보』 39(1975).

- 【사진자료】** 044. 독립문과 독립관  
045. 18960407 독립신문 창간호  
046. 서재필  
047. 윤치호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전시항목】** 독립협회의 개혁운동

**【소항목】**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의회설립운동
●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정의】** 1898년 대한제국이 열강의 이권침탈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자 자주권의 수호와 자유 민권의 신장을 위해 독립협회와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전개한 민중대회

**【배경】** 1896년 2월 11일의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에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던 1년 동안 정권을 장악한 친러파들은 갑오경장으로 출범한 내각제도를 조선시대 의정부 제도로 되돌리고 전제군주제를 강화시켰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 열강에게 광산·철도·삼림·어장 등의 각종 이권을 양여하였다. 조선이 러시아쪽으로 기울자 일본은 영국, 미국 등과 연대하여 러시아와 더욱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1897년 2월 20일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慶雲宮)으로 환궁한 고종은 실추된 조선의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대외자주를 선언하며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출범시켰다. 러시아는 9월 종래의 온건한 베베르(Veber, K. I.) 공사를 스페이에르(Speyer, A.)로 교체하고, 부산절영도(絶影島: 지금의 영도)의 석탄고 기지조차(租借) 요구, 황실 시위대(侍衛隊)에 러시아 사관들을 파견하여 장악기도, 경제장악을 위해 러시아인 재정고문 알렉세이에프(Alexeiev, K.) 고용 및 한러은행(The Russ-Korean Bank)을 창설을 이어갔다.

이 시기 독립협회가 1896년 7월 2일 창립되어 독립문·독립공원·독립관의 건립운동과 토론회 등의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개혁파를 확대해 나가고, 토론회와 『독립신문』을 통해 이 러시아의 침략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경과】** 1898년 2월 이런 위기상황에서 서재필(徐載弼)·윤치호(尹致昊) 등 독립협회 간부들은 기존 계몽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정치운동을 선언했다. 외국의 군사권과 재정권 간섭을 규탄하고, 대외적으로 완전 자주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입헌정치와 탐관오리의 제거, 내정개혁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는 부산의 절영도 조차를 거듭 요구하고, 3월 1일 한러은행을 서울에 개설했다. 독립협회는 독립관에서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외부(外部)와 탁지부에 강경한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수구파 정부는 러시아공사관의 후원만 믿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했다.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장악하려는 정책이 독립협회에 의해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히자, 3월 7일 오후 러시아의 원조나 독립협회이나 선택을 강요하며 24시간 내에 회답하라는 통첩을 대한제국 외부에 보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략간섭정책을 완전히 배제할 기회로 판단하고, 정부가 러시아 세력을 철수시키도록 압박하기 위해 3월 10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약 1만여 명이 모인 민중대회에서 시민들은 쌀장수 현덕호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백목전(白木廩) 다락 위에서 시민들이 성토 연설을 하였다. 만민공동회 1만여 참여자들은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환을 전체의사로서 결의하였다. 러시아 공사를 비롯해 다수의 외국공사들과 외국인들이 만민공동회를 보고 놀랐다. 고종과 정부는 고심하다 3월 11일 만민공동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요구했다.

3월 12일에는 독립협회와 무관하게 서울 남촌(南村) 평민들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틀 전보다 더 많은 수만 명이 운집했다. 민중의 성장과 거대한 힘에 정부관료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들과 외국인들도 깊은 인상과 놀라움을 느꼈다. 러시아 측은 두 차례의 만민공동회의 결의와 각국의 반응을 보고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 한러은행도 철폐하였으며, 스페이에르 공사를 교체했다.

**【결과】** 독립협회가 일단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만민공동회라는 민중운동 형식을 개발하자 민중들은 스스로 시국현안에 따라 다양한 만민공동회를 만들어냈다. 예컨대, 4월 30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서재필 재류를 요청하는 만민공동회, 6월 20일 종로에서 열린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하는 만민공동회,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 열린 독일 등 외국의 이권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7월 16일 종로에서 열린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철도부설권 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등이 그것이다.

**【의의】** 만민공동회운동은 민중대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제정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무산시키고 라오동반도로 후퇴시켜 러일전쟁 발발 때까지 6년간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시켰다. 또한 국민의 여론을 통하여 열강의 이권침탈과 침략과 간섭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운동과정에서 근대적 자국민권사상을 가진 많은 애국 인사들을 배출했으며 자유민권사상을 국민들에게 보급했다. 이 운동으로 전제국가의 신민들이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 깨어나 이후 국권을 잃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책임을 떠맡으며 새로운 국민국가 시대의 주역이 되어 갔다.

**【핵심어】** 만민공동회/독립협회/대한제국/친러정권

**【참고문헌】** 慎鏞廈, 「萬民共同會의 自主民權自強運動」, 『韓國史研究』 11(1975); 朴永信, 「獨立協會 지도세력의 상징적 意識構造」, 『東方學志』 20(1978);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

화대백과』.

- 【사진자료】** 048. 189810 만민공동회 기록화  
049. 독립협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모여든 민중  
050. 18971127 경운궁 대안문을 나서는 명성황후 장례행렬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전시항목】** 독립협회의 개혁운동

**【소항목】** 의회설립운동

독립협회	● 의회설립운동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정의】** 독립협회가 1898년에 벌인 운동의 하나로 의회를 설립하여 1인 전제정치 of 한계를 극복하고 외세의 국권침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근대입헌 대의국가로 나아가고자 전개했던 운동

**【배경】**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간섭이 노골화되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관파천을 통해 세력균형을 도모하였으나 이번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과도해지고 이권에 대한 탐욕이 노골화 되었다. 외세의 위협 앞에 황제 1인과 측근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군주제의 한계가 점차 분명해졌다.

**【전개】** 독립협회는 1898년 4월 3일 토론회의 주제를 ‘의회원’(議會院) 설립의 긴급성으로 정하고 회원과 국민들에게 의회설립의 긴급한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이어 4월 30일자 『독립신문』에 장문의 논설을 게재하여 의회설립 필요성을 계몽하고, 광무황제에게 서양의 전제정치하 상하원(上下院)처럼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국왕의 응답은 부정적이었다. 독립협회는 7월 11일 재차 상소하였다.

독립협회는 의회설립에 찬동하는 개혁파 정부수립이 선결과제로 판단하고 1898년 10월 1일부터 12일간의 철야 상소시위를 벌였다. 개혁파 정부가 들어서 10월 14일 독립협회와 정부대표가 의회 설립에 합의하였다. 황제는 의회설립을 두려워했다. 독립협회는 10월 28일~11월 2일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황제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황제를 존중하는 내용의 헌의6조를 관민합의로 올렸다. 이에 황제는 중추원을 의회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중추원 관제를 제정해서 11월 4일 공포하였다. 한국역사상 최초로 의회를 설립하는 법률이었다.

새로운 중추원 관제는 50명 정원에 25명을 민선으로 뽑고, 나머지 25명은 황제가 임명하여 구성하며. 실제로 입법권, 조약 비준권, 행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권을 통한 감사권, 행정부 건의에 대한 자순권, 건의권 등을 갖추어 근대국가의 의회 기능과 역할을 모두 갖춘 것이었다. 외국공사들도 일종의 국민의회(Popular Assembly)의 개설을 보장받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민선의원 25명은 독립협회가 뽑도록 되었다. 친러수구파들은 이제 자신들은

권력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11월 4일 밤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하여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정부를 수립하려 한다는 내용의 익명의 전단을 서울 시내에 배포하였다. 고종은 놀라서 독립협회를 반역단체로 규정하여 해산시키고 이상재 등 17명의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조병식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고 중추원 신관제도 취소해 버렸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만민공동회를 자발적으로 열어 광무황제와 정부를 압박했다. 11월 5일 경무청 앞 만민공동회는 만 6일간 철야로 진행되었다. 고종은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했다. 서울시민들은 해산하지 않고 종로로 옮겨 철야시위를 계속하면서 ① 독립협회 복설(復設), ② 모략배의 재판, ③ 헌의6조 등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고종이 요구조건을 승낙하지 않자 11월 15일 만민공동회를 덕수궁 인화문(仁化門) 앞으로 옮겨 압력을 가중시켰다. 11월 21일 고종과 수구파들은 황국협회(皇國協會) 보부상 약 2,000명을 서울로 불러들여 만민공동회를 기습하였다. 분노한 시민들이 마포에까지 밀려가서 보부상들을 공격하였다. 고종과 정부가 만민공동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보부상의 혁파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정부가 실천하기로 약속한 3개조의 요구사항 실시가 진전이 없자 2일 뒤인 11월 26일 종로에서 다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놀란 고종은 돈례문(敦禮門)까지 나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친유하였다.

고종과 수구파는 독립협회의 복설을 허락하고 1898년 11월 29일 50명의 중추원 의관을 임명하였다. 이때 친러수구파들은 중추원 의관 중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가 선출하는 민선의원을 없애고 관선으로 바꾸었으며, 독립협회 25명을 17명으로 줄이고 보부상 계열을 29명으로써 다수를 차지하게 했다.

이 시기 만민공동회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의연금도 채우고, 평양에서도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으며, 독립협회의 지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설립되었다.

**【결과】** 1898년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고종친유 이후의 6일간을 제외하고 42일간 철야시위로 전개된 만민공동회의 의회설립운동은 11월 29일 중추원 의관 50명을 임명함으로써 의회설립이 실현되는 듯했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강력하고 유능한 새 개혁정부를 위해 11명을 천거했다. 종로에서 계속되는 만민공동회는 중추원의 11명 천거를 인준하고 과단성 있는 박영효의 소환 기용을 결의하였다. 의회설립과 박영효의 기용에 부담을 느껴왔던 고종은 시위대와 보부상을 동원하여 12월 23일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고 독립협회를 불법화시켰다.

**【의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의회설립운동은 국민의 분출하는 참정욕구를 수렴하고 외국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 국권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이를 무산시킴으로써 일제는 황제와 그 측근들만 회유 제압하여 국권을 강탈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운동에 참가하였던 청소년들은 이후 민족운동 지도자가 되었고, 주자학과 위정척사사상에 젖어 있던 애국적 인사들은 근대적 자주민권자

강 사상을 가진 애국적 인사로 바뀌었다. 자유민권사상, 민주주의사상이 일반 국민들에 크게 보급되었으며 민중에 의한 애국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정립하였다.

**【핵심어】** 만민공동회/독립협회/중추원/헌의6조/황국협회/보부상

**【참고문헌】** 愼鏞廈, 「萬民共同會의 自主民權自強運動」, 『韓國史研究』 11(1975); 朴永信, 「獨立協會 지도세력의 상징적 意識構造」, 『東方學志』 20(1978); 愼鏞廈, 「獨立協會의 議會主義思想과 議會設立運動」, 『韓國社會의 變動과 發展』(1985); 愼鏞廈, 「19세기 한국의 近代國家形成問題와 立憲共和國 수립운동」, 『韓國社會史學會論文集』 1(1986);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전시항목】** 대한제국 선포와 대한국 국제 공포, 광무개혁

**【소항목】** 대한제국의 선포

● 대한제국의 선포	광무개혁과 부국강병 노력
독립협회 해산과 대한국 국제 공포	철도와 전기의 시대 개막

**【정의】** 화이관과 사대관계에 얽매었던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부터 벗어나 세계에 독자적인 황제국임을 선포하고 출범한 황제체제의 국가. 1897년 10월 12일 선포되어 1910년 8월 29일까지 약 13년 동안 존속하였다.

**【배경】** 근대 이전 조선은 중국 중심의 국가 간의 의례상의 위계적 국제질서 때문에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천자(天子)와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지 못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개화파들은 중화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국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지위에 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중도에 중단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에 다시 국왕의 지위를 황제로 높이고, 1895년 8월 27일에는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으로 개칭하고 대군주를 ‘황제’로 격상시키려고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일국의 국왕이 외국공사관에 1년간 몸을 의탁함으로써 이런 노력들이 중단되었고, 국가 위신이 심히 훼손되었다.

**【경과】** 1897년 2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한 후 개화파 세력과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운동이 다시 추진되었다. 1897년 8월 16일 ‘건양’을 ‘광무(光武)’로 고쳐 ‘건양 2년’을 ‘광무 원년’으로 고쳤다. ‘건원’을 선포한 후 ‘칭제’에 걸맞게 황제로서 하늘에 제사드리는 환구단(環丘壇)을 조성했다.[1899년 원구의 북쪽에 황궁우(皇穹宇)를 건립하여 신위판(神位板)을 봉안하면서 태조를 추존하여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로 삼았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러일전쟁의 발발로 국권이 다시 약화된 1904년 2월까지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제가 국내 육해군을 직접 통수하는 체제를 만들고, 1899년 7월 군부(軍部) 외 별도로 원수부(元帥府)를 신설하여, 직접 서울과 지방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이 시기 헌병대와 시위기병대를 설치하여 병력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국방보다는 황실 호위를 위한 군사정책에 집중되었다.

둘째, 대한제국과 황제의 위엄·권위를 높이기 위해 대한제국 국가(國歌) 제정(에케르트

작곡), 황제의 어기(御旗)·친왕기(親王旗) 및 군기(軍旗)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황제를 대원수로 칭하고 프러시아식 복장과 관복을 착용하였다.

셋째, 종래 탁지부 또는 농상공부에서 관할하던 전국의 광산·철도·홍삼제조·수리관개 사업 등은 궁내부 내장원에서 관할하도록 이관시키고, 수입은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황제가 내탕금으로 전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상업은 자유상업을 허락하지 않고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보부상을 상무사(商務社)로 개편하여 상업특권을 부여하고, 때로는 영업세의 징수권도 주었다.

다섯째, 공업은 황실이 직영하는 방직공장·유리공장·제지공장 등의 설립을 시도하고, 일반민간인의 공장설립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황실이 직영하려는 업종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허가해 주려고 하였으나 민간공업은 발흥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양전사업(量田事業)과 지계사업(地契事業)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고 미국인 측량기사까지 초빙하여 1899년부터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1901년에는 양지아문을 혁파하고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여 토지측량조사와 함께 토지소유권 증명을 발급하였다. 지계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명제도였으나, 농업생산력이나 농민후생의 증대보다 농민으로부터 황실과 정부의 수취만 증대시켰다.

일곱째, 외교정책은 다분히 친러 쪽으로 기울어 제정러시아에게 동해 포경권, 마산항 일부 토지 조차, 용암포(龍巖浦) 조차 등 이권을 강요당했으며, 여기에 반발하는 일본을 무마하기 위해 1900년 일본에게 경상도·강원도·함경도·경기도의 어업권과 인삼위탁판매권을, 1901년 직산금광채굴권을 빼앗기고, 1902년 일본 제일은행권을 법화로서 한국에 통용하도록 허용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임박하자 대한제국정부는 1904년 1월 22일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일본은 이를 존중하지 않고, 2월 8일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군함 2척을 선제공격하여 격침시킨 다음,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인천에 상륙시키고,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함으로써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결과】**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을 구축하고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였다. 한국 민족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격렬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라는 것을 강요하여 식민지로 강점함으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의의】** 대한제국의 선포는 외세의 압박과 내정 문란에 대한 기층민의 전면적 저항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내정쇄신과 민권향상을 통한 국력의 결집보다 황제권과 황실의 위상을 강화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성격이 크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대한제국은 일본의 간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13년만에 망국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핵심어】** 대한제국/광무황제/환구단/황궁우

**【참고문헌】** 金度亨, 『大韓帝國期の 政治思想研究』(知識産業社, 1994); 宋炳基, 「光武改革研究」, 『史學志』 10(1976); 李玟源, 「稱帝논의와 大韓帝國의 成立」, 『清溪史學』 5(1988); 李玟源, 「大韓帝國의 成立과정과 列強과의 關係」, 『韓國史研究』 64(1989).

**【사진자료】** 051. 1913 황궁우

052. 대원수복을 입은 광무황제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전시항목】** 대한제국 선포와 대한국 국제 공포, 광무개혁

**【소항목】** 독립협회 해산과 대한국 국제 공포

대한제국의 선포	광무개혁과 부국강병 노력
● 독립협회 해산과 대한국 국제 공포	철도와 전기의 시대 개막

**【정의】** 1898년 12월 황제권을 제약하려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체시키고 황제권을 수호하고 절대화하기 위해 1899년 8월 17일 오늘날의 헌법격으로 내외에 국가기본법을 선포한 일.

**【배경】** 광무황제와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12월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해체시켰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황제권을 축소 또는 제약하여 의회를 설립하고 민권을 신장하며, 황제의 인사권에 관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황제와 그 측권 인사들은 황제권에 대한 간섭과 견제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였다.

**【경과】** 광무황제는 독립협회가 추진하여 설립된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1899년 6월 23일 조서를 내려 황제 직속의 법률제정 기관인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를 설치하였다. 법령의 제정이나 폐지에 관한 안건은 모두 법규교정소로 넘겨 의견을 거친 후에 직행 상주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최종 목표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제(國制)」를 반포함으로써 황제권을 수호하고 구시대적 지배층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법규교정소의 총재는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이센들(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참여하였다.

**【내용】** 「대한국국제」는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어온 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민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서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

을 명하시나니라.

제6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직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自治行理)이니라.

제8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有約國)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결과·의의】** 대한제국 국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추구했던 자유민권과 의회를 통한 민주정치에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권과 군사권의 모든 절대적 권한을 황제 1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서구의 절대왕정을 본 따 내외의 도전 앞에서 위기극복의 구심력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일본이 광무황제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하도록 적극 권했던 것은 황제와 측근만 장악하면 대한제국의 국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이후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핵심어】** 대한제국/대한민국국제/광무황제/독립협회/만민공동회

**【참고문헌】** 田鳳德, 「大韓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法史學研究』 창간호(1981); 金泰雄, 「大韓帝國期の 法規 校正과 國制 制定」, 『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97); 조재곤, 「대한제국의 '국제'와 군사제도」 『한국사』 42 (국사편찬위원회, 1999).

**【사진자료】** 053. 19020815 대한제국 국가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전시항목】** 대한제국 선포와 대한국 국제 공포, 광무개혁

**【소항목】** 광무개혁과 부국강병 노력

대한제국의 선포	● 광무개혁과 부국강병 노력
독립협회 해산과 대한국 국제 공포	철도와 전기의 시대 개막

**【정의】** 1896년 아관파천 직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고종과 대한 제국 정부가 절대왕정을 지향한 왕권강화와 국가 근대화 사업. 대한제국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고종황제의 연호인 ‘광무(光武)’를 따서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고도 한다.

**【배경】** 1894년 지방관의 부패와 착취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라도 지방의 광범한 동학농민운동은 폐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1894년 갑오개혁은 왕권의 일부 제약, 내각 기능 강화, 봉건적인 신분제의 철폐, 구시대적 폐습을 혁파 등 획기적인 개혁으로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아래로부터 개혁요구에 직면한 고종과 측근세력들은 내외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민권의 신장과 의회를 통한 민의의 결집보다 절대왕정을 지향하는 황제권 강화와 더불어 국가사회 정비와 부국강병의 방향을 취했다.

**【내용】** 광무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대체로 고종의 측근들로서 윤용선은 의정(議政), 이재순은 궁내부대신, 박제순은 외부대신, 윤응렬은 군부대신, 심상훈은 탁지부대신을 역임하였다. 탁지부의 하급관리로 출발한 이용익은 탁지부대신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들은 박정양·윤응렬·한규설·권재형 등 몇몇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적 성향의 인물이었다. 따라서 윤용선·심순택·이재순·심상훈·이용익 등은 한때 독립협회로부터 규탄의 대상으로 지목받기도 하였다.

광무개혁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신제도를 참고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 이념에 바탕하여 1894년 갑오개혁 이전으로 되돌리기와 국가사회를 개혁하기의 양면을 나타내었다. 1896년 향사제도(享祀制度)가 구식 및 음력으로 복구되고 단발령이 취소되었으며, 23부(府)제가 13도(道)로, 내각이 의정부로 환원된 것은 개혁 되돌리기 성격이 짙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들이 갑오개혁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 간 것은 아니었다. 구식 및 음력이 복구되었지만 이것은 향사제도에 국한되었고, 모든 의식이 복구된 것도, 양력이 모두 음력으로 복구된 것도 아니었다. 단발령도 일시 취소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었다. 23부제가 도제(道制)로 복구되었지만 갑오경장 이전의 8도와 이후의 23부를 절충한 1부(한성부)

13도 체제로 되었다. 복구된 의정부제도도 내각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살리는 것이었다.

광무개혁에서 두드러진 것은 왕권강화였다. 갑오·을미개혁에서 왕의 권한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으나 아관파천 후 새 정부는 실추된 국가 권위를 높이기 위해 왕위를 황제 위로 높이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으며, 서구의 절대왕정을 모델로 하여 황제의 권한을 무한불가침한 것으로 규정한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또한 각종 잡세 부활, 홍삼 제조, 백동화(白銅貨) 주조 특허, 수리·관개 및 광산사업을 통해 왕실 재정의 수입원을 확대하여 황제 내탕금으로서 임의로 지출할 수 있게 했다. 군사적 면에서 황권강화와 관련하여 서울의 친위대(親衛隊)가 2개 연대로 증강되고, 2개 연대의 시위대(侍衛隊)가 창설되었으며, 호위군(扈衛軍)도 호위대로 개편, 증강되었다.

부국강병책도 추진되었다. 상공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가 제조공장을 설립하거나 민간 제조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유학생 해외 파견, 기술교육기관 설립, 민간 제조회사의 기술 습득 장려, 기술자 양성. 근대적 회사와 실업학교 설립, 각종 기계나 운선(輪船) 제조 등이 이루어졌다. 도량형제도(度量衡制度) 제정, 통신·교통시설 개선, 우편·전보망 전국 확충, 서울·인천·평양·개성 등지 전화 개설, 경인선·경부선·경의선 등의 철도 개통, 서울에 발전소 건설로 전등이 켜지고 전차가 운행되었다.

호적제, 순회재판소, 종합병원인 제중원(濟衆院), 구휼기관인 혜민원(惠民院) 등이 설립되었다. 또 관리들은 양복을 입었고, 1902년에는 재차 단발령이 내려져 관리·군인·경찰이 상투를 자르게 되었다.

지방군도 증강되어 기존 평양·전주 진위대(鎭衛隊)가 2개 진위대, 14개 지방대대로 확대되고, 다시 6개 연대의 진위대로 통합, 개편되었다. 해삼위(海蔘威)·간도지방 교민보호를 해삼위통상사무·북간도관리(北壘島管理)가 설치되었다. 또 북간도의 영토 편입을 시도하였다.

양전사업(量田事業)도 추진되어 전후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토지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218군(郡)에 대한 토지측량을 완료하였다. 지계(地契) 발급 사무도 이루어졌다.

**【결과·의의】** 갑오개혁을 되돌린 수구반동적 측면이 있었으나 근대적 개혁의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어 그 후속적인 개혁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분출되었던 민주적 역량을 수렴하지 않고 억압하면서 절대왕정과 부국강병을 추구하여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고, 외세의 국권침탈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핵심어】** 광무개혁/구본신참/대한제국/광무황제/고종

**【참고문헌】** 주진오, 「대한제국의 수립과 정치 변동」,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한국사연구입문)』 하(한국사연구회, 2008); 신용하, 「광무개혁론의 문제점」, 『창작과 비평』 1978년 여름호; 송병기, 「광무연간의 개혁」, 『한국사』 19(국사편찬위원회, 1976); 송병기, 「광무개혁연

구」, 『사학지』 10(1976); 강만길, 「대한제국시기의 상공업문제」, 『아세아연구』 50(1973).

**【사진자료】** 054. 1902 대한제국 발행 여권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전시항목】** 대한제국 선포와 대한국 국제 공포, 광무개혁

**【소항목】** 철도와 전기의 시대 개막

대한제국의 선포	광무개혁과 부국강병 노력
독립협회 해산과 대한국 국제 공포	● 철도와 전기의 시대 개막

**【정의】** 대량수송수단으로서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 간의 경인선(京仁線) 33.2km를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등이 이어서 개통되고, 서울에 발전소가 건설되어 전등이 켜지고 전차가 운행됨으로써 근대문명과 더불어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된 일

**【배경】** 최초의 상업적 철도운송이 1829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는 1830년에, 그 뒤 급속도로 세계 각국에 보급되었다. 일본에서는 1872년 동경과 요코하마 간에 개설되었다. 1876년 조선이 개항하자 철도부설의 이권(利權)을 둘러싸고 미국·프랑스·러시아·일본 등이 각축하였으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독점권을 차지하였다.

1879년 10월 21일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뒤 한국에 전등이 켜진 이래 전기는 조명과 전차 등 동력원으로서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전개】 철도:** 1895년의 청국의 패전, 명성황후시해사건, 친러파·친일파의 각축 등 국내의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 러시아·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이 광산채굴권·철도부설권 등 주요 이권을 우리나라 조정으로부터 획득하던 시기 서울~인천 간 경인선 철도는 1896년 미국인 모스(Morse, J. R.)가,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 철도는 프랑스인 그릴(Grille)이 부설권을 특허 받았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아관파천에서 환궁하여 러시아 세력이 물러가자 일본은 미국인과 프랑스인에게 특허한 철도부설권도 집요한 공작으로 인수하였다. 이리하여 1899년 9월 18일 제물포~노량진 간 32km의 경인철도가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당시의 철도 장비는 증기기관차 4대, 객차 6량, 화차 28량이었다. 그 뒤 1905년 서울~부산 간의 경부선, 1906년 용산~신의주 간의 경의선, 1910년에 평남선, 1914년에 대전~목포 간 호남선과 서울~원산 간의 경원선, 1928년에 원산~상삼봉 간의 함경선이, 1936년에 이리~여수 간의 전라선이, 1942년에 청량리~경주 간의 중앙선이 각각 개통되었다. 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과 식민지 경제 수탈을 위한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부설된 철도는 오늘날 한국 철도시설의 골격이 되었다.

**전기:**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가 소개된 것은 전기가 발명된 지 8년 뒤인 1887년 미국의

에디슨(Edison, T. A.)전기회사의 전기기사 윌리엄(William, M.)이 경복궁 내에 3kW 용량의 증기발전기 2대를 설치하여 경회루와 향원정에 전기아크등을 설치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경인철도부설권을 얻은 미국인 모스(Morse, S. F. B.)와 함께 한국에 온 미국인 콜브란(Collbran, H.)과 보스트윅(Bostwick, H. R.)이 1898년 2월 19일 자본금 150만 원의 50%를 고종이 담당하기로 하고 한미전기회사를 세워 전차·전등·전화의 독점권을 받았다. 이 계약에 따라 서울의 첫 전차길 공사가 1898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5일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1단계가 완공되고, 1899년에 서울 서대문~홍릉 간의 전차개통식을 가졌다. 또한 75kW 600V의 직류발전기 1대를 도입하여 동대문에 발전소를 세웠다. 전차의 운전사들은 일본인이, 차장은 한국인이 맡았다. 개통 1주일 뒤 탑골공원 앞에서 5살짜리 어린이가 전차에 치여 죽자 성난 군중이 전차 2대를 불태운 일도 있었으나 전차 승객은 급속히 늘어나, 전차 노선은 종로에서 남대문, 용산(지금의 원효로 4가)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일본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일한(日韓)가스회사는 1909년 콜브란으로부터 한미전기회사를 인수하였고, 이 회사는 1915년 경성전기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1900년에는 종로에서 처음으로 민간 전등을 점화하였다.

**【결과·의의】** 자주독립의 실현과 근대적 산업국가 건설은 20세기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였다. 철도와 전기의 도입은 근대문명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으나,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이 본격화된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했다.

**【핵심어】** 철도/경인선/경부선/전기/전차/한성전기회사/콜브란/보스트윅

**【참고문헌】**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史』 1(1937); 鐵道廳, 『韓國鐵道史』 1~3(1974, 1977, 1979); 경성전기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20년연혁사』(192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600년사』 3(1977~1981); 韓國電力公社, 『韓國電氣百年史』(1989).

**【사진자료】** 055. 18990504 종로거리를 통과하는 전차  
056. 19010921 경부선 철도 남부 기공식  
057. 한성전기회사 사옥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캡슐, 태극기의 유래

**【전시항목】** 태극기

●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정의】** 빨강과 파랑의 양의가 포함된 태극문양과 네 모퉁이에 건곤감리 4괘로 된 대한민국의 국기

**【배경】** 태극 도형의 문양과 음양사상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쓰여 왔다. 중국에서 태극의 문양이 보이는 송나라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 太極圖說』 보다 약 400년 전인 628년(신라 진평왕 50) 건립된 감은사(感恩寺)의 석각(石刻) 가운데 이미 태극도형이 새겨져 있었으며,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四神圖), 현무도(玄武圖)는 음양상화(陰陽相和)의 이치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태극도형 등이 전래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태극도형 또는 음양사상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활용해 왔다.

1876년 개항 이후 국기문제가 최초로 거론되었을 때 1880년(고종 17) 8월 일본에서 귀국한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가져온 주일청국참찬관(駐日淸國參贊官)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畧)』에서 권고한 중국 용기(龍旗)가 검토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882년 4월 6일 미국과의 사이에 조미조약이 체결되던 때 국기문제가 재론되었다. 이때 청국 사신 마건충(馬建忠)이 흰 바탕 중앙에 반홍반흑(半紅半黑)의 태극도(太極圖)와 그 둘레에 팔도(八道)를 뜻하는 흑색의 팔괘(八卦) 및 홍색의 주연(周緣)이 있는 도식을 제안하였다. 태극·팔괘도식의 국기는 1882년 8월 9일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 박영효(朴泳孝)가 메이지환(明治丸) 편으로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영국인 선장과 상의하여 태극기 대·중·소 3본(本)을 만들었다는 것과, 태극도에 반홍반흑을 사용하자는 마젠충의 제안이 반홍반청으로 발전하는 등을 통해 조정에서 논의가 계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박영효는 8월 22일 태극기 소본(小本)과 함께 국기제정사실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보고하였으며, 1883년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장계에 따라 태극기가 정식으로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태극기는 조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상징으로 쓰였으나 태극과 4괘의 양식은 통일되지 못하다가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를 통일하여 정식 공포하였다.

**【내용】** 태극기는 백색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에 음(陰, 靑)·양(陽, 紅)의 양의(兩儀)가 포함된 일원상(一圓相)의 태극이 있고, 네 귀[四維]에는 건(乾)·곤(坤)·감(坎)·이(離)의 사

괘(四卦)가 배치되어 있다.

① 흰 바탕: 흰옷을 숭상한 백의민족을 나타내며, 청결과 동질성, 평화 애호 정신을 상징한다.

② 일원상의 태극: 빨강과 파랑의 양의 속에 하나의 원(圓)인 태극이 숨어있다. 유교철학에서 태극은 우주만상과 인간생명의 근원이며, 만물에 내재한 불변의 진리와 영원함을 상징한다. 또한 진리를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 즉 인극(人極)을 상징한다.

③ 양의: 빨강과 파랑, 양과 음의 둘로 나누어져 있는 모양이 양의이다. 태극은 하나로서 불편의 것이므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음과 양의 서로 상대되는 둘로 나누어졌을 때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다. 양상음하(陽上陰下)로 배치된 이유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음과 양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특성이며, 상호의존하여 생성, 발전한다. 즉 양 없이는 음이 없고, 음 없이는 양이 없는 원리를 나타낸다.

④ 사괘(四卦): 건·곤·감·이의 사괘는 음과 양이 생성, 발전된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의 태극도형은 좌에서 우로 회전하지만, 태극기에서의 도형은 우에서 좌로 회전하고 있다. 건(乾)은 태양(太陽)으로서 양이 가장성한 방위에 배치되고, 곤(坤)은 태음(太陰)으로서 음이 가장성한 방위에 배치되어 있다. 감(坎)은 소양(少陽)으로 음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이(離)는 소음(少陰)으로 양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 태양인 건에서 소음인 이로, 이에서 태음인 곤으로 성장하며, 또 곤에서 소양인 감으로 바뀌고, 감에서 태양인 건으로 성장하여 무궁한 순환 발전을 수행한다.

건은 천도(天道)로서 지선(至善)·지공(至公)의 정의(正義)를 의미하고, 곤은 지도(地道)로서 후덕(厚德)과 풍요의 공리(共利)를 상징하며, 감은 수성(水性)으로서 지혜와 활력을 나타내고, 이는 화성(火性)으로서 광명과 정열을 뜻하는 것이며, 백색 바탕은 평화의 정신을 상징한다. 정의와 풍요, 광명과 지혜, 이 네 가지는 우리 국기의 사괘가 상징하는 특징이며, 백색의 바탕인 평화의 정신을 성취하는 길이다.

**【핵심어】** 태극기/대한민국 국가상징

**【참고문헌】** 「大韓民國國旗에 관한 規程」; 柳承國, 「太極旗의 原理와 民族의 理想」, 『韓國思想과 現代』(東方學術研究院, 1988); 李瑄根, 「우리 국기 제정의 유래와 그 의의」, 『국사상의 제문제』 2(1959); 權錫奉, 「國旗制定의 由來에 대한 管見」, 『歷史學報』 23(1964).

- 【사진자료】** 058. 188209 박영효 사용한 최초의 태극기  
059. 1891 광무황제가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캡슐, 태극기의 유래

【전시항목】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 애국가	

【정의】 안익태 작곡, 작사자 미상의 우리나라 국가

【배경】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애국애족의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애국가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애국가로서 1896년 나필균 작 「애국가」로부터 제물포 진경택, 한명원, 유태성, 달성 예수교인, 새문안교회, 최병희, 평양 김종섭, 배재학당 문경호, 이용우가 지은 각각의 애국가가 있었으며, 또한 배재학당의 「애국가」, 1898년 독립협회가 개국 기원 506돌 경축식에서 부른 「애국가」도 있으며, 1900년 당시의 「대한애국가」도 있다.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 Auld lang syne」의 곡조에 붙여 부른 것이고, 1898년 무관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영국 국가인 「신이여 국왕을 구하소서 God save the king」의 가사내용과 곡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독일인 에케르트가 1902년에 지은 「대한제국애국가」도 있는데 가사는 무관학교 생도의 「애국가」 가사와 같이 영국 국가 「God save the king」의 내용과 비슷하다. 에케르트 「애국가」는 군악대에서 주로 연주되다가 1904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

【경과】 현재의 애국가가의 가사는 윤치호·안창호·민영환 등이 지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곡은 안익태가 1936년에 작곡하여 독립운동가들이 3·1절 등의 기념일에 부르다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정식으로 국가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국가의례에 국가로 불리다가 대한민국의 상징 노래가 되었다.

한말 이래 많은 종류의 애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애국가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의 후렴구는 이미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 때 배재학당 학생들이 부른 「애국가」에도 등장한다. 이와 같은 현행 「애국가」의 가사에 애조를 띠어 ‘석별의 노래’이라 불린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오랜 옛날부터’라는 스코틀란드어)」에 붙여 불렀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安益泰, 1906~1964)는 평양 출신으로 선교사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3·1운동에 참여하여 다니던 숭실학교를 퇴교 당했다. 그는 교장 모우리(Mowry, F. M) 박사의 배려로 1921년 도쿄 세이소쿠중학교(正則中學校)에 음악 특기자로 입학했다. 그 후

도쿄 국립음악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했다. 1932년 미국 신시내티음악학교에 유학하고 이듬해 유럽으로 가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지휘와 작곡을 공부했다.

애국가 가사에 맞추어 작곡된 곡이 없어 서양의 「올드 랭 사인」곡에 붙여 부르던 것을 안타까워하던 그는 애국가를 자신이 작곡했다. 그 후 애국가를 주제로 합창단과 관현악, 관악을 위한 장엄한 대환상곡인 「한국환상곡(Korea Fantasy)」을 작곡했다.

도산 안창호는 동포사회를 순방할 때 애국심 고양을 위해 항상 집회 때 애국가 제창을 하며 애국가를 즐겨 부르도록 했다. 정부수립 이후 안익태(安益泰)가 작곡한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로 준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핵심어】** 애국가/안익태/에케르트

**【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國史編纂委員會, 『愛國歌作詞者 調査資料』(1955); 李宥善, 『韓國洋樂 80年史』(中央大學校 出版局, 1968).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캡슐, 태극기의 유래

**【소항목】** 무궁화

태극기	● 무궁화
애국가	

**【정의】** 우리나라의 국화(國花).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으로 흰색·분홍·빨강·보라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이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 일간 계속 피므로 무궁화라고 불리게 되었다.

**【배경】** 한반도에 무궁화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기록은 기원전 8~3세기 중국 춘추시대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무궁화를 말함)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君子之國 有薰花草 朝生暮死).”라는 기록, 신라 효공왕이 최치원(崔致遠)에게 시켜 지어 당나라에 보낸 국서(國書)에 자기 나라 신라를 “근화향(槿花鄉: 무궁화의 나라)으로 일컫은 기록, 『구당서(舊唐書)』 199권 신라전(新羅傳) 737년(성덕왕 36) 기사에도 “신라가 보낸 국서에 그 나라를 일컬어 근화향,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였다.”고 한 것에서 신라시대에 이미 우리 나라를 근화향,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온대지방에서 여름에 피는 꽃이 거의 없는데, 무궁화는 7~10월에 약 100일 동안 계속하여 피었다 지고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운다. 홑꽃은 반드시 이른 새벽에 피고 저녁에는 시들어서 날마다 신선한 새 꽃을 보여준다. 지고 다시 피는 까닭에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국난을 극복하여 찬란한 문화를 이룩해 온 우리 민족과 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꽃이라 무궁화라 불리었으며, 1910년 나라를 잃으면서 무궁화는 다시 독립을 되찾아 화려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을 상징하는 꽃으로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 1935년 10월 21일 『동아일보』 학예란에 ‘조선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이라는 제목 아래 “아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조선에도 개화풍이 불어오게 되고 서양인의 출입이 빈번해지자 당시의 선각자 윤치호(尹致昊) 등의 발의로 양악대를 비롯하여 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가 되었다. 안창호(安昌浩) 등이 맹렬히 민족주의를 고취할 때 연단에 설 때마다, 가두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무궁화동산을 절규함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민중은 귀에 젖고 입에 익어서 무궁화를 인식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후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말은 우리 한민족의 가슴 속에 조국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뜻으로 남게 되었다.

무궁화의 명칭은 여러 가지이며 중국에서는 목근(木槿)·순영(舜英)·순화(舜華)·훈화초

(薰華草)·조개모락화(朝開暮落花)·번리초(藩籬草) 등으로 쓰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로 무궁화(無窮花·無宮花·舞宮花) 등으로 쓰였으며, 근래에는 무궁화(無窮花)로만 쓰이고 있다.

무궁화라는 말도 원래의 이름이 아니고 무궁화와 유사한 음의 우리나라 고유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자 무궁화(無窮花)로 기록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무궁화는 꽃의 밑에 꽃대가 있어 그 위에 꽃받침이 있고 5개의 꽃잎이 있다. 꽃 색깔은 순백색(純白色)의 배달계 꽃과, 화심부(花心部)에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단심(丹心)의 단심계와 단심이 있으면서 붉은색 띠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사달계 등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조생종(早生種)·조중생종(早中生種)·중생종·중만생종(中晩生種)·만생종으로 나누고, 자라는 습성에 따라 직립고성(直立高性)·직립중성(直立中性)·직립왜성(直立矮性)·수양고성·수양중성·수양왜성으로도 나눈다.

#### 【핵심어】 무궁화/국화

【참고문헌】 文一平, 『湖巖全集』(1940); 金正評, 『無窮花譜』(興武出版社, 1955); 姜希顔, 李丙薰譯, 『養花小錄』(乙酉文化社, 1974); 柳達永·廉道義, 『나라꽃 무궁화』(東亞出版社, 1983); 우호익, 「무궁화 예찬」, 『青年』 8-6·7;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개항과 근대화의 모색	캡슐: 태극기의 유래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 국권상실의 충격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만주침략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남하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북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 후 일본이 랴오퉁반도를 차지하자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을 압박하여 이를 반환하게끔 만들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파렌과 뤼순을 조차하여 해군기지를 만들었으며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었다. 이에 일본이 한국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왕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하여 일본은 더욱 곤경에 빠졌다. 이로부터 일본과 러시아는 한국과 만주를 포함한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한국 침략을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인 러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1904년 2월 뤼순(旅順)에 정박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대한제국은 한국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고자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일부 열강의 지지도 받아내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서울을 점령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군사기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서울에 한국주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부산·원산 등 주요 지역에도 군대를 주둔시켰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한국과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05년 5월 일본각의는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시킨 일본은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의 전쟁 비용 지원을 받으며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 비용이 거의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 전쟁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러시아 역시 국민들의 봉기로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데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 경제 등에 관한 특수 권익을 인정하다는 내용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1905년 7월에 미국과 가츠라 태프트 비밀협약을 체결하였고,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이들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는 제국주의적 흥정을 벌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1905년 11월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왕이 있는 궁궐을 군대로 포위하고 광무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광무황제

와 대신들은 조약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일본에 매수당한 이완용 등 을사5적을 앞세워 조약 성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무력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불법조약인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강탈당하였고,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을사늑약의 소식이 전해지자 민간에서는 굴욕적인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하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시위와 항의가 빗발쳤으며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이도 있었다. 을사늑약의 무효와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광무황제는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열강의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국인 대신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실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전쟁이 전(全)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해 나가자 1909년 9월, 일본은 '남한대토벌작전'을 감행하여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촌락과 가옥을 닦치는 대로 방화하고 살육하여 초토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민족의 저항이 거세지자 1909년 4월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직을 사임했으나 그가 사임하기 전에 이미 일본 총리대신·외무대신 등과 더불어 한국을 즉각적으로 '병합'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7월 6일 일본 각의에서는 '한국 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하였다. 해외에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일본의 침략을 응징하는 의열 투쟁이 이어졌다. 1909년 10월 연해주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던 안중근이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입국한 이재명 의사는 매국노를 처단하는 것이 국권 수호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이완용을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1910년 5월 30일 통감으로 임명된 육군대신 데라우치는 곧바로 부임하지 않은 채 6월 30일에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아 한국주차군 헌병대 산하에 통합시키고 한민족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을 마친 데라우치는 7월 23일에 한국에 부임하였다. 데라우치는 일본군과 헌병을 서울 곳곳에 배치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8월 16일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병합조약'안을 내밀고 융희황제로부터 전권위원 위임장을 받아낼 것을 요구하였다. 8월 18일에 형식적인 내각회의를 열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통과시킨 이완용은 8월 22일에 어전회의를 열게 하고 융희황제에게 '전권위임에 관한 조서'를 내밀고 전권위임장에 서명을 받아내었다. 전권위임장을 받아 권 이완용은 곧바로 통감 관저로 달려가서 데라우치와 '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8월 29일 병합조약을 발표하였다. 이 조약의 서문에는 두 나라의 행복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고 쓰여 있었으나, 무력을 앞세워 강점한 것이다. 융희황제는 전권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 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에는 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조약의 체결로 국권을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병탄하여 한민족이 근대국가를 수립할 기회를 빼앗아갔으나 일제강점기 동안 한민족은 독립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영일동맹

● 영일동맹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종립화 운동	일본의 독도침탈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
가츠라 테프트 밀약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고 동아시아 이권을 분할하기 위해 1902년 1월 30일 영국 외무장관 랜즈다운(Lansdowne)과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타다수(林董, Hayashi Tadasu) 사이에 체결된 조약

**【배경】**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로 청의 요동반도를 할양받자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삼국간섭으로 이를 저지시킬 때부터 영국은 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일본과 동맹 가능성을 거론하다가 시행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대신 영국은 일본의 근대화를 지원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구하며 남하를 계속하여 1899년 마산포를 조차하려 하고, 1900년 6월 중국의 의화단(義和團)이 만주에서 러시아가 건설 중이던 동청철도(東清鐵道)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자국이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18만 명의 군대를 파병하여 주요지역을 점령하자 영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의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 내에서는 러시아와 제휴하여 러시아의만주점령을 인정하고 대신 일본의 한국점령을 인정받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같은 정치인들과 러시아의 만주 점령에 대해 불신을 표하며 영국과 제휴할 것을 주장하는 가츠라 다로[桂太郎], 가토 다카아키,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등 외무 당국자들로 의견이 갈렸으나, 1901년 만주에서 러시아의 단독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함께 한국뿐 아니라 중국 분할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굳어졌다. 그리하여 1901년 7월부터 영국 주재 일본공사 하야시[林董]와 영국 외무장관 랜즈다운 간의 교섭을 통해 1902년 1월 30일 런던에서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영국은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보장하는데 주저했고, 일본 또한 인도에 대한 영국의 이권 보장에 꺼려하여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의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영국과의 협상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러시아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고, 영국은 일본의 이중정책에 우려를 표하자 하야시가 1902년 1월 서둘러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왔다.

영일동맹조약은 전문 6개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

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영일 양국 중 일국이 전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개전할 때 동맹국은 중립을 지킬 것, ③ 위의 경우에서 제3국 혹은 여러 나라들이 일국에 대해 교전할 때 동맹국은 참전하여 공동 작전을 펴고 강화도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할 것, ④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할 것 등이었다.

**【결과】**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하여 한국과 만주로부터 러시아 세력을 축출하였고, 한국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1905.8.12) 한국에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익을 보장받았다. 1902년 2월 12일 영일동맹이 발표되자 러시아는 즉각 프랑스, 독일과 동맹을 추진했다. 독일이 동맹에 거부하여 러시아는 프랑스와 상호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영일동맹으로 말미암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지원할 경우 영불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일동맹은 1905, 1911년 2차에 걸쳐 연장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국편에 서서 독일의 조차지인 산둥반도 유주만을 봉쇄하고 청도를 공격하였으며, 태평양상의 적도 북쪽 독일 영토를 점령했다.

**【의의】** 영일동맹은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명분으로 한국을 보호국화하여 결국 식민지로 강점하게 하는 길을 터 주었다.

**【핵심어】** 영일동맹/러일전쟁/제1차 세계대전/랜즈다운(Lansdowne)/하야시 타다수(林董)

**【참고문헌】** 申相濬, 「英日同盟과 日本의 韓國侵略」, 『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 (일조각, 1986); 김보연,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체결 원인과 의미: 영 제국 세계 전략의 지역적 전개」, 『세계정치』 Vol.26 No.1(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 玄光浩, 「대한제국기 주한러시아공사의 활동-義和團사건과 英日同盟체결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90(歷史學會, 2006);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Wikipedia.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대한제국의 중립화운동

영일동맹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 대한제국의 중립화운동	일본의 독도침탈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
가츠라 테프트 밀약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대한제국 시기 국방력이 약한 대한제국이 강대국들의 보장에 의한 영세중립국 지위 획득 또는 주변국 전쟁에 중립선언을 통해 국권을 지키고자 한 운동

**【배경】** 1880년대 조선의 외교고문 뮐렌도르프는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벨기에와 같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부영사 부들러도 스위스의 경우 강대국들이 조약을 체결하여 영토를 보전해 준다면 중립화를 권고했다. 이들은 만국공법에 중립조항이 있으므로 열강의 동의만 얻으면 중립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조선에서 중립화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후 조선은 주요 열강의 보장에 의한 중립화를 추진했다.

**【내용】** 1891년 고종은 주한 미국공사에게 미국정부가 스위스의 분할을 방지하는 조약을 한국에도 적용하는 일을 주도해 주도록 요청했다. 1897년에는 영국정부가 주도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게 해줄 것을 맥도널드 주청 영국공사를 통해 요청하였다. 1899년 봄 고종은 미국으로 떠나는 알렌 미국공사를 통해 미국정부가 주도하여 열강에 의한 한국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화 추진을 위해 수차에 걸쳐 뮐렌도르프의 고빙을 시도하다 실현하지 못하자,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 샌즈를 궁내부 고문으로 고빙하였다. 샌즈는 한국을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영세중립국으로 만들려 하였다. 이를 위해 열강의 보장을 통해 평화조약과 국제협정을 체결하려 하였다.

고종은 1900년 청국의 의화단사건으로 열강이 파병하여 청국이 분할될 위기에 놓이자 조병식을 일본에 보내 아오키(青木) 외상과 주일 미국공사 버크를 통해 한국을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중립국화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는 일본이 자국 상비군은 한국에 주둔해 둔 상태에서 한국의 중립화를 획책하는 것으로 보고 중립화안에 강력 반대하였다. 미국도 시종일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열강의 협조를 통한 중립화 추진은 성과 없이 끝났다.

한편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열강 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중립화의 필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전쟁 발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었다. 고종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상주 공사관을 설치하여 유럽 열강에 대한 외교노력을 강화했다. 또한 만국평화회의, 적십자회의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영세중립국 벨기에 황제에게 한국의 영세중립국안을 설명하고 찬성을 얻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중립화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1903년 11월 23일 세계 각국에 장래 러일전쟁 개전 시에는 국외중립을 지킨다고 선언했다. 그 후 러일 개전 2주일 전인 1904년 1월 22일에 대한제국은 또다시 전시 국외중립을 세계 각국을 향해 성명하고 그 전일(1904년 1월 21일) 중국의 지부(芝罘)에서 프랑스어로 국외중립 선언을 타전했다. 그러나 러·일·미 등 중립화 실현에 핵심적인 국가들은 중립선언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개전을 지지하였다.

1904년 1월 20일 일방적으로 조선의 영세중립을 선포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정부에 이를 통보하면서 연합국은 조선에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1904년 2월 10일 러일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조선은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영세중립 정책을 지원받지 못했다. 러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일본군은 인천에 대거 상륙하여 조선의 전시 국외중립 선언도 침범하고 서울을 점령하여 군사적 협박 아래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조인케 하였다.

**【결과】** 대한제국의 중립화운동은 군사력의 한계, 추진세력의 분열, 열강의 외면, 국제기구에 대한 지나친 신뢰 등의 요인으로 실패했다.

**【의의】** 중립화는 자국의 국방력과 확고한 안보의식의 바탕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핵심어】** 중립화/대한제국/고종/뮐렌도르프/중립외교/러일전쟁

**【참고문헌】** 강종일, 『고종의 대미외교』(일월서각, 2006); 김경태, 『근대 한국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현광호, 「대한제국의 중립정책과 중립파의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2000).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러일전쟁

영일동맹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종립화운동	일본의 독도침탈
●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
가츠라 테프트 밀약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1904~1905년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벌인 전쟁

**【배경】** 러시아는 청의 약화를 틈타 1858년 아이훈조약으로 시베리아를 손에 넣고, 1860년 북경조약으로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를 차지함으로써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과 동해 진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일본의 방어를 명분으로 조선의 강점하고자 했다.

1894~5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할양받자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을 주도하여 이를 철회시키고 청으로부터 동청철도부설권(東淸鐵道敷設權)을 얻었다. 또한 독일이 자유만(膠州灣)을 조차하자 1898년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25년간 조차하여 만주를 세력권화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저지를 명분으로 영국과 동맹을 맺고(1902.1) 러시아와 일전을 계획했다.

**【발발】**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밤 선전포고 없이 여순항의 러시아 극동함대를 기습하고 항만 입구를 봉쇄했다. 러시아 해군이 묶인 틈을 타서 일본은 9일 인천항의 러시아 군함 2척을 격침시킨 다음 10일야 선전을 포고하고, 제2군이 5월 5일 요동반도에, 제1군은 한국에 상륙하여 압록강을 건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만주로 진입하였다.

**【전개】** 육전의 일본군은 수차 교전을 거치면서 러시아군을 대련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여순 요새 공략을 맡은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중장의 제3군은 고지식하게 정면 언덕을 향해 공격을 수없이 시도했다. 공격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실패했다. 그러나 결국 여러 개의 11인치(280mm) 크룹곡사포 포대들의 지원으로 일본군은 1904년 12월에 언덕 위 요새를 점령했다.

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면서 장거리포가 러시아 함대를 향해 포탄을 날려 러시아 전함 4척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대평양상 주요 함선들은 모두 침몰하였다. 이 승리는 지상의 포대가 주요 전함들에 대해 거둔 세계전사에 유례가 없는 대 승리의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육군은 포위된 대련을 육지를 통해 풀려고 하였으나, 8월 말 요녕전투 후 북 러시아군은 대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목단(심양)으로 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 방어진은 매번 일본군 공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상자를 내며 물리쳤다. 그럼에도 1905년 1월 2일 148일간 포위당한 끝에 시베리아 제3군단 사령관 스테셀은 다른 상급 장교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물자와 병력이 충분했음에도 일본인들에게 요새를 내주고 말았다(1904.12). 일본군 장성들도 깜짝 놀랐다. 스테셀은 1908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후에 사면되었다.

해상에서는 지노비 로체스트벤스키 제독이 이끄는 발틱 함대가 러시아 극동함대를 증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함대는 발틱해로부터 희망봉을 거쳐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여순 함락 후 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겨우 일본 근해에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여 대마해협을 돌파하려던 러시아 함대는 1905년 5월 27, 28일에 일본 함대의 요격을 받아 대패배를 맛보았다. 만주지방의 러시아 육군은 연패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미 혁명조직이 공장노동자는 물론 일반시민이나 군대 안에도 파고 들어와 있었다. 러시아정부도 더 이상 전쟁을 진행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가게 되었다.

**【결과·의의】** 러일전쟁의 결과 태평양 함대와 발트해 함대는 거의 전멸되고, 흑해 속에 갇혀서 전쟁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흑해 함대만이 남았다. 저하될 대로 저하된 승무원들의 사기 속에 혁명사상이 확산되어갔다. 1905년 6월, 흑해 함대의 전함 크냐지 포템킨 타브리치에스키(Kniaz Potemkin Tavricheskey)의 함상에서 반란이 일어나 공산혁명의 전조가 되었다. 한편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주변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보호국이 되었고, 곧이어 병탄의 나라로 떨어져 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青木榮一, 최재수 역, 『시파위의 세계사』 2(해사문제연구소); 歷史學會, 「露日戰爭前後日本の 韓國侵略」(一潮閣, 1986); 信夫清三郎·中山治一, 「日露戰爭史の 研究」(河出書房新社, 1972); T. Denette, 「Roosevelt and the Russo-Japanese War」(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5); J. A. White,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I. H. Nish,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New York: Longman Group, 1985).

- 【사진자료】**
- 060. 19040208 러일전쟁 당시 침몰하는 러시아 함선
  - 061. 서울로 진군해 들어오는 일본군
  - 062. 일본군의 군수물자를 나르는 한국인부들
  - 063. 19040921 철도방해죄로 공개 처형되는 의병들
  - 064. 1904 제1차 한일협약 조인후 기념 사진

065. 19040905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한 러시아, 일본 대표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가츠라 태프트 밀약

영일동맹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종립화운동	일본의 독도침탈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
● 가츠라 태프트 밀약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1905년 7월 29일 일본수상 가츠라 타로(桂太郎)와 미국 전쟁성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도쿄에서 한국과 필리핀 대해 양국의 의사를 확인한 협약

**【배경】** 1905년 5월 말 대마도 해전(對馬島海戰 1905.5.27~28)에서 대승하여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져 갔다. 데오돌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무기력한 나라로 보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용인하는 대한정책(對韓政策)을 갖고 있었다. 러일전쟁 전후처리를 위해 루즈벨트는 그해 9월에 열릴 포츠머스 강화회의를 주선하던 중 6월 29일 루즈벨트는 런던을 방문 중이던 상원의원 롯지(Henry Cabot Lodge)로부터 영국이 만주(滿洲)를 청에게 반환하는 대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제2회 영일동맹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서신을 받았다. 미국은 일본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변화 국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고히 할 필요에 따라 영국보다 한 걸음 앞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을 인정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대신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1930) 전쟁성 장관의 필리핀 방문길에 일본을 방문하게 했다.

**【내용】** 태프트는 1905년 7월 8일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 루즈벨트(Alice Roosevelt)를 포함하여 80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7월 25일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7월 27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츠라 회담 의제는 필리핀, 한국, 그리고 극동에서의 전반적인 평화유지 세 가지에 집중되었다.

먼저 필리핀 문제에 대해 태프트는 “나의 견해로는 필리핀에 있어서의 일본의 유일한 이익은 이 군도가 미국과 같은 강력하고도 우호적인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데 있으며, 이 군도가 자치에 적합치 않은 원주민의 잘못된 통치하에 놓이거나 비우호적인 몇몇 유럽 열강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데 있다”고 함으로써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확고히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 가츠라는 “한국은 우리와 러시아와의 전쟁의 직접 원인이기

때문에 전쟁의 논리적 귀결로서 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이 종전과 같은 상태(열강의 간섭이 가능한)로 되돌아가 일본으로 하여금 재차 또 다른 대외전쟁으로 돌입할 필요에 놓이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태프트는 가즈라의 견해가 정당함을 충분히 인정한 후, 자신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는 어떤 대외조약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보호권을 수립하는 것이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에 직접 기여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극동의 평화유지 문제에 대해 가즈라는 "미국이 그 전통적 정책에 따라 어떤 외국과도 그러한 성질의 공식적인 동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는 있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극동문제에 관한 한 비록 명목상으로는 아닐지라도 실질상으로 충분한 합의나 동맹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합의만 있다면 이 지역의 전반적 평화는 쉽게 유지되며 당해국 모두에게 크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태프트는 "상원의 동의 없이 사실상 비밀의 비공식 협정이라 할 어떠한 협약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일과 협력, 이 목적을 위해 마치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 태프트와 가즈라 사이의 회담 내용을 담은 문서는 7월 29일자로 보고했다. 이를 본 루즈벨트는 7월 31일자로 태프트에게 "그대의 가즈라와의 회담은 모든 점에서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인 전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태프트는 8월 7일자로 마닐라에서 가즈라에게 확인 전문을 보냈다. 태프트-가즈라 비밀협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행력을 갖춘 협약(executive agreement) 내지는 비밀협정(secret pact)이었다는 관점과 실질적인 협정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교환'(exchange of views)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비밀협정을 맺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체제하에서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의의】** 일본은 태프트-가즈라 협정 이후 불과 39일 만에 제2회 영일동맹(8.12)과 포츠머스조약(9.5)을 통해 영국과 러시아로부터도 비슷한 내용의 대한보호권을 인정받았고, 11월에는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을 보호국화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주의를 키웠다. 이후 일본은 한국강점, 만주 및 중국본토 침략, 태평양전쟁 도발 등 세계평화를 교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핵심어】** 가즈라 태프트 밀약/태프트 가즈라 밀약/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카즈라

**【참고문헌】** Tyler Dennett, *President Roosevelt's Secret Pact with Japan* Vol. XXI

(Current History, 1924~1925); Tyler Dennett, *Roosevelt and the Russo-Japanese War*(New York, 1925); 최문형, 「카즈라 테프트 협약」, 『한국독립운동사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사진자료】**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영일동맹	●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중립화운동	일본의 독도침탈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
가츠라 태프트 밀약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1905년 11월 18일 새벽, 대한제국 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정부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대한제국을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통해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배경】**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밤 선전포고 없이 여순항의 러시아 극동함대를 기습하여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5월 30일 각의에서 한국을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장악하려는 ‘제국(帝國)의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을 결정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 메가다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 외교고문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를 초빙하게 하고, 한국정부 궁내부·군부·경찰·학부에 각각 일본인 고문을 두게 했다. 한국 정치의 실권은 이때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1905년 5월 말 일본은 쓰시마해협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키고 승리를 굳혀갔다. 7월 27일 미국과 가츠라·태프트 밀약, 8월 12일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게 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

**【전개】** 일본은 1905년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명전권공사로 파견하여 친서를 봉정했다. 11월 15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지휘하여 일본군으로써 황궁을 포위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광무황제에게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한일협약안을 제시하였다. 광무황제는 조약승인을 거부하였다. 광무황제는 강박에 의해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신들에게 결정을 일임했다. 하야시 공사와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위협과 회유를 했다. 이렇게 하여 다수 대신들의 찬성을 얻어낸 뒤 11월 17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 그러나 5시간이 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동반하고 일본 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필 안으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만 끝까지 반대했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의 5명이 찬성을 표시했다. 이 다섯 대신들을 을사5적이라 한다.

을사늑약은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와 사무는 일본 외무성을 통해 감리, 지휘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것. 둘째,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를 거치지 않고 절대로 외국과 국제적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셋째, 한국에 일본이 임명하는 통감을 두게 함으로써 통감부(統監府)와 이사청(理事廳)을 통해 내정(內政)을 장악한다. 넷째, 일본과 한국 사이의 조약은 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

일본 측은 일본군을 시켜 외부(外部)에 가서 대신인(大臣印)을 가져오게 해서 11월 18일 새벽 2시경 조약문에 날인하여 버렸다. 그러나 비준권자인 광무황제는 수결(手決; 서명)과 옥새(玉璽)의 압인(押印)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최고결재권자인 황제의 비준도 없는 상태에서 조약은 공포되었다.

**【결과】** 한국에 주재하던 외국 공사관들이 이 조약 체결로 철수하고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2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황성신문(皇城新聞)』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어 국민의 의분에 호소하였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광무황제가 러시아·미국·독일·프랑스 등의 원수 앞으로 보낸 서한을 게재하여 을사조약을 국왕이 승인한 바 없다는 것을 공포하였다. 시종무관 민영환(閔泳煥), 궁내부 특진관 조병세(趙秉世)는 항의 자결하였으며, 많은 분사자가 그 뒤를 따랐다. 의병이 전국 각처에서 봉기하였다. 조약에 찬성한 이완용 등은 ‘을사5적(乙巳五賊)’이라 하여 국민적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두에서 저격 처단하였다.

**【의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최소한 입헌제도와 의회설립을 통해 외압을 차단하고 국력을 결집하고자 했다. 그러나 광무황제는 이를 무산시키고 황제 중심의 체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일본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고, 황제의 주변에 목숨을 걸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신들도 없었다.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장한다는 을사조약의 약속은 5년도 못가 1910년 병합조약으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국민들은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해외독립운동 개척 등 온갖 방면에서 국권을 되찾고자 일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핵심어】** 을사조약/을사늑약/을사5적/한일협약/외교권박탈/통감부/이토 히로부미

**【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李光麟, 『韓國史講座』 V-近代篇- (一潮閣, 1981); 尹炳奭, 「日帝의 韓國主權 侵奪過程」, 『한국사』 19(國史編纂委員會, 1976); 崔永禧, 「乙巳條約 締結을 전후한 韓國民의 抗日鬪爭」, 『史叢』 12·13(1968).

- 【사진자료】** 066. 1905 자결한 영국공사 대리 이한웅  
067. 이토오 히로부미가 광무황제에게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장면을 그린 삽화  
068. 19060201 을사늑약에 따라 일제가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통감부  
069. 초대 한국통감으로 부임한 이토오 히로부미  
070. 1908 이토오 히로부미와 영친왕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일본의 독도 침탈

영일동맹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종립화운동	● 일본의 독도침탈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
가츠라 테프트 밀약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1905년 2월 22일은 100년 일본 시마네현이 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사건. 일본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배경】** 독도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신라영토가 된 이래 조선시대 『만기요람』 군정편(1809년 편찬) 등에 우산도로 표시되는 등 우리 역사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파악해 왔으며, 우산국 땅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내내 우리 영토로 관리해 왔음이 『고려사』 태조 13년조(1451), 『세종실록』지리지(1432 및 1454) 등의 기록과 많은 지도에서 확인된다. 숙종대 동래출신 뱃사람 안용복은 일본인의 독도와 울릉도 침탈에 분개하여 지금의 시마네현까지 쫓아가 일본 막부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 확인을 받아낸 일도 있었다.

역대 일본정부와 군 자료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고 있다. 1667년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마츠시마)라고 부르면서 두 섬이 고려에 속한 것이고, 일본의 경계는 은주(오늘날의 일본 시마네현 隱岐島)로 한계를 삼는다고 되어 있다. 명치정부 외부성과 총리실에 해당하는 태정관이 1870년 조사보고서, 1876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 해군성 수로국에서 거듭 발행해 온 「조선동해안도」, 일본 육군성 참모부의 「조선전도」(1875), 1936년 일본군 육군육지측량부의 「지도구역일람표」 등이 독도를 조선의 부속 섬으로 나타내었다.

1900년 5월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약탈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10월 22일 관제를 개정하여 울진군 관하에 있던 울릉도를 군(郡)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관할지역으로 석도(石島, 돌섬)라고도 불리던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다.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음을 한국과 일본 양쪽 자료가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일본은 국제법상 선점(先占)이론을 적용하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인 없는 섬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으로 ① 그 섬의 권리자가 없을 것 ② 선점을 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행

할 것 ③ 선점이 실효가 있을 것 ④ 선점의 통고가 있고, 그 후 그 섬이 선점국의 일부가 되어 완전한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우선 ② 시마네현이 정당한 영토편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선점의 실효성은 그때가 러일전쟁의 와중이었고, 이후 곧 일제 식민지 상태가 되었으므로 따질 것이 못된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었는가와 정상적으로 통고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무주지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으며, 영토편입 사실을 관련국인 한국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관보나 일본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에 공고하지도 않았다.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알려온 것은 만 1년 1개월이 지난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의 오키섬 관리들이 독도를 시찰하고 울릉도에 들러 울릉군수 심홍택에게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음을 구두로 통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한국은 4달 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일본 통감부 간섭하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때였다.

**【의의】** 일본의 독도 침탈은 한국의 자주독립 문제에 직결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독도문제는 일본정부가 해방 후 6·25전쟁 와중에 독도불법 점거를 기도했으며, 현재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등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어】** 독도/독도침탈/시마네현/우산국

**【참고문헌】** 신용하, 「조선왕조의 독도 영유와 일본 제국주의의 독도침략-독도 영유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989); 신용하, 『독도의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1996).

**【사진자료】** 071. 울릉도에 소속된 섬 독도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헤이그 특사 파견

영일동맹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중립화운동	일본의 독도침탈
러일전쟁	● 헤이그 특사 파견
가츠라 테프트 밀약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대한제국 광무황제(光武皇帝)가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Hague, 海牙)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조약이 부당성과 한국의 주권회복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활동

**【배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는 1899년 제1차 회의와 1907년 제2차 회의의 두 차례 회의가 있었다. 제네바 국제회의와 더불어 이들 회의에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상의 전쟁과 전쟁범죄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성명을 제기한 대회였다. 이후 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1905년 11월 일본은 대한제국 대신들을 군사적 포위와 위협 속에서 강박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을 통해 내정을 장악하여 보호국화하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조약의 비준권을 갖고 있는 광무황제는 이 조약을 결코 승인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한 대한제국 주권침탈을 알리고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내용】** 제2회 만국평화회의를 주관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1906년 4월 대한제국 황제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왔다. 광무황제는 구미 열강의 도움을 호소할 절호의 기회라 여겨 전 참찬(參贊) 이상설(李相高)을 정사로 하여 이준(李儁)과 이위중(李瑋鍾)을 부사로 임명하였다. 험버트(Homer Bezaleel Hulbert) 박사도 따로 광무황제의 친서를 휴대하고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헤이그 현지에서 함께 활동했다. 또한 공식사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상설이 재미한인동포 윤병구와 송헌주(宋憲澍)의 도움을 요청하여 특사 일행을 도왔다.

이준은 1907년 4월 21일에 한국을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간도 용정(龍井)에서 온 이상설과 합류하였다. 두 사람은 시베리아철도 편으로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전 러시아 주재공사 이범진과 그의 아들 이위중을 만나 진용을 갖추었다. 세 사람은 6월 24, 25일경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대회는 6월 15일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들은 헤이그 시내 바겐슈트라트가 124번지에 있는 ‘레용’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용스

(Jongs)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이들은 호텔에 태극기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세 특사의 목적은 「을사늑약」의 파기와 일본의 침략상을 날날이 드러내어 국권회복에 열국의 후원을 얻는데 있었다. 그들은 만국평화회의에 한국대표로서 공식으로 참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특사들은 6월 25일에 평화회의 제1분과위원회에 직접 나가서, 일본의 국권침탈 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요청하면서 광무황제 친서를 전달하였다. 6월 29일에 다시 만국평화회의의 의장 넬리도프(Nelidof) 백작에게 한국이 초청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고 일본의 한국주권 침해를 설명하여 의장 직권으로 회의참석 요구도 하여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특사들은 미국대표를 비롯하여 프랑스·중국·독일 등 각국 위원에게도 회의 참석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국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상설·이위종과 험버트 박사는 이름난 언론인과 신문·잡지를 이용하여 한국의 주장을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영국 언론인인 윌리엄 티 스테드(William T. Stead)가 편집하는 「평화회의보(平和會義報)」에 한국의 주장을 싣고 특사들의 활동을 두루 보도하게 한 것이다.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그의 글은 「런던 타임즈」와 「뉴욕 헤럴드」 등 구미 각국의 신문에 전재되었다. 그 결과 7월 9일에 열린 각국 신문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이상설과 이위종이 초청되어 이위종은 프랑스로 ‘한국의 호소’를 절규했다. 즉석에서 한국의 입장을 동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의 박수로 의결되었다. 7월 14일 이준이 활동 중에 사망하여 헤이그의 ‘아이큰다우’ 공동묘지에 우선 가매장해야 했고, 곧 대회도 폐회했다. 이상설과 이위종 등 남은 대표들은 좌절하지 않고 구미열강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결과·의의】** 광무황제의 특사파견은 실질적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일제는 광무황제에게 사행의 책임을 물어 강제로 퇴위시키고 융희황제(隆熙皇帝)를 등극시켰다. 또한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27일에는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을, 29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연이어 공포한 뒤 31일에는 군대해산령을 내려 대한제국을 무력화시켰다.

**【핵심어】** 만국평화회의/헤이그/이상설/이준/이위종/고종/광무황제

**【참고문헌】**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1965); Mckenzie, F.A., 李光麟 譯, 『韓國의 獨立運動』(一潮閣, 1969); 尹炳奭, 『增補 李相高傳-海牙特使 李相高의 獨立運動論』(一潮閣, 1998); Wikipedia, 『한국독립운동사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사진자료】** 072. 헤이그 삼특사 (이상설, 이위종, 이준)

- 073.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삼특사의 광무황제 위임장
- 074.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열사 묘지
- 075. 1907 한일신협약(일명 정미7조약) 체결 기념 사진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반식민지 보호국화

**【소항목】**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영일동맹	일제의 을사조약 강제와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중립화운동	일본의 독도침탈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
가츠라 테프트 밀약	● 광무황제(고종)의 외교활동과 강제 퇴위

**【정의】** 190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에 대해 광무황제(고종)는 결코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의 무효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의 책임을 물어 강제 퇴위당한 사건

**【배경】** 러일전쟁을 빌미로 일본은 1904년 3월 11일 한국주차사령부를 설치하고 일본군을 한국에 진주시켰다. 이 일본군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 되어 국권침탈을 더욱 노골화했다. 일본은 무력적 위압 하에 「한일의정서」·「한일외국인용병협정」을 체결하고 내정 외교에 간섭하였고, 한국정부는 일본인 고문의 감독하에 들어갔다. 더욱이 러일전쟁의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1905년 1월 일본군이 여순(旅順)을 함락한 후로는 그 압박은 가중되었다.

**【내용】** 이에 광무황제와 황실, 그리고 광무황제가 가장 신임하는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구미열강에 밀사(密使)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적인 행위를 폭로, 호소하고 그 원조를 얻어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려 하였다.

광무황제는 1904년 12월 주일(駐日)한국공사 조민희(趙民熙)에게 밀명을 주어 “미국정부가 현재 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양문제의 해결에 임하여 한국의 독립유지에 진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밀서를 주미(駐美) 한국공사관 고문 미국인 니덤에게 부탁하여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하여 동정을 받았다. 그 뒤 미국의 중재하에 포츠머스에서 러·일강화회담이 열리고 있을 무렵 1905년 7월 한국 궁중에서 박용화(朴鏞和)·이용익(李容翊)·이명익(李明翊)이 중심이 되어 재미 이승만(李承晩)으로 하여금 미국정치가에게 “현재의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역설하여 열국(列國) 특히 미국의 호의에 의한 한국의 독립유지를 위해 진력케” 하는 교섭의 밀명을 내렸다. 1905년 6월 하와이동포 8천명은 러일강화회담을 앞두고 한국독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회의를 열어 목사 윤병구(尹炳求)를 대표로 선출했다. 윤병구는 하와이를 방문한 미 국무장관 테프트(William Howad Taft)에게 미국 대통령의 소개장을 받아 미국본토로 건너가 이승만과

협력하여 주미 한국대리공사 김윤정(金潤晶)을 방문하고 미정부에게 알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개장을 받은 윤병구와 이승만은 8월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독립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청원서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한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취급이 거절되었다. 그 후 또 광무황제의 밀지를 받고 헐버트와 주불한국공사 민영찬(閔泳贊)이 각각 1905년 11월과 12월에 도미하여 미 국무장관에게 밀서를 전달했다.

1905년 2월 초에는 중국 상해(上海)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적대국인 러시아에 밀서를 전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주한일본공사에게 탐지되어 인천 및 상해영사관에 통첩하였으나, 광무황제의 밀사는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상해에 이르러 3월 25일 밀서를 러시아 육군소장 데시노(Dessino)에게 전달했고 그를 통해 다시 러시아황제에게 전문(電文)으로 알렸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에게 대한제국황제에게 봉답(奉答)할 것을 훈령하여 파블로프는 “아국(俄國)이 한국황제를 도와 일본의 폭력(暴戾)을 억압 배제함도 멀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봉답서를 올리기로 결의했으나 실패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의 특사 파견도 이러한 밀사파견 외교활동과 그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계획, 추진되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상설·이준·이위종 세 특사는 백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평화회의보」를 편집하는 영국 언론인 윌리엄 티 스테드(William T. Stead)의 동정과 협조로 「런던 타임즈」와 「뉴욕 헤럴드」 등 구미 각국의 신문에 한국의 처지와 입장을 알리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7월 18일 외무대신 임동(林董)을 서울로 불러들여 그와 함께 광무황제에게 사행의 책임을 추궁, 강제로 퇴위시키고 융희황제(隆熙皇帝)를 등극시켰다. 또한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27일에는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을, 29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연이어 공포한 뒤 31일에는 군대해산령을 내려 대한제국을 무력화시켰다.

**【의의】** 근대국민국가로서 전환할 기회를 놓친 대한제국은 황제 주변 세력 만으로 외압을 물리칠 수 없었다. 일제에게 외교권을 유린당한 후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추진한 특사 외교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광무황제는 강제로 퇴위되었으며, 나라는 병탄되었다.

**【참고문헌】**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1965); Mckenzie, F. A., 李光麟 譯, 『韓國의 獨立運動』(一潮閣, 1969); 尹炳奭, 『增補 李相高傳-海牙特使 李相高의 獨立運動論』(一潮閣, 1998); 『한국독립운동사 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사진자료】** 076. 강제 퇴위된 후 경운궁 돈덕전에 유폐된 고종과 신하들  
077. 19070817 융희황제 즉위식에 참여한 후 엄중 호위를 받으며 퇴궐하는  
이토오 히로부미  
078. 융희황제 즉위 기념 엽서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한말 일본의 국권 침탈에 항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져 국권회복과 민족독립의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의열투쟁의 한 흐름이다.

**【배경】** 1879년 함포외교로 조선을 개항시킨 일제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 병탄의 걸림돌인 러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러일전쟁 중에 일제는 서울로 진주시킨 군대를 동원하여 황궁을 장악하고 한국의 주권을 강탈해 갔다. 1905년 7월 미국의 주선으로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한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한국병탄의 일정을 착착 진행하였다.

일제의 국권침략을 막기 위해 광무황제를 비롯한 집권층은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호소하고 구미열강을 상대로 국권수호의 외교를 전개하였지만 열강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였다. 그리고 재야의 구국세력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항쟁을 일으켜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하였으나 일제의 집요한 침략욕을 저지하지 못했다.

**【발발】** 급진적이고 친일적인 개화정책인 단발령의 단행, 한일의정서와 황무지개척권 요구, 을사늑약, 광무황제의 퇴위와 군대해산, 경술국치 등 한민족의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끊어 자정순국함으로써 죽음으로써 항의하는 애국지사들이 줄을 이었다.

**【전개】** 1895년 11월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림들은 이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교의 대도를 지키려 하였다. 이들의 자결순국은 항일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러시아의 만주 침투를 경계한 일제는 대한제국이 친러정책을 취하자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남화를 경계하는 열강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도발하자 대한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서

올로 군대를 진주시켜 도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자국의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여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 국방·외교·교통·통신·산업 등 각 분야를 장악하였다. 이어 1904년 6월 4일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였다. 한일의정서 체결을 비롯한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과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쓰러져 가는 국운을 붙잡고자 처절한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영국 공사서리 이한웅이 1905년 5월 12일 독약을 마시고 자결 순국하였다. 이어 1905년 11월 17일 광무황제의 날인도 없이 국제법을 무시한 상태에서 늑결된 을사늑약의 체결로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직 관료들은 연일 반일상소를 올려 을사늑약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애국지사들에 의한 자정순국이 이어졌다.

**【결과】** 11월 28일 전참판 홍만식이 음독자살, 11월 30일 민영환이 할복자결하였다. 민영환의 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대신 조병세, 이상철, 김봉학, 송병선, 이명재, 이설 등이 잇달아 순국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한국을 통치해 나가자 이에 분개한 정재홍은 1907년 5월 일본에 갔던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육혈포로 그를 저격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스스로 총을 쏘아 자결하였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이준은 헤이그 현지에서 순국하였다. 그리고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날 시위대 제1대대장 박성환 참령은 부하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경술국치를 당하자 강제병합 전후로 많은 지사들이 자결 순국하였다.

**【의의】** 한말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국권회복을 실현하고자 한 자정순국투쟁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신분과 학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순수하고 고결한 애국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국민들을 각성하게 하는데 있었고 한국민의 뇌리에 의인열사로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일제 통치하에서 그들의 순국정신과 투쟁이 전승됨으로써 한국민의 독립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핵심어】** 자정 순국/의열투쟁

**【참고문헌】** 구대열, 「이한웅과 한영관계」, 『성곡논총』 16(성곡문화재단, 198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헤이그특사와 한국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최창희, 「유생들의 상소투쟁」, 『한국사』 43(국사편찬위원회, 1999).

**【사진자료】** 079. 19051130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자결, 순국한 유군부장 겸 시종무관장  
민영환

080. 1907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한 자신회 동지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을사의병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어나 러일전쟁·한일의정서·을사조약 등 일련의 일제의 침략행위에 항거하여 거의한 후 1907년 정미의병 이전까지 일어난 항일의병을 말한다.

**【원인·배경】**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한국의 중외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대한제국에 동맹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은 일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자국의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여 주둔시킬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대한제국의 정치, 외교, 군사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준식민지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9월 이후부터 창의를 촉구하는 통문들이 지방 각지에 나돌기 시작하였다.

**【발발】** 일본각의는 1905년 4월 8일에 한국보호국화 방침을 정하고 영국, 미국들 열강들을 상대로 보호조약 체결을 사전에 승인받고자 노력하였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결의안에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제는 한국을 보호국화할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마침내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을사조약의 소식이 전해지자 자정 순국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전국에서 항일의병이 봉기하였다.

**【전개】** 1905년 8월 중순경 원주에서 원용팔 의병부대, 단양지역에서 정운경 의병부대가 거의하고 이어 김하규(삼척)·박장호(홍천)·최도환(양구)·이범주(양평·여주)·박석여(죽산·안성) 등의 의병부대가 일어났다. 한편 민중식과 안병찬·박창로·이세영 등이 5월에 홍산에서 거의하고 홍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각 지역의 유생 등이 가담하면서 의병의 규모는 커지게 되었다. 홍주의병은 기관포로 무장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패퇴하고 말았다. 전북 태인에서 봉기한 최익현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

배되고 유배지 대마도에서 순국했다. 최익현의 거병 이후 백낙구(광양)·양한규(남원)·고광순(담양)이 의진을 편성하고 구국항전의 기치를 올렸다.

신돌석은 1906년 음력 3월경 영해에서 거병한 뒤 동해안 일대와 경북과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원래 평민 출신으로 활빈당이나 농민들을 규합하여 농민의병부대를 편성한 신돌석은 산남의진과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였다. 뛰어난 유격전술과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던 신돌석 의병부대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산남의진은 중추원의관 정환직이 고종으로부터 의병봉기의 밀지를 받고 그의 아들 정용기와 함께 영천을 중심으로 거병한 이래 영천·경주·청하·청송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산남의진은 신돌석 의병과 유시연 의진 등 인근의 의병부대들과 연합작전을 벌이기도 하고 혹은 독자적으로 수차례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관서지역에서는 1905년 12월 평북 용천일대에서 전덕원이, 해서지역에서는 우동선 등이 거병하였다.

**【결과】** 을사의병은 을미의병 때에 봉기했던 의병장들이 재봉기하거나 당시에 참여하지 못했던 유생들이 참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강원·경기·충남·경북·전라도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당수의 포수와 포군 등이 의병항쟁에 가세함으로써 전투능력이 확대되어 상당한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된 을사의병은 1907년 군대해산 이후에 정미의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의】** 을사의병은 비록 양반유생의 유림들이 주도했으나 과거 위정척사적 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구하려는 구국의 이념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일어났다. 홍주의병과 태인의병, 그리고 산남의진들에서는 관리출신 의병장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을사의병 단계는 지역성·학통성·혈연성이 극복되어 가면서 화적이나 활빈당과 같은 계층과도 연대했으며 신돌석 의병진과 같이 평민의병들이 항일의병의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핵심어】** 을사의병/홍주의병/산남의진/신돌석의병부대

**【참고문헌】** 趙東杰, 『韓末義兵戰爭』(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홍영기, 『대한제국시대 호남의병연구』(서강대 박사학위논문); 박민영, 「을사의병」, 『한국사』 43(국사편찬위원회, 1999).

**【사진자료】** 081. 19070801 군대해산 후 권총 자결한 박승환 시위대 제1대대 제1연대장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로 광무황제를 강제퇴위시키고 이어 정미7조약을 체결한 일제가 이를 기반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자 1907년 8월부터 일어난 국민적 항일 의병

**【원인·배경】** 일제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구실로 삼아 1907년 7월 20일에 배일의식이 강했던 광무황제를 퇴위시키고 융희황제를 즉위시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9, 20일 양일 간에 걸쳐 광무황제 퇴위에 반대하는 서울 시민들의 시위에 호응해 일부 시위대 병사들이 무장 봉기하여 일제 군경과 직접 교전을 벌였다. 이로써 한국군의 존재를 일제의 한국병탄 일정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 일제는 군대해산의 방침을 서둘러 실행하였다. 한국의 내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미7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군대해산 등을 포함한 비밀각서를 교환하고 마침내 8월 1일에 대한제국의 군사적 기반인 한국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러한 망국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발발】** 해산식이 거행될 예정인 훈련원에 군인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그러나 강제 동원을 거부한 시위대 병사들은 무장을 하고 서소문의 병영을 나와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 교전은 시위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유서를 남긴 채 권총으로 자결하자 비분을 참지 못한 사병들이 무기고로 몰려가 무장한 뒤 군영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려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임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공격이 치열해지고 일군이 투척한 폭탄이 병영 안에 떨어지자 시위대 병사들은 병영을 나와 남대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시가전투를 전개하였다. 여기에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도 동참하였다. 용감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탄약이 고갈되면서 68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16명이 포로가 되었다. 병영에서 나온 시위대 병사들은 남대문 정거장을 수비하던 일본군과 교전한 뒤 흩어져 도망하였다. 일본군은 도망하는 군인들 뒤를 추격하여 사살하였다. 일본군의 추격을 피한 군인들은 서울을 빠져나와 의병대열에 합류하였다.

**【전개】**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강한 배일정신으로 무장된 해산군인들이 각처로 흩어져 이미 활동 중이던 의병부대에 합류하거나 새로 의병부대를 편성하며 항일전선에 뛰어들었다. 한편 지방군인 원주진위대와 강화진위대도 군대해산에 반발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해산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의병부대는 전략·전술에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

정미의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1908년 초에는 전국의병의 연합작전이 계획되었다. 관동의병장에 추대된 이인영을 중심으로 허위의병부대·민공호의병부대·이강년의병부대가 중심이 되어 의병부대를 통합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각 지역의 의병부대들은 집결지인 양주로 모이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선봉대 허위의병부대는 동대문 밖까지 이르렀으나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패하여 서울진공작전은 무산되었다.

**【결과】** 을미·을사의병 때와 달리 정미의병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부지역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이들 의병들은 1908년을 전후하여 국외로 나아가 간도나 연해주 등지에 의병기지를 건설하고 장기항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1910년을 전후한 시기 의병들은 황해·경기·강원·함경도의 산악지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며 의병투쟁을 지속하였다. 1910년 6월에는 유인석이 이범윤 등 연해주지역 의병과 함께 13도의군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임병찬의 주도로 '대한독립의군부'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미의병은 1915년 7월 채응언이 체포됨으로써 사실상 국내에서의 항전은 종식되었다. 국외로 이동한 의병은 독립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의병전쟁이 격화되자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주차군 2개 사단 외에도 2개 연대를 증파하였으며 헌병대도 대폭 증원하였다. 일제는 대규모의 부대를 파견하여 의병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하였다.

**【의의】** 정미의병은 해산군인·평민·천민·상인·농민 등 전 계층이 의병전쟁에 동참하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병하여 항전한 한국민의 자유전쟁이었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해산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대일항쟁을 전개하면서 침략자에게 보다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으나 의병진압에 일본군경이 전면으로 나섬에 따라 실질적인 항일전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독립전쟁으로 계승되었다.

**【핵심어】** 정미의병/군대해산/시위대/13도의군

**【참고문헌】** 신용하, 「전국13도 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987); 尹炳奭, 『義兵과 獨立軍』(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趙東杰, 『韓末義兵戰爭』(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한울, 1998).

**【사진자료】** 082. 서소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처절한 일대 접전을 벌린 해산군인들  
083. 정미의병

084. 191507 마지막 의병으로 기록된 채응언 의병장

085. 191507 채응언 의병부대의 무명 용사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애국계몽운동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을사늑약에 의해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기 전후인 1904년부터 1910년 강제병합 이전까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의 독립역량 양성운동.

**【원인·배경】** 한국민족은 한말 당시 오랜 기간에 걸친 대외항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힘, 실력이 부족하여 국권을 박탈당했다는 반성을 널리 하게 되었다. 또한 국권을 지킬 수 없었던 실력으로 한번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따라서 국권회복운동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의 개화자강파들은 불가피하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국권회복운동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회복의 전력을 민족사회의 하층에서부터 양성·증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전개】** 한말 애국계몽운동은 1904년 8월 24일 창립된 국민교육회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1906년 4월에 창립된 대한자강회는 국민들에게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신구국 교육운동을 호소하다가 민중들이 이에 호응하기 시작하자 1906년 「의무교육조례대요(義務教育條例大要)」를 입안하여 민립학교를 설립해서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구별(學區別) 의무교육 실시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중추원을 거쳐 대한제국 정부의 내각 회의에서 통과되어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제 통감부는 이를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탄압해서 중지시켜 버렸다. 그러나 신민회를 비롯하여 각종 애국계몽운동 단체들과 민중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민중의 자발적 의무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부터 1909년 4월까지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주요도시에 중학교와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소학교 출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킴으로써 고급의 신지식을 습득한 교사들과 민족간부들을 양성하였다. 또한 여기서 양성된 교사들은 전국 각지로 나아가 학교를 설립하고 청소년들에게 국권회복의 이념과 목적에 적합한 신구국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언론구국운동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황성신문(皇城新聞)』·『제국신문(帝

國新聞)』·『만세보(萬歲報)』·『대한민보(大韓民報)』·『공립신문(共立新聞)』·『대동공보(大東公報)』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신문들과 『소년』 등을 비롯한 다수의 잡지들과 학회보(學會報)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梁起鐸) 등이 영국인 베델(Ernest Thomas Bethell)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양기탁이 총무가 되어 한영 합작으로 1904년 7월에 창간된 신문으로서, 그 후 영문판 『The Korea Daily News』와 국문전용판 『대한매일신보』를 동시에 간행하게 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공식적으로 사주가 영국인이었으므로 통감부의 신문지법에 의한 검열을 거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부문의 애국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신문들이 하지 못하던 의병운동의 지원적 보도와 대변의 역할까지 과감하게 전개하였다.

실업구국운동으로서 각종 근대 회사 설립과 한국인 상업회의소 및 경제연구단체와 실업장려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일제의 경제침략을 군사침략과 마찬가지로 극히 위협시켰으며 민족산업의 진흥이 신교육 구국운동과 마찬가지로 실력양성의 길임을 강조하고 실업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국사·국문·지리 등의 근대적 학문체계를 수립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자 한 국학운동과 일제 통감부가 종교계를 친일화하려는 공작에 저항한 민족종교운동이 전개되었다.

**【결과】**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신교육구국운동의 애국적 교육열은 단기간에 국민대중들에 의해 3,000여 개의 민립학교를 설립하고 민족애국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후일 3·1운동의 직접적 원동력을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애국계몽운동가들의 신구국교육운동은 당시 한국인의 교육·지식·사상·문화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뒤의 국권회복운동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수십만의 애국청년 민족간부들을 양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의의】** 한말 애국계몽운동으로 한국민족은 주권이 강탈당한 역경 속에서도 대한제국 국민의 사상과 지식과 문화와 경제·정치·의식을 모든 면에서 일신시키고 민족의 실력과 독립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국권회복과 독립쟁취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다.

**【핵심어】** 애국계몽운동

**【참고문헌】** 慎備廈, 「韓末愛國啓蒙思想과 運動」, 『韓國史學』 1(1980); 李松姬, 「韓末西北學會의 愛國啓蒙運動」, 『韓國學報』 31·32집(1984); 慎備廈, 『韓國近代啓蒙運動研究』(一潮閣, 1997); 柳永烈, 『大韓帝國期の 民族運動』(一潮閣, 1997).

**【사진자료】** 086. 19100331 서북학회가 운영한 서북학교 농림과 및 부기와 졸업식  
087. 190607 대한자강회 월보 표지

088. 1908 대한매일신보사 편집국

089. 대한자강회가 해산한 직후 후신으로 조직된 대한협회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한말 구국계몽기 사회 각계각층의 애국지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결성한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가 전개한 국권회복운동

**【배경】** 1905년 공립협회를 결성한 미주한인들은 일제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한국 정부에 강제하여 체결하고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자 국내로 원동위원을 파견하여 한국민을 각성시키고 국권을 되찾아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발발】** 안창호·이강·임준기(林俊基) 등은 1906년 말~1907년 초의 연휴 기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 리버사이드(Riverside)에서 대한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안창호는 「대한신민회 취지서」와 「대한신민회 통용 장정」 초안을 가지고 1907년 2월 20일 국내로 귀국하였다. 귀국하자마자 안창호는 대한매일신보사와 대한제국 군인들, 그리고 상동청년회 주요 인물들과 접촉하고 의기투합하여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전개】** 신민회는 취지서에서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 함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가 원하는 바이며 신민회가 품어 생각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가를 건설할 뿐이다……”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신민회는 국권회복과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신민회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에 착수하며 비밀리에 회원들을 신민회에 가담시켰다. 그러나 신민회는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과 근대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각종 상공업 기관을 건설하여 경제적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공개적인 애국계몽운동에 들어갔다. 국권회복을 위한 민력을 양성하고자 신교육구국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우수한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계몽 강연과 학회 활동에는 모든 회원·간부들이 적극 참여하여 애국주의, 국권회복, 민권사상, 신사상·신지식·

신산업의 계몽, 구습타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를 만들어 민족 문화와 근대 국사학 창립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귀중한 고전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도서 출판 공급을 위해 평양에 태극서관(太極書館), 안악에 면학서포(勉學書孺)를 설립하였고 일제의 경제침략을 경계하고 민족산업 진흥을 위해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협성동사(協成同事)·상무동사(商務同事)·조선실업회사, 안악 소방직공장(小紡織工場)·연초공장, 사리원 모범농촌 등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민족자본이 취약하고 일제 독점자본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신민회는 민족의 동향으로서 청년계층을 중시하여 청년학우회를 결성하고 청년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총회 외에 한성연회(漢城聯會)·평양연회·의주연회·안주연회 등 지방조직을 정비하던 중 한국강점으로 청년학우회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결과】** 한국군대가 해산당하자 신민회는 국내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이 점차 불가능해짐을 깨닫고 일제를 물리치고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안중근의거가 발발하자 신민회 주도 인물들이 안중근의거 모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일제의 감시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표면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자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만주 국경지대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민단(民團)을 두고 학교와 교회, 기타 문화시설과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사관을 양성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야욕이 더욱 팽배하여 만주나 태평양지역으로 팽창하려 할 때 중일전쟁, 러일전쟁, 미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해외에서 양성한 독립군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독립군이 국내로 진입해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애국계몽운동이 그 동안 양성한 애국청년과 국민들이 일어나 실력으로 일본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1910년 4월 이후 신민회 회원 중 일부가 만주에 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자 국내를 탈출하였고, 병합 이후 1910년 가을에는 신민회원들이 만주 일대를 비밀리에 답사하여 후보지를 선정한 후 12월부터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단체 이주가 시작되었다. 1911년 봄에 대대적인 단체 이주를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포착한 일제는 1911년 1월 안악사건(安岳事件)과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사건', 9월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 암살음모사건' 등을 날조하여 회원을 대거 체포하고 신민회를 해체하였다.

**【의의】** 신민회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은 이후 만주에서 독립군 창건의 모체가 되었다. 또한 신민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3·1운동을 지도하는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에 가담하는 등 지속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핵심어】** 신민회/애국계몽운동/청년학우회/독립전쟁 방략/독립운동기지 개척

**【참고문헌】**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 上·下, 『韓國學報』 8~9(1977); 李載順, 「韓末 新民會에 關한 研究」, 『梨大史苑』 14(이화여대, 1977); 姜在彦, 「新民會의 活動と百五人事件」, 『辛亥革命の研究』(1978); 愼鏞廈, 「新民會의 獨立軍基地創建運動」, 『韓國文化』 4(서울대, 1983); 愼鏞廈, 「新民會와 大韓每日申報의 民族運動」, 『汕云史學』 4(1990);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一志社, 1990); 오영섭, 「朝鮮光文會 研究」, 『韓國史學史學報』 3(2001).

- 【사진자료】** 090.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신민회를 창립한 안창호  
091. 1908 도산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  
092. 이승훈이 세운 정주 오산학교 졸업식  
093. 재판장으로 호송되는 <105인 사건> 관련 애국지사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국채보상운동

국권침탈 항의 지정 순국	●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일본에 갚아야 할 국가 채무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상환하고자 1907~1908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민운동

**【원인·배경】**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당시부터 조선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했다.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카타(目賀田種太郎)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까지 4차례에 걸쳐 1,15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통감부가 한국에 끌어들이는 차관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유지, 확대하며 침략과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를 재정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07년 초 한국정부의 대일차관은 1,3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액수는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정도였으므로, 정부에 의한 국채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발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31일 대구의 광문사(廣文社)라는 출판사를 겸한 시회(詩會)에서 김광제(金光濟)·서상돈(徐相敦) 등 10여 명이 일제가 빌려준 국채(國債) 1,300만 원을 담배 끊기로 절약한 돈으로 상환해 버리자는 격문을 돌리자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발단되었다. 이 운동은 곧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갔다. 2월 말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해 전국에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는 고관이나 양반·부유층뿐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로부터 상인·군인·학생·기생·승려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않은 계층이 없었다. 여성들의 참여도 놀라워, 각종 국채보상부인회가 조직되어 반찬값을 절약하거나 비녀와 가락지 등을 의연품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일본 유학생들과 미주와 노령의 교포들도 의연금을 보내왔고, 일부 외국인들도 참여하였다. 황제와 정부대신들도 금연을 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신문사 내에 모금처가 설치되었고 신문은 기성회 등의 취지서와 의연금 납부자의 명단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채보상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1907년 4월에는 국채보상운동을 지도·총괄하기 위한 통합기구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한규설)와 국채보상연합회의소(이준)가 설치되었다.

**【결과】** 국채보상운동은 전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모금이 시작된 지 3개월 뒤인 5월에는 약속된 모금액이 20만원에 달하였다.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대동보』 등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경북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을 휩쓸었다. 이에 놀란 일제 통감부는 이 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대한매일신보사 내의 국채보상기성회 간부인 양기탁(梁起鐸)을 근거도 없이 국채보상의연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했다가 후에 무죄로 석방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채보상운동은 점점 퇴조하였으나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을 애국계몽운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1909년 국채보상금처리회가 조직되어 그 기금을 교육사업에 투자할 것을 결정하고 금전보관방법으로 전담을 사고자 하였으나 강제병탄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1910년 말에 국채보상금처리회에서 관리하였던 모금액은 약 15만 원이었는데, 그 모두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 빼앗기고 말았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도 있었지만 주도세력이 조직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지도논리와 구체적 계획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의의】**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국권침탈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에 하층민부터 지배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민중에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는 국민의식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항일의식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핵심어】** 국채보상운동/광문사/국채보상기성회

**【참고문헌】** 李松姬, 「韓末 國債報償運動에 관한 一研究」, 『梨大史苑』 15(1978); 1984; 趙恒來, 「國債報償運動」, 『한민족독립운동사』 1(국사편찬위원회, 1987); 李尙根, 「國債報償運動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18(國史編纂委員會, 1990); 愼鏞廈·吳斗煥·趙恒來·朴容玉·鄭晋錫,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아세아문화사, 1994);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일제의 한국침략과 국채보상운동특집)』 8(1993); 『國債報償運動史』(大邱商工會議所, 1997).

**【사진자료】** 094.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서상돈과 김광재  
095. 1907 대구민의회 발행 국채보상운동 영수증  
096. 19070822 일제가 조사한 전국 국채보상모집금액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한말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은 운동 방법상의 차이로 각각의 분리된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강제병합을 전후하여 두 운동의 이념과 논리가 합류하여 독립운동 기지건설과 독립전쟁론을 성립시켰다.

**【원인·배경】** 1907년 헤이그 특사파견의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퇴위시킨 일제는 국권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군대마저 해산하였다. 전국적으로 항일의병이 일어나 의병전쟁으로 격화되고 애국계몽운동 또한 극렬하게 일어나자 일제의 탄압과 감시 또한 극심하게 되었다. 구국권상실의 위기가 닥치자 국권회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했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 세력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전개】** 이 무렵 군대해산으로 인해 군문을 떠난 해산 군인들의 일부는 의병부대로 들어가 의병항쟁에 나서기도 하고 일부 군인들은 근대학교에 들어가 교사가 되거나 직접 민족학교를 설립하며 교육운동에 뛰어들었다. 안중근과 같은 이는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연해주로 망명하여 계동청년회에 가담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독립전쟁을 병행하였다.

국내를 무대로 삼아 전개되던 항일운동이 국외 각지에 산재한 한인사회로 파급되면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 세력들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더 이상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없게 되자, 국외에서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고 이 곳에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독립군을 양성한다는 계획에 착수하고, 바로 실행하였다. 이리하여 북간도지역과 서간도지역, 그리고 연해주지역 등지의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다.

**【결과】** 국권상실의 위기에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항쟁의 이념과 논리가 합류하여 새로운 항일독립운동이 이념과 전술을 성립시켰다. 그것이 바로 '독립전쟁론'이다. 1910년 강

제 병합 이후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항전은 국외로 무대로 옮겨 독립군 항전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국외에 개척된 독립운동기지에서 만나게 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은 학교를 세워 문무쌍전의 근대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며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한편 국외에 건설된 독립운동기지와 무관학교에는 3·1운동 직후 많은 애국청년들이 몰밀듯이 찾아와 대규모의 독립군단 편성에 일원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의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은 국권회복운동을 목표로 항쟁했으나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이념과 논리가 합류하여 독립전쟁론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지평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두 운동의 항일통일전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핵심어】** 애국계몽운동/의병운동/독립운동기지/독립전쟁론

**【참고문헌】** 윤병석, 『근대 한국 민족운동의 사조』(집문당, 1996);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일조각, 1988).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 【소항목】**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한국병합의 방침을 마련한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권회복운동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탄압을 가하였다. 항일의병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1909년 9월 1일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의병학살 작전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집단이민을 추진하자 <테라우 마사타케 조선총독암살미수> 혐의를 부쳐 신민회 회원들 600여 명을 체포하였다.

**【배경】**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을 빌미로 삼아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는데 이어 한국군대를 해산하는 등 한국 침략을 노골화하자 전국적인 의병항쟁이 전개되었다. 해산군인들이 의병 부대에 투신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의병 간에 연합작전이 모색되어 의병 연합부대인 13도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이 전개되자 일본은 한국 병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게 되었다.

**【발발】** 일제는 북부수비관구(경성, 회령, 북청, 함흥, 원산, 강릉, 개성, 평양), 남부수비관구(대전, 조치원, 대구, 전주)로 나누어 주력 부대 주둔시키고 관하 각처에 병력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또한 헌병조직을 의병전열에 따라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남원을 기점으로 고흥, 광주, 영광 등지의 의병을 토벌하는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였다.

**【전개】** 일제는 주력부대였던 임시한국파견대의 수비대 병력 이외에도 경찰·헌병대 병력이 모두 동원되어 군경 합동으로 탄압작전을 전개하고 면장과 이장 등 말단 지방행정조직까지 최대한 동원하여 의병의 근거지가 될만한 촌락과 가옥을 닥치는 대로 방화하고 의병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살육하여 초토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군의 토벌 만행에 대해 “사방을 그물 치듯 해놓고 순사를 파견하여 촌락을 수색하고 집집마다 뒤져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죽였다. 그래서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이웃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의병들은 삼삼오오 도망하여 흩어졌으나 몸을 감출 곳이 없어 돌출하여 싸워 죽었고, 약자는 도망하다가 칼을 맞았다.”라고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 대토벌작전이 끝난 후에도 일제는 양반과 유생, 또는 기타 지방의 유지를 앞세워 지방민을 회유하는 한편, 대토벌 기간 중 살아남은 의병들에 대해서는 순창 등지를 중심으로 한 수차례에 걸친 토벌을 속행하여 1909년 말에 이르러는 호남지역 의병세력은 거의 와해되었다. 토벌작전의 후속조치로 귀순하거나 체포한 의병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의 처분을 내리고 이들을 전라남도 해안 일대의 도로 개수 공사에 5백 명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항일의병을 완전히 제압한 후 일제는 강제 병합을 단행하였다.

병합 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자 총독암살미수라는 혐의를 씌워 항일애국지사 600여명을 체포하고 그중 105명을 기소하는 이른바 ‘105인사건’을 일으켜 한국 내에서의 반일세력을 완전 제압하고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의의】** 남한대토벌로 말미암아 의병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외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독립군으로 전환하였고 105인사건으로 기소된 애국지사들은 출옥 후에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개척 사업에 합류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핵심어】** 남한대토벌작전/호남의병/13도창의군/105인사건/독립군

**【참고문헌】** 조선주차군사령부, 『朝鮮暴徒討伐誌』(1913);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8~18(폭도에 관한 편책)(196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1970); 홍英基, 『大韓帝國時代 湖南義兵 研究』(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3); 홍淳權, 『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史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上·下, 『韓國學報』 8~9(1977); 李載順, 「韓末 新民會에 關한 研究」, 『梨大史苑』 14(이화여대, 1977); 姜在彦, 「新民會의 活動と 百五人事件」, 『辛亥革命の 研究』(1978); 愼鏞廈, 「新民會의 獨立軍基地創建運動」, 『韓國文化』 4(서울대, 1983); 愼鏞廈, 「新民會와 大韓每日申報의 民族運動」, 『汕云史學』 4(1990);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一志社, 1990); 오영섭, 「朝鮮 光文會 研究」, 『韓國史學史學報』 3(2001).

**【사진자료】** 097. 1908 의병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일본군들  
098. 체포된 의병장  
099. 쓰시마로 끌려간 의병장 최익현

100. 처형되는 의병장

101. 남한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되어 대구감옥에 수감된 호남지역 의병장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장인환, 전명운, 이재명 의사 등 의거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 장인환, 전명운, 이재명 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장인환·전명운의거는 1908년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도선대합소 건물 앞에서 한국침략의 앞잡이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 須知分, 1851~1908)를 장인환·전명운의사가 처단한 의거이다. 이재명의거는 1909년 12월 22일에 명동성당 앞에서 친일정권의 총리대신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 결행한 의거이다.

**【배경】** 스티븐스는 1882년에 일본 외무성 관리에 임명되어 1884년 갑신정변 사후처리와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외상이 내한했을 때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자 외교고문에 임명된 스티븐스는 러일전쟁 이후 미국 조야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반일감정을 진정시키고 한인 교민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배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제에 사주를 받고 워싱턴으로 특파되었다.

**【전개】** 1908년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스티븐스가 “일본의 한국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하다” 라는 친일성명서를 발표하자 한국교민사회는 격분하였다. 즉각 공립회관에 모인 교포들은 스티븐스에게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그가 묵고있는 페어몬트 호텔로 가서 친일성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오히려 “한국에는 이완용(李完用)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같은 통감이 있으니 이는 한국의 행복이요 동양의 큰 행복이라. 내가 한국 형편을 보니 태황제는 실덕(失德)이 매우 심하고 백성은 우매하여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만일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지 아니했다라면 벌써 러시아가 차지했을 것이다.”라고 망언을 하였다. 격분한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집단 구타하고 돌아와 대책을 논의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대동보국회 소속 장인환(張仁煥, 1876~1930)과 공립협회 소속 전명운(田明雲, 1884~1947)은 워싱턴 행 대륙 횡단 철도를 타기 위하여 오클랜드 페리부두 선창에 도착한 스티븐스를 3월 23일 아침 일찍부터 오클랜드 도선대합소에서 기다렸다. 일본 총영사 고이케(小池張造)와 함께 스티븐스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전명운이 손수건으로 감싼 권총을 꺼내 발사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당황한 전명운이 권총자루로 스

티븐스의 면상을 강타하고 달아나자 스티븐스는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전명운을 향해 추격하였다. 이어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 3발을 발사하였는데, 제1발은 전명운의 어깨 부분에, 제2발은 스티븐스의 오른쪽 어깨뼈에, 제3발은 복부를 명중하였다.

한편 미주 공립협회 회원인 이재명은 이준 열사의 순국 소식을 접하고 급거 귀국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자 했으나 안중근에 의해 이토가 처단 당하자 목표를 바꾸어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할 것을 결심하였다. 1909년 12월 22일에 서울 종현천주교회당(鐘峴天主敎會堂)에서 그 달 17일에 사망한 벨기에 레오폴트 2세 국왕의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오전 11시 30분경 추도식을 마치고 인력거에 올라탄 이완용을 공격하여 거사를 실행하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완용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허리 등에 자상을 입혔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결과】** 장인환의사의 총격에 쓰러진 스티븐스는 3월 25일 사망했다. 전명운, 장인환의사가 재판에 회부되자 국내외에 걸쳐 장인환 재판후원회가 결성되어, 의연금을 모금하는 한편 무죄판결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측은 제일급 살인범이라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했으나 1908년 12월 23일 이급살인죄로 25년간 금고형을 선고받고 모범수로 복역하였으며 1919년에 가출옥하였다. 한편 1908년 6월에 무죄석방된 전명운은 연해주로 망명하여 재러한인 사회에서 활약하다가 1909년 7월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이재명의사는 1910년 4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제1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완용의 8대 죄목을 지적하며 방청석을 향하여 열렬한 언변으로 의거의 정당성을 당당히 밝혔다. 그러나 공판은 한 차례로 끝나고, 5월 18일 사형이 선고되었고 불복공소하였지만 일제는 이를 기각하고, 9월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사형이 확정되자, 이재명은 “왜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하나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며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의의】** 전명운·장인환의거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의열투쟁이며 국내외 한국인의 애국심을 각성시켜 항일민족운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 의거로 인해 북미의 공립협회와 하와이 합성협회는 합동하여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일제의 불법 만행과 한국 침략의 야욕을 국제여론에 폭로하는 계기를 이루었으며 1년 뒤에 일어난 안중근의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재명 의사는 일본의 침략 원흉보다도 매국노를 처단하는 것이 국권수호의 지름길임을 보여주었고 목숨을 내건 의열투쟁으로 매국노들과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독립투쟁을 확산시키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핵심어】** 전명운/장인환/스티븐스

**【참고문헌】** 『장인환 재판기록문서(The Chang In Whan Documents)』; 민병용, 『美洲移民 100년사』(한국일보 출판국, 1986); 김원모, 「장인환의 스티븐스 사살사건 연구」, 『동양학』 18(1988).

- 【사진자료】** 102.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처단한 대동보국회원 장인환  
103.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처단한 공립협회원 전명운  
104. 1909 매국노 이완용을 칼로 찔러 부상입힌 이재명의사와 그의 동지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키워드】** 국권상실의 충격

**【전시항목】** 국권회복운동

**【소항목】**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국권침탈 항의 자정 순국	국채보상운동
을사의병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합류
군대해산과 의병운동의 격렬화	일제의 국권회복운동 탄압
애국계몽운동	장인환·전명운, 이재명·의사 등 의거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 안중근 의사 의거와 동양평화론

**【정의】** 1909년 10월 26일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의거

**【배경】** 안중근은 1907년 이전에는 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광무황제가 강제퇴위당하고 정미7조약을 체결한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당하는 망국 상태에 이르자 애국계몽운동으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병항쟁에 투신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 안중근은 연해주 의병에 가담하고 1908년 1월 특파독립대장 겸 아령지구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국내진공작전을 감행하고 전과를 올렸으나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부대원을 잃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발발】** 1909년 3월 2일 동지들 12명과 함께 단지회(단지동맹)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는 원동보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가 북만주 시찰하고 러시아 대장대신인 코코프체프와 회견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1909년 10월 10일 대동공보사 사무실에서는 신문사 관계 인물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포살 계획을 논의하였다. 권총을 마련하는 등 의거 준비를 마친 안중근은 국내진공 작전 때 전우인 우덕순과 함께 1909년 10월 21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출발하여 국경지대인 포그라니치나야에서 유동하를 통역으로 합류시켰다.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 일행은 국민회 하얼빈 지회 회장인 김성백의 집에 머물며 조도선을 합류시키고 거사계획을 점검하였다. 이토의 행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덕순과 조도선은 채가구(蔡家溝)역에서 대기하였고 안중근은 하얼빈역을 담당하였다. 이토 히로부미 일행은 10월 18일 대련(大連)에 상륙하여, 여순(旅順)·봉천(奉天)·무순(撫順)을 거쳐, 10월 25일 밤 창춘(長春)에 도착한 뒤 러시아 귀빈 열차편으로 갈아타고 26일 아침에 하얼빈역에 도착하였다.

**【전개】** 안중근은 역구내 찻집에서 이토의 도착을 기다렸다. 아침 9시 무렵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태운 특별열차가 멈추고 대기 중이던 러시아 대장대신 코코프체프가 열차에

올라 열차내에서 이토를 영접하였다. 회담을 마친 뒤 이토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코코프체프의 안내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각국 사절단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안의사는 의장대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토가 10여 보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권총을 쏘아 3발을 명중시켰다. 이어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뒤따르던 일본인 3인을 향해 세 발을 더 쏘았다. 안중근 의사는 '코리아 우라(대한국 만세)'를 3창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치명상을 입은 이토는 열차 안 객실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분만이 절명하였다. 안중근을 조사한 러시아 당국은 의거 당일 안중근의 신병을 일본영사관 측에 넘겼다.

**【결과】** 안의사의 공판은 여순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의 참모총장으로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토를 죽였기 때문에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포로로 대우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안의사는 하얼빈의거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결행한 것으로, 이는 곧 일본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도 된다고 당당히 밝히었다.

안중근의 재판을 보도한 영국신문 『The Graphic』(1910년 4월 16일자)지는 “세계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다. 그는 영웅의 월계관을 쓰고 자랑스럽게 법정을 떠났다. 그의 입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했다”고 보도하였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고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사형 당했다.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동양평화론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15일 자서전인 『안응칠역사』를 탈고한 직후부터 3월 26일 사형집행되기 전까지 옥중에서 집필한 글이다. 형 집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완성할 때까지만 처형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일제는 서둘러 안의사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 때문에 원래는 ① 서(序) ② 전감(前鑑) ③ 현상 ④ 복선(伏線) ⑤ 문답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서문과 전감 일부만 작성한 채 미완성으로 끝났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약소국을 제물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꿰뚫어보고 인간 존중, 인류의 공동번영이란 대전제를 무시한 채 패권 장악에 열을 올리는 일본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각자 독립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부조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동양평화론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평등한 민족구성원들의 관계가 보장되는 국가들의 연합체 혹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를 제안하였다.

안중근에 의하면 당시 세계는 '약육강식'의 시대이며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면서 침략을 일삼는 것은 서양이 만들어 낸 생활방식이다. 동양은 서양의 침략을 받기 이전에는 학문과 덕치를 중시하고 자기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서양을 침략할

사상은 없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국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대의로 내세웠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청국 양국 국민이 일본의 선전 명분을 믿고 일본군을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선전포고문에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독립' 공고화를 약속했으므로 한·청 양국 국민은 옛 원한을 접어두고 일본군에게 운수·도로·철도건설·정탐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독립' 공고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았다. 이에 한민족들은 의병을 일으켜 '독립전쟁'을 일으켰지만 일본은 수만의 의병과 수백의 의병장을 학살하였다. 한민족들은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일본과 싸우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에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평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동양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 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동양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청국·일본 세 나라가 각기 독립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서 일치단결하여 서양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동양3국이 서로 화합해 개화 진보하면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다.

**【의의】** 안중근의거는 제국주의자로서 한국침략의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파괴자에 대하여 인간의 자유를 지키려는 정의의 응징이었다. 안중근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한국 의병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전 지역 내에 들어온 적장을 포살한 것이었다. 이런 안중근의거는 한국독립운동을 본격화하는 횃불이 되었다.

**【핵심어】** 안중근/이토 히로부미/동양평화론

**【참고문헌】** 安重根, 『安重根自傳』(東京: 韓國研究院 소장); 安重根義士崇慕會 編, 『安重根義士自敘傳』(1990);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5(韓國史料研究所, 1970);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6·7(1976); 외솔회, 『나라사랑』 34(안중근특집, 1979);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 『한국사학』 2(1980); 장석홍, 『안중근의 생애와 구국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사진자료】** 105. 안중근 의사

106. 19091026 열차에서 내린 이토오 히로부미

107. 19091026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붙잡히는 장면기록화

108. 19100325 안중근의사의 마지막 유언장면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1945년 8·15광복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관내, 만주, 연해주, 미주지역과 국내의 독립운동세력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출범하였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단일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후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통합 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미주동포들이 모금해 온 독립자금으로 정부 청사를 마련해 정부의 외형을 갖추었고 임시헌법 제정을 서둘러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우선적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라 안팎의 항일세력들과 원활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 제도를 마련하였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갖추고 국내의 행정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였다.

통일정부수립 후에는 독립전쟁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략을 세워나갔다. 독립전쟁을 지휘할 사관을 양성하고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만주지역에서 무장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광복군사령부와 광복군총영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등 유력 독립군 부대들은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편제하였다. 해외한인사회도 조직화하여 대한민국 임시육군 군구제(軍區制) 안으로 편제하고 군사활동의 인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법적 준비와 재정 마련 전담팀 조직 등 정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거두어 국가재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임시정부가 실제적인 실력을 발휘하려면 국민적, 재정적,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실력을 갖추는 일에 전력하였다.

한편 임시정부는 역사편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시사료편찬회를 조직하여 과거의 한일관계사와 일제의 한국침략사를 폭로한 한일관계사를 편찬하였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동포사회에 독립운동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였고 동포사회의 '공론'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의무교육 실시와 교과서 편찬을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실행하기 어려웠으나 한국역사와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인성학교를 공립학교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교육운동과 문화운동 부문도 독립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임시정부는 국제연맹과 미국 유럽 열강과 중국 등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독립외교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파리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은 전권대사로 활약하며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도록 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러시아 노농(勞農)정부에 독립자금을 요청하러 모스크바에 한형권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1919년 미

국에서 만들어진 구미위원부는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미국의회와 정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인지도를 넓혀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상해사변을 일으켜 상해를 점령하자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1932년 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무조직이었던 한인에국단 소속 이봉창 의사는 동경에서 천황의 처단을 시도하였고, 윤봉길 의사는 홍구공원에서 천황의 생일날인 천장절(天長節)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윤봉길의거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려 혈안이 된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야 했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주(杭州), 진강(鎮江), 광주(廣州), 유주(柳州), 기강(綦江) 등지를 전전하였다. 이동시기 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의 낙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여 한인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장차 있을 독립전쟁에 대비하였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 이후 정부 산하의 정규군을 갖추고자 노력하여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고, 중국관내의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정당, 단체 등 항일세력들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뭉치어 좌우연합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군이 국내로 침투하여 무장투쟁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했던 계획이 무위로 끝났으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이래 1945년 광복하기까지 26년간 조국 독립 달성의 그날을 위해 항일전선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사법·행정의 정부 형태를 갖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그리고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국내외의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민족국가 수립의 비전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캡슐: 대한민국 국호 제정과 임시헌법
---------------------------------	--

일제의 식민통치는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였다. 1910년 이후 10년간 헌병을 앞세운 무단통치로 한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비인도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한국민의 토지를 약탈하였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앞세워 일본인 이주자에게 이를 분배하였다. 이외에도 산림자원·지하자원·수산자원을 수탈하였고, 1920년대로 들어오면서 일본자본주의가 팽창함에 따라 공업화에 따른 값싼 식료품과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강요하였다.

또한 일제는 한국을 영구히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한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파괴하였다.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성명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신사참배와 황국신민서사를 강요하는 등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광분하였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걸친 경제공황, 특히 장기적인 농업공황에 의한 식민지 조선 농업의 황폐, 농민의 경제적 몰락의 심화와 한국독립운동의 고양에 따른 한국인과 일본제국주의와의 계급적·민족적 모순의 격하는 일본제국주의 지배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으로 선전포고 없이 만주침략을 개시하고 이후 15년에 걸친 침략전쟁이 계속되었다. 1931년 9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중국대륙 침략 개시는 한국에 대한 종전의 산미수탈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더한층 한국인의 노동력을 전력(戰力)으로, 모든 물적자원은 군수로 수탈하였다. 한국은 문자 그대로 '병참기지'로서 전면적으로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고 희생되었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군부 파시즘정권을 완성하여 만주침략·상해침공·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한민족의 물적·인적자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침략전쟁에 징병·징용되었고, 심지어는 부녀자까지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와 수탈정책

**【소항목】** 일본의 한국병합

● 일본의 한국병합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경제수탈
지방행정구역 개편	

**【정의】** 일제는 1905년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는 을사조약을 강제체결하였고,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후 일제는 사법권과 경찰권 등을 빼앗고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경술국치(庚戌國恥)·일제병탄(日帝兵灘)이라고도 한다.

**【배경】**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한 일제는 강압적인 무력을 앞세워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그해 8월 한일의국인고문용병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 등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전개】** 일제는 군대해산과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제정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켰으며,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감옥 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기유각서(己酉覺書)를 체결해 한국인의 저항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했으며, 극비리에 '한국병합 실행에 관한 방침'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남한대토벌을 감행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투쟁을 진압했다. 1910년 5월 30일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3대 통감(統監)에 취임하면서 한일합병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그해 6월 30일 한국경찰제의 폐지를 결정하고, 일본헌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헌병경찰제를 수립했다. 7월 12일 일본정부 각의에서 한국에서는 일본헌법이 아닌 초법적인 조치에 의해 통치할 것이며, 총독이 천황직속으로 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통과시켰다. 그 결과 8월 18일 한국정부 각의(閣議)에서는 합병조약안이 통과되었고,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결과】**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으며,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합병의 형식으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여 한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 밑에 놓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 【사진자료】** 109. 19100726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부임하는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하는 테라우치
110. 이완용과 테라우치 사이에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통감관저의 방(상), 병합을 축하하는 일본 통감부 관료들(하)
111. 19100829 강제병합 후 경복궁 근정전에 내걸린 일장기
112. 19200428 정략 결혼한 영친왕 이은과 일본 황족의 나시모토 마사코
113. 고종의 고명딸로 13살의 나이로 일본에 인질로 건너간 덕혜옹주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와 수탈정책

**【소항목】**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일본의 한국병합	토지조사사업
●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경제수탈
지방행정구역 개편	

**【정의】** 한국을 강점한 일제의 무단통치는 서울·평양 등지에 주둔한 일본군 2개 사단과 2만여 명에 이르는 헌병경찰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헌병경찰을 동원한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무단통치였다.

**【배경】** 일제는 1905년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고,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후 일제는 사법권과 경찰권 등을 빼앗고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내용】**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통감부를 식민지 무단통치의 최고기관인 조선총독부로 개편하였다. 일본군 현역대장이 취임하는 조선총독은 일본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일왕에 직속되어 입법·행정·사법 및 군대통수권까지 장악하여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한 것은 무력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국 식민통치의 총본산인 조선총독부 조직은 총독 아래에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을 두었다. 헌병경찰은 치안업무 이외에 독립운동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향을 조사하고, 혐의자를 색출하여 재판 없이 강제 구금하거나 태형, 심지어는 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일반 관공서는 물론 학교 교원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여 위협적인 무단통치를 자행하였다.

**【결과】** 한민족은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이에 항거하는 애국지사들은 체포, 투옥되거나 학살당하였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체포된 애국지사는 수만 명에 달하였고,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는 한민족 독립운동은 점차 거세어졌다.

**【핵심어】** 일제의 무단통치/헌병경찰제도/한국강점/조선총독부/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참고문헌】**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이광린, 『한국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881);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이명화, 「교육정책」, 『한민족독립운동사-일제의 식민통치』 5(국사편찬위원회, 1989).

- 【사진자료】** 114. 식민지교육이 행해진 교실수업 현장  
115. 일본 헌병 경찰 발족식 사진 (경성 제2헌병분대)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와 수탈정책

**【소항목】** 지방행정구역 개편

일본의 한국병합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경제수탈
● 지방행정구역 개편	

**【정의】**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1914년 3월부터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배경】**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구관습 및 제도 조사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조선총독부 내에 취조국을 설치하고 조사작업 가운데 토지제도·친족제도·면(面) 및 동(洞) 제도와 같이 식민지화에 최대 장애가 될 한국 재래의 사회적 체계에 관한 것이 우선순위로 두었다.

**【내용】**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구역의 변천은 제1기(1910~1919), 2기(1919~1931) 및 3기(1931~1945)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10~1919년)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13도로 크게 구획하여 그 기반 위에 부(府)·군(郡)·도(島)를 두었으며, 그 밑에 말단행정단위인 읍·면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부(府)·군(郡)의 구역을 개편해가면서 군의 수를 대폭 감축하였다. 1920년대의 지방관제의 개정은 종래의 중앙집권제가 완화되고 지방분권화가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부제와 면제를 개정해 부협의회원을 관선제에서 민선제로 하는 한편,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면협의회를 두었으며, 또한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道評議會)를 두었다. 그러나 이들 협의회와 평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불과했으므로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되지 못했다. 1930년대에 와서 지방행정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그 당시 일본의 지방자치제를 모방한 중앙집권적·관치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부제의 개정, 읍·면제의 제정, 그리고 도제가 새롭게 제정·공포되었다. 1930년 이후부터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관료의 지배수단으로서 주민대표를 이용하고 주민의 광범위한 행정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일제에 대한 적대감정을 회유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의 변화는 결국 식민지 통치의 원활화와 한민족 말살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결과】**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은 도(道) 이하의 단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개편에 그쳤

던 종래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수준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은 전면적인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0년대 후반에 이르는 동안 자치적인 지역단위로서 존재해 왔던 동(洞)·리(里)를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지방사회의 기저를 흔들어 놓았다. 이는 전면적인 면(面) 단위 이하의 이합집산을 통해 향촌사회의 전통적인 결속력을 해체하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의 변화는 결국 식민지 통치의 원활화와 한민족말살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지방행정구역 개편/식민지배 체제 수립/조선총독부/취조국/전통적 결속력 해체

**【참고문헌】** 강동진, 『일제의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국학자료원, 2009).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와 수탈정책

**【소항목】** 토지조사사업

일본의 한국병합	●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경제수탈
지방행정구역 개편	

**【정의】** 일제가 식민지 통치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근대적인 토지권 관리제도와 지세제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치정책이었다.

**【배경】** 1908년 일제는 한국경제수탈을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인의 토지와 지하자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일제는 1910년 3월 창설한 토지조사국을 개정하여 임시조사국관제를 새로 공포하고 잇따라 1912년 8월 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 및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약탈과 지세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내용】** 토지조사사업은 네 단계를 거쳐 정리되었다. 제1단계는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재정정리·제실재산정리의 명목으로 실시한 작업이다. 역토·둔토뿐만 아니라 궁장토·목장토·능원묘위토, 기타 각종 토지를 ‘역둔토’라 하여 국유지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제2단계는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 사이에 국유지로 확보한 토지를 ‘역둔토실지조사’라는 이름으로 면적과 소작료와 관계, 소작농민을 조사한 단계이다. 제3단계는 1910년 9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사업을 하면서 국유지를 다시 조사 확인작업을 한 뒤 소유권을 사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작업을 시행한 단계이다. 제4단계는 1918년 1월부터 1918년 12월까지 토지조사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역둔토 분필조사(驛屯土分筆調査)’를 실시하여 소작농별·지목별 강계를 사정하고 국유지 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여 국유지 지배체제를 최종적으로 확립 완료한 단계이다. 이 작업을 통해 일제가 소유권을 확보한 국유지, 그중에서도 농경지는 역둔토가 중심이었다. 한국인의 저항과 준비부족으로 토지조사사업이 예상대로 진척되지 못하자 일제는 재원조달과 추진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1912년 「조선토지조사령」·「조선부동산증명령」·「조선부동산등기령」 등 관계법을 새로 공포하는 등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조정하였다.

**【결과】** 토지조사사업은 한국통치구조의 전면적 재편성과 지주제를 체제적으로 성립시킨 사업이었다. 한국의 농민층을 소유와 경영으로부터 배제시켜 유리민화(遊離民化)하고, 임금노동자로 몰락하게 하였다. 이에 한국농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 협조하지 않았고 격심한 분쟁을 야기하였다. 일제는 사업기간 연장, 신고방식 개정, 분쟁에 대한 화해 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였으나 한국 농민들은 1919년 3·1운동으로까지 토지조사사업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핵심어】** 토지조사사업/토지조사법/조선토지조사령/조선부동산증명령/조선부동산등기령/반대투쟁

**【참고문헌】**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지식산업사, 1982); 김용섭, 「수탈을 위한 측량-토지조사」, 『한국현대사』 4(신구문화사, 1969).

**【사진자료】** 116. 1912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토지 측량 광경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와 수탈정책

**【소항목】** 경제수탈

일본의 한국병합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 경제수탈
지방행정구역 개편	

**【정의】** 일제는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식량 및 공업원료를 약탈하는 한편 값싼 일본상품으로 식민지조선의 민족자본 형성을 방해하였다.

**【배경】** 일제는 식민지조선에 대해 착취를 강행하였고, 식민통치 전반기에는 대량의 일본상품 판매시장, 원료 및 식량 공급기지로서 약탈무역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후반기에는 병참기지를 위한 식민지적 군수공업에 과잉자본을 투자하여 한국 민족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식민지 경제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내용】**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한국의 민족산업을 억압하기 위해 1910년 12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한국 내의 회사 설립 및 한국 외부에 설립된 회사의 한국 내 본점이나 지점 설치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자본의 축적이 미약했다고 하는 주체적 조건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본래 의도는 민족자본의 형성을 억누르고 한국의 자본주의적 공업발전을 저지하여 한국을 영구히 식민지적 식량·원료 공급지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1920년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고 식민지 경제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1920년대 만성적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을 상품판매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업원료·식량공급지로서 수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식민지적 경제구조로 재편성하였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걸친 경제공황, 특히 장기적인 농업공황에 의한 식민지조선 농업의 황폐, 농민의 경제적 몰락의 심화에 따른 한국인과 일본제국주의와의 계급적·민족적 모순의 격화는 일본제국주의 지배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5년에 걸쳐 침략전쟁이 계속되었다.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 개시는 한국에 대한 종전의 산미수탈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식민지조선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군사산업의 개발을 통해 경제를 수탈당하였다.

**【결과】** 일제는 한국의 민족자본을 억압하고 경제공황 극복과 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서 식민지 경제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식민지적 예속화를 한층 강화하였다.

**【핵심어】** 경제수탈/민족산업 억압/회사령/산미증식계획/병참기지화정책

**【참고문헌】**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한울아카데미, 1998).

- 【사진자료】** 117. 동양척식주식회사 전경  
118. 1911 조선은행  
119.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 목포항에 싸놓은 목면  
120.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 군산항에 싸놓은 쌀가마니들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일제의 민족분열과 황민화정책

**【소항목】** 일제의 민족분열정책

● 일제의 민족분열정책	일제의 황민화정책
--------------	-----------

**【정의】** 3·1운동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제한된 언론, 출판 등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한편에서는 한민족 지도층을 회유, 협박하여 친일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항일 투쟁을 철저히 탄압함으로써 민족을 분열시켜 식민지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정책

**【배경】** 3·1운동으로 무단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제는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식민통치를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른바 ‘문화정치’로 불리는 1920년대 식민통치정책은 1910년대 식민정책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는 부분도 실상은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였다. 일제의 ‘문화정치’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지배정책의 기본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항일독립운동의 양양에 대비하여 종래의 노골적인 무력지배를 철회하고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동화정책을 한층 강력히 추진하며, 민족의 상층계급의 일부를 매수하고, 한국지배에 지장이 없는 약간의 출판·결사를 허용한 것으로서 보다 교묘하고 교활한 분열지배정책의 위장에 불과하였다.

**【변천】** 조선총독에 문관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한번도 임명된 예가 없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가 억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무단통치의 상징이었던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도가 채택되었으나 실상은 경찰수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특고형사를 신설하고 사복형사·밀정 등에 의한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한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였다. 또한 지방통치기관의 자문기구로 도협의회·부협의회·면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일부 경제적 상층부 한국인들을 친일화를 꾀하여 이들을 식민통치의 안전판으로 이용하고 민족분열을 가속화하였다.

**【결과】** 일제의 ‘문화정치’는 제국주의적 정치체제의 폭력적인 식민지 지배가 완화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의 상투 수단으로서 한층 교활하고 기만적 식민지 지배정책이었다. 3·1운동 이후 프롤레타리아의 자각이 높아지면서 더욱 고양되어진 한민족

의 반일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식민지 민족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문화정치'로 위장하였던 것이다.

**【핵심어】** 민족분열정책/무단통치/문화정치/식민지 지배/민족분열

**【참고문헌】**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한울아카데미, 1998).

**【사진자료】** 121. 문화통치를 표방하고 민족분열책을 획책한 사이토 조선총독과 미즈노 경무총감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일제의 민족분열과 황민화정책

**【소항목】** 일제의 황민화정책

일제의 민족분열정책	● 일제의 황민화정책
------------	-------------

**【정의】**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한민족을 말살하고 일본천황에 충실한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어금지·내선일체 등 여러 가지 황민화정책을 시행하였다.

**【배경】** 일제는 1910년 한국강점 이후 한국민에 대하여 일관하여 그 존재를 말살하고 일본천황에 충실한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 왔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러 침략전쟁에 따른 인적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하였다.

**【내용】**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체(內鮮一體)’·‘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강화하기 위해 일상생활 중에 ‘황국신민서사’를 외울 것을 강요하였다. 1937년 10월에 제정된 「황국신민서사」가 그것이다. 서사의 내용인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인고단련(忍苦鍛鍊)은 「교학(敎學)쇄신」의 3대 강령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을 일소하려고 하였다. 이 서사는 학교를 비롯하여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상점 등 모든 직장에서의 조회, 기타 회합 등에서 제창되었다. 이 서사의 제창은 한민족에게 있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이 되었다. 일제의 황민화정책 가운데서도 일본어 상용이 특히 중요시되었다. 1937년에는 조선총독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관리 및 지방의원에 대해 일본어 상용이 강조되었고, 학무국 편집과의 한국인 직원은 ‘상호간에 있어서는 관청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무상의 회화이건 아니건을 불문하고 일체 국어(일본어)를 사용하며, 또 각자의 가정에 있어서도 사용의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을 합의하였다. 일제는 1937년 4월 한국인의 성(姓)을 빼앗고 일본식의 씨명으로 바꾸게 할 것을 강요하였다. 창씨개명은 한민족의 가계(家系)를 빼앗고 일본의 천황제적 가족제도를 강요하는 포악한 민족말살정책이며, 그것은 또한 한민족의 노동력 동원과 징병 등 군사상의 목적에 이용되었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1919년 7월에는 한국통치상 가장 긴요한 것으로 천조대신(天照大神), 명치대황(明治大皇)을 제신(祭神)으로 하는 조선신사를 설립, 1935년 조선신궁이라 개칭하여 조선인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정신적으로 조선 지배의 도구를 삼았다. 1933년 이래 이른바 ‘농촌진흥운동’과 아울러 ‘심전개발운동’을 권장하고 신사 중심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정신운동이 강화되었으며, 신사(神社)·신사(神祠)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937년 중국침략의 본격화와 함께 전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국신

민화' 교육을 철저히 강요하였다.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는데, 즉 '내선공학(內鮮共學)의 일원적 통제를 실현한다고 하여 일본인과 똑같은 교육방침 아래 '내선일체화' 방침에 의해 '황국신민의 연성'을 진행시키고 아울러 한국사를 왜곡하고 말살하였다.

**【결과】** 일제의 황민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민족문화를 가진 한민족말살정책은 불가능하였고, 일제의 황민화정책은 파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핵심어】** 황민화정책/황국신민/내선일체/황국신민서사/국체명징/인고단련/일본어 상용/조선어금지교육/설날폐지

**【참고문헌】**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사진자료】** 122. 1925 서울 남산에 세워진 조선신궁

123. 일본어 전해교육

124. 궁성 요배를 하는 사람들

125. 내선일체 선전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일제의 대륙침략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소항목】** 중일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 중일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인력동원
정신동원	물자동원

**【정의】** 중일전쟁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37년 7월 7일 도발한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이며, 일제는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하였다.

**【배경】** 일제는 노구교사건(盧溝橋事件)을 조작하여 1937년 7월 7일 중국을 침략하고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노구교사건은 1937년 7월 7일에 북경(北京) 서남쪽 방향 노구교에서 일어난 총성과 일본군 1명의 행방불명을 구실로 7월 8일 일본군이 중국 진지를 공격하여 중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일본군과 중국 국민당 정부는 전쟁상태로 돌입, 8월 29일 베이징이, 그 다음날은 텐진이 함락되었다.

일제는 1937년 7월 본격적인 중국침략 개시에 따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한민족에 대해서도 전쟁수행정책에 전면적인 협력을 강요하였다. 즉 한민족을 내선일체, 황국신민사사의 기치 아래 인적으로 총동원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농공병진책을 진행하여 한국을 이른바 대륙병참기지화하였다. 산금(産金)을 비롯한 지하자원, 산미증식계획의 부활로 인한 대량의 식량약탈, 그밖에 군사공업진흥을 위해 조선산업위원회(1936), 시국대책위원회(1938)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국가총동원법(1938)에 의한 물자동원, 생산확충 계획이 세워져 국가통제가 강화되어 군사공업에로의 재편성, 전시통제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 병참기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개】** 중국 측의 전쟁대비가 취약한 틈을 이용하여 무력과 장비가 우세한 일본군은 처음에는 파죽지세로 북경·천진·상해·광둥 등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중국 측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실현하여 민족협동전선을 편성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나 1938년 말부터 ‘국공합작’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여 1939년 이후는 실질적으로 서로 견제해 가면서 별개로 일본항전을 전개하였다. 국민당의 정부군은 중앙군의 정규전을 중심으로 하여 처절한 항전을 전개하였다. 공산당은 팔로군(八路軍)·신사군(新四軍)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여 일제침략군의 기동력을 묶고 전력을 소모시켰다. 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국국민들이 중국의 위기를 깨닫고 각성하여 분기했으므로 중국의 전력은 물자부족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지만 전투인력은 오히려 증강되어 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이 일어

나자 1937년 7월 16일 진강(鎭江)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군대를 편성할 수 없었다. 무한에 있던 조선민족혁명당이 먼저 중국군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한 180명의 청년당원으로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지원하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연합해서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다.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다. 1941년 12월 발발한 태평양전쟁 중에도 중일전쟁은 계속 전개되었다. 중국전선에서 일본군은 1945년 봄부터 중국 측 중앙군, 인민해방군,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등의 유격전에 밀리기 시작하다가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가 계기가 되어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중일전쟁도 종결을 보게 되었다.

**【핵심어】** 중일전쟁/전시총동원체제/노구교사건/대한민국임시정부

**【참고문헌】**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국가보훈처, 1999).

**【사진자료】** 126. 19380403 조선육군특별지원병령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일제의 대륙침략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소항목】** 정신동원

중일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인력동원
● 정신동원	물자동원

**【정의】** 일제강점기 후반기인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전쟁수행에 동원하고자 한 정책을 의미한다.

**【내용】** 신사는 일본 고유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의 사원으로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국민통합을 위해 각지에 신사를 건립하고 신도를 보호 육성하여 ‘천황제’ 국가의 지도정신으로 이데올로기화하였다. 그리하여 천황 및 천황의 선조를 신사에 모시고 살아 있는 천황도 신격화하여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 지배에 이용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재개하면서 기독교계 사립학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1937년 관습을 기초로 한 친족 및 상속관계법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 씨명(氏名)으로 개명하게 하였다. 일제는 제령 제20호로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1940년 2월 11일 창씨개명을 강제로 시행하여 8월 10일까지 6개월간 씨명을 결정해서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일제의 선전과 강요에도 창씨개명 실적이 미미하자, 관헌들을 동원하여 협박하고 강제하였으며, 한국인 저명인사들을 호출하여 ‘창씨’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제를 가하여 간악한 방법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명을 중시하던 한국인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하였고, 유생들 가운데는 이에 항의하여 자살하기도 하였다.

**【핵심어】** 신사참배/황민화정책/창씨개명/민족말살정책

**【참고문헌】**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김승태 편저, 『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정운현 편역, 『창씨개명』(학민사, 1994); 宮田節子, 「創氏改名에 대하여」, 『백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하(창작과비평사, 1990).

**【사진자료】** 127. 193911 창씨개명 수속을 밟기 위해 경성부청 호적과에 줄을 서있는 모습

128. 조선신궁에 단체로 참배하는 학생들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일제의 대륙침략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소항목】** 인력동원(징병, 징용, 군위안부)

중일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 인력동원
정신동원	물자동원

**【정의】** 일제가 중국 본토 침공과 태평양전쟁 도발을 통해 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투 및 비전투요원, 후방생산인력을 강제동원해 간 일

**【배경】** 1931년 만주사변을 필두로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전면적인 국가총동원체제로 돌입하였다. 침략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인력동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칙령과 고시 등을 통해 한국인 인력을 침략전쟁에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내용】** 일제는 침략전쟁이 확대되고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1944년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국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전쟁을 개시한 일제는 한민족에 대한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전력을 보충하고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쓰기 위해 한국청년 모집계획을 추진하였다.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을 공포하고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어 군대식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나남·함흥·평양·대구 등지에 육군지원병 훈련소가 설치되어 강제적인 동원훈련이 실시되었다. 1941년 12월 진주만 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군과의 해상전투가 본격화되자 전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1943년 7월 「해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였다. 이해 8월부터 「해군특별지원병령」을 시행하여 해군병 지원자 훈련소가 설립되고 강제적인 훈련이 시행되었다. 또한 전문학교 대학 재학생의 ‘학도지원병’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일제는 보다 강권적으로 한국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1944년 4월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먼저 노동력의 양과 질, 소재에 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각종 직업능력 조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은 1939년 1월 7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하였는데 한국에는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어 노동력 실태파악, 노동력 통제, 자금통제, 사업통제, 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의 전쟁터로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로 동원하였다. 근로정신

대와 군위안부로 여성이 동원된 정확한 숫자나 피해자 수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과】** 일제는 침략전쟁이 확대되자 부족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국청년들을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대량 동원하여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핵심어】** 징병/육군특별지원병령/해군특별지원병령/학도지원병/징병제/징용/국민징용령/근로보국대/국가총동원법/국민직업능력신

**【참고문헌】**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경인문화사, 2003); 최유리, 「일제말기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연구』(한울, 1995).

- 【사진자료】** 129. 큐슈 도요스탄광경의 한국인 합숙소 벽에 새겨진 한글 낙서  
130. 1935 처녀회  
131. 1944 일본 군수공장에 강제 연행된 여학생 정신대  
132. 1943 강제 징집된 학도특별지원병  
133. 훈련소에 입소한 학도병들  
134. 일제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들  
135. 상하이 일본 육군 직영 위안소

**【작성자】** 이동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전시항목】** 일제의 대륙침략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소항목】** 물자동원

종일전쟁과 전시총동원체제	인력동원
정신동원	● 물자동원

**【정의】** 일제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한국을 병참기지로 삼고 양곡에서 낫그릇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수탈한 정책

**【배경】** 일제는 만주침략 개시 이후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에 있어서 식량과 광산 물 등의 공업원료 약탈뿐만 아니라 금속·화학 등의 군사공업을 강력히 진행하였고, 또 전략상과 원료반출을 위해 철도·항만 등의 교통기관을 확장하고 한민족을 한층 더 착취하였다. 또한 식민지조선을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동원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아 물자를 동원하고 착취하였다.

**【내용】** 일제의 전쟁 물자동원은 ‘헌납’이란 명목으로 행하여졌다. 전쟁물자의 통제수탈은 더욱 가혹하고 심해져갔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전쟁물자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물자동원계획에 의해 전쟁물자의 국가적 통제 및 수탈을 강화하였다.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공출이란 명목으로 양곡을 수탈하고, 고철과 낫그릇 수탈을 비롯하여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해산물, 섬유류, 금속류, 광산물, 약초류, 폐품류 등의 물자까지 수탈하였다.

**【결과】**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물자동원으로 배급제를 통한 통제경제 속에서 한국인은 굶주리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전시체제하에서 무리한 물자동원과 수탈로 반일사상이 확대되는 등 일제와 한국 민족과의 모순이 보다 격화되고 있었다.

**【핵심어】** 물자동원/병참기지/헌납/국가총동원법

**【참고문헌】** 임종국, 「일제하 인력·물자수탈사」, 『변혁시대의 한국사』(동평사, 1980);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사진자료】** 136. 강제 공출된 금속류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캡슐: 대한민국 국호 제정과 임시헌법

1910년 8월 29일 이래 일본 조선총독부의 폭압적 무단통치가 10년간 확고하고 구축되어 왔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억압적인 일본 식민지 통치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終戰) 국면에 들자 1919년 3월 들불처럼 일어난 3·1운동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독일·오스트리아·터어키·러시아 등의 군국주의적 전제국가의 붕괴, 러시아혁명 등으로 머지않아 제국주의가 퇴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시점에서 1919년 1월 21일 새벽 광무황제가 갑자기 사망하고 3월 3일로 예정된 국장에 참관하려 약 20만 인파가 서울로 모여든 계기를 활용하여 3월 1일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발발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3·1운동은 최소한 4월 말까지 두 달간 계속되었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매일 1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났으며, 시위운동의 정점을 이룬 4월 1일은 하루 동안 67회의 시위가 일어났다. 3월 27일과 4월 2·3일은 50회 이상 일어났으며, 적어도 30회 이상 일어난 날만 15일이었다. 참여인원으로 보면, 수십만이 참여한 서울을 제외하고서도, 의주 3만, 강화읍 약 2만, 함천 삼가 1만, 선천 8천, 삭주군 대관 8천, 선천읍 6천, 순천읍 5천, 명천군, 화대 5천 등 대규모의 시위가 많았다.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군경의 발포로 인한 희생자 총수는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사망 7509명, 부상 15,961명에 이르나 일제 자료에는 사망 405명, 부상 903명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적 여론과 군대의 비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찍이 우리 동포들이 정착하여 개척한 만주 간도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지역, 하와이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서재필 등은 4월 14일부터 16일의 3일간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일본은 야만적인 무단통치로서 한국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정치’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3·1운동이 열어놓은 자유의 공간에서 국내의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형평운동·어린이운동·여성운동 등 근대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독립

운동과 더불어 노동자·천민·여성·어린이 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진정한 민족공동체로의 발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였다.

또한 만주와 노령 연해주에서는 40여 개의 독립군 단체들이 편성되어 수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며 국내 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참여하였다.

3·1운동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민주공화정의 기틀을 새롭게 놓게 되었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3·1운동

**【소항목】** 제1차 대전의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 제1차 대전의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3·1운동의 발발
광무(고종)황제 승하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의의

**【정의】** 파리강화회의는 1914년부터 1918년 11월까지 4년간 주로 유럽 열강들 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쟁에 대한 책임과 유럽 각국의 영토 조정, 전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19년 1월부터 1920년 1월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일련의 국제회의로서, 3·1운동 발발의 한 요인이 되었다.

**【원인·배경】** 1914년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가 동맹한 동맹국(주축국) 측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등의 연합국 사이에 일어난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연합국측의 승리로 끝났다.

**【전개】** 전후처리와 군비축소 및 국제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 베르사이유궁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주도권은 연합국(승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동맹국(패전국)은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 회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5개국이 주축이 되었으나, 일본과 이탈리아가 빠지고 영국[로이드 조지(Lloyd George) 수상], 프랑스[조지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대통령], 미국[토마스 윌슨(Thomas W. Wilson) 대통령] 세 나라가 회의를 주도하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제문제를 풀어나갈 원칙으로 14개 조항(The Fourteen Points)을 제시하였다. 공개외교, 공해에서의 해양의 자유, 무역조건의 평등화, 군비축소, 식민지나 영토문제는 당해 주민의 이해에 따라 해결, 러시아는 자신의 체제를 가질 권리, 벨기에에서 독일군 철수,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 이탈리아 국경 민족구분성에 따를 것, 합스부르크 제국 안의 여러 민족 자치정부 가질 권리, 발칸반도에서 미군 철수할 것, 투르크의 주권과 영토 보존할 것, 폴란드의 독립, 국제평화기구 창설 등이 강조되었다. 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National Self-Determination)와 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 원칙이었다. 그리하여 패전국에 대한 무배상, 무병합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전쟁의 피해가 큰 당사국의 반대로 패전국에 대하여 가혹한 배상과 영토 상실의 제재를 가했다.

약 5개월에 걸쳐 기본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얻어진 원칙과 약속에 따라, 패전국과

차례로 강화조약(講和條約)이 체결되었다.

상해의 신한청년단은 김규식을 한민족 대표로 파리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김규식은 1919년 3월 31일 파리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해 4월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를 외무총장과 평화회의 대한민위원 겸 파리위원으로 임명하여 주파리위원부 위원으로 활동토록 하였다. 그는 독립공고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하고 각국 대표단과 접촉하여 한국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열강들의 외면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1920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는 파리위원부 부위원장 이관용(李灌鎔)과 조소앙(趙素昂)이 대표로 참가하여, 한국독립 승인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8월 김규식이 미국으로 떠난 후 이관용이 위원장 대리, 황기환(黃己煥)이 서기장이 되어 위원부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자유한국』 등의 책자를 영문·불문으로 인쇄 배포하는 한편, 181종의 유럽 신문에 한국에 관한 기사를 517회에 걸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유럽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유럽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데 공헌하였다.

**【의의】** 3·1운동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창과 파리평화회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국제사회는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나 3·1운동은 그 자체로서 인류양심과 세계평화를 위한 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핵심어】** 파리강화회의/베르사이유조약/민족자결주의/파리 구미위원부/김규식

**【참고문헌】**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네이버 백과사전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I(역사비평사, 1995);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집문당, 1982); 신재홍,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미와의 관계」, 『한국사론』 10(국사편찬위원회, 1981).

**【사진자료】** 137.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축하하는 뉴욕시민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3·1운동

**【소항목】** 광무(고종)황제의 승하

제1차 대전의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3·1운동의 발발
● 광무(고종)황제 승하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의의

**【정의】** 일제에 의해 강제퇴위되어 있으면서도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던 광무(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1일 갑작스럽게 승하하여 3월 3일 국장이 예정됨으로써 3·1운동 발발과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일

**【배경】** 광무황제 고종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황제 위에서 강제로 물러나 덕수궁에서 일제의 감시 속에 유폐되다시피 하여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광무 황제는 절치부심하며 비밀리에 각국 황제와 대통령에게 일본의 부당한 국권침탈에 동정과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 유생들에게 의병을 촉구하는 밀지를 보냈다. 그러나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 당했고, 의병운동은 1915년을 고비로 거의 소멸되었다. 이런 속에서 일본은 순종의 아들 영친왕 이은(李垕)을 일본 왕실의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 方子)와 정략결혼을 추진했다. 그녀는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梨本宮 守正) 왕의 첫 왕녀였다. 이들의 결혼 계획은 1918년 12월 5일 일본 왕이 승인하여 1919년 1월 25일로 혼인식이 결정되어 있었다.

1919년 1월 19일 영친왕 이은의 혼인식 참관차 한국의 황실에서 순종의 어사(御使)로서 이왕직 장관 민병석과 왕비의 어사로서 윤덕영, 덕수궁 광무황제의 어사로서 조민희, 다나카(田中) 서무과장 등이 열차로 일본을 향해 남대문역을 떠났다.

**【경과】** 1919년 1월 21일 이왕직 전의(典醫) 김형배(金滢培), 왕실 축탁의 신강일형(神岡一亨)과 안상호(安商浩) 세 의사가 광무황제의 갑작스런 발병에 따른 병세경과에 대해 진단서 형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1월 21일 새벽 1시 45분 돌연 발병하여 6시 35분까지 십수차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는 중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튿날인 1월 22일 조선총독부는 광무황제가 1919년 1월 21일 오전 1시 35분에 뇌일혈을 일으켜 중태에 빠져 22일 오전 6시에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독부 어용신문인 『매일신보』는 이 사실을 호외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은 1월 21일 새벽 발병 후 얼마 있지 않아 사망했다. 총독부는 광무황제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채 나흘 앞으로 예정된 영친왕과 일본 왕실의 방자의 결혼식을 예정대

로 진행하고 이후에 사망 사실을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을 연기하고 사망사실을 발표할 것인가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결국 광무황제의 사망사실을 결혼식 이후까지 비밀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할 경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혼식을 연기하고 사망을 하루 늦은 시점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정부는 황제 서거 5일 후인 1월 27일 광무황제의 장례를 국장으로 할 것을 발표하고 구훈련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장의행렬은 덕수궁을 출발하여 황금정(현 을지로)을 통해 훈련원으로 이동하게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장례일은 서거 42일째 날인 3월 3일로 결정되었다.

**【결과·영향】** 광무황제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시중에는 윤덕영, 한상학 등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유포되었다. 독살설은 망국의 설움에 겹쳐 민족감정을 증폭시켰다. 지방 마을마다 망곡단이 설치되었고, 국장 며칠 전부터 광무황제의 영전에 문상하고 국장에 참관하려는 지방의 인사들 약 20만 이상이 서울에 모여들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절호의 기회였다.

천도교 일각에서는 이종일을 중심으로 1917년부터 대중봉기론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약소국의 독립 움직임, 전후 군국주의적 전제국가의 몰락과 민주주의 국가의 승리 등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던 차에 독립운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천도교, 장로교 및 감리교, 일부 불교 혁신세력 대표자 33인이 민족대표를 구성하고 3월 1일을 기해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다.

**【의의】**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 시해, 강제퇴위 및 국권의 상실을 당하면서 국권회복에 절치부심해 온 광무황제는 결국 돌연한 죽음과 독살설의 유포로써 3·1운동 발발에 결정적인 계기를 조성했다.

**【핵심어】** 3·1운동/광무황제/고종/독살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관보』; 『매일신보』; 혼다 켄스쿠, 서석연 역, 『비련의 황태자비 이방자』(범우사, 1989); 이정은, 『유관순-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사진자료】** 138. 고종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국민들

139. 19190303 고종황제 장례식 행렬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3·1운동

**【소항목】** 3·1운동의 발발(2·8독립선언, 민족대표33인)

제1차대전의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 3·1운동의 발발
광무(고종)황제 승하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의의

**【정의】** 1919년 3월 1일 시작되어 4월 말까지 국내외에서 지속된 우리 항일독립운동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

**【배경】** 1910년 8월 29일 이래 일본 조선총독부 아래 무단통치라는 폭압적 정치가 10년간 확고하게 구축되어 왔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전면 개편하여 전통적인 향촌공동체를 해체하고 면을 강화하여 수직적·일원적·일방적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결사와 집회,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탄압되었으며, 식민지 노예교육이 시행되고, 일본의 통치에 저항할 경우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위 ‘법과 규칙’으로 규제·단속하고, 밀정을 풀어 감시하였으며, 형벌로 강제하였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終戰) 국면에 들자 독일·오스트리아·터키·러시아 등의 군국주의적 전제국가의 붕괴, 러시아 혁명 등으로 머지않아 제국주의가 퇴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1919년 1월 21일 새벽 광무황제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시중에는 일제가 독살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 전 국민이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여 3월 3일로 예정된 국장에 참관하려 약 20만 인파가 서울로 모여들었다. 종교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민족대표들이 항일독립운동의 거사일을 3월 1일로 잡음으로써,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인사들이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참여한 후 지방으로 돌아가 시위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찰스 알 크레인(Charles R. Crane)이 미국 대통령 특사로 중국에 방문했다. 여운형은 크레인 특사를 방문하여 한국대표의 회의참석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한독립에 관한 진정서」를 파리평화회의 의장과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전달해 주도록 크레인 특사에게 부탁하였으며, 1919년 2월 1일 김규식을 한국대표로 파리로 파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와 일본, 만주 및 연해주에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 여론을 일으킬 독립운동을 협의하였다. 이리하여 2월 8일 동경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문」이 발표되어 국내 3·1운동 준비를 본격화되는 데 큰 자극이 되었다.

한편 연해주의 독립운동단체인 전로한족회는 1919년 2월 말 대한국민의회로 개편되면서 윤해와 고만일을 노령 대표로서 파리에 파견하였다.

**【전개】** 1919년 1월 20일경 권동진·오세창·최린 등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와 운동의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3대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2월 상순부터 독립선언과 민족 대연합전선 형성을 위해 타 종교와 접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천도교의 독립운동 준비에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장·감리교회 중심의 기독교 측과 전문학교 대표자들이 중심이 된 학생단 측이 합류하여 대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후 한용운 등 불교계 혁신세력도 참여하였으며, 학생단은 제1차 독립시위운동에 참여하되 그 후 별도의 학생단 시위를 계획하기로 하였다. 유림 측과도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하였다. 일본정부·일본 귀족원·중의원·조선총독부에 보내는 「독립통고서」, 파리평화회의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보내는 「독립청원서」도 기초하였다. 한편, 독립선언서의 서명 주체는 천도교 측에서 손병희 등 15인, 기독교 측에서 이승훈·신석구·이필주 등 16인, 불교계에서 한용운과 백용성 2인 해서 33인 조선민족대표단을 구성하였다. 거사일자는 3월 3일 광무(고종) 황제 국장에 참관하려 인파가 몰려든 상황을 활용하고자 3월 1일로 결정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서울 수송동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천도교·기독교·불교 및 학생단이 나누어 전국에 사전 배포되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 낭독 후에 동서로 나뉘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에 나섰다. 「조선독립신문」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지하신문과 격문들이 시가에 배포되었다.

3월 5일 서울역 앞에서는 1만여 명의 학생 시민이 모여 제2차 대규모 시위운동을 벌였다. 일제 당국은 탄압과 휴교 조치를 내렸다. 공장 노동자, 고용인, 행상인도 시위운동에 나섰다. 상인들은 상가를 철시함으로써 이에 호응하였다. 3월 중순 이후 시위운동은 서울과 도시에서 지방 읍면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그 양상은 더욱 격렬화되었다.

**【결과】**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만세시위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 되었다.

**【의의】**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체제가 10년에 걸쳐 강고하게 구축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 시점에서 오직 비무장의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합쳐져서 일으킨 민족 최대 독립운동이었다.

**【핵심어】** 3·1운동/민족대표/무단통치/일본제국주의/독립선언서

**【참고문헌】** 尹炳奭, 『三一運動史』(정음사, 19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 상·하(198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198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2001); 이정은·김정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사진자료】** 140. 2.8독립선언에 참여하여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일본 유학생들  
141. 3.1 독립선언서  
142.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갖은 태화관  
143. 파고다 공원 앞에서 경계령을 펴는 일본군  
144. 광화문 비각에 모인 시위군중  
145. 경운궁 대안문 앞의 시위군중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3·1운동

**【소항목】**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의의

제1차 대전의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3·1운동의 발발
광무(고종)황제 승하	●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의의

**【정의】**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만세시위운동은 전국으로 전파되었고, 해외에서도 한국 교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나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사건

**【배경】** 1919년 3월 1일 천도교,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의 기독교, 불교 혁신세력이 중심이 되어 33인 민족대표를 구성하고 독립선언을 했다.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 시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대중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양 등 지방 7개 도시에서 동시 시위에 들어갔다. 광무황제 국장에 참관하러 서울에 모여 들었던 지방 인사들이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의사 표명 시위운동에 큰 감명을 받고 지방으로 시위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확산과 전개】** 서울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시작된 3월 1일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4개 도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이미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화되었기 때문이었다. 3월 2일에는 함흥·해주·수안·황주·중화·강서·대동 등지에서 일어났고, 뒤이어 3월 3일에는 예산·개성·사리원·수안(제2차)·송림·곡산·통천·옥구·성천·양덕·용천 등지에서 일어났다. 강원도에서는 3월 10일 철원에서 최초의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 전북에서는 3월 3일 전주·군산·이리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3월 4일 옥구에서 최초의 시위가 일어났다. 전남은 3월 3일 목포·광양·구례·순천·여수 등지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3월 10일 최초의 시위가 광주에서 학생들에 의해 일어났다. 경남은 3월 3일 부산과 마산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3월 11일 부산진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경북 대구에서는 3월 8일, 함북 성진에서는 3월 10일, 충북 괴산에서는 3월 19일 각각 최초의 시위가 일어나 도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3월 중순경에 들어서서는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은 최소한 4월 말까지 두 달간 계속되었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매일 1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났으며, 시위운동의 정점을 이룬 4월 1일은 하루 동안 67회의 시위가 일어났다. 3월 27일과 4월 2·3일은 50회 이상 일어났으며, 적어도 30회 이상 일어난 날만 15일이었다. 참여인원으로 보면, 수십만이 참여한 서울을 제외하고서도, 의주 3만, 강화읍

약 2만, 합천 삼가 1만, 선천 8천, 삭주군 대관 8천, 선천읍 6천, 순천읍 5천, 명천군, 화대 5천 등 대규모의 시위가 많았다. 시위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시가지 대로상의 만세시위, 시골 장터에서 행한 장터 만세시위, 야간 산상의 봉화시위, 한 장소에서의 1회성 만세시위, 같은 장소에서 몇 차례 거듭된 시위운동, 인근 지역을 찾아다니며 행한 만세꾼들의 시위운동, 지역과 지역이 릴레이로 이어 받으며 행한 릴레이 시위운동, 일제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시신을 떠메고 행한 상여시위, 상점 문을 걸어 잠근 상인들의 철시 시위, 학생들의 동맹 휴학시위, 노동자들의 파업, 광부들의 순사주재소 습격시위, 어린이 시위, 거지들의 시위, 기생들의 시위 등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 계층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행한 총 시위 회수는 2,000회 이상, 연인원 200만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군경의 발포로 인한 사상자 총 수는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사망 7509명, 부상 15,961명에 이르나 일제 자료에는 사망 405명, 부상 903명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적 여론과 군대의 비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의 3·1운동】** 일찍이 우리 동포들이 정착하여 개척한 만주 간도지역에서는 3월 12일 길림성(吉林省) 유하현(柳河縣) 삼원보와 통화현(通化縣) 금구에서 독립축하회를 열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북간도에서는 3월 13일 용정 서전대야(西甸大野) 일본 영사관 옆에 한인 약 1만 여 명이 모여 독립축하식을 거행하고 시가행진을 하다 일제 계략으로 맹부덕의 중국 군대의 집중사격을 받아 18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밖에도 백초구, 훈춘, 봉천 등 만주의 각 지역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연해주에서는 국내 3·1운동 발발 소식이 전해지자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민국민회가 주도하여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11개 국 영사관과 러시아 당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자동차를 앞세우고 시위운동을 벌였다. 우수리스크·라즈돌리노예·늑둔도 등지에서 시위운동이 이어졌다. 미국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에서는 안창호가 한인들에게 피흘릴 각오를 할 것이며, 미국의 여론을 일으키고, 재정공급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재필 등은 4월 14일부터 16일의 3일간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였다. 140여 명의 한인 대표와 필라델피아 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저명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의의】** 3·1운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야만적인 무단통치로써 한국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 민족은 최소한의 민족적 활동공간으로서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확보하여 민족 보존을 위한 민족문화운동과 민족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만주와 노령 연해주에서는 40여 개의 독립군 단체들이 편성되어 수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며 국

내 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참여하였다. 3·1운동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은 국내의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형평운동·어린이운동·여성운동 등 근대사회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으로 고취된 의식과 고양된 민권 평등사상은 이러한 농민, 노동자·천민·여성·어린이 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진정한 민족공동체로의 발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였다.

비무장 민중에 의한 3·1운동은 세계 피압박 민족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용기를 주어 이후 중국의 5·4운동, 인도와 이집트, 인도차이나, 필리핀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각성과 영향을 주었다.

**【핵심어】** 3·1운동/3·1운동의 전과/해외동포 3·1운동/피압박민족 독립운동

**【참고문헌】** 尹炳旻, 『三一運動史』(정음사, 19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 상·하(198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198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 (2001); 이정은·김정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사진자료】** 146. 체포되어 가는 3.1 만세시위자들

147. 19190416 필라델피아에서 독립만세 행진을 벌이는 미주동포들

148. 19190313 북간도 용정 서전대야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문화운동

●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일제의 한민족 동화 및 민족말살정책에 대항하여 국어, 국사를 중심으로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보급운동

**【배경】**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영국의 인도 지배와 같이 간접통치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여 제2의 하등 국민으로 동화 편입하여 지배하는 직접지배정책이었다. 일제는 1911년 10월 「교육에 관한 칙어」를 조선총독에게 내려 식민지 교육의 근간을 삼도록 하고, 일본어와 일본 창가를 교육시켰다. 또한 10년간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916년 발족한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를 1925년 조선사편수회로 확대강화하여 타율성, 사대주의 등의 부정적인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27권의 『조선사』를 편찬하고, 각급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또한 개발을 빌미로 고적을 파괴하고 고분을 도굴하였으며, 문화재를 반출했다.

**【전개】** 3·1운동 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한글로 발행되어 한글 보급에 이바지하게 되었고, 1921년 조선어연구회가 발족하여 국어연구와 함께 강습회, 강연회, 잡지 『한글』 간행 등을 통하여 국어연구와 보급에 노력하였다. 이 단체를 이은 조선어학회는 사립 학교에 국어교재 보급, 순화강연, 맞춤법 통일안 제정, 학생들의 브·나로드운동과 연대하여 한글강습회운동을 벌였으며, 『우리말 큰사전』 편찬작업을 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해산시키고 회원들을 투옥했다.(1942년 조선어학회사건)

한국의 역사는 고대부터 중국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대주의로 점철되어 있고, 일본은 고대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일본의 한국사 왜곡에 대항하여 박은식은 『한국통사(韓國痛史)』,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정과 한민족의 독립투쟁을 서술하고 나라가 없어도 ‘혼’인 역사가 살아있으면 죽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통하여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독립을 쟁취할 것을 강조하여 민족주의사학을 확립하였다. 이후 정인보, 장도빈, 안재홍, 문일평에 의해 민족주의 사학연구가 이어졌다.

3·1운동이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나자 퇴폐와 허무를 주제로 한 퇴폐주의문학이 동인지 『폐허(廢墟)』(1920) 중심으로 나타났고, 염세적이고 현실도피적인 낭만주의문학이 『백조』(1922)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1920년대 중반에 와서 병약하고 감상적인 문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족적인 문학이 새롭게 나타났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심훈의 시 「통곡 속에서」와 소설 『상록수』가 그러한 작품이다. 또 운동주의 「별을 헤는 밤」 등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숨어서 쓴 시를 8·15 이후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문학도 일어나 항일문학운동에 한 부분을 이루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천황과 천황의 선조를 신격화한 신도(神道)로써 전체주의적 국가이념으로 삼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해왔다. 개항 이후 조선에 신도의 침투를 시작하였으며, 병탄 후에는 조선총독부가 문화침략 또는 민족동화정책으로서 한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기독교계 학교로서 이에 반발하는 학교는 폐교하고 일부는 순응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교단차원에서 굴복하고 수용하는 일이 나타나자 교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한편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청원 또는 경고하는 신사참배 강요금지 청원운동을 벌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역자 또는 신자들이 조직적 또는 개인적으로 신사참배거부운동을 벌였다. 1940년 일제는 「조선기독교 불온분자 일제검거령」 등을 통해 약 2,000명을 투옥하였으며, 200여 교회를 폐쇄했고 조용학·주기철 등 50여 명이 순교했다.

**【핵심어】** 문화운동/민족문화수호운동/국어/조선어학회/국사/민족사학/문학운동/신사참배거부운동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한글학회, 1971); 한영우, 「민족사학의 성립과 전개」, 『국사관 논총』 3(1989);李明宰, 『植民地時代文學의 特性研究』(慶熙大大學校博士論文, 1983); 金治洙, 「植民地時代의 文學」, 『植民地時代의 文學』(도서출판 깊은 샘, 1980);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基督教文社, 1971); 김승태 편저,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한국독립운동사사전』(총론편)(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 【사진자료】** 149. 19190902 경성역에 도착, 총독부로 가기 위해 마차에 오른 사이트  
총독 부부  
150. 19261001 단성사에서 개봉한 나운규 아리랑  
151. 식민사학에 저항하여 민족주의 사학을 확립한 박은식과 신채호

152. 19350104 온양에서 제1회 독회를 마친 조선어학외내의 조선표준어  
사정위원회 회원들
153. 동아일보 브나르도운동 포스터
154. 천도교 개벽사에서 발간한 월간 종합잡지 개벽
155. 수양동우회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언론운동

문화운동	농민운동
●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일본의 부당한 국권침탈과 언론탄압에 항의하고, 주권회복과 자주독립, 지식보급과 의식계발, 민족문화 창달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강화하기 위해 한말부터 일제강점 시기까지 신문 등 언론기관 또는 지하신문을 통해 전개한 민족운동

**【배경】**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로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온 박영효 일행이 국민 계몽을 위해 1883년 10월 31일 창간한 정부기관지였다. 1884년 개화파의 갑신정변 실패는 국민대중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다. 이 때문에 갑신정변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미국에 망명 중이던 서재필은 1896년 개화파 정부로부터 입각요청을 받아 입각 대신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이후 신문은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 및 민족문화운동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전개】**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창간 때부터 1899년 12월 4일 폐간할 때까지 논설과 보도를 통하여 근대국가와 근대사회에 필요한 국민의 의식과 사상의 변혁, 한국에 대한 열강의 침략 간섭정책과 이권침탈 폭로·비판, 국민주권사상·민주주의 및 민권 신장, 국문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여론과 공론을 형성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2년 뒤 『미일신문(每日新聞)』(1898.4.9)·『태국신문(帝國新聞)』(1898.8.10)이 한글전용으로, 『황성신문』(1898. 9. 5)이 국한문 혼용 신문으로 창간되었다. 『대한매일신보』(1904.7.18)는 이들보다 늦게 창간되었다.

이들 민족언론은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특히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실질적인 중심기관이 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소유주가 영국인 베텔(Bethell. E. T. 裴說)로 되어 있어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국적인 논설을 써서 항일정신을 고취하였고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의 본거지가 되었다.

일본의 한국 언론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항의하며 언론통제를 강요해 왔으며,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일본 헌병사령부가 직접 검열을 실시하였고, 『태국신문』이 정간 처분되기도 하였다. 검열당한 언론사는 활자를 뒤집어 이른바 '벽돌신문' 기사를 내 보내 항의하였다.

1907년 7월 24일 이완용 내각은 「신문지법」을 공포하였고, 1909년 2월 23일에는 「출판법」을 공포하여 내국인 언론 뿐 아니라 『대한매일신보』 같은 외국인 언론도 탄압하였다.

1910년 8월 한일병합 후 민족언론은 다 폐간되었고, 『대한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가 인수하여 '대한'을 떼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로 만들었다. 이후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10년간은 한국 언론사의 암흑기였다.

3·1운동 일어나자 국내에서는 「조선독립신문」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지하신문이 나왔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이 발행되었으며,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1924년에 『시대일보』가 창간되어 총독부의 빈번한 압수와 정간, 때로는 언론인들이 투옥당하면서 발행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언론단체 무명회(無名會)와 철필구락부(鐵筆俱樂部)가 결성되어 언론 집회압박탄핵회, 전조선기자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공동으로 항일운동을 펼쳤다. 사상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이 항일 공동전선을 펴는 경우도 있었고, 독립의 방안에 관해서 의견의 대립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는 총독부의 탄압이 가중되면서 신문의 비판기능이 점차 위축되었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에는 전시체제가 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되었다. 이 때문에 신문은 언론의 사명보다 수지타산과 상업성을 위해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보도에 치중하게 되었다.

신문이 정면에서 항일언론을 펴기가 어려워지자 1920년대 후반부터는 한글보급운동과 이순신장군 유적보존운동, 농촌계몽운동같이 우회적으로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사업을 벌였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언론인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신문을 발행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해조신문(海朝新聞)』을 비롯하여 『대동공보(大東共報)』·『대양보(大洋報)』·『권업신문(勸業新聞)』이 발간되었다. 미주 하와이에서 『신조신문』(1904.3)을 시초로 그 후 『한인시사』·『한인합성신보』·『신한국보』,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에서 『공립신보』(1905.11.20)·『대동공보』·『신한민보』 등이 발행되었다.

1936년 8월 9일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우승했을 때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손기정의 가슴에 부착하였던 입장기를 말소하여 보도했다. 총독부는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대해 무기정간처분을 내렸다.

1940년에 들어와 총독부는 조선·동아에 대해 자진폐간을 강요하고 신문용지 배급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결국 1940년 8월 10일 두 신문은 폐간계를 제출했다.

**【의의】**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 총체적 불행의 극복은 국민 전체의 결집된 힘을 필요로

하였다. 한말 이래 언론은 개화와 근대화, 자주독립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결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핵심어】** 언론/항일언론운동/독립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문/매일신보/조선독립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조선중앙일보/일장기 말소사건

**【참고문헌】** 신용하, 「獨立新聞의 創刊과 그 啓蒙的 役割」, 『한국사론』 2(1975); 이광린, 「徐載弼의 獨立新聞 간행에 대하여」, 『진단학보』 39(1975); 이광린·김학동·유재천, 『大韓 每日申報研究』(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6); 정진석, 『大韓每日申報와 裴說』(나남, 1987); 최기영, 「光武新聞紙法 研究」, 『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일조각, 1991); 정진석, 「언론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사진자료】** 156. 19260401 강제 폐간될 다시 개벽사 편집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교육운동(민립대 설립운동 포함)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민족교육운동은 독립운동 단체, 임시정부, 사상·종교단체 등이 국내와 해외 교민사회에서 근대 자주독립국가 수립과 식민지 지배 극복을 위하여 행한 교육 일체를 말한다.

**【배경】** 서세동점의 세계사 대변동 시대에 대한제국이 낙후되어 국권이 침탈되자 이전의 유교사상과 문장수련 교육으로는 국권을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서양 근대 학문과 지식을 보급하고, 애국사상을 고취하고자 전개한 교육구국운동

**【전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과 광무황제 강제퇴위, 군대해산 등으로 국권이 심각하게 위협에 처하자 전국에서 지방관, 지역 유지, 종교단체 등이 주도한 사립학교 설립 붐이 일어났다. 민간 차원의 교육운동 추진기구로서 기호흥학회를 중심으로 서우학회·한북흥학회·호남학회·교남교육회·관동학회 등의 학회들이 조직되어 학교설립, 기관지 발간, 강습회·강연회 등을 통하여 지식보급과 민족의 자각을 고양시켰다. 특히 서북지방에서 교육열풍이 강했다. 대표적인 사립학교로 평북 선천의 기독교계 신성학교, 정주 이승훈의 오산학교, 평양 승실학교와 안창호의 대성학교, 안악 양산학교(楊山學校)가 있었다. 특히 안악에서는 1906년에 최광옥(崔光玉) 등이 중심이 되어 면학회(勉學會)를 조직하여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식인과 작가들은 민족주체성을 살리는 교과서와 위인전·역사서 등을 저술하였다. 현채(玄采)의 『유년필독』, 장지연(張志淵)의 『대한지리』, 정인평(鄭寅平)의 『대한역사』·『애국론』 등의 교과서와 「을지문덕전」·「이순신전」·「동국명장전 東國名將傳」 등을 비롯하여, 『태서신서 泰西新西』·『파란말년전사 波蘭末年戰史』·『미국독립사』·『월남망국사 越南亡國史』·『세계식민사 世界殖民主』 등은 사립학교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서, 교육구국운동의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하였다.

일제는 1911년 10월의 「사립학교규칙」 제정과 1915년의 사립학교규칙의 개정을 통해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관립으로 흡수하여 식민지 교육기관화하려 했다. 이에 사립학교들은 학교를 통합하여 대응하거나,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서당으로 가 민족교육의 장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1910년대 10년 동안 식민지 교육체제하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민족교육이 민족주체성을 가진 세대를 육성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었다.

1920년 4월 배화학교 기숙사 사감 차미리사(車美理士)와 몇몇 여성들이 여성교육운동을 위하여 조선여자교육회를 조직하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야학 운영, 순회강연과, 각 지방에 여성야학을 설립하였다.

한말 국채보상운동 때 모금된 돈 6백만 원으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총독부에서 민립대학기성회를 끝내 인가하지 않아 무위로 끝났다. 3·1운동 이후 다시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에 민립대학기성회 지방부가 조직되었으며 만주와 하와이에까지 조직되어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유지 및 면장, 군수 등 관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하여 이들이 대학설립운동에 참여함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모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짐으로써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1921년 설립된 조선어연구회는 한글강습회와 강연회, 잡지 발간 등을 통하여 우리말과 글을 보존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조선일보사에서는 1926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 아래 여름방학에 귀향하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조선어학회와 함께 1931년부터 「브·나로드운동」을 주도하여 문맹퇴치운동을 하였다.

1906년 8월에 이상설이 북간도 용정에 설립한 「서전서숙」은 국외 민족교육학교의 효시가 되었다. 용정의 명동촌을 개척한 김약연은 1908년 명동학교를 세웠고, 1910년 명동중학교와 1911년 명동여학교를 병설하여 많은 독립군과 독립지사를 길러내었다.

국외 무관학교 설립운동은 독립군지기건설운동과 연관하여 추진되었다. 1911년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에 신흥강습소가 세워졌다. 이후 합니하(哈泥河)로 옮겨 신흥학교로, 3·1운동 후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여 1919년 5월에 신흥무관학교로 확대하게 되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민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목릉현 밀산부 봉밀산에 미개간지 10만평을 사들여 한흥동(韓興洞)이라는 한인촌을 개척하고 이곳에 송무학교(崇武學校)를 설립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령지역에서는 1907년 연해주 스찬지역에서 대한청년교육회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1913년 대한청년교육연합회로 발전, 24개의 지방회가 조직되어 각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는 의연금을 모금하여 계동학교·세동학교·신동학교를 운영하다가 1909년 한민학교(韓民學校)를 출범시켰다. 이외에도 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에서는 16개 처에 지회를 두고 각처에 학교나 야학을 설립하여 한인들을 교육하였다. 1911년에 조직된 권업회는 13개 처에 지부를 두고, 지부를 통하여 학교나 야학을 설치하여 민족교육을 실시

하였다.

미주사회에서는 1905년 4월 15일에 공립협회가 결성되면서 하와이에 대한공립소학교, 노동공립학교, 그리고 클래어몬트지방의 학생양성소 등을 설립, 운영하였다.

중국관내지역에서는 상해 및 북경, 남경 등지로 몰려드는 한인 청년들을 위하여 동제사에서 1913년 12월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설립하였고, 1년 6개월간 영어반과 중국어반의 어학과 박은식·신채호·문일평·홍명희 등 당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역사를 가르쳤다. 상해의 대한교민단에서 운영한 인성학교도 철저한 민족정신교육과 전문 고등과정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운영했다.

1920년대 이후에는 각 독립운동계가 독자적인 군관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의 군관학교에 학생들을 위탁하여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와 노병회, 의열단 등에서는 대원을 파견하여 보정군관학교·전진군수학교·남경해군학교·오송상선학교·호북강무당·운남강무당·항주체육학교·귀주강무당, 그리고 황포군관학교·낙양군관학교 등지에서 군사훈련교육을 받았다.

**【의의】** 근 반세기간 국내외에서 갖은 형태로 전개된 교육운동은 3·1운동과 그 이후의 끈질긴 독립운동, 광복 후 분단과 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기적의 원동력이었다.

**【핵심어】** 교육운동/민족교육운동/사립학교/민립대학/군사학교/해외동포 민족교육

**【참고문헌】**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어문각, 1967); 강동진, 「일제지배하의 노동야학」, 『역사학보』 46(1970); 박영석, 「한인소년병학교연구-헤스팅스 한인소년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987); 서평일, 「일제하 북간도 한인들의 민족주의 교육운동」, 『한국교육의 재인식』(한신대학 출판부, 1988); 이명화, 「1920년대 만주지방에서의 민족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988); 이명화, 「노령지방에서의 한인민족주의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독립기념관 한국 독립 운동사연구소, 1989);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1990);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문학과 지성사, 1994).

**【사진자료】** 157. 19230330 민립대학기성회 창립총회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학생운동(광주학생운동 포함)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일제하 학생들에 의하여 조직, 진행된 독립운동

**【배경】** 한국의 20세기 전반기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식민지화에서 자주독립의 새 국가 건설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했던 시기였다. 1880년대 신식학교가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여 근대적 의식과 지식을 가진 학생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근대국가 수립과 자주독립의 시대적 과제에 사명감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이에 부응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 소식이 들리자 일본 도쿄의 한국 유학생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고 1919년 2월 8일 YMCA회관에 모여 2·8독립선언을 하였다. 이것이 3·1운동의 예광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새로운 변혁의 동력이 된 학생운동의 본격적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다.

1919년 1월말 2월 초 서울시내 전문학교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광무황제의 국장에 맞추어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했다. 후에 이들의 계획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운동에 합류하여 운동의 일원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민족대표들이 당초의 파고다공원 독립선언 계획을 바꾸어 3월 1일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하자 파고다 공원에 모여 있던 각급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이끌었다. 학생들의 시위 선도로 수십만 서울시민과 광무황제 국장에 참여한 지방 군중이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국에 확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3월 5일에는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남대문역(현 서울역) 앞에 집결하여 학생단 독립만세시위를 열었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전파하고 초기의 지방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대다수 지방시위는 지방 유지와 농민층이 중심이 되었다.

3·1운동 직전 조선총독부는 전국 지방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면장의 90%를 친일 면장으로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사회 대부분은 일제의 통제하에 완전히 장악되게 되었다. 그 이후 3·1운동과 같은 농민 중심의 지방사회 저항은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혁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학생층이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학생층은 이후 해외 무장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참여, 국내의 언론, 출판, 문화, 농민, 노동운동 등 각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하 독립운동의 방편으로서 사회주의사상 연구와 지하조직에 의한 독립운동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학생들 사이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조직되었고 2·8선언이나 3·1운동에 가담하였던 학생들이 이러한 과학연구회에 참여, 지도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학생들은 한글보급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인 브나로드운동(‘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로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1926년 순종이 승하하고 국장을 치르는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으나 일제의 경계와 예비 검속으로 서울에서만 일어나고 더 이상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6·10만세시위는 이듬해인 1927년 좌우합작의 최대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 성립의 바탕이 되었다.

학생들은 한일 학생 간 교육 불평등, 일본인 교사의 민족차별 언행, 식민주의 교육의 시정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통한 학내 투쟁을 전개했다. 동맹휴교는 각급 학교로 퍼졌고, 사립 학교보다 식민지교육의 모순이 더 직접적인 공립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한일 학생들 간에 시비가 일제 관헌의 편파적인 처사로 증폭되어 광주학생운동으로 발전했다.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은 전국 학생운동으로 퍼져갔다.

**【결과】** 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 광복의 그날까지 식민지하 한국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동력이자 중심운동으로 등장했다.

**【의의】** 일제 식민지 교육체제 속에서도 학생층은 민족주체적인 의식과 자주독립의 근대 한국 건설의 사명의식을 갖고 성장하여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학생층은 광복 이후 가치관의 굴절이나 전도현상이 심화된 시대상황에서 순수한 정의감, 진실에 대한 열정, 이웃과 동포에 대한 헌신 등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며 4·19혁명을 비롯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한국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핵심어】** 학생운동/3·1운동/6·10만세/광주학생운동/동맹휴학/민주화운동

**【참고문헌】** 金成植, 「日帝下韓國學生獨立運動史」(正音社, 1974); 鄭世鉉,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一志社, 1975); 역사문제연구소, 「한국학생운동의 역할과 새로운 모색」, 『역사비평』 39(1997년 겨울).

**【사진자료】** 158. 광주학생운동의 지도적 결사였던 성진회 결성 기념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여성운동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불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일본의 국권병탄과 식민지 통치의 억압, 일본의 전체주의적 군사문화가 가진 남성우월주의, 조선 전래의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잔존이 가져온 이중삼중의 억압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여성들이 전개한 조직적인 남녀평등운동이자 구국운동

**【배경】** 전통사회의 한국여성들은 일부종사(一夫從事)와 칠거지악, 재가(再嫁)의 금지, 내외법(內外法) 등의 가부장적 유교윤리 속에서 다만 지아비를 하늘같이 섬기고, 자녀를 낳아 가문을 지키는 존재였으며, 일체의 사회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자아실현 기회가 없었다. 조선 후기 서학(천주교)이 들어오면서 ‘천주 앞에서의 인간 평등’ 가치관이, 또한 동학사상의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혁명적 인간관으로 인해, 그리고 한말 개신교와 함께 전파된 여성교육과 민주주의사상이 여성의 자유와 평등의식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896년에 설립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근대적 여성상을 형성하는 데 공헌하였다.

여기에 망국이라는 민족 총체적 불행의 극복은 국민 전체의 결집된 힘을 필요로 하였다. 여기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으며, 여성들의 지지와 협조 없이 일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에 처하여 여성들은 남성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과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거나 스스로 찾아갔다.

**【전개】** 최초의 여성들에 의한 여성운동은 1898년 서울 북촌(北村)의 양반 부녀들 중심으로 조직된 찬양회가 관립여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찬양회에서는 순성여학교(順成女學校)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회원들은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하였다. 그해 10월 찬양회에서는 관립여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황제의 승낙을 받았으나, 재정이 부족으로 무산되고 순성여학교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1907년 결성된 진명부인회(進明婦人會)는 신생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해 2월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구국운동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부르짖는 민족의식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국채보상운동은 반지를 헌납하는 등 여성들이 최초로 전개한 사회참여운동이기도 하였다. 1913년에 여교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송죽회(松竹會)는 독립운동자금 등을 하면서 1919년까지 이어졌다.

3·1운동은 여성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여성들도 민족의 일원으로서 시위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당당한 민족의 일원으로 활동할 커다란 기회를 맞았다. 그 후 옥중동지를 돕고 상해임시정부에 자금을 모아 보내는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상해한인의애국부인회와 같은 여성단체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20, 1930년대에 사회주의자들과 '신여성'들, 기독교계 여성들 사이에서 봉건적인 인습으로부터의 여성해방과 근대적인 여권향상을 부르짖었지만, 낭만적인 절규로 치부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여류문인과 미술가들 중에서 '자유연애'를 실천한 예도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불행하게 일생을 마쳤다.

한편, 1923년의 물산장려운동에서는 부인들이 '토산애용부인회'를 발기하는 등 부인들의 호응 속에서 다소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 운동은 기생들에게까지 번져, 이들은 면제의복(棉製衣服)을 입고 접객석에 나오기도 하였다.

1924년에는 급진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받아들인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가 조직되면서 여성해방운동을 위한 여러 단체의 조직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전국에 40여 지부를 설치하고 순회강연·토론·강좌 등을 벌이며 당시의 여성운동에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1920년대에 부인의 계몽을 목적으로 여자기독교청년회(女子基督教青年會)가 나타났는데, 1925년에 이들 단체의 총본부로서 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가 조직되었다.

1927년에는 좌우합작의 신간회(新幹會) 조직을 계기로 여성계에서도 근우회(槿友會)가 결성되었다. 근우회의 행동강령은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 폐지, ②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③ 조혼폐지 및 결혼의 자유, ④ 인신매매 및 공창(公娼)의 폐지, ⑤ 농촌 부녀의 경제적 이익 옹호, ⑥ 부인노동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지불, ⑦ 부인 및 소년의 위험노동 및 야업(夜業) 폐지 등이다. 근우회의 활동은 지속되지 못하고 신간회가 해산된 지 얼마 안 되어 소멸되고 말았다.

1920년대 초반 1만명의 여성노동자 수가 1930년대 말에는 5만여 명에 이르자 부녀자들 사이에서 여성노동운동이 싹터 많은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들이 사상적·조직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남녀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여성노동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우회의 소멸 이후 전시체제하 강력한 탄압으로 여성단체활동이나 여성노동운동이 지속할 수 없었고, 광복되기까지 지하로 숨어야 했다.

**【결과·의의】** 19세기 말엽에서 광복 때까지의 한국여성운동은 한말의 교육과 자선활동 위주의 계몽운동 단계, 한일합병에서 3·1운동 전후까지의 항일구국운동 단계, 1920년대 이후 근우회 활동기의 신문화운동과 근대적 여성운동이 태동 단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 시기 여성운동은 서구의 여성운동처럼 대(對)남성투쟁이 아니라 남성과 협력관계 속의 애국운동의 일환이라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핵심어】** 여성운동/찬양회/진명부인회/송죽회/대한민국애국부인회/상해한인애국부인회/조선여성동우회/근우회/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

**【참고문헌】**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박용옥, 「근우회의 여성운동과 민족운동」, 『한국근대민족주의사연구』(일조각, 1987); 조규태, 「천도교 내수단과 여성운동」, 『여성-역사와 현재-』(국학자료원, 2001); 윤정란, 『한국기독교여성운동의 역사』(국학자료원, 2003).

**【사진자료】** 159. 19270527 근우회 발기회 모임

160.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의열투쟁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불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의열투쟁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통치와 같은 거대한 국가폭력에 대항하여 국내외 여론의 환기와 국면 전환을 목표로 자결 또는 개인 단독 또는 소수 인원으로 일제 기관 폭파, 침략 요인 또는 전쟁 지휘부, 부일배 처단 등 희생을 각오한 장렬한 거사 방식의 투쟁이다.

**【배경】** 조선의 선비전통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의 을사늑약, 1910년 국권병탄 등은 불의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제국이 전쟁 선포 등으로 강력하게 대항하지 못하자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불의에 항거하고, 여론 환기나 국면 전환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직접적 공격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홍만식·민영환·조병세·김봉학·이상철·이명재·송병선·이준·박승환 등 전·현직 관료와 군인들이 기울어가는 국운과 일제의 불의에 비분강개해 하며 잇따라 자결하였고 의협심을 가진 개인과 단체들이 일어나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일어났다.

**【전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사관학교 생도이던 기산도(奇山度)는 을사5적 중의 1인인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을 습격 척살코자 하였고, 1908년 장인환과 전명운은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1909년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침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하였고, 이재명도 매국5적의 우두머리인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또한 1910년의 경술국치 때도 황현·이근주·이학순·김근배 등, 다수의 재야 유생들이 자결로써 항의하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한민족의 열렬한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표시하였으나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고 종식되고 일제는 기만적인 ‘문화정치’로써 민족운동계 지도층 일부를 회유하여 독립운동 전선을 분열시킬 것을 획책하였다. 이에 완전독립·절대독립 쟁취를 위해서는 조직

적인 무장투쟁과 육탄혈전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1920년대에는 의열투쟁이 독립운동의 주요 방략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1919년 2월 이탁(李鐸)이 지휘하는 27결사대의 역적들을 포살기도, 그해 9월 강우규 의사의 사이토(齋藤實) 폭살기도 의거, 10월에 대한독립단원 백남운·김은하·이명서·함일의 평북 용천군 읍동면 친일파 유지 최시건 처단 이래 압록강 대안지역의 일제 주재소, 헌병분견대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1919년 6월에 창단한 의열단은 국내의 주요 일제기관들에 대한 동시 투탄거사 계획을 세우고 상해에서 폭탄 16개와 폭약·권총·탄환 등을 국내에 반입했으며, 이듬해 박재혁(朴載赫)의 부산경찰서 투탄의거, 최수봉(崔壽鳳)의 밀양경찰서 투탄의거, 1921년 9월 중순에는 김익상(金益相)의 조선총독부 청사 투탄의거, 1922년 3월 28일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암살을 위한 오성륜(吳成崙)·김익상·이종암 3인의 상해 황포탄(黃浦灘)의거, 1923년 1월 12일 김상옥(金相玉)의 종로경찰서 폭탄사건과 육탄혈전 등 과감한 계획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단원 수가 약 150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이 커졌다. 1923년 9월 1일 도쿄 일원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6천여 명의 한인이 조작된 폭동음모설의 제물로 학살되자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裕仁)의 결혼식이 있을 1924년 1월 폭탄 300개로 도쿄에서 거사를 계획하다 실패하자 단원 김지섭(金祉燮)을 상해에서 도쿄로 밀항하게 하여 1924년 1월 5일 궁성 정문인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 세 발을 던져 충격을 주었다.

이 밖에 양근환(梁槿煥)의 친일파 거두 척살 의거(1921), 송학선(宋學善)의 총독 척살 기도 의거(1926), 장진홍(張鎭弘)의 대구 조선은행 지점 폭탄의거(1927), 대만 대중시에서 조명하(趙明河)의 일본 황족 척살 의거(1928), 나석주(羅錫疇)의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 투탄의거(1926)가 이어졌으며, 동경 중심에서 일본 천왕 폭살을 기도한 이봉창과 상해에서 일본군의 천장절 기념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요인들을 살상한 윤봉길의거(1932)가 이어졌다.

**【의의】** 의열투쟁은 성패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의를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던지는 숭고한 정신을 담고 있어 제국주의의 부도덕성을 일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국민정신을 면면이 이어가게 하였으며, 제국주의 침략 앞에 있었던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민족의식과 인류적 양심을 일깨웠다.

**【핵심어】** 의열투쟁/자정순국/안중근/전명운/양근환/장진홍/송학선/조명하/이봉창/윤봉길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7·9·10·11(1973~197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4·5(1968~1970); 김창수, 『항일의열투쟁사』(독립기념관, 1991); 김창수·조항래·유준기·박영석·이현희, 『항일독립운동사에서의 의열투쟁』(숙명여대 한국학연구소, 1991);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창작과비평사 1997).

- 【사진자료】** 161.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  
162. 의열단장 김원봉  
163.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의사  
164.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김상옥 의사  
165.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순국한 나석주 의사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소년운동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 소년운동	

**【정의】** 소년운동은 일제하 민족실력양성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며 어린이들의 인격과 미래 주역으로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벌였던 운동

**【배경】** 조선 유교문화에서 어린이는 엄격한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질서 속에서 어른들의 아래에 서열지어 있었다. 일제하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삶에서 어린이는 “깃뺏히고 학대받고 쓸쓸하게 자라는”(방정환, ‘어린이 동무들에게’ 중에서, 『어린이』 1924, 12) 존재였다. “자식은 애물” 또는 “애물 덩어리”로 인식되고 있었고, “애새끼”라는 말에서 보이듯 어린이는 인격적인 존중이나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기에는 너무 힘든 세월이었다.

**【내용】** 3·1운동으로 얻어낸 제한된 자유공간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최초의 어린이 단체는 안변·진주·광주(光州)·왜관 등지에서 조직되었다. 본격적인 어린이 운동은 1921년 5월 1일 김기전, 방정환 등이 중심이 되어 천도교청년회가 소년의 지덕체 함양을 위한 소년부를 설립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소년부는 이듬해 4월 5일 천도교소년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천도교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1923년 3월부터 『어린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며,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과 위생·건강을 돌보아 주며, 조혼(早婚)의 악습을 폐지할 것을 계몽하였다. 1922년 서울의 소년운동가들은 조선소년단, 1923년 3월 색동회와 반도소년회, 5월 불교소년회, 1924년 8월 명진(明進)소년회 등을 각각 조직하는 등 소년운동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1923년 4월 17일 방정환·조철호(趙赫鎬) 등은 서울의 소년단체 대표들과 각 신문사 기자들과 더불어 어린이날 기념식 준비를 위한 임시연합단체로서 소년운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천도교소년회에서 출발한 어린이날 기념식은 전국적인 어린이날로 발전하였다. 조철호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사로서 조선소년군을 조직하여 화랑정신

에 입각한 지·인·용의 사상을 갖게 하였다. YMCA 소년부 간사인 정성채는 조선소년척후대 조직하여 한국보이스카우트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이후 두 단체는 1924년 3월 1일 소년척후단조선총연맹으로 통합되었다.

소년단수는 1924년 123개 단체에서 1927년 말에는 366개에 회원은 14,357명으로 늘었다. 한편 반도소년회·불교소년회·새벗회·명진소년회 등의 임원진은 오월회(五月會)를 창립하고 무산아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소년운동계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양분되었다. 어린이날 기념식도 1926~7년에는 순조롭게 실시되지 못하였다.

1927년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와 근우회가 조직되자 소년운동계도 통합운동을 전개하여 1927년 7월 30일 4개 소년단체연맹체와 68개 소년단체 대표들이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해 10월 16일 창립대회는 100개 이상 단체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여 52개 단체의 96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방정환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5월 1일에 실시하던 어린이날 행사는 폐이데이와 중복되어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사회주의운동 세력이 확대되자 소년운동 방향을 사회주의적 운동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순수한 소년운동을 주도하던 천도교 측의 색동회와 조선소년운동협회 등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조선소년총동맹과 완전히 결별하였다. 이후 총연맹 측은 조직을 확대·강화하여 경기·경남·전남·전북·황해도 등에 도연맹을 조직했다. 이념적 대립은 이후 더욱 심화되어 1929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도 열지 못했다. 조선소년동맹 통영(統營)동맹은 1931년 4월 “노동자녀대중의 계급의식을 몰각(沒覺: 잊게)한다”는 이유로 어린이날 행사를 반대하는 결의서까지 채택했다.

한편 일제는 지방의 도연맹 대회도 금지하는 등 탄압을 가하다 1937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도 금지시키는 동시에 소년운동단체를 해산시켰다.

**【결과·의의】** 소년운동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운동이었다. 이는 인간평등과 인간 해방운동이자 교육문화운동으로 항일 독립은 물론 광복 이후 새나라 새문명 건설을 위한 운동이었다. 다만 어린이 운동에 이념이 개입하여 계급성 주입과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것은 유감이었다.

**【핵심어】** 어린이운동/소년운동/김기전/방정환/조철호/색동회

**【참고문헌】** 尹石重, 「天道教少年運動과 그 影響」, 『한국사상』 12(1974); 정인섭, 『새싹회 어린이운동사』(정음사, 1975); 申載洪, 「日帝下에서의 韓國少年運動考」, 『사학연구』 33(1981); 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보이스카우트60년사』(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4); 金正義, 『韓國少年運動史研究』(민족문화사, 1992); 김정희, 『한국의 소년운동』(혜안, 1999).

**【사진자료】** 166. 방정환과 색동회원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농민운동

문화운동	●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일제 강점하 전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층이 민족의 독립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한 운동

**【배경】**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의 주요 기조는 전통적 향촌공동체의 유대 해체를 통한 일방적 일원적 수직적 지배체제 확립, 토지에 결부된 농민들의 제권리 부정으로 토지수탈과 토지 상품화 용이화, 일본 이주민의 정착, 화폐 및 상품경제 전면 보급, 식민지 지주제의 확대, 식량과 원료의 공급기지화와 일본 상품의 소비시장화였다. 이에 따라 1910년대 전면적인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으로 이어지는 수탈을 위한 식민지 농업정책이 전개되었다.

1918년 중반 일본에서 쌀 투기에 의해 쌀 소동으로 체제 위기상황이 조성되자 일본정부는 민간 업자를 내세워 비밀리에 조선 쌀을 매점하여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 때문에 1918년 1월 한 섬에 23원 62전이던 쌀 가격이 8월에는 37원 46전, 1919년 2월에는 43원 57전으로 폭등했다. 이로 인해 지주의 이익은 극대화되었고, 도시 봉급생활자, 일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농민들의 삶은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렸다. 이후 조선의 농가구조는 지주의 토지확대, 자소작층의 몰락의 길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1926년 1만 명이던 걸인이 1931년 16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고 궁민의 경우에는 29만 6천명에서 104만 8천명으로 격증하였다. 또한 극빈 영세농은 186만 명에서 420만 명으로 증가했다.

3·1운동 때 농촌사회가 면장 이상의 일제체제 편입세력과 구장 이하 농민층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농민층이 시위운동의 최대 참여층이 된 데에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와 저항의 성격이 담겨 있었다.

**【전개】** 3·1운동 이후 농민들이 면·리 단위의 소작인조합, 소작인상조회, 농민공제회, 작인동맹 등의 농민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소작인조합은 소작료 4할제 실시, 소작권의

보장, 지세·공과금의 지주부담, 부정한 마름의 배척 등을 요구하며 소작인 투쟁을 전개했다. 농민들의 조직은 나아가 1924년 4월 전조선노농대회·남선노농동맹·조선노농연맹회 등 182개 단체가 조선노농총동맹을 창립했다. 1930년 이후에는 일제가 농민조합 활동을 강력하게 탄압함에 따라 비합법 적색농민조합을 결성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일제하 농민운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20~1924년의 시기로 농민운동이 결집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투쟁인 소작쟁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소작인조합은 주로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이동 반대를 위해 소작쟁의를 전개했다. 대표적인 농민운동은 전북 익산·김제 농민의 수리조합 반대운동(1921), 전남 무안군 암태도 소작쟁의(1924), 황해도 재령군 북물면 여물평 동적농장의 소작쟁의(1924~1925) 등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25~1929년의 시기로 소작인조합이 농민조합으로 개편되고 지주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만이 아닌 수리조합 내지는 곡물검사 반대운동 등 제국주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전남 무안군 자은도 소작쟁의(1925), 전북 옥구군 이엽사농장쟁의(1927), 황해도 봉산군 서종면민의 수리조합 반대운동(1928), 평북 용천군 불이흥업 서선농장쟁의(1927~1931) 등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30~1935년의 시기로 농민운동 고양기이다. 이 단계의 농민운동은 평북 용천군 불이흥업 서선농장쟁의(1927~1931), 전북 전주 우근농장쟁의(1930), 경남 김해 박간농장쟁의(1932) 등과 함남 단천의 농민폭동(1930), 함남 정평의 항일농민시위(1930), 함남 홍원의 시위운동(1931)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기존의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일본인 대지주를 상대로 폭동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농민들이 일제타도, 치안유지법 철폐, 민족차별 폐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획득 등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당국은 폭동화해 가는 농민운동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가함으로써 농민운동의 기본조직이 위축되어 지하로 잠복하게 되었다.

**【결과·의의】** 일제강점기 농민들은 3·1운동을 통하여 주체적 역량을 확인하고 이후 빈농층 자신의 생존적 필요에 의해 농민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하여 점차 궁극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인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따라서 일제하 농민운동은 농민층의 생존투쟁이자 반제국주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었다.

**【핵심어】** 농민운동/소작인조합/농민조합

**【참고자료】**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3); 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의 사회운동과 농촌사회』(문학과지성사, 1990); 장시원 외,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열음사, 1988); 서성갑, 「노동자·농민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하(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사진자료】** 167. 193104 농민대중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천도교  
농민 공생조합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노동운동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3·1운동 이후 노동자 계층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식민지 인력수탈 구조에 항거하여 노동단체의 조직, 동맹파업 등으로 일본 식민지 지배체제에 저항한 운동

**【배경】** 지주 중심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모순으로 인하여 토지에서 탈락한 농민들이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여 도시 주변에 자유노동자·일고노동자층이 격증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은 전쟁의 특수경기로 인해 이전에 없던 호황을 누렸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도 공장공업이 성장하면서 도시 빈민층의 일부를 노동자로 흡수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형성했다. 1920년대 공업은 중화학의 비중이 매우 낮고, 정미·고무·방직 등 1차 가공 공업에 치중된 기형적인 구조였다. 그나마 미약한 공업화 정도 때문에 1922년 7월 한인노동자 약 91만 명 중 공장노동자는 5만 명에 불과했다. 공장노동자보다 막별이꾼·지게꾼 등의 일용노동자층이 많았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어려웠다.

**【전개】** 3·1운동 때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존재가치가 부각되었다. 노동자들도 스스로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그후 전국적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태동되어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고, 전국 각지에 조선노동공제회의 지부가 결성되기 시작하여 1922년에는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개별 파업투쟁이 가진 한계성 때문에 연대와 공조체제가 필요해지자 1922년 10월에는 조선노동연맹회가 조직되었다. 노동연맹회는 인쇄직공친목회·공우협회·전차종사원조합·이발조합·진주노동공제회·김포노동공제회 등 노동자 2만여 명이 참가한 단체로 발전하였다.

노동단체의 연대를 조직하고자 진주에서 32개 단체가 참가한 경남지방 노동운동간친회, 98개 단체의 대표가 참가한 전남노동연맹 창립, 대구의 64개 단체가 참가한 남조선 노동동

맹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 1924년 4월 전국 260여개 노동·농민운동단체의 5만 3천여 명을 포괄하는 조선노동총동맹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노동계와 농민계가 합친 조선노동총동맹은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 투쟁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 1927년 9월 농민단체와 분리하여 156개의 노동단체와 2만 638명의 노동자를 망라하는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었다.

1930년대는 일제가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집회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조직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노동운동가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회주의운동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함남 흥남일대를 중심으로 4차에 걸쳐 전개된 태평양노동조합사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재유 그룹의 운동, 원산지방을 중심으로 1936년에서 1938년까지 전개된 노동조합운동 등을 들 수 있다. 1920년 이후 노동운동은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20~1924년의 시기로 노동운동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주로 임금인하 반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단체계약권 확립, 8시간 노동제의 실시, 악질 일본인 감독의 추방, 노동조건 개선 등이 주 목표였다.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부산 부두노동자의 파업(1921), 서울 인력거부의 파업(1922), 경성 고무공장 여자노동자의 파업(1923), 평양 양말공장 노동자의 파업(1923), 군산 정미공장 노동자의 파업(1924) 등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25~1929년으로 노동운동이 중소도시까지 확산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며 본격화한 단계였다.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목포 제유공(製油工)의 파업(1925), 영흥노동자 총파업(1928), 원산노동자의 총파업(1929)이 있었다. 원산총파업은 폭압적인 식민지 권력에 맞서 원산노동연맹 산하의 24개 노동조합 노동자가 참가하여 원산지역 산업·운수·교통기관을 마비시켰으며, 일본인 자본가 대 한국인 노동자의 투쟁으로 발전해갔다. 전국의 노동자들은 동조파업을 단행하고 기금을 모금하여 원산총파업을 성원하였다. 이 경험은 노동자층의 연대투쟁이 가진 힘을 확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투쟁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30년대 비합법적인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30~1936년경으로 노동운동의 고양기라 할 수 있다. 파업투쟁이 격증하는 한편 폭력화 경향이 현저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부산진 조선방직 노동자의 파업(1930), 함남 신흥탄광 노동자의 파업(1930),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의 파업(1930), 전북 김제노동자의 경찰서 습격사건(1931), 인천 조선공장 노동자의 공장 점령, 부산 조선방직공장의 폭동(1933) 등이다. 이 시기에는 1920년대에 비해 건수에 있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양상도 공장점거·공장습격·경찰서습격 등 공세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일제의 강경한 탄압에 대응하여 비합법적인 적색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결과·의의】** 1920년대 본격화된 노동운동은 일제의 전면적 탄압 앞에서 지하화, 적색노동운동으로 투쟁성을 강화하였으나 모험주의적 경향과 분파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스스로 활동공간을 축소시키고 말았으며,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 이념대결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핵심어】** 노동운동/동맹파업/원산총파업/적색노동운동

**【참고문헌】** 姜東鎭, 「일제하의 한국노동운동」, 『韓國近代民族運動史』(1980); 金潤煥, 「農民運動과 勞動運動」, 『한국사』 22(1981);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의 전개와 발전」, 『한국사』 (한길사, 1994); 서성갑, 「노동자·농민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하(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사진자료】** 168. 192404 조선노농총동맹 창립대회

169. 1929 총파업을 전개한 원산노동자들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물산장려운동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말까지 일제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 루기 위해 전개한 경제자립운동. 정식 명칭은 조선물산장려운동(朝鮮物産獎勵運動)이다.

**【배경】** 3·1운동의 발발은 일제 무단통치 10년간 억압되어 왔던 민족의식의 부활을 가져왔다.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의 제한된 자유공간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언론운 동이 일어났다. 그중 일제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자립화의 일환으로 물자 아껴쓰기, 민족산업육성운동이 일어났다.

**【전개】** 1920년 봄 평양에서 조만식(曹晩植)을 중심으로 한 평양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사 이에서 민족기업의 건설과 육성을 촉구하는 조직체 결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 해 8월 평양 야소교서원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발족하였다. 창립총회에는 평양의 유지 70여 명과 교육자·종교인·실업인 및 혁신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평양 조선물산장려회는 장문의 취지 서를 발표하고 경제계의 진흥, 사회의 발전, 실업자의 구제책, 국산품 애용, 근검 풍토, 실 천성의 양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평양에서 결성된 물산장려회는 몇 차례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를 위한 조직체가 결성되자, 서울의 조선청년회연합회에서도 이 운동에 호응해 1922년 말부터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간지를 통해 조선물산장려 표 어를 모집했으며,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는 지방순회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청년회의 활동으로 인해 물산장려운동이 점차 확산되었다.

연희전문학교 학생 염태진(廉台振) 등 50여 명은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1922년 12월 자작회(自作會)를 조직하였다. 수입품의 증가로 조선경제가 파멸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자작회는 국산품 애용, 일용품 자급, 토지 매도 방지, 길드식으로 일용품을 생산 공급하는 대산업조합(大産業組合) 결성 등을 결의하였다. 지방에서 이에 호응하여 경

남 진주, 의령, 전남 무안 등지에 지회(支會)가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이 진전되어 1923년 1월 서울 낙원동 협성학교 강당에서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가, 2월에는 토산애용부인회(土産愛用婦人會)가 각각 조직되어 조선물산장려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제1기 실행조건으로 우선 의복은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음력 정월 1일부터 조선인 상품 또는 가공품을 염색해 착용할 것, 음식물은 식염·설탕·과일·청량음료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선물산을 사용할 것,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으로 대용 가능한 것은 이를 사용할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계몽활동으로서 그 해 2월 3일 서울 천도교당에서 대중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2,000여 명의 청중이 모이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조선물산장려회는 이어 전국적 계몽활동을 계획하고, 구정에는 전국적으로 조선 팔도 특산 포(布)로 기를 만들어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하였다.

각 지방에서도 평양·대구·부산·광주·함흥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읍에까지도 지방분회를 설립했는데, 소읍 지방분회 호응도도 열렬하였다.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조합 및 생산기관의 설치, 조선물산진열관의 설치와 조선물산품평회를 개최하고, 기관지 발행에 착수하였다. 6월에는 전경성공산업자대회를 개최해 총건평 450평 규모의 진열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일제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여 진열관 건립은 무산되었다. 11월에는 잡지 『산업계産業界』를 창간하여 제5호까지 낸 뒤 『자치(自治)』로 이름을 바꾸어 12호까지 발행했다. 이 잡지는 1929년 10월 이후 『조선물산장려회보』·『장산 獎産』·『실생활 實生活』 등으로 개칭되면서 1932년까지 간행되었다.

**【결과】** 1930년대에 들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전시체제가 되면서 일제는 이 운동을 일종의 일화(日貨)배척운동이며, 항일민족독립운동으로 보고 탄압하였다. 그 뒤 조선물산장려회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이어졌다.

**【의의】**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민간차원의 경제독립운동이었다.

**【핵심어】** 조선물산장려운동/물산장려운동/조만식/자작회

**【참고문헌】** 趙璣濬, 「朝鮮物産獎勵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의性格」, 『歷史學報』 41(1969); 조영건, 「물산장려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91); 오미일, 「1920년대 부르주아민족주의 계열의 물산장려운동론」, 『한국사연구』 112(2001).

**【사진자료】** 170.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작하여 국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한  
조만식

171. 물산장려운동 포스터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사회주의운동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보고, 그 과도기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운동

**【배경】**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에 패배했다. 러일전쟁의 패전 충격은 러시아 내에서 짜르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 결과 1905년 페체르부르크의 봉기로 나타났으며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개】**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파고가 시베리아지역에 미쳐오던 1918년 6월 김 알렉산드라와 이동휘(李東輝) 등을 중심으로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이 조직되었다. 이동휘는 1921년 당명을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으로 바꾸고 같은 해 8월 말경 본부를 상해로 옮겼다. 이른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방편으로서 공산주의 운동 조직을 결성했다.

한편 이에 앞서 1918년 1월 22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김철훈(金哲勳)·오하묵(吳夏默) 등이 볼셰비키당에 직결된 이르쿠츠크공산당 한인지부를 결성했다. 세칭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다. 이 두 파는 파벌투쟁을 되풀이하다가 1922년 12월경 코민테른에 의하여 해체되고, 그 극동총국(極東總局) 산하의 코르부로(高麗局)에 흡수되었다.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진영 일부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민족운동을 민족개량주의(民族改良主義)라고 배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이 일어났다. 1922년 2월 일본유학생들이 동우회(同友會)의 이름으로 전국 노동자들에게 선언을 발표하고 계급투쟁 행동단체임을 밝힌 이래 국내에서 사회주의 색채의 무산자동맹회(無產者同盟會)·북풍회(北風會)·화요회·조선노동당·서울청년회 등의 단체들이 등장하였고, 이 단체들은 결성·해체와 이합집산을 되풀이했다.

1924년 4월 이들 단체들이 정리되어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과 조선청년총동맹이

각각 결성되고, 이에 기반하여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4월 18일 고려공산청년회가 결성되었다. 당의 책임비서에는 김재봉이, 고려청년회의 책임비서에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상해공산청년회 비서였던 박헌영(朴憲永)이 각각 선출되었다. 코민테른은 이당을 1국1당 원칙의 코민테른 한국지부로 승인하였다.

김재봉과 박헌영은 공산당 조직 확대와 고려공산청년회원 모스크바 파견훈련을 진행하다가 1925년 11월 탄로되어 일제경찰에 일망타진되었다.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이다. 1925년 12월 서울에서 제2차로 조선공산당이 극비리에 조직되었다. 당책임비서에 강달영(姜達永),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에는 권오설(權五高)이 각각 선출되었다.

‘강달영당’은 좌우연합의 국민적 당을 조직하여 공산당이 장악하고자 천도교 중진들과 접촉하고, 1926년 6·10만세운동을 통하여 3·1운동을 재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거사 직전에 계획이 탄로나 좌우연합당은 실현되지 못하고 강달영당은 해체되었다.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이다.

이 무렵 일본에 있던 일월회(一月會) 간부 안광천(安光泉)·하필원(河弼源) 등이 국내에 들어와 1926년 11월 일명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고 민족주의운동과의 연대할 수 있다는 방향 전환론을 내놓았다. 정우회 선언에 찬동한 좌익단체들이 민족주의 진영과 힘을 합쳐 1927년 2월 신간회(新幹會)를 창립하였다.

한편 제2차 조선공산당 간부로서 검거를 모면한 김철수(金綴洙)는 1926년 12월 정우회선언의 안광천 일파와 제휴하여 제3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였다. 세칭 ‘ML당’이라고 하는 이당 지도부도 1928년 2월 검거되었다.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이다.

1928년 3월 ML당의 잔당, 서울계의 신파 및 상해파 등이 연합하여 코민테른 지부로서의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다. 제4차 조선공산당이다. 이 당의 책임비서로 노동자출신의 차금봉(車今奉)이,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로는 고광수(高光洙)가 선임되었다. 그러나 차금봉도 그 해 7월 검거되었다. 이로써 조선공산당은 국내에서는 명맥이 끊어졌다. 코민테른도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 해체를 지령하여 만주와 일본 등지의 해외조직만 남게 되었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전쟁이 개시되자, 종래의 합법적 한국노동조합과 농민조합운동을 적색노동조합과 적색농민조합운동으로 전환시켜 이를 기반으로 혁명적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원 대부분이 검거되어 실패하고, 지도자 박헌영은 8·15광복까지 지하에 숨어 있어 했다. 한편, 1930년대 후반 만주 동변도(東邊道) 일대에서 김일성(金日成)일파의 항일유격대가 활동했으나, 이것은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휘하였고, 조선공산당 계보가 아니었으며, 이때는 조선공산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의 3당 합당으로 박헌영 중심의 조선노동당이 결성되자, 이에 반대한 여운형을 중심으로 백남운(白南雲)·이영·장건상·김성숙(金星淑)·이상백(李相佰)·최익한 등에 의하여 1947년 5월 24일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이 결성되었다. 북한에서는 소련의 후견을 업은 김일성이 1국1당 원칙을 깨고 독자적인 북조선노동당을 창립하였다. 그 뒤 박헌영은 미군정청이 공산당 간부 체포령을 내

리자 월북하여 조선공산당은 남한지역의 남조선노동당과 북한지역의 북조선노동당으로 양립하였으나, 결국 남조선노동당은 모두 숙청, 체포되고 말았다.

**【결과】** 남조선노동당은 1947년 여운형의 암살로 붕괴되고 6·25전쟁을 전후하여 좌파에 속하였던 백남운·이영 등은 월북하였고, 우파에 속하였던 장건상·김성숙 등은 남한에 잔류하였다. 그리하여 광복 직후 나타났던 비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정당은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의의】** 한국 사회주의운동은 1910년대 후반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일제에 대항한 측면과, 민족보다 사상을 앞세움으로써 항일 민족전선에 분열을 가져왔고, 해방 후 민족분단으로 가는 한 요인이 된 양면이 있다.

**【핵심어】**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운동/공산주의운동/조선공산당

**【참고문헌】**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1~5(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1976); 한창수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집」 1(지양사, 1984);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현대사연구회 역(화다출판사, 1985);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2(돌베개, 1986).

**【사진자료】** 172. 조선공산당 재조직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1931.11.4일자 호외

173.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검거 보도 동아일보 1927.4.3일자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6·10만세운동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1926년 6월 10일 융희황제(隆熙皇帝) 장례일을 기해 일어난 독립만세시위. 3·1운동 때와 같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키려 한 운동이었으나 일제의 사전 검속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원인·배경】** 1926년 4월 25일 융희황제가 승하(昇遐)했다. 애도의 분위기가 전국에 확산되었다. 7년 전 전민족적 3·1운동이 일어났던 때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상해에 있는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臨時上海部)는 당시 5월 1일 메이데이에 대규모의 대중투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융희황제의 승하로 메이데이 기념행사가 금지되자 천도교와 연대한 만세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상해에서 「복상(服喪) 통곡하는 민중에 격(檄)함」이란 격문을 5천여 장을 인쇄하여 서울로 보냈다. 이 격문이 6월 6일 서울에서 압수되어 계획이 발각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고려공산청년회와 천도교 간부 등 1백 수십명이 체포되었다.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측의 계획이 발각되자,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와 연결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독자적으로 태극기와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 30장, 격문 1만여 장을 인쇄하여 6월 9일부터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사전 연락 작업을 하다 고등보통학교 몇 학생들로 구성된 세칭 '통동계(通洞系)'와 연결되었다. '통동계'도 서울의 각 학교 학생들로서 동지를 규합하고 격문을 5천여 장 인쇄하여 시내 각 학교와 전국 주요 지방학교에 격문을 배포하였다. 이 두 계통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비밀을 보전하기 위해 따로 추진하였다.

6월 10일 시위 움직임을 감지한 일제는 약 1만 명의 일본군과 각도에서 3천 5백 명의 경찰을 차출하여 사상단체·종교단체·학교 등을 대대적으로 검속하고, 검문검색과 경계를 강화했다. 국장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에는 기마경찰·헌병·정사복 경관 등이 총검으로 무장하고 배치되었다.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길 양쪽에는 2만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도열했는데, 일제는 교사의 책임 아래 해산하도록 사전 조치했다.

1926년 6월 10일 장례행렬은 오전 8시 창덕궁에서 발인하여, 종로3가-청계3가-을지로3가-을지로6가-훈원원(영결식: 오전 11시)-동대문-창신동-신설동-청량리-금곡의 유흥(金谷裕陵)으로 향하기로 예정되었다.

**【전개】** 1926년 6월 10일 오전 8시 반 종로3가의 만세시위를 신호탄으로 하여 학생들의 시위는 여덟 곳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은 가슴에 간직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면서 준비해 온 격문을 군중을 향하여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시위에는 5·6백 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을지로 부근에서 일어난 시위는 사범학교 담이 무너질 정도로 격렬하였다. 동대문 앞 시위현장에서는 일본 기마병의 말발굽에 치거나 밀려서 쓰러진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고, 70~8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만세운동은 오후 2시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제 기마병과 군경의 삼엄한 경계로 일반 군중은 호응하지 못하였다.

시내 각 학교에서는 6월 12일의 반우식(返虞式) 때에도 시위할 계획이었다. 일제 당국은 학생들의 봉영을 전면 금지하고 경찰과 군인으로 대체하였다. 배재고보를 비롯하여 협성학교·피어선 성경학원·기독교청년학원 등의 기독교 계통 7개 학교학생들이 피어선 성경학원 기숙사에 모여 격문 수 만장을 인쇄하던 중 6월 16일 일경이 습격하여 계획은 좌절되었다.

**【결과】**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을 경험한 일제의 강력한 사전검속과 경계태세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대중시위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의의】** 6·10만세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좌우합작의 첫 사례로 꼽힌다. 이후 이듬해 신간회를 통한 좌우통일전선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핵심어】** 6·10만세운동/윤희황제/순종/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고려공산청년회/천도교/통동계(通洞系)

**【참고문헌】**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6·13·14;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1~5(東京: 原書房, 1967); 李天鎭, 「六十運動의回顧」, 『獨立新報』 1946.6.10~11.

- 【사진자료】** 174. 윤희황제  
175. 19260610 윤희황제 장례식(1)  
176. 19260610 윤희황제 장례식(2)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전시항목】** 국내민족운동

**【소항목】** 신간회

문화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운동	6·10만세운동
의열투쟁	● 신간회
소년운동	

**【정의】** 1927년 2월 창립되어 1931년 5월까지 존속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연합전선의 반일사회운동단체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120~150여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회원수만 3만 명 이상에 이르는 일제하 가장 규모가 컸던 단체이다.

**【배경】** 3·1운동 이후 확보한 제한된 자유의 공간에서 국내 민족운동은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으로 갈라져 각자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25년 6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실시와 이듬해 6·10만세운동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타격을 입은 사회주의 진영이 세력만회를 위해 350여개 사상단체들을 조선공산당의 표면단체인 정우회(政友會)와 서울청년회의 사상단체인 전진회(前進會)로 해체 통합하고 정우회선언(1926.11.5)을 통해 민족주의 진영과 민족협동전선을 표방하고 나섰다.

한편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 중 천도교 신파, 수양동우회·『동아일보』 관계 인사들이 일제의 자치론에 호응하자 민족주의 좌파 인사들인 안재홍(安在鴻)·이상재(李商在)·백관수(白寬洙)·신채호(申采浩)·신석우(申錫雨)·유억겸(兪億兼)·권동진(權東鎭) 등 34명이 사회주의자들과 손잡고 신간회 창립을 주도하였다.

**【전개】** 1927년 2월 15일 서울에서 창립된 신간회의 강령은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이었다. 창립총회에서 35인을 선출해 간사회를 소집, 총무·재무·출판·정치문화·조사연구·조직·선전의 7개 부서를 두었으며, 비슷한 목적으로 성립된 민흥회(民興會)를 통합하였고, 이상재와 권동진(權東鎭)을 정·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간회에서는 일본 동경지회를 시작으로 국내외에 지부 설치를 시작하여 7월 10일 설치된 경성지회 지회장에 한용운(韓龍雲)이 임명되었다. 1928년 말에는 국내외에 143개의 지회와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신간회의 조직이 커지자 일제는 신간회를 탄압하기 시

작하여 대규모의 전체대회를 승인하지 않았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일제에 대해 학생운동의 탄압을 엄중 항의했다. 신간회 본부와 경성지회(京城支會) 간부들은 광주학생운동을 민족·민중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929년 12월 13일 민중대회를 열 것을 계획했다가, 조병옥(趙炳玉)·이관용(李灌鎔)·이원혁(李源赫) 등 주요 인사 44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인사 가운데 조병옥 등 6명은 실형을 받았다.

**【결과】** 표면적으로 좌우의 세력이 합작하여 만든 단체였지만, 민족주의 진영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사회주의 진영은 신간회의 주요 간부들이 투옥된 사이에 해산운동을 벌였다.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소를 결의함으로써 발족한 지 4년 만에 해산되었다.

**【의의】**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으로 갈라져 전개되다가 일제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이의 극복과 운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좌우합작의 민족운동으로 신간회가 출범하였다. 4년간 143개 지회에 3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운동 단체로 성장하였으나 주도권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해소된 점은 사회주의운동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핵심어】** 신간회/광주학생의거/조선공산당/천도교 구파/천도교 신파/정우회/전진회/정우회선언/좌우합작

**【참고문헌】**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 『韓國文化史大系』 1(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金明久, 「코민테른의 對韓政策과 新幹會, 1927~1931」, 『新幹會研究』(동녘, 1983); 李賢周, 「新幹會에 참여한 社會主義者들의 運動論-ML당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지식산업사, 1989); 朴贊勝,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 민족주의좌파의 신간회운동론」, 『韓國史研究』 80(1993);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韓相龜, 「1926~19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新幹會」, 『韓國史論』 32(서울대 국사학과, 1994).

**【사진자료】** 177. 이상재  
178. 신간회 안동지회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일제강점기 탄압과 수탈 3·1운동과 국내민족운동	●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캡슐: 대한민국 국호 제정과 임시헌법
-------------------------------	--

1910년대 일제는 헌병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인 식민지 통치를 자행했으나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민족문화에 바탕을 둔 민족의식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다. 식민지 무단통치로 한민족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믿었던 일제에게 3·1운동은 충격이었다. 3·1운동은 한민족의 자주 독립을 당당히 선언했지만 독립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독립의 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하였다. 3·1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민족전체의 독립운동을 조직적이며 통일적으로 지도할 정부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 7~8곳에서 임시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그중에는 해외에서 수립된 유력 임시정부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정부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다. 서울 한성정부는 13도 대표의 명의로 소집된 국민대회를 소집하고 정부수립을 선포한 사실이 연합통신을 통해 세계로 보도됨으로써 가장 강력한 임시정부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단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교섭은 현실적인 세력 기반을 갖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교섭 결과 1919년 9월에 상해에 단일 통합정부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 당시 상해는 임시정부가 소재할 가장 적절한 위치로 각광받았다. 그것은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국제적 도시이며 일본의 감시와 압력을 피할 수 있었기에 정부 위치로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내정과 군사, 외교, 재정, 사법 등 각 분야별로 독립운동의 실행과 방략을 세웠으나 정부의 우선 과제는 정부로서 위상을 갖추는 일과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방침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실행해 나갔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당초 방략과 달리 임시정부는 해외독립운동 세력들을 망라한 최고의 통일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만주지역에서 활약하는 무장독립군부대들과 원활한 연락관계를 갖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만주지역의 독립군 조직을 지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임시정부는 군사활동보다는 외교활동에 치중하게 되었다.

한편 기본적으로 임시정부는 중국관내, 만주, 연해주, 그리고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세력의 연합정권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해외독립운동 세력들은 그들 각각의 독립운동의 제반 배경과 조건의 차이로 독립운동의 노선과 방략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갖지 못하였고 이는 내분 발생의 요인이 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강대국의 승인과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했으나 북경을 중심으로 모인 북경군사통일회의 세력들은 외교노선

중심의 임시정부를 공격하고 무장항일투쟁의 길을 고집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싸고 독립운동세력 간에 갈등이 심해지자 독립운동계는 국민대표회의를 열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진로를 모색했으나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1920년대 임시정부는 한동안 침체에 빠져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식민지 망국민의 설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내 청년들에게는 나라밖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언젠가 조국의 국권을 되찾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슴을 뛰게 했다.-

많은 애국청년들이 임시정부가 존재한다는 말만 듣고 상해로 찾아왔으며 김구가 지휘하던 한인애국단원 윤봉길 의사 역시 고향을 떠나 상해로 와서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의 거를 일으켜 임시정부의 활동 전반에 활기를 되찾아주었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상해사변'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떠나게 되었으며 14년간 중국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1940년 중경에 안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굳건히 항일의 역량을 향상시켜 마침내 좌우의 진영의 독립운동가들을 임시정부 안으로 끌어들이어 연합정부를 이루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중국관내 독립운동세력의 군사통일을 이룩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민족의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의 큰 결정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부로서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26년간 정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며 끊임없이 한국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립국가 건설을 준비하였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3·1운동 이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임시정부수립운동

**【원인·배경】**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과 시도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첫 결실은 1914년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워진 대한광복군정부이다. 그러나 대한광복군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조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그 후 1917년 상해에서는 신규식 등 17명이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임시정부수립을 제창한 바 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3·1운동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3·1운동은 국내외에서 온 민족이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부정하고, 민족의 절대 독립을 요구한 독립운동이었으며 ‘조선이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으므로 이를 상징할 수 있는 민족의 대표기구를 설립해야 하는 일은 당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통해 드러난 한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필요도 있었다. 이렇게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발발·전개】** 3·1운동이 확산되어 가던 1919년 3월과 4월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내외 8개 처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정부와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漢城)정부, 그밖에도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나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고려 공화정부(高麗共和政府)·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 등의 정부수립이 발표되었다.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처음으로 수립된 정부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의회이다. 3·1운동의 소식이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에 전달되자, 전로한족회중앙총회는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 조직을 발표하였다. 이어 4월 11일에 상해에서는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내 한성에서는 4월 23일에 13도 대표들이 비밀리에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는 ‘한성정부’의 수립을 세상에 알렸다.

**【결과】** 여러 지역에서 세워진 임시정부들은 모두 공화정체였다. 특히 실체를 가진 임시정부가 세 곳에서 발표되자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부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통합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곳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러시아령 대한국민의회와 의논하여 한성정부안을 수용하고 임시정부의 위치는 연락이 용이한 상해에 둔다는 정부통합안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9월 11일에 이승만을 임시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여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의의】** 3·1운동 과정에서 선언된 정부들은 주권과 정통성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 조직되었으며 한결같이 민주공화제를 표방하였다.

**【핵심어】** 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국민의회정부/한성정부/통일 임시정부

**【참고문헌】** 한국근현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하(국가보훈처, 1999); 李炫熙, 『大韓民國臨時政府史』(집문당, 1982); 秋憲樹,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연세대 출판부, 1995); 李延馥, 『大韓民國臨時政府30年史』(국학자료원, 199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대한민국임시정부』(2009).

**【사진자료】** 179. 191906 상해 임시정부 첫 청사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대한민국임시헌장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과 관제를 규정한 첫 헌법.

**【발발】** 일본에서 2·8독립선언과 국내에서 3·1독립선언 외에 해외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가는 가운데 상해 방면에서 활약하는 독립운동 지사들은 1919년 3월 하순경부터 임시정부의 수립을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 위치한 한 집에서 국내외 대표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이날의 회의는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가 되었다. 10일에 열린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고 이튿날인 11일에는 전문 10개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내용】** 1919년 4월 11일에 제정되어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발표된 임시헌장은 선포문과 선서문, 정강과 10개조의 임시헌장으로 구성되었다. “신인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한 선포문을 시작으로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6가지의 정강(政綱)을 내세웠다.(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일체의 정치범을 특사한다.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지한다. 5. 절대독립을 선도한다.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한다.) 10개조의 임시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체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

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력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한 건국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신체형 및 여창제(女娼制)를 모두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가와 정부가 갖추어야 할 요소인 근대 헌법을 제정하였다.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국민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민주공화정체를 확립해 나간 것이다.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제정 후 1919년 9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으로 1차 개정하였다. 1925년 4월 7일에 「대한민국임시헌법」 2차 개정, 1927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으로 3차 개정,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임시약헌」 4차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개정되었다.

**【특징·의의】** 임시헌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한국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임시헌장은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9월에 제정한 전문(前文)과 8장 56개조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핵심어】** 임시의정원/대한민국/임시헌장

**【참고문헌】** 國會圖書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1974); 조동걸,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조직」,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究』(지식산업사, 1993).

**【사진자료】** 180. 1944 대한민국 임시헌장 초안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한국역사에서 최초로 성립된 의회이다. 1919년 4월 10일 상해(上海)에서 처음으로 개원하였으며 이곳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구상하였다. 이후 1945년 광복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그 명칭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역할하였다.

**【배경】**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수립을 위해 상해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상해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국내와 만주, 러시아령 연해주 등지에 독립운동가들이 정부수립운동에 뜻을 같이하여 상해로 모여들었다. 독립운동가들은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1919년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29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의정원회의를 열었다.

**【시행】**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이동녕을 의장으로 손정도를 부의장으로 하는 의장단과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國務院)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은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헌법과 정부 형태를 갖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4월 13일에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2조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입법기능과 국정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각종 동의권과 정부에 대한 비판 및 감시기능이 임시의정원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변천】** 1920년대에 민족유일당 조직운동이 결렬된 후, 중국관내와 만주 등지에서 지역적 기반과 정치적 이념을 기초로 한 여러 정당이 출현하자, 이를 계기로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임시의정원은 정당(政黨)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 그러다 1942년 10월 개최된 제34차 임시의정원 회의를 계기로 임시의정원은 좌익진영의 정당 및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좌익 정당이 공동으로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였다. 이리하여 한국독립당의 일당체제로 운영되던 임시의정원이 다당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한 이래 5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각종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전반에 걸쳐 직권행사를 하였다. 그 외에 대통령의 선거, 정부 예산 및 결산의 의결,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 국무원 및 주외대사 등의 임명 동의권, 선전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 수리, 국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의 탄핵, 관리의 위법행위 조사 등의 권한을 갖고 활동하였다. 임시의정원은 매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1945년 8월 17일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의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의정원은 해방 후 임시정부와 함께 환국하였다.

**【결과·의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민주정치 이념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체를 채택하여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전제국가체제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 체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핵심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대한민국임시헌장/주권재민/삼권분립/민주공화정체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1974); 尹炳奭,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임시의정원문서를 중심으로-」, 『아세아학보』 13(1979); 吳世昌, 「大韓民國臨時議政院의 役割」, 『한국사론』 10(국사편찬위원회, 1981); 양영석,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연구(1919~192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1987, 1988); 金喜坤,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991); 황묘희, 「중경임시정부의 의정원연구(1940~1945)」, 『성신사학』 10(1992); 李賢周,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성립과 위상 변화(1919~1922)」,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1999).

**【사진자료】** 181. 19190917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

182. 19210101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식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추진한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배경】**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독립운동 방침에 대해 논의하였다. 1919년 5월 12일에 임시의정원 제4회의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 파견과 1인당 50전의 인두세와 애국금을 모집할 것과 교통기관의 조직 방침 등에 대해 정하였다. 이후 7월 9일 임시의정원 제5회의에서는 국민적 기반이 될 인구상황을 조사하고 공채발행과 인구조사로 확보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법적 준비, 그리고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여러 재정마련책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외교선전책 강구와 한일관계 조사 편찬 등의 정부 시행방침이 발표되었다.

**【발발·전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국내를 주목하고 국내 국민들의 국민적 기반을 갖추고 국내와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국과 연통제를 조직, 운영하였다. 연통부는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망으로서 국내의 도·군·면 단위로 설치하여 임시정부의 법령 및 공문 배포, 군인 및 군속의 모집과 재정단원 모집, 독립운동 자금 모금, 공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들 조직을 설치하고자 임시정부는 국내로 특파원과 선전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연통제·교통국을 비롯하여 비밀결사 조직들은 1919년 말경 일제에 의해 발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임시정부는 1919년 말부터 군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갔다. 1919년 말에 상해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였고 미국에서 비행사를 양성하여 공군을 창설하고자 하였다. 이들 군사 양성 사업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과 연계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주지역의 독립군 조직을 임시정부 산하로 편제시켰다.

임시정부는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독립운동가들과 그 자제들에게 민족교육을 심어주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우리 역사와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한국혼을 잃지 않도록 교육했으며 이를 위해 인성학교와 삼일중학을 공립학교로서 운영하였다. 육군무관학교가 폐교된 이래 젊은이들의 사관교육은 중국의 군관학교로 위탁교육하는 식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한편 언론활동으로는 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내외 해외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독립의지를 고취시켰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도 발행하여 정부의 행정사항과 활동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1919년 7월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한일관계사료집』을 발간하였다. 독립을 위한 외교의 한 방법으로 국제연맹에 제출하고자 제작된 이 책은 고대 이후 강제병합까지 일본의 한국침략사를 집대성하는 역사를 편찬하였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독립공채도 발행하였다. 미주한인들은 인두세를 거두어 임시정부를 경제적으로 후원하였다. 한편 임시정부는 국제연맹과 미국 유럽 열강과 중국 등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독립외교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파리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은 전권대사로 활약하며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도록 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러시아 노동정부에 독립자금을 요청하러 모스크바에 한형권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1919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구미위원부는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미국의회와 정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인지도를 넓혀갈 수 있었다.

한편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자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을 벌어나갔다. 1932년 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무조직이었던 한인애국단 소속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천황의 처단을 시도하였고, 윤봉길 의사는 홍구공원에서 천황의 생일날인 천장절(天長節)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결과】** 윤봉길의거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으려 혈안이 된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야 했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주(杭州), 진강(鎮江), 광주(廣州), 유주(柳州), 기강(綦江) 등지를 전전하였다. 이동시기 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의 낙양 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여 한인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이래 1945년 광복하기까지 26년간 독립운동 전개하고 독립국가 건설 준비하였다.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사법·행정의 정부 형태를 갖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구심되었으며 국내외의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민족국가 수립의 비전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다.

**【핵심어】** 대한민국임시정부/연통제/교통국/공채/인성학교/독립신문/육군무관학교/한인비행사양성소/구미위원부/윤봉길의거

**【참고문헌】** 한국근현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하(국가보훈처, 1999); 李炫熙, 『大韓民國臨時政府史』(집문당, 1982); 秋憲樹,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연세대 출판부, 1995); 李延馥, 『大韓民國臨時政府30年史』(국학자료원, 1999); 金喜坤, 『中國關內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지식산업사, 1995).

**【사진자료】** 183. 19201228 이승만 대통령 부임 축하식

184. 19190821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로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등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운동의 열기와 한국민의 독립열망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를 널리 알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전개한 독립외교운동.

**【배경】** 열강의 식민지 쟁탈 경쟁으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1918년에 종전되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를 위하여 전승국들은 정의와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의 국제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전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전개】**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하고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고무된 해외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각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대한인국민회는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한국대표를 선출하였고 상해에서는 1919년 1월,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하여 한국민대표관을 설치하고 외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 임시정부의 전권대사로 임명된 김규식은 대한민국 주 파리위원부 통신국을 설치하고 한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선전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전쟁 이후 성립된 국제질서인 베르사이유 체제 아래에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핀란드·헝가리 등이 독립할 수 있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민족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국제연맹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치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파리위원부는 1920년 4월 3일 쟁 레모에서 열린 국제연맹 최고이사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개된 일본군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 한국의 완전 독립안을 상정해줄 것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한일관계사료집을 간행하여 국제연맹에 제출하였다. 한편 6월 10일 국제연맹옹호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을 때 한국의 독립문제가 정식으로 토의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소비에트 노동정부에 독립자금을 요청하러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형권을 파견하였고 소비에트 공화국과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미국에는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두고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미국의회와 정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또한 국제연맹과 각종 국제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인지도를 넓혀갈 수 있었다. 한편 1921년에 개최된 워싱턴 군축회담(태평양회의) 때도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는 일제의 한국침략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열강의 지원을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영국·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세력을 재편성하는 성격의 회의로 종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대한 기대가 크게 좌절되고 말았다. 임시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외교활동에 역점을 둔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국내 분란으로 손문(孫文)이 광둥(廣東)에 호법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는 1921년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인 신규식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내었다. 이어 소련의 레닌 정부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였고, 제2차 대전 도중에는 런던에 세워졌던 폴란드 임시 망명정부와 프랑스 임시 망명정부도 정식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외교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3·1운동을 계기로 나타난 한국민의 독립 열망을 전파하고 일제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친한 외국인단체인 「한국친우회」가 미주를 각지를 비롯하여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되었다. 중국에서는 임시정부의 중요 요인들은 중국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를 설립하여 민간 차원의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과】**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정부는 북벌을 완성한 1928년 뒤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에 대해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932년 이봉창의거와 윤봉길의거를 계기로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 정부는 독립운동의 어느 한 세력이 큰 힘을 갖는 것에 대해 견제하였다.

**【핵심어】** 파리강화회의/파리위원부/구미위원부/한국친우회/한중호조사

**【참고문헌】** 대한민국주파리위원부통신국 편, 『구주의 우리사업』 I(1921);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I(역사비평사, 1995); 신재홍,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미와의 관계」, 『한국사론』 10(국사편찬위원회, 1981).

**【사진자료】** 185. 1919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단

186. 19200301 워싱턴 구미위원부의 3.1절 1주년 기념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국민대표회의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1923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5개월 동안 국내외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개편과 독립운동계의 현안 문제들을 논의한 한국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의 민족회의이다.

**【배경】**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일제는 간도에 대병력을 동원하여 항일전을 펼치는 독립군을 초토화하고자 무자비하게 한인들을 학살하였다. 한국독립군과 독립운동 단체가 괴멸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나 임시정부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임시정부가 어렵게 구축한 연통제와 교통국 등의 조직망이 일제 경찰에 의해 발각되고 관련 인사들은 체포당하면서 임시정부는 당초에 의도했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여기에 정부수립 과정에서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싼 의견차이와 대립으로 인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대표기구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1921년부터 새로운 차원의 독립운동 방향과 방침을 모색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국민대표회의 소집의 목소리가 각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발】** 1921년 2월초 박은식을 비롯한 상해에서 활약하는 14인의 독립운동가들은 시국 선언문인 「아동포(我同胞)에게 고(告)함」을 발표하고,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제창하며, 임시정부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독립운동기관으로 개편할 것과 무장독립투쟁을 지지하고 독립군 부대의 통합 및 지휘체통의 통일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국민대표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임시정부를 절대 유지해야 한다는 지지세력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임시정부 반대파와 옹호파 간의 설전으로 상해 정국이 더욱 혼란해져 가는 가운데, 1921년 8월에 '국민대표회의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1921년 11월에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워싱턴회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한국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나 1922년 1월에 열린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

표회의에는 전체 23개 단체대표 144명 중 한국대표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한국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용기를 얻은 임시의정원은 국민대표회의 지원을 요구하는 인민청원안을 올리고 이를 통과시켜 마침내 1923년 1월 3일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상해·만주일대·북경·러시아 연해주일대 135개 지역 및 단체에서 대표 158명이 상해로 모여들었으며 자격심사의 과정을 거쳐 120여 명이 민족대표로 확정되었다.

**【경과·변천】**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시국문제, 독립운동의 대방침, 국호 및 연호, 헌법, 위임통치 사건 취소, 자유시참변, 통의부사건, 기관조직 등의 여러 문제가 상정되었다. 군사·재정·외교·생계·교육·노동 등의 6개 분과와 헌법기초위원회, 과거문제조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2월 말에 들면서 파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월 5일(제34일)부터 임시정부 개조에 대한 '시국문제'가 토론되면서 임시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는 창조파와 기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보완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개조파의 견해가 대립하였다. 여기에 정부 현상유지파들이 개조파와도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대표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대표회의가 혼란을 거듭하자 일부 단체에서는 대표 소환을 명하고 국민대표회의를 탈퇴하였다. 그 후 창조파 윤해가 의장이 되고 5월 16일에 개조파 42명이 회의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국민대표회의는 창조파만의 대회가 되었다. 6월 3일 창조파만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호를 '한'(韓), 연호를 '기원(紀元)'으로 정하였다. 이에 개조파 위원 57명은 반대성명을 내었고 임시정부는 6월 6일 내무총장인 김구의 내무령 제1호를 발표하여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창조파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8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갔으나 소련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의의】** 국민대표회의는 참여 세력들이 주도권 장악에 몰두함으로써 민족운동의 총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독립운동선상의 최초의 통합운동으로서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하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박제화된 임시정부의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핵심어】** 국민대표회의/창조파/개조파

**【참고문헌】** 朴永錫,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韓國史論』 10(국사편찬위원회, 1981); 趙澈行, 「國民代表會(1921~1923)研究」, 『史叢』 44(고려대학교, 1995); 박윤재, 「1920년대 초 민족통일전선운동과 국민대표회의」, 『學林』 17(연세대학교, 1996); 李明花, 「대한민

국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국가보훈처, 1999).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민족유일당운동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 민족유일당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192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와 중국관내 및 만주지역에서 민족혁명전선의 유일당(단일당, 대당) 결성을 목표로 전개된 통일전선운동.

**【배경】** 1920년경부터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내분에 휩싸여 독립운동의 총지도기관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독립운동계의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을 새로이 검토하고자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국민대표회의에서의 개조론·창조론 논쟁은 독립운동계의 정부 조직과는 별도의 독립당 결성과 이를 통한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논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3·1운동 직후부터 친일세력에 의한 참정권운동을 통해 1925년 말부터 자치론을 제기, 타협적 민족개량주의 풍조가 등장하였다. 이런 추세를 독립운동 전열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인식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좌익세력과 협동전선체의 결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1924년 1월 중국의 국민당은 공산당 세력과 혁명통일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의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립되었다. 이는 독립운동계의 유일당운동 출범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된다.

**【발발】** 1924년 7월 창조파 인사들은 북경(北京)에서 한국독립당조직축성회를 설립하고, 1926년 3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민족당주비회(籌備會)를 설립하였다. 1924년 상해(上海)에서도 구 개조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동단결론이 제기되고 흥사단계와 상해파 고려공산당계의 합작체 성격이 짙은 상해청년동맹이 결성되면서 대동단결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족적 연합에 기초하여 유일당을 결성하자는 운동은 1926년 5월 독립운동축성회를 조직하고 그 해 7월 8일에 안창호는 상해 삼일당(三一黨)에서 주의 역할을 막론하고 통일노선으로 '일대혁명당' 즉 민족유일당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1926년 7월 임시정부 국무령 홍진도 전민족대당체를 건립하는 것을 시정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안창호는 1926년 8·9월 북경(北京)을 왕래하며 반임정 입장에 서있던 북경파에게 임

정해체론의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유일당 결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시켜 10월 16일 대독립당조직 북경축성회가 결성되었다.

**【전개】** 북경축성회에 이어 상해축성회(1927. 3.21)가 결성되었고 광주(廣州, 5.8), 무한(武漢, 7월), 남경(南京, 9.7)에서 잇달아 한국유일독립당 축성회가 창립되었다. 이들 5개 지역 축성회는 좌우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좌우합작 조직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1926년 12월 13일 국무령에 취임한 김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다고 발표하고 개정 임시약헌을 발표하여 이당치국의 정체를 도입하였다.

유일대당 결성운동은 더욱 촉진되어 1927년 11월 22일 상해에서는 한국독립당 관내축성회연합회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연합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1928년에 들어서서 유일당운동은 담보상태에 빠졌다. 그것은 1927년 7월 13일에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어 중국의 좌우대립이 격화되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그 영향을 받았다. 1928년 12월에 발표된 코민테른의 '12월테제'는 민족협동전선운동을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과】** 1929년 10월 26일 상해축성회에 참여한 좌파들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상해지역의 좌우합작운동은 깨졌다. 상해축성회가 해체되자 다른 지역의 축성회도 붕괴되었다. 상해축성회의 해체를 주도한 좌파세력은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을 결성하였고 민족주의세력은 1930년 1월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게 되었다

**【의의】** 중국관내 지역의 민족유일당운동은 1926년에 시작되어 약 3년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1929년경 좌파세력들이 이탈하면서 좌우합작의 유일당 결성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1년 이후의 '단일대당(單一大黨)' 결성운동으로 이어져 1935년에 민족혁명당으로 창립되었다.

**【핵심어】** 민족유일당운동/한국독립당조직총성회/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한국독립당

**【참고문헌】** 金俊燁·金昌順,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3·4·5(청계연구소, 1986); 金喜坤, 「韓國唯一獨立黨 促成會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33(1983); 具益均, 『회고록: 새 역사의 여명에 서서』(일월서각, 1994); 김영범, 「국공대결기(1928~1935) 중국에서의 한인 민족전선 통일운동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말 일제하의 사회사상과 사회운동』(문학과 지성사, 1994); 金喜坤·韓相禱·韓詩俊·俞炳勇,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한울출판사, 1995); 김영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족유일당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하)(국가보훈처, 1999).

**【사진자료】** 187. 19400516 한국독립당 제1차 중앙집감위원 일종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윤봉길의거가 일어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은 상해를 떠나, 1940년 충칭에 안착할 때까지 약 8년 동안 중국을 전전해야 하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었다.

**【원인·배경】**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유조호(柳條湖) 부근의 만철선을 폭파하고 이를 중국인 소행으로 몰아갔다. 이에 중국 전역에서는 반일운동이 일어났으며 상해지역에서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일제 관동군은 만주지역으로 물리는 국제적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상해를 선택하였다. 1932년 1월 28일 일본 해군육전대가 중국군 제19로군의 진지를 습격함으로써 ‘상해사변’은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상해는 중일 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일본 해군육전대는 신속히 상해를 장악하고자 했으나 중국군 19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일본본토에서 육군을 상해 파견군으로 급파하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전 세계의 이목이 상해로 집중된 틈을 타 일제 관동군은 3월 1일에 만주국의 건국을 선언해 버렸다.

**【발발】**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상해사변 승전축하식과 일본천황 히로히토(裕仁)의 생일 축하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오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민애국단은 의열투쟁으로써 일제에 항거하고자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를 계획하였다. 윤봉길 의사가 천장절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 6명을 사상케 하는 피해를 입히자 전 세계의 이목은 상해로 집중되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윤봉길의거가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 정부를 비롯한 항일단체들의 재정 지원과 협조가 줄을 이었다. 특히 장개석(蔣介石)은 김구와의 면담을 통해 낙양(洛陽)의 중국중앙육군학교 내에 한인특별반을 신설하여, 한인청년들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윤봉길의거는 침체되었던 한인독립운동이 활로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상해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13년간의 활동기반이었던 상해를 떠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전개】** 윤봉길의거는 독립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운동가들은 상해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1932년 5월 급히 상해를 떠나 항주(杭州)에 도착하였다. 1935년 11월경까지 항주에 자리했으나 국민당정부의 소재지인 남경(南京)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내륙의 남경 방향으로 이동해 1935년 11월에 진강(鎮江)에 도착하였다. 정부는 진강에 자리했으나 임시정부 요인들은 주로 남경성 안에서 활동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정부는 중경(重慶)으로 천도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요인들도 11월 말에 급하게 배를 마련하여 남경을 떠났으며 임시정부는 진강에서 호남성의 성도인 장사(長沙)로 옮겨갔다. 1938년 7월 임시정부는 장사를 떠나 남쪽의 광동성 광주(廣州)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광동성으로 상륙해오자 임시정부는 다시 짐을 꾸려 광주를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8년 10월에 유주(柳州)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를 결성하여 광복군의 원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39년 4월 임시정부는 유주를 떠나 북상하여 기강(綦江)에 도착하였다. 이곳 기강에서 임시정부 주석 이동녕은 72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독립운동계의 대동단결을 유언하였다. 기강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임시정부는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고 광복군 결성을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경으로 옮기었다.

**【결과】** 1백여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일본군의 공습을 피해 이동하면서 전시체제를 준비한 임시정부는 최종적으로 중경에 정착하였다. 중경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결성하고 건국강령을 선포하였으며 좌우합작을 정부를 이루어내었다. 일본이 항복한 후 1945년 11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1진이 환국하면서 26년간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다.

**【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동하던 시기 동안에도 부단히 광복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1940년 9월 중경에 정착한 이후에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중국과 미국 등과 함께 항일전쟁에 참전하여 일제를 타도함으로써 조국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정부/임시정부의 이동/항저우[杭州]/진장[鎮江]/난징[南京]/창사[長沙]/광저우[廣州]/류저우[柳州]/치장[綦江]

**【참고문헌】** 김영범, 「중경임시정부와 군사통일 실현: 그 경위와 의의를 중심으로」,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백범학술원, 2003);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국가보훈처, 1999); 한시준, 「1940년대 전반기의 민족통일선전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한울, 1995); 황묘희, 「석오 이동녕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사상』 41(한국민족사상학회, 2010).

- 【사진자료】** 188. 윤봉길의거 이후 상하이로 떠나 이동하는 임시정부  
189. 가흥 피난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소항목】**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각지의 임시정부수립운동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유일당 운동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고난과 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 중일전쟁과 임시정부의 좌우통일운동
임시정부와 국제관계	

**【정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운동계의 좌·우익 진영의 통일전선운동

**【원인·배경】** 19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민족통일전선운동은 면면히 이어져갔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한국과 중국인들이 항일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민족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연합전선을 이루고 밖으로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발발】** 1937년 8월 17일에 중국지역의 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과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대한인동지회·대한인단합회·대한인애국단·대한부인애국단·대한인독립단 등 우익 진영의 9개 단체가 공동의 명의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광복진선)을 결성하였다. 또한 1937년 11월에 좌익세력들도 결집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민족전선)을 결성하였다. 이들 좌·우파 각각의 연합체는 모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국공합작을 이룩한 장개석(蔣介石)은 한국 독립운동계에도 통합의 요구함에 따라 한국 독립운동계는 1939년 7월 '전국연합진선협회(全國聯合陳線協會)'를 결성하였다. 이어 8월 기강(綦江)에서는 좌우파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7당통일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우파 정당은 '당일당 방식'을 주장한 데 반해, 좌파 정당은 단일당 결성에 반대, 탈퇴함으로써 통합회의는 결렬되었다. 이로써 광복진선과 민족전선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한편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재건)·조선혁명당의 3당의 통합을 위한 첫 회의에서 '남목청(楠木廳)사건'(장사(長沙)사건) 발생함에 따라 정당 통합문제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 예견됨에 따라 전시체제에 대비하며 임시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이 요구됨에 따라 3개 정당은 1940년 5월 8일 해체선언을 발표하고 9일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전개】** 중경(重慶)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의 주도로 운영되면서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고 삼군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했으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미주지역 독립운동 세력들도 1941년 4월 각 단체 연합기관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시정부 깃발 아래로 통일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서 민족혁명당 등 좌파계열의 단체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통일전선을 이루어 항일투쟁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과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으려고 노력하였다.

**【결과】** 1942년 7월,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 병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여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으며 김규식 등 민족혁명당 인사들과 다른 사회주의 계열 단체의 인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또한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관이 되었다. 이로써 우파와 좌파의 무장독립군도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군사통일에 이어 정치통일도 이루어져 좌익진영인사들이 1942년 10월 25일부터 개최된 제34차 임시의정원 회의(‘통일의회’)에 출석하면서, 정치통일의 첫 단계인 의회통일도 이루어졌다.

**【의의】** 1942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좌우합작이 이뤄진 것은 오랜 동안의 갈등과 경쟁을 통해서 얻은 고통스런 경험의 결과였다. 임시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좌우익 진영의 통합은 좌우익이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합작하여 민족의 당면과제인 조국광복을 이루고자 한 데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좌우통일운동/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한국광복군/조선의용대

**【참고문헌】** 김희곤·한상도·한시준·유병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한울아카데미, 1995);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화평사, 1991); 강만길, 「1930년대 중국관내 민족해방운동의 통일전선론」, 『한국사연구』 90(한국사연구회, 1995);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창작과 비평사, 1997).

**【사진자료】** 190. 중일전쟁 발발 후 제2차 국공합작을 이룬 장계석과 모택동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중경시기의 임시정부

**【소항목】** 중경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

● 중경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	좌우합작정부수립
------------------	----------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된 이래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중국대륙에서 27년간 활약하였다. 그중 1940년부터 1945년까지 5년간에 중경 임시정부 시대를 이루었다. 충칭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수도로 정한 곳으로, 임시정부가 이곳에 정착한 이래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였고 건국강령을 발표했으며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포고한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한중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항전을 수행하였다.

**【원인·배경】**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산하에 정규군을 갖추고자 힘을 썼다. 1939년 11월 기강(綦江)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방략(獨立運動方略)」을 결정한 임시정부는 무장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수행을 목표로 한 한국광복군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고 전시체제 확립과 독립전쟁 수행 방략을 실행하는데 힘을 쏟아 국민당 정부로부터 상당한 군사·재정·외교적 지원과 협조를 받고자 하였다.

**【발발】**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전쟁을 피해 임시 수도로 정한 중경(重慶)에 자리 잡고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여 강력한 전투부대를 창건, 조국광복의 전면전쟁을 전개하고자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는 임시정부 산하 조직으로 창설된 광복군을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활동하려면 중국의 협조와 재정적 후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대한 승인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개】** 그러나 국민당 요인들은 임시정부를 나누어 담당하고 지원금도 여러 통로로 공급하는 분리통치방식으로 한국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관리하며 임시정부를 견제하였다. 중국군사위원회는 충분치 못한 원조를 제공하면서도 1941년 11월 한국광복군을 통할 지휘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이하 9개준승)을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임시정부에 통보하였다. 이 '9개준승'의 내용은 광복군은 중국군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광복군의 자주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9개준승'이 광복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 1942년 10월부터 임시정부는 '행동준승'을 폐지하고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국민당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승인된 후에야 가능할 것임과 광복군의 구성요소가 복잡하고 사상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임시정부는 끈질기게 중국 측과 협상하며 1943년 2월 '중한호조군사협정(中韓互助軍事協定)'의 체결을 중국 측에 요구하며 광복군의 지휘권을 되찾고 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지만 또다시 중국 측의 거부로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1944년 6월 다시 '중한호조군사협정초안'을 중국 측에 제출하고 여러 차례 9개준승의 취소·개정교섭을 벌임으로써 마침내 8월에 9개준승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1945년 5월부터 '원조한국광복군판법(辦法)'을 시행함으로써 광복군의 독립성을 되찾게 되었다.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이 되자, 국민당 정부는 중경임시정부 요인들에게 환송연을 베풀어주었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고국으로 환국하였다.

**【의의】** 중경에서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항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임시정부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중국 외교활동을 전개하며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였다.

**【핵심어】** 국민당정부/광복군9개행동준승/중한호조군사협정/원조한국광복군판법

**【참고문헌】**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일조각, 1993); 구대열, 「2차대전 중 중국의 한국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8-2(한국정치학회, 1995.5); 노경채, 「중국관내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과 중국국민당」, 『아세아문화』 13(1997).

**【사진자료】** 191. 한국 광복군 창설을 축하하는 국민당 인사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중경시기의 임시정부

**【소항목】** 좌우합작정부수립

중경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

● 좌우합작정부수립

**【정의】** 중경(重慶) 임시정부가 중국관내에서 활약하는 좌우익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망라하여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준비하고자 구성한 좌우연합정부

**【배경】** 1930년대 중반 중국관내 독립운동전선은 우파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좌파의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양립되어 있었다.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전선통일의 요구가 한층 높아진데다가 중국의 국민당 정부도 두 진영의 통일을 권유함에 따라 통일전선이 모색되었다. 1939년 8월 27일부터 우익진영의 3개 정당과 좌익진영의 4개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7당통일회의'를 개최하고 7개 정당 및 단체가 통일을 이루어 단일당을 결성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통일 방법의 차이와 독립운동의 최고 기구를 임시정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결성될 단일당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통일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민족주의 계열의 우파 3당은 1940년 5월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바 있다.

**【발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미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자 민족 독립운동의 역량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결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일어났다.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중국관내의 민족해방운동 정당과 단체들은 임시정부를 축으로 연합전선을 모색하였다.

**【활동사항】** 1942년 10월에 열린 제34차 임시의정원회의에서는 민족혁명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민족해방동맹 등 좌익계열의 인사들이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좌익진영의 인사들의 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한 후, "임시정부는 각 당파 각 개인의 우수한 인물을 망라시킨 각 당파 연합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좌우연합정부 구성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의회가 폐회된 후,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1944년 4월에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자, 개정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의회가 소

집되었는데, 제36차 임시의정원회의가 그것이다.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주석 이외에 부주석제를 신설한다는 것과, 국무위원의 수를 종전의 6~10인에서 8~14인으로 증원한다는 것, 그리고 5개 부서였던 행정부의 조직을 7개 부서로 증설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경과·변천】** 헌법개정안이 합의됨에 따라 1944년 4월 20일에 제36차 임시의정원회의가 열렸다. 헌법개정안은 4월 21일에 통과되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다섯 번째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이 탄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근간으로 하여 정부의 조직과 기구가 확대되었고 주석과 부주석, 그리고 국무위원을 선출하였다. 주석에는 한국독립당(우)의 김구, 부주석은 조선민족혁명당(좌)의 김규식, 14명의 국무위원도 한국독립당 8명, 조선민족혁명당 4명, 조선민족해방동맹 1명, 조선혁명자연맹 1명 등으로 배분되었다. 그리고 7개의 행정부서 중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과 최석순이 각각 군무부장과 문화부장을 맡음으로서 좌우 연합의 통일전선 내각을 구성하였다.

**【결과】** 당시 중국지역에서는 충칭의 임시정부와 더불어 중국공산당 지역인 연안(延安)을 중심으로 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활동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조선건국동맹이 광복을 준비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한 후, 이들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의의】** 중경 좌우연합정부의 탄생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목표, 독립운동의 방법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던 좌우익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통일을 이룸으로써 민족의 숙원사업이었던 대동단결을 이루어 통일된 모습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제34차 임시의정원/제36차 임시의정원/통일전선 내각/좌우연합정부

**【참고문헌】** 한시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5 『대한민국임시정부 III-중경시기』(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역사비평사, 1995).

**【사진자료】** 192. 좌우합작을 이룬 제34차 임시의정원회의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조선후기 한해 등 자연재해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였고,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는 만주로의 한인이주가 급증하여 한인사회를 형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배경】** 만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청나라는 만주지역을 자신들의 조상이 성장한 신성한 지역이라 하여 봉금령(封禁令)을 내려 이주를 금지하였다. 청조가 쇠퇴하면서 봉금령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삼정문란으로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심해지자 이에 항거하여 농민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쳐 굶어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농민들의 이농 현상이 심화되어 많은 유민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화전민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봉건제 해체과정에서 몰락한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이주한 지역이 바로 만주지역이었다.

**【내용】** 조선정부에서는 한인의 만주이주를 엄격한 법률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계속 이주하게 되자 조선정부에서도 하는 수 없이 한인들의 만주로의 이주를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조선은 청국 길림성(吉林省) 당국과 ‘조길통상장정(朝吉通商章程)’을 체결하자 한국인의 북간도 이주는 종래보다 몇 배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인의 이주가 증가하자 청국정부는 한국인을 중국인의 소작인 또는 고용인으로 채용하여 밭농사를 짓게 하는 한편 한국인에게 중국으로 귀화할 것을 적극 종용하였다.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한인 수는 1894년 6만 5천 명이었던 것이 1904년에는 7만 8천 명으로, 1910년에는 10만 9천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이주한인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밭농사를 매개로

한 함경도, 평안도 주민의 이주가 절대 다수였지만 점차 벼농사를 매개로 한 전라도인과 경상도 주민의 이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한국인의 만주로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가혹한 식민지 수탈정책을 실시한 점, 둘째 일제의 한국강점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치적으로 망명한 점, 셋째 만주는 토질이 비옥하고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구입하기가 용이한 점 등이다.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결과】** 1900년 의화단사건과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는 청정부가 중국인에게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여 재만한인들은 중국으로 귀화하지 않는 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대부분이 소작농인 이주한인들은 소작료 외에 잡다한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

**【핵심어】** 만주 한인사회 형성/봉금령/조길통상장정/소작농

**【참고문헌】** 박영석,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일조각, 1982); 임계순, 「만주·노령 동포사회(1860~1910)」, 『한민족독립운동사』 2(국사편찬위원회, 1987); 박영석,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국학자료원, 2010).

**【사진자료】** 193. 독립운동기지로 건설된 서간도 유하현의 한인이주촌 전경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경학사는 중국 길림성(吉林省)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설립된 서간도 최초의 한인자치단체이며,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다.

**【배경】** 1910년 일제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불가능해지자 신민회(新民會) 회원 중심의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군기지 개척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개척된 곳이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였다.

**【내용】** 1911년 4월 이회영(李會榮) 가(家)의 6형제와 이상용(李相龍)·김동삼(金東三) 등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유하현 삼원보 대고산(大孤山)에서 이주한인 300여 명을 모아 민단적 자치기관의 성격을 띤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였다. 경학사를 조직하여 척박한 만주땅을 개간하였으나 대홍작을 면치 못해 경학사는 1년이 안되어 해체되었다. 그러나 경학사의 정신을 이어 1912년 봄 삼원보에서 얼마 안떨어진 통하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에서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하였다. 이후 부민단은 1919년 한족회(韓族會)로 발전하였다. 경학사를 조직한 한인들은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신흥학교를 설립하였고, 1913년 신흥강습소를 통하현 합니하로 이전하고 신흥학교로 고쳤다가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다시 고쳤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육내용은 기본적으로 무관학교였으므로 군사교육에 많은시간을 할애하였으며 학생들의 민족정신 함양에도 노력하였다.

**【의의】** 단체의 명칭이 바뀌게 되지만 그 근본정신은 서간도 최초의 한인자치단체인 경학사의 정신이 이어진 것으로 부민단이나 한족회 모두 경학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서로군정서·북로군정서·의열단·광복군 등 만주와 중국본토의 여

러 독립운동단체에서 독립운동지도자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진자료】** 194.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195. 백서농장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봉오동, 청산리대첩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20년 후반 일본군을 중국 길림 봉오동과 청산리 일대에서 홍범도와 김좌진이 지휘하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하고 승리를 거둔 전투.

**【배경】** 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수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편성되어 국내진공작전을 감행하여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히자 봉오동 일대 독립군을 소탕하고자 진격하였다.

**【전개】** 일본군 제19사단은 국내진공작전의 본영이 되었던 봉오동을 일거에 소탕하여 그 근원을 끊고자 아스카와(安川) 소좌가 보병 2개 중대와 기관총 소대, 헌병경찰대를 합친 혼성대대 그리고 삼둔자전투에 참가하여 패배한 니이미 중대가 가담한 대대병력으로 월강 추격대대를 편성하여 진군하였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부대, 국민회군의 안무 부대, 군무도 독부 최진동 부대가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였다. 일본군이 진격해 오자 대한북로독군부는 독립군 4개 중대를 매복시키고 지형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포위망으로 유인하여 총공격을 가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봉오동전투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일제는 1920년 8월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이라는 군사작전을 수립하고 중국 측에 중국군을 출동시켜 독립군을 토벌해 주거나 아니면 일본군이 간도지방에 출병하여 직접 독립군을 토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일제는 직접 간도에 출병하여 독립군을 토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간도는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간도에 출병할 구실이 없었다. 이에 일제는 마적단을 매수하여 1920년 10월 2일 훈춘(琿春)을 습격하여 일본영사관을 방화한 훈춘사건을 조작하여 간도출병을 단행하였다. 일본 육군참모부는 1920년 10월 7일 나남 제19사단과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3개 사단을 출병시켜 독립군을 토벌하였다. 일본군이 독립군 토벌을 위해 청산리로 진격해

오자 김좌진이 지휘하는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8개 독립군부대들이 연합하여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20년 10월 21일 백운평(白雲坪)전투를 시작으로 완루구(完樓溝)전투, 천수평(泉水坪)전투, 어랑촌(漁郎村)전투, 맹개골전투, 쉬구전투, 천보산전투, 고동하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의의】** 한국독립군의 봉오동전투의 승리로 일제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한국독립군과 한민족은 독립운동의 사기가 크게 고양되고 무장독립운동에의 신념이 앙양되어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역량이 크게 증강되었다. 청산리대첩은 3·1운동에서 폭발한 한민족의 독립의지와 독립역량을 항일무장투쟁으로 한 차원 더 발전시켜 거둔 최대의 결실이었고, 한국독립군을 토벌하겠다고 간도에 불법침입한 일본군을 실력으로 참패시킴으로써 만주·노령 일대의 독립운동을 보위하여 한민족독립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금자탑이었다.

**【핵심어】**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홍범도/최진동/안무/대한북로독군부/월강추격대대/청산리대첩/대한군정서/대한독립군/김좌진/홍범도/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훈춘사건/간도출병/독립군토벌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1973); 신용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독립전쟁」, 『한국독립운동사』 4(국사편찬위원회, 1988); 윤병석, 「봉오동승첩」, 『독립군사』(지식산업사, 1990);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199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북로군정서와 청산리대첩」, 『독립운동사』 5(1973); 신용하, 「독립군의 청산리독립전쟁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을유문화사, 1985); 윤병석, 「청산리대첩」, 『독립군사』(지식산업사, 1990);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1990).

- 【사진자료】** 196. 1920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졸업식  
197.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을 지휘한 홍범도 장군  
198.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  
199.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북로군정서군과 김좌진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중국 서북간도지역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한인학살사건인 간도참변 이후 만주지역 독립군은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한 후 체제를 재편하였다.

**【배경】** 1920년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활발해진 한중 국경 부근의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군대를 파견하였지만 봉오동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에 일제는 1920년 8월 서북간도 독립군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기 위해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대병력을 간도지방에 침입시켜 수많은 한인을 학살함은 물론 학교·교회 및 가옥을 파괴하는 경신참변을 일으켰다.

**【전개】**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을 세운 일제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만주의 마적단을 매수하여 1920년 10월 2일 훈춘현(琿春縣)에 있는 일제의 영사관을 공격토록 하였다. 일제는 이 습격사건을 구실로 간도지역에 대병력을 침입시킬 계략이었기에 습격한 무리들을 한국독립군·중국군·러시아인이 혼합되어 있는 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군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그들이 장차 대병력을 침입시킬 땅이 중국땅이었기 때문이었고, 러시아인을 주장한 것은 간도를 침입해도 러시아 측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물론 한국독립군을 주장한 것은 그들의 침략 목적이 한국독립군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침략의 구실을 만든 일제는 훈춘 일본영사관 습격이 있었던 그날 즉시 조선군 제 19사단을 중심으로 한 병력을 간도지방으로 침입시켰다. 일제는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사건을 조작하고 간도를 침공하였다.

**【경과】** 서·북간도로 침입해온 일본군 총병력수는 제19사단에서 9,000여 명, 제20사단에서 4,000여 명, 제11사단에서 1,000여 명, 제13사단에서 1,000여 명, 북만주 파견대인 안서지대에서 1,000여 명, 그리고 관동군에서 약 1,200명으로 총 18,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대병력의 일본군은 서북간도 곳곳의 독립군 근거지는 물론이고 한인사회마저 철저히 수색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죽이고, 가옥은 방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군도 가만히 앉아 일본군의 공격을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전에 일본군의 습격을 감지한 독립군들은 그들의 근거지를 떠나 러시아의 연해주로 병력을 이동시킨 후 후일을 기약하고자 하였다.

**【결과】** 일제는 1920년 10월 청산리대첩에서 크게 패배하자 더욱 광분하여 일본군 3개 사단을 출동시켜 무고한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간도 일대에서 일본군이 학살한 한국인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고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핵심어】** 간도참변/봉오동전투/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훈춘사건/일본군 간도출병/청산리대첩/한국인학살 만행

**【참고문헌】**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대한민국공보처, 1949);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1956); 독립동지회, 『한국독립사』(19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1978);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1990); 윤병석, 『독립군사』(지식산업사, 1990); 채영국, 「1920년 ‘훈춘사건’ 전후 독립군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991).

- 【사진자료】** 200. 간도참변 때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된 희생된 이들  
201. 남만주 일대에서 활약한 광정단 결사대원

**【작성자】** 이동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제는 군대를 대거 중국동북지역으로 출동시켜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당시 병력과 무장에서 열세였던 재만독립군 주력부대는 소만 국경지대인 밀산으로 이동하였다. 재만독립군은 진영을 재편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재기를 대비하였다. 당시 흑룡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공산세력으로부터 항일공동전선을 형성하자는 제의를 받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가 자유시참변을 겪었다. 독립군은 1922년 말경부터 다시 간도로 복귀하여 독립운동단체를 재정비하고 통합을 추진하였다.

**【배경】**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를 구축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만주지역에는 50여개의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통합·분열되기도 하였는데 마침내 보다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여 정의부·신민부·참의부 등 3부(三府)를 형성하였다.

**【전개】**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활동이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일제는 1925년 6월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요녕성에서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자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중국 동북군벌과 이른바 삼시협정(三矢協定)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여건이 악화되자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에서는 중국 국민당과 소련 공산당, 아일랜드의 시실리당의 영향을 받아 '이당치국(以黨治國)'만이 분산된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고 민족의 역량을 이념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여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하기에 이르렀다.

**【결과】** 민족유일당운동은 1928년 5월 기존단체를 부정하는 개인본위 조직론자들은 전

민족유일당축성회를, 기존단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단체분위 조직론자와 단체중심조직론자들은 전민족유일당협의회를 각각 조직함으로써 민족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1928년 4월 전민족유일당축성회 측이었던 김동삼 등이 신민부의 김좌진을 방문하여 삼부통합에 대한 의도를 타진함으로써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여기에 가담한 세력으로는 정의부 탈퇴파인 김동삼을 중심으로 한 세력,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 군정파, 그리고 참의부의 주류인 김승학 계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부통합운동 역시 일제의 줄기찬 방해공작, 신민부와 참의부 자체 내의 내분 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의의】**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과 한국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재만 독립군들은 자유시침변 이후 독립운동단체를 재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일항쟁을 전개하기 위해 독립운동단체 통합을 추진하였다. 1925년을 전후하여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신민부·참의부 등 3부를 정립하였고, 1920년대 후반에는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핵심어】** 일제의 만주침략/자유시침변/독립운동단체 통합/3부/정의부/신민부/참의부/삼시협정/민족유일당운동

**【참고문헌】** 박영석, 「민족유일당운동」, 『재만한인독립운동사연구』(일조각, 1988); 정원옥, 「재만항일독립운동단체의 전민족유일당운동」, 『백산학보』 19(1975); 박영석, 『만주지역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국학자료원, 2010).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중국관내지역은 하북성의 산해관(山海關) 서쪽, 사천성의 강정(康定) 동쪽, 감숙성의 가옥관(嘉峪關) 남쪽지역을 말한다.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큰 줄기를 이루고 있고 임시정부 이 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배경】**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한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대거 중국으로 이주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활동하였다. 1910년을 전후하여 상해 프랑스조계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후 1932년 윤봉길의거까지 상해는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1912년 상해에서 동제사가 결성되었는데 독립운동단체의 시초였다. 이후 강습소 및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해지역 독립운동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한편 중국 국민혁명 세력과 함께 신아동제사를 조직하여 한중연합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전개】**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상해였고 북경과 천진 상해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1910년 후반부터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점차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광주·남경·무한을 비롯한 중국관내 각 지역에 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되어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변천】** 상해를 주무대로 활동한 단체로는 의열단과 한국노병회와 병인의용대를 들 수 있다. 북경과 천진에도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북경에는 1915년 신한청년당이 결성된 이래 한국유학생회·신대한동맹회·학생단·보합단·다물단 등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천진에도 천진불변단·한민회·애국부인회·대한인교민단 등이 활동하였다. 특

히 천진은 북경과 더불어 상해, 중국 동북지역, 국내 독립운동세력 간의 중간거점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남화한인청년연맹 등 무정부주의 계열이 중국관내 독립운동의 주요한 세력이 되었다. 이밖에 광주·무한지역에는 황포군관학교와 중산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대는 1931년 일제가 9·18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침략하였다. 1932년 윤봉길의거를 계기로 반만항일의 한중연합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세력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여 독립운동정당을 결성하였다. 임정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당과 반임정세력이 결집한 민족혁명당으로 나뉘었다.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중간 및 좌파세력 중 김성숙·박건웅·김산 등은 1936년 남경에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였다. 1939년 8월 사천성 기강에서 한국혁명운동 통일7단체회의가 개최되어 전국연합진선협회가 결성되었으나 민족혁명당 및 조선의용대가 탈퇴하여 1930년대 말 중국관내지역협동전선운동은 무산되고 말았다.

**【의의】** 중국관내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근대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한 정치적 경향을 축적해 갔다. 근대적 정당을 표방한 독립운동단체들은 일제 패망 후 수립될 민족국가의 통치구조·정부형태 등을 염두에 두고 항일운동 방략을 구상하였다. 각 독립운동세력들은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정강·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폭넓은 접촉과 자유로운 성찰을 통해 이념적 토대를 확보해 갔다.

**【핵심어】**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의열단/한국노병회/병인의용대/무정부주의계역/만주사변/윤봉길의거/한국독립당/민족혁명당/통일7단체회의

**【참고문헌】**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지식산업사, 1995);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한울아카데미, 1998).

**【사진자료】** 202. 191707 대동단결선언

203. 한중우호조사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회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 최초의 단원 이봉창 의사가 일본제국주의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의거이다. 윤봉길 의사 의거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 일제의 주요 인사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건이다.

**【배경】** 1930년대 초 침체와 위기에 처해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재무장이며 민단장인 김구의 책임하에 임시정부 특무대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전개】** 이봉창 의사는 거사를 위해 1931년 12월 22일 일본 동경에 도착하였다. 1932년 1월 8일 도쿄동경 요요기(代代木) 연병장에서 거행되는 신년 관병식(觀兵式)에 일왕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왕을 처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관병식 식장은 경계가 심하여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행렬이 경시청 정문을 통과할 때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다. 윤봉길 의사 의거는 중국 상해를 무력침공하여 승리한 일제가 일왕 생일인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 축하기념식과 승전경축식을 홍구공원에서 거행하였다. 윤봉길 의사는 기념식장에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 수뇌부를 처단하였다.

**【결과】** 이봉창 의사가 던진 폭탄으로 궁내부 대신이 타고 가던 마차가 파괴되고, 일왕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왕처단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고 말았다.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일제 요인 7명을 일거에 쓰러뜨렸다. 상해거류민단장 카와바타(河端貞次)는 즉사, 상해주둔군 총사령관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은 중상 후 사망,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野村吉三郎)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츠(重

光蔡), 상해총영사 무라이(村井), 거류미단 서기장 토모노(友野) 등 5명이 실명하거나 수족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 의거가 한 요인이 되어 일제는 내륙으로의 확전을 단념하고 1932년 5월 5일 중국과 긴급 정전협정을 맺었다.

**【의의】** 이봉창 의사 의거는 일본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전세계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당시 침체일로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윤봉길 의사 의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였으며, 중국 국민당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한중연합 항일전선을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핵심어】** 이봉창의사 의거/대한민국임시정부/한인애국단/일왕처단/윤봉길의사 의거/한인애국단/홍커우공원/천장절/승전경축식/대한민국임시정부/한중연합 항일전선

**【참고문헌】** 김구, 『백범일지』(교문사, 1979); 김창수, 「한인애국단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1988);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문학과지성사, 1994); 김영범, 『혁명과 의열』(경인문화사, 2010).

- 【사진자료】** 204. 김구와 한인애국단원들  
205. 이봉창과 한인애국단 선서  
206. 19370427 태극기 앞에 선 윤봉길 의사  
207. 19320429 윤봉길의거 일난 직후의 홍구공원 식당  
208. 19320429 의거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 의사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조선의용대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중국관내지역에서 활동했던 무장항일 독립운동단체로 1938년 10월에 창설되어 항일운동에 큰 공적을 쌓았는데, 1942년 봄 일부대원은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흡수되었으며,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1942년 7월 화북조선독립동맹이 지도하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배경】** 조선의용대의 모체는 1935년 7월 중국관내지역에서 결성된 조선민족혁명당이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민족혁명당은 중국 각지의 한인청년들에게 중국의 항일전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그들을 남경(南京)으로 불러 모았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집결한 83명의 청년들을 강서(江西省) 성자현(星子縣) 소재 중국육군군관학교 특별훈련반에 입교시켰다. 이 군관학교는 이후 호북성(湖北省) 강릉(江陵)으로 이동하였고 졸업한 학생들은 6월 초 중국군사위원회 소재지인 호북 무한(武漢)으로 이동하였다.

**【활동사항】** 조선의용대 창설 직후인 1938년 10월 하순, 무한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었다. 함락 직전 무한을 빠져나온 조선의용대는 몇 군데로 분산하여 항일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의용대大本부는 중국군사위원회 서남행영(西南行營)의 소재지인 광서성(廣西省) 계림(桂林)으로 이동하였고 제1구대는 호남(湖南省)으로 이동하여 중국군 제9전구 정치부의 지휘 아래 들어갔다. 제2구대는 하북성의 중국군 제5전구 작전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무한함락 직전인 1938년 10월 23일 조선의용대 제1구대는 무한에서 나와 일시 호남 형양(衡陽)까지 후퇴하였으나 중국군 9전구 정치부의 지시에 따라 다시 북상하였다. 제1구대는 1938년 12월 1일 호남 수부 장사(長沙)에 도착하여 한 달여 동안 대화재로 고통 받고 있던 중국민중에 대한 위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제1구대는 1939년 초 막부산(幕阜山) 일

대로 진출하였다. 막부산은 호남성 곡창지대를 일본군으로부터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제구대는 구대본부를 평강(平江) 상탑시(上塔市)에 두고 제1, 제2 진지선전대와 제1, 제2 유격선전대 등 4개로 나뉘어 현지의 각 중국군 사단에 배치되었는데 특히 1939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치열하게 항일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1년 봄 조선의용대 주력 제1·2·3지대 80여 명은 대오를 나누어 황하를 건넜고, 1941년 6월에는 팔로군 근거지로 이동하였다. 조선의용대 주력부대가 북상하자 남아있던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1942년 5월 한국광복군 산하로 편입되어 광복군 제1지대를 형성하였다.

**【의의】** 조선의용대는 중국 중앙정부가 최초로 인정한 정식의 한인항일군사단체였고, 항일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는 점과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주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하겠다.

**【핵심어】** 조선의용대/한국광복군 제1지대/화북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조선민족혁명당/김원봉/중국국민당/중국공산당/팔로군

**【참고문헌】**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 2001); 『의용보』; 염인호, 「조선의용군 연구-민족운동을 중심으로-」(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4); 김영범, 「조선의용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988); 『진광·조선민족전선·조선의용대(통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 【사진자료】** 209. 19381010 조선의용대 창설 기념  
210. 1942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모체가 되어 성립한 조선의용군 훈련광경  
211. 조선독립동맹 여성대원들

**【작성자】** 이동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 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인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1910년대 초반부터 국내의 수많은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하여 한인이주와 개척을 촉진하는 한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배경】**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1910년 경술국치 전후로부터 서북간도와 함께 중요한 독립운동기지로 개척되었다. 연해주 독립운동기지에서도 양성된 수많은 독립군들은 한·러 국경인 두만강을 넘어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활동사항】** 13도의군·성명회 등 항일결사단체를 조직하였다. 또한 1914년에는 권업회가 주관하여 대한광복군정부가 건립되어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 13도의군은 1910년 6월(음력 5월) 우수리스크 부근의 추풍 재피거우에서 편성되었다. 13도의군의 실제 전투력을 지녔던 장의군(彰義軍)과 장의군(壯義軍) 두 부대로 편제되었다. 이범윤이 창의군 총재, 경성의병 출신의 이남기가 장의군총재로 각각 선임되어 도총재 유인석의 지휘를 받았다. 그리고 이상설은 외교통신원으로 13도의군의 사무와 조직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였다. 13도의군의 활동기간은 8월 경술국치 때까지로 불과 2,3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유인석과 이상설은 대규모 항일전을 전개할 계획하에 고종에게 연명상소를 올려 내탕금으로 군자금을 지원해줄 것과 연해주로의 파천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1910년 8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신문사에 대한제국 멸망의 비보가 전해졌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한인 700여 명이 한인촌(개척리)의 한인학교에 모여 비상시국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한의 국민된 사람은 대한의 광복을 죽기를 맹세하고 성취’할 것을 결의하고 성명회를 조직하였다. 아울러 일본정부에는 국제공약의 배신을 맹렬히 비난하는 공한을 보내고 각국 정부에는 ‘합병무효’를 선언하는 전보와 8,6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이 연명한 성명회 선언서를 발송했다. 성명회가 이처럼 활발한 반일운동을 전개하자 일제는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주요인물의 체포와 인도를 요구하였다. 러시아당국은 성명회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항일운동을 탄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성명회는 1910년 9월 해체되고 말았다. 그 외 1911년 이종호·이상설·최재형·홍범도 등을 주축으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자들의 발기로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가 창립되었다. 또한 1914년 연해주 이민 50주년이 되는 해에 대한광복군정부가 건립되었다. 대한광복군정부는 민족의 군대인 독립군을 지도하여 일제와 독립전쟁을 결행하기 위한 '군사정부'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대한광복군정부의 모체가 되는 권업회와 함께 1914년 9월에 해체되고 말았다.

**【경과·변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이후 재만독립군은 연해주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공산세력과 항일공동투쟁을 위해 자유시에 집결하였다가 자유시참변을 겪었다. 그러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세력들은 러시아혁명의 주축세력들과 연합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수많은 독립군들이 만주지역으로 돌아와 새로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의의】** 3·1운동 이후 연해주지역은 서북간도지역과 함께 독립군기지를 개척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서북간도를 포함하는 남북만주지역 독립군에게 공급되는 무기 대부분이 연해주로부터 조달되었다. 또한 대한국민의회가 성립되어 항일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함께 1920년대 조국독립운동에 적지 않은 자취를 남겼다.

**【핵심어】** 연해주지역 독립운동/독립운동기지 개척/13도의군/성명회/권업회/대한광복군정부/자유시참변

**【참고문헌】**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만주노령지역을 중심으로-』(일조각, 1884);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1990); 윤병석,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교문사, 1994);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탐구당, 1995); 박환, 『재만한인민족운동사』(국학자료원, 1998);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경인문화사, 2008); 반병률, 「노령연해주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1905~1911)」, 『한국근현대사연구』 7(1997).

**【사진자료】** 212. 블라디보스톡 고려인 거리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여 러시아에 소비에트정부가 수립되었다. 연해주동포들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한인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배경】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7년 3월 러시아에서 2월혁명이 일어나 차르정권이 타도되고 러시아는 케렌스키의 임시정부, 볼셰비키, 멘셰비키, 사회혁명당, 군부 등 여러 세력이 각축을 벌였다. 그러나 1917년 11월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표기구인 소비에트가 수립되었고 볼셰비키가 소비에트를 장악하였다.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볼셰비키가 지배하는 극동지방 소비에트는 이후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전개】 10월혁명으로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탈하고 전 러시아가 적화되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연합국은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의 혁명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를 계기로 바이칼호 이동 극동 러시아지역을 분리하여 장악하려고 획책하였다. 극동 소비에트 정권은 일본을 비롯한 연합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한인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인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유난히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과】 1918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극동 소비에트정권 수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혁명에 대한 한인들의 태도는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이동휘와 양기탁, 이동녕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되었고 이동녕과 양기탁 등을 지지하는 참석자들은 한인 무장부대가 볼셰비키혁명 가담에 반대하여 회의에서 퇴장하였다.

이동휘를 중심으로 한 잔류자들은 볼셰비키와 협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 노선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이들은 회의를 속개하여 볼셰비키에 찬동할 것을 주장한 일부 인사 이동휘, 박애, 이한영, 김립, 오성묵, 이인섭, 유스테판, 오바실리, 임호, 전일, 김알렉산드라 등의 발기로 1918년 5월 11일 한인최초의 사회주의혁명 정당인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조직하였다. 한인사회당은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볼셰비키세력의 지원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위군 조직,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백위파와 이를 지원하는 시베리아 출병 일본군과 싸웠다.

**【의의】** 러시아혁명 이후 연해주동포들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한인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조직된 한인사회당은 한국민족운동에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고 볼셰비키세력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핵심어】** 러시아혁명/연해주 동포/2월혁명/볼셰비키/소비에트/사회주의/10월혁명/한인사회당/이동휘/김알렉산드라/한인사회주의운동

**【참고문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편,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주)교문사, 1994); 권희영, 『한인사회주의운동 연구』(국학자료원, 1999); 임경석, 「고려공산당연구」(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93);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범우사, 1998).

**【사진자료】** 213. 19200301 신한촌 3.1운동 1주년 기념식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운동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러시아혁명 이후 연해주지역에는 한인빨치산부대가 창설되어 시베리아를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에 대항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배경】** 러시아 10월혁명 이후 혁명의 시베리아 극동지역 파급을 막기 위해 일본군이 파견되어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시베리아를 점거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해주 수청에서 고려인총연합회가 조직되었다. 러시아 한인사회에서도 1918년 말 철혈광복단 명의로 한인부가 조직되어 ‘독립군의병대’ 조직에 착수하였다. 한인부는 박춘성·한창걸·박진순 등이 발기하여 러시아 임시혁명사령부와 연계하여 한인빨치산부대원들을 모집하여 수청지역의 대표적인 원호촌인 신영동과 다지우미마을에서 한인빨치산부대가 조직되었다.

**【전개】** 한창걸부대·혈성단 등 한인빨치산부대는 일본군과 일제가 지원하는 러시아 백위파군과 싸웠다. 3·1운동 이후 일시 활기를 띠었던 한인빨치산운동이 일시 해산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창걸부대 등 한인빨치산부대는 1919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한인사회당과 연계하여 한인부대를 재조직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과】** 1920년 4월참변으로 일본군이 연해주일대의 러시아혁명 세력과 한인세력을 무력 공격하여 러시아인들과 한인들을 체포·구금·학살을 자행하였다. 4월참변으로 연해주지역 한인독립운동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한인단체인 대한국민의회·한인사회당·노인단·애국부인회 등의 주요간부들은 러시아혁명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흑룡주나 만주 또는 농촌지역으로 도피하여 재기를 도모하였다. 4월참변 이후 일본군과 백위파의 공세가 강화되어 타격을 받고 1920년 말까지 침체상태에 빠진다. 1921년

수청에서 연해주 한인빨치산부대들의 통합운동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수청지역에서 창립된 한창걸부대, 훈춘에서 이동해온 신민단부대, 그리고 추풍에서 옮겨온 혈성단부대가 통합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통합부대는 김경천을 사령관으로 하여 병력 수는 약 300명이었다. 연해주 추풍지역에는 혈성단을 비롯한 한인빨치산부대들과 한족공산당군대 외에 규모는 작지만 다른 독립군부대들이 활동하였다. 이범윤이 이끌던 의군부(義軍府)와 임병극이 지휘하던 의용단(義勇團)이 대표적인 부대이다.

**【의의】**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연해주지역에서 한인빨치산부대가 조직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4월참변으로 한인빨치산부대는 침체에 빠졌으나 통합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외 한족공산당군대와 독립군부대들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핵심어】** 연해주/파르티잔운동/한인빨치산부대/4월참변/한족공산당군대/항일운동

**【참고문헌】** 김승화, 「쏘베트정권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국제주의자들(1917~1922)」, 『레닌기치』 1972년 8월 30일; 반병률, 「러시아혁명과 한인사회의 변화」,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 상(국사편찬위원회, 2008);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 무장투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사진자료】** 214. 연해주 스찬지역에서 활약한 한인빨치산 부대  
215. 연해주 스찬지역에서 활약한 한창걸 부대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37년 러시아 스탈린정권에 의하여 연해주의 약 20만 한인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사건.

**【배경】** 자유시참변 이후 러시아한인은 주로 적위군 편에 가담하여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철수하는 1922년 10월까지 연해주 도처에서 백위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한인은 소비에트체제에서 소수 민족으로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다. 그 중국이 1937년 스탈린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였다. 러시아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는 1926년에 고안되어 1930년부터 1937년까지 소련에 의해 시행된 첫 번째 민족 이주정책이었다.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계획은 1930년대 일본의 아시아진출 야욕이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일본과 내통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전개】** 1926년에 성안된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계획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1930년 이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1930년을 시작으로 한인들을 북쪽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또한 소련당국은 1935년부터 3년 동안 2,500명의 한인들을 ‘일본 간첩’이란 혐의로 총살하기도 하였다. 한인들의 대규모 강제이주는 일본의 침략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1937년까지 연기되었다.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의 궁극적인 의도는 러시아 한인들은 연해주에서 완전히 추방·차단하려는 것이었다. 1937년 9~10월 동안에 연해주 전지역에 걸쳐 한인 23만여 명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화물차량에 실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지도자 혹은 지식인 2,500여 명이 숙청되거나 처형되었다.

**【결과】**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계획은 1937년 8월에 일본 첩자의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체적인 목적과 함께 재개되었다. 1937년 9월에서 10월까지 구소련 당국은 극동 러시아로부터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만 명의 한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한인강제이주의 법적근거는 구소련 인민위원회와 소비에트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공동법령에 스탈린이 서명하였다. 러시아한인들은 카자흐공화국,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37년 10월 25일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가 종료되었다. 강제이주된 한인들 숫자는 총 171,781명의 36,442가구였다. 이로써 1860년대 이래 대규모의 한인사회가 자리잡았던 연해주에서는 한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참극의 역사로 종막을 고했고 말았다.

**【핵심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스탈린정권

**【참고문헌】** 김승화(정태수 편역), 『소련한족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부가이 니콜라이 표도르비치(최정운 역, 류한배 감수), 『재소한인들의 수난사-해설 및 관계공문서』(세종연구소, 1996);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편,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주)교문사, 1994); 반병률, 「재소한인 강제이주 이전의 한인사회의 동향, 1923~1937」,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11(1997); 권희영, 『한인사회주의운동 연구』(국학자료원, 1999); 블라지미르 김(김현택 역), 『러시아한인강제이주사』(경당, 2000);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이주사-연해주로의 유랑,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한국사 시민강좌』 28(일조각, 2001).

**【사진자료】** 216.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미주지역 독립운동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하와이와 북미, 멕시코와 쿠바 지역 등 미주 동포들이 전개한 독립운동

**【배경】** 1903년 1월 한국인을 실은 최초의 이민선이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한국인의 동포사회가 하와이를 시작으로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지역에까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주 지역은 태평양이 가로놓여 한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서 이곳 한인들이 항일민족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웠지만 반면 일제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미주 한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었다.

**【전개】** 미주지역으로 이민한 한인들의 이민동기는 가난을 극복하고자 한 경제적 목적, 미국에서 신교육을 받으려는 교육적 욕구 등 다양했다. 미국으로 유학 온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이주민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하고 조국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결집하였다. 미주한인들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짧은 시일 안에 세계적인 부강 국가로 발전하였음을 교훈삼아 독립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미주한인사회가 한국독립운동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음은 경제력에 있었다. 초기 하와이 이주한인들은 사탕수수농장에서 하루 10시간, 한달 평균 25일의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 받으며 이민생활을 했지만 국내보다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다. 하와이에서 계약이 끝난 노동자들은 1904년 이래로 북미지역으로 이주하여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각 지방과 중부지방에까지 한인사회는 확대되어 나갔다. 이들 각지의 한인공동체는 한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활동의 터전이 되었다.

한편 1910년 11월부터 1924년 5월 이민이 금지되기까지 1,100명의 사진신부가 미주로 이주해 왔는데, 자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이민선을 탄 용감한 사진신부들은 한국여

성 특이의 강인함과 강한 생활력, 그리고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 한인사회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그리고 한인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한편 미주지역에서는 많은 한인단체들이 조직되었으나 통일운동이 일어나 마침내 1910년 5월 대한인국민회로 통합되었다. 대한인국민회는 미주한인의 최고기관에서 나아가 전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생명'이라는 의식 아래 2세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출세와 영달보다는 '조국독립'이라는 공적 가치에 두고 정체성을 키워주고자 국어교육과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열의를 다하였다.

**【결과 및 의의】** 미주한인들은 한인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각자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조국독립을 위한 각종 명목의 독립의연금을 아낌없이 내어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미주한인의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미주한인사회가 조국해방의 그 날까지 끊질긴 독립투쟁을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Arther L. Gardner, *The Koreans in Hawaii: An Annotated Bibliography*(Social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1970); 方善柱, 『在美韓人の 獨立運動』(한림대 출판부, 1989); 金元容, 『재미한인50년사』(캘리포니아 리들리, 1959);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일조각, 1990); 이덕희, 「숨겨진 이민사를 찾아서 ④-2」, *The Korea Times Hawaii Edition*(1998.3.10).

- 【사진자료】** 217. 공립협회 창설 멤버  
218. 1909 네브라스카 헤스팅스대학 소년병학교 훈련 광경  
219. 1914 하와이 대조선군민군단의 시가행진  
220.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으로 창설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  
교관들(가운데는 노백린 군무총장)  
221. 1924 흥사단원동임시위원부가 운영한 난징 동명학교  
222. 미주 한인부인회의 시가행진  
223. 흥사단 멕시코 지회 단원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대한인국민회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 대한인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10년 5월 미국에서 결성된 미주 한인사회 항일독립운동의 최고 지도 단체. 미주 한인사회의 안녕과 자치를 신장하면서 조국독립을 최고목표로 삼았다.

**【배경】** 1903년 9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은 환난상규(患難相扶)를 목적으로 ‘한인친목회’를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북미 한인 최초의 결사였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한일의정서를 강제하고 한국 침략을 노골화하자 한인친목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1905년 4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미 최초의 민족운동단체인 공립협회(共立協會)를 결성하였다. 공립협회는 1909년 2월 1일, 하와이 합성협회와 통합하여 국민회(國民會)를 창립하였고 1910년 2월 10일에 국민회는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와 통합하였고 5월 10일에 대한인국민회로 단체명을 개칭하고 명실상부한 해외 한인의 최고 통일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인국민회는 공립협회에서 주도하던 민족운동을 계승하였다.

**【활동사항】** 1910년 5월, 발표된 「대한인국민회 헌장」에는 “교육과 실업이 진발하여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여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 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함”이라 하여 대한인국민회 설립의 궁극적 목적이 조국 독립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해 버리자 북미지방총회에서는 10월에 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 멸망을 공식화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에 의한 자치제도 실시와 병역·납세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하며 대한제국을 대신할 한인 최초의 국민국가에 바탕을 둔 임시정부의 건설을 제창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각지에 국어학교를 세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쳤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보존활동을 아울러 전개하여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며 항일의 기세를 멈추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 소식에 접한 대한인국민회는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3·1운동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마침내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하자, 이제까지 대한인국민회가 행사하던 권한과 역할을 망설임 없이 임시정부에 일임하였다. 임시정부가 민적등록을 공포하고 재정 마련과 독립운동 지원을 위한 인구등록을 행하자, 북미·하와이·멕시코 재류 동포의 인구 조사와 등록 사업에 착수하였다. 대한인국민회의 인구등록은 반드시 인구세를 거두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국민개병(國民皆兵)의 목표 아래 독립전쟁에 참전할 군인양성을 위해 개개인을 국민으로 파악하여 인구등록에 올렸다. 대한인국민회는 국치 직후에 국권회복운동을 벌이면서 미주한인의 권익신장을 착실히 도모하였으며, 민족교육과 실업권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현한 이후에는 임시정부의 자리를 내어주고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한편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로 발간한 『신한민보』(新韓民報)는 국내외 각지로 반포되어 일제하 한민족의 항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 산하 북미·하와이·시베리아·만주 등 4개 처의 지방총회와 멕시코·쿠바 등지의 지방회를 포함하여 총 116개 처에 지방회를 두었다. 대한인국민회는 여타 독립운동 단체들처럼 지도자의 개인적 명망에 의존하지 않고 민주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선진적 면모를 통해 소중한 민주주의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재미한인의 최고단체이며 임시정부를 의미하는 ‘가정부’(假政府)와도 같았다. 한국의 총영사관과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재미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도 충실하였다. 국치 이후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한인 관련 사건에 대해 일본 영사의 간섭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다. 마침내 미국정부로부터 한인의 자치기관으로 공인받기까지 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국권을 상실한 국내외 한민족의 항일투쟁 기간 중에 임시정부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독립운동의 유일한 최고 중추기관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중요 인물들을 만주와 연해주에 파견하여 이른바 ‘원동’지방 한인사회의 민족운동세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세계각지에 총회를 두어 그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경과·변천】**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인국민회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재미한인 단체의 역량 집중과 통일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다른 단체들에 비해 실력이 월등했던 대한인국민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개전한 이후 재미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인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의】** 대한인국민회는 뛰어난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미주만이 아닌 해외한인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전 해외동포사회의 준정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한인사회의 안녕과 자치를 신장하는 기구로 출발하여 전 세계에 한인들을 조국독립이라는 목표 안

으로 결집시켰으며 조직 운영을 통해 소중한 민주주의 훈련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핵심어】** 대한인국민회/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참고자료】** 盧在淵, 『在美韓人史略 上』(羅城, 1951);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Readly Calf., U.S.A, 1958);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一潮閣, 1990); 金度勳, 「1910년대 초반 미주 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1999).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구미위원부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인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3·1운동 후 1919년 8월 25일에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담당 기관. 원래의 명칭은 구미주차한국위원회(歐美駐劬韓國委員會, Korean Commision to America and Europe)이다.

【배경】 3·1운동이 일어난 후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조직·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승만은 1919년 6월 ‘대통령’의 명의를 사용하여 구한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열국에게 한국에서 공화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1919년 8월 25일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직권으로 워싱턴에 집정관총재사무소로써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대미외교 업무를 수행하였다. 1919년 9월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고 역시 임시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임되자 같은 달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었던 주파리위원부와 필라델피아에 설치되었던 대한민국통신부를 통합, 구미위원부를 조직하였다.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로부터 공식 추인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그 존재는 기정사실화됨으로써 임시정부 산하기관이 되었다.

【활동사항】 구미위원부는 설립 초기 워싱턴에 임시대통령 공관과 위원부 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북미와 하와이·멕시코·쿠바 등지의 교민사회에 ‘지방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한국통신부’와 프랑스 파리의 ‘한국대표부’를 구미위원부의 관할 아래에 두었다. 구미위원부 워싱턴사무소에는 위원 3인과 법률고문 1인 그리고 사무원 2인이 배치되었다. 법률고문으로는 미국인 돌프(Dolph, F. A.)·스테거(Staggers, J. W.)·윌리엄스(Williams, J. J.)가 위촉되었다. 특히 돌프는 구미위원부의 공식문건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던 헐버트(H. B. Hulbert)와 벡(S. A. Beck)은 ‘선전원’으로서 각종 집회에서의 연설과 강연을 통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설립 초기에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주력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냉담으로 전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 문제를 인식시켜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바꾸고, 일제의 야만적인 학정을 폭로하고 미국 시민 중 동조자를 얻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3·1운동 당시 일본의 야만적 행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영문월간지 『한국평론 Korea Review』과 단행본 『어린이 순난자』, 『대한정신』 등 각종 선전책자를 발간하고 강연회·연설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세계 여론화되는 한편, 미국 국회에 네 차례에 걸쳐 의제로 상정되어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다.

또한 미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후원하기 위한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에 주력하였다. 한국친우회는 1921년 7월경 미국 내 21개 지역과 영국 런던 및 프랑스 파리에 각각 1개씩의 지부조직을 갖고 회원 총수는 25,000명에 달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구미위원부는 미의원들에게 각종 청원 문건을 제출함으로써 의회에서 한국문제가 공식적인 의제로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구미위원부는 교민들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지방위원부를 설치하고 조직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9월부터 1922년 4월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위원부의 총수입은 15만 달러에 달하였다. 구미위원부의 수입금은 워싱턴의 대통령공관과 구미위원부 사무소, 필라델피아·파리·런던 등지에 있는 통신부의 유지비와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 지출되었고 상해의 임시정부에 대한 송금은 전체 수입금 중 15퍼센트 정도를 차지했다.

구미위원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 열강과의 독립외교활동을 강조하여 국제연맹과 그를 이은 5대 열강이 모인 워싱턴군축회의(일명 태평양회의, 1921.11~1922.2)에서 한국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자 임시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한국대표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구미위원부는 국제회의가 열릴 때 마다, 참가하여 일제의 배척과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193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이 극동평화의 관건임을 설파하였다.

**【경과·변천】**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적법한 절차 없이 이승만이 자의로 설치하고 독단으로 운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알력이 잦았다. 더욱이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 업무를 수행, 그 부당성이 노출되었다. 1925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이승만에 의해 계속 존속되다가 1928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그 후 이승만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1934년 이승만이 임기정부 외교위원에 선출됨으로써 다시 임시정부와 연계 활동하게 되었다. 1941년 4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를 계기로 이승만은 대미외교의 전권(全權)을 갖게 되면서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 외무부 산하의 ‘주미외교위원부’로 이름을 바뀌었다.

**【의의】**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를 대신하여 미국간 중계 연락업무와 국내와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업무활동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주미, 유럽이 동포들과 한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홍보와 모금 활동을 펼치고 한국의 독립 승인 외교 활동 등을 펼친 임시정부의 외교사절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핵심어】** 구미위원부/한국친우회

**【참고문헌】** 金元容, 『재미한인50년사』(캘리포니아 리들리, 1959); 申載洪,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미외교」, 『한미수교100년사』(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 1982); 方善柱, 『재미한인의 독립운동』(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高珽杰, 「구미주차한국위원회의 초기 조직과 활동, 1919~1922」, 『역사학보』 134·135(1992); 洪善杓, 「서재필의 독립운동(1919~1922)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1993).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침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인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열강간의 해군군비제한 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반 현안문제를 다루고자 1921년 11월 12일부터 이듬해 2월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 이 국제대회에 임시정부는 대표단을 파견하고 독립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원인·배경】**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전통적인 유럽 열강은 쇠퇴한 반면, 미국과 일본이 새롭게 부상했다. 특히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5대 강국의 반열에까지 오른 일본의 국력신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일본의 팽창은 이 지역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미국을 자극하면서 해군확장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턴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의 식민지 약소민족들을 크게 고무되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동문제가 일본의 한국병합에서 비롯되는 만큼 워싱턴회의에서 한국문제를 당연히 다루어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대리 신규식은 워싱턴회의가 “우리에게도 절실하고 중대한 생사(生死)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상 임시정부가 직접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없기에 임시정부는 중국의 광둥정부(廣東政府)와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 한중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와의 제휴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대(對)태평양외교후원회’가 만들어져 워싱턴회의 참가를 위한 준비활동을 전개하였다.

**【발발】** 1921년 7월 11일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하딩(Warren G. Harding)은 군축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반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국제회의의 개최를 관련

국들에게 제의하였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중국·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 등 9개국이 이 제안을 수용하여 워싱턴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임시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대표단'이 구성되었는데, 단장은 임시대통령 이승만, 구미위원부의 임시위원장인 서재필과 위원 정한경은 부단장과 서기를 맡았다. 구미위원부의 돌프와 토마스도 각각 고문과 특별고문의 자격으로 대표단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10월 1일자로 미국대표단에 청원서를 보내어 한국대표단이 회의에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거나 아니면 한국문제만이라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열강을 상대로 다각적인 청원외교를 펼쳤다. 12월 1일에는 「워싱턴군축회의에 드리는 한국의 호소」를, 이듬해 1월 25일에는 「한국의 호소: 속편」 등의 청원서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열강의 반응은 냉담했다.

**【전개】** 3개월 가까이 계속된 회의에서는 해군군비제한위원회와 태평양·극동문제위원회로 나뉘어 토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몇 가지 조약과 협정이 체결되었다. 해군군비제한과 관련한 '5개국조약'에서는 1만 톤급 이상 주력함 톤수의 비율을 영국(5): 미국(5): 일본(3): 프랑스(1.75): 이탈리아(1.75)로 하기로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력함은 기존 또는 건조 중인 것을 불문하고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한편 1902년 이후 지속되어 온 영일동맹을 폐기하는 대신에 "태평양 도서에 있어 각 체약국의 영토권을 서로 존중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미국·영국·일본·프랑스 사이에 「4개국조약」이 체결되었다. 중국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시한 4개조 원칙-즉, 중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 안정된 정권의 수립, 각국 상업의 기회균등, 특권·특별이익의 배제 등-에 기초하여 '9개국조약'이 체결되었다.

**【결과】** 중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의 결과, 산둥반도에 독일이 갖고 있던 조차지를 중국에 환부키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일본 사이에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 서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협조를 지향하는 이른바 워싱턴체제가 형성되었다. 회의의 마지막 날 하딩은 참가국 대표들에게 세계평화를 위하여 외교상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대표단은 국내의 종교·사회단체 대표 및 전국의 13도 지역대표 총 373명이 서명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라는 문건까지 공개하고 미국 각처에 조직된 바 있는 '한국친우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일본유학생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와 워싱턴회의에 참가한 열국의 대표단을 상대로 많은 청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다.

**【의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자, 국내의 민족주의진영 내부에는 일본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민족개량주의 노선이 고개를 드는 한편 사회주의세력 또한 그 지지기반을 넓혀가면서 이념과 노선상의 분화·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중국관내에서는

외교 및 선전활동에 치중해온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대표회의 소집요구가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 회의의 결과로 워싱턴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일본은 기득권의 일부를 상실하는 했으나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핵심어】** 워싱턴군축회의/해군군비제한/워싱턴체제

**【참고자료】** 金景昌, 『東洋外交史』(집문당, 1982); 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東京: 原書房, 1966); 具汰列, 『한국 국제관계사연구』 제1권(역사비평사, 1995); 李炫熙, 「태평양회의에의 한국외교 후원문제」, 『한국사논총』 1(성신여대, 1976); 方善柱, 「1921~22년의 워싱턴회의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6(1989); 高珽然, 「구미주차한국위원회의 초기 조직과 활동, 1919~1922」, 『역사학보』 134·135(1992).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41년 4월 20일에 열린 ‘해외한족대회’에서 미국 정부와의 외교교섭을 맡을 기구로 출범한 주미외교위원부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과 광복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설립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국외의 독립운동 진영은 다시금 연합전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원동지방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외 한족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비한 독립운동의 진로를 협의하기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교섭을 전담할 기구로서 주미외교위원부를 워싱턴에 설립하였다.

**【활동사항】**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주미외교위원부는 곧바로 대미교섭 활동에 들어갔다.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장인 이승만은 미국의 정계·언론계·학계 및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親韓會)의 지원을 받으며 미 국무부·군부·정보기관들과 접촉하였다. 주미외교위원부는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한미협회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한인자유대회’(Korean Liberty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미국 각처에서 온 한인 100여명과 한미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대통령과 미의회에 제출할 것 등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이 연합국들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이 한국광복군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승

만은 미정부에 접촉하여 미주한인과 광복군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군사계획안을 제시했다. 임시정부의 참전 외교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미주에서는 한인청년들과 유학생들로 구성된 '자유한인부대'를 창설하고, 극동에서는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을 미군의 지휘체계 속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 미육군 전략첩보국(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OSS)과 접촉했다. 이승만은 이때 극동에서 2만 5,000명의 병력을 바로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5,000명씩의 추가 증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과·변천】**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주미외교위원부의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중한민중동맹단의 대표 한길수(韓吉洙)는 중국관내의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선전하면서,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국민회가 주도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승만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미주한인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대미 외교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자 중경(重慶)의 임시정부는 1944년 5월 국무회의에서 김구 주석 이하 각부 부장들로 구성된 '미주문제선후해결방침위원회'(美洲問題善後解決方針委員會)를 구성하고,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방침을 시달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그 해 10월 미주에서는 동지회 및 그 계열단체들만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대표대회'가 열려 위원장 김원용(金元容)을 위시하여 새로운 외교위원 15명을 선출하였다.

한편 이승만은 임시정부에 전보를 보내 만약 자신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하면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임시정부는 동지회측이 불참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주 전체대표대회의 인선을 백지화하고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외교위원 명단을 새로 통보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독자적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의의】**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 승인과 광복군에 대한 지원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미국에서 한국인의 독립열망과 임시정부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외교적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비록 신탁통치라는 과도적 단계를 설정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독립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1943년 12월 1일 전후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연합국 열강의 카이로선언이 발표될 수 있었다.

**【핵심어】** 태평양전쟁/해외한족대회/주미외교위원부/재미한족연합위원회

**【참고문헌】** 高珽然, 「제2차 세계대전기 재미한인사회의 동향과 주미외교위원부의 활동」,

『국사관논총』 49(1993); 具沃列, 『한국 국제관계사연구』 2(역사비평사, 1995); 金元容, 『재미  
한인50년사』(캘리포니아 리들리, 1959).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1941년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에 결실로 성립된 독립운동의 연합단체이다. 9개의 참가 단체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배경】** 1940년 9월 북미 대한민국민회는 하와이의 대한민국민회와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에 미주와 하와이 각 단체의 연석회의를 제의했다. 그리하여 11월에 열린 연합운동 준비회에서 연합기관을 조직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1941년 4월 20일부터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는 8일간에 걸쳐 북미와 하와이의 대한민국민회와 동지회, 중한민중동맹단, 대조선독립단, 한국독립당하와이총지부,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연합회,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대한여자애국단 등 9개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외한족대회에서는 ① 독립전선 통일에 관한 문제, ② 대한민국임시정부 봉대(奉戴) 문제, ③ 군사운동에 관한 문제, ④ 대미 외교기관 설치 문제, ⑤ 미국 국방공작 후원, ⑥ 재정방침에 관한 문제, ⑦ 연합기관 설치 문제, ⑧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구성, ⑨ 독립금 수봉(收捧)에 관한 문제 등 9개조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각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활동사항】**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고조된 독립운동의 열기로 미주 동포사회의 독립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독립금으로 6만 달러를 모금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3분의 2를, 외교위원부에 3분 1을 지원하였다. 미주와 임시정부 간에 연락사무를 담당하고 임시정부의 대외활동 지원, 연합국의 대일항전 승리를 위한 정보 수집과 임시정부 승인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중경(重慶)에 특파원 파견을 계획했으나 이 계획을 반

대한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또한 재미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인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일본인과 분별하도록 하였다. 1942년 4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에 한인경위대(일명 맹호군)를 결성하여 한인의 대일항전 의지를 과시했으며 8월 29일 국치기념일을 맞이해서는 로스앤젤레스 시청에 태극기 현기식을 거행하여 한국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다. 그리고 미국국방을 후원하기 위해 국방공채 발매활동과 각종 위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과·변천】** 재미한족연합회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의사부와 북미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집행부로 나누어져 있고 위원제로 운영되었다. 연합회는 참가단체의 회원수 비례에 따라 대표자 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회원수가 많은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43년부터는 회원 50명당 1인으로 확대하여 각 단체의 많은 대표들이 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1944년 주미워싱턴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주미외교위원부와는 다른 외교활동에 나섰다. 한인포로 및 재미한인에 대한 군사작전 참여 노력을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나 미국 내 주요 단체들에게 한국문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선전,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둘러싸고 이승만과 한길수 간의 분쟁이 일어나자 중한민중동맹단과 동지회가 탈퇴하였다. 그리고 워싱턴외교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자, 이에 반발한 민족혁명당 미주지부와 북미유학생총회가 탈퇴함에 따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위축되었다. 한편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둘러싸고 이승만을 지지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극심한 분열상태에 빠진 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이후에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가재건사업에 힘을 쏟았다.

**【의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국방 후원활동을 전개하여 일제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을 도와줌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한국의 해방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평양전쟁 시기 재미한인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신분을 보장받음으로써 일본인으로 취급받았던 인식을 불식시키고 미국의 우방민으로 인정받았다.

**【핵심어】** 해외한족대회/재미한족연합위원회/미국방후원활동

**【참고문헌】**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현대한국학연구소 학술총서 8,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유영익,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족대회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일본지역 독립운동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재일유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후 일본지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20년대 일본지역 독립운동은 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 새로운 사조가 수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배경】** 재일한국인들은 강제병합 이후 차별과 모순구조 속에 처해 있었으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대응해 나갔다. 일제의 항거는 계층별 구분이 없었다. 재일유학생들은 작게는 교내에서, 크게는 외부 독립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반일운동을 전개하였고, 노동자들은 도주나 동맹파업·대중운동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전개】** 3·1운동 이후 유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만세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다양한 사조를 받아들여 관심의 폭을 사회·노동운동으로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 흑도회 등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일본지역 의열투쟁은 1920년대 양근환의거·김지섭의거·박열의 일왕폭살의거, 1930년대 이봉창의거가 대표적이다. 의열투쟁 외에도 각종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25년에 결성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 아래 재일본조선청년동맹·학우회·신간회·근우회·신흥과학연구회·일월회·삼월회·조선인단체협의회 등 한인대중단체와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등 전위조직의 연대 속에서 추진되었다.

**【의의】** 재일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등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민족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독립운동세력들은 장기적인 투쟁을 위해 만주나 노령으로 이동하여 무장투쟁세력에 투신하거나 일본과 국내를 왕래하며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독립운동지도층과 재일한인노동자 대중이 합치되어 재일한인 독립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핵심어】** 일본지역 독립운동/2·8독립운동/3·1운동/사회주의/무정부주의/의열투쟁/노동운동

**【참고문헌】** 김기주,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느티나무, 1993);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한인운동연구』(국학자료원, 1996);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한울아카데미, 1998).

**【사진자료】** 224. 일본 천황이 기거하는 황궁 앞 이종교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의사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키워드】** 임시정부의 수립과 해외독립운동

**【전시항목】** 해외독립운동

**【소항목】**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만주의 한인사회 형성	연해주 항일 파르티잔 운동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봉오동, 청산리대첩	미주지역 독립운동
간도참변과 만주독립군의 고난과 재편	대한민국민회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변화	구미위원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워싱턴회의와 한국대표단 활동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태평양전쟁과 주미외교위원부
조선의용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일본지역 독립운동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동포	● 관동대지진과 한인학살

**【정의】** 1923년 9월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지역 일대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자 한국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통해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자극하여 한국인 6,000여명을 학살한 사건

**【배경】** 1920년대 일본에서는 사회운동이 활발해져 1921년에는 일본노동자총연맹이 결성되고, 1922년에는 일본공산당이 조직되었다. 관동대지진 당시 동경 등의 공업지대에서는 일본인 하층노동자들이 불황의 불안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상대로 보고 반감을 가졌다.

**【발발】**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한국인 내습’이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격히 전파되면서 일본의 군·관·민들이 한국인들을 학살하게 되었다. 한인들을 학살한 유언비어는 9월 1일 오후 1시경부터 유포되기 시작하여 2일과 3일 사이에 떠돌았다. 그 내용은 주로 한국 사람들이 관동대지진의 혼란을 틈타서 폭행·약탈·방화·부인능욕·폭탄투척·집단습격·우물에 독극물 투약 등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특히 9월 1일 오후 3시경에는 사회주의자 및 한국인의 방화가 많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일본인들이 유언비어를 믿었던 원인으로서는 다수가 천황제 국가의 충실한 신민으로 위로부터의 말을 맹신하고 국가가 인정하면 주저 없이 한국인·중국인을 학살할 수 있는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 그 근거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민중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한국·중국에 대한 멸시가 있었던 것이다.

**【전개】** 한국인 폭동에 관한 유언비어는 9월 1일 저녁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과되었다. 일본정부의 고지(告知)에 흥분한 일본 민중은 9월 1일 저녁부터 한국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군경이 학살을 자행하고 군인과 경찰의 지도로 자경단을 구성하여 한국인이라고 확인되면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희생자들은 거의 일본어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여기에는 어린이나 임신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학살방법은 죽창이나 철장·몽둥이·총칼 등으로 닥치는 대로 학살하여 강물에 버리거나 소각 또는 매장 등으로 학살 사실조차 철저하게 은폐하였다.

**【결과】**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학살은 일본정부의 유언비어에 일본인들이 넘어가 관동대지진을 빌미로 최소한 6,000여 명의 한국인이 학살당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본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거나 책임을 물은 반면 한국인 학살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또한 일본정부는 진상조사는 커녕 한국인 학살에 대해 한마디 애도의 말도 없었고 보상은 말할 것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핵심어】** 관동대지진/칸토일대/도쿄/요코하마/유언비어 전파/한국인 학살

**【참고문헌】** 강덕상, 『관동대진재』(중앙공론사, 1975); 김건, 「학살」, 『한국독립운동사』 3(국사편찬위원회, 1976); 이연,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조선인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7(1992).

**【사진자료】** 225. 19230901 관동대지진 당시 파괴된 도쿄

226. 관동대지진의 참상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5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키워드】** 캡슐: 대한민국 국호 제정과 임시헌법

**【전시항목】** 국호의 변천사

● 국호의 변천사	대한민국 임시헌법
대한민국 국호 제정	

고대 한반도와 만주 일대 및 요동반도에 있었던 한민족의 국가 이름에는 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 불리고 있는 것은 고려(高麗)·조선(朝鮮)·한국(韓國)이다.

고려는 고구려에서 유래되었다. 고구려는 ‘고려국’ 또는 ‘고려’로도 나타난다. 발해인들도 일본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였고, 후삼국기 궁예(弓裔)에 의해 ‘고려’라는 국호가 다시 사용되었으며, 918년 왕건(王建)이 새로운 국가를 세웠을 때에도 국호를 ‘고려’라 칭하였다. 한국이 서양에 Korea로 통용되게 된 것은 고려왕조 때 사라센 국가의 상인들과 교역이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한다.

조선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된 나라 이름이었다. 산둥 반도 북쪽에 있었던 나라의 명칭이며, 중국 정사에서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에 조선전(朝鮮傳)으로 나온다. 조선은 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 1392년 이성계가 새 왕조를 개창하여 국호를 ‘조선’이라했으며, 1948년 분단된 북쪽에 세워진 정권도 ‘조선’이라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조선이라는 말은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해가 일찍 뜨는 동방의 나라(居東表日出之地故名朝鮮)’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호는 마한·변한·진한, 즉 삼한의 종족 명칭 또는 부족연맹체의 명칭에서 유래한다. 고려시대에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즉 전국(全國)을 뜻하는 칭호로서 ‘삼한’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였다.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의 결과 중국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헌법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1948년 8월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나라의 국호도 ‘대한민국’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연려기요(燃藜記要)』; 『산해경(山海經)』; 『사기(史記)』.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키워드】** 캡슐: 대한민국 국호 제정과 임시헌법

**【전시항목】** 대한민국 국호 제정

국호의 변천사	대한민국 임시헌법
● 대한민국 국호 제정	

1.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세계화의 물결이 동아시아로 밀려오는 시대를 맞아 조선에서는 쇄국과 개항, 수구와 개화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여기에 청국과 일본의 개입과 내정간섭이 심화되어 국권이 흔들리게 되었다. 청국과 일본은 조선을 두고 청일전쟁을 벌였으며, 승리한 일본은 민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김홍집의 친일파 정권을 세웠다. 일본의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고 1년간 그곳에 머물렀다. 이때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이 다투어 조선에서 이권을 빼앗아 갔다. 조선이란 국가의 위상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환궁한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국가의 위상을 일신하고 청나라로부터 자주를 선언하는 의미로서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때 국호에 ‘대한’이란 단어와 황제의 나라라는 의미의 ‘제국’이 결합하여 대한제국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을 갖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2.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망했다. 일본의 무단정치가 10년간 계속되던 중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의 와중이었던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정부수립을 결정했다. 이에 국회적인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국호와 연호를 정하여 헌법적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때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천명함으로써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정체는 민주공화제임을 나타내었다. 이는 잃어버린 나라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인 ‘제국(帝國)’이었으나, 이제 새로 되찾아 세울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민국(民國)’임을 선포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을 뿐 아니라 광복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데 정신적, 법통적 기초가 되었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강점에서 해방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한에서는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남한의 행정권을 이양받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산하에 법전기초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속에 헌법분과위원회를 두어 헌법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헌법 초안은 1948

년 5월 31일 최종 완성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6월 2일 30인의 헌법기초위원회와 10인의 전문위원을 선출하고, 6월 3일부터 본격적인 헌법안 심의에 들어가 6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6월 7일 헌법 제1장부터 제7장까지 축조토의를 진행했다. 그중 제1조 총칙에서 국호 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국호 안은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의 4개 안이었다. 결국 표결에 붙여져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2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다수가 대한민국에 찬성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7월 1일 제22차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국호는 원문대로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 4.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

##### 1) 조선과 한

조선이란 이름은 고조선으로부터 유래되어 가장 역사가 깊은 이름이다. 고려말 장기간 대몽항쟁을 치르면서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분립적인 역사전통을 뛰어 넘어 더 오랜 역사원류인 단군과 고조선으로부터 하나의 통일적 민족의식과 역사전통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런 의식에서 1392년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게 되었다.

한(韓)이란 명칭은 마한·변한·진한, 즉 삼한의 종족 명칭 또는 부족연맹체의 명칭에서 유래했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삼국을 통칭할 때 삼한으로 불렸으며, 고려시대에도 전국(全國)을 뜻하는 말로서 ‘삼한’이 널리 쓰였다. 이것은 ‘삼한일통(三韓一統)’의식의 표현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들어서자 중화문명의 정통성이 조선에 왔다는 의식을 갖게 되자, 역사의식도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버리고 기자조선-삼한(마한)-신라로 이어진 ‘한’ 계승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2) 대한

조선말 1897년 2월 황제국으로 국격을 높이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었다. 광무 황제는 즉위 조서에서 대한으로 한 이유로서 첫째, 고려의 ‘대통일’과 조선의 영토개척에 의한 ‘대일통(大一統)’ 국가 달성이라는 의미. 둘째, 예악과 법도가 중화문화를 이어받아 성리학의 도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 셋째, 어려운 시기를 맞아 독립의 기틀을 만들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선포했다.

3·1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광복의 그날까지 ‘대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희망이 되었다. 광복 후 새 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 논의 때 ‘대한’이란 이름으로 국호를 정하게 되었다.

##### 3) 민국

한말 독립협회의 자주독립운동기 서재필은 조선에서 민주국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했다.

1904년 이승만이 경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집필했을 때도 민주국가는 국민의 의식수준상 시기상조라고 하며,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었다. 고종황제는 독립협회의 의회설립 요구를 거부하고 1899년 광무황제는 서양의 절대왕정을 모델로 황제 1인에게 절대권을 부여하는 「대한국 제」를 반포했다. 그후 10여년 만에 대한제국이 망했다.

민중들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9년 3·1운동은 그 결정판이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외치며 독립운동에 나섰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민족공동체에 책임감을 갖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새롭게 건설될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1919년 4월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군주국가가 아닌 국민국가, 민주적 공화제 국가를 선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7월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박광용, 「우리나라 이름에 담긴 역사계승의식-한·조선·고려관」, 『역사비평』 21호, 1993;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7; ; 김혜수, 「해방 후 통일국가수립운동과 국가상징의 제정과정 -國號·國旗·國歌·國慶日 제정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5, 1997; 이완범, 「국호 ‘대한민국’의 명명」, 『황해문화』, 2008 가을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키워드】** 캡슐: 대한민국 국호 제정과 임시헌법

**【전시항목】** 대한민국 임시헌법

국호의 변천사 대한민국 국호 제정	● 대한민국 임시헌법
-----------------------	-------------

1919년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살던 국내외의 2,000만 한민족(韓民族)이 다 함께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을 위한 한민족의 의지는 자연히 빼앗긴 국권과 국가의 회복을 통하여 조직적인 국가차원의 독립투쟁을 갈망하게 되어 1919년 3월 17일 노령(露嶺)의 대한국민의회(決議案, 大統領制), 같은 해 4월 11일의 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헌장, 의원내각제), 같은 해 4월 23일의 한성정부(漢城政府:約法, 집정관총재제) 등이 수립되었다.

이 세 임시정부는 다시 1919년 9월 11일 상해의 임시정부가 개헌형식(통합헌법, 제1차 개헌)으로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고 한성정부와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운동추진기구로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국에 환국할 때까지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차의 임시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장’·‘약법(約法)’·‘헌법’ 및 ‘약헌(約憲)’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장래 국가를 목적으로 형성된 망명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문이 있는 것의 경우에는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3·1독립정신이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헌법은 체제면에서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잘 구비한 헌법전(憲法典)이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이 임시헌법전과 유사점이 많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

정부)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기하였고,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임시정부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므로 그 상호관계에서 법적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양영석,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 1919~192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尹炳奭, 「大韓民國臨時政府(1919~45) 研究」, 『亞細亞學報』 13(1979); 『憲法制定會議錄』 1(國會圖書館, 196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작성자】**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 1945년 8·15광복
-----------------------------------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침략전쟁에 광분하던 일제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참전으로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다.

일제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진공에 참여하여 전후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발언권을 확보하여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노력은 아쉽게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을 예견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를 전개하였다. 1940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광복군을 조직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일본의 패망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즉각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준비를 시작하였다. 광복군은 국내 진공을 위하여 미국 OSS와 연합작전을 준비하였으며, 인도 버마 전선에 광복군을 파견하여 연합군을 지원하였다.

광복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새국가 건설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단파방송 등을 통하여 태평양 전쟁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선전과는 달리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며, 패색이 짙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일제는 태평양상에서 미군의 반격이 거세게 일본 본토 쪽으로 밀려오고,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이 임박해지자, 제주도를 최후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한국민을 동원하여 제주도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연설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일제 강점 35년의 식민통치가 끝났다.

한국의 독립문제는 이미 제2차 대전 중에 연합국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1943년 말 연합국은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신탁통치를 거론하였다. 이미 같은 해 3월 루스벨트가 이튼 영국 외상에게 신탁통치를 제안한 적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도 루스벨트는 20~30년간의 신탁통치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스탈린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 상황에서 연합국 진영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였다. 종전 직전 열린 포츠담회담에서도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연합국의 힘이 오랫동안 미치기를 적극적

으로 원했으며, 소련은 최소한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소극성을 드러내었다. 이 당시 잠정 합의된 신탁통치 구상은 전승국으로서의 패권주의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어느 일국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국제협조주의적인 측면이 내재된 것이었다.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 곧 항복 결정을 했을 때 미군은 오키나와 전선에 있었고 소련군은 만주에서 북한으로 곧 집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분할점령안을 제안하였고, 소련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8월 14일 38선 획정이 포함된 연합국 일반명령 제1호가 완성되었으며 다음날 연합국에 통보되었다. 그에 따라 광복은 분단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중경임시정부의 국내진공 및 건국준비

**【소항목】** 광복군

● 광복군	대한민국 건국강령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전개	광복군의 OSS연합작전 훈련과 참전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정의】**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에서 창설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

**【설립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군대를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임정의 활동침체와 피난기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40년 중경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을 거행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활동사항】** 광복군이 주력한 활동의 하나는 병력모집이었다. 또한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상황을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려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고, 국제적 여론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하여 영국군의 요청으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와도 공동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광복군 조직은 지휘 통솔을 관장하는 총사령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장을 중심으로 10개 처의 부서를 설치하고, 특무대와 헌병대를 두었다. 1941년 1월 1일 시안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편입되면서 지대가 하나 더 편성되었다. 이들은 제5지대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조선의용대를 제1지대로 편성하고 기존의 제1·제2·제5지대는 통합하여 새로 제2지대로 편성하였다.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하였는데 1943년 영국군의 요청으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영국군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영국군에 배속되었다. 또한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와도 공동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소식이 전해지자 정진대를 편성하여 OSS 측과 함께 국내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일본군의 저항으로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한 채 그 다음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광복군은 임시정부와 함께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46년 6월 초 국내로 귀국하였다.

**【의의】** 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독립성과 자주권을 유지하고 대일항

전을 준비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되었다.

**【핵심어】** 광복군/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연합군과 공동작전/한국청년전지공작대/조선의용대

**【참고문헌】**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일조각, 1993).

**【사진자료】** 227. 19400917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  
228. 19401226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 직원 일동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중경임시정부의 국내진공 및 건국준비

**【소항목】**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전개

광복군	대한민국 건국강령
●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전개	광복군의 OSS연합작전 훈련과 참전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정의】**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미국 하와이 진주만 미국 태평양함대 기지를 기습하고 홍콩·싱가포르·필리핀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일본의 패전으로 종결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다.

**【배경】**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단기전으로 승전을 달성코자 하였으나 중국 측과 그 지원세력의 저항이 완강하여 장기전화되자 확산을 두려워하여 남진정책을 모색하였다. 1939년 9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승리하자 일본은 독일·이탈리아 삼국동맹을 맺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있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들과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정복하여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으로 개편하는 침략야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일본은 걸림돌인 미국과 전쟁을 결정하였다.

**【발발】** 1941년 12월 1일 일본천황이 육해군에게 비밀리에 미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일본 해군과 공군은 12월 8일 오전 3시 19분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함대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전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는 기습 훨씬 후에 발표되었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에 대해서도 선전포고 없이 그 식민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서남태평양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고 말레이반도와 필리핀 본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국경을 넘어 인도를 침공하였다.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도를 넘어 남진하여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분리시켜 대양주도 세력권 아래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1942년 6월 5일 미드웨이해전에서 대패하고 전세는 역전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참전한 연합군은 1942년 8월 7일부터 반격작전을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자 연합국 측은 태평양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대비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결과】** 미국·영국·소련 정상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일본은 1945년 8월 10일 무조건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전세계에 방송하였다.

**【의의】** 태평양전쟁은 약 4년 만에 일본의 완패와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한민족은 그동안의 독립운동과 연합국 승리의 결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핵심어】** 태평양전쟁/진주만기습/미드웨이해전/이탈리아·독일 항복/세계평화/국제연합 창립/일본항복/연합군 승리/광복

**【참고문헌】** 역사학연구회, 『태평양전쟁·태평양전쟁사』(청목서점, 1972).

**【사진자료】** 229. 19411207 일제의 진주만 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미국 전함 아리조나와 네바다호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중경임시정부의 국내진공 및 건국준비

**【소항목】**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광복군	대한민국 건국강령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전개	광복군의 OSS연합작전 훈련과 참전
●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정의】** 1942년 12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에 정착하면서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전시태세를 갖추어 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전열을 재정비하고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을 창설함으로써 대일무장투쟁의 기초를 다졌다.

**【결과】** 한국광복군이 조직과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무렵인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해군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다.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 즉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이를 후인 12월 10일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 명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일선전성명서는 중·영·미·소 등의 대일선전을 축하한다는 것과 함께 대일선전은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東亞)를 재조(再造)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임시정부가 일본에 공식적으로 전쟁 개시를 포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내용은 ①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서 1개 전투 단위가 되어 있으며 축심국(軸心國, 독일·이탈리아·일본)에 대하여 선전한다. ② 1910년의 합병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포하고, 반침략 국가들의 한국에서 합리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③ 한국·중국·서태평양에서 왜구(倭寇)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혈전한다. ④ 맹세코 일본의 난익(卵翼)하에서 조성된 장춘(長春)과 난징(南京) 정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⑤ 루스벨트·처칠 공동선언의 각 조항들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데 적용되기를 전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미리 축하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일선전포고는 임시정부 역시 다른 연합국들과 마찬가지로 일제와 독립전쟁을 수행한다는 것과 임시정부도 연합국의 일원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일전선에서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성과 자주권을 유지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명실공히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광복군을 발전시켜 대일전선에 참전하였다. 임시정부는 국군인 한

국광복군을 동원하여 일제와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전후 연합국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한국광복군/연합군과 합동작전/대일전선 참전

**【참고문헌】**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일조각, 1993).

**【사진자료】** 230. 19411210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본선전성명서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중경임시정부의 국내진공 및 건국준비

**【소항목】** 대한민국 건국강령

광복군	● 대한민국 건국강령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전개	광복군의 OSS연합작전 훈련과 참전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정의】**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제정 발표한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 계획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국가건설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은 1931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같은 해 5월 남경(南京)에서 개최되는 중국 국민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임시정부의 활동방향과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만주지역 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선언에 임시정부의 주의(主義)·정책(政策)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대강(大綱)이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임시정부가 건설하고자 한 민족국가의 대전제는 특권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균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 방안으로 보통선거제·국유제·공비교육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권(政權)·이권(利權)·학권(學權)의 균등이 실현되는 국가를 건설하라고 하였다. 다음단계로 소수민족이 침략과 모욕을 당하지 않은 국제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며, 민족자결의 원칙을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건국대강은 당시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이 공동한 정치이념과 독립운동 노선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중경(重慶)에 정착하면서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재정비하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한국독립당을 결성함으로써 민족주의세력을 임시정부 산하로 결집한 것이 하나였다. 1940년 9월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에서는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1931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을 기초하였던 조소앙이 맡았다. 조소앙은 1930년대 이래 좌우의 정당들에 의해 공통된 기반을 형성해 온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하여 삼균주의를 기본골격으로 한 임시정부의 건국방안을 기초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방안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건국강령」으로 공포되었다.

**【내용】**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총강은 민족의 과거 내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윤곽을 제시하였고, 복국과 건국은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민족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설정 및 그 과정에서 수행하고 추진할 임무·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의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나타난 민족국가는 민족 최대다수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최고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특정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한 신민주국을 건설한다는 것이고, 정치·경제·교육적으로 국민전체가 균등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대한민국건국강령/민족국가 건설계획/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조소앙/신민주국건설

**【참고문헌】**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 후 민족국가건설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1989);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 논문집』 상(국가보훈처, 1999).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중경임시정부의 국내진공 및 건국준비

**【소항목】** 광복군의 OSS연합작전 훈련과 참전

광복군	대한민국 건국강령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전개	● 광복군의 OSS연합작전 훈련과 참전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정의】** 1945년 광복군과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전략첩보기구 OSS와 합작하여 공동작전을 위해 OSS훈련을 실시하고 대일전쟁에 참전하였다.

**【배경】** 광복군은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에서는 1945년에 들어와 한국인들을 대일작전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계획 중 하나인 독수리작전은 중국관내 한국인들 그중에서도 한국광복군을 활용하자는 계획이었다. 한미 간의 연합작전은 양측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활동사항】** 한미 간의 군사합작은 임정 휘하의 광복군과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OSS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OSS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되어 정보수집·유격대 활동·적후방 교란 등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던 일종의 전략첩보기구이다. OSS에서는 1945년에 들어와 한국인들을 대일작전에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3가지 작전으로 구체화되었다. 하나는 '냅코작전(The Napko Project)'이다. 이는 미국본토 및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맥코이(McCoy)수용소에 있는 한국인 포로들 중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한반도와 일본에 투입하여 정보수집과 게릴라활동을 시킨다는 구상이었다. 둘째는 독수리작전(The Eagle Project)으로 중국관내의 한국인들, 그중에서도 한국광복군을 활용하자는 계획이었다. 셋째는 연안지역에 있는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만주·한반도·일본 등지에 대한 첩보활동을 추진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북중국첩보작전(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으로 계획되었다. 한국광복군을 매개로 하여 한미간에 군사합작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독수리작전을 수행하는 단계로 광복군에 대한 OSS훈련이 실시되었다. OSS훈련은 OSS가 담당하였고, 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가 훈련을 받았다.

**【경과】** OSS훈련은 1945년 5월부터 시작되어 광복군 제2지대 제1기생 훈련이 끝나고 7월부터 광복군 제3지대 훈련이 시작되어 훈련과정 중 일제가 항복하였다.

**【의의】** 광복군이 창설되어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과 연계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일제가 항복하고 말았다.

**【핵심어】** 광복군/OSS 연합작전/OSS훈련/제2지대/제3지대/참전

**【참고문헌】**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일조각, 1993).

- 【사진자료】**
- 231. 한국 광복군 제5지대
  - 232. 19450315 광복군 제3지대를 방문한 OSS 워스 대위
  - 233. 미군 OSS대원과 합동작전을 펼친 한국 광복군 제2지대원
  - 234. 영국군과 합동작전을 펴기 위해 인도 미얀마방면으로 파견된 한국 광복군
  - 235.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국내의 동향

**【소항목】** 건국동맹

● 건국동맹	제주도- 최후의 일제거점 구축
일제말기의 국내동향	

**【정의】** 1944년 8월에 조직된 비밀결사로 해방을 맞이할 당시 국내에서 조직적인 실체를 유지했던 유일한 항일투쟁단체. 1945년 8월 16일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모체 역할을 하였고, 1945년 10월 정당으로 탈바꿈했으며, 11월에는 군소단체들을 통합해 조선인민당(朝鮮人民黨)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향도한 인물은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이었다. ‘건국동맹’이란 명칭은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해방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직명칭은 바로 건국동맹의 목적과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조직배경】** 여운형의 일제 패망에 대한 확신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이 계기가 되었다. 여운형은 서울·동경(東京)에서 일본 정계와 군부 고관들과 접촉하여 고급 정치·군사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연만(延安)·북경(北京)·만주에 있던 이영선(李永善)·최근우(崔謹愚) 등과 연락을 통해 국제정세와 2차대전의 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1940년대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미국의 소리’를 비롯한 단파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여운형도 이 같은 정보에 접하고 있었다. 그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2년 4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일본 동경을 방문하여 미군기의 최초 동경공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일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활동을 계획하는 한편, ‘일제의 패망=조선의 독립’이라는 논리에 근거해 건국 준비 작업을 세웠다. 조선건국동맹의 조직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제의 패망을 확신한 여운형그룹의 구상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1943년 조선민족해방연맹이 결성되고 1944년 8월 조직·정보연락·대책연구 등 3부문의 횡적 조직하에 건국동맹으로 발전·강화되었다.

**【활동사항】** 조선건국동맹의 주요활동은 해외혁명단체와의 연락·연대관계 수립이었다. 해외혁명단체와 연락사업은 ① 일제패망에 대한 정확한 국제정세 파악, ② 만주·연안·중경 등지의 항일세력과 연대 모색, ③ 정확한 정세판단과 해외항일세력에 대한 인정에 기초해 건국과제의 준비·추진이었다. 해방 직전 해외독립운동세력 내부의 통일모색(임시정부내부에서의 좌우합작), 해외독립운동세력의 통일모색(1945년 임시정부와 독립동맹의 합작시도), 해외독립운동세력과 국내독립운동세력과의 통일모색(건국동맹과 독립동맹, 건국동맹과

임시정부)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변천】** 조선건국동맹은 1945년 8월 16일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모체 역할을 하였고, 1945년 10월 정당으로 탈바꿈했으며, 11월에는 군소단체들을 통합하여 조선인민당(朝鮮人民黨)으로 확대·발전하였다. 건국동맹을 조직하고 이끈 인물은 여운형(呂運亨)이다. '건국동맹'이라는 명칭은 일본제국주의의 패망과 해방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직명칭은 건국동맹의 목적과 성격을 잘 나타낸다.

**【의의】** 조선건국동맹은 194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직후 신국가건설을 위한 정치공간 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국동맹은 해방 직전 전국적 차원에서 조직화를 시도한 유일한 국내조직으로 각계각층의 성원을 망라한 계급·계층의 인사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 단체였다.

**【핵심어】** 조선건국동맹/여운형그룹/일제패망/조선민족해방연맹/조선인민당/해방

**【참고문헌】** 정병준, 「조선건국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0(1993); 이만규, 『여운형투쟁사』(민족문화사, 1946); 정병준, 『여운형평전』(한울, 1995).

**【사진자료】** 236. 조선건국동맹에서 연설하는 여운형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국내의 동향  
**【소항목】** 일제 말기의 국내동향

건국동맹	제주도- 최후의 일제거점 구축
● 일제말기의 국내동향	

**【정의】**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1942년부터 일제 패망과 광복을 확신하고 대비하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청취사건이다.

**【배경】** 일제는 태평양전쟁 이후 방송을 전쟁수행을 위한 선전매체로 활용하였다. 한국 강점 이후 외부로부터 각종 정보 유입을 억제하였는데, 당시 한국에 머물고 있던 서양선교사들은 본국 소식을 단파방송을 통해 수신하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가재도구와 단파수신기를 몰수하였다. 일제는 몰수한 수신기를 전국 방송국에 분배하였다. 그들은 일본방송을 단파로 수신하여 서울에서 뉴스 및 전황 등을 한국에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였다.

**【활동사항】** 방송국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술자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송신하는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였다. 단파방송을 통해 일제는 패망하고 한국은 해방이 될 것이라는 국제정세를 알게 되었다. 단파방송 청취 연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경과】**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청취사건으로 단파방송 청취가 전국으로 확산되어가던 중 한국인 방송국 직원을 사찰하던 일본경찰 고등계 사복경찰들에 의해 발각되어 350여 명이 구속되었다.

**【의의】**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단파방송 청취로 국제정세를 통해 알게 되어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한 기대와 대비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어났다.

**【핵심어】** 태평양전쟁/일제패망/광복/단파방송 청취사건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1972); 유병은, 『단파방송연락운동』 (KBS문화사업단, 1991); 조방회본부, 『조선방송협회 회상기』(1981).

**【사진자료】** 237. 1942 단파방송 청취사건이 일어난 경성방송국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국내의 동향

**【소항목】** 제주도-최후의 일제거점 구축

건국동맹	● 제주도- 최후의 일제거점 구축
일제말기의 국내동향	

**【정의】** 일제는 태평양전쟁에서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1944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최후의 거점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특공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배경】**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연합군 함대를 공격, 방어하기 위해 제주도에 거점을 구축하고 군사시설을 하였다.

**【시행】** 일제는 중일전쟁에 대비하여 제주도 대정면 상모리에 비행장을 구축하였다. 비행장 공사는 1931년에 시작되어 1944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중국 남경(南京)과 상해(上海)를 공격하기 위해 나가사키 현(長崎縣)의 오무라(大村) 항공기지를 알뜨르 비행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1938년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면서 오무라 항공대가 상해 인근으로 옮겨졌고, 알뜨르 비행장은 일시 오무라 해군항공대 연습 비행장으로 활용되었다. 제주도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에는 일본군 제111사단 제244연대 본부 및 주력, 독립야포병 제6연대, 전차 제12연대 제14중대 일부 병력이 주둔하였다. 가마오름에서는 미군기를 향해 포사격을 하기도 했으며, 총검술 등 군사훈련이 매일 실시되었다. 제주도 대정면 상모리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는 일제가 1945년 초부터 굴착공사를 벌여 만든 군사시설이다. 제주도에 해상특공 작전의 일환으로 일본군 기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주둔시켰다.

**【결과】** 일제는 태평양전쟁에서 전세가 기울자 194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특공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일제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부각되어 일제는 제주도 대정면 상모리의 송악산과 한경면 청수리에 동굴진지를 구축하였다. 동굴진지 굴착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전라도에서 온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하였다.

**【핵심어】** 제주도/최후의 일제거점 구축/중일전쟁/알뜨르 비행장/태평양전쟁/해안 동굴진지/민간인 강제동원

**【참고문헌】**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성윤 외,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보고서』 1(2008).

**【사진자료】** 238. 194506 일제가 연합군의 본토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에 구축한 동굴진지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서구열강의 독립확인

**【소항목】** 카이로선언

●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알타회담	

**【정의】**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의 루즈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영국의 처칠(W. S. Churchill) 수상·중화민국의 장개석(蔣介石) 총통 등 연합국 수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가지고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공동선언이다.

**【배경】** 1941년 12월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영국·미국 등 연합국들과 독일·일본·이탈리아 등 추축국들은 모두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소련과 일본은 1941년 4월 31일 5년 유효기간을 갖는 중립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호중립을 유지하였다. 연합국들은 대독전 수행과 전후처리를 위해 워싱턴·카사블랑카·퀘벡·모스크바·카이로·테헤란·말타·알타·포츠담 등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 카이로회담도 그중의 하나였다. 1943년 말 연합국들은 유럽과 태평양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일본과의 전쟁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후처리를 일본과의 전쟁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 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에서 한 걸음 진전하여 영국·중국 등과 협의하여 이를 연합국의 공약으로 공포하였다.

**【내용】** 카이로선언은 연합국이 전후 일본의 처리를 최초로 언급한 선언이었다. 미국·영국·중국 3대 동맹국들은 ① 야만적인 적국인 일본에 대해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것이다. ② 일본의 침략을 저지·옹정하지만, 어떠한 이득을 요구하거나 영토적 팽창 의사가 없다. ③ 3대 동맹국의 목적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시작 이후 일본이 태평양에서 탈취 점령한 모든 도서(남양군도)를 박탈한다. ④ 만주·대만·펑호열도 등 일본이 중국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를 중국에 반환한다. ⑤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기타의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한다. ⑥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한다. ⑦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작전을 장기적으로 속행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카이로선언의 내용은 독일의 항복 후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에서 미·영·소 3국에 의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한국의 관점에서는 연합국들이 한국의 장래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명확한 태도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의의】** 카이로선언은 미·영·중 3국의 이름으로 “한국민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 자유독립국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카이로선언은 한국독립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핵심어】** 제2차 세계대전/루즈벨트/처칠/장제스/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공동선언/한국독립

**【참고문헌】**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 연구』 2(역사비평사, 1995).

**【사진자료】** 239. 19431122 카이로 회담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서구열강의 독립확인

**【소항목】** 알타회담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 알타회담	

**【정의】**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미국·영국·소련 3개국 정상이 크림반도의 알타(Yalta)에서 가진 회담

**【배경】** 독일의 패망을 1~2개월 앞두고 개최된 알타회담의 중요 의제는 전후 유럽처리 문제 및 세계평화 기구문제 발족이었다. 또한 소련의 대일 참전문제도 중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내용】** 한반도에 대해서는 테헤란에서 제시된 신탁통치안을 포함한 한국 전후요령이 미국 무성에 의해 작성되었다.「조선관계 연합국간 협의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독립에 관련된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다.

한국관계 연합국간 협의사항 ① 중·소는 한국에 연접되어 있고, 한국문제에 전통적 이해를 보유해 왔다. ② 미·영·중은 카이로선언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은 자유 독립이 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③ 단일국에 의한 한국 군사점령은 중대한 정치적 반발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전후 한국에 대한 연구는 미 국무성 및 영국과 중국의 외무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것은 전후 한국의 각종 정치적·경제적 양상에 관한 질의표안(質疑表案)에 의거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점령에 어느 나라가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다.

**【결과】** 알타회담 중 한반도문제는 2월 8일 미·소 정상회담에서 깊이 거론되고 정치적으로 합의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 원수와 신탁통치를 논의할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한국에 대하여 미·소·중 각 1인으로 구성 대표되는 신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연합국 진영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였다.

**【의의】** 알타회담에서 한반도문제가 다루어져 미·중·소 3개국 간에 신탁통치방안이 합의되었다.

**【핵심어】** 알타회담/미국/영국/소련/전후처리/세계평화/신탁통치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1968); 브루스커밍스, 『6·25전쟁의 기원』(일월서각, 1986); 이용희, 「38선획정新攷」, 『분단전후의 현대사』(일월서각, 1983).

**【사진자료】** 240. 19450204~11 미국·영국·소련의 수뇌들이 가진 알타회담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서구열강의 독립확인

**【소항목】**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 포츠담선언
알타회담	

**【정의】**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베를린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 정상들이 수뇌들이 참가한 제2차 세계대전 중 마지막으로 연합국 회담을 개최하고 7월 26일 공포한 선언이다.

**【배경】** 포츠담선언에서는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내용】** 포츠담회담에서는 한국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 회담에 수행한 미국과 소련 관리들의 군사회담에서는 논의되었다. 이들은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한 뒤, 미소 양국의 해군과 공군의 작전범위로 일본 동북부로부터 한반도 북쪽 끝을 연결 짓는 선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육상작전의 한계선이나 군사점령을 위한 지역에 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이는 미군이나 소련군이 ‘즉각적인 장래에’ 한반도로 진공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회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7월 17일 오찬에서 교환되었다는 ‘트루만-스탈린 담화기록’에 스탈린이 소련참전은 8월 중순이 될 것인데 그에 앞서 대중교섭이 완결될 필요가 있다고 한 후에 그간 진행되었던 중소 교섭결과를 설명하고 알타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8월 중순에는 대일전에 참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측은 일본본토 및 기타 태평양 및 도서지역의 일본군 병력에 대한 정보를 피력하였다.

주목할 내용은 이 회담 중의 하루는 마셜 장군이 작전부장 헐 중장을 초치하여 미군의 한반도 진입계획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사실이다. 아울러 원자탄 실험성공이 가져올 새로운 사태를 검토하였고 미국은 일본의 조기항복 가능성을 계산에 넣고 있었다. 이 회담 도중에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38선에 가까운 육상분계선 검토한 것은 확실하다.

**【결과】** 한국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1943년 11월에 개최된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고 미소 간 육상경계선이 언급되었다.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 곧 패전 결정을 확인하자마자 미국 측에서는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분할점령안을 제안하였고, 소련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8월 14일 38선 획정이 포함된 연합국 일반명령 제1호가 완성되

었으며 다음날 연합국에 통보되었다. 이로 인해 광복은 분단, 즉 38도선 획정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핵심어】** 포츠담선언/마지막 연합국회의/카이로선언 재확인/38선 언급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1968); 브루스커밍스, 『6·25전쟁의 기원』(일월서각, 1986); 이용희, 「38선획정新攷」, 『분단전후의 현대사』(일월서각, 1983).

**【사진자료】** 241. 19450726 포츠담 선언

**【작성자】** 이동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일본의 패망과 광복의 환희

**【소항목】** 일본의 패망

● 일본의 패망	광복의 환희
----------	--------

**【정의】** 일제는 1931년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조선에서 인적 물적 수탈을 강요하고, 병참기지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지만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패망하였다.

**【과정】** 1940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던 일본은 서서히 패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는 건국동맹을 조직하여 일제의 패망을 준비하였고,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하는 등 맹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듬해부터 일본의 패배는 보다 명확해졌고 국내외적으로 일본에 대한 저항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패망이 다가오면서 국내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여운형 등은 1944년 건국동맹을 조직하여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세력과 협력하여 건국을 준비하였다. 이후 민중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선전활동 즉 반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와 연결을 시도하였다. 한편 임시정부 등 국외에서는 친일파를 처단하고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보통선거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세운다는 건국방침에 강령을 마련하였다. 1945년 들어 무장투쟁은 더욱 활발해졌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훈련시켜 국내 투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였고, 조선의용군은 만주를 거쳐 국내로 진격하기 위해 치열한 항일전쟁을 벌였다.

**【결과】** 임시정부에서는 대일 전면적인 항전을 위하여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고, 그 결과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던 중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참전으로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패망하였다.

**【사진자료】** 242. 19450902 항복문서에 사인하기 위해 미군함 미주리함상에 올라온 일본 대표들

243.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일본 외상 시케미츠

244.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245. 19450909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거행된 항복 조인식  
246. 19450911 항복조인식이 거행된 후 하강하는 일장기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1945년 8·15광복

**【전시항목】** 일본의 패망과 광복의 환희

**【소항목】** 광복의 환희

일본의 패망	● 광복의 환희
--------	----------

**【정의】**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35년간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광복의 환희를 맞았다.

**【내용】**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침략전쟁에 광분하던 일제는 미국의 원자폭탄투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으로 일제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일본 천황의 목소리는 비통하기 그지없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수군거리던 일본군의 모습에 “설마 ……” 했던 우리 민족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왕의 패망 발표를 들은 국민들은 서울역과 종로, 광화문 네거리 등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면서 광복의 환희를 만끽하였다.

일본의 항복과 패전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제 치하 35년간의 압제에서 풀려나 광복을 이룬 것이다.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한 각 형무소에서는 애국지사들이 석방되었고 시민들은 이들을 환영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다.

**【결과】** 일제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진공에 참여하여 전후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발언권을 확보하여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노력은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전개한 독립을 위한 노력은 일제 패망 직후 우리의 힘으로 독립국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자료】** 247. 해방을 축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민중

248. 19450816 광복 후 마포형무소에서 풀려난 애국지사들

249. 19451010 해방 후 효고현 오기쿠보 형무소에서 출옥한 조선인 청년들

**【작성자】** 이동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장석홍(국민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1945년 8·15광복

●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1945년 8월 해방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8선을 경계로 하여 미국과 소련이 각기 분할점령하여 분단되고 말았다. 그해 12월 모스크바삼상회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소 간의 냉전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신탁통치 찬성(찬탁)을 주장하는 북한 및 남한 내 좌익세력과 반대(박탁)를 주장하는 남한의 우익세력 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렸다.

미 군정당국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선거를 위한 유엔 임시위원단의 북한 진입을 거부한 북한을 제외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한국정부는 유엔총회에서 48대 6이란 압도적 다수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었다. 미국정부는 그 3일 전인 8월 12일에 신정부를 외교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도 미군정을 폐지하기 위해 8월 15일 이후 정부기능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해 주기 시작하여 그해 12월 우리 정부가 완전히 인수했다.

소련 군정당국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가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안을 채택하자 서둘러 11월 19일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2월 말에 초안을 완성하여 1948년 2월 7일 제4차 인민회의에서 '전인민적 토의'에 부치고, 4월 28일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초안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1948년 8월 하순 북한 전역에서 공산당의 단일후보만 출마시킨 소련식 흑백선거를 실시하고, 9월 8일 헌법을 채택하여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북한은 1947년 말부터 독자적인 헌법제정을 준비하여 북한 단독정부수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남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정부가,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 기정사실로 됐다.

**【핵심어】** 38선/미소공동위원회/유엔/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참고문헌】** 양영조, 『38도선 충돌연구: 1945~1950년』(국방군사연구소, 2000);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남, 19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1권(구판, 국방부, 1967).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미소의 한반도 점령과 38선 설정

**【소항목】** 소련의 참전

● 소련의 참전 38선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소련의 한반도 정책 미국군의 남한진주와 미군의 한반도 정책
-----------------	--

**【정의】** 제2차 세계대전 중 본격적인 연합군 측의 전후 처리회담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미·영·중이 참석한 카이로회담이었고, 이후 소련군 참전에 관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선전포고와 더불어 대일전에 참전하였다.

**【배경】** 미국은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일념과 전후의 정치적 문제를 경시하고 일본군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자국의 희생을 적게 하려던 생각에서 소련의 대일참전을 유도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중국이 치르게 될과 함께 그로 인하여 이미 한국의 비운이 배태되었다. 스탈린은 그들의 정치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일참전의 대가를 크게 요구하려 했다.

**【발발】** 미국 군부는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한 뒤 양군의 해·공군 작전범위도 일본 동북부에서 한반도 북쪽 끝을 연결 짓는 선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지상작전의 한계선이나 군사점령을 위한 영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분할점령 자체가 미국의 대소 전략상의 고려에서 생긴 이상 소련과의 타협에 실패한다면 분할점령선이 고정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전개】** 알타 비밀협정 후 5개월이 지난 1945년 7월 17일~8월 2일에 제2차 세계대전 중 마지막이 된 연합국 수뇌회담이 포츠담(Potsdam)에서 열렸다. 포츠담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관련하여 미소 양측 군사대표들은 한국과 만주를 두개의 작전지역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세세한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미국은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이에 소련도 8월 8일 선전포고와 더불어 대일전에 참전하였다. 소련군은 “일본에 대한 진공작전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소련군이 도달할 목표와 지점은 “관동군의 분쇄, 전만주, 북조선, 남사할린, 쿠릴열도의 해방”으로서, 이것들을 항복문서의 정식조인 이전에 완수해야만 하였다. 양측이 정전교섭을 완료한 후 실제 전투가 정지된 것은 8월 21일이었고 이어 만주와 북한 일대에 대한 소련군의 무혈진주가 이어졌다.

**【결과】**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아 157만 명의 대군을 소·만 국경을 넘어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로 진격시켰다. 소련군의 북한 진입은 8월 15일과 17일 사이에 신속히 이루어졌다. 소련 공군기는 함경도 웅진·나진·청진 등지에 폭격을 개시했고, 치스차코프 대장이 이끄는 소련 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이 동해 해상을 통해 청진·홍남·함흥·원산 등지를 거쳐 24일에는 평양으로 진입했다. 최초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련의 참여를 인정했다.

**【의의】** 결국 이러한 연합국의 한반도 정책과정을 통하여 38선 분단이 결정되고 말았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다. 따라서 미·소의 점령구상은 한민족에게는 차후 전후 협상의 불확실성과 미국과 소련의 정책 등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민족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핵심어】** 카이로회담/알타회담/일반명령 1호/원자폭탄/일본군 무장해제

**【참고문헌】** 이정식,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과정과 한반도의 분단」, 『한국현대사 연구의 반성과 전망』(현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1997);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남, 19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1(구판, 국방부, 1967).

**【사진자료】** 250. 1948 평양시민의 환송을 받는 소련군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미소의 한반도 점령과 38선 설정

**【소항목】** 38선

소련의 참전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소련의 한반도 정책
● 38선	미국군의 남한진주와 미군의 한반도 정책

**【정의】** 1945년 종전 직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군사 점령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할 주체와 극동에서의 군사작전의 한계선으로 38선을 설정하였다.

**【설립배경】** 38선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로 구성된 3부조정위원회에서 착수됐다. 실무를 담당한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1942년도 판 지도를 보고 한반도에서 미소 작전 담당구역의 분할선을 북위 38선으로 결정했다.

**【활동사항】** 미 군부는 소련군이 이미 한반도의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었고, 그에 비하면 미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해야 600마일 떨어진 일본의 오키나와와 2천마일가량 떨어진 필리핀에 있던 상황을 고려했다. 만일 소련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선마저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 실무자들은 당시 여건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주요 도시를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장 멀리 주둔시켜봤자 38선까지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부의 대표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 중 대체로 해군부는 39선 분할안을 제시한 반면, 국무부와 육군부는 38선 분할을 건의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를 북위 38선으로 분할하자는 건의안을 아무런 수정 없이 결재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의 재가가 난 이 내용을 8월 15일 필리핀 주둔 태평양지역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하달했으며, 동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물론 모스크바 주재 미군사절단에 송부하여 스탈린에게도 그 사본을 전달했다.

**【경과·변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목적으로 한 이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답해온 소련정부는 8월 16일자 회신에서 38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38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그 이남에서는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는 방침이 확정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군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일반명령

제1호'가 신속하게 작성됐다. 그리고 다음달 9월 초 일본 동경만의 미주리호 함상에서 거행된 항복문서 조인식 후 연합군사령관의 명의로 발표됐다. 이 명령에 언급된 38선은 일본의 항복접수와 무장을 해제코자 책임구역을 할당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였을 뿐이다.

**【의의】** 일반명령 제1호는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을 경계선으로 각기 한반도의 남북으로 진주하게 된 근거가 됐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도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38선은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분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념적으로도 한민족을 갈라놓았다. 군사적 편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설정된 분할선은 그 후 정치적 경계선으로 굳어져 결국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화 하는 첫 걸음이 됐다. 그리고 그 선의 양편에는 각각 한반도의 정통유일 합법정부를 표방하는 서로 다른 정치권력이 들어서게 됐다.

**【핵심어】** 연합군사령부/전시회담/본스틸/일반명령 제1호/일본군 무장해제

**【참고문헌】** 양영조, 『38도선 충돌연구: 1945~1950년』(국방군사연구소, 2000);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남, 19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1권(구판)(국방부, 1967).

**【사진자료】** 251. 38선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미소의 한반도 점령과 38선 설정

**【소항목】**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소련의 한반도 정책

소련의 참전 38선	●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소련의 한반도 정책 미국군의 남한진주와 미군의 한반도 정책
---------------	--

**【정의】** 소련군은 치스차코프 대장의 지휘하에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에 이미 북으로 진출하여 1945년 8월 하순 평양에 군사령부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배경】** 소군은 북한에 주둔하자마자 각지에서 현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하면서 38선 일대에 초소를 설치했다. 남북을 왕래하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 도로 및 통신도 차단했다. 그 후 치스차코프는 본격적인 군정실시 기관으로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했다. 이 기관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보건, 위생, 출판, 보도, 사법지도부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지도부가 있었으며 정치사령부의 통제를 받았다.

**【발발】** 소련 군정당국은 원활한 군정실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평양 진입 후 초기 얼마간은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들의 명망과 조직을 이용했다. 그들은 조만식이 위원장으로 있던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승인해 한국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8월 24일부터 9월 말에 걸쳐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한 각지 자위대, 치안유지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지부와 좌익계열의 보안대, 적위대 등의 각종 정치 군사단체들을 흡수 통합해 각 도별 인민위원회를 세웠다. 각 도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인을 기용했으며, 고문관에는 소련군 장교들을, 실권 있는 요직에는 소련계 한인들을 앉혔다. 그러므로 이 기구는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 군정당국에 지배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도의 인민위원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민족진영 세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친소적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다. 각 도별 인민위원회는 행정기관, 경찰관서, 경제기구 등 구 일본의 모든 행정기관들을 접수하고 행정권을 인수했다.

**【전개】** 소련 군정당국은 10월 14일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소련군 출신 김일성을 북한주민 앞에 내세웠다. 또 11월 18일에는 5도 인민위원회를 통괄하는 5도 행정국을 설치하고 산업, 교통, 체신, 농림, 사업, 재정, 교육, 보건, 사법, 보안등 10개국으로 된 행정체제

를 정비했다. 이어서 김일성은 12월 중순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 선정되면서 소련군정 당국의 하수인으로서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급부상했다.

**【결과】** 소련 군정당국은 김일성 일파로 하여금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게 한 다음 토지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일반대중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심어 주는 동시에, 북한 내 국내파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을 포섭 혹은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의의】** 소련은 소련군정에 협조하는 동조자는 포섭하고, 비협조자들에 대해서는 남한 탈출을 묵인하거나, 혹은 구금하는 방법으로 숙청작업을 전개했다. 이렇게 소련 군정당국은 불과 약 4개월 만에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북한 권력체제를 형성시켰다.

**【핵심어】** 치스차코프/소련 제25군/평양군중대회/김일성

**【참고문헌】** 양영조, 『38도선 충돌연구: 1945~1950년』(국방군사연구소, 2000);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남, 19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1(구판, 국방부, 1967).

**【사진자료】** 252. 스탈린과 레닌의 초상화를 바라보는 북한주민들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미소의 한반도 점령과 38선 설정

**【소항목】** 미국군의 남한진주와 미군의 한반도 정책

소련의 참전 38선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소련의 한반도 정책 ● 미국군의 남한진주와 미군의 한반도 정책
---------------	--

**【정의】** 미국의 태평양 육군총사령부는 1945년 9월 초순, 남한의 군정실시를 언급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남한 군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배경】**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주둔군 책임자로 남한으로 들어왔지만, 미국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이 항복했음에도 처음 얼마동안은 조선총독부 체제를 일정기간 유지시켰다. 조선총독과 일본인 관리들도 그대로 유임시켰다. 그것은 해방 후 일본 식민정책이 남긴 후유증으로서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남한사회의 반영이었다. 산업경제는 파폐했고,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여 좌, 우, 중도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으며 정치경험이 많은 지도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발】** 1945년 9월 20일, 미 군정청은 새로운 군정청 기구를 출범시키고 각국의 국장을 임명했다. 이 기구는 조선총독부 기구를 모방하고, 국장에는 미군장교를 임명하면서도 현직에서 물러난 일본인들을 고문으로 임명했다. 미 군정당국이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잠정적이거나 유지시키려 했던 데서 비롯된 이 같은 조치와 의도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던 한민족의 기대를 외면한 중대한 착오였다. 이 과오는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대해 성급하면서도 편의적이었으며 구체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미국정부가 대부분의 군정정책을 한국사정에 어두운 현지 주둔 미군사령관에 일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미 군정이 초기에 부딪친 과제는 일제 식민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군정정책이 부재했고 남한사회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남한의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0월 초순부터 일본인 고문들을 퇴임시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 11명의 한국인 인사를 임명하면서 미 군정하의 사법기관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각 행정기관장을 한국인으로 대폭 교체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일제의 악법도 폐기했다.

**【전개】** 미국의 군정지침이 맥아더 장군을 거쳐 하지 장군에게 하달된 것은 이처럼 미 군정기구가 정비되고 있을 10월 중순 무렵이었다. 그 요지는 자유독립 국가를 수립하고 나

아가 평화를 애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남한을 군정과 신탁통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독립국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1945년 12월, 미 군정당국은 군정청 행정기구에도 미국인과 한국인을 함께 기용하는 복수국장 제도를 채택했다. 한국인이 참여하는 군정으로 한 걸음 진전하게 되면서부터 군정청에도 좀 더 많은 한국인이 일하게 돼 한 때 그 수가 7만 5,000명에 이르렀다.

**【결과】** 미 군정당국은 일제강점시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부수입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좌·우익을 망라한 모든 정파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1945년 10월과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김구, 이승만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국외 독립운동지사들이 환국했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개인자격으로 입국한 것이었다.

**【의의】** 남한 내에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한 상태에서 크게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이 소련 군정의 비호하에 김일성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사회주의체제로 형성돼 가고 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핵심어】** 조선총독부/하지/맥아더/미 군정청/주한미군사령부

**【참고문헌】** 양영조, 『38도선 충돌연구: 1945~1950년』(국방군사연구소, 2000); 최상룡, 『미 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남, 19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1(구판, 국방부, 1967).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임시정부의 환국과 국내 제 단체들의 움직임

**【소항목】** 임시정부의 환국

● 임시정부의 환국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조선공산당 재건
한국민주당	

**【정의】** 임시정부는 광복이 되자 1945년 11월 23일 김구 주석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환국하였으나, 미 군정에 의해 정부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배경】** 독립운동 시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독립운동 단체 중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이 임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그 실력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 국무부는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 육군부장관 스티븐의 망명정부 승인 명단에도 임정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중국의 장개석 주석과 주중 미국대사인 패트릭 헐리는 임정의 귀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었다. 이들은 불안한 한국정세를 극복하고 중국과 극동의 반공산주의 투쟁을 위해서는 임정의 귀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발발】** 임시정부는 여전히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였으므로 임정요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으며, 우익을 먼저 귀국시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야 한다는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정책적 배려에 따라 두 차례로 나뉘어져 귀국하게 된다. 여운형을 비롯한 인공 측도 임정요인의 개인 자격의 귀국을 주장하고 있었다.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민족주의계열의 민족지도자들은 중국에서 돌아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 그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의 수립을 통한 조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수립과 건국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었다. 한국민주당의 경우 창당대회에서의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독립운동의 결정체이고, 현재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외에 소위 정권을 참칭하는 일체의 단체 및 그 행동은 그 여하한 종류를 불문하고 이것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이 무렵 이미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을 역임하고 그 후 하와이와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이 1945년 10월 16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그의 귀국으로 정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전개】** 임정요인들은 이승만의 귀국에 이어 마침내 1945년 11월 23일 제1진으로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이시영, 엄항섭 등이 김포공항에, 12월 2일에는 제2진으로 김원봉, 장건상 등이 군산비행장에 각각 도착하였다. 김구는 도착 후 중앙방송국을 통해 임시정부의 당면정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즉, “본 임시정부는 최소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혈전할 중, 미, 소, 영 등 우방 민족으로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세계일가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을 협조할 것,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등을 선언하였다. 임시정부는 귀국 초기에는 우파, 중간파, 좌파를 불문하고 봉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임정으로서 이미 정부 수준의 인공을 수립한 좌파는 물론 지주세력,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한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임정 자체도 그 구성 성분의 다양한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과】** 임정은 전국적인 반탁을 지도하며 국내세력을 흡수하여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고, 그 결과 국민당, 신한민족당 등 3당이 합당한 한국독립당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존재와 좌익세력의 반대로 말미암아 주권행사 기관으로서의 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더욱 한독당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의】** 임정요인의 환국은 미 군정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것은 임정요인들의 정치적 행보에 큰 제약이 되었다. 이후 임정요인들의 정치적 행보는 미군정과 좌익들의 견제와 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핵심어】** 김구/이승만/대한민국임시정부/미 군정/한국독립당/민족주의/좌익

**【참고문헌】** 송남현, 『해방30년사』 1~3(성문각, 1976);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창작과 비평사, 1984); 한국근현대사간행위원회, 『사실로 본 한국근현대사』(황금알, 2003).

**【사진자료】** 253. 중경임시정부 청사를 떠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기념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임정의 환국과 국내 제 단체들의 움직임

**【소항목】**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임시정부의 환국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조선공산당 재건
한국민주당	

**【정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여운형은 자신의 정치기반인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건국준비를 위한 정권 예비기관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어 9월 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설립배경】** 광복일 아침 여운형은 총독부 엔도오(遠藤隆作) 정무총감과의 회견을 마치고 돌아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는 정무총감과의 약속인 치안유지 협력을 비약시켜 새 구각 건설의 준비를 명백히 하고 안재홍이 명명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발족 준비에 착수하였다.

**【활동사항】** 건준위원회는 우익 진영의 유력한 지도자 송진우의 협력을 얻지 못한 채 이날 밤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조직에 착수하여 17일 여운형을 위원장, 안재홍을 부위원장, 총무부장 최근우, 재무부장 이규갑, 선전부장 조동우, 조직부장 정백, 무경부장 권대석 등으로 하는 1차 부서 결정을 완료하고 다음날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경과·변천】** 여운형은 8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건국공작 5개항을 제시하였다. 즉, “어느 기간까지 자발적으로 자치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치수단은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된다. 자치수단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한다. 모든 공사기관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인원은 현 직장을 엄수하여야 한다. 각 원은 각기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공작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건준의 조직이 중앙과 지방에 걸쳐 확대 강화되고 있는 사이 그 내부에서는 좌우 갈등으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결국 민족주의 인사들이 건준이 좌익 진보세력 위주로 조직되었다고 하여 탈퇴하였고, 부위원장 안재홍도 9월 1일 결별을 선언하고 조선국민당을 결성하였고, 정백·고경흠 등 간부들이 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경성지부를 결성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조직력이 극도로 약화되었다.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허헌이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건준은 이어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이승만·여운형·허헌·김

규식·김구·김성수·김병로·안재홍·이강국·신익희·조만식 등 55명의 대표위원과 고문 12명을 각각 뽑아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을 통과시켰고, 이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들은 외세와 반민주주의적·반동적인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투쟁을 통하여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결과】** 건준은 9월 7일 후 다음 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함으로써 해체되었다. 중앙인민위원회 부서는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대리 조동호·김계림, 외무부장 김규식, 대리 최근우·강진, 재무부장 조만식, 대리 박문규·강병도, 군사부장 김원봉 등으로 상당수 좌익세력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의 환국을 기다리던 송진우·김성수·장덕수 등 민족주의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 군정도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승만마저 환국하여 주석 취임을 거절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조직력이 약화되었다.

**【의의】**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 다양한 국내 정치지도자들을 결집하여 앞으로 수립될 새로운 국가건설에 관한 준비를 착수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까지 확대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으나, 박헌영계 좌익 진보세력들의 비중을 크게 강화하여 내부분열을 야기함으로써 민족주의세력과 미 군정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여 결국 해체되었다.

**【핵심어】** 건국준비위원회/건준 지부/조선인민공화국/여운형/이승만/좌우

**【참고문헌】** 송남헌, 『해방 30년사』 제1권(성문각, 1976); 허중권, 『한국근현대사』(학연문화사, 1998);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민주문화사, 1946).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임정의 한국과 국내 제 단체들의 움직임

**【소항목】** 한국민주당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조선공산당 재건
● 한국민주당	

**【정의】** 한국민주당은 1945년 9월 4일 각 정당, 단체의 대표를 결집하여 신당발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타도와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 태도를 밝혔으며, 9월 16일 발기인 1,600여 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가졌다.

**【설립배경】** 한국민주당은 1945년 9월 16일 고려민주당,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국민대회준비회, 임시정부 및 연합군환영준비위원회 등 우익 진영의 정당과 단체가 모여 범민족 세력의 대동단결의 명분 아래 결정대회를 개최하여 탄생하였고, 조선인민공화국의 반대와 중경임시정부 지지를 표방하면서 발족하였다.

**【활동사항】** 한국민주당은 1945년 9월 21·22일 조선민족당·한국국민당 공동비율로 8인의 총무와 사무국 외 각 부서와 중앙감찰위원 30인을 선출함으로써 당의 체제를 모두 갖추고 송진우를 수석총무로 선출하였다.

정강은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민주주의 정채수립을 기함,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민족문화를 양양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함,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 등이었고, 정책은 “국민기본생활의 확보, 호혜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의 자유,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중공업주의의 경제정책 수립,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국방군의 창설” 등이었다. 당 영수로는 이승만·김구·이시영·문창범·서재필·권동진·오세창이 임명되었으며, 중앙집행위원으로 수석총무에 송진우, 총무에 원세훈, 백관수, 허정 등이 임명되었으며, 각 부서의 부장이 각각 인선되었다. 한민당은 한국의 지주계층, 자산가 및 지성인들이 주축이 된 정당으로서 자연히 그 이념과 성격은 보수적이며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삼는 정치세력이었다.

**【경과·변천】** 한국민주당은 미 군정이 실시되자 군정고문 또는 군정청 요직에 다수의 당원이 임명되어 군정정책에 적극 협조하였다. 1945년 12월 30일 수석총무 송진우가 암살당하자 김성수를 수석총무로 추대하였다. 1946년 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무

렵에는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운동에 동조하여 임시정부와 정치노선을 달리하고 대한  
민국 수립의 주요한 추진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1946년 10월 좌우합작운동의 여파로 원세  
훈·김약수 등 중진간부 100여 명이 이탈하였으며, 이후 전형적인 보수정당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이들은 기본적으로 냉전체제하에서 미소가 양립할 수 없고 또 한반도 문  
제의 해결을 위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민주당은 분단된  
한국정치사의 현실 속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취임 이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야당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 한국민주당은 정부수립 직후 야당으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1949년 1월  
27일 대한국민당의 신익희 세력과 대동청년당의 지청천 세력을 규합하여 새로이 출발할 것  
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월 10일 민주국민당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의의】** 한국민주당은 당의 간부 가운데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지주층  
출신의 지식인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의 영향과 반공이념을 통한 보수적  
정치이념을 구현하려 하였고,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의 현재 보수정당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핵심어】** 송진우/김성수/신익희/대한국민당/신익희/대동청년당/민주국민당

**【참고문헌】** 송남헌, 『해방 30년사』 1(성문각, 1976);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창작과비  
평사, 1984); 한국근현대사간행위원회, 『사실로 본 한국근현대사』(황금알, 2003).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임정의 한국과 국내 제 단체들의 움직임

**【소항목】**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임시정부의 한국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조선공산당 재건
한국민주당	

**【정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대동단결과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익을 망라한 각종 단체가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하여 창설한 단체이다.

**【설립배경】**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정국의 혼란 속에서 1945년 10월 23일 자주독립을 위하여 한국민주당·국민당·건국동맹·조선공산당을 비롯한 각종 200여개 단체가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하여 대동단결을 선언하며 창설한 국민운동 추진 협의체이다. 그러나 1945년 11월 16일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를 제거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탈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일전선이 무너졌다. 이어 독측은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채택하자 1946년 2월 8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발족하였다.

**【활동사항】** 이때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창설 선언서에서 “우리는 대한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울 것을 선언함. 우리의 운동은 정당·정파를 초월한 순연한 국민운동임을 선언함. 우리는 남북과 좌우의 통합을 기하여 사상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통일완수를 위하여 사력을 다할 것을 선언함”을 강조하였다. 발족 당시의 임원은 총재 이승만, 부총재 김구, 고문 권동진·김창숙·함태영·조만식 등이었으며, 대부분의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중앙조직을 편성한 후 전국의 시·도·군까지 지부를 확대 조직하였으며, 동시에 전위부대로서 청년대를 설치하는 등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민운동 조직의 면모를 갖추었다.

**【경과·변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조직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여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계열과 김구의 한국독립당 계열, 김규식 계열 외에도 신익희 세력 등의 세력이 갈등을 겪었으며, 그에 따라 간부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1946년 4월 10일 제1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회장에 이시영, 부회장에 오하영과 이규채로 개편되었고, 9월 16일 전국대표자대회에서는 위원장제로 개정하여 위원장에 조성환, 부위원장에 정인보로, 그리고

1947년 4월 19일 전국대표자대회에서는 위원장에 오세창, 부위원장에 명제세와 백남훈으로, 또 동년 10월 3일 전국대표자대회에서는 위원장에 신익희, 부위원장에 명제세·백남훈이 각각 선임되는 인선을 반복하였다.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내부에서는 임시정부를 받들어 정부로 추대하자는 김구 계파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남한만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승만계의 주장으로 의견이 분열되었다.

**【의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미 군정의 지지를 받는 김규식 등의 좌우합작운동으로 침체해 있다가 1947년 8월경부터 다시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전면에서 5·10선거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핵심어】** 이승만/김구/대한독립촉성국민회/한국독립당/좌우합작/단정

**【참고문헌】** 송남현, 『해방 30년사』 1~3(성문각, 1976);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창작과비평사, 1984); 한국근현대사간행위원회, 『사실로 본 한국근현대사』(황금알, 2003).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임정의 환국과 국내 제 단체들의 움직임

**【소항목】** 조선공산당 재건

임시정부의 환국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 조선공산당 재건
한국민주당	

**【정의】** 박헌영 계열의 서울콤그룹은 광복 직후 1945년 8월 20일 여운형·허헌·김원봉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고, 1946년 11월 23일 조선인민당 및 남조선신민당과 함께 통합하여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다.

**【설립배경】** 광복 직전까지 박헌영의 서울콤그룹 계열 이외에는 모두 조직이 와해된 상황이었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사변이 개시되자,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은 종래의 합법적 한국노동조합과 농민조합운동을 적색노동조합과 적색농민조합운동으로 전향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혁명적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검거되고 말았다. 서울콤그룹도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조직이 거의 와해된 상태로 박헌영만이 지하에 숨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였다.

**【활동사항】** 박헌영은 광복 직후 즉시 1945년 8월 20일 다양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을 망라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작업을 추진하려 했고, 9월 8일 열성자대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이 대회는 고려공산당 계열의 장안파 이영, 정백이 주도하고 박헌영을 포함하여 각 정파의 공산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나, 박헌영이 공산당 통일의 불가피성과 중앙당 조직에 관해 연설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당면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조선 좌익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국내외 정세를 설명해 나갔다. 이 무렵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있었으나 남한은 아직 일본 총독이 치안을 맡고 있던 때였다. 그는 “이런 형편에 반동적 반민주적 운동은 권모술책을 갖고 좌익 내부에 그 손을 뻗쳐오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조선공산당 재건위의 발족과 그 활동에 관해 언급하고 또 본인의 투쟁 경력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당 조직의 원칙을 제시했다. 박헌영의 연설이 있는 뒤 격렬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대체로 박헌영의 입장이 우세를 호응을 얻었다.

**【경과변천】** 열성자대회를 고비로 배타적인 당 주도권을 확보한 박헌영 세력은 속속 재건작업에 착수하였고, 9월 11일 재건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다. 여기

에는 여운형·박헌영·허헌·김원봉을 의장단으로, 한빈 등 9인을 부의장단으로, 이주하 등 33인을 중앙상무위원으로 임원이 편성되었다. 조선공산당은 재건 직후 9월 25일 소위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8월 테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조선공산당의 당면 주장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인텔리겐차 등의 이익을 옹호하여 급진적인 개혁을 위한 투쟁, 조선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봉건잔재의 일소, 혁명적·민주주의적 인민정부수립 등이었다.

**【결과】**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소련의 후견을 업고 등장한 김일성에 의하여 코민테른의 1국 1당 원칙이 파괴되어 북한지역 내에 독자적인 북조선노동당을 창립하였다. 그 뒤 박헌영은 미 군정청의 공산당 간부체포령과 함께 지하로 잠복하여 해주지역으로 월북하고, 조선공산당은 남한지역의 남조선노동당과 북한지역의 북조선노동당으로 양립하였다.

**【의의】** 남조선노동당은 남한 내에서 대부분 숙청되거나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 군정에 의해 체포되었고, 1949년 6월 명분이나마 남북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다.

**【핵심어】** 박헌영/장안파/재건파/열성자대회/남로당/북로당/조선노동당

**【참고문헌】** 송남헌, 『해방 30년사』 제1~제3권(성문각, 1976);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창작과비평사, 1984); 한국근현대사간행위원회, 『사실로 본 한국근현대사』(황금알, 2003);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화다출판사, 1985).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미군정기 사회

**【소항목】** 해외동포의 귀환

● 해외동포의 귀환	해방정국의 혼란
------------	----------

**【정의】** 해방 이후 해외에 산재해 있던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움직임

**【원인·배경】** 해방 직후 해외 한인의 규모는 대략 5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당시 한국인의 20%에 달하는 수치였다. 일본의 압제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로 나가야 했던 한인들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국으로 귀환되어야 했다. 하지만 해외 한인은 ‘해방국민’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무계획적인 귀환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전개】** 일제 강점기 비자발적 이동에 의해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일본 및 태평양 군도로 강제 징용을 당하거나 일제의 압박을 피해 만주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대량 이주는 한국 내에서의 이주와 한국으로부터 일본 및 만주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나타났다. 1944년에 이르러 한국 총인구의 11.6%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방과 함께 자신들의 고향으로 귀환하였고 이러한 자발적 이동에 의해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나타났다.

한국사회에 이와 같은 인구 이동의 격렬한 혼란기가 바로 해방과 분단에 의한 인구의 대이동이었다. 이 시기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45~1949년의 기간에 6%를 넘고 있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일본과 만주,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국제 이동에 의한 증가율은 1949년 인구의 8.9%, 여기에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하면 1949년 인구의 12.6%에 해당된다.

해외 동포의 귀환이동은 광복 직후인 1945년과 194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한인구를 급속히 증가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 귀환 이동자 중에는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월등히 많았고, 연령적으로는 청·장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고향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대부분이 농촌보다는 고향 근처의 도시지역이나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 정착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해외 한국인은 일본 220만 명, 만주지역 170만 명 등을 위시하여 총 5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광범위한 민족의 해외 분산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 식민통치의 밀도와 강도를 증언하고 있다.

해방이 되자 해외 인구의 유동층이 귀환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3년간 공식 귀환자는 일본에서 110만 명, 만주에서 30만 명, 중국에서 7만 명, 기타지역이 3만 명 등 총 150만 명을 상

회하였다. 귀환동포는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귀환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해외한인은 300만 명에 달하였다. 대개 중국으로부터의 귀환동포는 인천항으로,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귀환동포는 부산항으로 입항하였다.

<표> 1944년과 1949년의 인구센서스로 집계된 남한의 지역별 인구

	1944년			1949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전 국	8,200,465	8,364,852	16,565,317	10,188,238	9,978,518	20,166,756
서 울	408,485*	416,491*	824,976*	737,371	700,299	1,437,670
경 기 도	1,441,732	1,444,911	2,886,643	1,381,895	1,352,049	2,733,944
강 원 도	936,429	900,232	1,836,661	587,256	551,179	1,138,435
충청북도	482,985	487,638	970,623	583,015	562,949	1,145,964
충청남도	814,178	832,866	1,647,044	1,029,507	997,330	2,026,837
전라북도	804,299	834,914	1,639,213	1,034,203	1,014,748	2,048,951
전라남도	1,318,078	1,387,658	2,705,736	1,529,136	1,512,355	3,041,491
경상북도	1,259,638	1,301,613	2,561,251	1,618,840	1,586,400	3,205,240
경상남도	1,143,126	1,175,020	2,318,146	1,572,279	1,561,418	3,133,697
제 주 도	-	-	-	114,736	139,791	254,527

\*1944년 서울(당시 경성부) 인구는 경기도 인구에 포함되어 있음.

**【결과】** 하지만 이러한 해외한인의 귀환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소련군 점령지역인 사할린에서는 한인의 귀환이 원천봉쇄 되었으며, 전선에 배치되었던 일부 한인들은 연합국의 포로 혹은 '전쟁범죄인'으로 취급받아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의의】** 해외동포 귀환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외국에 거주하던 사람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외동포귀환'은 일제의 폭압적 통치하에 강제에 의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일제의 식민통치 종식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심어】** 비자발적 이산/귀환동포/식민통치의 종식

**【참고문헌】** 강인철, 「미군정기의 인구이동과 정치변동」, 『한신논문집』 제15권 제2호(1998); 김두섭, 「미군정기 남한 인구 재구성」,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9).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태동

**【중주제】** 1945년 8·15광복

**【키워드】** 38선의 설정과 민족분단

**【전시항목】** 미군정기 사회

**【소항목】** 해방정국의 혼란

해외동포의 귀환	● 해방정국의 혼란
----------	------------

**【정의】** 해방 후 자주독립국가와 친일파 청산이라는 우리 민족의 과제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세력간의 갈등

**【원인·배경】** 8·15해방은 우리 민족의 자력만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연합국측이 승리에 따른 전후 처리의 결과였다. 더욱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강대국이 분할 점령함으로써 자주독립국가 건설은 중대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전개】** 해방이 되자 전국의 치안과 대중정치조직은 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는 가운데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하지만 남한에 상륙한 미군은 인공과 중경입정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채 당시의 총독부 지배기구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1945년 말, 모스크바 삼상결정 내용이 국내에 파급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지고 국내정치세력은 좌우익으로 분화되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조선임시정부 구상안이 현실화되자 공동위원회 참가 대상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안에 국내 정치세력은 통일적 대응을 취하지 못했다. 미군정이 좌익에 대한 탄압 정책을 강화하자, 조선공산당은 ‘신전술’을 채택하고 미군정에 대항했다. 한편 중도세력은 미소공위를 재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 역시 좌우합작을 지원해 중간파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과도입법의원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과도입법의원 수립에서 여운형의 중간좌파가 탈락함으로써 좌우합작은 좌절되었다. 결국 1947년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어 남북 간의 분단은 기정사실화되었다.

한편 미군정의 친일파 우대, 우익편향 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에서의 실패는 대중들에게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켰다. 또한 좌우익이 각각 소련과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극한적인 대립으로 백색테러로 나타났다.

미소공위의 결렬로 미국과 소련의 협조를 통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이 폐기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결국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방안이 결의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방안을 거부했고, 따라서 5월 10일 남한지역에 국한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과】** 한반도 정치문제를 둘러싼 미소 간의 갈등과 국내 좌우의 정치세력의 격렬한 투쟁은 결국 분단의 내재화를 가져왔으며 이후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결과를 가져왔다.

**【핵심어】** 건국준비위원회/모스크바3상회의/좌우합작운동/미소공동위원회

**【참고문헌】**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돌베개, 1998);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소나무, 1992); 이완범, 『한국해방3년사』(태학사, 2007).

**【사진자료】** 254. 19460501 노동절 기념 대구지역 택시 시가행진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 Ⅱ

#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대한민국의 기초확립은 광복 후 정부수립을 위한 갈등, 전쟁과 민주주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의 토대를 확립한 과정이다. 광복은 모든 정치세력이 자주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통일된 운동노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더욱 분열과 혼란으로 치달아,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한 채,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에서 비롯된 점도 있었으나, 국제적 요인이 보다 컸다. 이미 한반도의 38선 분할은 일본군의 항복제의 시점인 8월 10일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명분으로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한반도 분할점령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한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의 제의와 소련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은 나라를 둘로 나누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인위적으로 분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는 국내정치세력의 재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남북한 정치세력을 점차 자기 세력권으로 재편하려고 하였다. 미 군정은 지방인민위원회의 존재, 공산당 등을 배제하고, 한국민주당과 같은 보수우익세력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며 미국에 가장 우호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다.

이와 반대로 북한에서는 좌익이 주도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조직이 소련의 이익과 일치하는 까닭에 직접 통치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소련은 사실상 군정기구인 군사령부와 민정청을 통해 북한 내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세력은 점차 배척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 세력을 지원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여 나갔다. 소련군정은 남한 내 좌익세력의 합당, 총파업 투쟁 등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세력의 단결이 필요했지만, 분할점령 속에 정치세력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미국과 소련에 의존하려 했다. 미 군정은 좌익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승만과 이를 지지하였던 한국민주당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결국 남북한에 두 개의 정권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으나 북한에서도 김일성은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를 받아 ‘중앙정부’라고 대립하였다. 김일성은 중국 대륙에서 1949년 10월에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사실에 고무되어, 1949년 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군사행동을 제의하였다. 이듬해

3월과 4월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을 승인받아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세계 공산화 시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미군의 참전으로 한국인은 승리를 기대했으나 전선에서 아군의 패배는 계속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으로 북진하였다. 북한정권의 멸망을 통한 한국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였고, 26일에 한국군 선발대가 드디어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자, 이때 중국군의 참전이 시작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세계전쟁으로 확대되느냐, 아니면 쌍방간의 교섭을 통해서 휴전을 모색하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렀다. 3년에 걸친 포성은 멈추었지만, 남북을 비롯해 쌍방은 인명과 재산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인적, 물적 손실보다 이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본질적으로 동족끼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민족적 유대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전쟁은 남북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켜 대결구조가 심화되었다. 남한은 자유우방 16개 참전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등의 지원으로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복구와 민주주의 기초 마련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강화와 장기집권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적인 부패와 무능을 드러냈다. 이미 전쟁 전 1950년 5월 총선 결과 국회에서 무소속과 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자, 부산에 피난하고 있었던 가운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땃벌레'·'백골단'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통령직선제를 위해 발췌개헌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막강한 독재권력도 1차에 한하여 중임한다는 헌법을 준수한다면, 독재정권은 장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조항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표결결과는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되었으나, 그 이튿날 종신집권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사오입이라는 정파적 해석을 통해서 개헌안은 결국 통과되었다. 이어서 1960년 3월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부는 재집권을 위해 기관장의 사표를 받아 놓고 행정력과 경찰력, 반공청년단 등 민간 외곽단체를 동원하여 3인조, 9인조 식의 공개투표 등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4·19혁명은 학생들의 공명선거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학생시위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되면서 부패한 독재정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고, 또한 부조리한 현실에 집착하는 기성세대를 비난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우리 역사상 국민대중이 통치권력을 쓰러뜨린 최초의 혁명이었으나, 오로지 반독재 민주주의의 실천이었을 뿐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독재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사회적 평등에 대한 4·19 정신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오늘날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주동이 된 4·19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의 과제는 그동안 독재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민주주의의 회복과 경제재건을 위해 경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억압되어 왔던 정치적 자유를 일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민중의 요구를 적절히 조정

해 나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혼란을 방치하였다. 결국 민주당 정부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권한 지 10개월 만에 군인들의 정치개입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내세우면서 자주경제의 재건,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유대강화 등을 표방하였다. 그들이 내세운 정치적 이념은 조국의 근대화로 정치에 참여한 후 민주주의의 제약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중시하였다.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6·25전쟁과 전후 복구	근대국가 토대 구축
-------------------------------	------------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광복 후 좌우의 세력 대립, 미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세우는 토대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면서 드디어 한국은 35년간 억압과 착취에 시달렸던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되었다. 온 국민은 다시 찾은 '조국'을 위해 모든 힘을 바쳐서 새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여 왔던 독립운동세력은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화북의 조선독립동맹, 소련 영내로 들어간 김일성부대, 국내의 독립세력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지역적으로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일제 말에 통일전선적 성격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서로 달라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념적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해방의 흥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여운형이 일제 말에 조직한 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해외로부터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송진우, 김성수 등 보수 우익세력은 '건준'이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참가하지 않았다.

'건준'과는 별도로 당시 난립되어 있던 정당들은 통합운동 등 통일전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먼저 귀국한 이승만이 주도하였고 뒤에 김구가 귀국하여 통합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모두 자과중심으로 끝나버리고 어느 누구도 좌익과 우익을 포용할 수 있는 민족적 구심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 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대립이 격화되어 각각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민주의원'으로 양분되어, 좌우의 정치세력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분할점령한 상황에서 하나가 된 통일국가로 건설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바로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삼상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에 통치능력을 향상시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5년간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우익세력은 "신탁통치가 웬말이나, 반탁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2번에 걸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는 우익을 선호하는 미국 측과 모스크바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소련 측의 주장으로 임시정부 구성의 협의대상에 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미 군정은 소련이 기피하지 않는 정치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좌우합작운

동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좌우의 세력의 격렬한 반대와 미 군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적인 지지기반이 없는 중간파들만으로 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실패하고 말았다.

1947년 초부터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점차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립하였다. 공산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 결의에 따라 창설된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소련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북한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의 가능지역만의 총선거 실시를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는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중간세력들은 남한만의 선거를 거부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하였고, 좌익세력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사건을 일으켰다.

제헌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였다. 광복 후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내외에 독립을 알렸으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의의】** 한국정부의 수립은 미소의 개입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국내정치세력 간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정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광복 후 좌우의 세력 대립, 미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이다.

**【전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면서 드디어 한국은 35년간 억압과 착취에 시달렸던 식민지상황에서 해방되었다. 온 국민이 다시 찾은 '조국'을 향하여 모든 힘을 바쳐 새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여 왔던 독립운동세력은 중경의 '임시정부', 화북의 조선독립동맹, 소련영내로 들어간 김일성부대, 국내의 건국동맹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통합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념이 달라 각기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데 있었다.

국내에서는 해방의 흥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여운형이 일제 말에 조직한 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해외로부터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송진우, 김성수 등 보수 우익세력은 '건준'이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참가하지 않았다.

'건준'과는 별도로 당시 난립되어 있던 정당들은 통합운동 등 통일전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먼저 귀국한 이승만이 주도하였고 뒤에 김구가 귀국하여 통합운동을 전개하였지

만, 모두 자파중심으로 끝나버리고 어느 누구도 좌익과 우익을 포용할 수 있는 민족적 구심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 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대립이 격화되어 각각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민주의원'으로 양분되어, 좌우익 정치세력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분할 점령한 상황에서 하나가 된 통일국가로 건설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바로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삼상회의였다. 그들은 한국에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함으로써 통치능력을 향상시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우익세력은 "신탁통치가 웬말이나 반탁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1946년 3월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는 우익을 선호하는 미국 측과 모스크바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소련 측의 주장으로 임시정부 구성의 협의대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소련이 기피하지 않는 정치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좌우익세력의 격렬한 반대와 미군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중적 지지기반이 없는 중간파들만으로 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실패하고 말았다.

1947년 초부터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점차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립하였다. 공산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 결의에 따라 창설된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소련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북한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중간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좌익세력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사건을 일으켰다.

**【의의】** 한국정부의 수립은 미소의 개입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국내 정치세력 간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면서 효과적으로 민족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5·10선거와 헌법제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	-----------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은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당시 한국에 진주한 소련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소련도 한반도는 물론 일본 점령과 만주에서 이권 확보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는 국내 정치세력의 재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한국의 정치세력을 점차 자기세력권으로 재편하려고 하였다. 미 군정은 남한 정치세력 가운데 미국의 군사점령 목표와 요구에 일치하는 한국민주당과 같은 우익단체는 장려하고, 그렇지 않는 공산당은 억압하였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존재는 미군정에게 장애물로 인식하였던 반면에 우익세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였다. 그것은 우익세력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미국에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5년 10월 하지(John R. Hodge) 주둔군사령관이 행정고문으로 11명을 임명할 때, 그 가운데 한국민주당의 당원이 9명이나 차지하였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도 북한 정치세력 가운데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을 점차 배척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주도권을 장악하여 나갔다. 공산주의자 내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던 ‘조선독립동맹’이나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공산주의자들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였다.

남한에서 미군정이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세력이 중심이 되어 남한 정부를 수립하였다. 북한에서도 소련의 지지를 받아 1948년 8월 25일 선거를 실시하고 최고인민위원회에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이 중앙정부라고 강변하면서 남한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국토완정을 위해서 바치자”고 주장하였다.

남북한의 지도자인 이승만과 김일성이 해방 후의 갈등과 분단국가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정부수립 후부터 전쟁에 이르기 전까지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나타냈다. 김일성도 미국과 이승만의 전쟁도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지키는 명목으로 군비를 확대하였으며, 남한 내부의 무장투쟁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였다.

실제로 남북한은 남한군이 38선을 경비하면서 1949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서로 수백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벌였다. 북한 측은 남한이 침략이 총 432회에 군대와 경찰이 거의 5만

명이나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남한 측은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총 874회의 침공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냉전

●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냉전은 실제적인 전쟁행위는 없는 가운데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동원을 요구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원인·배경】** 냉전이라는 개념은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의 미국과 소련 간의 대결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미소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가리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시대로서 그리고 국제적 체제로서의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가장 논쟁이 치열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체로 2차 대전 기간 중에 형성되었던 미국과 소련간의 밀월관계가 깨지고, 전후 승전국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한 이 두 국가 사이의 균열이 나타난 것이 냉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전개】** 이러한 냉전이 본격화 된 계기는 1946년 소련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급변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주 소련 대리대사였던 케난(George F. Kennan)이 긴 전문(Long Telegram)을 통해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봉쇄정책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세력과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팽창에 대응하여 이를 기존의 소련 세력권 내에 한정시키고자 한, 즉 소련 영향력의 더 이상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초기 냉전시대 미국의 대소 외교정책 혹은 외교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케난의 주장이 1947년 3월 미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선언하는 ‘트루먼 독트린’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유럽 부흥을 위한 마셜플랜도 시행되었다.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의 급속한 변화를 두고 언론인 리프먼(Walter Lippman)이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York Herald Tribune)에 냉전(Cold 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는 대중화되었다.

**【결과】**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냉전은 전략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은 그에 대한 하부개념인 전술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현대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 냉전은 상위로 반공이데올로기를 하위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반공체제의 형성은 봉쇄정책의 국내화로 볼 수 있다. 즉 냉전의 전개과정에서 있어 구체적인 전술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반공체제 형성의 한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의의】**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후 체제의 대결구도를 상징하는 용어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핵심어】** 국제적 체제/봉쇄정책/케난(George F. Kennan)/트루먼독트린/반공체제

**【참고문헌】** 김진웅, 「냉전의 기원론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논집』 6(역사교육학회, 1984); 김진웅, 『냉전의 역사, 1945~1991』(비봉출판사, 1998); 김영호, 『6·25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두레, 1998); 히라야마 타츠미 저·이성환 역, 『한반도 냉전의 기원-미국의 대한국정책: 1942~1946-』(중문, 1999).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모스크바삼상회의와 북한체제의 구축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 모스크바삼상회의와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1945년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이 모여 한반도에서의 국가수립과 점령해제에 대해 논의한 회담.

**【원인·배경】** 일제의 패망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일시적 점령이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합의된 정책이 없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승국 사이의 조정이 필요했다. 특히 3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필요했다.

**【전개】** 1945년 12월 16일부터 미국의 번스 미 국무장관, 소련의 몰로토프 외무장관, 영국의 베빈 외무장관 등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외무장관이 모여 일본패망 이후의 국제관계를 논의하였다. 12월 16일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유엔주도하의 4개국(미국, 영국, 중국, 소련) 타치를 규정한 안을 제출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련에게 「한국의 통합행정(Unite Administration for Korea)」라는 특별 비망록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남북간 통일행정부의 조속한 수립과 한국에 대한 4개국 5개년간의 신탁통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소련은 12월 20일 이후 '신탁통치 후정부수립'을 규정한 미국의 안에 대해 '선임시정부수립과 후후건'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소련안에 대해 양보를 단행하여 문구수정을 거치고 이를 1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결과】** 결국 12월 28일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최종 결정안이 합의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일본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둘째,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성하기 위해 남한 주둔 미군과 북한 주둔 소련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에 의해 작성된 의제를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

국 정부에 제출한다. 셋째,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5년 이내를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Trusteeship)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를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4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긴급 문제를 고려하고 미군과 소련군의 행정 및 경제면에서의 균형을 수립하기 위해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국과 소련 양국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다.

**【의의】** 미국은 원래 임시정부수립 없이 4대국의 직접 신탁통치를 제안했지만 소련 측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는 미국 측에서는 4개국 협의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소련 측에서는 임시정부가 친소적으로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였다. 하지만 모스크바삼상회의는 그 최종결정안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적었다.

**【핵심어】** 신탁통치/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미소공동위원회

**【참고문헌】**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이완범, 『38선 획정의 진실』(지식산업사, 2001).

**【사진자료】** 255. 194512 모스크바 3상회의 왜곡된 보도

256. 19460103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시가 행진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1945년 12월 25일 북한의 소련점령군 총 정치국장인 슈킨이 소련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친소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상부에 올린 보고서

**【배경】** 기존 학계에서는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소련은 한반도에서 단일한 독립국가 수립을 약속했고, 실제 행동으로도 이러한 목적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했지만, 미군정 당국과 남한의 일부 극우적 정치세력들에 의해 미소공위협상의 좌절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분단정권의 가시화로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련은 애초부터 북한을 자국 이익의 교두보로 삼아 위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슈킨보고서는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의 방법과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내용】** 소련의 초기 대한반도정책은 1945년 9월 20일의 스탈린 지령서를 그 시초로 보고 있다. 이 스탈린 지령서는 “소련군이 조선의 주둔지역에서 소련과 같은 국가모형을 복사하지 말고, 반일세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블록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북한에 소비에트적 질서를 도입하지 말고, 둘째, 반일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며, 셋째, 이를 소련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넷째, 북한주민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섯째, 북한의 민정지휘는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가 담당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슈킨보고서는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서를 바탕으로 북한지역에서 친소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민정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소련군 사령부의 주도하에 구성된 민정담당부가 각 지역의 군 위수사령부 체제를 통해 지휘한다.

둘째, 소련의 대북한 목적은 소련에 우호적인 단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하지만 북조선의 부르주아 민주개혁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소련의 국가이

익을 보장할 교두보 역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민주주의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과업을 위해 북조선 내 정권을 중앙집권화하고 토지개혁을 이룬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하며, 소련군 산하 민정기구의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슈킨보고서는 북한지역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징·의의】** 지금까지 해방전후사에 있어 남한은 미 군정에 의한 직접통치를,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통한 소련의 간접통치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 슈킨보고서는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 소련에 의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정권수립 공작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밝히는 주요 문건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스탈린지령서/미소공동위원회/북한점령정책/정치국장 슈킨/친소정권

**【참고문헌】**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역사비평사, 2000); 이지수,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도서출판 기과량, 2009); 김영수, 「북한지역의 정치적 동태와 소군정」,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1(도서출판 오름, 1998).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시작한 운동

**【원인·배경】** 북한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소련군의 일부는 양곡 창고와 공장의 기계 등을 약탈해 갔고, 만행과 비행을 저질렀다. 이런 행동에 대해 공산당은 소련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점차 반소·반공의식이 강화되었다.

**【전개】** 1945년 11월 18일 용암포 제일교회 부설인 구제초등학교에서 민족진영의 청년 조직인 ‘고려청년동맹’ 주최로 독립축성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식장에서 조선민주당 선전부장의 반공적 발언과 학생대표의 소련군 만행관련 연설이 있었다. 이 발언으로 장내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고,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보안서원 및 소련군을 동원하여 당시 참석한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에 흥분한 반공 학생 및 주민들은 시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 1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의주 평북학생회는 즉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공산당과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만 남기고 다시 신의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귀환한 학생들은 11월 22일 밤 비밀회의에서 공산당에게 반대하여 쫓겨할 것을 결의하였다.

11월 23일 오후 2시경 쫓겨한 신의주 학생들이 보안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정보를 입수한 보안부와 소련군은 유혈 진압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 소식이 평양에 알려지자 평양의 학생들은 신의주로 가자고 모여들었지만, 당시 소련군은 반소운동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학생들이 모이기만 해도 적위대를 동원하여 연행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평양의 학생들은 다른 방향으로 반공운동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1946년 2월 1개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 김일성에게 요구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결과】** 신의주 학생의거 사건이 발생하자 소련군정과 공산당은 당황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27일 김일성이 직접 신의주를 방문하였다. 김일성은 동중(東中) 교정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공산주의의 오류를 비판하였다. 즉 신의주 학생들이 쫓기하게 된 계기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부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의주 또는 도당 간부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학생들만 집결시켜 같은 내용으로 회유하면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신의주 학생들을 희생시킨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대립하였다. 그리고 학생들과 공산 측의 3일간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얻지 못하자 공산당은 다시 강경책을 사용하였고, 1차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들을 재수감하는 등 다시 탄압을 시작하였다.

**【의의】** 북한지역에서의 반공학생의거는 신의주, 평양 등 몇 지역에만 국한된 사건은 아니었다. 이 외에도 1946년 3월 13일 함흥학생 반공의거, 1946년 5월 23일 정주오산학교 학생 반공의거 등 지역별로 소규모, 대규모의 학생 반공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공의거는 소련군정과 공산당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북한정권의 초기 권력 장악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어】** 신의주반공학생의거/소련군정

**【참고문헌】** 이철승, 「학생운동사: 신의주 학생의거와 김일성의 등장」, 『통일한국』 통권 제67호(1989.7); 조동영, 「신의주학생 반공의거를 아는가」, 『한국논단』 Vol. 255(2010);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편, 『한국학생건국운동사』(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출판국, 1986).

**【사진자료】** 257. 19591127 학도호국단 주최 반공학생의 날 행사

**【작성자】** 이상호(전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북한의 공식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6년 2월 8일에 설립된 예비중앙정권기관

**【설립배경】**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북한에는 각 지역마다 자생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이 단체들은 소련군이 점령한 후 각도에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각 지방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조성하였으나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소련군사령부의 제안에 따라 5도 인민위원회 대표들은 일제잔재 청산, 사회질서 유지, 생활 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45년 11월 19일 ‘북조선행정10국’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북조선행정10국’이 진행하는 사업은 조선인의 경험부족, 중앙과 지방기관 사이의 소통 단절, 각국 사이의 협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중앙 정권기관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945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된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논의되고 있을 때, 소련은 이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들 간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느껴 통일조직의 구성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에 1946년 2월 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에게 협력하던 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북한의 임시혁명정권기관 수립을 담당할 ‘각정당사회단체발기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월 8일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 행정국 및 각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표확대협의회’가 개최되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활동사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가장 먼저 토지개혁에 착수하였다. 토지개혁법안은 3월 5일 개최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총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공포되었고, 3월 말까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도 아래 지방에서는 도·군·면 인민위원회가 그 책임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농업헌물세에 관한 결정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상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을 발표하는 등 중앙

정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과·변천】** 1946년 5월 초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어 정부수립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지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9월 초부터 인민위원회 선거를 준비하여 11월 1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인민위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년 간 제정 실시한 법령들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북조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을 결정하여 2월 22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성립되었다.

**【의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은 북한공산주의자들과 소련군정국의 의도로 구성되었다. 이 단체의 활동은 북한에 토지개혁 등의 사회개혁을 추진하여 북한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북한에 친소적인 경향을 가져왔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어】** 인민위원회/북조선행정10국/신탁통치/북조선노동당/북조선인민위원회

**【참고문헌】**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I (선인, 200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선인, 2005);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국사관논총』 54(1994).

**【사진자료】** 258. 19460208 북조선임시위원회 소속위원회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냉전	●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1946년 11월 3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실시한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원인·배경】** 1946년 2월 8일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농업현물세계 시행, 노동법령 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선거는 이러한 사업을 지방까지 확대하고,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발발】** 북한의 선거 실시 계획은 1946년 9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제2차 확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이 회의에서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선거 계획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46년 7월 모스크바에서 김일성, 박헌영과 스탈린의 면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전개】** 선거규정이 발표되자 소련군정의 선거운동 활동이 가시화되었다. 선거규정은 1936년에 소련에서 제정된 스탈린 헌법을 따른 것으로 소련에서 선거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 소련파 출신들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선거실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할 선거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면과 시인민위원들이 작성하였다. 당시 선거권자의 최소 연령은 20세였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규정된 인사들은 선거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후보자는 유일입후보제였고, 투표함은 흑백투표함이었다. 이 투표방식은 유권자가 투표 후 찬성표는 백색투표함에 넣고, 반대표는 흑색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것이었다.

인민위원회는 1946년 9월 21일 선거선전의 거점인 선전실과 모범선거실을 각 도 시 군 면의 각 선거구와 그 분구에 설치하여 선거를 독려하였다. 인민위원회의 활동 외에도 소련군정 역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데 그러한 사례로 소련군 사령관 슈티코프(Т. Ф. ШТЫКОВ)가 1946년 10월 21~27일 평양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준비작업을 지도하였고,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접견하여 선거준비작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선거결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총 유권자의 99.6%가 참가하였다. 도 선거에 참가한 사람들의 97%, 시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95.4%, 군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96.9%가 입후보자를 찬성하였다. 북한은 이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선거에 유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한정된 것은 당시 북조선노동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이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일부 학생들의 반공시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선거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기독교 세력이 항의와 연기를 요구하였지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흑백투표함의 설치 이유를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거론하였지만, 이것으로 주민들의 의사 표시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인민위원회 선거 이후 1947년 2월 17~20일에 열린 인민대표회의에서 인민회의가 창설되고 대의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선출된 237명이 제1차 북조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변경시켰다.

**【의의】** 이 선거 이후 인민위원회의 합법화와 인민회의 구성으로 북한정권이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세력들이 배제되었다. 또한 이 선거는 북한에서 선거의 한 모델이 되어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비롯하여 6·25전쟁 기간 중 점령지역인 남한에서 실시한 선거 등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핵심어】** 인민위원회/북조선행정10국/신탁통치/북조선노동당/북조선인민위원회

**【참고문헌】**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I (선인, 200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선인, 2005); 전현수, 「'쉬띠꼬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통권 32호(1995); 조성훈, 「1946년 11월 북한의 인민위원회 선거」,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22(1999).

**【사진자료】** 259. 194703 인민위원회 선거

260. 19480909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상으로 선출된 김일성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북한임시헌법 초안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1947년 12월 20일 북한 인민회의의 주도하에 설립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북한의 헌법 초안

**【배경】** 북한에서 헌법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한국 독립결의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유엔결의가 나온 직후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헌법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초안은 이후 북한의 정권수립 이후 헌법으로 채택되었다.

**【내용】** 1947년 11월 19일 북한은 제3차 인민회의에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으로 31명을 선출했으며, 이 가운데 3인을 초안작성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들은 12월 말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초안은 김두봉의 제의에 의해 1948년 2월 7일 제4차 인민회의에서 ‘전인민적 토의’에 부쳐졌다. 이렇게 헌법 초안에 대한 토의는 1948년 2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인민적 토의’ 이후 1948년 4월 28일 헌법초안 심의를 위해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초안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다.

북한의 임시헌법 초안은 총 10장 10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10조로 구성된 근본원칙을 그리고 제2장부터는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담고 있으며, 제3장부터 6장까지는 권력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국가중앙집행기관으로서 내각과 각 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방주권기관을 제6장에서는 재판소 및 검찰소를 13조항에 걸쳐 규정하였다. 제7장에서는 국가예산을, 제8장에서는 민족보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국장, 국기 및 수도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헌법개정의 절차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특징·의의】** 북한의 임시헌법초안은 이후 북조선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1948년 9월 8일 공식적으로 헌법으로 채택되었다. 이 때 논의된 임시헌법초안을 보면, 권력구조의 특징이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집중에 있었다. 또한 경제 원리는 국가에 의한 완전한 통제를 규정하였다. 이는 소유와 생산, 소비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소유 및 통제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과를 통해 볼 때 이미 북한은 자신들의 주도하에 1947년 말부터 헌법제정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최고인민회의/권력집중/통제경제

**【참고문헌】**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2); 서희경, 「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2007.6); 기광서, 「슈티코프, 해방 후 북소관계의 실력자」, 『내일을 여는 역사』(2006년 여름); 임대식, 「통일조국의 이름 짓기 일제시기·해방 후 나라이름에 반영된 좌우갈등」, 『역사비평』 통권 23호(1993).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남한체제의 구축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정당통합운동과 좌우합작운동은 광복 후 좌우익 세력 대립, 미소 대립을 극복하려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배경】**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드디어 한국은 36년간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졌던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온 민족이 모든 힘을 쏟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전개】** 1945년 해방은 오랫동안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한국사회를 활성화시켰다. 해방 후 1년도 채 못되어 정당이 300여 개에 이르렀고, 수많은 청년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등이 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해방의 흥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여운형이 엔도 정무총감으로부터 정권이양을 받은 동시에 일제 말에 조직한 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건준은 8월 말까지 남북한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하여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좌파와 우파와 중도파를 비교적 고르게 포용하여 과도기적으로 ‘사실상의 정부기구’로서 활동하였다. 그 활동은 해외로부터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점차 조선공산당 세력이 주도하게 되어 미군의 진주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서 서둘러서 조선인민공화국 으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미군이 입성한 후 인공을 기정의 사실로서 인정받아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우처럼 미군정은 부인하였다. 그리고 송진우, 김성수 등 보수 우익세력은 건준이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참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귀환만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하다가, 미군이 진주하는 날 비로소 한국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인공 타도를 외쳤다.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는 국내 정치세력의 재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한국의 정치세력을 점차 자기세력권으로 재편하려고 하였다. 미 군정의 방침도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군사점령의 목표와 요구에 일치하는 한국민주당과 같은

단체는 장려하고, 그렇지 않는 공산당은 억압하였다. 즉, 인공산하에 있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존재는 미 군정에게 장애물로 인식하였던 반면에, 한국민주당과 같은 보수우익세력에 대해서는 가장 고무적인 유일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건준과는 별도로 당시 난립되어 있던 정당들은 통합운동 등 통일전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먼저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이 주도하였고, 뒤에 중경에서 김구가 귀국하여 통합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모두 자파중심으로 끝나버리고 어느 누구도 좌익과 우익을 포용할 수 있는 민족적 구심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국내의 좌우익 정파들은 임정과 인공의 지지를 놓고 양분되었다. 그 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모스크바삼상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그 대립이 격화되어 각각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민주의원으로 양분되어, 좌우익 정치세력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다.

좌우합작운동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는 좌우익의 편파적 노선을 극복하고 좌우합작이 필요하다는 여운형과 김규식의 논의와 함께 소련과 협상을 재개하고 남한에서 미국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군정의 의도가 맞물려서 추진되었다. 미 주둔군 사령관 하지는 1946년 6월 30일 좌우합작 노력에 공식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소련이 기피하지 않는 정치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주선하였다. 그들은 온건우파세력을 결집시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한편, 친미적인 입장에서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중간파를 형성하려는 의도였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김규식과 여운형은 좌우익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1946년 5월부터 좌우합작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과 조선공산당을 대표하는 좌익세력의 격렬한 반대와 미 군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중적 지지기반이 없는 중간파들만으로 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실패하고 말았다.

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던 세력과 그 지지세력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중심이 되어서 정당 사회단체의 통합을 모색하여 중간세력의 총집결을 모색하였다.

**【의의】** 당시 난립되어 있던 정당들은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좌익과 우익을 포용할 수 있는 민족적 구심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핵심어】** 건준/독촉/민전/좌우합작운동

**【사진자료】** 261. 19460411 제27주년 대한민국임시입헌 기념식\_창덕궁 인정전

262. 194602 민주의원에서 의장으로 선출 된 이승만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미소공동위원회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미소공동위원회(US-USSR Joint Commission)는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군과 소련이 분할점령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에서 1946~1947년 사이 2차례 열린 회의이다.

**【설립 배경】** 미소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분할점령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되었다.

**【경과·변천】**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1946년 3월 20일 열렸다. 이때 미군 측 수석대표는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이었고, 소련군 수석대표는 쉬티코프(Terentii Shtykov) 중장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임시정부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대상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위원회는 1946년 5월 6일 무기휴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1차 회의 결렬 후 미국 수석대표 아놀드 소장은 9월 귀국하고, 후임으로 미 제4사단장 브라운 소장이 임명되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제1차 회의가 무기휴회된 지 1년 지난 1947년 5월 21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다.

**【활동사항】**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5년까지 4개국 신탁통치안을 미·소·영·중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을 제외하고 김구를 비롯한 우익 지도자와 대다수 한국인들은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위원회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 대표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측 대표는 의사표시의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신탁통치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정치세력도 임시정부수립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맞섰다. 미국과 소련이 협의대상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1946년 5월 6일

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재개된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소련 대표가 반탁운동을 전개한 정당·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1947년 9월 26일 소련 측 대표는 통일된 독립조선 건설을 위해 1948년 초에 미국과 소련 군대를 동시에 철퇴하고 조선인에게 스스로 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1947년 10월 18일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가 소련 제안을 거부하자, 소련대표단은 10월 21일 평양으로 떠남으로써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미소공동위원회는 성과 없이 끝났다.

결국 다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임시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될지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협의대상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고, 이에 맞서 소련 측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하여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의의】**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한국인의 운명에 대해 미국과 소련이 2년간의 지루하고도 소득 없는 대립으로 한반도가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소련의 협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참고문헌】** 이동현, 「미·소공동위원회의 쟁점과 결말」, 『한국사시민강좌』 28(2006);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연구』(청계연구소, 1989).

- 【사진자료】** 263. 19470521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대표  
264. 19470521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측 대표 연설  
265. 19470521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장면  
266. 1946 미소공동위원회 미·소 대표의 밀담 모습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전시항목】** 냉전체제의 가속화와 남북한 체제 구축

**【소항목】**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냉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
모스크바삼상회의 북한체제의 구축	북한임시헌법 초안
슈킨보고서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남한체제의 구축
북한지역 반공학생의거	미소공동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대립

**【정의】** 신탁통치와 좌우대립은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결정한 미·소·영·중 4개국에 의한 5년간 실시하려는 신탁통치안에 대해 좌우익세력들은 찬성과 반대를 하면서 갈등했던 정치과정을 의미한다.

**【배경】** 미국과 소련은 카이로선언의 ‘적당한 절차’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신탁통치제를 실시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 정치세력이 신탁통치에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전개】**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국을 5년간 신탁통치를 함으로써 한국의 통치능력을 향상시켜 정부를 수립하도록 했다. 신탁통치 문제는 이미 전쟁 중이던 1943년 3월 워싱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이든 외무부장관이 전후 처리문제에 대한 회담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루스벨트는 인도차이나와 한국은 강대국의 후견 아래 민주적 제도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신탁통치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국들은 식민지 기간 동안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치능력이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단체들이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부인성명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는 ‘적당한 절차’라는 단서를 붙여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그 후 열린 회담에서도 루스벨트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는데 20년에서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스탈린도 그 기간을 줄일 것을 주장하면서도 동조하였다. 그러므로 그 기간이 다소 신축적이었지만,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다.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의 비보를 접한 서울의 유흥업체는 일제히 문을 닫았다”는 기사처럼, 국내에서는 신탁통치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김구를 비롯한 우익 정치세력들은 신탁통치안이 “희망과 기대에 넘쳐있던 우리 3천만 민족에는 청천벽력”이고, “민족자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 민족의 총의에 절대로 위반된다.”면서 신탁통치를 반대하기 위하

여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군정청에도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신탁통치 절대배격의 투쟁을 계속하였다.

좌익세력들도 “우리 조선은 어떠한 이유로도 신탁통치를 실시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하면서, 탁치반대전단을 살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46년 1월 초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한 걸음 진보”라면서 신탁제도도 “조선독립을 달성하는 순서, 과도적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탁치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좌우익은 각각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민주의원’으로 양분되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다.

좌익세력들은 해방이 스스로 획득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여 탁치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임시정부수립의 중요성을 내세워 탁치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와는 달리 즉시 독립을 주장하여 왔던 한국 민족의 열망을 바탕으로 한 김구와 이승만 등의 우익세력은 “신탁통치가 웬말이나. 반탁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내 정치세력의 양분 속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탁치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은 대립을 계속하여 임시정부수립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신탁통치를 둘러싼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과 대립은 그들의 상층부만의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민족적 대립과 분열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핵심어】** 신탁통치/탁치논쟁/반탁운동

**【참고문헌】**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연구』(청계연구소, 1989).

**【사진자료】** 267. 19451231 신탁통치반대전국대회 (서울운동장)  
268. 194602 신탁통치 결사반대 경북도민대회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제정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대한민국 정부수립
● 5·10선거와 헌법제정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선택지였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최초의 대안은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국내 정치세력은 반탁세력과 찬탁세력으로 분열되었고, 그것은 신탁통치안이 실현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여 제시된 다른 대안은 중간과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점차 가시화되는 미소 냉전체제 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1947년 7월 초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되자 미국은 1947년 9월에 유엔 총회가 한반도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1947년 11월 14일에 유엔 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 하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북한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 실시되었다. 5·10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생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 최초의 시도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헌법 초안은 몇몇 사람의 주도 하에 작성되었지만,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해방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제헌헌법에서 제시한 민주공화국 정치체제는 19세기 후반 개화파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서 명시되었던 입헌 공화주의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한 제헌헌법에서 제시한 경제체제는 건국세력의 시장경제체제 지향을 반영하면서도 당시 시대분위기를 반영하여 국가의 역할과 경제정의의 강조했고, 노동3권을 헌법에 보장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체를 갖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정부수립과 함께 향후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5·10총선거 실시

**【소항목】**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 문제 UN상정

●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 문제 UN상정	남북협상
유엔한국임시위원단	5·10총선거
총선 및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갈등	

**【정의】** 미국은 2차례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협의대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자,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배경】** 모스크바삼상회의 결과 신탁통치 문제와 한국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례 열렸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미·영·중·소 4개국 회담으로 한국문제를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한반도문제가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4개국 회담으로 이관하는 것은 삼상회의 결정을 위반한다고 거부하였다.

**【전개】** 미국은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이미 1947년 초부터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점차 포기하고, 남한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적 해결’을 통해 소련과 타협하지 않고도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으며, 철군 후 남한의 안전보장도 가능한 방안이었다.

미국안에 맞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은 한국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문제로 유엔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조선인민이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조선에서 미소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안”을 제안하였다. 1947년 10월 유엔총회에서 1948년 초에 미소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거하자는 안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만들고 스스로 치안을 확보하면 미국과 소련군을 철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내 정치세력도 1947년 하반기부터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와 선철군 총선론으로 대립하였다. 미 군정 측은 소련안이 일체로부터 독립한 한국인의 자주적 정서에 부합되어 미국안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 파급력을 우려하였지만, 좌익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철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을 비롯하여 합작위원회에서도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

자는 것에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중간세력 가운데 김규식은 주둔군의 철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무런 선결조건의 언급도 없이 철퇴만 하자는 안을 반대하였다. 그는 미국이 북한군에 상응하는 군대를 양성하지 못하면 그들이 침입하여 공산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충실히 할 것으로 요망하였다.

좌익 측은 소련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소련대표는 미국이 모든 외국군이 1948년 초에 철퇴할 것을 동의한다면 소련군이 미군과 동시에 한국에서 물러날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엔위원단이 한국점령을 연장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가 될' 남한 단독정부를 강제로 수립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북한 측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 한국 전역에 걸쳐 실시될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의】** 유엔에서는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국제연합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다. 미군정은 이제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익지도자를 선택하여 남한만의 정권이라도 세우려고 하였다.

**【핵심어】** 유엔감시/총선/유엔위원단/외국군 철수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한울, 2006).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 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5·10총선거 실시

**【소항목】**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 문제 UN상정	남북협상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5·10총선거
총선 및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갈등	

**【정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은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정부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9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배경】** 1947년 11월 유엔총회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수립 문제를 위해 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엔한국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였다.

**【전개】** 유엔한국위원단은 세 번 조직되었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첫 번째로 조직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1948년 1월 초 공산진영의 우크라이나공화국을 제외한 8개국 대표들이 서울에 도착하여, 12일부터 덕수궁 석조전에서 동 위원회를 열고 인도대표 메논(Crishna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13일에는 한국인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19일에는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시단을 설치하고 남북을 통한 전한국의 총선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이 북한에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원단은 남한에서만 총회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소총회와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 결의는 실시되어야 하나, 유엔임시위원단이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감시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결의안을 소련 등 11개국이 불참하고 일부 국가는 기권한 상태에서, 31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유엔임시위원단은 5·10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단을 지방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선거는 언론 출판 및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존중되는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선거결과에 따라 구성된 국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진영이 날로 대립되어가는 정세 속에

서 미국은 남한에서 미군의 철군을 가능하게 할 조건과 북한의 남한 전복활동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유엔한국위원단을 재조직하려 하였다.

1948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신한국위원단'을 설치하였다. 한국신위원단은 이전 '임시위원단' 가운데 캐나다와 우크라이나가 제외된 7개국으로 결성되었다. 신위원단의 역할은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규정된 조항에 준하여 남북한 군대를 통일하도록 조력하고, 물자교류, 대표정부의 발전을 위한 협력, 점령군의 철퇴 감시 및 철퇴사실을 확증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1949년 5월 말 유엔 한국위원단과 협의에서도 한국통일문제가 유엔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소련과 북한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한국위원단의 남북통일과업이 곤란하였다.

세 번째 한국위원단은 1949년 11월 유엔 제4차 총회의 결의로 구성되었다. 대표단도 중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프랑스, 엘살바도르, 터키 등이었다. 1950년 2월 13일 유엔신한국위원단은 덕수궁에서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그들의 역할은 한국 내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 있는 사태 진전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것이었다. 위원단은 전쟁 직전까지도 한국통일과 남북교역 장벽제거 방안 등을 도모하였다.

**【의의】**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소련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방안을 촉진시킬 수 없었다.

**【핵심어】** 유엔한국임시위원단/메논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도진순, 『한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시대의 정치사』(서울대 출판부, 1997).

**【사진자료】** 269. 1948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늘어선 인파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5·10총선거 실시

**【소항목】** 총선 및 대한민국 수립과정의 갈등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 문제 UN상정	남북협상
유엔한국임시위원단	5·10총선거
● 총선 및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갈등	

**【정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좌익세력의 도전으로 일어난 갈등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은 제주 4·3사건이다. 이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을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4·3특별법 규정).

**【원인】** 제주 4·3사건은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로당 계열의 좌익세력들의 활동과 군정경찰, 서북청년단 등 극우 반공단체의 횡포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전개과정】**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 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체의 탄압 중지와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정은 4월 5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한 후 통행증제를 실시하고, 경찰력과 서북청년단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다.

무장대는 5·10선거 방해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였고 도민들도 적극 동참하였다.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입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선거를 거부하였다. 이 결과로 제주도에서 5·10선거는 3개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 을 두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화되고, 남제주군 선거구만의 선거가 간신히 실시되었다. 이로써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미 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 측에 가담하고, 6월 18일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이때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건잡

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유격대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독립유격대대를 투입하여 유격대의 잔존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최후의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로 많은 유격대와 민간인 희생을 내며, 1949년 5월 10일 재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그해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 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도내 도처에서 '전향자'에 대한 대검거 및 처형이 재개되었다.

**【결과】** 4·3사건은 광복 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쟁으로 많은 인명피해 및 가옥손실 등의 물질적 피해와 공동체의 파괴, 연좌제 등 유형·무형의 피해를 계량화하여 파악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였다. 제주 4·3학살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줄곧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한 결과,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다.

**【핵심어】** 좌익세력

**【참고문헌】** 제주도 4·3연구소.

**【사진자료】** 270. 제주4·3사건 진상조사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5·10총선거 실시

**【소항목】** 남북협상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 문제 UN상정	● 남북협상
유엔한국임시위원단	5·10총선거
총선 및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갈등	

**【정의】**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 등과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전개한 협상이다.

**【배경】** 남북협상은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지역 선거’를 결정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협력이 불가능해지고 남북총선의 실현이 좌절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이 자주적인 해결을 모색하였다.

**【전개】** 1948년 1월 초 총선거 감시를 위해 서울에 도착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감시단을 설치하고 남북을 통한 총선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위원단을 인정하지 않은 채 1월 22일 북한 입북을 거부하였다.

1948년 1월 하순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위원단을 방문하고 남북협상 방안과 양군철병 조건 및 시일의 협정 공포 등을 제안하였고, 유엔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2월 6일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안을 유엔한국위원단에 제출하였고, 2월 10일 김구는 “3천만 동포에 읍소하노라”는 성명에서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미소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지도자회담을 소집할 것이니,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의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라고 사상을 초월한 단일민족의 정신으로 행동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2월 16일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김두봉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의사를 전달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지역 선거’를 결정함으로써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 7인은 공동성명에서, “우리 문제를 미소공위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국제연합도 해결 못할 모양이니 이제는 우리민족으로 자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3월 8일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에게 남북협상에 관한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15일, 김일성은 이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3월 25일 북한 측은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4월 14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28일자로 김일성은 남한 지도자 15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지도자회담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협상의 조건으로 김규식은 5원칙을 제시했다. 즉, 어떠한 형태의 독재정치도 배격할 것, 사유재산제도 인정, 전국적 총선을 통한 통일중앙정부수립, 여하한 외국에도 군사기지를 제공치 말 것, 미소양군의 조속 철퇴에 관하여 먼저 양군당국이 철퇴조건 및 기일 등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5개 조건에 대한 논의를 수락하였다.

김구와 홍명희는 1948년 4월 19일에 출발하였고, 김규식은 21일에 38선을 넘었다. 이미 19일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는 개막되었다. 김구는 4월 22일 연석회의 축사에서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는 단선단정이므로 공동투쟁목표로 단선단정을 반대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미 김일성은 21일 '유엔조선위원단'의 활동반대와 남한 단독선거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여 단독 선거반대에 비중을 두었다.

4월 23일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와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과의 요인회담을 통해서 4월 30일 공동성명서에서도 양군 철퇴안과 철군 후 내란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남한 단독선거 반대 등이었다. 서울에 돌아와서, 김구와 김규식은 공동성명에서 회의의 성과를 자주적 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남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데 일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남북협상은 남한의 실세인 이승만 세력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철군론 제기 이후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철군 후 치안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지 내란이 발생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미 국제화된 한국문제를 미국과 소련의 합의 없이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의의】** 남북협상이 끝난 후 곧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되고 전쟁으로 이어짐으로써, 남북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남북협상이 민족진영이 분열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좌우익 세력과 남북연대를 통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정부수립의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핵심어】** 김구/김규식/김일성/남북협상5원칙/남북요인회담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도진순, 『한국 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사진자료】** 271. 19480422 남북한연석회의 김구선생 연설

272. 19480425 남북연석회의 김구, 김규식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5·10총선거 실시

**【소항목】** 5·10총선거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 문제 UN상정	남북협상
유엔한국임시위원단	● 5·10총선거
총선 및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갈등	

**【정의】** 5·10총선은 1948년 5월 10일 제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이다.

**【배경】** 한국의 독립문제는 미소의 의견대립으로 국제연합 제2차 총회에 이관되었다.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표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이 그들의 점령 아래 있는 북한에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이 남북한에 대한 선거 감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 감시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켰다. 그 결과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전개】** 통일정부수립이 어려워지자, 국내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김규식 등은 남북대표자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군정은 우익과 협조하여 선거 준비를 진행 1948년 3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判任官)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였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좌익은 물론이고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김구 세력과 중간세력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민주당, 조선민주당 등이었다. 좌익세력들은 선거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제주도에서는 총선거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 선거에서는 총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모두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입후보자의 총수는 948명으로 평균 4.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당 사회단체 중 10명 이하의 입후보자를 낸 정당이 43개나 되었고, 1인의 입후보자를 내세운 정당과 사회단체도 26개였다. 이 선거에서 무소속은 총입 후보자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 총 13,272개 투표구 중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난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유권자는 총 8,132,517명 가운데 자진 등록한 경우는 96.4%에 이르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 투표율은 95.5%였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무소속이 85명(42.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27.5%), 한국민주당 29명(14.5%), 대동청년단 12명(6%), 조선민족청년단 6명(3%),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명, 대한노동총연맹 1명, 교육협회 1명, 민족통일본부 1명, 조선공화당 1명 등이 당선되었다.

**【의의】**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총 200개 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북한에서는 5·10선거를 반대하면서, 또 다른 정권이 세워져서 결국 남북한에 두개의 정권이 나타났다.

**【핵심어】** 총선/제헌국회/남북한 정권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1964).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소항목】** 제헌의회의 구성

● 제헌의회의 구성	제헌헌법의 경제체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헌헌법의 사회문화 규정
제헌헌법의 정치체제	

**【정의】**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이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구성을 결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의회이다. 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통상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배경】**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삼상회의는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해방정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신탁통치안과 한국 문제를 해결할 기구로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46년 3월 20일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것은 성과 없이 동년 5월 7일에 결렬되었다. 미군정은, 한편으로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제안을 실현시킬 태세를 갖추어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단독정부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결실은 1946년 10월 말에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나타났다. 총 90석 가운데 45석은 임명직이었고, 45석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좌익 세력이 배제된 채 이루어져 이승만 계열 및 한민당 계열 등 우익 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미군정은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간파 사람들을 임명직 의원에 임명하여 구색을 갖추었다. 1947년 3월 12일에 트루만 독트린이 발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이 유효하였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이것 역시 성과 없이 1947년 7월 초에 완전 결렬되었다.

**【시행】**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 이외의 방법을 통해 한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유엔 총회가 한국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1947년 11월 14일에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국 대표(시리아,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인도, 중국(국민당 정부),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호주)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고, 이 위원단 감시하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들어온 때는 1948년 1월 8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북한의 김일성은 이들의 입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미국의 주장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48년 3월 17일에 미군정은 남한 내 총선거 일자를 1948년 5월 9일로 확정·발표하였다(추후 5월 10일로 변경). 물론 남한 내 총선거에 대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1948년의 '2·7구국투쟁', '4·3항쟁' 등 민중의 저항도 심했고, 좌익계와 중도파 및 우파의 일부 정치세력은 선거에 아예 불참하여 5·10총선거는 우파의 일부만이 참여한 제한된 선거였다.

**【결과·의의】** 1948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 의원 200명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당·단체별 당선자를 보면, 무소속이 85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고,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55명으로 27.5%, 한민당은 14.5%로 2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나머지는 대동청년단 2명, 기타 19명이었다. 이 제헌국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6월 25일에 5·10총선거의 결과를 인준하였고, 또한 유엔 총회에서는 1948년 12월 12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한국 내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하였다.

**【핵심어】** 남북한 총선거/유엔한국임시위원단/제헌의회/모스크바삼상회의/미소공동위원회/남조선과도입법의원/대한민국 정부수립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전상인, 「이승만과 5·10총선거」,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사진자료】** 275. 19480531 제헌국회의 개원을 축하 기념우표  
276. 19480531 제헌국회 개원식 연설하는 이승만  
277. 19480531 제헌의회의 이승만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소항목】**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헌의회의 구성	제헌헌법의 경제체제
●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헌헌법의 사회문화 규정
제헌헌법의 정치체제	

**【정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안을 기초하고,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헌법을 말한다. 이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배경】** 헌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해방 직후부터 나타났다. 그 최초의 시도는 1946년 1월 10일에 개최될 국민대회에서 헌법 대강을 논의하기 위해 1945년 12월 16일에 헌법연구위원을 선정한 것이었다. 국민대회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1946년 2월 10일에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여기에서 22명의 헌법·선거법 수정위원을 선정하여 헌법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이들 헌법 수정위원회는 헌법 기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헌법 기초에 참조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전을 수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행】** 제헌헌법을 만들려는 노력은 5·10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기초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당시 사회분위기나 체제 이념을 이해하는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임시정부수립대강: 미소공위 자문안 답신안』(새한민보사, 1947)이다. 이것은 향후 수립될 임시정부에 대한 구상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제7호(1946년 5월 1일)에 근거하여 작성된 답신안을 정리한 것이다. 미소공동위원회의의 요구에는 신탁통치를 찬성했던 좌익세력은 물론, 그것을 반대했던 우익세력까지 포함한, 총 435개의 정치·사회단체가 답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1946년 12월에 구성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작성한 헌법안이다. 1947년 3월 11일에 우파 세력 중심으로 작성한 남조선과도약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이것은 임시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선민주임시헌법안과 통합되어, 1947년 7월 10일에 조선민주임시약헌(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선임시약헌으로 명칭 변경)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조선임시약헌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최종 통과된 것은 1947년 8월 6일이었지만, 미군정은 석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미국의 대한정책 방향이 선회하자 1947년 11월 24일 공식적으로 인준 보류를 선언하였다.

공식적인 헌법 기초 작업은 미군정이 남한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남조선과도정부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였다. 남조선과도정부는 정부수립을 대비하여 법전 기초를 위해 사법부 산하에 법전기초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속에 헌법분과위원회를 두어 헌법 기초를 위해 유진오 등 기초위원을 임명하였다. 1947년 10월 첫 회의에서 헌법 초안 작성이 유진오에게 맡겨졌고, 유진오는 그해 겨울(겨울방학 때)부터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헌법 초안은 1948년 5월 초에 헌법분과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것은 행정연구회 멤버들과 토의되었고, 이러한 심의를 거쳐 최종 완성된 것은 1948년 5월 31일이었다고 한다.

**【결과·의의】** 제헌국회는 1948년 6월 2일에 30인의 기초위원과 10인의 전문위원을 선출하고, 6월 3일부터 본격적인 헌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심의는 6월 22일까지 진행되었고, 그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3차례의 독회가 진행된 후 1948년 7월 12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제헌헌법은 전문, 총 10개 장, 103개 조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출범의 토대가 되었다.

**【핵심어】** 제헌헌법/헌법연구위원/헌법·선거법 수정위원/미소공동위원회/남조선과도입법의원/조선임시약헌/남조선과도정부 헌법분과위원회/유진오

**【참고문헌】**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일조각, 1980);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서해문집, 2006); 서희경,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정」,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사진자료】** 278. 19480717 건국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국회의장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소항목】** 제헌헌법의 정치체제

제헌의회의 구성	제헌헌법의 경제체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헌헌법의 사회문화 규정
● 제헌헌법의 정치체제	

**【배경】** 개항시기에 추진된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개혁은 1880~82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일본에 파견한 수신사와 신사유람단, 그리고 청국에 파견한 영선사를 통한 제도시찰과 과학기술지식의 습득, 통리기무아문의 설치·개편, 해관의 개설 등, 일본과 중국에 대한 모방의 측면에서 근대적인 제도개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개혁은 근대국가에 대한 밑그림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고, 그나마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수동적·단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명 관료 중심의 개화와 세력이 추구한 군민공치(君民共治)의 정치체제는 주목되지만, ‘3일 천하’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입헌체제를 실현시키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입헌주의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구체적으로 시도했던 것은 갑오개화와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근대적 내각제도와 사법제도를 도입했고, 내각중심의 입헌군주제와 제한적 대의정치의 실현을 꿈꿔 기존의 군주권이 법제상으로 크게 제한받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 노력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근대적 제도개혁의 성과를 더욱 튼튼한 사회적 토대 위에 뿌리 내리게 하려는 실천운동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중조직을 이용하여 자유·민권운동을 주도했고, 의회개설운동의 초기 형태로 이해되는 중추원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등 독립협회의 입헌주의 운동은 시민적 참정구조의 제도화를 통하여 입헌대의군주제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시행】** 공화정체론이 등장한 것은 애국계몽운동을 통해서였고, 이것은 1919년 3·1독립선언을 계기로 설립된 다수의 임시정부에서 계승되었다. 가령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나 그것을 토대로 작성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는 민주공화제로서의 입헌체제를 지향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가령 주권재민의 원리 및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과 입법=의정원, 행정=국무원, 사법=법원이라는 삼권분립의 헌법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더욱이 1944년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제4조)고 하여 원리상에서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가 앞으로 수립될 정부의 정치체제로서 사실상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의의】** 제헌헌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치체제를 표명하고 있는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물론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회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정치체제에 대한 합의는 개항 이후 꾸준히 지속되었던 입헌주의 운동이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임시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헌헌법의 정치체제는 개항 이후 전개된 입헌주의 운동의 역사적 귀결로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제헌헌법의 정치체제/개화파/군민공치(君民共治)/갑오개화파/입헌군주제/독립협회/입헌대의민주제/대한민국 임시헌장

**【참고문헌】** 제1대 제1회 제22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헌법안(제2독회)’, 1948.7.1; 권영설, 「이승만과 대한민국 헌법」, 『이승만 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한홍수,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 『이승만 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소항목】** 제헌헌법의 경제체제

제헌의회의 구성	● 제헌헌법의 경제체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헌헌법의 사회문화 규정
제헌헌법의 정치체제	

**【정의】** 제헌헌법에 나타난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체제의 이념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이 크게 반영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중요한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시장경제체제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이었다.

**【배경】** 해방 직후는 경제체제 선택의 시기였다. 우선 식민지 유산을 지적할 수 있다. 식민지 유산은 시장경제체제보다 계획경제체제를 선호하게 하는 토양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식민지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항 담론으로서 당시 널리 확산되었던 것은 제국주의론과 사회주의 이론이었다. 또한 식민지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자본은 일본인 자본이었고, 민족자본의 축적은 억제되어 시장경제의 발전을 이끌 민간 기업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하였다. 해방 이후의 현실적인 정치·경제적 조건도 시장경제체제보다는 계획경제체제에 유리한 구조였다. 우선 사회주의 방식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영하는 북한이 존재하였으며, 북한은 당시 대다수 국민을 차지했던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1946년 3월에 시행하였다. 식민지기에 일본 정부와 일본인 재산이었던 귀속재산이 해방 이후 정부 소유로 그대로 이양되었다는 점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요한 물질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경제체제의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시행】** 경제체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개인의 재산 소유권의 인정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 제15조에서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 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부정하고 농민적 토지소유제도를 새롭게 창설한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경제체제의 특징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 요인은 다양한 경제자원 및 귀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제헌헌법 제85조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기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했고, 제87조에서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했고, 아울러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에 따르게 되면, 중소기업 민영공장을 제외하고, 대규모 기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자연자원 등은 전부 국가 소유하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대부분의 자원이 귀속재산으로서 국가 소유였다는 점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의의】**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시장경제체제를 곧바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약조건에 직면하여 국가의 역할과 평등주의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였다. 초기의 불완전한 시장경제체제는 그 이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핵심어】** 제헌헌법/시장경제체제/계획경제체제/평등주의 이념/민족자본 축적/귀속재산/복합

**【참고문헌】** 제헌헌법, 제6장 경제 장, 1948년 7월 12일; 최상오, 「이승만의 경제구상-건국헌법 경제 장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5.10선거와 헌법 제정

**【전시항목】**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소항목】** 제헌헌법의 사회문화 규정

제헌의회의 구성	제헌헌법의 경제체제
대한민국 제헌헌법	● 제헌헌법의 사회문화 규정
제헌헌법의 정치체제	

**【배경】** 제헌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제2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과 더불어 납세의 의무와 국토방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문화에 직접 관계되면서, 제헌헌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히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교육, 노동, 사회복지 규정의 변화를 살펴본다.

**【시행】** 국회에 제출된 제헌헌법 초안의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핵심 배경은 의무교육 연한을 초등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에 있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초등교육에 한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추후 상황이 개선되어 초등교육 이상에서도 의무교육이 필요할 때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크게 수정할 필요 없이 ‘적어도’라는 말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되어 채택되었다. 따라서 최종 확정된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제헌헌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문제는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제17조와 제18조에 관한 것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제헌헌법 초안의 제17조는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항) 근로조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3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여기에 일부의 국회의원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구체화해서 제17조에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목을 넣어달라는 주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당시의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적극적인 창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결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 인정되었다(제18조 제2항).

**【결과·의의】** 노자관계에서 시장경제체제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가까운 주장이 헌법에 수용되었던 배경에는 당시 국회에 중도 좌파를 지향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 국가 소유인 채로 남겨진 귀속기업체 등 국가의 역할이 크게 인정되고 있던 상황 등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교육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정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서 교육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핵심어】** 제헌헌법 초안/제헌헌법의 교육 노동 조항/의무교육/기업경영 참가권/이익균점권/교육법

**【참고문헌】** 국회 본회의 속기록,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및 헌법안(제1독회)', 제1대 제1회 제17차 회의, 1948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헌법안(제2독회)', 제1대 제1회 제23차 회의, 1948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헌법안(제2독회)', 제1대 제1회 제24차 회의, 1948년 7월 3일;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

**【사진자료】** 279. 1955 강변에서 염색을 하는 아낙네들의 모습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냉전과 남북한 간 대치 5·10선거와 헌법제정	● 대한민국 정부수립
------------------------------	-------------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오전에 중앙청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정부수립을 세계에 선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1948년 7월 20일에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이승만 국회의원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년 7월 17일 제정)에 따라 각 부처장을 임명했고, 1948년 8월 5일에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해방 이후 한국을 통치했던 미 군정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인정과 그들로부터 행정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 등을 인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행정권 이양은 1948년 8월 9일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미 군정의 통치행위와 기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이양은 9월 11일에 완료되어 사실상 한국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두 과제에 직면하였다. 하나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군정 시기에 조직된 조선경비대(육군)와 조선해안경비대(해군)를 1948년 9월에 인계함으로써 우선 일단락되었는데, 그때의 병력 수는 대략 54,000여 명 정도였다. 다른 하나는 해방과 남북분단 등의 이유로 정체된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정부는 산업재건과 경제부흥을 위해 1949년 초에 산업부흥 5개년계획과 물동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1948년 12월에 미국 정부와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여 산업재건 및 경제부흥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받으려 하였다.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정치·사회에서 곧바로 안정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국회에서는 친일파 처리문제로 정파 간 갈등이 노출되었고, 이념갈등이 한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지원과 감시하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후 유엔 회원국들의 한국정부 승인이 잇달았다. 이 결과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선거에 의해 설립된 합법적인 정부이며, 또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이 공식 천명되었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출범

**【소항목】** 제헌 국회의 대통령 선출

● 제헌 국회의 대통령 선출	첫 국무회의
3부요인 선출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정부조직법과 초내대각 구성	국군창설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배경】** 제헌헌법 제53조 제1항은 신생 정부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고 규정했고, 그 절차를 규정한 제2항에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다만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시행】** 1948년 7월 17일에 국회는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재개하여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절차와 일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것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신생 정부의 수립을 그만큼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절차를 논의하였던 것이다.

이날(7월 17일) 회의에서는 우선 대통령 선거 절차가 논의되었다. 크게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를 두 단계(예비선거→정식선거)로 진행하자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비선거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선거하자는 안이었다. 첫째 안을 다시 간략히 소개하면, 전원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를 우선 뽑자는 것이었다. 전원위원회에서 출석 의원 1/3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그 다음 후보자로 뽑힌 사람에게 가서 후보 출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식 선거를 하자는 안이었다. 이 안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비선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거를 하게 되면, 당선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안을 주장한 사람은 첫 번째 안이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 대부분은 대통령 선거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누어 선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원들 간의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표결에 부쳐 두 번째 안이 가결되었다.

다음에 7월 17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선거 일정이었다. 선거 일정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안이 제출되었다. 우선 첫째 안은 대통령 선거를 7월 20일(화요일)에 실시하고, 부통령

선거는 다음 날(21일)에 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7월 20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7월 17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홍보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월요일(19일)보다는 화요일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의견이 일치된 또 다른 점은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둘째 안에서는 7월 20일 오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두 가지 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두 번째 안이 받아들여져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는 7월 20일 오전과 오후에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결과·의의】** 7월 20일 대통령 선거에는 국회의원 총수 200명에서 196명이 출석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2/3 이상을 초과하여 조건을 충족시켰다. 대통령 선거는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때부터 투표가 시작되어 11시 5분에 종료되었다. 개표는 곧바로 진행되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원이 180표를 얻었고, 김구 13표, 기타 3표여서 이승만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핵심어】** 제헌헌법/대통령 선거/전원위원회/1948년 7월 17일/1948년 7월 20일/이승만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대통령·부통령 선거일 결정 및 절차에 관한 결의안', 제1대 국회 제1회 제32차 회의, 1948년 7월 17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대통령·부통령 선거', 제1대 국회 제1회 제33차 회의, 1948년 7월 20일.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출범

**【소항목】** 3부요인 선출

초대국회의 대통령 선출	첫 국무회의
● 3부요인 선출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정부조직법과 초내대각 구성	국군창설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배경】** 제헌헌법 제3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제69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3부 요인은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시행】** 5·10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지만, 아직 국회법 등이 제정되지 않아 제1대 국회는 국회를 누가 소집할 것이며 최초의 회의 진행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의원 상호간 계속 논의하였다. 그 결과 1948년 5월 21일 신익희 등을 중심으로 ‘국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위원회 결의에 따라 5월 27일 예비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예비회의에서는 국회 소집일을 5월 31일로 정하여 총선거 이후 거의 20일 만에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승만 의원은 이날 이루어진 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7월 20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장을 대신할 새로운 국회의장을 뽑아야 했는데, 그것은 1948년 8월 4일 선거를 통해 신익희 국회 부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국무총리 임명 문제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당시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한민당, 독촉 계열, 무소속 의원들은 자기 소속 정당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기를 원했다. 따라서 한민당에서는 김성수를, 독촉 계열에서는 신익희 의원을, 무소속에서는 조소앙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 그러나 1948년 7월 27일에 개최된 제35차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출신이며, 조선민주당(조만식이 당수)의 부당수로 있는 이윤영 의원을 임명하고 국회의 인준을 요청하였다. 그가 말한 임명 경위는, 우선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당 관계자를 피했다는 것이고, 다음에 통일에 대한 강조, 북한에 대한 고려를 반영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윤영 국무총리 승인요구를 재석의원 193인 중 반대 132표, 찬성 59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한 사람은 조선민족청년단(족청) 단장인 이범석이었는데, 국회는 8월 2일 제37차 회의에서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승인

하였다. 이때에는 시급히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두 번씩이나 반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김병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48년 8월 5일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다음 날 표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부결되었고, 곧바로 표결하자는 안이 가결되어 곧바로 투표가 실시되어 김병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결과·의의】** 신익희 국회의장은 출석의원 176명 가운데 총 103표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94인 중에서 찬성 110표, 반대 84표였고, 김병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57인 중 찬성 117표, 반대 31표였다.

**【핵심어】** 제헌헌법/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예비회의/김성수/조소앙/신익희/이윤영/이범석/김병로

**【참고문헌】** 국회 본회의 속기록, '임시의장 추천의 건', 제1대 제1회 제1차, 1948년 5월 31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의장·부의장 선거', 제1대 제1회 제1차, 1948년 5월 31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의장선거', 제1대 제1회 제39차, 1948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대법원장 임명 승인에 관한 건', 제1대 제1회 제40차, 1948년 8월 5일; 김수자, 「1948년 이승만의 초대 내각구성의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제23·24 합호(1997).

**【사진자료】** 280. 1948 대한민국 3부요인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출범

**【소항목】** 정부조직법과 초대내각 구성

초대국회의 대통령 선출	첫 국무회의
3부요인 선출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 정부조직법과 초대내각 구성	국군창설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배경】** 새로운 국민국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그것에 근거하여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주체로서 행정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헌국회는 1948년 6월 2일 헌법 기초위원회와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을 동시에 선정하여, 한편으로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게 되었다.

**【시행】**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위해 기존 부서를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둘째, 이전에 독립부서였던 치안부를 그대로 독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로 편입시킬 것인지 셋째, 재무부의 예산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기획처에 통합시킬 것인지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초기 정부조직은 국무총리,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사회부 등 11개의 부와 총무처, 기획처, 공보처, 법제처 등 4개의 처, 무임소장관 2인으로 구성되었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당시 많이 거론되었던 사람은 김성수, 조소앙, 신익희 등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북한 출신이며, 조만식이 총재로 있는 조선민주당의 부총재인 이윤영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이윤영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지만, 두 번째 추천한 조선민족청년단 단장이었던 이범석은 1948년 8월 2일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국무총리 인선이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 인선을 단행하였다. 8월 2일에는 재무부 장관 김도연, 법무부 장관 이인, 농림부 장관 조봉암, 교통부 장관 민희식이 임명되었고, 다음 날에는 내무부 장관 윤치영, 사회부 장관 전진한, 문교부 장관 안호상이 임명되었고, 8월 4일에는 상공부 장관 임영신, 국방부 장관 이범석(국무총리 겸임), 체신부 장관 윤석구, 외무부 장관 장택상이 임명되어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이상의 초대 내각

구성에 대해 한민당과 임시정부 계열 사람들의 배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노력 등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결과·의의】** 이렇게 임명된 주요 장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 출신이 8명(총 17명)으로 48%를 차지하지만 이북 출신자 2명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 출신자도 포함되어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다. 학력에서는 중졸과 미확인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장관들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유학 경험을 갖고 있었다. 정부수립 이전의 경력을 보면, 식민지기에는 총독부 근무 경험자 1명, 교육계 종사자 5명, 독립운동가 4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핵심어】**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정부조직법/제헌헌법/국무총리/이윤영/조선민족청년단/이법석

**【참고문헌】** 김수자, 「1948년 이승만의 초대 내각구성의 성격」, 『이화사학연구』 Vol.23~24(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97); 최상오, 「1950년대 계획기구의 설립과 개편-조직 및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5호(경제사학회, 2008).

**【사진자료】** 281. 194808 대한민국 첫 각료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출범

**【소항목】**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초대국회의 대통령 선출	첫 국무회의
3부요인 선출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정부조직법과 초내대각 구성	국군창설
●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배경】** 행정권 이양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발표는 1946년 6월 20일에 당시 군정장관 러취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6년 3월부터 각부 장관에 미국인과 함께 한국인도 동시에 임명되었는데, 이 발표를 계기로 각 부처의 책임을 한국인 장관이 책임을 맡고 미국인은 단지 고문 자격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다. 1947년 2월 5일에는 한국인 부처장을 통할하는 민정장관제가 신설되었고, 초대 민정장관에 안재홍이 취임하였다. 1947년 5월 17일에는 군정법령 제141호(남조선과도정부의 명칭)에 의해 남한을 통치하는 입법, 행정, 사법 부문 등 재한국 미군정청 한국인기관은 남조선과도정부라 불리게 되었다. 1947년 6월 3일에 남조선과도정부가 공식 출범하여 행정권 이양조치가 사실상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군정이 자신의 실질적인 권한을 한국인에게 이양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은 중요한 인사를 임명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최종 결재권자로서 기능하였다.

**【시행】**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7월 20~21일에 걸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 인선 작업에 들어가 8월 4일 최종 마무리되어 다음날인 8월 5일에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직 정식 정부로서 출범한 것도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첫국무회의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행정권 이양문제였다. 물론 미군정 시기부터 미군정청의 한국인화를 추구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만이 없을 뿐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였다.

행정권 이양과 관련하여 두 개의 협정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1948년 8월 9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한 미국 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통첩과 이에 응하여 8월 11일에 재한 미국 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통첩이다. 두 번째는 1948년 9월 11일에 조인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하 최초협정)'이다. 첫 번째 협정을 통해 행정권 이양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두 번째 협정에서는 미군

정 시기에 미군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통치행위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합법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협정 당시에 미군정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현상 그대로 한국 정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것은 최초협정 제9조였다. 여기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내 재산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그 소유권을 미국 측에 양도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국회에서는 이 규정이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한미관계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국회를 설득한 결과 1948년 9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결과·의의】** 1948년 9월 11일 최초협정이 조인된 직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1948년 9월 13일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 기구 인수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공식적으로 정부부처의 업무를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한국의 통치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핵심어】** 민정장관제/남조선과도정부/행정권 이양/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참고문헌】**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 통치』(박영사, 1992);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02).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출범

**【소항목】** 첫 국무회의

초대국회의 대통령 선출	● 첫 국무회의
3부요인 선출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정부조직법과 초대내각 구성	국군창설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배경】** 국무원의 구성과 기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헌헌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각부 장관)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에 머물렀던 제1공화국 이후 정부와 달리, 제1공화국에서 국무원은 법적으로 인정된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다는 점이다. 제헌헌법에 따르면(제72조),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내용은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5) 행정 각부 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6)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모두 13개 항에 해당하였다.

**【시행】** 국회의장 이승만은 1948년 7월 20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7월 24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이후 신생 정부를 이끌어 갈 내각 구성에 착수하였다. 우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국회와의 대립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1948년 8월 2일에 조선민족청년단 단장인 이범석 의원이 국무총리로 승인되었다. 국무총리 인선이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 인선에 착수하였다. 8월 2일에는 재무부 장관 김도연, 법무부 장관 이인, 농림부 장관 조봉암, 교통부 장관 민희식이 임명되었고, 다음 날에는 내무부 장관 윤치영, 사회부 장관 전진한, 문교부 장관 안호상이 임명되었고, 8월 4일에는 상공부 장관 임영신, 국방부 장관 이범석(국무총리 겸임), 체신부 장관 윤석구, 외무부 장관 장택상이 임명되어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자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은 정부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첫 국무회의는 내각 인선이 완료된 다음 날인 1948년 8월 5일에 개최되었다. 오전 10시에 중앙청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는 이시영 부통령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데 오후 12시 30분까지 속개되었다. 신문 보도에 근거하여 이날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군정으로부터의 행정권 이양문제, 2) 행정 각부의 구체적인 기구개편에 관한 논의, 3) 시정방침을 작성하고, 이것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 4) 대법원장으로 김병로 씨를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오후에 국회 동의를 요청할 것, 5) 정부수립과 함께 대사면령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함 등이었다.

**【결과·의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아직 정식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적인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신생정부에서는, 한편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과도정부의 관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핵심어】** 첫국무회의/국무원/최고의사결정기관/1948년 8월 5일/남조선과도정부

**【참고문헌】** ‘제1차 국무회의 개최’, 『조선일보』 1948년 8월 6일; ‘국무회의 작일(어제)도 속개’, 『조선일보』 1948년 8월 7일; 김수자, 「1948년 이승만의 초대 내각구성의 성격」, 『이화사학연구』 Vol.23~24(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97).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출범

**【소항목】**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초대국회의 대통령 선출	첫 국무회의
3부요인 선출	●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정부조직법과 초대내각 구성	국군창설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배경】** 해방은 식민지 정치·경제체제의 해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안긴 계기이기도 하였다. 우선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나 임시헌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주공화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형성되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신생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되는 두 이데올로기,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제기되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바로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미군정 시기를 ‘정치 과잉’의 시기로 만들었던 핵심 요인이 되었다.

**【시행】** 해방 직후에는 국내적 기반이 강했던 좌익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좌익세력은 1945년 8월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9월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는 등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이 좌익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적 통치기구임을 천명하고 들어선 미 군정이 미군 진주에 앞서 정부기관으로서 행세했던 좌파의 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하부조직이었던 전국의 인민위원회들을 연말까지 모두 해체시켜버렸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이 알려지자, 초기의 반탁 주장에서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선 것이었다. 이것은 반탁 열기로 고조된 사회 흐름과는 괴리되는 것이어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민당의 지원 하에서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었던 이승만의 반공주의나 단독정부 구상이 곧바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미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 위원회를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한동안 좌우합작과 중간파를 육성·지원하였다. 1947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결렬되자 미국 정부는 1947년 9월 17일에 한국 문제를 유엔에 정식으로 상정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하의 총선실시안’이라는 미국정부의 의안을 가결시

김으로써 한국에서 총선거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되었다.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이 거부되자 유엔 총회는 2월 26일에 위원단의 접근과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과·의의】** 총선거에서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새롭게 출범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를 일관되게 고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출범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정치·경제체제의 근간으로 삼고, 향후 정치,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의 지지와 지원 하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인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의 일정 지역에서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임이 공식 천명되었다.

**【핵심어】** 정치·경제체제/자본주의/공산주의/조선인민공화국/신탁통치안/반공주의/미소공동위원회/유엔한국임시위원단/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참고문헌】** 한홍수,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 『이승만 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유명익,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사진자료】** 282. 1948 정부수립 경축식  
283. 19480815 정부수립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  
284. 19480815 중앙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  
285. 1948 첫 국무회의  
286. 19480826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단상의 이승만 대통령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출범

**【소항목】** 국군창설

초대국회의 대통령 선출	첫 국무회의
3부요인 선출	대한민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
정부조직법과 초대내각 구성	● 국군창설
한미행정권 이양 협정	

**【배경】** 해방과 함께, 일본군, 만주군 및 광복군에서 활약했던 군사 경력자들이 귀국하여 건국의 초석이 되고자 군사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1945년 12월에는 그 수가 무려 30여개에 달하였다. 이 중에서 두드러진 군사단체는 좌익계열의 조선국군준비대와 조선학병동맹이 있었고, 우익계열의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군사단체의 난립이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1946년 1월 21일 군정법령에 근거하여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시행】** 미군정은 국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 사령부에서는 육군 및 공군의 병력 45,000명, 해군 및 해안경비대 5,000명 규모의 국방군 편성계획안을 1945년 11월에 마련했으나 미 본국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5,000명 규모의 필리핀식 경찰예비대 성격의 락부계획(Bamboo Plan)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46년 1월 11일 국방사령부 내에 조선경찰예비 창설임시사무소를 설치했고, 1월 15일에 태릉에 병력 660명의 조선경찰예비대(한국 측 인사들은 이것을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불렀음) 1연대가 창설되었다. 제1946년 2월에 대전에 2연대, 이리에 3연대, 광주에 4연대, 대구에 6연대, 청주에 7연대, 1946년 1월에 부산에 5연대, 4월에 춘천에 8연대가 창설됨으로써 락부계획에 의한 8개 연대 창설이 완료되었다. ‘국방’이라는 용어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자 미군정은 1946년 6월 15일에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조선경비대로 변경하였다. 해군 창설도 추진되었다. 손원일, 민병희, 김영철 등이 중심이 되어 1945년 11월 11일에 결성한 해방병단(海防兵團)은 1946년 1월 18일에 국방사령부 예하로 편입되었고,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하여 조선해안경비대로 변경되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이후,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조선경비대를 25,000명에서 50,000명으로 증강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초에 추가로 10~15의 6개 연대를 창설한 결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5개 여단 15개 연대, 50,490명의 병력을 갖게 되었다. 조선해안

경비대는 1947년 8월 30일 미 해군이 담당하던 해상경비 업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 계속 성장하여 정부수립될 때까지 3,800명의 병력과 105척(총 13,000톤)의 함정으로 확장하였다.

**【결과·의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법률 제1호로서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설립되었다. 1948년 9월 1일에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양경비대는 국군에 편입되었고, 그 명칭도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변경되었다. 이상의 잠정적인 조치는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과 12월 7일 국방부 직제(대통령령 제37호)가 제정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건국 이후 국군조직은 정비되어 갔고, 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6·25전쟁 직전에 국군 수는 104,974명이었다.

**【핵심어】** 조선국군준비대/조선학병동맹/조선임시군사위원회/학병단/백부계획/남조선 국방경비대/조선경비대/해방병단/조선해안경비대

**【참고문헌】**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국방군사연구소, 1998); 이상호, 「이승만과 건군」,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사진자료】** 287. 19480815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정부수립 경축행진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 출범 초기 상황과 북한정권 수립

**【소항목】** 제1공화국 경제정책

● 제1공화국 경제정책	북한정권 수립
반민특위 구성과 활동	북한 초대내각 구성
정부출범 초기 혼란	

**【정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도입·시행된 주요 경제정책을 말한다.

**【배경】**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의 경제실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우선 해방과 함께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단절되었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보완관계를 갖고 있었던 남북한 지역이 분단되었다. 더욱이 신생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를 지향한 다수의 정치세력들 간의 대립과 갈등도 활발하게 표출되었다. 이것은 산업생산을 위축시킨 요인이었다. 산업생产的 정체와 함께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한 것에 기인하여 인플레이션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1945년 12월말 현재 114억 원이던 통화량은 1948년 6월말 현재 519억 원으로 이 기간 동안에 통화량은 거의 5배나 증가하였다. 당시 통화량 팽창의 원인은 미군정이 통치와 행정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조달할 수 없어 중앙은행(한국은행, 당시 이름은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조달했기 때문이었다.

**【시행】** 이승만 정부는 경제적으로 성장과 안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신생 국가로서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성장과 안정은 단기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정책 목표이다.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정부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산업생산 활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부흥을 강조했던 것은, 산업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당시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1949년 초에 '산업부흥 5개년계획'과 '물동 5개년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은 경제부흥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두 계획은 1949년 4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한편, 산업부흥 5개년계획과 물동 5개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경제부흥에 필요한 재원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다양한 경제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론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경제부흥과 안정에 특히 중요한 경제제도는 대외무역과 금융부문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대외무역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194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는데, 그 최초의 시도는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한일통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한일통상회담은 1949년 3월에 최초로 개최된 이후 1951년까지 거의 매년 열려 1년 단위의 한일통상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관세법(법률 제67호)은 1949년 11월 23일에 제정되었다. 정부의 금융정책을 입안·시행하고, 금융 산업의 관리·감독, 그리고 외환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법률 제138호)은 1950년 5월 5일에 제정되었다.

**【결과·의의】**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은 미국정부의 원조정책에 크게 제약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경제부흥을 강조하여 산업부흥 및 물동 5개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재원은 미국 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에 새로운 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원조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이승만 정부가 생각한 경제부흥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안정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매년 두 배 정도의 물가가 상승했던 미 군정 시기와 비교하여 1949년 이후 물가는 크게 안정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체적인 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시기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기였다기보다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핵심어】** 통화량 팽창/산업생산 위축/산업부흥 5개년계획/물동 5개년계획/1948년 경제원조협정/한일통상협정/관세법/한국은행법

**【참고문헌】** 이대근, 『解放後·1950年代의 經濟』(삼성경제연구소, 2002);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7); 최상오, 「1950년대 계획기구의 설립과 개편-조직과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학』(2008).

**【사진자료】** 288. 195707 삼척화력발전소 모습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 출범 초기 상황과 북한정권 수립

**【소항목】** 반민특위 구성과 활동

제1공화국 경제정책	북한정권 수립
● 반민특위 구성과 활동	북한 초대내각 구성
정부출범 초기 혼란	

**【정의】**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광복 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01조와 1948년 9월 22일 공포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에 의거하여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50년 2월 14일까지 활동한 국가기관이다.

**【설립배경】**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자 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민족행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광복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미 군정당국은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 관료들 한국에 행정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해방 직후 국내 각 정치세력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친일파 문제에 대한 태도도 달랐다.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는 1947년 7월 2일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법률>을 제정하였지만 미 군정은 인준 자체를 반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과 남한단독 정부수립이라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자 친일파 처리는 정부수립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과·활동사항】** 1948년 7월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약칭 반민법)>을 가결하여 9월 8일 정부로 이송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2일 반민법을 공포했다. 1948년 9월 29일 국회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안이 가결되었다. 10월 23일 각 도 대표 국회의원 1인씩 총 10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에 김상덕과 부위원장에 김상돈을 선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외에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중앙사무국과 각 도의 반민피의자를 조사할 도 조사부를 설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1949년 반민특위 요인 암살 미수 사건, 국회프락치 사건,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연이어 터져 활동이 방해받았다. 한편 전 법무장관 이인이 주도하여 애초보다 활동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194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반민특위 공소시효 단축안이 제출되

었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임하였다. 그 후 이인을 위원장으로 특별조사위원,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에 친이승만, 친한민당 계열의 일부 인물들로 충원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9월 23일 <반민법> 일부를 개정해서 10월 4일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모두를 해체하였다. 최종적으로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소 계속 중인 사건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민법>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반민법>과 관련된 모든 판결이 무효화 또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 이전까지 반민특위는 총 688명의 반민혐의자를 다뤘으며, 이 가운데 599건을 특별검찰부로 송치했다. 특별검찰부는 이 중 293명을 특별재판부에 기소했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는 1949년 8월 말까지 각각 41건에 대해 구형과 선고를 했다. 10월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특별재판부의 업무가 대법원으로 이관된 뒤 12월 19일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이 공포되고 1950년 4월부터 임시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재판이 재개되었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판결을 받은 사람은 1명 밖에 없었다.

**【의의】**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신국가를 건설하려는 한민족에게는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출발부터 시작해서 활동기간 내내 안팎의 방해와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활동 시한이 단축되어 해체되었다. 결국 식민지 청산은 지연됨으로써 오랫동안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핵심어】** 일제강점기/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족행위자 처벌특별법/친일파

**【참고문헌】**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II-1: 친일반민족행위 연구』(2009); 허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선인, 2003);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나남출판, 2003).

**【사진자료】** 289. 195407 반민특위로 연행되어가는 혐의자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 출범 초기 상황과 북한정권 수립

**【소항목】** 정부출범 초기 혼란

제1공화국 경제정책	북한정권 수립
반민특위 구성과 활동	북한 초대내각 구성
● 정부출범 초기 혼란	

**【정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전후로 대한민국은 단독정부, 단독선거의 후유증에 휩싸여 있었으며,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김구암살사건, 반민특위습격 사건 등 혼란과 갈등이 끊임없던 시기였다.

**【배경】** 광복과 동시에 남한은 일제 말기 전시체제의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물가폭등, 실업난 등의 사회경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좌우의 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1946년 물가는 1944년에 비해 92배나 뛰었고, 실질임금은 물가상승에 비해 13분의 1밖에 안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46년 9월 전국 총파업이 일어났으며, 대구에서는 10·1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과 단독선거 발표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좌익과 우익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익 내부도 갈라져 갈등하였다.

**【전개】** 1947년 8월 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하였다. 11월 14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가 결정되었고, 남북총선거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남북총선거가 소련 군정과 북한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미국의 남한총선거안이 통과되었으며, 미군정은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였다. 김구와 한독당, 그리고 중도계열인 김규식, 안재홍 등은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북한지도부와 남북지도자연석회의를 통해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이승만-한민당은 김구, 김규식 등의 세력과 결별하게 되었다. 단선단정 문제로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었다. 1946년 2월 7일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각급 노동조합이 총파업으로 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으며,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5월 10일로 예정된 제헌의회 총선거와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며 봉기가 발생했다. 특히 제주 4·3사건은 5·10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제주도민의 불만이 합쳐져 폭발하였다. 초기 미군정이 육지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폭력단을

끌어들여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부녀자 겁탈, 제물 약탈과 양민 학살을 자행하자 제주도민 대다수가 이에 항거하였다. 제주도민 14,000여 명이 희생당한 이 사건은 뒤 이어 제주도에 파견되기 위해 여수에서 대기 중인 14연대 반란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여순사건 또한 좌익과 반란군에 의해 경찰과 우익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과 경찰은 민간인까지 학살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수립 이후 일어난 혼란 중 한 양상은 유력 정치지도자에 대한 암살이었다. 이미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한민당의 송진우와 장덕수, 근로인민당의 여운형이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살해되었다. 1949년 안두희가 김구를 살해한 사건은 이러한 혼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들을 두둔했으며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과 정적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49년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이나 국회프락치 사건은 혼란의 중심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결과·의의】** 해방과 정부수립 당시 이와 같은 극심한 혼란상은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분단 상황을 고착시키고, 6·25전쟁의 참혹한 재앙으로 이어졌다. 좌우 합작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중도파의 노력은 결국 실패했다.

**【핵심어】** 제주 4·3사건/여순사건/김구암살사건/단독정부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1』(이매진, 200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위원회 백서 “화해와 상생”』(2009);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6·25전쟁의 기원』(일월서각, 1986).

- 【사진자료】** 290. 19490626 경교장에서 애도하는 시민들  
291. 194810 반란군에 의해 죽은 시신들  
292. 194810 여수반란사태 폭도와 양민 진상조사 장면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 출범 초기 상황과 북한정권 수립

**【소항목】** 북한정권 수립

제1공화국 경제정책	● 북한정권 수립
반민특위 구성과 활동	북한 초대내각 구성
정부출범 초기 혼란	

**【정의】**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쪽에서는 미국, 북쪽에서는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소련의 군정 아래에서 1946년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948년에는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실시된 UN 감시하의 한반도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배경】**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이북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 아래 이미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각도의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1945년 8월 27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0월 8일에는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 주재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10월 28일 인민위원회를 '북조선5도행정국'으로 개편하여 북한에서의 중앙정부수립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싸고 북한지역에서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진영이 반탁운동을 전개한 반면에, 좌익진영은 찬탁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소련점령군과 함께 우익세력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우익진영 인사들이 대거 월남하거나 숙청당하여 표면적이거나 유지되었던 좌·우익의 연립은 깨지고 좌익세력이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8일에는 김일성을 책임자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여 '민주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등 일련의 체제개혁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9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도·시·군·면 인민위원회 선거규정'을 공포하고, 11월 3일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선거를 실시하여 3,459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7년 2월 17~20일 동안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 그 대표들로서 최고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한 후 2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하여 사실상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북조선노동당이 16명, 조선민주당이 2명, 천도교청우당 2명, 무소속 2명이었다. 북조선 인민회의는 1947년 2월 1차 회의에서부터 정권수립일인 1948년 9월 9일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재판소장을 선출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하였으며, 1947년 11월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1948년 2월 7일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는 '민족보위국' 설치를 결의하고,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전개】** 남한에서 5·10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북한에서도 1948년 7월 9~10일 양일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총선거일을 8월 25일로 정하고 초대 대의원으로 212명을 선출한 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결과·의의】** 시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1948년 8월 15일)한 이후 북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이미 북한지역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은 남북한 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1948년 4월) 등을 통해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측의 통일정부수립 반대세력들에 의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측면도 있었다. 즉 남측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북한에서도 단독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북조선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참고문헌】** 北韓研究所, 『北韓總攬(1993~2002)』, 北韓研究所(200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선인, 2005);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 출범 초기 상황과 북한정권 수립

**【소항목】** 북한 초대내각 구성

제1공화국 경제정책	북한정권 수립
반민특위 구성과 활동	● 북한 초대내각 구성
정부출범 초기 혼란	

**【정의】**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는 초대 내각을 구성하였다.

**【배경】**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총선거를 통해 초대 대의원으로 212명을 선출한 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는 초대 내각을 구성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전개】** 초대 내각은 수상에 김일성, 부수상에 박헌영(외무상 겸임)·홍명희·김책(산업성 겸임) 등 3명, 각료 18명(2명 겸임) 등 합계 20명이었다. 당시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내각에 대해 “일 계급의 이해나 일당의 이해를 대표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전 조선 인민의 각 계 각층과 각당, 각과의 대표에 의해 구성”된 ‘연립내각’이란 성격을 부여하였다. 이는 당시 북한의 정치지형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소련군의 지원 아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민족주의 및 독립운동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조선노동당 우위의 내각이었고, 이후 남북 노동당 합당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조선노동당 우위의 내각이었다.

내각 수상에 취임한 김일성은 이미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당시 북한의 지도층 내에는 김일성 세력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지하공산당운동을 했던 국내파(남로당과 포함),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귀국한 연안파, 소련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활동한 소련파 등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전무하였던 김일성은 소련군을 등에 업고 점차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 다른 세력에 비해 앞서 나갔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초대 내각의 부수상이었던 박헌영은 국내 공산주의운동 세력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로, 해방공간에서 서울에서 신탁통치 지지 등 공산주의 활동을 지휘하다가 1946년 9월부터 미군정의 지명수배를 받고 월북하였다. 그리고 1948년 9월 남조선노동당 당수의 자격을 지

년 채 북한의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이 되었으며, 1950년 4월 남북 노동당이 합쳐 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면서 부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인 1953년 8월 3일 미국을 위한 간첩으로 몰려 체포되었고, 1955년 12월 5일 반당·종파분자·간첩방조·정부 전복음모 등 7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였다.

초대 내각의 부수상 가운데 하나였던 홍명희는 소설 <임격정>으로 유명한 당대 최고의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다가 월북하여 초대 부수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수상 겸 산업상이었던 김책은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동북항일연군교도려에서 만난 김일성과 함께 해방 이후 함께 귀국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전선 사령관으로 있다가 1951년 전방에서 전사하였다. 북한은 그의 사후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도시·공업지구·학교 등에 그의 이름을 붙여 김책시, 김책공업지구, 김책공업대학 등으로 부르고 있다.

**【결과·의의】** 북한의 초대 내각은 당시 분단과 북한지역의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를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나, 이후 김일성 세력은 반대세력이나 경쟁세력을 숙청하면서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해 나갔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권력을 획득한 이후 6·25전쟁을 감행하였고, 전쟁 실패의 책임을 남로당 계열에 전가하면서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이후 연안파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해 나갔고, 1960년대 들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핵심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최고인민회의/북한 초대내각/김일성/박헌영/홍명희/김책

**【참고문헌】** 北韓研究所, 『北韓總攬(1993~2002)』(北韓研究所, 200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선인, 200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역사비평사, 1995).

**【사진자료】** 293. 1948090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첫 각료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시항목】** 대한민국 정부 UN승인

**【소항목】** 대한민국 정부 UN 정식 승인

● 대한민국 정부 UN 정식 승인	
--------------------	--

**【정의】** 유엔 한국정부의 승인은 1948년 8월 15일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배경】** 광복 후 남북한이 독립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려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동서 양진영의 지지 외에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의미가 컸다.

**【전개】** 총선이 실시된 후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7월 1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고, 헌법을 제정한 후 17일 공포하였다. 또한 20일에는 이승만과 이시영을 첫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대통령 취임식은 7월 24일 중앙청 광장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하여 주요 정당 사회단체 대표, 유엔한국위원단, 하지(John R. Hodge) 미 주둔군사령관,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나간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할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 용진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들 이름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서 세우자”고 다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 초까지 초대 내각으로 국무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문교부장관 안호상 등으로 구성하였다. 국방장관은 국무총리가 겸임하였다. 내각구성을 완료하자 8월 12일 미국 정부는 “신정부를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한국의 정부로 간주한다”는 공식 승인하였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고,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 날짜로 미군정이 폐지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한민국정부에 정부기능의 이관을 시작했다. 신생 정부가 이들 기능을 완전히 인수한 것은 1948년 12월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신생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민주주의 발전, 민생안정, 경제건설 등과 남북통일의 과제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수립과정에서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은 갈등을

났고, 남한 내의 좌익과 북한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다. 미 군정시기 좌우의 갈등으로 분단되지 않았을 경우 '통일된 공산국가'가 탄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처럼, 당시 북한과 좌익 세력의 도전이 만만치 않았다.

유엔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소련을 비롯하여 그 블록에 속하는 국가들이 대한민국 승인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48대 6이란 압도적 다수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유엔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 된 총선을 통해 수립된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의미로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어서 미국 외에도 교황청을 포함한 호주·벨기에·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중국·코스타리카·쿠바·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프랑스·그리스·아이티·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터키·영국·미국·칠레 등이 법적 승인을 하였고, 그중 수개 국과 외교기관을 교환하였다.

**【의의】** 한국정부의 수립에 대한 유엔총회의 승인은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게 했고, 그 후 6·25전쟁 개입, 전후복구 등의 지원이 가능한 요소였다.

**【핵심어】** 대한민국 정부수립/유엔총회/국교수립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근대국가 토대 구축
● 6·25전쟁과 전후 복구	

북한 김일성은 남침 1년여 전인 1948년 말부터 스탈린에게 남침 의사를 제기하고, 모스크바와 북경을 오가며 소련과 중국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남침 공격을 시작하였다. 미처 준비태세를 갖추기 전에 받은 기습공격인데다 소련제 T-34전차와 SU-76자주포 공격을 막을 단 한대의 전차나 대전차포, 자주포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내어 주었다. 미군이 참전하였으나 서부전선은 경기, 충남 북에 이어 전남북이 완전히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동부전선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방을 잃고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후 UN이 참전결의에 의해 16개국이 참전하고, 맥아더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만회하여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1·4후퇴를 해야 했다. 그 후 서울을 다시 내어 주었으나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현 휴전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고착되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치의 땅을 서로 차지하고자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게 되었다.

3년간의 전쟁 동안 낙동강 방어선 안의 대구, 부산, 마산을 제외한 전국이 전쟁터가 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말할 수 없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35년간의 일제 식민지를 갓 벗어나 건국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인데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 70달러 수준의 세계 최빈국이었다. 따라서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 등 국내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민생안정과 전후복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에 있어 절박한 재원이었고, 한국국민들에게 구원과 희망이었다. 이 중 특히 미국의 원조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미국과 UN의 원조물자는 국내에서 판매하여 대충자금에 적립되었다. 이 자금으로 국방 및 재정 투자 및 용자에 사용되었다. 1953~1960년 기간 동안 대충자금은 일반 재정세입의 40~50%를 차지했다.

1959년 유엔 기구를 통한 원조가 모두 종결되고, 미국의 원조도 구호원조(무상원조)에서 개발원조(공공차관)로 전환되었다. 이때까지 미국과 유엔 원조기구를 통한 무상원조의 총액은 매년 3~4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외하고도 3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외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1960년대의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결과 1953~1961년 한국의 공업성장률은 무려 10% 이상 증대되었고, 금속·화학·기계공업 등은 18% 이상의 성장을 지속했다. 미국의 원조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원조를 제공한 나라 중에서 한국을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고 있다. 이런 전후복구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했다. 원조물자 가공산업인 설탕과 밀가루 산업으로부터 삼성이, 자동차수리와 건설업을 통해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여 오늘날 거대 기업군으로 발전할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	----------------

1950년 38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에 대해 점령정책을 시작했다. 7월 1일 북한은 이른바 전시동원령을 선포하여 18~36세까지의 전체 주민을 강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족한 병력 충당과 2만 5,000명에 이르는 치안대 병력을 급조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정권은 1950년 7월부터 미국의 무력간섭을 중지하고 소위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조국통일전선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유엔에 보내는 성명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서명을 강요하였다. 또한 남한의 약 20만 청년들로서 안동, 대전, 광주여단 등을 편성하여 일부는 전선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이북으로 강제 납북하였다. 또한 그달 14일 이른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남한의 점령지역내 군·면·리·동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북한이 남침 직후 실시한 정책 가운데 가장 널리 선전된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실시된 토지개혁은 처음 얼마 동안 무산 계층을 포함한 남한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써 북한은 의용군 지원, 노무동원, 애국미 헌납, 감사의 쌀 기증 등을 강요하였고, 남한의 농민들은 과도한 현물세 징수 및 조기납부 등에 시달리게 되자 비로소 그 정책의 진의를 알게 되었다.

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수립된 지 미처 2년도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난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통치를 경험하며 공산주의 통치방식과 이데올로기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감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짧은 기간이나마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남한 주민들은 북한 치하의 공포와 강압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남한 국민들의 반공주의는 6·25전쟁 이후 확고한 것이 되었다.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유럽에 대한 공산화 작업과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따른 미소간의 대립

**【원인·배경】** 1945년 이전 동유럽지역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불가리아·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는 왕국이었고,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는 공화국이었다. 소련군은 이들 동유럽의 국가에서 독일군을 몰아낸 후 자국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동유럽에 진주한 소련군은 각국에 공산주의자들과 비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잠정적인 연립정부의 단계를 거쳐 소련은 이들 국가들에게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를 강요하였다. 공산화의 단계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단계는 비공산주의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제거였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서 소련은 부르주아 계급을 제거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교회를 탄압하였다. 그리스 정교가 지배하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교회의 조직이 미약하여 저항이 거의 없었으나,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폴란드에서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셋째 단계에서는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파가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련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편 소련의 동유럽 공산화 작업과 함께 미소 간의 냉전도 더욱 격화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충돌은 폴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소련은 점령지인 폴란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함으로써 그 지역을 공산화하려고 하였다. 전쟁 중에 망명한 폴란드인들은 이념적으로 갈라져 두 개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는데 그 하나는 런던 임시정부였고, 다른 하나는 소련을 추종하는 루블린 임시정부였다. 이후 폴란드 지역은 소련에 의해 해방되었기 때문에 루

블린 공산정권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루마니아 역시 소련에 의해 공산화 되었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에 반해 소련에 의해 부르주아지들에 의한 자유선거를 지원받았으나 1947년과 1948년에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에 의해 좌우합작 정부가 붕괴되고 공산화되었다.

이러한 공산화 과정 중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바로 '베를린 봉쇄'였다. 1948년 6월에 소련은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서방 측 점령지구인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였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지 통합을 통한 단독정부 구상을 방해하려는 소련의 의도였다. 소련은 서방측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을 재건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베를린을 봉쇄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소련에 대해 강경노선을 전개하여 고립된 베를린에 식량, 연료, 생활필수품을 항공기로 수송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서베를린 공수작전은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결국 소련은 1949년 5월 봉쇄를 해제하였다.

**【결과】**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팽창은 결국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대결 체제를 견고화하였다. 1947년 미국은 서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계획하고 집행하였다. 이에 맞서 이에 맞서 소련도 공산진영을 재정비하여 1947년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포름(Cominform)을 조직했다. 한편 1949년 미국이 대서양과 북미 국가를 아우르는 방위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자 소련도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사기구인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1955년에 창설하여 이에 대항했다.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전략에 따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공산화 작업과 이에 맞선 미국의 봉쇄정책은 냉전을 심화시켰고 이는 이후 전 세계적 대결구도로 체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핵심어】** 공산화/마셜플랜(Marshall Plan)/베를린 봉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바르샤바조약기구(WTO)

**【참고문헌】** 이주영, 『서양의 역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이주영, 『미국현대사의 흐름』(비봉출판사, 2003); 존 루이스 개디스 저, 강규형·정철 공역, 『냉전의 역사』(에코리브르, 2010).

- 【사진자료】** 294. 1950 6·25전쟁 직후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95. 19641221 동서 베를린의 경계선을 시찰하는 박대통령  
296. 1950 베를린에서 군사대치 중인 미군과 소련군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 하에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중국의 공산화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중국의 공산화는 중국 대륙에 공산주의자들이 장개석(蔣介石) 세력을 몰아내고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문제는 아시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극동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중국을 통해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전쟁 직후만 해도, 미국은 그들의 군사적 개입 없이 장개석 정부가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중국은 하나의 중앙정부라고 할 수 없었다. 장제스 정부의 권한은 일본이 점령했던 남부 중국과 동부, 서남 지역에 한정되었다. 북부 중국지역은 공산당이, 만주지역은 소련이 장악하는 등 양자강 이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1946년 1월 10일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사이에 정식으로 '정전협정'을 맺었으나, 5월 국민당 군대는 장춘·길림 등의 도시를 점령하였다. 6월 26일 장개석이 정전협정과 정치협상회의 결정을 파기하고 공산당의 점령지역에 공격을 개시하자, 공산당이 이에 맞서 반격함으로써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전개】** 1947년 초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의 대결은 심화되었다. 내전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공산당이 본토를 지배하고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국민당 군은 숫적으로 공산군보다 두 배나 많았고, 병력수송에서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의 장비와 보급품까지 도움을 받았다. 당시 국민당은 주요 도시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국부군은 훈련과 장비, 기동성과 전투력에 있어서 중공군에 비해 훨씬 우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에서 화북으로, 화북에서 화중으로 빠른 속도로 밀렸다. 그 원인은 관료정치와 부패와 군벌제도의 모순 때문이었다.

1948년 11월 중순, 모택동은 공산군이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우세하다고 선언하였다. 병력 규모는 국민당 군이 290만 명, 중공군이 300여만 명으로 역전되었다. 1949년 1월 21일 공산군이 북경을 점령한 후, 국민당의 패배가 현실화되었다. 1949년 말이면 공산군이 400만 명에 이르렀다. 소련이 중공군의 도강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4월 23일 공산군이 양쯔강을 넘어 난징을 함락시켰다. 국부군이 장거리 폭격으로 때때로 상해를 진동시키고 외교면에서도 국민당 정부는 아직도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군이 상해를 장악하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하면서 국공내전은 사실상 공산 측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결국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장제스 정부는 타이베이로 수도를 옮겼다.

**【의의】** 중국과 한국은 미국과 소련보다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적 요소 외에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중국은 좌우익세력을 포함한 한국 독립운동세력의 활동 근거지였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직접 항일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에서 국공내전을 거친 후 중공정권이 수립됨으로써, 친북한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남한 정부는 중국과 유대가 상실되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중국이 공산화되자 북한은 이에 고무되어 6·25전쟁을 개시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핵심어】** 장제스/마오쩌둥/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참고문헌】** 존 킹 페어뱅크(중국사연구회역), 『신중국사』(까치, 1994); 신승하, 『중화민국과 공산혁명』(대명출판사, 2001).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김일성의 남침 준비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남침 1년 전인 1948년 말부터 김일성은 이미 스탈린에게 남침 의사를 제기하고 있었고, 아울러 소련도 군사고문단과는 별도로 약 4천여 명의 병력을 북한에 잔류시켜 전쟁준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배경】** 북한 지도부는 남한의 민중봉기 등을 통하여 전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력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전략을 전환하였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은 박헌영을 대동하고 경제지원, 군사력증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기술지원,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 북한 아오지-소련 크라스키노 사이 철도건설, 군사력 건설 등의 협의를 가졌다. 특히 이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발발】** 김일성은 조소회담에서 스탈린으로부터 경제부흥발전 계획지원을 위한 차관,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약속받았으며,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은 1949년 3월 17일에는 소위 '전쟁지원의 성격, 소련에서의 북한군 교육 및 경제관계의 발전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조소 협정'에 구체화되었다. 이 회담에서 조중 문제는 양국 간의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북한, 중공과의 회담에서도 남침 방안이 협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택동은 김일과의 회담에서 '남침 시기는 기다려야 할 것이며 만약 1950년 초 국제정세가 유리해지면 남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전개】** 김일성은 중공이 공산정권을 수립하게 되자 "이제 남조선 해방의 차례"라고 하며 중공과 소련을 설득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1950년 1월 17일 스티코프 대사에게 선제 공격계획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스탈린과의 회담을 주선해 주도록 요청하였

다. 결국 김일성은 스티코프의 주선으로 1950년 4월 초에 비밀리에 다시 스탈린을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의 '통일과업을 위한 선제 남침을 개시'하는데 허락하였으며, 최종결정은 중공에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950년 4월 25일 모스크바로부터 귀환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 회담 결과에 따라 5월 13일 북경의 모택동을 방문하였다. 이날 김일성 일행은 모스크바 회담 결과를 설명하자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직접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모택동의 확인 요청에 스탈린은 "중공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라고 응신하였다.

**【결과】** 모택동은 스탈린의 메시지를 받은 후 김일성 및 박헌영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전쟁계획을 3단계 전략으로 수립했다고 언급하였고, 이 자리에서 모택동과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미군과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 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그 밖에 우호동맹상호원조 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5월 16일 평양으로 복귀하였다.

**【의의】**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 후 곧바로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북한군 총참모부에 지시하였고, 결국 총참모장 강건과 새로 부임한 소련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 중장이 중심이 되어 5월 29일에 이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남침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1950년 6월 16일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 개시일자를 6월 25일로 정하였다.

**【핵심어】** 남침/스탈린/김일성/모택동/선제타격작전/조소회담/조중회담

**【참고문헌】** 국방부, 『6·25전쟁사』 1(국방부, 1967); 양영조 외, 『6·25전쟁』(상)(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백기인, 『건군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사진자료】** 297. 195002 스탈린과 마오쩌둥

298. 194903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6·25남침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전차 등 중무기를 앞세워 38선 전 전선을 넘어 공격을 개시하여 대한민국을 침략하였으며, 6월 28일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배경】** 북한정권은 무력에 의해 한반도를 공산 통일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합의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소련과 중공의 지도부를 방문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사 지원과 아울러 전쟁의 허락과 동의를 받았다.

**【발발】**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따라 배치되어있던 북한군의 야포가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이어서 북한군 기동부대가 서쪽의 용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유격대와 육전대가 동해안을 따라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했다. 그때부터 정적에 휩싸여있던 38선과 동해안 일대가 단숨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다.

**【전개】**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자 38선으로부터 불과 40km 남쪽에 위치한 서울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다. 사전에 치밀한 남침계획을 수립했던 북한군도 남한의 그 같은 약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 북쪽에 주공인 제1군단을 투입해 서울을 목표로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전선의 강릉 북쪽에서도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이 동시에 시작됐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38선 일대의 국군 장병들은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했으며, 주둔지에서 새벽잠을 깬 부대원들은 출동준비를 갖추기에 바빴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비상경계령이 불과 하루 전인 6월 24일(토요일) 00시부터 해제되었으며 주말에 병력이 외출·외박을 나갔기 때문에 부대에 남아 있는 병력은 그리 많지 않

았다.

38선의 국군 방어진지에서는 과도처럼 밀려오는 적 부대와 치열한 접전이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 국군 부대들이 미처 준비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방어진지를 기습한 북한군의 공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소련제 T-34전차와 SU-76자주포였다. 그들의 전차와 자주포가 국군의 방어진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나, 당시 국군은 단 한대의 전차와 자주포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T-34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무기도 없었다.

**【결과】** 전차의 위력을 보고 있는 국군 용사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화염병을 들고 또는 박격포탄을 메고 전차를 향해 달려들었고, 방심하고 헤치를 열어놓은 채 진격하고 있던 전차에 올라타 전차의 내부에 화염병을 던졌다. 예상치 못했던 국군의 반격에 이제까지 무적임을 뽐내던 북한군의 전차는 화염에 휩싸이거나 궤도가 잘려져 나갔다. 이날 오후 1시 국방부는 전쟁 발발에 관한 공식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사실이 신문 호외로 전국에 뿌려지자 국민들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남침 전쟁의 기습 달성이 확실해진 것을 확인한 북한 정권은 오전 11시경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이 북침했기 때문에 자위조치로서 반격을 가해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선전포고를 발표했다.

**【의의】** 북한군의 남침상황이 전파되면서 비상소집이 시작되었지만 장병들의 부대 복귀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방송 차량이 장병들의 부대 복귀를 독촉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극장과 운동장에도 비상사태를 알리는 방송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핵심어】** 6·25남침/북한군/38선/비상소집

**【참고문헌】** 국방부, 『6·25전쟁사』 1(국방부, 1967); 양영조 외 『6·25전쟁』(상)(국방군사연구소, 1995); 박명림, 『6·25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나남,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신오성, 2004).

**【사진자료】** 299. 1950 서울에 진입한 T-34 전차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 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미국은 6·25전쟁 개전초기인 한국군을 지원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7월 5일 최초로 스미스 부대를 오산 북방으로 투입하였고 이어 주력부대를 투입하여 참전하였다.

**【배경】** 6·25전쟁에 지상군 파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건의했던 맥아더 원수를 위시한 미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전투력이 강했고 전진속도도 빨랐다. 그 결과 맥아더 원수가 작전 초기에 구상했던 적 후방 지역 상륙작전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용부대를 지연전에 투입해 적의 진출을 막는데 전전긍긍해야 했다.

**【발발】**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고 그 선두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한 7월 1일,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대전에 위치한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John H. Church) 준장과 공동작전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그때 양측은 국군의 재정비, 탄약 및 장비의 긴급보충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국군과 미군의 작전지역 분담, 장차 작전 구상 등 한미 간 협동 및 연합작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보았다.

**【전개】** 한미군의 합의에 따라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 지상군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국군은 그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담당하게 됐다. 한미 연합군의 최초 방어선은 남한에서 가장 폭이 좁은 평택·안성·충주·울진선으로 정해졌다.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따라 7월 13일, 위커 장군은 대구에 제8군사령부를 설치했으며, 육군본부도 대구로 이동해 유엔군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이처럼 유엔군이 구성되고 모든 유엔군 부대의 지휘체제가 단일화됨에 따라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 통일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서한을 맥아더 원수에게 보냈다. 그리고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를 수락한다.”는 맥아더 원수의 회신을 접수함으로써 한국군과 유엔군은 본격적인 연합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과】** 미군의 참전으로 한미 연합전선 체제 구축이라는 하나의 큰 전환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국군의 단독작전을 미군과 연합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국군은 미군이 참전하게 된 기회를 활용해 그동안 각 지구 전투에서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고 전투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의의】** 미군의 참전과 증원에 이어 국군과 미군의 연합전선 형성과 함께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모든 작전부대의 지휘체제가 단일화 됐다. 그 결과 연합작전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스미스 부대/맥아더 장군/한미연합작전/지연전/미 지상군 참전

**【참고문헌】** 국방부, 『6·25전쟁사』 1(국방부, 1967); 양영조 외, 『6·25전쟁』(상)(신오성, 1995);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신오성, 2005).

**【사진자료】** 300. 19500705 08:26 스미스부대의 최초 교전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유엔군 창설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 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 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남침 직후 두 차례에 걸친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남진하자 1950년 7월 7일 유엔군을 창설하여 한국을 지원하고 북한군을 격퇴하고자 했다.

**【설립배경】** 유엔 안보리는 "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6·26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때의 결의안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법적 또는 명분상으로 합법화하는 역할을 제공했다. 또한 미국 이외에 유엔국과 자유우방이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북한군의 침공을 받게 되자 한국정부는 즉시 이 사실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유엔과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남침행위를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도 한반도사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활동사항】** 1950년 6월 25일(뉴욕시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그때의 결의안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침략자들이 순응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유엔 안보리의 '경고성' 결의를 무시했으며 침략 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았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조기에 한국정부가 전복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는 '6·26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경과·변천】** 유엔의 6·26결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군의 참전에 이어 자유진영 32개국이 유엔의 결의를 지지했으며, 7월 중순

에는 지지국이 52개국으로 증가했다. 그 후 한국을 돕기 위해 16개국이 전투부대 파병을, 5개국이 의료 또는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유엔에 통보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이 한국에 파견하게 될 부대의 지휘체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7월 7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의 요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설치 및 사령관의 임명권을 미국에 부여하며,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은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동경에서 유엔군사령부를 공식적으로 창설하고,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들을 유엔군사령부 참모로 겸임 발령했다.

### 【결과】

\*유엔을 지원한 국가

- 전투부대 파병(16개국):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델란드·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등
- 의료지원부대 파병(5개국): 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 등
- 물자 지원(39개국): 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코스타리카·쿠바·에쿠아도르·엘살바도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레바논·리베리아·멕시코·니카라과·파키스탄·파나마·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

【의의】 전쟁기간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 사령관인 미 제8군사령관, 미 극동해군사령관, 미 극동공군사령관을 통해 유엔 지상·해·공군을 지휘하는 지휘체제를 수립했다. 이어서 7월 8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을 유엔군 지상군사령관으로 임명해 13일부터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핵심어】 유엔군사령관/맥아더/안전보장이사회/유엔참전국

【참고문헌】 국방부, 『6·25전쟁사』 1(국방부, 1967); 양영조 외, 『6·25전쟁』(상)(신오성, 1995);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신오성, 2005).

【사진자료】 301. 1950 유엔기를 인수받는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한강방어선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 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 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한강방어선은 한국군이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빼앗기고 나서 한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7월 3일까지 북한군을 방어한 방어선이다.

**【배경】** 한강방어선은 '서울 동부의 광나루에서 서북쪽으로 김포반도 북단'에 이르는 한강 남쪽 전체를 연결하는 선이다. 그러나 협의의 한강방어선은 '노량진에서 영등포까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당시 아군의 주력이 그곳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강방어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육군본부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김홍일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발발】** 김홍일 소장은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장병들을 수습하고, 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사기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 김 장군은 '미군 참전'이라고 크게 쓴 간판 수십 개를 만들어 길목 마다 세우게 했고, 피난민과 함께 후퇴하던 낙오병들을 500명 단위의 '혼성대대'로 편성한 후 '혼성 수도사단', '혼성 제7사단', '혼성제2사단'으로 급조했다. 이렇게 해 국군은 주력부대들이 흩어진 지 불과 10시간 만에 3개 사단으로 재편성되어 한강 남쪽의 새로운 방어선에 배치되었다.

**【전개】** 6월 29일, 혼성 수도사단이 지키고 있던 영등포 지역에 한국의 전황을 직접 살펴보고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나타났다. 그는 수행원과 함께 전용기 편으로 일본에서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후, 한강방어선을 시찰했다. 맥아더 장군은 쌍안경으로 한강 일대를 살펴본 후 개인호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는 병사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병사!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의"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통역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맥아더 원수는 감동한 듯, “이 병사에게 전해주게. 내가 동경으로 돌아가는 즉시 지원병력을 보내줄 터이니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싸우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병사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그리고 맥아더 원수는 그 병사와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결과】** 북한군은 며칠 동안 강을 건너기 위해 산발적인 도하를 시도했다. 노량진 지역에서는 6월 30일부터, 영등포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감행했다. 아군 방어부대들은 적의 포격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무엇보다도 전차 공격이 없었으므로 잘 버틸 수 있었다. 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방어선 전투는 ‘적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오히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적을 격멸하고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원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시간을 얻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다.

**【의의】** 국군은 한강방어선에서 3일간을 목표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6월 28일부터 그들의 전차가 한강을 도하한 7월 3일 아침까지 6일 동안이나 한강변을 고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군이 흩어진 부대를 재편성하고, 견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에 필요한 황금 같은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김홍일/맥아더/지연전/서울 점령/유엔군/도하 저지/한강교

**【참고문헌】** 국방부, 『6·25전쟁사』 1(국방부, 1967); 양영조 외, 『6·25전쟁』(상)(신오성, 1995); 김행복, 『6·25전쟁사』 2(군사편찬연구소,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신오성, 2005).

**【사진자료】** 302. 195101 한강 인도교 남단  
303. 1950 폭파된 한강 인도교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학도의용군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 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 토벌작전
●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학도의용군은 1950년 6월 29일 이후 학도의용군으로 유엔군 또는 유엔군에 예속되어 1951년 2월 28일에 해산할 때까지 근무한 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명이 있는 자들이었다.

**【설립배경】** 학도의용군은 6.25전쟁 시 학생의 신분으로 자진하여 참전하였던 의용병들이었다. 이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학업을 중단하고 펜 대신 총을 들고 자유수호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전투 참가 외에도 경계근무지원, 탄약운반, 후방지역 선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사항】** 남침 직후 많은 학생들이 선봉적으로 의용대를 조직하여 전투에 참가하였다. 최초 1950년 6월 29일 수원에서 중고등 학생을 비롯하여 대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구국비상학도대를 조직하고 국군 및 유엔군에 종군하여 참전하였다. 이들은 현역복무를 지원한 것이 아니며 그 신분은 학생 그대로의 의용군이었다.

1950년 7월중 학도 7백여 명이 부산에서 학도의용군을 조직 편성하여 전라도지방으로 출진하였다. 같은 무렵 포항전투에 참전한 제3사단 학도의용군은 대구지방에서 약 600여 명이 지원하였다. 또한 8월 약 1천여 명의 학도들이 대전에 비상 학도군을 조직하여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편입되어 종군하였으며, 인천지구에서도 약 1천여 명의 남녀학생들이 전투에서 버리고 간 무기와 장비를 갖고 인천방위를 결의하였고 전세가 불리하자 수원 대전을 경유하여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편입되었다. 부산에서는 하갑청 장군이 약 8백여 명의 학도를 규합하여 특공대를 조직하여 참전하였고 밀양·성주·고령 등지에서도 약 1천여 명의 학도의용군이 국군과 유엔군 작전에 협력하여 폐잔병을 소탕하였다. 강원도지구에서는 약 4백여 명의 학도의용군이 유격 제6대대를 조직하고 폐잔병의 퇴로차단과 소탕작전에 참가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강원상교에 재학 중이던 김재천 학생은 강원상교·강원사범·강원농교 학생 5백여 명으로 의용군을 편성하고 치안유지에 임하다가 후에 제1군단에 편입되어 북진작전에 참전하였다.

**【경과·변천】** 이상의 학도의용군 이외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주동으로 조직된 학도의용군 정훈공작대와 멀리 일본에서 참전한 재일교포학도의용군이 있어 총인원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약 27,700명 정도의 학도들이 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런데 정훈공작대는 읍면까지 조직체를 가지고 정훈공작을 전개하였으며 공비토벌이나 귀순공작에도 활약하였다. 그리고 중앙학도호국단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 파악된 학도의용군 중 전몰학도수가 1,394명에 달한다고 집계하였다.

**【결과】** 학도의용군은 1951년 2월 28일에 해체되었으며 해체된 이후 학교에 복귀했거나 현역편입 또는 정훈공작대에 잔류하였다. 그리고 <병역법개정>(1957.8.15 법률 제444호)에 의하여 1958년 6월 이후 이들은 제1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의의】** 학도의용군은 초기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전황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후방지역에서의 지원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핵심어】** 정훈국/이선근/학생신분/학도병/정훈공작대/학도호국단

**【참고문헌】** 육군본부, 『후방전사』(육군본부, 1953); 육군본부, 『학도의용군』(육군본부, 1994); 채한국 외, 『6·25전쟁』(중)(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신오성, 1995).

**【사진자료】** 304. 학도의용대 신분증명서  
305. 1950 학도의용군의 모습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낙동강 방어선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 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 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한국남침 이후 낙동강방어선은 국토의 90%를 북한군에게 빼앗긴 국군과 유엔군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 1950년 8월 초~9월 중순까지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방어작전이다.

**【배경】** 낙동강방어선은 ‘부산교두보’ 또는 ‘워커라인(Walker Line)’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으며, 양측은 이 선을 놓고 약 1달 반가량 치열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낙동강방어선은 남해안의 마산으로부터 북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낙동리까지 약 160km에 이르고, 여기서부터 동해안까지 약 80km의 산악 지대를 연결하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지리적으로 방어선의 서측은 낙동강, 북측은 높은 산악 능선들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방어에 유리한 조건이었으며, 아울러 부산을 중심으로 방어진역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종적, 횡적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발발】**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으로부터 지연전을 실시하며 철수하여 낙동강방어선까지 물러났다. 이제 낙동강선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방어선으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약 1개월 반 동안 결사적인 전투를 전개했다. 워커장군은 이곳에서 적의 전진을 일단 저지한 후, 이를 발판으로 활용해 총반격을 전개하려 했다.

**【전개】** 낙동강선에서 최후의 결전을 결심한 유엔군사령부는 부대의 특성을 고려해 작전 책임지역을 분할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미군은 낙동강변 일원의 개활지를 담당하게 했다. 그리고 8월 1일에 내려진 철수명령에 따라 각 부대들은 낙동강전선의 지정된 책임지역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의 각 부대들은 8월 3일 밤까지 새로운 진지 점령을 대부분 완료했다. 그때부터 낙동강방어선의 북동쪽을 담당한 국군은 왜관으로부터 동쪽으로 5개 사단(제1·제6·제8·수도사단·제3사단)을 배치했다. 방

어선의 남서쪽을 담당한 미군은 왜관으로부터 남쪽으로 3개 사단(제1기병사단·제24·제25사단)을 배치하였고, 상류의 산악지대는 노무자들의 지계로 보급을 받아가면서 적과 싸우는 국군에게 부여했다.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해 8월 1일에는 대체로 진주·김천·점촌·안동·영덕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수안보에, 제1·제2군단은 김천과 안동에 각각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8월 초부터 낙동강선에서 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은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하고 무자비한 독전을 자행했다. 낙동강전선에서 공방전을 치른 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그동안의 전투양상과 북한의 후방지원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들의 전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같은 낙관적인 판단과 달리 북한군은 또 다시 9월 공세를 전개하였다.

**【결과】** 한 달 동안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속된 치열한 전투로 북한군은 7만여 명의 병력과 많은 장비를 잃게 되어 공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국군은 유엔군의 증원과 함께 추가징집 등을 통해 예전의 전력을 거의 회복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제일교포 학도의용군 등 학도병의 지원은 총력전 태세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의의】** 낙동강방어전은 어느 한쪽 편만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니었다.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의 9월 공세에 직면한 국군과 유엔군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아군은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공세 이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핵심어】** 낙동강방어선/위커라인/낙동강 교두보/8월공세/9월공세

**【참고문헌】** 육군사관학교, 『6·25전쟁사』(일신사, 1986); 국방부, 『6·25전쟁사』 제1권(국방부,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국방부, 1981); 양영조 외, 『6·25전쟁』(상)(신오성, 1995).

**【사진자료】** 306. 1950 낙동강을 정찰하는 미군

307. 1950 영천전투의 모습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인천상륙작전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 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 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낙동강 전선에서 그들과 대치하던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전세가 극적으로 전환된 역사적 사건이다.

**【배경】**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8월을 전 한반도 해방승리의 달”이라고 선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그들은 8월과 9월의 연이은 공세에도 낙동강을 건너지 못했다. 하지만, 유엔군도 이러한 교착상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못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병력증강으로 북한군을 정면에서 돌파하는 방안과 적 후방으로 상륙하여 포위 혹은 교란작전을 수행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전개】** 유엔군이 상륙지역을 어느 곳으로 선정하느냐는 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은 인천과 함께 군산·주문진·해주·진남포 등을 검토하여 3개의 상륙계획안을 작성했다. 군산에 상륙했을 경우 지형적 요소로 인해 상륙작전에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지라도 낙동강 전선과 연계 가능성이 높고 서울까지 거리가 있어 되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작전 협의과정에서 군산 이외에도 미 해군은 평택의 포승면을 제시했지만 맥아더는 인천을 고집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구 중의 하나이고 상륙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작전이 낙동강까지 떨어져 있는 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북한군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그의 계획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의 구상과 계획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미 북한의 남침 직후인 6월 29일 한강전선을 시찰할 때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했지만, 미 지상군의 잇단 패배로 상륙작전이 취소되었다. 그는 상륙작전 계획을 완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

는 패전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확신했으므로 8월 12일 크로마이트 작전 (Operation Chromite)이라는 상륙작전 계획안을 마련했다. 맥아더는 인천의 많은 약점을 극복하고 거꾸로 역습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모택동은 이미 1950년 7월 초 북한군의 남진이 계속될 때, 미군이 반격을 위해 인천지역에 상륙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 뜻을 소련 정부를 통해 김일성에게 전달했다. 1950년 8월 하순부터 인천지역의 북한군 부대는 미군이 기회만 있으면 인천 또는 서울을 회복하기 위해 인천항의 기습상륙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시를 강화하였다. 북한군의 조치는 대규모 상륙작전에 대비한 규모가 아니라 언제라도 상륙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대한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9월 15일 유엔 해군 제7합동상륙 기동부대는 261척의 대함대를 동원하여, 미 제10군단 지휘 아래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보병사단, 국군 제17연대와 해병대 등의 상륙작전을 지원하였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자, 낙동강 전선에서 양측은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북한군은 병력을 서울지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의의】** 유엔군의 반격전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하였고 부산 교두보까지 연결되는 북한군의 병참선도 차단하였다. 만약 상륙작전이 실시되지 않고 아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다면 38선까지 30일간이 소요되고 아군의 인명피해도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핵심어】** 맥아더/인천상륙작전

**【참고문헌】** 조성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맥아더 역할의 재평가」, 『정신문화연구』 29-3 (2006년 가을).

**【사진자료】** 308. 195009 인천상륙작전의 맥아더  
309. 195009 감격적인 상륙의 첫발을 내딛는 해병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서울수복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서울 수복은 북한군에 의해 빼앗긴 서울을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8일 되찾은 사건을 의미한다. 1·4후퇴 후에도 서울을 다시 수복하였다.

**【배경】**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기 위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워커(Walton H. Walker) 미 제8군사령관은 9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해서 유엔군에 총반격 명령을 내렸다.

**【전개】** 인천상륙작전 후 10일도 못돼 북한군은 분산된 채 무질서한 후퇴를 계속했다. 반면에 아군은 사기가 크게 올라서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루에 평균 100리씩 진군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9월 25일까지는 미 제1해병사단만으로 서울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북한군이 격렬한 시가전으로 대항했다. 서울은 수도라는 정치적 상징성 외에 주요 도로와 철도가 남북한으로 연결되는 보급기지였으므로, 북한군은 결사적인 방어를 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를 방어체제로 전환시키고 전선에서 4개 사단을 차출하여 서울지역 방어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미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한강도하작전에 투입되어 104고지, 연희고지 등의 전투를 거쳐 서울 수복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0년 9월 21일 한강을 도하한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는 연세대 왼쪽에 있는 백련산 216고지를, 한국 해병 제1대대는 궁동산 104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들 고지는 서울로 돌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두보였다.

서울 서북쪽 연희동 일대에서 미 해병대가 고전하자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미 보병 제7사단 예하 32연대와 한국 육군 제17연대를 서빙고 쪽으로 도

하시켜 남산을 확보한 후 시내로 진입시켰다. 시내 곳곳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시내에서 북한군에 대한 소탕전이 아직 전개되고 있던 1950년 9월 27일 아침 6시경 해병대 제2대대 6중대 1소대 박정모 소위, 수병 최국방, 양병수 이등병 등이 구 중앙청 옥상 밖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이어서 29일, 구 중앙청 대회의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유엔군 장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환도식을 거행했다. 우익 인사의 학살, 의용군의 강제모집 등으로 실의에 빠진 채 북한군의 점령 아래 3개월 동안 생활하던 서울 시민들은 국군과 유엔군을 크게 환영했다.

중국군의 개입 이후 서울 재차 빼앗긴 후 1951년 3월 재탈환하였다. 서울 재탈환 임무는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부여받았다. 리지웨이 미 제8군사령관은 이 작전에서 적의 전선을 서부의 중공군과 동부의 북한군을 분리시킨 다음 남쪽과 동쪽으로부터 서울을 포위한다는 작전전략 아래 국군 1사단·미 3사단이 큰 피해 없이 서울을 점령하도록 했다. 그의 구상대로 아군의 압력을 받아 북한군과 중국군이 1951년 3월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서울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격전은 없었다.

**【의의】**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 수복과 1·4후퇴 후 서울을 두 달여 만인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재수복함으로써 수도를 회복시켰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과시하여 군과 국민들에게 심리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이후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핵심어】** 맥아더/인천상륙작전/서울 수복 및 재수복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사진자료】** 310. 1950 중앙청에 게양되는 태극기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연합군이 38선 돌파와 중국 국경선으로 진격했던 작전을 의미한다.

**【배경】** 한국인들은 38선을 영구경계선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남북이 분단된 채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북진통일을 열망하였다.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 측도 인천상륙작전 후 북한군의 빠른 붕괴와 북한의 남침으로 38선이란 군사적 경계선은 이미 없어졌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전개과정】** 국군 제3사단이 동해안에서 38선에 가장 먼저 도달하였으나, 당시 국군은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어 독자적인 작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북진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육군총사령관에게 “내가 이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 23연대 3대대는 1950년 10월 1일 오전 11시에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하였다.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에 대해서는 미 군부는 물론 국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전쟁의 흐름이 유엔군 측으로 유리하게 변하자 38선 북쪽으로의 진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9월 하순 마셜(George C. Marshall) 미 국방장관은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맥아더에게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지도 가해진 바 없다고 통보했다.

10월 1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무장을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항복을 권고하였다. 김일성은 항복을 거부하고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10월 7일 총회에서 47대 5(기권 7)로 38선 돌파안을 가결시켰다. 10월 9일부터 서부전선에서 미군은 일제히 38선을 돌파하였다.

서부전선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은 '평양입성'을 선점하기 위해 서로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군단 예비부대로서 개성·해주를 거쳐 안악으로 진출하여 후방소탕임무를 부여받았으나, 밀번 군단장을 설득하여 평양 공격작전에 참가하였다. 백선엽 장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차를 지원받아 9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강행군으로 10월 19일, 평양 근방에 있는 평양비행장을 탈취한 후 평양시에 돌입하였다. 곧이어 미군 제1기병사단, 국군 제7사단의 선두부대도 평양에 진입하였다. 한편 맥아더 장군은 원산에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구상하였으나, 미 제10군단은 영흥만의 기뢰를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전격적인 기습은 할 수 없었다.

미 합참에서는 한국군 외에는 중국과의 국경선에서 떨어져 있도록 명령했으나 맥아더 장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10월 24일 중공군의 참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맥아더는 한국군은 물론 미 제8군사령관과 제10군단장에게 한중국경선으로 진격명령을 내렸다. 원산에 상륙한 미 해병대에는 장진호 방면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10군단과 함께 동북지역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서부전선으로 진격해온 미 8군과 합류해 연합작전을 편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의 선봉부대가 26일 최초로 압록강 초산에 도달하였다. 이후 맥아더는 중국군의 개입을 알면서도 11월 24일 "크리스마스까지 병사들을 집에 보내겠다(Home by Christmas)"며 종전을 위한 총공세를 했다. 그러나 곧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변했다.

**【결과】** 국군과 유엔군의 복진은 한국인에게 통일을 기대하게 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산되었다.

**【핵심어】** 38선 북진논쟁/백선엽/평양 입성

**【사진자료】** 311. 1950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312. 1950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

313. 195010 국군 평양 입성 환영대회

314. 1950 압록강에 첫발을 디딘 후 수통에 물을 담고 있는 국군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1·4후퇴는 1951년 1월 초 중공군의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에서 전면 철수하여 평택·여주·제천·단양·삼척을 잇는 북위 37도선으로 후퇴하였던 상황을 의미한다.

**【원인·배경】**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중국국경까지 밀고 올라갔으나, 1950년 10월 중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한 것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때 중국이 참전을 경고했으나, 당시 미군은 이를 무시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의 초기 공세는 미군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중공군의 개입 규모는 4개 군 12개 보병사단, 3개 포병사단 약 26만 명을 비롯해 예비대로 2개 군의 8만 명이었고 제2, 제3단계로 20여 개 사단 수준이었다.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중공군은 유엔군에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히면서 1950년 12월 31일 38선을 넘어서 이듬해 1월 3일 서울에 침입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전개】** 1950년 10월 하순부터 본격화된 중공군의 공세로 국경지대로 북진하던 미군과 국군은 대규모의 포로와 희생자를 낳았다. 반면에 연이은 승리를 거둔 모택동은 남진을 촉구하는 김일성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세를 계속하였다. 1950년 11월 미 해병 제1사단과 보병 제7사단 1개 연대 등 15,000명이 중공군 10개 사단에 포위되어 3,000명이 포로가 되었고, 장진호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중공군의 제1, 2차 공세 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빠른 퇴각으로 모택동은 기대 이상의 완전한 승리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1950년 12월 4일 김일성이 모택동을 방문하고 38선 이남으로 진격을 간청하였다.

중공군은 연이은 3차례의 공세로 유엔군에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히면서 1950년 12월 31일

38선을 넘어서 이듬해 1월 3일 서울에 침입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평택, 제천, 삼척 등지까지 밀려났다. 이때 미 군부는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기하고 아예 한국인 30만 명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었다.

아군의 거듭된 후퇴로 서울을 다시 빼앗기자 서울시민들을 비롯해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날 당시보다 1·4후퇴 당시 피난민이 더 많았다.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 38선 이북으로부터 공산치하를 탈출하거나 유엔군의 공습을 피해 온 피난민의 규모는 80만 명을 넘었다. 서울시민의 경우 1950년 12월 말까지 84만 명이 피난을 갔고, 1월 3일까지 30만 명이 더 떠나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유령도시처럼 변하였다.

**【결과】** 피난민들은 다행히 1950년 11월경부터 유엔 회원국의 지원 아래 정부의 구호대책으로 커다란 희생은 없었지만 식량과 가옥 부족 등으로 힘겨운 피난살이를 하였다. 미처 피난가지 못한 시민들은 공산치하에서 부역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서울이 재수복된 후에도 정부 부처가 돌아오지 않고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시민의 규모는 1953년 2월 초에도 73만 명 수준이었다. 정부기관의 환도는 귀환 시민들의 식량, 식수, 연료 등 대책이 미비하였고, 서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휴전협정 체결을 앞둔 1953년 6월을 전후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

**【핵심어】** 중공군 개입/후퇴/피난민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중국 군사회과학연구원 군사역사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6·25전쟁사』(세경사, 1991);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역사비평사, 2000); 양영조, 『6·25전쟁과 동북아국가정책』(선인, 2007).

**【사진자료】** 315. 1950 피난열차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흥남철수작전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장진호지역의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원산이 적중에 넘어가 퇴로가 차단되자 흥남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흥남주변에 몰려든 10만의 북한주민들도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선박으로 월남하였다.

**【배경】** 한국정부는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하자 1950년 12월 4일 평양시의 전 행정기관을 철수시키고 38선 접경 및 그 이북전역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50여만 명에 달하는 이북 피난민동포 구출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1951년 1·4 후퇴를 전후하여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월남했다. 중공군의 역습으로 가장 위급한 상태에 있던 유엔군은 육로와 동해해안 방면으로 신속하게 후퇴하였다. 따라서 유엔 해군은 서해에서의 철수보다는 흥남에서의 대규모 철수작전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발발】** 1950년 12월 당시 제8군은 육로로 후퇴할 수 있었지만 제10군단의 병력은 지형 특성상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진호 전투 시 하갈우리에는 현지주민을 비롯하여 함흥방면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전투를 피해 주변 계곡이나 동굴에 숨어 있다가 미군이 진주하자 움집하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영하 27도의 추위 속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작전기지인 함흥, 흥남으로 천신만고 끝에 후퇴하였으며, 원산에 주둔해 있던 미 제3사단도 중공군이 남쪽의 퇴로를 막아 이곳으로 이동해 왔다. 이때 집결 병력은 10만 5천여 명이였다.

**【전개】** 12월 10일 유엔군은 12일부터 23일까지 철수작전을 단행하였다. 미군은 처음에는 6백만 톤이나 되는 무기와 장비를 수송해야 했기에 피난민 수송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마지막에는 남는 공간에 피난민 수송을 허락하였다. 피난민 승선이 허락되자 부두는 아비

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LST 1척에는 정원의 10배가 넘는 5천여 명이 승선하였지만, 30만의 인파 중 마지막까지 배를 탄 피난민은 9만 1천여 명이였다. 피난민 승선으로 4백 톤의 폭약과 차량, 장비 등 5백 60만 톤의 장비가 유기되었으며, 승선이 끝난 후 해군 함대와 폭격기가 집중사격을 가하여 폭파시켰다.

**【결과】** 흥남철수작전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17,500대의 각종 차량, 35만 톤의 물자를 함정으로 완전하게 철수시켰다. 그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관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남행을 결심한 피난민 98,000명까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항공기를 이용해 병력 3,600명과 차량 196대, 1,300톤의 물자를 철수시켰다.

**【의의】** 흥남철수작전은 대규모적인 육해공 합동작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같은 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상당한 전투력을 보존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핵심어】** 중공군 개입/1·4후퇴/피난민/유엔군 철수작전/흥남철수/평양철수

**【참고문헌】** 육군사관학교, 『6·25전쟁사』(일신사, 1986); 국방부, 『6·25전쟁사』 제1권(국방부, 1967); 양영조 외, 『6·25전쟁』(하)(신오성, 1997).

**【사진자료】** 316. 19501212 흥남철수 직전의 흥남항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육군본부는 1951년 12월 이후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던 북한 빨치산의 규모가 아군전선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토벌할 계획을 수립하여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배경】** 1951년 말, 국군의 후방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빨치산들은 주로 북한군 패잔병과 호남, 영남지역의 지방빨치산들이었다. 이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후방 시설들을 파괴함으로써 아군의 후방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발발】** 1951년 말부터 북한은 이들 빨치산을 통해 아군전선 전후방을 압박하고 있었다. 육본은 2개 사단 규모의 토벌부대를 편성하여 제1군단장 백선엽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군단급 특수임무부대인 <백야전전투사령부 창설명령>을 하달하였다.

**【전개】** 지리산 빨치산은 남부군의 직속부대인 제81, 제92사단과 경남도당 사단인 제57사단, 그리고 전북도당 사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여순 10·19사건 당시 반란군 출신 중 생존해있던 인원과 북한군 전투부대의 낙오병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비교적 전투경험이 많은 병력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군으로서는 큰 부담이었으며 토벌작전 역시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빨치산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과 덕유산 등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약탈, 지서습격, 차량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와 같은 만행을 자행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전후방 전력에까지 파급되었고, 민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국민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었다. 백야사는 작전명을 ‘취잡기’로 정하고 1951년 말부터 1952년 2월 말까지 호남지역 빨치산토벌작전을 전면 개시하였다. 수도사단과 제8사단의 6개 연대를 기동타격대로, 경비부대와 예

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운용하였다. 이때 정부는 사전에 서남 지방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사전조치를 취하였으며, 또 이 지역의 민간인 이동을 통제하고 마을 간의 전화교신도 차단하였다.

**【결과】** 빨치산들은 지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형과 근거지를 버리고 토벌부대를 피해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백야사의 전과는 작전기간 동안 사살 포로 투항 등을 포함하여 1만 6천여 명에 달했고 노획무기도 3천여 정을 상회하였다.

**【의의】** 백야사 예하 부대들은 계속하여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일대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빨치산잔당을 대부분 토벌하였고, 빨치산의 핵심지도자로 활동하였던 자들을 대부분 사살하거나 포획함으로써 작전을 마무리 지었다. 백야사는 수도사단에 작전임무를 인계하고 춘천으로 이동한 후, 화천에서 제2군단으로 재창설되었다.

**【핵심어】** 백야사/빨치산/빨치산/게릴라/지리산/토벌작전/쥐잡기작전

**【참고문헌】** 국방부, 『6·25전쟁사』 6(국방부, 19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국방부, 1988); 백선엽, 『군과 나』(대륙연구소, 1989); 육군본부, 『6·25전쟁과 유격전』(육군본부, 1994).

**【사진자료】** 317. 195010 지리산 빨치산 토벌대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발발 원인, 전쟁경과

**【소항목】**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냉전의 격화와 동구의 공산화	낙동강 방어선
중국의 공산화	인천상륙작전
김일성의 남침 준비	서울수복
6·25남침	국군과 연합군의 북진
미군참전과 스미스부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
유엔군 창설	흥남철수작전
한강방어선	지리산빨치산토벌작전
학도의용군	● 국군의 반격과 고지쟁탈전

**【정의】** 유엔군과 공산군의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장장 2년간 지속되어 전쟁사상 가장 긴 협상기간을 기록했으며, 양측은 협상 중에도 전투를 멈추지 않고 계속 고지전을 수행했다.

**【배경】** 최초 양측은 1951년 4~5월, 이른바 중공군 춘계공세에서 개전 이후 최대의 결전을 치렀으며 여기에서 양측 모두 최악의 인명손실을 입은 후에야 무력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택하였다. 남침 이후 1년간의 전쟁을 통해 공산군은 그들의 힘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유엔군으로서도 힘에 의한 응징에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발】** 공산군의 협상 지연은 원래 시간을 얻기 위한 술책이었으므로 비록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기기는 했으나,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적이 공격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구나 1952년 10월 8일 포로송환에 관한 원칙문제가 타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휴전회담은 무기한 휴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전선에서는 국부적으로 주요 고지를 놓고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전개】** 양측은 휴전회담장에서 말로 싸우는 ‘설전(舌戰)’을 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선에서 휴전 후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고지쟁탈전이라는 ‘혈전(血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도 ‘중지 및 재개’의 반복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상에서의 전황은 전초거점의 쟁탈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은 불모고지·고양대·백마고지·845고지·저격능선·삼각고지·수도고지-지형능선·351고지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혈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특히 피의 능선(983고지) 전투는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전개

되는 동안 1951년도의 가장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이었다. 이 고지를 피의 능선으로 부르게 된 것은 1951년 8~9월 국군 제5사단(후에 미 제2사단 투입)과 북한군 간의 전투상황을 목격했던 미군 중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이란 뜻에서 983고지의 격전상황을 '피의 능선'으로 보도하면서 붙여지게 되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도의 대표적인 고지전이었다. 1952년 10월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395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한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고 9일 동안에 걸쳐 치른 방어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3개 사단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중공군 1만여 명을 격멸하면서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은 철의 삼각지 부근 철원지역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 휴전회담이 중단되고 군사작전이 격화되어 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였으나, 1952년 말 국제정세의 변화와 아울러 국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회담 중재로 인해 비로소 재개의 조짐이 어렵פות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의의】** 1953년에 접어들어 국제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신정부 등장과 소련의 수상 스탈린 사망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평화노선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선변화는 6·25전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3월 말 공산군이 휴전회담의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이때부터 비로소 협상이 타결될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핵심어】** 휴전협상/고지전/백마고지/철의 삼각지/포로교환

**【참고문헌】** 육군사관학교, 『6·25전쟁사』(일신사, 1986); 국방부, 『6·25전쟁사』 1(국방부, 1967); 양영조 외, 『6·25전쟁』(하)(신오성, 1997).

**【사진자료】** 318. 1950 고지쟁탈전의 소모전 상황을 알려주는 탄피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전쟁피해

**【소항목】** 6·25의 피해

● 6·25전쟁의 피해	
--------------	--

**【정의】** 6·25전쟁으로 인해 한민족은 개전 이후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상의 피해를 입었다.

**【배경】** 6·25전쟁 기간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었다.

**【발발】** 인명피해에 있어, 아군 측은 국군 육·해·공군 군인 피해가 608,033명, 경찰 19,034명, 학도의용군 7,000명 등 총 634,067명이었고, 유엔군 피해는 545,908명이었다. 반면, 적군 측은 북한군 801,000명, 중공군 1,234,000명 등 총 2,035,000명의 손실이 생겼다. 그러므로 양측의 군인 피해만도 총 322만 명에 달하였다. 민간인 피해는 남한민간인 피해가 사망 244,663명, 피학살 128,936명, 부상 229,625명, 납치 84,532명, 행방불명 393,212명 등 총 990,968명이었고 북한 민간인 피해가 150만 명에 이르러 남북한 총 손실이 249만 명에 달하였다. 피난민 수도 남한 피난민이 2,611,328명, 북한 피난민이 618,721명이었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휴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으므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이 전화를 입었다.

**【전개】** 전쟁기간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으며 전사자의 혈육, 전상자와 그 가정,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질 피해도 인명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국토가 전쟁터였을 뿐만 아니라 37선과 38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결과】** 전쟁의 결과 한국이 38선 이북 지역이었던 철원·화천·간성 일대와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차지하였으나 용진반도와 개성-사천 일대를 상실하였으며, 38선에 의한 분계선 대신에 임진강 하구-관문점-철원-거진 북방을 연결하는 선에 남북으로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의 가족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

이 파괴되었음은 물론 군사시설로 전용된 학교 및 공공시설도 파괴되어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 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다.

**【의의】** 피해와 파괴와 폐허에도 불구하고 반공의식과 생존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은 전후 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이 정신력으로 전후 굶주림을 참고 땀 흘려 일한 인구의 한 세대를 지나면서 오늘의 우리를 건설하였다. 반면 공산북한정권은 그 체제가 갖는 자체가 모순에다 국가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과다 투입함으로써 오늘도 파괴를 딛고 일어서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핵심어】** 경제적 손실/인명적 손실/희생자/재산 피해

**【참고문헌】** 통계청, 『대한민국통계연감』(통계청, 1955); 김원권, 『6·25전쟁 피해 통계집』(국방군사연구소, 1996); 채한국 외, 『6·25전쟁』(하)(신오성, 1997); 양영조 외, 『6·25전쟁사』 제3권(신오성, 2005).

**【사진자료】** 319. 1950 파괴된 서울역 부근 모습

320. 1950 폐허가 된 인천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휴전

**【소항목】** 휴전회담

● 휴전회담	휴전반대운동
휴전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과 정책	휴전협정

**【정의】** 휴전회담은 6·25전쟁 중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이 1951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전개한 회담을 의미한다.

**【배경】** 당시 통일을 기대했던 한국인의 바람과 달리 휴전협상이 시작된 배경은 전쟁발발 후 1년간의 전투에서 유엔군 측이나 공산 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전개】** 정전회담은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J. Malik)가 “38선으로부터 군대의 상호철수를 규정하는 휴전”을 유엔군 측에 제의하자, 6월 30일 리지웨이(Matthew Ridgway) 유엔군 사령관도 공식적으로 휴전회담의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7월 1일 김일성과 중국군 파병 사령관 팡덕회가 공동명의로 이에 동의하였다.

쌍방은 휴전협상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간주했으나 휴전회담이 제기된 이후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회의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5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159차례의 본회의와 500여 회가 넘는 소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 소요된 시간도 거의 1,000시간이 걸렸다.

정전회담의 의제는 처음에 휴전교섭 당시 공산측 대표가 모든 극동사태의 처리를 포함한 정치회담을 제기하였으나 유엔군 측은 한국의 군사문제에 국한할 것을 주장하였고 정치문제는 군사령관의 권한밖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는 협의할 의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1951년 7월 26일 5개항의 의제에 합의하였다.

제1항은 회의 의제 선택, 제2항은 군사분계선 설정, 제3항은 전투행위와 정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설치 문제, 외군철수 문제 등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 제4항은 전쟁포로의 교환에 관한 문제, 제5항은 양측의 관련국 정부에 대한 건의 등이었다.

의제에 대해 동시협상이 이루어져서 양측은 1952년 5월까지 포로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하였다. 군사분계선 협상은 그 분계선을 38선으로 할 것인지 당시 전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공산 측은 휴전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38선을 주장했지만, 유엔군 측은 이를 거부하고 해군과 공군력의 우세를 반영시킬 수 있는 당시 전선을 주장했다. 유엔군의 군사

적 압력 속에 공산 측이 38선을 철회함으로써 1951년 11월 하순, 양측은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비무장지대의 조성을 위해 각각 2km씩 후퇴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군사분계선 설정은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이 비교적 쉽게 합의했으나, 양측이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장기소모전이 계속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둘째, 휴전감시 문제는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한 요소였으나 공산측이 휴전감시기구의 구성에서 김일성의 전쟁 도발을 승인하고 지원했던 소련을 중립국으로 우기는 바람에 늦어졌다. 소련을 중립국으로 하려는 공산 측의 주장을 포기하게 하는 대신에 북한에서 비행장 복구 제한을 양보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한국정부는 소련의 위성국인 폴란드와 체코를 중립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셋째, 관계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은 휴전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고위 정치회의를 열도록 하였다. 이후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

**【의의】** 휴전회담의 결과로 유엔군과 공산 측이 3년간의 치열한 전투를 중단했지만,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양측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채 38선 아닌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전쟁 전 불안한 대결상황으로 되돌아갔다.

**【핵심어】** 맥아더/인천상륙작전

**【사진자료】** 321. 휴전회담

322. 195111 휴전선 지도에 서명하는 유엔군과 인민군 대표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휴전

**【소항목】** 휴전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과 정책

휴전회담	휴전반대운동
● 휴전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과 정책	휴전협정

**【정의】** 휴전회담에 대해 공산 측은 스탈린과 모택동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소극적이었다면, 김일성은 전쟁의 장기화와 유엔군의 공습으로 인해 북한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휴전에 적극적이었다.

**【전개과정】** 중국, 북한, 소련 세 나라의 지도자는 휴전협상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과 직접 전쟁을 감수하길 원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조기 종전을 반대하였다.

1952년 전반기에 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교착되고 있었다. 김일성은 휴전협상이 지연되어도 그 부담의 대부분을 중국이 감당하여 버틸 수 있었다. 모택동은 휴전협상으로 전쟁을 수습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회담이 부진하자, 미국 측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전투작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는 전쟁이 지연되는 것을 조급해 하지 말고, 휴전을 유리할 때 체결하도록 하였다. 장기전으로 흐를수록 미군이 예산부족이나 국민들의 반대, 군인들의 낮은 사기 등으로 불리하고 중국 측이 유리하다는 전망을 하였다.

김일성은 중공군의 개입 이후 남진을 거듭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공세가 실패로 끝난 후 휴전협상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유엔군의 거듭된 공중폭격으로 초토화를 우려하였고,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공군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쟁을 치루는 데 한계를 느꼈다. 1952년 1월 말 북한 측은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1952년 7월 14일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미국 측 조건을 접수해야 즉시 정전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7월 15일 전보에서 김일성을 유엔군의 무차별 폭격 앞에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과 북한 측이 정치와 군사면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적극 설득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정전협상에서의 중국의 입장은 매우 정확하다”고 모택동을 분명히 지지했다. 8월 20일 스탈린과 주은래가 만났을 때, 스탈린은 “모택동이 옳다. 이 전쟁은 미국의 원기에 손상을 주었다. 북조선은 전쟁 중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런 큰일에는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이해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 측은 휴전협상의 지연이 미국의 오만과 고집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병력면이나 사기나 군수 등에서 우수하다고 중국군의 방어능력에 자신했지만 전쟁이 지연되면서 어려움

이 가중되었다. 소련은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구식 장비 지원에 심지어 그 대가를 요구하였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국민당 세력이 잔류해있고, 티벳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국내경제도 전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갈수록 커졌다. 그럼에도 모택동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전쟁을 통해 공산진영에서 입지강화, 소련으로부터 군수공장 지원 등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휴전협상은 군사분계선 설정, 감시기구 등에 대한 양 측의 합의 이후에도, 송환을 거부하는 중공군 포로를 포함한 공산포로의 송환문제로 논란이 되어 1952년 10월 중단되었다. 모스크바와 북경의 조기 휴전반대로 계속된 전쟁은 이후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자, 모택동은 이제 그의 전쟁을 끝내기를 바랐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습적인 반공포로의 석방에 대해, 김일성이 비난하였고 모택동도 금성지역의 한국군에 대규모 공격으로 무력을 시위하였지만, 정전협상은 파탄시키지 않았다.

**【참고문헌】**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군사편찬연구소, 2002); 캐스린 웨더스비·강규형, 「북·중·소 삼각관계가 6·25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 『정신문화연구』 33-3.

**【사진자료】** 323. 19500214 중소 우호동맹 호소조약 조인식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휴전

**【소항목】** 휴전반대운동

휴전회담	● 휴전반대운동
휴전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과 정책	휴전협정

**【정의】** 휴전반대운동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인이 6·25전쟁 중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이 시작한 정전협상을 반대한 운동이다.

**【배경】**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인들이 휴전에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이 사라져 버린 데에 대한 반발과 휴전 후 전쟁재발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전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정부는 휴전협상을 반대하여 북한을 협상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이 협상에 협조적일 필요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휴전협상을 모색할 시기인 1951년 6월 30일 휴전조건으로 중국군의 완전철수, 북한군의 무장해제, 제3의 강대국으로부터 북한의 원조방지에 대한 유엔의 보증,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 회의에 한국대표의 참석, 한국의 행정적 주권이나 영토적 통합에 상치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계획되거나 조치되지 말 것 등 5개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의 휴전조건은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미국정부의 정책 담당자 누구도 그와 협상이나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계속 반대하면서 유엔군을 통한 통일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1951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은 “만일 휴전이 된다면, 한국군은 자유로운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군은 교전기간에만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휴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관이 협정한 조건은 한국군을 규제하지 못하므로, 한국정부는 휴전조건에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1952년 2월 중순 분단한 채 휴전하느니, 한국군이라도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52년 4월 10일에는 부산에서 5만여 명의 학생들이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시위를 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4월 14일 “분단을 고착화하는 어떤 휴전에도 계속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12월 초에 한국을 방문하자, 한국정부 당국자는 “휴전협상 반대”의 범국민 쟁기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1953년 신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수백만의 애국동포를 구출하는 데에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이북까지 진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정부는 휴전 전에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통일 없는 휴전반대운동을 강화했다. 1953년 4월 중순, 이승만 대통령은 각군 참모장을 비롯하여 육해공군의 고급장교 18명을 소집하여, 유엔군이 통일 없이 평화를 모색한다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국군을 탈퇴시키고 단독으로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된 한국이 보장되지 않는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는 단독북진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단독북진론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의 결여로 실행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미국정부는 한국군의 유엔군 탈퇴를 막기 위하여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강력한 대응책(Everready Plan)을 수립하였고, 심지어 유엔군의 철수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1953년 6월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 측이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송환거부포로 처리를 위해 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조인만 남게 되자, 그동안 계속해서 휴전을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의 일방적 석방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의의】** 휴전반대운동은 통일 없는 휴전반대이면서 공산주의자의 재침을 막기 위한 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운동이다.

**【핵심어】** 단독북진론/에버레디작전/반공포로석방

**【사진자료】** 324. 1951 덕수궁에서 열린 휴전반대집회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휴전

**【소항목】** 휴전협정

휴전회담	휴전반대운동
휴전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과 정책	● 휴전협정

**【정의】**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서명한 문서이다.

**【배경】**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 측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남일 대장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협정조인문 하단에는 유엔사령관 클라크 대장과 공산군사령관 김일성, 팡덕회의 서명이 있고 그 밑에 정전회담 양측 수석대표인 해리슨 중장과 남일 대장의 서명이 있다.

정전협정에 서명할 때 공산 측에서는 중공군과 함께 북한군 대표가 들어갔으나, 아군 측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서명하면서 한국군 대표는 빠졌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7개 연합국을 대표한다.

**【내용】** 정전협정서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은 후, 한반도에서 전쟁 중지를 유지하고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

협정은 서문을 비롯해 본문 5조 6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칙에는 적당한 협정으로 정전협정이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다.

유엔군과 공산 측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서로 동의하였다. 협정 서문에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제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것”을 그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전후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정전협정 제1

조 6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장비 및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정전협정 제13항 ㄱ목) 등의 준수가 요청되었다.

정전협정의 실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와 중립국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는 정전체제의 중추적 구성요소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제2조에 근거하여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모든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기 위해 관문점에 설립된 기구로 유엔군 측 대표단 5명과 공산군 측 대표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무장지대 내 위반사항들에 대해 다루고 협정에 대한 총괄적 감시의 책임을 담당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제 아래 유엔군 측 스위스와 스웨덴, 공산 측 체코와 폴란드 4개 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회 임무는 위원 및 감시소조를 통해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 등을 감독과 시찰을 진행한다. 또한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지점에 대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수행한다.

**【의의】**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쌍방의 전투행위는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정각이 되자,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중단되었다. 양측은 또 이 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현 전선에서 후방으로 2km 물러나는 조치도 실행에 옮겼다. 3년 1개월 2일간을 끌어난 6·25전쟁이 '일시 중지'를 의미하는 '정전체제'에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협정의 준수 여부는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한 관건이다.

**【참고문헌】** 양대현, 『역사의 증언』(형설출판사, 1993).

**【사진자료】** 325. 19530727 휴전협정 조인사진

326. 1953 휴전협정

327. 1953 정전협정문의 사인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소항목】** 거제도포로수용소

● 거제도포로수용소	한미상호방위조약
반공포로 석방	

**【정의】**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6·25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이 사로잡은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 등을 수용했던 대표적인 포로수용소이다.

**【배경】** 전쟁 초기부터 국군도 북한군 포로를 획득했지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많은 공산포로가 발생하여 영등포, 부산 등지에 수용했으나 시설이 부족했다. 당시 부산은 포로 외에 많은 피난민이 정착하고 있어서 유엔군의 보안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시설이나 포로를 관리할 유엔군 요원이 부족하였던 상황을 감안해 1·4후퇴 무렵 유엔군사령부는 포로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섬으로 보낼 것을 고려하였다.

**【전개】** 유엔군사령부에서는 1950년 11월부터 경남 거제도 고현·수월·양정·해명·저산 등지에 포로수용소를 건설하였다. 1951년 2월 초 포로 3,000여 명을 거제도 수용소로 이동시킨 후, 일부 부상병 포로들을 제외하고 인민군 15만여 명, 중공군 2만 1천여 명 대부분을 수용하였다. 그 당시 거제도에는 주민 11만여 명, 피난민 약 15만 명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아군이 승리하고 있을 때 포로수용소는 비교적 평온했으나,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전개되면서 포로들이 반공포로와 공산포로로 나뉘어 서로 반목해 갈등이 점차 격렬해졌다.

휴전협상에서 포로문제는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그 배경은 유엔군 측의 자원 송환 원칙에 대해 공산 측의 강제 송환원칙이 서로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유엔군 측이 1949년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의 전원송환원칙과 달리 자원송환원칙을 내세운 이유는 전쟁 중 발생한 공산 포로 가운데 자발적으로 혹은 교육 등의 영향을 받아 송환을 거부하는 자가 다수 발생한 탓이었다. 중국군 포로 중 국민당군 출신이 많았다. 더욱이 휴전회담에서 쌍방의 포로명단을 교부할 때, 공산 측이 국군 7,142명, 유엔군 4,417명 등 11,559명에 불과한 명단을 인도하는데 그쳐 다수의 국군포로 귀환이 불투명해짐으로써, 유엔군 측은 송환거부 포로를 보호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 측은 유엔군 측이 송환거부 포로를 의도적으로 확보하였다고 불신하면서 휴전협상을 지연시켰고 수용소에서 갈등을 야기했다. 포로들도 송환 여부는 자신들의 운명

을 결정짓는 것이었으므로, 좌우익 갈등을 드러내며 포로들끼리 혹은 포로와 수용소 당국과의 충돌로 많은 희생이 발생하였다.

수용소에서 대부분의 폭동은 포로의 심사와 분리 등 송환과 관련해서 일어났다.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의 심사에 대해 저항한 1952년 2·18사건을 비롯해, 1952년 5월 7일 제76수용소에서 수용소장 돛드(F. T. Dodd) 준장을 납치하는 사건 등이 이어졌다.

수용소 당국은 포로의 통제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송환거부 반공포로를 논산·상무대 등지로 분산시켰고 중국군 포로는 제주도로 분리 수용하였다. 또한 거제도에서도 단위 수용소의 규모를 500명 수준으로 줄였고, 이때 포로들과 접촉을 막기 위해 수용소에 인접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논산, 상무대, 부평 등지로 분산된 송환거부 반공포로 27,000여 명을 석방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의 체결이 늦어지기도 하였지만,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포로들을 송환시키고 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폐쇄되었다.

**【의의】** 휴전 이후 한 동안 수용소 건물 일부만 남아 있었으나, 1983년 12월 20일 포로수용소 잔존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유적·유물을 정리해 전시하였다. 1999년 10월 15일 전쟁 당시 포로수용소를 복원하여 유적관을 개관한 후, 2002년 11월 30일 이를 확대하여 유적공원을 준공하였고 2005년 5월 27일에는 흥남철수작전기념조형물을 완성하였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6·25전쟁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성훈, 『6·25전쟁과 포로』(선인, 2010).

**【사진자료】** 328. 1951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

329. 195305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공군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소항목】** 반공포로 석방

거제포로수용소	한미상호방위조약
● 반공포로 석방	

**【정의】** 반공포로 석방은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 중 발생한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한 포로 2만 7천여 명을 탈출시킨 사건이다.

**【배경】** 전쟁포로는 종전 후 지체 없이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공산포로는 그 구성이 단순하지가 않았다. 북한군 포로 가운데 상당수가 강제로 징집된 남한 출신 의용군이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반공포로가 존재하였고, 중국군 포로 중에서도 대만으로 가기를 원하는 전 국민당군 출신 포로들이 많았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반공포로 단체들의 활동의 영향도 매우 컸다. 또한 유엔군의 포로 우대정책과 체계적인 포로 교육의 영향으로 포로들 중 상당수는 자유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귀환 후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이 컸으나, 공산 측에서는 전원 송환을 요구한 반면에 유엔군 측은 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려 하였다. 유엔군은 송환거부 포로들에 대해 제3자의 공정한 감시에 의한 심사방식을 위해 인도를 통해서 중국과 접촉을 하였고, 결국 이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의 석방을 통해 휴전협정의 조인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전개과정】** 북한과 중국군으로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의 규모는 17만여 명의 포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한 27,000여 명과 중립국송환위원회(NNRC)에 이송된 후 송환을 거부하여 결국 석방된 21,000여 명이었다.

1953년 5월 25일 유엔군 측은 송환거부 포로를 둘러싼 협상의 타결을 위해 ‘최종안’으로 그들을 중립국으로 인도하자는 공산 측의 제안을 절충하여, 중립국이 판문점으로 와서 송환포로를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은 공산측이 제기한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포로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공포로들은 물론 이들의 석방을 주장해 온 한국정부는 이 제안이 공산 측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단독 행동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군 내부에 여러 갈래의 군사고문단

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경찰이나 청년단과는 달리 어떤 일방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병사령관 원용덕에게 6월 18일 0시를 기해 산하 지휘관에게 포로수용소를 접수하도록 명령했다.

포로들은 탈출 과정에서 일부 희생이 있었고 공산 측은 물론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반발을 받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의 석방으로 전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탈출하지 못한 반공포로들은 논산과 부산 포로수용소에 재수용되었다가, 휴전 후 판문점에 90일간을 설득을 거쳐 북한 출신들은 남한에서 석방되었고, 중국군 포로들은 대만으로 갔다.

공산 측은 반공포로의 석방을 이유로 정전협상을 파탄시키지 않았으나, 그 보복으로 1953년 7월 중순 김화와 금성천 사이의 돌출부를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가해 아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의의】** 반공포로의 석방은 송환거부 포로들이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석방될 수 있었고, 한편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어】** 송환거부 포로/이승만 대통령/한미상호방위조약/판문점

**【참고문헌】** 강용준, 「반공포로석방」, 『전환기의 내막』(조선일보사, 1982); 조성훈, 『6·25 전쟁과 포로』(선인, 2010).

**【사진자료】** 330. 195306 반공포로 석방 환영 시민 가두행진

331. 194501 석방되는 반공포로들의 행진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시항목】**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소항목】** 한미상호방위조약

거제 포로수용소	● 한미상호방위조약
반공포로 석방	

**【정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 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1953년 10월 워싱턴에서 서명되었고, 1954년 11월에 발효된 미국과의 군사조약이다.

**【배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후 한반도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반대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산물이었다.

**【체결과정】** 유엔군과 공산 측이 휴전협상을 논의할 무렵인 1951년 6월 하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에 “한국민에 대한 공산침략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미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안보조약을 체결했고,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을 창설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호주, 뉴질랜드 및 필리핀 나아가서는 적국이었던 일본과도 조약을 맺으면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과는 왜 조약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아시아의 신뢰를 획득하려면, 일본과 맺었던 대로 한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상호방위조약 요구에 대해 미 국무부에서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이 잔류하고 미군이 즉각 철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정부에게 확신시킨다면, 한국의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공산 측의 또 다른 무력 사용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과 더불어 ‘대제재선언’을 발표할 구상을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한 성명만으로는 한국인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6월 7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협상은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곧 개시될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휴전 전의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포로를 석방하기 직전인 1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휴전 전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주장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6월 18일 휴전 전 상호방위조약이 보장되지 않자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반공포로 석방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6월 25일 로버트슨 미 국무차관보를 특사로 파견하여 2주간 협의 끝에 7월 12일, 한미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이전에 미 상원의 방위조약 승인을 요구했지만 휴전 이후에 체결되었다.

**【내용】** 조약은 전문과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전문에서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를 결의했다. 이어서 제2조에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의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조치는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제3조)을 약속했다. 제4조에는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상호방위조약의 발효가 '적의 무력공격'과 사전의 '협의와 합의', '헌법상의 수속절차'를 선행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정부는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에 조약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바꾸지는 못하였다.

**【의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소 양대 진영의 대립 속에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여 정전 후 북한의 남침 위협을 보호해 왔다.

**【핵심어】** 이승만 대통령/상호방위조약

**【참고문헌】** 차상철, 『한미동맹50년』(생각의 나무, 2004);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군사편찬연구소, 2008).

**【사진자료】** 332. 19480826 이승만대통령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참관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전쟁은 만 3년 1개월 동안 거의 전 국토를 휩쓸었다. 이 전쟁에 국군 59만 명, 미군 48만 명, 기타 15개국에서 온 유엔군 127,550여 명을 포함해 합계 약 120만 명이 참전했다. 북쪽은 북한군 26만, 중공군 78만, 소련군 26,000명, 합 100만여 명이 참전하였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국군 전사 약 15만 등 사망, 부상, 실종 등을 합하여 약 100만 이상을 헤아렸다.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이 세계전쟁사상 어느 전쟁보다 높아서 남한 60만, 북한 70만, 합하여 130만 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32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전란으로 인한 피해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문제는 6·25전쟁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이군인은 6만 4천여 명, 군경원호대상자는 163만 명(1959년), 전쟁고아는 5만 9천여 명이었으며, 전쟁미망인도 55만여 명에 달했다. 약 9만여 명이 전쟁 중 북한에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사회는 계층간, 지역간 격심한 인구이동을 경험하였다.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도 파괴되었다. 궁핍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공고화되었으며, 세계최빈국 한국경제는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를 통한 자본축적이 진행되었으며, 원조물자 가공산업으로 소비재중심의 공업구조가 정착되기도 하였다. 미군의 대거 주둔으로 유입된 서구의 대중문화는 전쟁의 파괴와 함께 급속하게 서구적 문화와 사고를 확산시켰다. 전통적인 사회는 해체되고 서구문화의 이식이 전면화되어 한국사회는 근대화로 전면적으로 이행하게 하였다.

전쟁의 와중에서 문인들은 종군작가단을, 화가들은 종군화가단을, 음악가들은 정훈음악대 등을 조직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다. 종군작가단은 전란 속에서도 기관지로 『전선문학』을 발행했다. 미술계에서는 3년 동안 전쟁기록화 전시회를 비롯하여 월남화가전 등을 개최하였다. 음악계에서는 위문공연, 군가 정리·보급 등을 담당했다. 전쟁중 교육부직속으로 <국립국어원>이 창설되었다. 연극이나 영화계 연예인들은 국방부 문예중대를 창설하여 연극, 무용 등의 순회공연하였다. 전쟁 중 <정의의 진격>, <백만의 별>, <전선을 찾아> 등 6밀리극영화 20편과 단편기록영화 등 약 40편을 제작되었다.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전시항목】** 전쟁과 삶

**【소항목】** 전쟁 속의 사람들

● 전쟁 속의 사람들	전후의 사회변화
전쟁과 문화	

**【정의】** 6·25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군인을 포함하여 피난민, 난민,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이산가족, 납북 및 상이군인 등을 총칭

**【원인·배경】** 6·25전쟁으로 남북한 각각 약 60만 명과 70만 명이 사망하여 130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기록하였다.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이 세계전쟁사상 어느 전쟁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이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참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6·25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외국군대의 피해를 보면 중공군 약 18만 4천명,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3만 6천 명이 희생되었다. 실종자와 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남한은 약 137만여 명, 북한은 258만여 명, 중공군 73만여 명, 유엔군 12만여 명 등 약 480만여 명에 달한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6·25전쟁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개】** 3년 1개월 동안 전개된 6·25전쟁은 단일전쟁으로는 그 이전의 어느 전쟁보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인명피해에 있어 우리는 국군(경찰포함) 63만 명, 유엔군 55만 명을 포함해 119만 명이 전사·부상·실종 당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민간인의 손실은 매우 컸다. 전쟁피해자는 남북한을 합쳐 사망·부상·실종을 포함하여 249만 명에 달하였고, 32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한 전재민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정확한 통계수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인구의 반수 이상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전사자의 혈육, 전상자와 그 가정, 이산가족 등 많은 이들이 현재까지도 고통박도 있다. 국방부가 조사한 1952년 3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자력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3백 50만에 달했다. 특히 상이군인은 6만 4천여 명, 군경원호대상자는 163만 명(1959년), 전쟁고아는 5만 9천여 명이었으며, 전쟁미망인도 55만여 명에 달했다.

한편 북한에 의해 자행된 전시민간인납북도 상당한 수에 달했다. 납북된 총 인원은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약 9만여 명의 남한 인사들의 전시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전재민 통계(1950.6.25~1952.3.15)

구분	세대수	인원(명)
총계	2,104,661	10,189,301
남한피난민	421,228	1,714,992
월남피난민	135,745	618,721
전재민	656,949	3,419,996
원주민	890,739	4,375,413
전재고아	-	48,332
기타	-	11,857

※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국방부, 1953).

**【결과】** 전쟁의 발발은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먼저 전쟁으로 인해 자활의 힘을 잃은 난민들에게 우리나라와 외국 우방들에 의해 합동난민정착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들을 고향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농기구, 주택 등을 공급하여 15만 가구를 귀농정착시키게 하였다. 또한 고아 6만 명을 민간사회사업가들의 고아원에 수용하였다.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직업보호, 수용보호 등을 제공하였다. 즉 상이군인과 그 가족, 전몰군인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생계가 곤란한 자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제공하고, 직업 알선을 해주었으며, 그 부상정도가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의료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 전쟁의 참화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는 우리 사회에 있어 도시화의 가속화 및 전통 가족 질서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

**【핵심어】** 전쟁피해자/전재민/피난민/전재고아

**【참고문헌】** 대한민국국방부, 『정훈대계』 I (대한민국국방부, 1956); 대한민국국방부, 『6·25 전쟁사』 하(대한민국국방부, 1995); 박정석, 「상이군인과 유가족의 전쟁경험」, 『전쟁과 사람들』(도서출판 한울, 2003).

- 【사진자료】** 333. 19500928 전쟁고아  
 334. 1951 포로와 피난민이 집결한 거제도의 시장  
 335. 1955 대구역 부근의 지게꾼들

**【작성자】** 이상호(전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전시항목】** 전쟁과 삶

**【소항목】** 전쟁과 문화

전쟁 속의 사람들	전후의 사회변화
● 전쟁과 문화	

**【정의】**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문화인들의 주요 행적과 작품

**【원인·배경】** 6·25전쟁의 발발로 작품 활동의 공간을 잃은 문화인들에게 우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군 정훈국이 산과 역할을 통해 각계문화인들을 연결하여 작품 활동을 주선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육군 중군작가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단체가 생겨났다. 한편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각 문화계가 분과 단체를 설립하여 전쟁 중에도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전개】**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문화인들은 재생의 활로를 중군에서 찾기 시작했다. 문인들은 중군작가단을 화가들은 중군화가단을, 음악가들은 정훈음악대 등을 조직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다.

문인들이 결성한 최대단체는 바로 중군작가단이었다. 이는 육군 중군작가단을 비롯해, 해군 창공구락부, 해군 중군작가단이 각각 조직되었다. 중군작가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관지 발간, 중군문학 방송, 연극발표, 지방순회강연, 군가 작곡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육군 중군작가단에서는 기관지로 『전선문학』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술계에서는 1·4후퇴 후 1951년 2월 대구에서 10여 명 안팎의 화가들이 모여 중군화가단을 결성하였다. 또한 부산에서는 종합미술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군화가단의 작품 활동은 3년 동안 전쟁기록화 전시회를 비롯하여, 공군작품전, 월남화가전 등을 개최하였다.

음악계에서는 1950년 9·28수복 직후부터 군과 유대를 맺으며 정훈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위문공연, 군가 정리·보급 등을 담당했다. 이 때 창작되어 일반에게 많이 불리워진 노래로는 김광섭 작사, 이흥렬 작곡의 <승리의 노래>, 조지훈 작사, 박대현 작곡의 <연합군환영가> 등이 있다. 한편 1950년 12월 27일 전시중임에도 교육부직속으로 <국립국어원>이 창설되었다.

또한 연극이나 영화에 관계한 연예인들은 군의 지원을 받아 국방부 산하에 문예중대를 창설하여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순회공연 하였다. 영화의 경우 제작 환경이 매우 열악하

였으나, 16밀리 극영화가 20편과 단편기록영화 등 약 40편의 작품이 공개되었다. 이 가운데 국방부에서 제작한 <정의의 진격>, <백만의 별>, <전선을 찾아> 등이 작품성에 있어서 뛰어났다.

**【의의】**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계는 자신들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인적손실로 인하여 문화계는 이후 급격한 세대교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핵심어】** 종군작가단/종군화가단/문예중대

**【참고문헌】** 대한민국국방부, 『정훈대계』 I (대한민국국방부, 1956);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7(중앙일보사, 1983).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전시항목】** 전쟁과 삶

**【소항목】** 전후의 사회변화

전쟁 속의 사람들	● 전후의 사회변화
전쟁과 문화	

**【정의】** 400만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3년간의 6·25전쟁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나타난 인구이동과 도시화, 학교 교육의 확대, 그리고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으로 발생한 사회의 전면적 변화상황

**【원인·배경】** 6·25전쟁은 남한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기간 중 수많은 희생자로 인한 인구성장률의 둔화, 전후 베이비붐과 함께 대규모의 월남인구의 유입 및 피난 이동으로 인해 도시화, 다원화를 크게 촉진했다.

**【발발】**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계층 간, 지역 간 인구이동을 경험하였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수의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제대로 인해 실업난이 가중되었다. 이 시기 사회변화의 큰 특징으로는 인구이동과 도시화, 학교교육의 확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전통문화와의 가치관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전개】** 전후 사회변화로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정치, 경제구조 사회의식 및 문화적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의 이동을 경험하였으며, 고아의 양산 및 전쟁미망인이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도 파괴되었다. 또한 농촌의 궁핍화로 인해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다수의 이산가족을 양상하게 되었다. 둘째로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반공권위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치 전면에 공고화되었으며, 다른 정치이념을 압도하게 되었다. 되었다. 셋째로 전쟁으로 인한 전면적 파괴로 인해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를 통한 자본축적이 진행되었으며, 도시화로 인해 농촌사회가 폐쇄되었지만, 도시의 노동력이 풍부해지면 서비스산업이 비대화되었다. 또한 소비재중심의 공업구조가 내재화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미군에 의해 유입된 서구의 대중문화는 기존의 우리 전통문화와 조합되기 어려운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가치관의 혼란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과】**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전면적인 개편과 구조변화의 방향을 겪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해체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신분제가 해체되었으며, 높은 교육열과 이를 통한 신분상승 및 지위향상의 목표가 일반화되었으며, 사회 전반이 근대화로 질주하게 되었다.

**【의의】** 전후 사회변화는 전통적인 사회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서구문화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근대화로 이행하게 하였다.

**【핵심어】** 인구이동/도시화/교육확대/서구문화

**【참고문헌】** 정성호, 「6·25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6·25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강인철, 「6·25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6·25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강의』(돌베개, 1998).

**【작성자】** 이상호(건국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6·25전쟁과 공산군 점령하의 수난 전쟁과 사회, 그 속의 사람들	●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	------------------

6·25전쟁은 인적 물적 손실이 어느 전쟁보다 컸다. 먼저 남한의 인명손실은 군인, 경찰, 민간인을 합쳐서 모두 132만 명에 이르렀고, 미국은 33,000여 명의 전사자를 비롯해 14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쟁 중에 납치된 약 9만 명을 포함해서 민간인의 사상자는 20만 명에 이르렀다. 북한의 경우도 52만 명의 인적 손실과 약 90만 명의 중공군의 손실이 있었다. 경제적 손실도 남한의 경우 생산시설의 42%, 공장건물의 46%가 파괴되어 산업기반과 생활기반에 대한 엄청난 복구비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휴전 직후 크게 늘어난 70만 명에 이르는 국군의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었으나,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대비였다. 전후 10년이 지난 1965년도 국방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총 280억 원 가운데 병력 유지비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대유지비와 전투예비비 외에 전력증강비는 0.8%가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1975년 이전까지 국방비의 90% 이상이 군대의 유지비에 충당되었으므로,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무기와 장비현대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기현대화는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므로, 당시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많은 자원을 획득하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1950년대 말부터 휴전 전후 크게 늘어난 국군의 감축과 함께 장비현대화가 진행되었다. 미국 측이 감군론을 제안하자, 한국 측은 8인치 포를 비롯해 전투기(F-86D), 구축함, 상륙전차 등을 요구하였다. 이때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작전국장 정래혁, 국방부 차관보 백선진 소장 등이 미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며 장비 지원을 호소하였다.

북한군이 소련으로부터 신형 제트기를 도입하는데 대응하여 고사포병을 창설하게 되었다. 1955년 5월 경기 오산에서 제1고사포병여단과 제10고사포병단을 창설하였다. 이후 1956년 7월 미 제10고사포병단으로부터 각 지역의 대공방어 임무를 인계받았다. 미 군원으로부터 무선조종목표기(Rcat)을 도입하여 대공 실탄 사격연습을 실시할 수 있었고, 호크(Hawk)미사일을 획득하여 1964년 7월 호크유도탄부대 창설이후 '나이키(Nike)' 유도탄 대대를 창설하였다. 1960년대에는 106밀리 무반동자주포가 도입되었고, M143, A13 등 낡은 전차는 M149전차로 교체되었다.

1965년부터 시작된 베트남파병을 계기로, 국군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신무기를 확보하여 전력증강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전후 복구

**【소항목】** 전후복구사업

● 전후복구사업	전후 원조경제
전후 경제재건	

**【정의】** 6·25전쟁을 통해 파괴된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을 복구·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부흥계획과 복구사업을 의미한다.

**【배경】** 당시 공보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전 기간에 걸친 유형 자산의 피해규모는 총 410억 60백만 원이었고, 이 중에서 일반주택의 피해가 가장 커서 총 피해액의 4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피해가 큰 부분은 정부기관 시설, 각급 학교 시설, 경찰서·세무서·금융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시설이나 의료기관 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의 파괴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부분은 농림·수산·공업·광업·무역 등을 포함하는 산업시설과 전기·도로·항만·철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이었는데, 이것은 전체의 21.6%를 차지하였다.

**【시행】** 전후복구사업은 제조업체,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의 복구 및 확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들 복구사업은 다시 복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에 수요가 있고, 공장 복구에 큰 자금이 요구되지 않는 경공업 부문의 복구사업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장 복구 및 건설에 큰 자금이 소요되는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복구사업에서 주로 발견된다.

면방직공업의 복구과정은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6·25전쟁 직전 면방직공업은 방기(紡機) 292,072추와 직기 7,818대를 보유했으나 전쟁으로 각각 66%와 65%의 시설이 파괴되어 방기 96,992추, 직기 2,716대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면방직 기업은 원조자금과 정부지원으로 빠르게 복구되어 방직시설은 1955년에, 방직시설은 1957년에 전쟁 직전의 수준을 능가하였다. 제분공업은 6·25전쟁 이전에 3개 회사 4개 공장이 존재했으나 6·25전쟁 이후 국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존 공장의 복구는 물론 새로운 공장이 대거 설립되었다. 제분공업의 시설능력은 1954년에 2,954바렐이었으나 1960년에 42,721바렐이었다. 이와 같이 소비재산업의 경우, 전쟁 이후 원조자금과 정부 지원으로 시설이 빠르게 복구되었고, 원조자금으로 공급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결

과 1950년대 후반에는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갖게 되어 해외시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이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비료·시멘트·판유리와 같은 3대 기간산업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들 산업은 전쟁 이전부터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했던 산업이었지만, 전후 복구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수급 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는 산업이었다. 이들 산업 중에서 시멘트와 판유리 공장의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비료공장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공장 건설이 크게 지연되었다. 전쟁 이전에 화학비료 공장은 3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 공장은 6·25전쟁을 통해 심각히 파괴되어 연간 비료 생산량은 3,800톤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당시 연간 비료 수요량 40~50만 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료공장건설계획을 수립하고, 1954년에 원조자금을 배정받아 85천 톤 규모의 요소비료공장을 충주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초기 계획은 1955년 9월에 착공하여 1958년 4월에 완공하는 것이었으나 공장 건설은 지연되어 1959년 10월에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고, 공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1961년 4월이었다.

**【결과·의의】** 전후복구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원조자금이었다. 따라서 원조자금이 원활히 지원된 경우에는 빠르게 복구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구가 지연되었다. 더욱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료의 대부분도 원조자금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원조자금으로 어떤 물자가 도입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1950년대에 생산재산업보다 소비재산업 중심으로 복구된 것은 원조자금으로 주로 소비재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원료가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핵심어】** 6·25전쟁 피해/전후복구사업/면방직공업/제분공업/시멘트공장/판유리공장/비료공장/원조자금

**【참고문헌】** 김양화, 「1950년대 제조업 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0); 이대근, 『해방 후·1950년대의 경제-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02).

**【사진자료】** 336. 1958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  
337. 1950 보신각 중 복구 장면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전후 복구

**【소항목】** 전후 경제재건

전후복구사업	전후 원조경제
● 전후 경제재건	

**【정의】** 6·25전쟁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6·25전쟁에 의해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함과 동시에, 전후 경제부흥을 위해 이승만 정부가 6·25전쟁 중 혹은 이후에 시행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배경】** 6·25전쟁 중에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진행되었다. 1949년 12월의 서울시 도매물가지수를 기준(100)으로 할 때, 6·25전쟁 직전인 1950년 6월에는 120이었다. 그러나 6·25전쟁과 함께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여 1950년 12월에 287, 1952년 12월에 1,813으로 상승하여 전쟁 기간 중에 물가상승률은 15배를 상회하였다.

산업시설의 파괴도 매우 심하였다. 공보처 조사에 따르면 6·25전쟁에 의한 유형자산의 피해액은 4,106억 환(圓, 당시의 화폐단위, 오늘날 원(圓)과 비교할 때 교환비율은 10환 대 1원임)으로 1953년 국민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시행】** 이승만 정부가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은 두 가지였다. 유엔군 대여금은 유엔군이 6·25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한국통화 지출경비를 한국정부가 대여해 준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시 가장 중요한 통화 팽창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한 유엔군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회담을 1951년 4월부터 개최하여 1951년 10월에 유엔군 대여금을 최초로 상환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위해 이승만 정부가 시행한 보다 급진적인 조치는 1953년 2월 14일에 시행된 통화개혁이었다. 이것은 구권(舊券) 원을 새로운 화폐단위인 환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교환비율을 100원대 1환으로 변경한 조치였다.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경제부흥을 위해 이승만 정부는 전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 민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소유였던 귀속기업체를 전쟁 기간 중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발국의 경제개발 수단으로 인정되었던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제부흥계획은 1951, 1952년과 같이 전쟁 중에도 작성되었으나, 경제부흥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 이후부터였다. 물론 이 시기에는 미국의 원조정책에 크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에 수립된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1년 단위로 경제부흥 계획이 작성되어 실천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1953년에 작성된 '1954년도 한국경제부흥계획(1953.7~1954.6)'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의의】** 이승만 정부의 전후 경제재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행은 1953년부터 국민소득을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행 추계 자료(1965년 불변가격으로 계산)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은 1953년에 4천 219억 원(오늘날 화폐단위)이었고, 1960년에는 5천 891억 원으로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4.9%였다. 광공업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1953년 광공업 부가가치 금액은 370억 원이었고 1960년의 그것은 888억 원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2.4%였다.

**【핵심어】** 인플레이션/경제안정/산업시설 파괴/전후 경제재건/유엔군대여금/통화개혁/경제부흥계획/국민총생산

**【참고문헌】** 한국은행, 『국민소득연보, 1953~1967』(1968); 최상오, 「경제안정의 지향과 한·미 간 환율논쟁-유엔군 대여금의 상환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26(1999); 최상오,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을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사진자료】** 338. 19570925 문경 시멘트 공장 준공식에서 이승만 대통령  
339. 1955 문경선 개통식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전후 복구

**【소항목】** 전후 원조경제

전후복구사업	● 전후 원조경제
전후 경제재건	

**【정의】** 6·25전쟁 이후 한국경제의 재건과 부흥은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도입된 물자에 근거하여 전개되었고, 이에 원조자금 규모와 그 자금을 이용하여 도입되는 물자가 무엇인냐에 따라 전후 재건과 부흥의 내용이 결정된 축적구조를 의미한다.

**【배경】** 6·25전쟁은 산업시설을 심각히 파괴시켰지만, 이렇게 파괴된 시설을 복구할 국내자원은 매우 제한되었다. 우선 1953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불 정도에 불과해서 국내저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음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국군 수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국내자원 동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25전쟁 직전에 국군 수는 10여만 명에 불과했지만,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군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955년 7월에는 72만 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국군 수는 정부의 재정자금을 경제개발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이후 우리 경제의 재건과 부흥은 미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경제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시행】** 1953~1960년간의 수출액은 1억 97백만 달러였지만, 같은 기간의 수입액은 28억 19백만 달러였다. 이와 같이 수입은 수출을 훨씬 초과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뒷받침한 것은 경제원조였다. 총 수입액에서 경제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할 정도로 이 기간에 원조의 역할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후의 경제재건과 부흥은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어떤 물자를 도입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1952년 5월 24일에 체결된 경제원조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합동경제위원회(CEB, Combined Economic Board)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6·25전쟁으로 파괴된 사회간접자본과 소비재산업의 복구·확충은 물론 전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인조섬유공장, 화학공업, 기계공업 등과 같이 중화학공업부문의 공장건설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재건과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 시설재 등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물자도입과 함께 당장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제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원료나 식

량 및 연료와 같은 최종소비재 도입을 주장하였다.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실제 도입된 물자를 분석해 보면, 미국정부의 주장에 따라 원료, 식량, 연료 등의 물자가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최대의 수입품이었던 비료는 총 수입액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식량(쌀, 보리, 소맥분 등)은 13%, 원면·밀·원당 등을 포함한 원료는 20%, 연료(석유, 석탄)는 8%를 차지하였다.

**【결과·의의】** 1950년대의 제조업에서 소비재산업(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85.4%였고, 1960년 80.7%였다. 이와 같이 생산재산업(중화학공업)의 비중보다 소비재산업의 비중이 훨씬 높았던 이유는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도입된 물자가 대부분 소비재산업의 재건과 성장에 기여하는 원료 등이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소비재산업 중심의 성장은 불균형적 공업 구조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 성장한 면방직업 등과 같이 일부 소비재산업에서는 국내시장 규모를 증가하는 생산시설 구축하여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배경이 되었다.

**【핵심어】** 산업시설 파괴와 재건/1인당 국민소득/막대한 국군 수/경제원조/1952년 경제원조협정/합동경제위원회/원조물자/소비재산업(경공업)/생산재산업(중화학공업)/수출산업으로의 도약

**【참고문헌】** 온창일, 「6·25전쟁과 한국군의 팽창」, 『한국과 6·25전쟁』(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나남, 2007).

**【사진자료】** 340. 19601228 한미 농산물 협정조인식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한국군 현대화 작업

**【소항목】** 미 군사고문단

● 미 군사고문단	교육훈련기관 정비
국군증강	밴 플리트 장군

**【정의】** 주한미군사고문단(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은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직후 미군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한국 군정을 발전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설치되어, 1971년 4월 1일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으로 통합될 때까지 존속한 미 군사조직이다.

**【설립배경】**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 고문단은 1949년 6월 말 주한미군이 인천을 마지막으로 떠난 이후, 장교를 포함하여 500명 규모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주한군사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어 소급 적용되었다.

**【활동사항】**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 훈련, 군수업무 등 한국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았으나, 전쟁과 휴전 등 한국의 정세 변화에 따라 그 범위와 중점을 달리하며 전개되었다.

군사고문단은 1949년 후반기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에 따른 보완 업무수행에서 비롯되었으나, 전쟁 기간 동안 군사 고문단의 임무는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조직, 행정, 훈련, 충원 등에 관한 보고서와 건의 사항들을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정규작전에 대한 지도와 지원 이외에 제2전선에서의 대게릴라전에도 관여하였다.

군사고문단은 한국군 교육 및 훈련 지원을 담당하고, 신병훈련소의 훈련 계획부터 장교 교육에 관한 장기계획에 이르기까지 세부계획 마련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군사고문단의 활동 결과, 장교후보생에 대한 교육 기관의 연장, 초등 고등군사반 과정을 통한 재교육, 장교 양성의 단기과정과는 별도로 4년제 육사의 설립, 영관급 장교들을 위한 지휘 일반 참모 대학의 설립, 매년 약 700명의 장교단 도미 군사유학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병의 경우 신병훈련소에서의 훈련 연장과 특기병 교육이 강화되었다. 또한 부대 훈련을 목적으로 야전훈련사령부와 야전훈련소가 창설되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던 군사학교들을 관할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사령부가 창설되어 군사학교들을 일정 지역에 통합시켰다. 군사고문단의

또 다른 임무 중의 하나는 한국군의 군수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경과·변천】** 고문단의 활동은 미 군정 당시인 1946년 1월 국방사령부에서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으로 구성된 '연대편성 및 훈련조'를 파견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최초 미 군사고문단은 통위부장 고문이던 프라이어 대령이었고 이어 로버츠(W. L. Roberts) 준장이 맡았다. 전쟁 발발 이전에 약 500명이었던 군사 고문단 규모는 6·25전쟁 때 대대급 까지 파견되고, 1952년 9월경에는 군사고문단이 해군 및 공군에도 설치되었다. 고문단의 규모는 한 때 표)에서와 같이 1,800명을 넘었으나 휴전 후 국군의 성장과 반비례해 점차 축소되었다. 현재 그 명맥은 미 합동군사업무단(JUSMAG)이 잇고 있다.

<표> 미 군사고문단의 수(단위: 명)

시기	장교	부사관 및 사병	계
1950.6.25	183	286	469
1950.12.30	367	392	759
1951.6.30	414	559	973
1951.10.30	578	940	1,518
1951.12.3	672	1,140	1,812

**【의의】**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창설, 발전 과정에서 교육훈련체계의 정비와 교육훈련의 강화로 미국식 군사제도가 한국군에 급속히 이식시켜 한국군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핵심어】** 군사고문단/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참고문헌】** 안정애,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한국군 창군이후(1948~1950)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1(1999);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사진자료】** 341. 1949 미 군사고문단 캠프를 방문한 이승만대통령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한국군 현대화 작업

**【소항목】** 국군증강

미 군사고문단	교육훈련기관 정비
● 국군증강	밴 플리트 장군

**【정의】** 국군증강은 6·25전쟁 수행과 전후 공산 측의 재침을 막기 위해 양적인 규모를 확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배경】**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당한 국군은 수적 열세의 극복과 반격을 위해 병력 재정비와 보충을 통해 군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더욱이 중국군의 개입 이후 그들이 국군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손실에 따른 국군의 증강이 시급하였으며,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전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안보를 위해 병력을 증강시켰다.

**【전개】** 한국 정부는 전쟁 시기 “우리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정부에 국군의 증강을 요청하였다. 당시 한국 지도자들은 그 규모를 10개 사단 25만 명, 30만 명, 때로는 50만 명, 혹은 100만 명 이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미 군부에서는 전후 한국군의 규모는 미군 주둔과 한국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대개 20만여 명 수준이었다. 워커(Walker) 미 제8군사령관은 10개 사단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리지웨이(Matthew Ridgway) 유엔군사령관은 약간의 공군 및 해안방어선을 포함해서 25만 명의 병력이 전후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국군은 휴전 당시 550,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던 것은 미군의 철수에 따른 국군의 방위능력 제고라는 전략적 요소도 있었지만, 미국정부가 미군의 병력부족과 비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국군의 증강을 지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미 1952년 말에는 전선의 3/4을 한국군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휴전 후 국군증강은 휴전협정 체결 전에 서둘러 창설된 각 사단에 대한 보충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이 약속한 대로 20개 사단을 창설하기 위해 제22, 제25, 제26, 제27, 제28, 제29의 6개 사단의 증설이 이루어졌다. 1953년 9개월 동안 144,146명이 늘어났으므로 매달 16,000여 명이 증강된 셈이었다. 그 결과 1954년 6월 국군의 규모는 육군 645,300명, 해군 14,183명, 해병대 25,136명, 공군 13,163명 등 총 697,782명으로 증편되었다.

<표> 10개 사단 증편 과정

부대	창설일	창설 근거	규모(1954.5.2)
제12사단	1952.11.8	국일명(육) 제207호	15,282
제15사단	1952.11.8		15,120
제20사단	1953.2.9	국일명(육) 제39호	15,060
제21사단	1953.2.9		15,025
제22사단	1953.4.21	국일명(육) 제107호	15,053
제25사단	1953.4.21		15,739
제26사단	1953.6.18	국일명(육) 제202호	15,088
제27사단	1953.6.18		14,742
제28사단	1953.11.18	국일명(육) 제431호	14,926
제29사단	1953.11.18		12,406

전후에도 미군의 철수에 따른 한국 내 심리적 불안 요소를 이용하여, 한국정부는 국군 병력을 늘리려고 하였다. 1954년 7월 하순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 의회연설에서 공산 측의 적화전략에 맞서 20개 사단을 더 편성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군 증강요구 대신에, 미 합참과 국방부는 한국군이 20개 사단 이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고 각군 병력의 상한선 내에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때 미 합참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정규 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상당한 예비군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10개 예비사단이 추가로 창설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한미의사록에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여, 1954년 11월, 20개 사단을 기본으로 72만 명(육군 661,000명, 해군 15,000명, 해병대 27,000명, 공군 16,500명)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였다.

**【의의】** 20개 사단 증설로 휴전 후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과도한 군비는 부담되었다. 이후 양적 팽창은 국군현대화로 이어졌다.

**【핵심어】** 20개 사단 증설/밴 플리트 장군/군단 편성

**【참고문헌】** 이미숙, 『국방사』 2.

**【사진자료】** 342. 19511021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

343. 19580109-1 맥켈로이 장관 일행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군사훈련(1)

344. 19580109-2 맥켈로이 장관 일행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군사훈련(2)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한국군 현대화 작업

**【소항목】** 교육훈련기관 정비

미 군사고문단	● 교육훈련기관 정비
국군증강	밴 플리트 장군

**【정의】** 6·25전쟁 초기 한국군은 와해되었던 전열을 가다듬고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 각군 사관학교의 재건, 육군종합학교, 보병학교 등 각종병과학교 등을 정비하였다.

**【배경】** 전쟁 중 국군 지휘관들의 지도력이 낮아서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교 양성이 요청되었다. 미군 지도부는 한국군이 만족할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까지 한국군의 증강과 장비의 추가지원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경과·변천】** 1951년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 사이에 휴전회담이 본격화되면서 전선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미군은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군의 학교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전쟁 기간 중 장교의 양성은 사병과 달리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장교 보충에 어려움이 많았다. 밴 플리트 미 8군사령관은 미 웨스트포인트처럼 우수한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계획하였다. 1950년 6월 4년제 정규과정으로 생도 2기생이 입교하였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3일 후 28일에 임시 휴교 조치되었다. 밴 플리트의 노력으로 1951년 10월 경상남도 진해에서 4년제 대학과정으로 재개교되었다.

진해에 있었던 해군사관학교와는 달리 공군사관학교는 교육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됨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는 10월 초 서울 성남중학교로 이동하여 다시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같은 해 12월 다시 대구 칠성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 5월 1일 공군사관학교 본교가 진해기지로 이동하였고, 이때부터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육군의 병과 장교교육은 창군 초기부터 통신 병기 등 기술 교육이 필요한 기술병과부터 교육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정부수립 이후에는 13개 병과학교를 창설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쟁기에는 육군보병학교를 비롯한 각 병과 학교가 폐교되면서 육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육군종합학교는 기본적으로 보병장교후보생의 훈련에 중점을 두었으나 야전포병, 통신, 공병, 병기, 병참, 경리 그리고 헌병과 같은 타병과를 위한 훈련도 실시하였다. 모든 장교후

보병들은 4주간의 '장교기본교육'과 이후 각 병과의 훈련계획에 따라 '병과교육'이라는 2단계 훈련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병과 통신 특기병을 위한 훈련인 특기병 과정이 개설되어 각각 4주간의 훈련을 받았다. 육군종합학교는 육군이 훈련체계를 개선한 1951년 1월까지 초급장교를 양성하여, 5월까지 6주 또는 8주의 훈련을 통해 7,000명 이상의 장교를 배출했다.

국군의 교육 훈련은 미 군사고문단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담당 장교에게 군사문제를 토의 조언하였다. 고문단은 병과학교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병학교·부관학교·병참학교·경리학교·군의학교의 설치와 병과학교의 보수교육을 위해 초·고등군사반 과정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관학교 4년제 실시, 해군과 공군의 증강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등으로 국군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미군은 보다 효과적인 훈련과 교육을 위해 국군 장교들을 미국 각 병과학교에 보내 교육시켰다.

**【핵심어】** 육사/종합학교/보병학교

**【참고문헌】**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50년사』(1996);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001);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해군사관학교50년사』(1996);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20년사』(1974).

**【사진자료】** 345. 19530128 밴플리트 장군에게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한국군 현대화 작업

**【소항목】** 밴 플리트 장군

미 군사고문단	교육훈련기관 정비
국군증강	● 밴 플리트 장군

**【정의】**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1892~1992)는 뉴저지주 코이테스빌 태생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에 참가한 미국 군인이다.

**【인물배경】**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21년 봄, 플로리다 대학 학군단(ROTC) 군사학 교관으로 보직되어 13년간이나 근무하면서, 미식축구팀 감독직을 자원하여 맡아 교육 훈련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대장으로서 노르망디상륙작전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웠고, 특히 유명한 발지전투를 지휘했다. 1944년 8월 1일에는 육군준장으로 진급 이후 제90주방위군 사단장, 제23군단장, 제2지원사령관, 그리고 제3군단장을 역임하였다.

1948년에는 그리스 주재 군사사절단장으로 그리스군의 정비를 돕고, 그리스 정부군을 지휘하여 공산계릴라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 공산주의자에 대항한 전쟁에서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리지웨이 장군 후임으로 제8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활동사항】** 밴 플리트는 1951년 공산군의 춘계공세 때 한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이 추격하기도 전에 지리멸렬되어 후퇴하였는데, 이를 부적절한 지휘력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문제는 지휘력이다. 지휘력이란 훈련 이상의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군 부대를 지휘하기에 적합한 유능한 한국군 간부 양성에 노력하였다.

그는 한국군의 재건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각종군사학교를 설치하였다. 1951년 8월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신병훈련소를 설립하고, 1952년에 확대 개편되었다. 특히 한국군의 취약점인 장교들의 리더십 계발을 위해 한국군 보병장교 150명과 포병장교 100명을 미 보병학교 및 포병학교에 연수를 보냈다. 최고의 장교와 전투경험이 있는 자를 군사고문단에 배치하고자, 고문단체도와 군사 고문단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밴 플리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10개 사단 추가 창설안과 한국군 해병대 증편안 그리고 카투사 등의 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후 한국군이 미군 부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1952년 11월 1일 클라크 장군은 밴 플리트의 열성적인 건의에 힘입어서, 최종적으로 한국군을 20개 야전사단으로 증강시키는 계획을 콜린스 장군에게 제출하였다.

한국군이 20개 사단으로 증편되자 그는 한국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장교단을 양성하기 위해 웨스트포인트를 모델 삼아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의 설립 및 지원을 추진하여 허가를 얻어낸 후, 1952년 1월 20일 진해에서 육군사관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다. 이후 한국 육군사관학교재단을 설립하여 개교 초기의 육사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전역 후에도 모금활동을 전개해 육사 도서관을 지어 기증할 정도로 한국군 발전에 끝없는 관심을 보였다. 그를 기념하여 육군사관학교에 동상을 세우고, "대한민국 육사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있다.

1953년 3월 31일 한국에서 떠난 후, 밴 플리트 장군은 1954년 5월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군사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타이완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극동의 군사, 경제, 정치적 상황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군 증강계획과 군사원조 등에 힘써서 휴전 후 국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을 자원하였던 아들 지미(Jimmy)가 1952년 4월 4일 야간임무수행을 마치고 귀환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행을 겪기도 하였다.

**【평가】** 밴 플리트 장군은 그리스 주재 군사사절단장으로 그리스군의 정비를 돕고, 그리스 정부군을 지휘하여 공산계릴라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을 토대로 1951년 미 제8군 사령관에 취임하여 6·25전쟁을 지휘하고 한국 육군사관학교 재건과 국군 증강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Paul F. Braim(육군교육사령부 번역실 역),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육군본부, 2001);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군사편찬연구소, 2008).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독도영유권

**【소항목】** 독도영유권

● 독도영유권	이승만라인
---------	-------

**【정의】** 독도영유권 분쟁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을 의미한다.

**【배경】** 독도는 1905년 일본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되었으나, 일제가 패망한 후 연합국총사령부에서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데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이 포함되었으나 독도는 제외되었다. 이를 두고 일본 측은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평화조약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전개】**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보장되었지만,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가운데 독도의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정부에 보낸 “약간의 주변구역을 통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에 관한 훈령”(SCAPIN 677: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제677호 제3항에서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는 지역과 제외되는 지역을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도가 공식적으로 한국령임을 분명히 했다. 즉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쓰시마제도, 류큐 등을 포함하는 약 1천 곳의 인접 여러 도서로 한정시켰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섬으로 울릉도, 리앙쿠르섬(독도)과 제주도가 열거되었다. 당시 지도에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직접적 행정지역인 일본과 남한을 구분하면서 독도는 남한에 귀속시키고 대마도는 일본에 소속시켰다.

이 훈령으로 포츠담선언에서 연합국의 결정에 유보된 일본의 ‘작은 섬들’의 귀속조치로 독도는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으로 분리되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근거자료가 되었다.

이 훈령 이후에도 일본인의 어로활동으로 독도 근처에서 잇따라 마찰이 일어나자, 연합

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훈령 제1033호로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이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맥아더라인이라고 불렀던 이 선은 일본인의 어로활동 범위를 일본열도 주변으로 제한하여 독도 근해에서 어로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독도가 명시적으로 한국영토에 포함되었음을 강화시켰다.

그런데 1949년 12월 대일강화조약 6차 초안부터 일본령이라고 바뀌더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 편입의 합법성을 내세우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고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의】**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에서 일본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할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맥아더라인/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참고문헌】** 조성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전략과 독도귀속문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17-2(2008); 정병준, 『독도 1947』(돌베개, 2010);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사진자료】** 346. 1947 조선산악회 주최 국토규명 제4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당시의 독도전경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키워드】** 전후 복구와 한국군 현대화

**【전시항목】** 독도영유권

**【소항목】** 이승만라인

독도영유권	● 이승만라인
-------	---------

**【정의】** 이승만라인은 한국정부가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발표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을 의미한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렸다.

**【배경】** 이승만라인을 선포한 이유는 한국정부가 대일평화조약이 일본인들에게 맥아더라인을 수용하도록 하지 못하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후 ‘맥아더라인’의 철폐를 예상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한일 간의 어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개】** 이승만라인은 한일 간의 어업권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지만, 평화선에 독도가 포함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미 이 선언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7일, 제98회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52년 1월 28일 “일본 영토인 이 섬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 왔다. 한국정부는 2월 12일 반박 항의문을 일본정부에 보냈고, 이를 일본정부가 반박하면 다시 반박하기를 반복했다.

한국정부는 평화선이 맥아더라인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대일평화조약이 일본인들에게 맥아더라인을 수용하도록 조약을 수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맥아더라인의 유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일본이 맥아더라인을 상호조약으로 인식할 준비가 될 때까지 ‘침입’ 방지를 위한 한국해군의 병력 사용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화선이 선포되어 있었지만, 일본 어선들은 맥아더라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측의 전관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어로작업을 계속했다. 이에 한국정부로서는 해군력을 동원해 일본 어선을 나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1965년까지 한국정부에 의해 나포된 일본 어선이 모두 326척이고 억류된 어부들은 3,904명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1954년 1월 8일, 요시다 수상은 이승만라인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해결은 일본의 국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수역 안에 평화선이 선포되어 있었지만, 일본 어선들은 한국 측의 전 관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어로작업을 계속했다.

평화선 선언은 연안국의 공해에 관한 해양주권에 대한 국제법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국제적으로 영해 3해리와 공해 자유의 원칙이 확고한 때여서, 한국정부는 비난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 선언은 우리나라 인접 해양의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에 있는 일체의 자원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오늘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와 그 내용이 거의 같다.

그런데 평화선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이어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당시 우리 정부는 독도의 영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상방위선에 해당되는 평화선을 철폐하여 독도를 공동규제수역도 아닌 공해 상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입장은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이어져 독도를 울릉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수역에 위치케 함으로 울릉도 부속섬으로서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의의】** 평화선은 1905년 일제가 시마네현 고시로 빼앗아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한국외교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조성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전략과 독도귀속문제」, 『국제지역연구』 17-2(서울대 국제학연구소, 2008); 지철근, 『평화선』(범우사, 1979).

**【사진자료】** 347. 1952 평화선 선포전 국무회의 상정안 자료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6·25전쟁과 전후 복구	● 근대국가 토대 구축
-----------------------------	--------------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제도적으로 철폐가 된 신분제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해체되어갔다. 봉건사회에서 지배계급을 형성하였던 양반은 일제강점기에 정치권력에서 배제됨에 따라 경제권 또한 약화되어갔다. 해방과 6·25전쟁은 잔존해있던 신분체제를 밀어내고 평등의식과 사회적 평준화를 가져왔다. 농지개혁과 전쟁은 지주를 몰락시켰다. 군대·관료·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통적인 계급관계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자본주의적인 사회경제질서가 생활영역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1950년대는 전쟁과 전후복구라는 두 가지 경험을 하던 시기였다. 6·25전쟁은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 이념이 혼재된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반공이념으로 통일되어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결정하였다. 모든 국민은 그 지형을 강요받았으며, 국가와 국민의식이 형성되어갔다. 또한 전쟁의 상흔이 가라앉고 사회가 차츰 안정화됨에 따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었다. 경쟁의 가열은 곧 교육열로 이어져서 거대한 인적 자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주둔과 원조경제에 따른 서구물품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입고 먹고 마시는 문화적인 서구화도 이끌고 왔다. 이후 한국사회에 모습에 서구적인 형태를 많이 띠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는 달리 정치부문에서는 서구적인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기본법인 헌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고쳐지는 현상을 반복했다. 그러한 가운데 권력이 독재화되고 권위주의가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었다. 정권은 비판언론이나 세력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절차적 민주주의인 선거에도 각종 불법과 부정이 결과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국 1960년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일으켜 이승만 정권을 몰러나게 했고 제1공화국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는 한국이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근대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네 차례의 개헌과 두 번의 정권교체는 한국정치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현대 한국정치에서 자리 잡은 양당제가 1955년 민주당 출범에서부터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한국정당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헌과정에서 도입된 정당공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신생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조금씩 이룩해나가는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4월혁명으로 탄생한 2공화국은 4월혁명의 주역인 학생, 시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매우 먼 것이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 각계각층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정부였다. 결국 2공화국은 6·25전쟁을 통해 당시 가장 강한 세력으로 부상한 군 세력이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몰락하고 만다. 이로 인해 한국민주주의는 다시 후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귀중한 경험을 갖게 국민은 군사정권하에서도 줄기차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갔고 결국 다시 전국민적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1950년대 사회문화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농지개혁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안정에 기여하였다. 1949년 6월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1950년 3월에 개정되었고,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농지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6·25전쟁 기간 동안에 이승만 정부가 농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농지개혁을 신속히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농지개혁은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 지배계급인 지주계급이 해체됨으로써 정부가 공업정책을 큰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다음은 토지소유관계를 지주적 소유제도에서 농민적 소유제도로의 재편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공업노동자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에 한국경제는 경제개발전략을 변화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원조가 공급되던 시기에는 원조자금을 활용하는 개발전략이 유효했지만, 원조가 감소하는 시기에 그것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수립된 것이 경제개발 3개년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조감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또한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당시 높아가고 있던 국민들의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경제개발전략은 농가소득 확대, 중소기업 성장기반확충, 기간산업 건설, 수출확대 등이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고도경제성장은 박정희 정부시기에 본격적으로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고도성장 기반은 1950년대에 시행된 제반 제도개혁을 통해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에는 농지개혁의 실시, 경제개발 3개년계획의 수립 등이 포함될 것이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전시항목】** 농지개혁

**【소항목】** 농지개혁

● 농지개혁	
--------	--

**【정의】** 식민지시대의 지주적 토지소유관계를 해체하고 농민적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행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속농지의 경우 1948년 3월에 시행되었고, 일반농지는 정부수립 이후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 농지개혁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배경】** 농지개혁이 시행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해방 직후에 자작지보다 소작지 및 자소작지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1945년 말 현재 남한 총 경지 230만 정보 중에서 145만 정보(전체의 65%)가 소작지였고, 전체 농가호수 중에서 소작농의 비율은 거의 70%에 육박하였다. 다른 하나는 1946년 3월에 북한에서 먼저 토지개혁을 실행한 것이었다.

**【시행】** 먼저 식민지시기에 일본인 농지였다 해방 이후 정부 소유로 전환된 귀속농지의 농지개혁은 일반농지보다 먼저 실행되었다. 미 군정은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여 귀속농지를 관리하다가 1948년 3월 22일 신한공사를 해체함과 동시에 귀속농지를 분배하기 시작하였다. 귀속농지의 분배조건은 농가호당 2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하되, 가격은 해당 농지 생산물의 300%를 1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귀속농지의 농지대가는 1951년 4월 5일 '귀속농지특별조치법(법률 제185호)'의 제정으로 일반농지와 같이 해당 농지 생산물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일반농지는 정부수립 후에 분배되었다. 1949년 6월 21일에 제정된 최초의 농지개혁법은 1950년 3월 10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1950년 3월 25일)과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년 4월 28일)이 제정되어 6·25전쟁 발발 직전에 농지개혁이 시행될 수 있었다. 농지개혁은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 등에 대해 정부가 해당 농지 생산물의 150% 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하여, 이것을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 능력에 비해 적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등의 순으로 분배하였다. 분배가격은 해당 농산물의 150%였으며,

이것은 5년 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매수농지의 원인별 상황을 보면,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가 90%를 차지했고, 농지를 분배받은 대부분의 농가는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가 93%를 차지하였다.

**【결과·의의】**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는 일반농지가 34만 2,365정보, 귀속농지가 26만 2,502정보로 합계 60만 4,867정보였다(1970년 12월 31일 기준). 이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7.6%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1945년 말 소작지 면적의 41.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반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101만 6,338호였고, 귀속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65만 5,032호로 합계 167만 1,370호였는데(1970년 12월 31일 기준), 이것은 전체 농가호수의 76.9%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행된 농지개혁은 두 가지 의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지개혁이 6·25전쟁 직전에 실행됨으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전쟁 이후에는 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다른 하나는 지주계급과 지주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자작농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지주적 토지소유관계/농민적 토지소유관계/귀속농지/일반농지/농지개혁법/신한공사/귀속농지특별조치법

**【참고문헌】**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장시원·이영훈, 『한국경제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사진자료】** 348. 1959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충북 청주 주민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구축

**【키워드】**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전시항목】**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의 토대구축

**【소항목】** 경제개발3개년 계획

● 경제개발3개년 계획	원자력연구소 설립
--------------	-----------

**【정의】** 1958년 4월 1일에 설립된 산업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 8개월간에 걸쳐 작성된 '경제개발 7개년계획(1960~1966)'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1959년 12월에 최종 완성되어 발표된 경제개발계획이다.

**【배경】** 한미 양국 정부는 1956년 말을 전후하여 6·25전쟁 이전의 생활수준으로 복귀한다는 부흥이 완료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경제규모를 양적으로 증대시키는 개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대 후진국정책이 변하면서 대한(大韓) 원조정책이 변화하여 종전의 무상원조 방식에서 유상차관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상원조는 195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경제 관료와 주한 원조기구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조 없이도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 즉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이런 배경 위에서 작성되었다.

**【시행】** 1958년 3월 13일 대통령령 제1349호 '산업개발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동년 4월 1일에 설치된 산업개발위원회가 계획 수립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농림수산, 광공, 상역(商易), 공공기업, 재정금융 등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958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대략 동년 7월말까지 완료되었고, 이 계획의 초기 시안은 1959년 1월에 완성되어 부흥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1959년 4월에는 이 계획 시안 작성을 주도한 부흥부 기획국장과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이 계획 시안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1959년 12월에 완성되었고, 12월 24일에 산업개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산업개발위원회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최종안은 1960년 1월 28일에 국무회의에 회부되었고, 1960년 4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로서 우선 자립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정한, 7개년계획의 전반부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는 우선 자립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이것은 1)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을 증대시키고, 2) 이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농업생산의 증가를 강조했는데, 첫째 식량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게 하고, 둘째, 농가소득 향상을 통해 농촌 시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장조건을 배경으로 이 계획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시켜 생활필수품을 자급함과 동시에 소비재산업의 발전에도 도모하였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이 계획에서는 수입을 통해 공급되는 일부 기간산업(금속, 기계, 화학공업)에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아울러 수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결과·의의】**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1960년 4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 벌어진 정치적 변화에 직면하여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개발 3개년계획의 수립 과정과 그 내용은 우리 경제개발계획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 계획은 한국인 주도로 수립된 최초의 종합 경제개발계획이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등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는 노하우의 축적과 인재가 양성되었고, 통계 자료가 정비되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시대가 열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핵심어】** 산업개발위원회/경제개발7개년계획/경제개발3개년계획/부흥부/자립경제체제/국제수지 개선/중소기업 육성/수출산업 육성

**【참고문헌】**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 3개년계획』(1960);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2007);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02).

**【사진자료】** 349. 19570714 트리카 마크2 연구용 원자로 기공식에서 이승만 대통령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전시항목】**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의 토대구축

**【소항목】** 원자력연구소 설립

경제개발3개년 계획	● 원자력연구소 설립
------------	-------------

**【배경】** 국내에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는 데는 국제적 환경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미국은 1954년 8월에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력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우방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전수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1955년 12월에 국회의 인준을 받았고, 1956년 2월에 두 나라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국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더해 그것의 군사적 가능성과 외교상의 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한 것도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시행】** 국내에서 원자력에 관심은 문교부 기술교육국장 박철재 등 3명이 1955년 8월에 스위스에서 개최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1차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56년 3월에는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課)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연구생이 미국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1963년 8월말까지 무려 189명의 연구생이 해외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았다.

한편, 원자력과는 원자력원(院)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법을 만들어 195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고, 그 법은 1958년 2월에 국회를 통과(법률 제483호)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원자력원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원자력위원회, 사무총국과 원자력연구소로 구성되었다. 1958년 10월 1일에 원자력원 직제가 제정되고, 1959년 2월에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임명되면서 원자력연구소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임무는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원자로도입계획이 확정되자 1958년 11월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도입된 원자로는 General Atomic사의 100KW의 TRIGA Mark-II 연구용 원자로였다. 1959년 7월부터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로 설치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최종 설치가 완료된 것은 한참 뒤인 1962년 3월 19일이었다. 1962년 3월 30일에 원자로 가동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날은 한국 원자력시대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결과·의의】** 원자력연구소는 1969년에 완공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본격적으

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연구소였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많은 연구생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와 유학을 보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행정 경험이 일천한 당시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소의 운영 경험은 과학기술부가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핵심어】** 원자력연구소/원자력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원자력원/원자력위원회/원자로

**【참고문헌】** 한국원자력2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원자력 20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1950년대 사회 문화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 1950년대 사회문화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1950년대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서구문물이 밀려오는 등 등 급속한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6·25전쟁이라는 혼란과 전후 복구라는 시대적 상황은 사회적 가치관이나 의식에도 영향을 크게 끼쳤다. 해방 후 일본이나 중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귀국하고,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6·25전쟁이 발발하자 줄어들었던 인구는 종전 후 월남자의 증가와 사회적 안정으로 인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면 찾아오는 베이비붐이라는 인구증가 현상은 곧 이어 교육열로 이어졌다. 해방과 함께 한국어로 학생들을 교육함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미군정 시기인 1946년 9월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상승하였다.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곧 초·중·고등학교를 계속 신설하였으며, 대학의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한글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문맹률은 점점 낮아졌다. 한편으로 분단과 뒤이은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라는 혼란한 시기는 사회 전반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정치적 불안정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겹쳐 사회는 혼미한 상태였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문학, 음악, 영화 등의 문화상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을 표현하거나 불편한 현실을 잊기 위한 탈출구에 맞춰졌다. 다른 한편으로 6·25전쟁 이후 상주하게 된 미군 부대를 통해서 흘러나온 각종 서구 문물은 서구식의 생활양식을 모방하거나 새로운 문화양태를 형성하였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1950년대 사회 문화

**【전시항목】** 1950년대 사회 문화

**【소항목】** 인구 폭발

● 인구폭발	서구문물의 전면적 유입
교육의 확대	전쟁 속에서도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사회문화상	

**【정의】** 1950년대 6·25전쟁 이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로 주로 1955년부터 1965년까지의 베이비붐으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원인·배경】** 해방 전해인 194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선총독부의 인구조사 잠정 결과 남북한의 총인구는 2천 5백 91만 7천 881명이었다. 1945년 9월에 발표된 미 군정청의 「남조선 지역 및 성별 현주민구」 자료에는 1944년 5월 1일 현재 남한 인구를 1천 5백 87만 9천 110명으로 잡고 있어, 남북한 총인구의 61.3%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셈이었다. 또한 미 군정청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1945년 말 남한 인구는 1천 6백 87만 3천 명으로 추산되어, 전년에 비해 99만 4천명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1946년에는 국외동포가 귀환하고 월남자가 급증해, 전년도에 비해 무려 2백 49만 6천명이 늘어난 1천 9백 36만 9천 명이 되었다. 1947년에는 1천 9백 88만 6천, 1948년에는 2천 2만 7천 명으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인구는 출산에 따른 자연증가보다도 국외동포의 귀환과 월남자로 인한 요인이 더 컸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12월 31일 사이에 국외귀환동포는 총 122만 1천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에서 귀환한 사람이 112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월남자도 무려 96만 9천 명이나 되었다. 이 중 순수 월남자가 64만 9천여 명이나 되어 북한 공산정권 수립과 급진적인 체제개혁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전개·결과】** 6·25전쟁은 해방 후 증가하던 인구에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남북의 인구가 대략 3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가운데 사상자 수는 600만 명 이상 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남한의 경우 6·25전쟁에서 입은 인명손실이 민간인 사망 37만 3천 500명, 부상 22만 9천 652명, 실종 38만 7천 744명이며, 군인 사망은 22만 7천 748명, 부상 22만 5천 949명, 실종 9만 1천 206명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합하여 153만 5천 799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다. 즉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전에 증가하였던 인구수의 절반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6·25전쟁 기간 중 북한 지역에서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월남을 하게 되고,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자 급격히 출생률이 증가하였다. 1949년 남한 인구는 2천 18만 8천 641명이었는데, 전쟁 후인 1955년에는 2천 1백 52만 6천 374명으로 6년 간 1백 33만 7천 733명이 증가하는데 1960년 조사에서는 인구가 2천 4백 98만 9천 241명으로 증가하고, 1966년 조사 결과는 1949년보다 무려 1천만 명가량 증가한 2천 9백 15만 9천 640명으로 조사되었다. 1970년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남한의 총인구수는 1966년 조사보다 1백 72만 2천 746명이 증가한 3천 88만 2천 386명으로 조사되어 1955년부터 1965년까지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음을 통계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의의】**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 치열한 경쟁을 부추겼고, 교육열을 무섭게 팽창시켰다. 교육열과 경쟁의식, 기대의식의 상승은 인구증가와 맞물려 이농현상을 촉발시켜 도시로의 인구 유입, 산업인력 확충과 더불어 도시 빈민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였다.

**【핵심어】** 인구증가/베이비붐/6·25전쟁/출생률의 증가

**【참고문헌】** 김두섭, 『한국의 인구』(통계청, 200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사이트, [www.kosis.kr](http://www.kosis.kr); 통계청,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통계청, 1997); 김대영, 『우리나라 인구의 추계, 1960~2040』(한국개발연구원, 1975).

- 【사진자료】** 350. 19581001 서울 관수동의 개천과 판자촌  
351. 196208 모여있는 동네의 어린 아이들  
352. 19600206 영산포 지하수 개발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1950년대 사회 문화

**【전시항목】** 1950년대 사회 문화

**【소항목】** 교육의 확대

인구폭발	서구문물의 전면적 유입
● 교육의 확대	전쟁 속에서도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사회문화상	

**【정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육 인구가 늘어났으며 1953년 7월 6·25전쟁이 끝난 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1950년대에는 교육기관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원인·배경】** 해방 후 교육기회의 확대로 교육인구는 놀라울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의 비중이 커졌다. 해방 후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대학도 많이 생겨났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광복되던 1945년에 2천 937개교에 1백 63만 7천 723명이었던 학생 수가 1948년에는 3천 536개교에 2백 35만 4천 977명으로 늘어났다. 중등학교는 1947년 12월 말 현재 총 419개교였고, 학생수는 21만 6천 891명이었다. 학제는 1949년에는 6·4·2·4제로 변경되었다가 1950년부터 6·3·3·4제로 바뀌게 된다.

**【전개】** 그러나 6·25전쟁으로 학교 시설은 파괴되거나 군대에 징발당했으며, 학생과 교사는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교육은 계속되어 1951년 부산·대구·대전·전주·광주에 전시연합대학이 생겼고, 후방 도시에는 판잣집으로 만든 피난 중·고등학교가 세워졌다. 그리고 학생들은 징집과 소집이 면제된다는 법령이 발표되자 학업보다는 징집과 소집의 면제를 위해 학교로 몰려들었다. 전시수도 부산에는 서울에서 피난 온 각급 학교들이 임시학교를 개설하여 천막이나 벽돌만 둘러친 가교사에서 수업을 하는 광경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휴전 후 전쟁의 피해 등으로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았다. 각급 학교별로 학생 수는 계속 늘어갔다. 이 때문에 교실 부족현상은 심했으며, 교육시설은 아주 부실했다. 특히 국민학교가 그랬는데, 교육열이 높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도시의 경우 한 교실에 70, 80명은 보통이고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2부제·3부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높은 교육열은 1930년 77%에 이르렀던 문맹률을 1960년에는 27.9%로 떨어뜨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결과】** 교육열의 과잉은 입시경쟁으로 국민학교조차 세칭 일류학교를 탄생시켰고, 학생들로 하여금 어렸을 적부터 수험지옥에 빠지게 했다. 1950년대에는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외 유학, 특히 미국 유학이 늘어났다. 유학생들은 교육학 등 학술·문화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해외 서적도 많이 번역하였다. 1950년대 교육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도호국단과 반공교육이다.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각 학교 단위별로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였다. 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학생이 학도부장이나 대대장을 맡는 군대식 편제로 구성된 학도호국단은 멸공의식의 양양을 목표로 내걸고, '이북충진군'을 위해 군사 훈련을 받았다.

**【의의】** 교육의 확대로 말미암아 초·중등 교육을 받은 한글세대가 대규모로 탄생하였다. 한글세대 노동자, 사무원, 산업예비군의 등장은 외자의 도입과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기본 동력이 되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으로 마련된 것이다.

**【핵심어】** 교육인구/한글세대/교육열의 과잉/학도호국단

**【참고문헌】** 이선미, 「1950년대 미국유학담론과 대학문화」, 『상허학보』 25(상허학회, 2009);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인물과 사상사, 2004); 이원호, 『교육사』(박영사, 1994).

**【사진자료】** 353. 19590821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1950년대 사회 문화

**【전시항목】** 1950년대 사회 문화

**【소항목】** 사회문화상

인구폭발	서구문물의 전면적 유입
교육의 확대	전쟁 속에서도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 사회문화상	

**【정의】** 1950년대는 6·25전쟁의 애환, 미국문화의 투영으로 반공과 사회부조리와 윤리관의 변화 등 새로운 문화상이 개인의 실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문학·영화·대중가요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유부인, 재즈싱어, 맘보바지 등을 들 수 있겠다.

**【배경】** 1950년대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였다. 시장에는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상품이 가득 차고, 거리에는 고아와 거지, ‘슈사인 보이’들이 넘쳐났다. 공무원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빡’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마디로 혼미한 시대였다. 한편 자유·실존의 세태를 묘사한 이때 사회를 강타한 것이 정비석의 『자유부인』이었다. 한 성실한 대학교수 부인을 통해 그 시대상을 재미있게 그린 대중소설이었다. 『자유부인』은 피난 수도 부산생활과 환도 후의 서울생활 등을 배경으로 고급 공무원의 생활, 유한 여성들의 생활과 윤리, 정치인과 학생들의 생활이 적절하게 묘사하여 흥미한 시대상을 대변하는 본보기였다.

**【전개】** 1950년대에는 문화라고 할만한 것이 드물었는데, 그나마 영화와 대중가요가 고달픈 대중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주요 극장은 서부영화 등 미국 영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면세 조치로 1950년대 중반 이후 국산 영화가 점차 인기를 얻어갔다. 기술과 제작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1955년)이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면서 영화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1956년)은 아시아 영화제에서 최우수 희극상을 수상하였다. 1950년대 전반기를 휩쓴 반공극이나 문예물, 통속극 할 것이 대개가 그 소재는 분단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작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은 지리산을 무대로 빨치산의 사상투쟁과 이탈과정을 그렸다. 대중가요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비참 등 동시대의 민족적 비극을 노래함으로써 대중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전쟁의 비극은 트로트를 부활시켰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굳세어라 금순아」,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이 거친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피난가거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의 가

습을 올렸다. 한편 미국 팝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풍의 노래가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주한 미 8군을 순회하는 연예인들 가운데 이른바 '재즈싱어'로 불린, 한명숙·현미·최희준·신중현·서수남·윤복희 등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그리고 1955년부터 '맘보' 리듬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였고, 춤바람과 더불어 '맘보바지'와 '맘보 카라멜'을 유행시켰다. 대중적인 유행을 타고 사회전반에 맘보유행이 확산된 것이다.

**【결과·의의】** 50년대 초 6·25전쟁 중 피난시절에는 미군 모직담요를 물들여 코트로 만들고 밀수입한 벨벳(일명 빌로드)으로 지은 짧은 한복치마를 입어야 멋쟁이로 행세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모직 스카프와 함께 옷 속에 착용,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게 하는 '공갈 벨트'가 유행했다. 이 시기에는 또 다방과 서양식의 고급음식점이 많이 생겨나 음식의 상업화와 음식을 통한 사교가 시작되었다. 손님 접대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간단한 사교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큰 모임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양상이 달라지면서 서양의 식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급속히 퍼지게 되었다.

**【핵심어】** 자유부인/맘보리듬/재즈싱어/분단과 전쟁/트로트의 부활

**【참고문헌】**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김윤경, 「1950년대 미국 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비평문학』 34(한국비평문학회, 2009);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34(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사진자료】** 354. 1956 명동의 모습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1950년대 사회 문화

**【전시항목】** 1950년대 사회 문화

**【소항목】** 서구문물의 전면적 유입

인구폭발	● 서구문물의 전면적 유입
교육의 확대	전쟁 속에서도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사회문화상	

**【정의】** 1945년 8월 15일 이후 미군의 진주, 6·25전쟁 중 전통사회, 전통윤리의 파괴, 미군의 대규모 참전 등으로 인한 미국식 서구문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던 것을 말하며, 1950년대 미국의 원조물자 및 할리우드 영화의 보급으로 가속화되었다.

**【배경】** 미 군정기부터 제1공화국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서구의 민주적 사회제도와 질서·이념이 도입되면서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기 경험했던 서구문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국문화로 대표되는 서구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1950년 5월 서울 미문화관(Information Center) 개관 2주년 기념 “미문화관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What the Center Means to Me)”라는 심포지엄에서 고등학생 대표로 참석한 이화여고 학생은 “미문화관을 통해 미국식 생활양식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서구 가정’이 사용하는 예쁜 것들을 갖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힌다.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50년대 한국인에게 미국식 생활은 가전제품과 소파, 식탁,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사는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전개】** 6·25전쟁 후 미국문화의 유입으로 방송과 영화, 대중가요가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56년 AFKN-TV와 RCA-TV가 방송을 시작하고,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외국의 대중음악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됨에 따라 카우보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으며,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아리조나 카우보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및 이국 풍경을 동경하는 노래가 많아졌다. 주한 미8군 캠프촌 무대는 미국 팝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스타일의 가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5년부터 ‘맘보’ 리듬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고, ‘록큰롤’도 유행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구호제품 옷이 주류를 이루면서 미군병사들과 손잡은 이른바 양공주들이 패션을 선도하였다. 전쟁 중 원조물자로 들어온 분유가 무상 배급되면서 일부 상류층의 기호품에 지나지 않았던 우유가 일반인에게도 보급되기 시작했고, 빵이나 과자도 보편화되었다. 일반 가정에서 과자를 먹게 된 것은 전쟁 중에 초콜릿·젤리·비스

킷·캔디·껌 등이 외국군 부대로부터 흘러나오면서였다. 이어 빵과 과자의 재료인 밀가루·설탕·분유 등이 학교급식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국제연합 아동기금에서 제빵기계, 냉장고 등이 들어옴으로써 서구식 식생활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9년 통계로 볼 때 이 당시 수입된 외국영화 중 미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8.8%였고, 독일영화가 7.4%, 프랑스영화가 4.9%, 이탈리아영화가 4.4%를 차지하여 미국영화가 주로 상영되었다.

**【결과·의의】** 또한 1950년대 한국사회는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시대 동향 속에 놓이게 되고 미국화·근대화되기에 이른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정치문화가 개선되었으며, 자본주의의 문화의 개방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논리가 생활과 문화의 각 영역에 확산되었다. 당시 유입된 서구문물은 일본 식민주의의 잔재 대신 그 자리에 미국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주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사상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까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핵심어】** 미국문화/할리우드 영화/민주주의와 자본주의/서구식 식생활 문화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비평문학』 34(한국비평문학회, 2009);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인물과 사상사, 2004);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상허학보』 18(상허학회, 2006); 이봉범, 「6·25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1950년대 사회 문화

**【전시항목】** 1950년대 사회 문화

**【소항목】** 전쟁 속에서도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인구폭발	서구문물의 전면적 유입
교육의 확대	● 전쟁 속에서도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사회문화상	

**【정의】** 6·25전쟁 중 혼란한 과정 속에서도 1952년 4월과 5월, 8월에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도의회의원 선거 및 제2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 전쟁 속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지켜졌다.

**【배경】** 1950년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고,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 등으로 이승만 정부는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갔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뽑게 되어있었지만, 국회의원 대다수는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았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원했다. 국회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줄 정당의 결성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1951년 12월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약칭 족청)을 기반으로 세칭 원외자유당(후에 자유당으로 부름)을 결성했다. 같은 시기에 국회 다수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세칭 원내자유당을 결성하였다. 그 후 전쟁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도의회의원 선거를 1952년 4월과 5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에 국회의원 곽상훈 외 123명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5월에 정부는 정·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전개】**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4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해 국무위원을 임명·면직하고,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양원제로 국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한 달 후 8월 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며, 부통령으로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창당과정에서 갈라졌던 원외자유당(이범석)과 원내자유당(이갑성·김동성)이 1953년 3월 통합자유당으로 출범하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강력한 여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5년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 자유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이탈한 무소속 세력, 홍사단 계통과 가톨릭세력, 일제강점기 관료 출신 등 여러 정치세력이 결합하여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결과】**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었던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대한민국 정당역 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자유당이 의원 후보자 공천제를 채택하였고, 원내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도 후보를 공천하여 공천제 선거를 바탕으로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표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자유당이 의원 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으로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여 선거 이후의 정치구도가 자유당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반면에 무소속이 무려 67명이 당선되어 아직도 인물과 개인 중심의 선거경향이 남아 있었으며,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15명의 당선자를 내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밖에 당선자를 낸 정당·단체는 자유당을 포함해서 모두 5개였다.

**【의의】** 휴전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는 전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삼권분립이 유지되는 등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유지되었다. 특히 자유당이 창당되고, 1955년 정통야당인 민주당이 창당됨으로써 양당제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핵심어】** 자유당/민주당/정당공천제/정당정치/대통령선거

**【참고문헌】** 이봉범, 「6·25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진덕규, 『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교과서포럼, 『한국근·현대사』(기파랑, 2008); 박지향 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2(책세상, 20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선거사: 1948~1967』(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1950년대 사회문화	●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	--

1950년대 한국정치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덕목인 절차적 정당성은 실종되었으며, 절차는 단지 권력의 요구에 맞게 이용될 뿐이었다. 전쟁 중 일어났던 1952년의 발취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단순한 도구였다. 두 차례의 개헌 파동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집권이 가능해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자신의 친위조직이자 거수기 정당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야당 세력은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결집시켜 ‘범야연합전선’을 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당의 탄생은 이후 두 보수정당 우위의 양당제 체제를 형성하게 된 출발점이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언론이나 정치세력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경향신문』, 『사상계』 등은 폐간되었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은 사형을 당했다. 특히 진보당의 해체와 조봉암의 사형은 반공 우위의 정세 속에서 정당정치 자체에도 심각한 위협을 안겼다. 더군다나 혁신세력이 진보당 해체로 정치권에서 사라짐에 따라 오랫동안 한국정치는 보수 양당의 독점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선거에서 탈법, 부정이 자행되어 제1공화국하에서 치러진 대부분의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부정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민심과 정권을 괴리시켰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는 이러한 민심을 자극하였다.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는 정권이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을 탄압했으며, 곧이어 3·15마산시위와 4·19혁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한 달여간 지속된 시위는 많은 희생을 낳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제1공화국의 몰락을 이끌어냈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소항목】** 발체개헌

● 발체개헌	경향신문 정간
사사오입 개헌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민주당 탄생	3·15부정선거
진보당 사건	

**【정의】** 1952년 7월 4일 임시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과 국회의 내각제 개헌안을 국무총리 장택상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각각 절충, 발체해서 마련한 개헌안이며, 7월 7일 공포되었고,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명 ‘부산정치파동’이라고도 한다.

**【원인·배경】**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적 중도계열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 결과 무소속 의원들이 6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에는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전쟁 전부터 농지개혁, 반민특위 등을 둘러싼 국회와 이승만 대통령 간의 불화가 전쟁시기에도 계속 되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과 같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 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이 터지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정부의 정통성과 정책 집행 능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견제와 갈등의 원인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제헌헌법에 있으며, 국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본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구상을 하였다.

**【전개】**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자 야당 세력이 강한 국회에서 재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줄 정당을 결성하였다.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을 기반으로 한 자유당을 조직함과 동시에 정부는 정·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143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땃벌떼·백골단·민중자결단 등의 ‘관재 민의’를 동원하여 국회를 위협, 압박하였으며, 1952년 4월과 5월에 걸쳐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경찰력을 이용해 승리함으로써 권력지반을 공고히 하였다. 국회는 4월 17일 국회의원 123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맞서 정부는 5월 14일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정부의 개헌안을 다소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여 맞섰다. 이승만 대통령

과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26일이 되자 의원 47명을 태운 국회 통근버스를 강제로 헌병대 본부로 견인하고, '국제공산당사건'을 급조하여 11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하였다. 28일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29일 부통령 김성수는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부통령직을 사직해버렸다. 이에 지방의회의원 등 이승만을 지지하는 관제 시위대가 국회를 포위했다. 6월 21일 국회에 발췌개헌안이 상정되었다. 7월 3일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제공산당사건으로 구속시킨 의원들까지 석방하여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 군경과 관제시위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표결로 166명 출석,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며, 7월 7일 공포하였다. 그리고 15일에는 정·부통령 선거법이 통과되었으며, 7월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고 8월 5일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결과】** 발췌개헌안에 따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10일도 채 안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조봉암, 이시영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의의】** 발췌개헌은 헌정 사상 첫 번째 개헌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

**【핵심어】** 발췌개헌/대통령중심제/내각책임제/부산정치파동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정치연구회,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1』(이매진, 2005); 지병문 외, 『현대한국정치의 전개와 동학』(박영사, 1997);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사진자료】** 355. 대통령 간선제에 반대하다 연행되는 국회의원들

356. 19520703 발췌개헌안을 심의하고 있는 부산 피난국회 본회의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소항목】** 사사오입 개헌

발췌개헌	경향신문 정간
● 사사오입 개헌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민주당 탄생	3·15부정 선거
진보당 사건	

**【정의】**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11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이며,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조항을 철폐하고, 국무총리제와 국무원에 대한 신임투표제를 폐지하며, 외자 도입을 위해 경제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인·배경】**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은 종신집권을 위해서 헌법의 중임제한 조항을 철폐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각책임제 요소를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다양한 분파 및 집단이 원내자유당을 형성하고 있어서 여당을 친위 세력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개헌이 어려웠다. 종신집권을 위한 길을 열고 국회의 권한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권한 약화를 통해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려 한 것이 제2차 헌법 개정의 주된 추진 목적이었다.

**【전개】** 1953년 5월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을 위시한 자유당 내 비협조적인 세력들을 제거하고, 자유당의 주요 조직 구조도 정비하여 친위 정당으로 개편하여 개헌을 위한 준비를 다져나갔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56.2%에 해당하는 114석을 차지해서 원내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상대적으로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15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했다. 대신 무소속이 67명 당선되었다. 하지만 개헌에는 재적의원 중 2/3를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소속의원들을 영입하여 136명까지 늘였다. 개헌안은 9월 7일 135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다. 11월 20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1월 27일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총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와 가결 정족수 136명을 채우지 못하고 개헌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경무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자유당 지도부는 28일 수학적으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이 되므로 사사오입하면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 정부의 견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29일 야당이 총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국회는 개헌안부결번복가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결과】** 개헌안 통과로 초대 대통령에 국한한 중임제한 규정이 철폐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졌으며,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한층 더 집중되었다. 경제조항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대폭 수정되었으며,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하는 것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개헌안에 명시되었지만 제1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사사오입 논리를 반박했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 또한 이승만 정권을 규탄했다. 야당은 이후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서 반독재 전선을 결성해 정당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결과 민주당이 탄생했다.

**【의의】** 사사오입 개헌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었던 전반기 느슨한 권력구조를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승만-이기붕 체제로 단일하게 구축함으로써 행정부, 입법부에서 이승만 1인 지배의 독재권력구조로 강화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다만 개헌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사실은 제헌국회와 제2대 국회에서 나타났던 정당 난립 등을 통제하고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룬 일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권유지와 독재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그리고 경제체제를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수정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질서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사오입 개헌은 의미가 크다.

**【핵심어】** 사사오입 개헌/발췌개헌/자유당/제2차 헌법 개정/대통령 직선제/내각책임제/민국당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의재, 「사사오입 개헌의 뒷얘기」, 『뉴스앤뉴스』, 2004년 4월 5일; 서중석, 「이승만 후기체제의 구축-5·20 총선과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또 하나의 개헌안, 초대 대통령 종신집정 등 돌연 극비리 급속 추진」, 『동아일보』, 1954년 3월 20일.

**【사진자료】** 357. 19541127 자유당의 개헌안 가결선포에 무효를 주장하는 야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소항목】** 민주당 탄생

발체개헌	경향신문 정간
사사오입 개헌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 민주당 탄생	3·15부정선거
진보당 사건	

**【정의】** 민주당은 1954년 자유당의 사사오입 개헌 사건을 계기로 민주국민당의 보수파와 자유당의 탈당파, 흥사단의 반이승만 세력이 모여 1955년 9월 18일 창당하였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해산된 대한민국 정당이다.

**【설립배경】** 전쟁 책임론뿐만 아니라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으로 인해 야당의 도전을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8·15 기념대회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제정당인 자유당이 결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개헌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이승만 정권의 거듭된 헌정 유린과 반민주적인 정치행태에 맞선 민주국민당(민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계열은 반독재전선인 '범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거대 단일야당 결성 작업에 나섰다.

**【경과·활동사항】** 1954년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자 반이승만 의원들은 '호헌동지회'를 구성해 단일 신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신당추진운동에는 민국당, 무소속동지회 소속 의원, 과거 원내자유당 탈당파, 대한부인회, 혁신계 등이 참여하였다. 1955년 초 신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당 결성을 추진했지만 조봉암을 비롯한 혁신계의 신당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민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인 자유민주파와 모든 세력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대동파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되었다. 대립이 해소되지 않자 자유민주파를 중심으로 1955년 7월 17일 자체적으로 신당발기준비위원회를 발족, 당명을 민주당으로 정하고, 9월 19일 서울시 공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9월 20일에는 대표최고위원으로 신익희, 최고위원으로 조병옥·장면·곽상훈·백남훈, 중앙상무위원장에 성원경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21일에는 중앙상무위원과 감찰위원을 선정하였으며, 27일에는 각 부·차장을 임명하였다. 민주당의 정강은 총 5개항으로 작성되었다. 내용은 "독재주의 배격과 민주주의 실현, 자유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내각책임제의 구현, 사회정의에 입각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대중의 복리 향상, 민족문화 육성 및 세계문화의 진전에 공헌, 조국통

일과 국제질서의 확립"을 채택하였다. 민주당은 창당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주의, 장기집권, 경찰과 행정 관료의 부정부패와 반민주성을 폭로하면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나갔다. 19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에 참여해 민주당 후보 장면이 이기붕을 꺾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제3대 총선보다 33석이나 많은 79석을 얻었으며, 서울에서는 2석을 제외한 14석을 민주당이 차지함으로써 개헌 저지의 석을 확보하였다. 민주당의 성장에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자유당과 정권은 1958년 진보당을 비롯한 혁신계 정치세력과 『사상계』를 비롯한 언론을 탄압하였으며, 1958년 11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민주당은 원내외를 망라해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맞서며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4·19혁명이 촉발되었으며, 자유당 정권이 끝나게 되자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는 기존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내각책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였다. 신헌법에 기초해서 치러진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의원과 참의원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을 선출하여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

**【의의】** 1951년 자유당이 결성되고, 1955년 민주당이 등장함에 따라 한국 정치사에 두 개의 보수 양당 체제, 이른바 55년 체제가 시작되었다. 군소정당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가운데 이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등장은 의미가 크다. 한편 민주당은 반이승만, 반독재, 반자유당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결성된 정당이지만 이질적인 성격의 정치세력이 모여 설립된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는 민주당 내 신·구파 간의 파벌싸움을 낳았으며, 이후 보수야당의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였다.

**【핵심어】** 민주당/자유당/발취 개헌/사사오입 개헌/민주국민당/호헌동지회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보수 양당 체제가 시작하다: 자유당과 민주당 창당 1955」, 『키워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이매진, 2005); 이승만, 「집단안전보장 진전 회구, 큰 정당 조직할 때는 왔다」, 『동아일보』, 1951년 8월 16일 2면; 『동아일보』, 1955년 8월 24일~9월 30일.

**【사진자료】** 358.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359. 1959 민주당 창당대회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소항목】** 진보당 사건

발체개헌	경향신문 정간
사사오입 개헌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민주당 탄생	3·15부정선거
● 진보당 사건	

**【정의】** 진보당사건은 1958년 이승만 정권이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북한의 간첩들과 접촉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며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하고, 조봉암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정치탄압사건이다.

**【배경】** 조봉암은 제헌의회, 제2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초대 농림부 장관, 제2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동 이후 반독재를 기치로 하는 야당세력은 호헌동지회를 결성하였으며, 조봉암은 보수파인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로 참여가 좌절되자 1956년 1월 혁신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진보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위해 대통령 후보에 조봉암, 부통령 후보에 박기출을 선출하였다.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신익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된 조봉암은 1956년 5월 15일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210여만 표를 획득하여 5백여만 표를 획득한 이승만 정권을 긴장시켰다.

**【전개】**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의 창당대회가 열렸으며, 창당식에서는 “책임 있는 혁신정치,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을 정강으로 채택하고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1957년 8월부터 진보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던 서울시경찰국은 1958년 1월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월 12일 간첩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구실로 박기출, 윤길중 등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검거하고, 13일에는 조봉암, 김달호를 구속하였으며, 1월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2월 25일에는 정부 공보실장이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육군 특무대가 사건에 관여하여 육군 HID 공작원 양이섭이라는 인물을 연행,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조봉암에게 공작금과 지령을 전달하는 혐의를 수사한 끝에 간첩 혐의로 조봉암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1958년 1월 24일 서울지검은 조봉암 외 9명을 국가변란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하고, 평화 통일론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4월 8일에는 간첩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5월 15일 공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를 시작하였다.

**【결과】** 1심 재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해서 조봉암, 양이섭에게 징역 5년을 언도했고,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진보당 관련자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양이섭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 육군 특무대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번복된 진술을 무시하고,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도 채택하지 않은 채 조봉암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을 선고함으로써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양이섭, 조봉암의 사형을 확정하고,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7월 31일 조봉암에게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2007년 9월 27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보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 독립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는 조봉암의 재심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의】** 진보당 사건은 정적으로 부상한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한 사건이자 비인도적, 반인권적 정치 탄압 사건이다.

**【핵심어】** 진보당/조봉암/민주당/평화통일론

**【참고문헌】** 「진보당 조봉암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법원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 위반·법령 제5호 위반』 [공2011상, 508], 대법원;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역사비평사, 1999).

**【사진자료】** 360. 1958 공판정에 선 진보당 사건의 혐의자 조봉암의 1심 판결 재판정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소항목】** 경향신문 정간

발췌개헌	● 경향신문 정간
사사오입 개헌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민주당 탄생	3·15부정선거
진보당 사건	

**【정의】** 195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 조간의 무기명 칼럼 「여적(餘滴)」에 실린 글로 인해 관련자들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4월 30일 미군정 법령 제88호에 의해 『경향신문』이 폐간된 사건으로, 일명 ‘여적필화사건(餘滴筆禍事件)’이라고도 한다.

**【원인·배경】** 「경향신문」은 1946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창간한 일간지로서 1952년 5·26부산정치과동을 시작으로 발췌개헌안 통과, 1956년 장면 부통령 피습 사건, 1958년 2·4보안법과동을 거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 논조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한편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일련의 통제를 가하고 있었다.

**【발발】** 『경향신문』 폐간은 1959년 2월 4일자 단평 칼럼 ‘여적(餘滴)’에서 비롯되었다. 문제의 칼럼은 『경향신문』 2월 2일자부터 석간에 연재되고 있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글에 대한 단평이었다.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는 미국 노트르담 대학 정치학 교수 페르디난드 A. 허먼스가 1958년 봄에 발표한 글로서 『경향신문』은 이 글을 연재하면서 “인민이 미성숙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장된 다수가 출현한다면 그것은 폭정이다”고 전제하고, “투표자가 권력에 눌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수결 원칙의 근거는 붕괴되고, 진정한 다수 결정이 폭력에 의할 수 있으니 가장된 다수를 진정한 다수로 전환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이며 한국의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라는 글을 써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승만을 비판하였다.

**【전개】** 칼럼이 조간에 나간 뒤 2월 4일 서울 시경에서 편집국장을 연행하여 8시간에 걸친 심문을 하고 다음날인 2월 5일 다시 『경향신문』에 ‘국헌문란선동’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여적」 원고를 비롯하여 사설, 논문 등의 원고 40여 점을 압수했다. 『경향신문』 또한 지면으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을 감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6일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경향신문의 논설위원을 겸하고 있던 「여적」의 필자 주요한이 국회 기자실에

서 자신이 쓴 글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필자 주요한을 내란 및 예비음모 선전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 처결을 보류하자 2월 28일 다른 기사와 논설을 문체 삼아 허위 사실 보도와 여적을 통한 폭력 선동과 선거제도 부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두 명의 기자를 구속 기소, 기소유예하고,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미국 정부와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은 4월 30일 미군정법령 제88호 위반을 들어 『경향신문』에 폐간 명령을 내렸다.

**【결과】** 6월 23일 『경향신문』은 폐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복간될 수 있었으나 정부는 다시 정간 처분을 통고하였다. 『경향신문』은 다시 대법원에 불복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1960년 1월 헌법위원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이 발발하고,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나오자 대법원은 경향신문사건의 행정처분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폐간된 지 361일 만에 『경향신문』은 지령 4327호로 다시 복간되었으며, 이날 복간 첫 호 1면 제목에 「반독재혁명은 개가를 올리다-국회, 이 대통령의 하야를 결의」를 달았다. 그리고 1960년 9월 25일 검찰은 한창우 사장과 주요한 논설위원의 공소를 취하하였다.

**【의의】** 해방 이후 최대 언론탄압 사건이면서, 다수의 민의가 왜곡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사건이다. 「여적」에서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때 폭력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4·19혁명을 통해 실현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향신문』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핵심어】** 경향신문/여적/다수결/언론 탄압

**【참고문헌】** 「반독재혁명은 개가를 올리다, 국회, 이 대통령의 하야를 결의」, 『경향신문』 1960년 4월 27일; 김주언, 「권력의 희생양 된 경향과 민족일보」, 『미디어 오늘』, 2005년 6월 29일; 「[지령 20000호 특집] 폐간→복간→강제매각→독립언론 ‘격랑의 기록」, 『경향신문』 2009년 10월 29일.

**【사진자료】** 361. 19590627 경향신문의 회사기 계양식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소항목】**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발췌개헌	경향신문 정간
사사오입 개헌	●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민주당 탄생	3·15부정 선거
진보당 사건	

**【정의】** 1960년 3월 15일 직접선거로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선출한 선거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이 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결국 무효처리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제4대 대통령 선거는 4·19혁명 이후 1960년 8월 12일 새로이 구성된 민의원·참의원에서 간접선거로 치러졌다.

**【배경】**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와 같이 야당이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개헌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당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회·노총과 같은 외곽단체와 국영기업체 등의 간부를 열성당원으로 교체하려고 하였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과 언론보도 제한을 두었다. 그리고 진보당을 탄압함으로써 혁신세력이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선거공영제라는 미명하에 선거운동원 제한, 호별 방문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50만환 기탁금 제도를 신설해 혁신계나 무소속 출마를 어렵게 만들었다. 선거 당일에는 각종 관권, 탈법 선거가 자행되었으나 선거 결과는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하여 개헌의식 확보가 좌절되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도시에서 패배함으로써 1960년 정·부통령 선거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전개】** 자유당은 1958년 12월 24일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진보당에 대응해 구상된 것이지만 1958년 언론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선거제로 되어 있던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동·이장까지 임명제로 개정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방 공무원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1960년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으며, 『사상계』나 『동아일보』 등은 기사를 문제 삼아 기자와 필자를 구속시켰다. 이렇게 하고도 불안한 자유당은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야당에게 내각책임제 개헌과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장·차관과 선거 주무 부처인 내무부의 고급 관리, 서울시와 각도 경찰국장을 교체하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준비했다. 1960년 2월 5일 자유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2월 7일 조병옥과 장면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

**【결과】** 각종 부정과 탈법적인 선거가 자행되며 치러진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직전 사망한 관계로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이승만 혼자 단독후보로 나와 당선되었다.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과 경합을 벌여 79.2%라는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의의】**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은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무시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불법과 탈법, 관권, 정치폭력 등을 동원하여 자유당 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하였으나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4·19혁명을 촉발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의 몰락을 재촉했다.

**【핵심어】**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4·19혁명/제4대 민의원 선거

**【참고문헌】**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역사비평사, 2008); 한국정치연구회,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1(이매진, 2005);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선거와 정당정치에의 위협

**【소항목】** 3·15부정선거

발췌개헌	경향신문 정간
사사오입 개헌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민주당 탄생	● 3·15부정선거
진보당 사건	

**【정의】** 3·15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각종 투개표 부정·불법행위와 관권 개입 등으로 얼룩져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무효 처리된 선거이다.

**【배경】**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무장관인 내무장관에 당시 43세의 최인규를 임명하였다. 1959년 6월 29일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1960년 5월로 예상되는 선거 시기를 3월로 앞당기자는 조기선거론을 들고 나왔다. 최인규 내무장관은 1959년 3월 27일 총경급 인사를 단행하고, 각 도 경찰국장도 모두 바꾸는 대폭적인 인사를 실시했다. 5월 13일에는 7개 도지사를 대부분 정치인들로 바꿨으며, 전국 각도·시·읍·면 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해 선거운동을 벌이게 했다. 민주당은 신구파간의 분쟁으로 11월 26일에 가서야 후보 지명대회를 통해 대통령에 조병옥, 부통령에 장면을 지명하였다. 최인규 내무장관은 1959년 11월 말부터 1960년 2월 초까지 수시로 각 시도 경찰국장, 사찰과장 및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회동하여 선거대책회의를 갖고 이승만의 당선을 위한 방법을 숙의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60년 2월 13일 정·부통령은 동일 정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부정선거 계획은 3월 3일 민주당이 정부의 선거대책 비밀 공문을 폭로했지만 3월 7일 내무차관과 치안국장이 비밀리에 열린 전국경찰국장회의에 참석하여 부정선거 계획을 기존 방침대로 진행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전개】**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상당수의 지역에서 유권자의 4할을 미리 투표함에 집어넣는 ‘4할 사전 투표’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유권자들을 3인조, 9인조로 편성해 투표소까지 가게 해서 투표를 하게 했다. 투표소 주변은 자유당원등이 완장을 차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기표소 앞에서도 구멍을 뚫어놓고 바깥에서 경찰이나 자유당원이 감시하게 했

다. 대리투표도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쫓겨나 참관조차 할 수가 없었다. 개표 도중 전기를 끄고 개표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여당표 다발 중간에 야당표나 무효표를 끼워 넣는 방법도 사용하며 개표부정을 저질렀다. 마산과 경남의 민주당 지부에서는 일찍이 선거 포기와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오후 4시 30분에 3·15선거는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행위라 규정짓고 불법·무효임을 선언했다.

**【결과】** 개표를 시작하면서 자유당은 95% 이상 득표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일선에 감표를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승만이 유효투표수의 88.7%, 이기붕이 유효투표수의 79% 득표한 것으로 나왔다. 부정선거의 후유증은 바로 당일 표출되었다. 마산에서는 민주당원을 비롯한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는 4·19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허정 과도내각에 의해 선거가 무효로 선언되었다.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최인규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체포되었으며, 최인규를 비롯한 일부는 5·16군사정변 이후 사형을 언도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의의】**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권력욕과 장기 집권을 위해 민주적인 선거의 4대원칙인 비밀·직접·평등·보통선거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며, 4·19혁명으로 나타났다. 3·15부정선거는 제1공화국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핵심어】** 3·15부정선거/4·19혁명/최인규/이승만/이기붕

**【참고문헌】**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역사비평사, 2008); 한국정치연구회,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1(이매진, 2005);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사진자료】** 362. 19600315 민주당 부정 조기 선거 규탄 대회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4·19혁명

**【소항목】** 마산 3·15의거

● 마산 3·15의거	4·19혁명
-------------	--------

**【정의】** 3·15마산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3·15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시민, 학생이 들고 일어난 민주주의거이며, 3월 15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2차 마산의거는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4·19혁명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배경】** 3·15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경북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2·28의거가 일어났다. 2·28의거는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횡포에 맞선 첫 번째 항거였다. 대구에서 시작된 시위는 서울, 대전, 수원, 충주, 부산, 광주, 포항, 인천, 원주 등지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정치권이나 대학생, 기성세대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반독재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전개】** 마산에서는 3월 15일 투표가 개시되면서 민주당 참관인들이 투표소에 입장을 저지당했다. 투표도 하기 전에 사전투표를 한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3인조·9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무더기 투표 등의 불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자 민주당 마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선거 포기과 무효를 선언했다. 오후 3시 15분경 민주당 정남규 도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이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으나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이 연행에 대해 항의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다. 저녁 7시 20분경에 3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은 남성동 파출소를 점거, 파괴하였다. 저녁 8시가 되자 북마산파출소에 진출한 군중들을 향해 무장경찰이 발포하자 선두에 있던 시위학생들이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에 성난 군중은 북마산파출소를 방화하고, 자유당 국회의원 허운수의 집을 파괴하였다. 당국은 시위를 적색분자의 소행으로 호도하였으며, 이튿날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희생자의 호주머니에 불온편지를 집어넣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였으며, 날조된 증언을 통해 공산당이 배후라고 호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진상조사단이 나서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공표하기에 이르자 내무장관, 차관, 치안국장이 사표를 냈으며, 발포혐의가 있는 경찰관을 구속하였다.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마산상고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에서는 제2차 봉기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오후 7시경 마산경찰서를 점거하고, 마산시청과 일부 파출소를 파괴했으며 이 와중에 경찰이 발포하여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1차 마산의거가 있던 뒤 소강상태에 있던 정국은 2차 마산의거를 겪자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시 부산, 창녕, 인천, 청주, 진해 등지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일제히 시위에 나서 마산사건을 일으킨 당국을 거세게 규탄하였으며, 관망하고 있던 대학생들까지 시위대열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결과】** 두 차례에 걸친 마산의거는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1, 2차 의거에서 경찰의 총탄에 희생된 사람이 김주열을 비롯해 무려 14명에 달했으며, 중경상자와 검거된 사람이 몇 백 명에 이르렀다. 마산의거가 공산당의 짓이라고 발표했던 정부는 이후 언론과 국회진상조사단의 노력과 여론으로 최인규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치안국장을 대기발령하였으며, 발포살인경관으로 경찰관 5명을 입건하여 의법처리했다. 그리고 15일 발표명령을 내렸던 박종포 마산경찰서 경비주임은 홍진기 내무장관 등 6명과 함께 4·19혁명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8월 희생자 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2010년 마산의거기념일을 정식 국가기념일로 공포하였다.

**【의의】** 3·15마산의거는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연장하고 독재를 강화하려는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이승만-자유당 독재의 종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4월 11일 마산에서 일어난 제2차 봉기는 4·19혁명에까지 이어지면서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핵심어】** 3·15부정선거/3·15 마산의거/4·19혁명/김주열/민주당/자유당/이승만

**【참고문헌】** 『마산시사』, 창원시 홈페이지(<http://sis.masan.go.kr/>);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마산사건 국회조위 결렬」, 『동아일보』 1960년 4월 11일.

**【사진자료】** 363. 1960 3.15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

364. 19600411 마산 중앙동 해안에 떠오른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의 시체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전시항목】** 4·19혁명

**【소항목】** 4·19혁명

마산 3·15의거	● 4·19혁명
-----------	----------

**【정의】** 4·19혁명 또는 4월 혁명은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투개표 부정을 저지르자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되어 이승만-자유당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혁명이다.

**【배경】**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가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3월 15일 선거일에는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 시민이 경찰의 발포로 희생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4월 11일에는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다. 4월 18일이 되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3천 명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봉화를 높이 들자”는 총궐기 선언문을 낭독하고 마산사건 책임자 처단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교문을 나서 세종로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오후 6시 40분경 연좌를 풀고 귀갓길에 오를 때 갑자기 반공청년단이라는 폭력배들에 의해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전개】** 4월 19일을 행동일로 정하고 있던 서울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은 당일이 되자 서울대, 동국대를 필두로 해서 여러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일제히 국회의사당 앞으로 집결하였으며, 뒤를 이어 초중고등학생들과 시민들도 합류해 오후 2시경에는 순식간에 20만 명이 모였다. 시위대는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 독재정권 타도, 이승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이승만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효자동 경무대 앞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 최후 저지선에 이르자 오후 1시 40분경 경찰이 발포하기 시작해서 ‘피의 화요일’이 시작되었다. 당국은 오후 3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군대를 동원했다. 경찰의 발포와 희생자가 속출하자 분노한 시위대는 서울 전역에서 파출소를 파괴하고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에 불을 질렀다. 이날 부산에서는 경찰의 총격으로 19명이 희생되었고, 광주에서는 8명이 총격으로 쓰러졌다. 4월 20일 대통령 담화와 21일 국무위원 일괄 사표가 이어졌으며, 4월 24일에는 부통령 당선 사퇴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이기붕의 성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시국수습 방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연이은 시국수습안에는 발표와 부정선거 책임 소재, 선거 취소와 재선거, 개헌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25일 고려대, 서울대 등의 교수단이 학생시위를 불의부정에 항거한 민족정기의 발로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에 나서자 학생들까지 가세해서 순식간에 4, 5만 명으로 불어났다. 미국무부 장관이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각서를 보냈으며, 주한미국대사가 학생대표 면담과 재선거 실시 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병로를 비롯한 재야 원로들도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부정선거의 재실시, 개헌을 요구하였다.

**【결과】** 26일 오전 10시 20분경 시민대표와 면담을 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부정선거의 재실시, 내각책임제 개헌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9일에는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던 최인규와 국무위원, 자유당 간부들, 그리고 발표책임자인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이 구속되었다. 5월 29일 아침 이승만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수석국무위원이었던 외무장관 허정의 과도내각이 출범했다. 4·19혁명은 독재권력을 종식시키고, 내각책임제 개헌과 더불어 총선거를 거쳐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 4·19혁명을 통해 희생자는 186명에 달했으며, 6,02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의】** 4·19혁명은 부정선거가 원인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제1공화국 내내 누적되어 온 부정부패와 정권의 반민주주의적인 폭거에 대한 항거이자 국민적 분노가 집약되어 발생한 의거이다. 시위에는 연령, 계층,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참가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로서 이후 한국민주화운동에서 학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핵심어】** 4·19혁명/부정선거/피의 화요일/이승만/이기봉/자유당

**【참고문헌】**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1(돌베개, 2010).

**【사진자료】** 365. 196004 대학교수단 시위현장

366. 196004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학생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농지개혁, 경제개발계획, 과학기술의 토대	민주주의의 시련, 부정선거와 4·19혁명
1950년대 사회문화	●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했다. 이에 따라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였다. 3·15 정·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되었으며,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1960년 6월 15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제3차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구성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정부수반이 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대폭 향상되었으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다. 헌법 공포 뒤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양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장면 정부는 경제제일주의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하였다. 하지만 4월 혁명을 완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다. 부정선거 책임자의 처리, 부정축재자, 반민주행위자 처벌 문제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지지부진한 혁명과업 완수에 분노한 시위대에 국회가 점거당하기도 했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 억눌렸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내 신·구파 간의 대립은 갈수록 심해져서 결국 민주당 구파가 분당해서 신민당을 창당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군부는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부정부패 일소와 낡은 정치 타파를 주장하며 군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을 장악하였다. 이후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3년 중반까지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민정 이양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내각책임제 개헌과 민주화운동

**【소항목】** 3차 헌법 개정

● 3차 헌법 개정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4·19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장면정부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정의】** 1961년 4·19혁명 후 국회에 의해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하여 개정된 헌법으로 우리 역사 상 최초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1961년 6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어 6월 15일 가결되었다.

**【배경】**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등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며,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되고, 4월 11일에는 시위에 참여했던 고교생 김주열이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의 시체로 마산 앞 바다에 떠오르면서, 이승만 독재에 반대해 국민들의 시위는 4·19혁명으로 발전되었다. 4월 18일 서울에서 대규모 반독재시위가 발생하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한 대처에 나섰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결국 4월 24일에는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그치지 않은데다, 25일에는 대학교수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26일 이승만은 하야할 의사를 밝히고, 27일에는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개】** 1960년 4월 27일 이승만의 대통령 사퇴로 허정 당시 외무부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총선거로 새 정부 구성 때까지 과도정부가 된 허정정권은 우선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승만 정권의 각료들과 자유당 간부들을 구속하고, 부정축재자의 자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4·19혁명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한편 자유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던 국회에서는 비상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3·15 정·부통령 선거 무효, 내각책임제 개헌 단행, 개헌 통과 후 민의원 총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여론 일반은 국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했으나 이른바 선개헌, 후해산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 결과 국회는 개헌을 위한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후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

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결과】** 제3차 헌법 개정은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으로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의 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된다(제53조). 실질적 행정권은 국무원(내각)에 속하고, 내각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제69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갖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의】**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은 이전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지명권, 계엄선포거부권, 정부의 정당소추에 대한 동의권 등이 있을 뿐이었다.

**【핵심어】** 의원내각제/합법적 개헌/자유권의 강화/이승만의 하야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정만희, 「韓國憲法上 政府形態의 變遷」,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2007);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정종섭, 『대한민국헌법』(금붕어, 2007); 박종흡, 『대한민국 국회 60년사: 1948~2008』(국회사무처, 2008).

**【사진자료】** 367. 19600615 관보 제2602호 “헌법개정안”

368. 19600615 개헌에 축하하는 시민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내각책임제 개헌과 민주화운동

**【소항목】**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3차 헌법 개정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4·19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장면정부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정의】** 4년 임기의 제5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0년 7월 29일 하원의원 격인 민의원과 상원의원격인 참의원을 뽑는 양원제 선거였으며, 신·구파 대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배경】** 4·19혁명 후 1960년 6월 15일에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헌법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하여 같은 해 6월 25일에 개정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민의원이 해산되고 과도정부의 관리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참의원 선거는 1952년 7월 7일에 공포된 개정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의 미비로 말미암아 제3대와 제4대 국회는 민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제5대 총선으로 민·참 양원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었다. 제헌 이래 최초로 시행된 참의원 의원선거에서 선거구는 서울시와 도 단위로 의원정수를 2명에서 8명으로 하여 정원을 58명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로 하였다. 내각책임제 정치를 구현할 총선 실시일은 7월 29일로 정해졌다. 이 총선에서는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탄압받았던 혁신계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큰 관심을 끌었다.

**【전개】** 집권당으로 확정적인 민주당은 233개 선거구 가운데 민의원에 227명과 참의원에 정원 58명을 모두 공천하려 했으나 신·구파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신파 공천 선거구에 구파가 대항후보를 내고, 구파 공천 선거구에 신파가 대항 후보를 공천한 곳이 110여 개 선거구나 되었다. 몰락의 길에 들어선 자유당은 공식적인 공천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자유당으로 출마한 사람은 민의원이 54명, 참의원이 11명이었다. 정당별 입후보상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하여 14개 정당·사회단체가 후보를 출마시켰다. 무소속은 입후보자 총수의 64.4%에 해당하는 1,010명으로 4·19혁명 직후의 정치 과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모두 305명이 입후보하여 전체의 19.55%를 차지했다. 이 선거에서 전체경쟁률은 의원정수 233명에 1,56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참의원 입후보자수는 201명으로 평균경쟁률은 3.5 대 1이

었다. 7·29총선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졌고, 혁신계의 선거 참여로 관심을 모았으나, 정책 대결은 기대 밖이었다. 사회정책에서 민주당이 혁신계와 비슷한 정책을 제시해 혁신계와 민주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사회대중당이 그때까지의 모든 정치 흑막을 밝히고 부정선거법 처벌과 부정축재자 재산회수를 주장한 것 정도가 민주당 정책과 대비되었다.

**【결과】**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명이 당선되어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무소속도 49명이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의 신·구과 공천연합에서 낙천된 후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의석을 석권한 선거였으며, 자유당은 단 2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의원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58명에 31명이 당선되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무소속은 20명 당선되었으며, 자유당은 단 4석을 얻는 데 그쳐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선자를 낸 정당·단체는 민주당을 포함하여 6개에 달했다.

**【의의】** 제5대 총선은 대한민국 국회사상 처음으로 양원제를 구성하는 선거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결과 민주당의 절대다수의 의석을 석권하여 집권당이 되었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 위축되었던 혁신계 정치세력이 비록 5명에 불과한 인원이었지만, 다시 정계의 표면에 나타났다는 의미를 갖는다.

**【핵심어】** 양원제/5대 국회의원 선거/민·참의원/민주당/혁신계의 등장

**【참고문헌】** 박종흡, 『대한민국 국회 60년사: 1948~2008』(국회사무처, 2008); 이병규, 「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공법학연구』 제11집 제2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전상숙, 「4·19와 장면정부의 수립」,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집 1호(2010).

**【사진자료】** 369. 19600207 정·부통령 후보 등록모습  
370. 195605 민주당 후보의 선거구호 운동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내각책임제 개헌과 민주화운동

**【소항목】** 장면정부

3차 헌법 개정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4·19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 장면정부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정의】** 장면정부는 1960년 6월 15일부터 1962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국으로 당시 총리였던 장면의 이름을 따 장면정부로 불린다.

**【배경】**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는 6주 후인 1960년 6월 10일 새 헌법을 상정하고,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8월 12일 국회 선거를 통해 대통령 윤보선을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당 구파이자 한국민주당 출신이었던 윤보선은 같은 구파 출신의 김도연을 총리로 지명하려 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신파가 집단 반발하였으며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반대하여 김도연은 낙마했다. 그 뒤 8월 18일 2차로 지명한 민주당 신파의 장면이 총리로 당선됨으로서 제2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로서 장면정부가 출범하였다.

**【전개】** 장면정부는 민주당 내 파벌 갈등으로 내각만 총 4차례 구성하는 등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1차 내각에서 신파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다가 구파 측의 반발로 60년 9월 12일 구파의원 5명이 참가한 제2차 내각을 구성하였다. 게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 구파는 분당을 하겠다며 신파와 결별을 선언하고 신민당을 결성했다. 그 뒤에도 민주당은 신평회 중심의 소장파와 주류인 노장파로 나뉘어 파쟁이 끊이지 않았다. 신평회 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3차 내각을 구성(1961.1.30)했으나 역시 당내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다시 제4차 내각을 구성하여(1961.5.3)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1960년 12월 장면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에 걸쳐 면의원과 면장에서부터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였다.

**【결과】**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학생층과 일반 민중, 그리고 언론 까지도 급격한 정치·사회·경제면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활발한 개혁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면정부는 보수적 인사로 구성되어 각각의 시민사회의 요구에 소극적이었으며, 파벌 간의 갈등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정책적 실행이 원활하지 않아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었다. 특히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4·19 발포 책임자 처벌 문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혁신계 정치 세력과 학생층이 앞장선 민족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데모규제법'과 '반공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처하는 등 자유당 정권 때 못지않은 보수적 성향을 띄면서 4·19혁명의 이념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 후 장면정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 김종필 중령 등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한 군사쿠데타인 5·16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의의】** 장면정부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의원내각제 체제였으나, 4·19혁명 이후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신·구파 갈등과 같은 정쟁에만 몰두함으로써 정치 지도력을 상실했고,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붕괴되었다.

**【핵심어】** 장면/신·구파 갈등/민족통일운동/데모규제법/반공법/급격한 개혁요구

**【참고문헌】**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2001); 전상숙, 「4·19와 장면 정부의 수립」,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집 1호(2010); 오승용,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범우사, 1999); 백영철,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나남, 1996).

**【사진자료】** 371. 196010 제2공화국 출범 경축식 장면,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내외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내각책임제 개헌과 민주화운동

**【소항목】**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민국당계, 흥사단계, 총리 선출 갈등)

3차 헌법 개정	●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4·19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장면정부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정의】** 1955년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반발한 야권의 다양한 세력이 연합하여 창당한 민주당의 내부 분파 갈등을 말하며, 주로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제2공화국 집권 기간 내내 갈등을 계속하였다.

**【배경】** 1954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자유당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자유당은 사사오입(반올림)이라는 논리를 동원하여 부결선포를 번복하여 법안을 가결시켰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감행하려는 자유당에 반발하여 1955년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 자유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이탈한 무소속 세력, 흥사단 계통과 가톨릭세력, 일제강점기 관료 출신 등 여러 정치세력이 결합하여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전개】** 민주당은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으로 이어진 지주계급과 일제협력자, 여기에 일부 독립운동가 출신과 종교인들이 참여한 연합세력이었다. 민주당은 창당 전에는 전향 좌익 및 독재협력자를 배제하자는 ‘자유민주파’와 범야세력의 총결집을 주장하는 ‘민주대동파’로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민주당은 ‘자유민주파’만으로 창당을 하게 되었고, 당시 원내 의석은 통합야당을 표방하였음에도 33석에 불과하여 40석이었던 무소속보다 작은 정당이었다. 이렇게 창당 전부터 불협화음을 보였던 민주당은 창당 초기부터 지주세력 중심인 민주국민당계의 구파와 가톨릭계 및 일제관료 출신으로 이루어진 신파로 크게 양분되었다. 구파는 한민당에 뿌리를 둔 신익희·조병옥·윤보선·유진산이 중심인물이었으며, 구파의 대표성은 김성수 사후 신익희가 가지고 있었다. 반면 신파는 장면을 지도자로 하여 정일형·주요한의 흥사단계, 오위영·김영선·이상철의 원내자유당계, 현석호·이태용의 자유당 탈당파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한 마디로 구파는 한민당에 뿌리를 둔 ‘구세력’이고 신파는 이를 제외한 새로 야당에 가입한 ‘신세력’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구파는 대부분 지주집안에 독립운동가나 지사형이었고, 신파는 관료·법관·금융계 출신의 전문가들이 주류였다.

**【결과】** 4·19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1960년 7월 29일에 있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이는 총리선출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민·참의원 합동회의는 8월 12일 구파의 영수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약속대로 총리는 신파의 영수 장면을 지명토록 하였다. 그러나 윤보선이 자파의 부영수격인 김도연을 지명하면서 신구파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합동회의에서 신파측이 담합하여 김도연의 인준을 거부하자 2차로 지명된 장면이 간신히 인준을 받아 제2공화국의 집권은 신파 쪽으로 돌아갔다. 신구파 간의 갈등은 제2공화국 제1차 내각을 구성하면서도 표면화되었다. 장 총리는 내각 각료를 구파 출신 1명, 무소속 2명을 제외하고 신파일색으로 임명함으로써 내부대립을 격화시켰다. 구파 측이 크게 반발하자 국무위원 몇 자리를 할애했지만 구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했다. 이로 인해 신·구파는 갈라서게 되고 구파는 이해 10월 18일 신민당을 창당함으로써 신·구파의 알력은 분당 사태로 결말나고 말았다.

**【의의】** 장면의 민주당 정권은 신·구파 분쟁·노장파와 소장파의 대립 등 당내 파벌싸움과 무능으로 9개월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3차례나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할 만큼 혼란상을 드러냈다. 결국 민주당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의 대가로 집권하고서도 분파,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5·16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핵심어】** 민주당/민국당계/흥사단계/신·구파/한민당/원내자유당계/자유당탈당파

**【참고문헌】**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범우사, 199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을유문화사, 1992); 백영철,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나남, 1996).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내각책임제 개헌과 민주화운동

**【소항목】** 4·19혁명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3차 헌법 개정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 4·19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장면정부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정의】**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개정된 헌법에서 자유권이 강화되는 등 자유를 쟁취하자,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진보적 사회운동이 분출하였지만 정치적으로 취약한 장면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배경】** 4·19혁명 이후 한국사회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독재정권하에서 억눌렸던 기대와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계층이 나서게 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되어갔다. ‘데모로 해가 뜨고 데모로 해가 진다’고들 말해질 만큼 많은 데모가 일어났고, 그중에는 현재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데모가 모두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부분은 자유당 독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진보적 사회운동이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전개】** 북진통일이 이승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론이었던 시절,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사형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점차 통일운동도 활발해졌다. 학생과 혁신세력이 중심이 된 통일운동은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으로 대표되는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냉전체제 아래서 군부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우려감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학생운동은 ‘국민계몽운동’ 및 ‘신생활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학생들은 농촌계몽운동, 국민신생활운동, 외래상품 배격운동, 선거계몽운동 등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학생들이 양담배를 불사르는 ‘애국적 행위’는 판매상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초래하였으며, 관용차 승차단속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었다. 4·19혁명 이후 노동운동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어용 대한노총의 테두리를 깨고 전국적인 노동단체를 결성하려는 시도로 진행되었다.

**【결과】**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학생운동이 활발해지자, 장면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반

공국시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절 보안법 개정에 반대하여 극한투쟁을 벌였던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자 자유당과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 한 것이다. 이 두 법은 추진단계부터 심각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제정에 실패하였다. 민주당 정권은 초기 출발부터 신·구파의 정쟁을 보여주었고 미온적인 과거청산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했으며 중석파동, 인사행정의 부패,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의의】** 이승만 정권 때 잘못되었던 것, 억울했던 것과 관련된 분노와 불만, 항의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수많은 시위가 있었고, 민주당 장면정부는 혼란했던 정국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내부정쟁과 무능·부패, 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군부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주었다.

**【핵심어】** 통일운동/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신생활운동/반공법, 데모규제법

**【참고문헌】**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인물과 사상사, 2004);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범우사, 1999); 오승용,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사진자료】** 372. 1960 4.19 부상학생 위안회, 장 면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내각책임제 개헌과 민주화운동

**【소항목】**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3차 헌법 개정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제2공화국 국회의원 선거	4·19 이후 정국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장면정부	● 군내 소장파 정군운동

**【정의】** 1953년 6·25전쟁이 끝난 뒤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군부가 정치에 심하게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자, 1960년 5월 8일 김종필을 중심으로 육사 8기생이 주도한 자체 군 정화활동이다.

**【배경】** 1960년 8월 27일 장면 총리는 시정연설 마지막 항목에서 “경제건설과의 균형상 과중한 국방비를 줄이고자 감군을 하겠으며 이에 대비해 증장비를 도입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군기를 확립하고 일부에서 있었던 부패를 숙청하는 동시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군내 파벌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장총리가 제시한 군 관련 정책의 큰 줄기는 ‘감군’과 ‘개혁’이었다. 4월 혁명이 일어난 뒤 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다른 어느 분야에 관한 것 못지않게 높았다.

**【전개】** 60년 5월 8일 김종필 등 육사 8기생인 중령 8명이 정군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으고 1. 3·15부정선거를 방조한 군 장성들의 책임 추궁, 2. 부정 축재한 장성 처단, 3. 무능·파렴치한 지휘관 제거, 4. 파벌 요인 제거와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5. 군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정했다. 이들은 연판장을 돌려 군내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지만 즉시 발각돼 김종필·최준명·김형욱·육창호·석창희 등 5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송요찬 당시 참모총장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이들을 바로 석방하고 참모총장 직에서 물러났다. 송요찬의 후임으로는 역시 정군대상으로 꼽히는 최영희 중장이 임명됐다. 장면정부 출범 후 영관급 장교들의 정군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9월 10일 김종필을 위시한 중령 11명이 현석호 국방장관을 방문해 전 군을 상대로 정군을 단행할 것을 공식으로 청원했다. 현 장관도 필요한 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11명은 그날 저녁 충무장이라는 음식점에서 쿠데타를 결의했다. 이것이 바로 5·16군사정변의 역사의 단초가 되는 이른바 ‘충무장 결의’였다. 이틀 뒤 국방장관이 현석호에서 민주당 구파인 권중돈으로 바뀌자 정군을 건의한 11명은 헌병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권 장관은 정화조치의 첫 단계로

3·15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재자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과】** 9월 20일 합참의장 최영희의 초청으로 방문한 미 국방부 군원국장인 파머 대장이 한국을 떠나면서 정군에 반대하는 서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은 “한국군 고위 장성들이 최근의 사태에 큰 불안과 초조를 느끼니 더 이상 조직을 흔들어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말자.”는 내용이었다. 이 발언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즉각 국방장관 현석호는 파머의 발언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였고, 육군 참모총장 최경록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이틀 뒤 최경록은 “사대사상에 젖은 일부 몰지각한 고급 장성들이 자신의 연명책에 급급한 나머지 왜곡된 정보를 외국 장성에게 제공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들은 군대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된다. 9월 24일에는 육사 7·9·10기 대표 16명이 최영희 합참의장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하극상 사건’으로 김종필·석정선 두 중령이 예편당하고 배후로 지목된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서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되었다. 그리고 10월 3일 매그루더와 미 대리대사 마샬 그린의 장면을 방문하였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장면은 11월 중순 각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정군완료를 선언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의의】** 군정화 요구에 장면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영관급 장교들의 군정화 운동은 쿠데타 계획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핵심어】** 정군운동/김종필/총무장 결의/하극상 사건

**【참고문헌】**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 편』(인물과 사상사 2004);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범우사, 1999); 홍득표, 「한국의 정치변동: 군의 탈정치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한국정치학회, 1995).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5·16군사정변

**【소항목】** 5·16군사정변

● 5·16군사정변	대통령선거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제3공화국 출범

**【정의】** 5·16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

**【배경】** 5·16군사정변은 군 내부를 정화하려는 정군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한국 군대의 특성상 단기교육으로 수료한 육사 7기까지는 진급이 빨랐다. 빠르면 20대 후반에 별을 달기도 했고, 30대에 별 두셋을 다는 것은 예사였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았던 육사 8기생부터 진급이 지연되었다. 또 장성들 가운데에는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부패한 군인이 많았다. 이 때문에 1960년 5월 김종필 중령 등 8기생 여덟 명이 정군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정군운동 논의 과정에서 쿠데타 모의가 시작되었다. 4·19가 일어난 지 5개월 만인 9월 10일에 김종필 등은 현석호 국방장관에게 정군 건의를 하려다가 좌절된 후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합의를 보고 조직까지 결정했다. 이들은 박정희 소장을 지도자로 추대했다. 첫 번째 쿠데타 거사는 1961년 4월 19일이었으나 격렬한 시위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시 5월 12일을 계획하였으나, 결국 5월 16일 거사를 하였다.

**【발발】** 1961년 5월 16일 0시 15분경 박정희 소장 일행이 지휘소로 정한 서울 제6관구사령부에 도착하면서 쿠데타는 시작되었다. 얼마 후 해병대가 김포가도를 통해 서울로 전진해왔다. 제6군단 포병대 및 공수특전단도 출동했다. 해병 제2중대는 한강대교에서 헌병 제7중대와 부닥쳐 교전 끝에 저지선을 뚫었다. 새벽 3시 40분경 제6군단 포병대가 삼각지 육군본부에 진입했고, 4시 넘어 해병대와 공수단이 시내에 진입했다. 쿠데타군 병력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600명쯤 되었다.

**【전개】** 시내에 들어온 공수단 1개 소대는 방송국을 장악하였고, 해병대는 치안국과 시청으로, 해병 1개 수색소대는 중앙전신국을 점령하였다. 5시경 중앙방송국에서 '혁명공약'을

알리는 방송이 처음 송출되었고, 곧이어 같은 내용의 전단 35만여 장이 뿌려졌다. 그리고 5월 16일 정오 “혁명정권인 군사혁명위원회는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기 1961년 5월 16일 현재로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 명의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결과·의의】** 군사정변 정보를 들은 장면은 두 번이나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 확인했지만 그는 걱정 말라는 말만 했다. 장도영은 양다리를 걸쳤다.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장면 총리는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수녀원으로 피신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올 것이 왔다”고 하면서 진압을 회피한 것도 성공의 중요 원인이었다.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군사혁명위원 30명과 고문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의장은 장도영이 맡았고, 혁명위원은 박정희와 연합참모총장, 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장성 및 영관급으로 구성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고 내각수반과 국방부 장관에 장도영이 맡으며 내각 및 주요 자리를 군인으로 채웠다. 박정희는 44세였지만, 장도영 38세, 김종필 35세, 차지철 27세 등 군사정변 주역 대부분이 30대인 30대 군인들이었다.

**【핵심어】** 5·16군사정변/정군운동/군사혁명위원회/박정희/장도영

**【참고문헌】**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5·16에서 조인까지』(한승, 1995);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신종대, 「5·16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정신문화연구』 통권 118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송병록, 「韓國의 軍部統治」,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한국정치학회, 1995).

**【사진자료】** 373. 196105 5.16 군사정변 비화 사진  
374. 1961 5.16 군사정변 직후의 박정희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5·16군사정변

**【소항목】** 국가재건최고회의

5·16군사정변	대통령선거
●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제3공화국 출범

**【정의】** 5·16군사정변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선거로 제3공화국이 출범될 때까지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한 국가최고통치기관이었다.

**【설립배경】** 1960년 5월 16일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쿠데타 군은 5월 18일 국무총리 장면의 계엄추인을 받아 정권을 인수하자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30명과 고문 두 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으로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 혁명위원은 박정희와 연합참모본부총장, 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장성 및 영관급으로 구성하였다. 5월 18일 55시간 동안 잠적해 있던 장면총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5월 18일 저녁 중앙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였다. 장면 내각의 총사퇴와 함께 이미 구성되었던 군사혁명위원회가 이름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어 탄생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은 장도영, 부의장은 박정희가 맡았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3권을 장악한 기구로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32명으로 구성되었다. 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내각명단을 발표하였다. 장도영이 내각수반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 것을 비롯해 내각은 모두 군인으로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시장, 군수, 읍장, 면장 등 중요 직책이나 장 자리도 대부분 군인으로 임명하였다.

**【활동사항】**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23일을 기해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6월 6일 국가비상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1장 총칙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 과업 완수 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윤보선은 대통령이었지만 명목뿐이었고, 헌법과 헌법기관이 정지되는 등 특수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1962년 3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정치인을 정죄하는 구정치인 정화법이 발표되자 이것에 반발한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한 뒤,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물려받았다. 박정희는 같은 해 7월부터 8월 김현철을 후임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공식인 국무총리급의 지위인 내각수반을 역임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6월 10일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구 환율을 10대

1로 축소시켰다. 통화개혁 단행의 이유로는 거액의 자금을 숨겨둔 부정축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와 당시 아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화교 세력의 한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1963년 12월 21일 서독 광부 1진 123명을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술근로자 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1960년 여름, 정부가 (군사정변 전) 독일의 경제부 노동국장을 만나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견하는 것이었다. 이후 프랑스, 독일 등지에 광부, 의사, 간호원이 파견되었고 서남아시아에는 건설기술자들이 파견되었다.

**【의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정변으로부터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의 출범까지 3년여 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핵심어】** 국가재건최고회의/박정희/장도영/통화개혁/국가비상조치법

**【참고문헌】**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인물과 사상사, 2004); 김용서,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전통과 현대, 2006); 김일영, 『건국과 부국: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기과랑, 2010);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 한 권으로 읽는 제3공화국』(중앙 M&B, 1998).

**【사진자료】** 375. 19610520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석한 장도영총장과 박정희장군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5·16군사정변

**【소항목】**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5·16군사정변	대통령선거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제3공화국 출범

**【정의】** 1962년 12월 26일 대통령직선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제3공화국의 헌법이다.

**【배경】**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면 내각이 총사퇴하자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고쳐 유일한 권력기구로 군림하게 된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시키고, 5월 22일 포고 제6호를 통해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시켜 국가재건최고회의 이외의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됨에 따라 헌정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른 헌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헌법에 대신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박정희 등 쿠데타 주동자들은 가능한 한 군정을 연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4월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미국도 하루빨리 민간정부 형태를 띠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여름을 정권 이양의 시기로 발표했고, 그 해 11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전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정이양 작업의 시작으로 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헌법 개정을 위해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내에 헌법 개정 특별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심의계획을 발표한다. 헌법심의위원회는 9인의 최고위원과 21인의 민간인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하버드 대학의 에머슨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에 의거하여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1962년 10월 10일 통과시키고 동년 10월 12일 법률 제1166호 국민투표법을 공포한 후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새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라는 점이었다. 이것이 제2공화국과 새로이 탄생하게 될 제3공화국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였다. 물론 제3공화국 헌법은 이밖에도 ‘단원제 국

회, 소선거구제의 채택,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채택, 법원에 위헌 심사권의 부여' 등이 새로운 것이었다.

**【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자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했다. 12월 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새 헌법안은 78.8%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12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2월 26일 공포되어 196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의의】** 제3공화국 헌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이후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을 이끌게 되었다.

**【핵심어】** 국가재건최고회의/민정이양/국민투표/대통령중심제/단원제

**【참고문헌】** 이완범, 「박정희 군사정부 '5차헌법개정'과정의 권력구조 논의와 그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한국정치학회, 2000);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인물과 사상사 2004); 정만희, 『헌법강의』(동아대학교 출판부, 20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박종흡, 『대한민국 국회 60년사: 1948~2008』(국회사무처, 2008).

**【사진자료】** 376. 19621217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5·16군사정변

**【소항목】** 대통령선거

5·16군사정변	● 대통령선거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제3공화국 출범

**【정의】** 1963년 10월 15일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였으며,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배경】** 5·16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최고기구로 하여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국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끝내고 민정으로 이양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군부로서도 빠른 시일 내에 권력 기반을 구축하여 선거라는 합법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1962년 12월 27일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되자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정화법에 묶여 있던 정치인의 일부가 해금되어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1월 18일 군부가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던 공화당은 공식적으로 발기를 선언하고, 2월 26일 중앙당을 창당하였다. 구 정치인들도 윤보선을 중심으로 민정당이 준비되고 있었고, 장면이 정치해금에서 풀리지 않아 구심을 잃고 있던 민주당 신파는 신민당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개】** 그런데 2월 18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자신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던 박정희 최고위원장이 느닷없이 민정 불참가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공화당의 사전 조식을 비롯한 김종필의 독주에 불만을 품은 군부 내의 반김종필 세력의 반발로 쿠데타 세력 내부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증폭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종필은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외유를 떠났고, 공화당은 총재에 정구영, 의장에 김정렬을 선출하여 창당하였다. 반면 김재춘을 중심으로 한 반김종필 계는 자유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군부세력 간의 내분에 시달리던 박정희는 3월 16일 '군정을 4년간 연장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하고, 4월 8일 이를 철회하였다. 그 후 민정이양은 기정사실로 굳어졌고,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냈다. 박정희(공화당), 윤보선(민정당), 허정(국민의 당), 송요찬(자유민주당), 오재영(추풍회), 변영태(정민회), 장이성(신흥당) 등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8월 15일 정부는 대통령 선거는 10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1월 26일에 치른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전은 박정희 후보가 9월 23일 중앙방송국을 통해 "이번 선거는 민족적 이념의 자유민주주의와 가식의 자유민주주의와의 대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24일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와 가장된 민

주주의와의 대결이라고 응수하면서, 박 후보를 여순반란사건의 관계자로 거론하며 ‘이질적’ 사상의 소유자로 몰아붙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색깔공격은 잔존한 좌익이나 혁신계, 피학살자 가족 등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박 후보를 찍게 했다.

**【결과】** 10월 들어 허정과 송요찬 후보가 사퇴하여 박정희와 윤보선의 양자 대결이 되었다. 선거 결과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불과 15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된 것이다. 박정희는 경상도와 전라도 등에서 표를 많이 얻었고, 윤보선은 서울·경기 지역과 충청도, 강원도에서 많은 표를 얻어 표의 남북현상을 보여주었다.

**【의의】** 5·16군사정변에 대한 국민 심판 성격이 강했던 이 선거를 통하여 박정희는 5·16군사정변으로 얻은 정권을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유지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핵심어】** 민정이양/사상논쟁/남북현상/박정희/윤보선

**【참고문헌】**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 한 권으로 읽는 제3공화국』(중앙 M&B, 1998); 조갑제, 『朴正熙: 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조갑제닷컴, 2007);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인물과 사상사, 2004);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5·16군사정변

**【소항목】** 제6대 국회의원 선거

5·16군사정변	대통령선거
국가재건최고회의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제3공화국 출범

**【정의】** 대한민국 제6대 총선은 4년 임기의 제6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졌으며, 지역구와 함께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배경】** 5·16군사정변에 의한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 민주당 정권이 붕괴된 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서 권력 구조 형태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 다수대표제로 131명을 뽑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44명을 선출하는 복합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유효표 총수의 5/100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 배분방식은 최다수득표당인 제1당의 득표비율이 50/100 이상일 때는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르지만, 제1당의 의석수는 전국구 의원정수는 2/3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1당이 50/100 미만일 때는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1/2을, 잔여의석을 제2당 이하의 득표비율로 배분하였다. 집권당에 정치적 안정을 주고자 한 제도였다.

**【전개】** 1963년 1월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가 금지되었다. 그 결과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마다 정당을 창당하여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2개의 정당에서 847명이 출마를 하였다. 당시 평균 경쟁률은 지역구 847명, 전국구 154명으로 모두 1,001명이 각각 입후보하여 6.5대 1이었다. 투표율은 72.1%로 제14대 총선의 71.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며, 5대 총선보다는 무려 12.2%나 낮았다. 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의 선거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정치활동정화법으로 기존의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사전 창당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대 의혹'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거부감도 작용하였다.

**【결과】** 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지지율 32.4%에 110석(지역구 88석, 전국구 22석), 민정당이 지지율 19.4%에 41석(지역구 27석, 전국구 14석)이었다. 민주당은 13.1%의 지지율에

13석(지역구 8석, 전국구 5석), 자유민주당은 7.8% 지지율에 9석(지역구 6석, 전국구 3석), 국민의 당은 8.5%의 지지율에 2석(지역구 2석)을 확보했다. 민주공화당은 득표율은 32.4%에 불과하였으나, 제1당에게 비례대표의석이 많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인해 전체 의석의 62.8%에 달하는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야당이 사분오열된 데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연과 혈연, 자금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야당을 압도하는 의석을 차지하여, 대통령 선거 당시 나타났던 남북현상이 깨지게 되었다.

**【의의】** 앞서 벌어진 제5대 대통령 선거와 한 달 뒤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12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산되고 12월 17일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다.

**【핵심어】** 단원제/전국구 비례대표제/복합선거제도

**【참고문헌】** 김용서,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전통과 현대, 2006); 박종흡, 『대한민국 국회 60년사: 1948~2008』(국회사무처, 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 연구소 편, 『5·16과 박정희 정부의 성립』(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 정윤재, 『장면, 윤보선, 박정희: 1960년대 초 주요 정치지도자 연구』(백산서당, 2001).

**【사진자료】** 377. 19631217 제6대 국회 개원식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키워드】**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험과 5·16군사정변

**【전시항목】** 5·16군사정변

**【소항목】** 제3공화국의 출범

5·16군사정변	대통령선거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제3공화국 헌법과 국민투표	● 제3공화국 출범

**【정의】**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배경】**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2년 6개월 동안의 군정기간을 거친 다음, 1962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군부세력은 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와 11월 26일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기간 동안 군부세력은 정치정화법을 제정하여 기성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중앙정보부와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했다. 박정희는 근대화와 경제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재건합시다”로 대표되는 3공화국 초기의 구호와 “잘 살아 보세”, “싸우면서 건설하자”로 대표되는 3공화국 후반기의 구호는 박정희 근대화의 정책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적자본 외에 기술과 자본, 천연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차관도입, 저임금을 바탕으로 둔 경공업 생산을 통한 수출지향형 경제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제3공화국의 국정지표는 <경제개발과 국가 근대화>, <반공태세와 국가안보의 확립>, <부패 일소와 민생안정>, <우방과의 협력 강화>로 정하였다. 한편 경제개발의 재원조달을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도모하고, 베트남에 파병하는 등 이른바 경제개발과 안보협력이라는 2대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결과】** 박정희 정권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였다.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경제개발의 재원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1964년 봄부터 박정희 정권은 격렬한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직면했다.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6월 3일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고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었으며, 6월 22일 동경에서 조약이 조인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주한미군이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것을 막고, 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규군의 베트남 파견에 적극적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정부가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박정희 정권은 전투병력을 파견하였다.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타이·필리핀·대만·스페인이 베트남에 파병한 총병력의 약 세 배인 5만여 명을 파견하였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나, 국제적·사회적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의의】**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5·16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국민투표로 새 헌법을 마련하고 선거를 통해 민정이양을 거쳤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제3공화국 후반기에는 경제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핵심어】** 근대화/경제발전/한일국교정상화/베트남 파병

**【참고문헌】** 임영태, 『대한민국사: 1948~2008』(들녘, 2008);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 한 권으로 읽는 제3공화국』(중앙 M&B, 1998); 김일영, 『건국과 부국: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기파랑, 2010);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사진자료】** 378. 19631015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379. 19631015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380. 1967 제6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선 박정희의 대구 유세 장면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캡슐】** 대한민국의 저력과 교육의 힘

● 대한민국의 저력과 교육	여성, 차별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	------------------------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육열’일 것이다. 입시교육, 고3가족, 치맛바람, 과외열풍, 학원민국, 기러기 아빠 등 교육열과 관계된 많은 풍자어가 있는 것을 봐도 한국의 교육열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특별히 이러한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학력을 높게 평가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전통적 신분제 사회가 붕괴되고 근대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위치가 출생 신분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계층 이동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오늘날 급속한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과대한 수요를 가져와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의 교육역사를 보면 우선 양적으로 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왔다. 해방 이후 확대된 교육의 기회, 균등화에 대한 민주 교육 이념, 교육에 대한 권리의식, 사회적 지위 향상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각급 학교의 교육 인구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방 후 제1공화국 정부는 1949년 말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교육의 기회균등, 6년간 무상의무교육 실시,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 명시, 학생의 인격과 개성 존중, 교육의 중립성, 교원의 신분보장이었다. 전쟁 중에도 문교부는 1952년 2월에 교육특별조치령을 제정하여 피난 학생의 취학을 독려하고 가교실을 건축, 피난 특설학교를 설립하고 거제도에는 북한 피난 학생을 위한 특설학급 또는 분교를 설립하였다. 한편 전시 대학교육을 위해 전시연합대학을 부산, 광주, 전주 및 대전에 설치하였고 전시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학교용 ‘전시생활’ 중학교용 ‘전시독본’ 교사용 ‘전시학습 지도요항’의 등의 전시교재를 발행하여 배부하였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교육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다. 이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과 더불어 정부의 문호개방주의, 의무교육의 추진, 학령인구의 증가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4·19혁명은 해방 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학생들의 순수 정의감의 발로였다. 혁명으로 인한 과도정부의 문교정책은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내걸었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창설되었던 학도호국단은 민주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체되었다. 4·19혁명을 계기로 출범한 제2공화국은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추진하였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학원 민주화와 교육자치제 강화방침으로 구체화되었다.

1961년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사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 운동'을 펼쳐나갔다. 또한 1961년에는 학원의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했다. 교육부문에 배정된 국가 재원은 1960년에 정부예산의 15%를 상회하기 시작해 계속 상승하였고 1971년에, 높은 기록을 보여 정부 예산의 19%를 점유했으며 1980년까지 약 17%를 유지했다. 이렇게 증가된 정부의 교육재원은 대부분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에 투입되어, 의무교육에 지출된 교육예산의 비율이 거의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교육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분을 측정할 결과로서는 1960~1974년 기간에는 평균 0.5%, 1970~1980년대에는 0.8%에 이르고 있다.

제도상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1968년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와 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 등 입시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는 당시 '7·15어린이 해방'이라고 선전될 정도로 전폭적인 개혁조치로서, 이 조치로 그동안의 중학교 입시 경쟁에서 빚어진 폐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실시는 대학입학의 자격자를 국가가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이들을 각 대학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에 대해 대학들은 학생 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개편만 있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73년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등학교의 경우 자체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출제·관리하는 '연합고사'로써 합격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학군별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과열은 1980년 '7·30 교육개혁'을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이 개혁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를 기본 취지로 하여, 과외금지, 대학본고사 폐지,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및 예비고사 성적에 의한 대학 입학생 선발, 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축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나가려 했는데, 이때 실시되었던 교육조치로서는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하고, 교원지위의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서,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교육위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로써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비로소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해방 후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대학교육인구가 소수의 엘리트 단계를 벗어나 일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즉 1990년대 중반 학령 인구의 약 45%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다. 1994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발표

되었다. 당시 교개위가 제시한 신교육체제의 목표는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고,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계발하며,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창조하고, 종합적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교개위는 또한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침을 마련하여 인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1997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며, 모든 대학교가 입시에서 국어·수학·외국어(영어)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성교육방송(오늘날의 EBS)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0년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 위헌판결을 내려 정부는 사교육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사교육의 증가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강화는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열반 편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교육을 오히려 확대시켰다. 또한 2002년의 특기·적성을 중시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일선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 여건이 여의치 않아 결국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및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조기유학 및 해외이민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는 교육평등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로 대학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했으며,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성과급제 도입, 두뇌한국(BK)21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를 실시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신, 수능 등 대학입시제도의 운영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교육의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목적으로 EBS 수능방송을 실시하였고 방송강의 내용을 수능 출제에 일정 비율로 반영했다. 이러한 수능방송은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사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졌다. 2009년 이후 정부는 사교육경감과 중도서민지향을 강조하면서 외교입시개편, 학원심야학습금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정부는 '6·3사교육대책'을 공표하여, 외고·과학고 등의 특목고 입시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실시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급속한 경제발전이 교육투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하고 민족자본의 축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양질의 노동력을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발전은 역으로 소득증가로 인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즉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간에 수요효과, 기득효과, 공급효과가 동시에 상호작용하여 양자간 순환적인 발전 관계를 맺은 것이다. 특히 국제화, 첨단산업화, 탈공업화,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에서는 고등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이 경제발전의 선행요인이자 필요조건이다.

반면 이러한 교육열을 사교육 열풍을 불러왔다는 측면에서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비는 세계 최고다. 2004년 기준으로 공교육비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4.8%로 OECD 국가 평균 4.6%보다 크게 높지 않으나, 사교육비는 3.4%로 교육열이 비교적 높

다는 일본(1.2%)보다 거의 3배나 높다. 충분히 세계적 수준이 공교육비도 부족하여 많은 비용을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사교육비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 위기 시에도 다른 소비지출은 줄여도 교육비는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는 한국인의 교육열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주는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열은 자녀들을 조기 유학시키고 가족이 국내, 국외로 갈라져 사는 '기러기 가족'을 만들 정도이다.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교육열을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도시 집중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도시로 오기 때문이다. 일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곳의 땅 값, 집 값이 올라가는 현상도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 때문이다.

**【참고문헌】** 장덕삼, 『한국교육사』(동문사, 2003);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집문당, 2007); 선영규, 「교육투자와 경제발전의 관하여」, 『교육연구』 7권(1981); 박내회, 「경제발전과 대학교육의 과제」, 『서강경영논총』 1(1990); 윤민재, 「한국의 교육문제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사회이론』 39권(2011); 이문호,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과 문제점」, 『인문과학』 40(2007); 박남기, 「한국인의 교육열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32권 5호(1994).

- 【사진자료】** 381. 19640203 입학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교문밖 풍경  
382. 19630611 제6차 국제영양학회에 참가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기렬 교수  
383. 196211 글라이더를 타는 여대생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중주제】** 근대국가 토대 구축

**【캡슐】** 여성, 차별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대한민국의 저력과 교육	● 여성, 차별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	--------------------------

한말 한국여성은 교육·자선활동을 위주로 한 계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여 조선이 일제에 강제 합병되자 치열한 항일구국운동을 펼쳤다. 1920년대 이후에는 신문화운동을 포함하여 근대적 의미의 여성운동이 전개되었다. 상해임시정부 헌법에는 이미 「남녀일체평등」이 명시되었다.

해방 후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보통선거법이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어 최초로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8조에서는 성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금지했으며, 고용과 경제 영역에서도 성차별 금지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평등이 현실에서 실현되는데 아직 많은 난관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여성문제보다는 국가 건설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했으며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지속되었다.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일자리에 여성이 투입되었다. 남성이 부재하는 농촌에서 여성은 농업사회를 유지시켜 나감과 동시에 가계를 일으키기 위해 주요 경제 행위자가 되었다. 1950년대 말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1958년 개정된 민법에서는 일제시기 여성을 무능력자로 규정해놓은 조항을 삭제했다. 즉 처의 무능력 조항의 폐지와 협의이혼 제도, 법정재산상속분의 균등화 등을 이루어냄으로써 사회적 평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공헌했다. 또한 이 시기 여성단체의 설립과 더불어 여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당시의 여성운동을 주도하였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직간접적인 정부의 지원 하에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활동을 펴기도 하여, 부녀새마을운동, 소비절약 저축운동, 자원봉사활동, 가족계획 실천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 외에 대한YWCA, 대한부인회, 대한여성교육동지회, 한국부인상조회, 새여성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향군인회부녀부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했다.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유권자연맹 등도 설립되어 제한적이거나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다. 여성단체들은 가부장적 가족법 개정과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인식, 국가정책에의 여성의 참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제3공화국 이후 산업화가 강력히 추진되면서 여성은 중요한 경제 인력으로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이 시기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우선 과업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요구하고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했다. 여성은 산업 노동자로서 매우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축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여성들은 가부장적 차별을 없애는 가정법 개정과 여성노동자의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다. 1973년 여성단체협의회는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의 결성을 주도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펼쳐 1977년 신민법 일부를 개정했고 혼인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그리하여 1979년에는 개정가족법 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학문적인 면에서도 여성은 재조명되었다. 1977년 대학의 교과과정에 여성학이 도입되면서 여성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마침 1975년 세계 여성의 해가 공포된 후 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여성관련 국제 규범은 가입 국가에 대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더 적극적으로 정치참여와 평등을 지향할 수 있었다. 전국구와 유신정우회의 일정 비율이 여성계에 할당되기도 했다.

당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 여성의 의회 진출이 예전에 비해 증대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2명의 여성의원들이 당선되어 역사상 최대의 여성 의원수를 기록했다. 또한 그동안 각 정당의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조직 활동이 부녀정책 등의 계몽과 동원의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일반을 포함하는 여성정책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커지기 시작했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은 노동자로서도 차별받았으며 이에 여성들은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작된 여성의 노동운동이었지만 점차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고 1979년 YH 여공 농성사건은 오랜 권위주의 군사정권을 와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 1979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임금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여타의 상황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게 했다. 또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동시에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아동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지식인 중심의 여성단체들이 잇달아 창립되는데 여신학자협의회, 여성평우회, 또 하나의 문화, 기독교여민회 등이 그것이다. 1980년대에는 가족법 개정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41개 여성단체가 발기하여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고 가족법 개정을 13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사회문제로 공론화하는데 주력했다. 1980년대 성에 대한 최초의 공개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전화'는 아내 구타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사업을 전개했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족되면서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지위와 권력행사 패턴, 수준이 변화했다. 여성은 여성정책이라는 성 인지적 정책의 필요성과 가치를 의식하고 연대의지를 발현시켰다. 경제, 교육 등에 여성의 참여가 늘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졌다. 국가 발전전략에 여성의 능력과 연대를 동원하는 등 여성운동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특히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치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3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설립되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의 위상이 높아졌다.

1987년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가부장적 차별에 따른 문제에 주목하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1987년 여성평우회는 여성민우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독자적 여성운동을 전개할 계기를 마련했으며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87년에는 독자적인 여성노동단체로서 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고용 부문에서 평등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는 여성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여성운동의 주체로 주부, 사무직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영역도 여성교육, 평화, 성매매문제, 종교 내 여성인권문제 등 다양한 부문의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한국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1991년 영육아보육법,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1994년에는 국회에 상설 특별위원회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관련 법안과 기타 여성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논의, 심사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소과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여성단체의 사단법인화가 두드러져 1993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시작으로 1998년 말 여성연합의 29개 정회원 단체 중 15개 단체와 1개 지역여성연합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했고 이후 중앙 여성단체뿐 아니라 지역 여성단체들의 사단법인 등록도 증가했다. 나아가 활동방식도 이전의 집회와 시위 형태 위주에서 서명, 청원, 성명서 발표, 피켓팅, 로비 등 제도화된 형태의 활동이 늘어났다. 여성연합이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원과 20여 차례 면담을 하고 12차례의 서면 질의를 한 것이 한 예이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채택의 결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여성주의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안에 여성정책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정부의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1995년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여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 및 정치관계법에 할당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1995년 지방의회 선거부터 광역의회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이 같은 추세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2001년 여성부가 중앙부처로 신설되어 여성의 권익보호뿐 아니라 사회의 여성차별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국회 여성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여성정책의 법제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4년 정당법에는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30퍼센트 할당할 것을 권고하는 규정과 전국구 50

퍼센트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의무규정이 생겼다. 이에 국회에서의 여성의 비율을 5.9%로 증가하게 된다. 2004년에는 17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세계 평균인 15.9퍼센트보다는 낮지만 이에 근접하는 13퍼센트를 기록하여 헌정 사상 최다수인 39명의 여성의원이 의회에 진출했다.

또한 고위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진출함으로써 여성정책 확대가 가속화되었으며 실제로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확인되었다. 2006년 부부재산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은 혼인 중 재산분할제도, 혼인 중 부부재산의 처분 제한, 재산분할 균등 원칙 등을 도입했다.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의 몫을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5할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언론 보도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성문제도 재조명되었다. 이전까지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다루었으나 이제 여성을 주제로 성적 자기 결정의 침해라는 개념에 기초해 성폭력과 성희롱 개념으로 전환하여 다루게 되었다.

현재 여성문제는 역사적 차원 및 세계적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여성대표가 만나 과거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또한 여성운동은 지구화시대를 맞아 지구적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적인 연대의 모색, 환경보존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아시아의 지역적 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의 지구적 연대 등이 그 예이다.

**【참고문헌】**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 『한국근현대여성사』 1, 2, 3(모티브북, 2011); 박채복, 「한국여성운동의 전개와 과제」, 『한독사회과학논총』 15권(2005); 황정미, 「한국여성운동의 의제와 성찰성」, 『안과밖』 21(2006); 오장미경,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여성과 사회』 16(2005).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 Ⅲ

##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태동	●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5·16군사정변을 통해 등장한 군사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전기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은 경제개발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리더십이 부재하였다. 군사정부는 경제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개발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수립하는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은 계획 수립기능은 물론 예산편성기능과 외자배분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저축이 부족하고 민간기업의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모아진 자금을 정부가 선택한 경제개발 방향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1961년 10월에 일반은행을 국유화시켰다. 또한 정부는 국내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1962년 6월에 통화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외자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박정희 정부는 계획한 투자사업의 건설과 육성을 위해 외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민간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채무불이행의 위험 때문에 민간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1962년 7월에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호)’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자도입이 원활하지 않자 1965년에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동력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과 산업정책이었다. 1961년 수출제일주의를 공식 천명한 이후 수출지향 정책은 계속 강화되었고, 1963년 이후 공산품 수출의 증대와 더불어 공산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정책이 채택되게 되었다. 정부는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에게 수출금융과 조세지원정책을 계속 확대해왔고, 아울러 1964년에 수출책임제를 시행하였고 1965년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도입하였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수출진흥확대회의에는 대통령이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정부 관료는 물론 수출기업의 수출활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정부는 세계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967년에 GATT에 가입하여 세계시장에 더욱 깊게 편입되었다. 산업정책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시기부터 시행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시기의 산업정책은 경제계획의 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외자도입과 정책자금을 배분하여 특정산업을 육성하였다. 이때 건설된 산업은 정유공장·비료공장·시멘트공장·화학섬유공장 등과 같이 대부분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산업이었다. 제2차 경제계획 시기의 산업정책은 제1차 계획의 그것보다 훨씬 제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에는 정부가 건설·육성하고자 하는 7개 산업에 대해 공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의 산업정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대표된다. 1973년 6월에 발표된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철강·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화학공업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고, 차후 8년간 총 88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1981년까지 전체 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박정희 정부하에서 강력히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은 한편으로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 부(負)의 유산을 남겼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도시-농촌 간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정부는 공업화를 위해 공장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농산물을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였다. 이 결과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이농의 대열이 형성되어 1967년을 정점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이농인구는 대부분 대도시로 이동했는데, 이를 통해 도시비공식부문(판자촌, 달동네 등으로 불림)이 형성되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장노동자가 확산되어 노동운동의 인적 기반이 축적되었다. 1953년에 노동3법이 제정되었지만, 고도성장 시기에 이 법은 사문화되어 공장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으로 일했고, 임금수준 또한 낮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노동통제정책에 따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전체 공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 1970년대 후반에 정부주도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성장정책은 생산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은 반면,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79년 4월에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경제운용시스템을 정부주도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꾸고자 했고, 경제정책의 목표도 성장에서 안정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두라는 대외 환경의 변화에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산업화 시기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산업적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거의 9%에 육박하였고, 1980년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았지만, 1981년 이후에 물가는 한 자리 수로 안정되었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하에서 구축된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1986년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과정에서, 한편으로 중산층이 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민주화 세력이 성장한 결과 사회의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해방과 함께 경제적 보완성이 높았던 남북지역이 분단되고, 6·25전쟁을 겪은 우리 경제가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 경제개발과 산업화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변모하는 동시와 농촌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박정희 정부하에서 추진된 경제개발은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개발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다. 또한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에 근거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수지 적자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수출성장에 따라 그 수요가 확대되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생산 능력을 건설·확충하여 수입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수출성장이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의 경공업 제품에 더해 새로운 수출품이 계속 개발되어야 했고, 아울러 외국기술 의존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이 시기에 추진된 경제개발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원활히 조달·공급하는 것이었다. 1961년 8월에 ‘수출제일주의’를 채택하고, 1964년 5월에 수출성장을 위해 환율을 현실화하고 1965년 2월에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도입한 것은 수출성장 및 외환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자도입을 위한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것이나 베트남에 파병한 것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자본축적이 미약했기 때문에 원료, 연료, 부품, 반제품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공급되어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에는 근대적인 대규모 시설을 갖춘 중화학공업 공장이 없었는데, 박정희 정부 하에서 추진된 산업정책을 통해 근대적인 대규모 중화학공업 공장들이 대거 건설되게 되었다. 포항제철주식회사(현재 POSCO)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포항제철은 1970년 4월에 착공되어 1973년 6월에 제1기 시설을 준공한 이후 생산시설을 계속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져 갔다. 초기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해도 됐지만,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에 경제기획원의 한 국(局)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정책을 1967년 3월에 별도의 과학기술처가 담당하고,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된 것은 점차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술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통상 박정희 정부 시기를 고도성장기라고 부른다. 195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를 조금 넘었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연평균성장률은 9%에 근접하여 거의 두 배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경제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국민총생산에서 제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 41%에서 1979년 22%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제2차 산업은 같은 기간에 17%에서 3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업(제2차 산업)이 성장하는 속에서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져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중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36%, 1970년 46%, 55%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경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1979년에 발간된 OECD 보고서에서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산업역군의 해외 진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1950년대는 6·25전쟁을 통해 파괴된 산업시설을 재건하는 시기였다. 이것은 원조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일부 경공업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경제재건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것을 추진할 장치로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1959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계획이나 박정희 정부 하에서 작성된 제1~4차 경제개발계획은 당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었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특히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두드러졌다. 초기의 경제개발계획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보다 기간산업의 수입대체 공업화정책과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1963년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간산업의 수입대체에 필요한 외국자본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경공업 제품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수입대체공업화 규모를 크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을 수정하였다. 이때 이후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핵심전략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정책개혁을 추진하였다. 가령 경제개발계획 수립기능, 예산편성기능, 외자배분기능 등을 갖고 있는 경제기획원을 1961년 7월에 설립하였다. 또한 국내저축을 통해 모아진 자금을 경제개발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 집중 배분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국유화했고, 민간기업이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1965년 2월부터 월간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도입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이 거의 빠지지 않고 매월 참석해서 경제관료 및 민간기업의 수출을 독려했기 때문에 거의 40%에 육박하는 연평균 수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입대체와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선·철강·기계·석유화학·전자·비철금속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을 시행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박정희 정부는 외자도입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에 근거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결과 그 실적은 목표치를 항시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경제기획원 설립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소항목】** 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그 수정
---------	-----------------------

**【정의】**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22일 법률 제660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기구로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며, 아울러 외자도입을 승인하는 박정희 정부시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정부조직이다. 경제기획원은 1994년 12월 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재무부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으로 전환되었다.

**【배경】** 195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후진국 경제개발에 관한 책이 국내에 번역·소개되었고, 대학교에서도 ‘경제발전론’이나 ‘후진국 경제론’ 등의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 중심으로 경제개발 3개년계획이 작성된 것도 사회의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 사이에는 국민들의 개발의지를 수용하여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정부조직이 필요했지만, 이승만 정부와 민주당 정부하에서 유지되었던 부흥부는 그러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었다.

**【시행】**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사정부는 경제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의 목표로 선언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를 반영한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하는 계획기구(planning agency)가 필요하였다. 군사정부 이전에 이런 역할을 수행한 정부조직은 부흥부였는데, 부흥부는 주한 원조기구와 원조자금 및 대충자금 이용 등과 같이 원조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게다가 부흥부에는 예산편성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사정부는 혁명 직후 부흥부에 계획기구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부흥부는 1961년 5월 25일에 두 안을 보고하였다. 첫째 안은 부흥부의 기획기능, 재무부의 예산기능과 내무부의 통계 자료 수집·정리기능을 통합한 새롭고 강력한 계획기구를 설립하는 안이었다. 둘째 안은 부흥부의 기획기능에 그 동안 별도의 규정을 통해 설립·운영되었던 지역개발사업과 국토건설사업 등과 같이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안이었다. 군사정부는 우선 두 번째 안을 받아들여 1961년 5월 26일에 건설부를 설립하였고, 이어서 1961년 7월 22일에

재무부의 예산국과 내무부의 통계국을 통합한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다.

**【결과·의의】** 경제기획원은 그것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정부 내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정부조직이었다. 우선 기능 면에서 볼 때, 경제기획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경제기획원은 대통령의 개발의지를 반영하여 그것을 경제개발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은 예산편성 기능이었다.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기능을 이용하여 경제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경제기획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없었지만, 1961년 10월 2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외자도입 및 배분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기획원은 민간 기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자도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1963년 12월 14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부총리제가 도입되었는데,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경제기획원은 자신의 이러한 기능과 위상을 이용하여 1960~70년대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핵심어】** 경제기획원/정부조직법/경제개발계획/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계획기구/예산편성기능/외자도입 및 배분기능

**【참고문헌】** 강광하·이영훈·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KDI, 2008);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경제개발계획의 전개』(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사진자료】** 384. 19650404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획원 업무보고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경제기획원 설립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소항목】**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그 수정

경제기획원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그 수정
-------	-------------------------

**【정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961년 7월 22일 공포된 종합경제재건계획안(국가재건최고회의의 주도로 작성)을 토대로 작성하여 중앙경제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1962년 1월 5일에 최종 확정 발표된 경제개발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공포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1962년 11월에 수정작업에 들어가 1년여의 기간에 걸쳐 수정을 한 다음 1964년 2월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보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배경】** 당시 경제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 작성에 일찍부터 착수하였다. 산업은행 조사부에 재직하던 김성범, 재무부 사세국 토지조사 과장 정소영, 산업개발위원회 보좌위원을 역임한 백용찬 등이 1961년 5월 20일을 전후한 시기에 모여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안은 이어서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작업지침이 되었는데, 1961년 7월 22일에 최종 확정 발표되었다.

**【시행】**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토대로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여 1961년 9월 15일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계획안은 중앙경제위원회와 국무회의(각의)의 심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1962년 1월 5일에 공포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연평균 목표 성장률은 7.1%로 계획하여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군사정부의 개발의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기본목표는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연평균 목표 성장률과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1차 계획이 중점을 두었던 개발전략은 세가지였다. 첫 번째는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군사정부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해 식량의 자급체제를 갖추는 뿐 아니라 농가소득의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기간산업의 건설과 전력·석탄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이때 건설하려고 한 기간산업에는 종합제철공장, 정유공장,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화학섬유공장, 종합기계제작 공장 등 총 36개의

투자 사업을 계획하였고,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전력, 철도, 항만, 통신시설의 건설, 개량, 확충 등을 계획하였다. 세 번째는 수출을 증가시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계획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8%로 계획했지만, 아직 수출지향공업화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제1차 경제계획에서는 수산물, 식량, 광산물 등과 같이 제1차 산업 제품을 주요한 수출품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원활하게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우선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자본이 도입되어야 했으나 미국 등 선진 제국에서 자금지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외국자본이 유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투자사업의 건수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보완계획을 작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과·의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직후에는 계획한 외국자본이 원활히 도입되지 않아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1963년부터 목표 성장률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결과 최초의 제1차 계획에서의 연평균 목표 성장률은 7.1%였고, 보완계획에서는 5%로 하향 조정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8.5%였다. 더욱이 제1차 계획에서는 경제개발전략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 하에서 추진된 산업화전략의 틀이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종합경제재건계획안/보완계획/중앙경제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경제기획원/자립경제/경제개발전략

**【참고문헌】**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계획안 해설』(1961); 경제기획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1962); 경제기획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보완계획』(1964); 강광하·이영훈·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2008).

**【사진자료】** 385. 19630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터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한일회담과 한일수교

**【소항목】** 한일회담

●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관계 기본조약	한일수교와 차관도입
6.3한일회담 반대 시위	

**【정의】** 1951년 10월 20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의 타결을 위해 진행된 본회담을 말한다.

**【배경】** 제2차 세계대전후 소련의 팽창정책과 중국의 공산정권 성립(1949년)으로 동북아 안보의 변화 속에서 미국은 동북아에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하는 대공산(對共產)권 봉쇄 정책이 필요하였다.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미국의 일본국과의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여 동북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되었다. 양국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 일본 주재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외교국장 시볼드(W. J. Sebald)중재로 회담은 시작되었다.

**【전개】** 1951년 10월 20일 양유찬 대한민국 대표와 마쓰모토(松本) 일본 대표간에 동경(東京)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본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의 기본조약 체결,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재산청구권, 문화재 반환, 어업 문제, 선박 문제 등을 내용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1952년 4월 28일)전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입장의 차이만 확인한 채 14년간에 걸친 장기협상으로 빠져들었다. 1958년 4월 제4차 회담까지 한국 측(이승만 정부)은 배일정책을 취하였고, 일본 측은 구보다(久保田)망언 등 과소한 보상액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미군정령(승)에 의해 소멸된 재한(在韓)일본 재산에 대해 역(逆)청구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평화선(이승만라인)철폐라는 어업부문의 이익만 충족시키려 함으로써 회담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 외에도 당시 양국이 회담 조속타결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고, 특히 일본은 패전의 후유증 때문에 시일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이 협상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당 정권부터 대일정책에 유연성을 보이고, 특히 제3공화국 정부는 예상되는 미국의 군사·경제원조 삭감과 공산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결속과 경제개발의 재원 조달을 위해 회담타결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미국의 안보상 불안 요소(중국과 베트남 등)에 대응하는 아시아 전략의 전제 조건과도 일치하였고 5·16군사정

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낸 조건 중의 하나이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한 반성, 달러 위기 등으로 일본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과 일본의 방위부담 증가, 아시아 평화에의 기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대안으로 한일회담 타결요구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1962년 말 일본 이케다(池田) 내각의 조기타결 희망과 1964년에 성립된 사토(佐藤)내각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최대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경제진출을 둘러싼 반대여론이 비등하였으나, 1961년 11월 박정희·이케다 회담에서 회담촉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大平) 일본 외상 간에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총 6억 달러의 청구권 해결원칙에 실마리를 풀었다. 어업문제의 조속해결에 합의하면서 1964년 봄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 투쟁으로 추진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결과】** 1965년 2월 17일 시나(椎名) 일본 외상의 서울방문과 기본조약 초안작성이 이루어지는 등 회담이 급진전되어,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4개의 협정과 25개 문서)에 조인하고 동년 12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의의】** 일본과는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과거로 인해 막혀있던 문호를 상호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보면에서 동북아에서 소련·중국·북한의 공산세력에 대응하는 한·미·일 자유진영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일변도의 경제협력의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배상금으로 한국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핵심어】** 한일회담/미국의 아시아전략/김·오히라 메모/한일기본조약

**【참고문헌】**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 백서』(1974).

**【사진자료】** 386. 19650622 한일 회담 비준서에 서명모습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한일회담과 한일수교

**【소항목】** 한일관계 기본조약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문제
● 한일관계 기본조약	한일수교와 차관도입
6.3한일회담 반대 시위	

**【정의】** 1965년 6월 22일 해방 이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대신 시나 에쓰사부로(推名悦三郎),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다.

**【원인·배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과제는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우호관계수립과 국가건설을 위한 자립경제 기반의 확립이었다. 일본식민통치로부터 막 벗어난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므로 이승만정부의 외교정책은 친미·반일 성향이였다. 당시 「평화선」을 둘러싼 어업분규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던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었고, 미국의 입장은 동서 양극체제하의 냉전 속에서 동북아의 자유 진영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결속이 아시아 전략에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 8일)에 따른 청구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첫 한일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전개】** 약 14년간의 협상 끝에 1965년 6월 22일에 일본 동경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가 서명되어 동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비준서교환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조약은 전문, 본문 7개조 및 말문으로 구성되고, 부속하는 4개의 협정에는 ① 어업에 관한 협정, ②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③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④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5개의 문서는 협정 부속서 2부, 교환 공문 9부, 의정서 2부, 구술서 4부, 합의 의사록 4부, 토의 기록 2부, 계약서 2부, 왕복 서간 1부 등이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 양국 간 외교·영사 관계의 개설과 대사급 외교사절의 교환 ②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무효 확인 ③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인정 ④ UN헌장의 원칙에 따른 양국의 상호관계 설정 ⑤ 무역·해운 그 밖의 통상 관계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을 위한 조속한 교섭 시작 등이다. 그 외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은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은 양국 연안 12해리의 어업 전관 수역과 어업 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 규제 수역 등을 설정하였으며,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통해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제통치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 기본조약에 의해 한일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후에 일제 강점하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의의】** 1966년~1975년에 걸쳐 도입된 5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과거사문제는 유보한 채 불완전한 협상이었고, 한일조약은 불완전한 전후청산으로 끝나 후일 한·일관계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양국의 긴장과 갈등의 씨앗으로 남게 되었다.

**【핵심어】** 한일기본조약/재일교포/어업협정/문화재협정/과거사문제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편, 『대일청구권 자금 백서』(1976);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외교통상부, 2009).

**【사진자료】** 387. 196506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협정' 조인식 장면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한일회담과 한일수교

**【소항목】** 6·3한일회담 반대 시위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관계 기본조약	한일수교와 차관도입
● 6.3한일회담 반대 시위	

**【정의】** 1964년 6월 3일을 전후로 약 1년 반 동안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군사정권의 비민주적인 통치행태에 맞서 싸운 학생 및 일반인들의 반대시위를 말한다.

**【원인·배경】**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소장은 19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민선 대통령이 되었다. 목표인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미 미국의 원조감소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배상금(청구권)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듬해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을 내세워 「한·일회담」을 서둘렀다. 외적으로는 세계전략 구도 하에 미국과 일본의 조율을 거쳐 추진되었고, 내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이 결여된 군사정권이 정치자금과 경제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대일협상과정에서 저자세와 내용상에서도 미비점을 면하지 못하였다. 점차 「한일회담」의 타결이 임박하자 대학가를 중심으로 굴욕외교에 대한 한일회담반대시위가 격화되었다.

**【발발】** 집권 이후 비밀리에 대일협상을 진행해 오다 1964년 2월 29일 대통령의 진해회견에서 3월중 정치적 타결의지를 표명하고 3월 12일부터 본회담 재개와 회담타결은 본궤도에 오르고, 반대운동도 본격화되었다. 1964년 3월 23일에 민주공화당 의장인 김종필이 5월 까지 한일협정을 조인할 것이라는 회담타결 방침을 밝혀, 3월 24일 서울시내 대학들이 연합해서 시위가 발생하였다. 6·3반대시위의 서막인 것이다.

**【전개】** 1964년 3월 24일, 전국 주요도시(약 8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지방에서 약 5천명, 서울에서는 4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3월 26일 학생들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30일에는 종합대학 11개교의 학생대표단과의 면담에 임하는 등 다소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4월 1일에 이른바 「김·오히라메모」가 공개되고, 4월 11일 다시 학원사찰이 문제가 되면서 4월 17일부터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이 시위에 돌입하였다. 4월 19일을 기해 학생들은 반대운동보다 학원문제의 비판에 집중하며

소강상태를 보인 시위는 회담을 계속 추진하자 4·19정신의 계승을 외치며 다시 전국적인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한일굴욕외교반대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학생 3천여 명, 시민 천여 명)를 열고 기존의 「한·일회담 반대」라는 구호에 더해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군사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하며, 반정부시위로 돌입하였다. 군인들의 범원난입사건과 서울대 교수들의 결의문 낭독 등의 사태는 시위의 흐름을 고양시켜 6월 3일 학생시위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초점도 회담반대에서 「박정권 하야」로 바뀌며 일반시민이 합세한 5만여명이 국회의사당(지금의 서울시의회건물)으로 전진하여 청와대쪽의 경찰저지선을 뚫고 나갔다. 당일 오후 8시,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하여 3개월 가량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였다. 이후 7월 29일에 해제될 때까지 옥내외 집회 일체금지, 대학휴교,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 통행금지시간 연장 등 폭압적 조치가 취해졌다. 계엄령하인 6월 22일, 「한일회담」은 타결되었다.

**【결과】** 참가학생 117명 등 150명이 구속되고, 352명이 학교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필요와 식민지 피해청산을 차관으로 무마하겠다는 일본 측 요구가 충족되었다.

**【의의】** 6·3반대시위는 군사정권에 대한 최초의 대중적 저항운동이었다. 자주적 한일관계의 정립, 매판자본 반대와 민족자본 육성 등을 주장하였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한국 학생운동의 두 가지 이념으로 정립되었고, 향후 군사독재에 맞선 학생운동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였다.

**【핵심어】** 한일회담/6·3반대시위/4·19혁명/5·16군사정변/저항운동

**【참고문헌】** 박찬승, 「6·3학생운동의 이념」, 『한국민족운동사연구』(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요시자와 후미토시, 「한국에서의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전개」, 『중한인문과학연구』 6권 1호(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1).

**【사진자료】** 388. 19650603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를 외치는 학생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한일회담과 한일수교

【소항목】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회담	●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관계 기본조약	한일수교와 차관도입
6.3한일회담 반대 시위	

【정의】 일제 식민통치의 압박과 수탈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침략 행위에 대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을 말한다.

【원인·배경】 한국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결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가자격이 배제되어 전승국으로서의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의 길이 막혔다. 이로써 대일청구권의 법적인 근거는 1945년 8월 9일 당시 또는 그 후의 모든 일본국 및 일본인(법인 포함) 재산은 1945년 12월 6일자 미군정령(승) 제33호에 의해 동년 9월 25일자로 미 군정청에 귀속되었으며, 이 귀속재산은 다시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한·미 재산 및 재정협정」에 의해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는 데 두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4조 B항은 일본으로 하여금 재산처분의 효력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에게 8개 항목의 재산청구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전개】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에서 대일청구권 8개 요강을 제시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① 1909년~1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에 반출된 지금(地金) 249t, 지은(地銀) 67t, ② 조선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반제(返濟)해야 될 각종 체신국(遞信局)의 저금·보험금·연금, ③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④ 재한(在韓)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대체(對替)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인의 재일(在日)재산, ⑤ 징병·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수당과 보상금, ⑥ 종전 당시 한국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등의 6개 조항과 지불 방법에 관한 2개 조항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 측은 미군정령 33호에 의거 귀속재산 및 대한(對韓)청구액이 대일(對日)청구액보다 많다며 도리어 역(逆)청구권을 주장하였다. 「강화조약」 제4조에 관한 미 국무성 유권해석(1952.4.29)은 제4조 B항에 의거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단, 4조 B항의 「특별협정」을 맺을 때 한국이 일본 사유재산을 취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57년 12월 31일에 한·일간에 미

국무성의 해석과 쌍방이 동일시한다는 「합의의사록」이 공포됨으로써 역(逆)청구권 주장은 취소되었다. 1960년 10월 제5차 예비회담에서 6개의 청구요강을 항목별(5항까지)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한국 측은 6개 항목은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가 확실하므로 전 한반도의 청구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일본 측은 한국정부가 현실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법적근거와 증거관계가 확실한 부분은 변제하겠으나 청구 대부분이 법률관계와 증거관계가 불명확함으로 변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거증책임을 진 한국 측으로서도 입증이 곤란한 관계로 명목과 총액방식으로 정치적 일괄타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결과】** 196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경제발전전략과 연계된 경제협력방식으로 타결되었다. 두 차례(1962.10.20 및 11.12)에 걸친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합의된 청구권 자금규모는 무상공여 3억불을 10년간에 지불하고, 정부차관 2억불을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 1억불 이상으로 정하였고, 명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달리 설명할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제외되었다.

**【의의】** 협상이 타결된 결과, 일본과 경제적 교류의 확대와 동시에 대일청구권자금이라는 사실상의 외자도입을 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도리어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

**【핵심어】** 대일청구권/역청구권/대일청구권자금/김종필·오히라 회담

**【참고문헌】** 김광욱, 「한일회담 청구권의 성립과정과 전개에 대한 이해」, 『동아시아역사연구』 Vol.1(동아시아역사연구회, 1996); 이원덕,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Vol.12, No.1(1996).

**【사진자료】** 389. 19650705 민간 대일청구권 보상촉구 대의원대회(부산)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한일회담과 한일수교

**【소항목】** 한일수교와 차관도입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관계 기본조약	● 한일수교와 차관도입
6.3한일회담 반대 시위	

**【정의】**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한일기본조약」 내 4개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한·일수교에 따른 정부간 및 민간상업 차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원인·배경】** 1960년대 경제발전에 필수요소인 경제개발자금(자본)의 도입을 꾀하려는 한국과, 경제진출의 돌파구(시장)를 찾으려는 일본이, 정치적 경제논리에 따라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대일청구권자금이 도입되었고 이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일련의 논의와 조치들이 구체화되었다.

**【전개】** 1965년 12월 17일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국회를 통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경제개발자금으로 이용하여 모든 국민에 균등한 이익을 주고 후손에 물려줄 대단위 사업에 우선 사용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한 「대일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1966년 2월 19일에 제정하고 이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일청구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생기는 원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민간보상문제를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하여 1966년 4월 2일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관리·운용된 대일청구권자금은 1966년부터 10년간 연차적으로 자금도입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다. 일본과 협의하여 청구권 사용방안중 제1차년도 실시를 1966년 4월 20일로 결정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4월 27일 공고됨에 따라 5월부터 청구권자금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현재 대일본채권의 추산액인 무상(無償)자금 3억 달러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생산물로 무상으로 제공하되, 협정 당시 대일채무 4,573만 달러는 상계하기로 하였다. 유상(有償)자금 2억 달러는 상호독립·주권존중·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공동이익의 증진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제공하며 10년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을 연리 3.5% 저리의 공공차관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농림업에 3,966.7만 달러(7.9%), 수산업 2,718.5만 달러(5.4%), 광공업 28,011.9만

달러(56.0%), 과학기술개발 2,027.2만 달러(4.1%), 사회간접자본건설 8,688.9만 달러(9.2%), 총 5억 달러(100%)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였다. 특히 단일사업으로는 무상 3억 달러 중 3,080만 달러, 유상 2억 달러 중 8,868만 달러가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되었는데 사용처에 대한 규정 때문에 한·일간에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결과】** 무상자금은 농어민소득증대에 집중 사용하였고, 또한 각종 과학기술연구기기 및 각급학교 실험실습기자재 도입과 산업연관효과가 자본재 도입에 주로 투자되었다. 유상자금은 소양강다목적댐·산업기계공장·경부고속도로 등의 건설과 농업수산 및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발전통신시설의 확장 등에 충당하였다. 원화자금은 농수산진흥·과학기술의 개발·국토개발의 사업 지원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주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제외하고는 유동성 자금의 효율성은 높지 않았다.

**【의의】** 청구권자금 유입으로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충당되어 196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국제금융기구의 신뢰도를 높여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자금도입에 유리한 역할도 하였다. 청구권자금 도입으로 한·미·일 3국간의 시장이 확대·개방되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지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청구권 자금은 일본상품의 구입의무가 붙어 있었고, 운수통신·전력·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본자본의 한국진출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일(對日) 경제중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핵심어】** 무상자금/유상자금/포항제철/대일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한·일수교/경제개발 5개년계획

**【참고문헌】** 최영호, 「한국정부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 과정」, 『한일민족문제연구』, Vol.8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경제기획원 편, 『대일청구권 자금 백서』(1976).

**【사진자료】** 390. 1965 국제 차관단 방한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소항목】**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0억불 수출 달성
수출제일주의 정책	울산공업센터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계획의 1차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년 전부터 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거기에는 향후 5년 동안에 달성할 총량 목표는 물론, 그것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제도 개혁과제와 경제부문별 계획과 구체적인 투자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국민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배경】** 박정희 정부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총 4차례 작성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962년에서 1966년까지 시행되었고, 제2차 계획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 제3차 계획은 1972년에서 1976년까지, 제4차 계획은 1977년에서 1981년까지 시행되었다. 통상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계획 시작 2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 최초의 시도는 경제기획원에서 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계획 작성지침에는 실제 계획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실태 및 대외 경제여건과 경제개발계획이 목표로 삼아야 할 총량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중점과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상의 계획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정부 관계 부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다시 종합·조정하여 완성된다.

**【시행】**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지향한 기본 목표로서 일관되게 강조된 것은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계획의 차수마다 차이가 있었다. 제1차 계획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정유, 비료, 시멘트, 화학섬유, 기계, 철강 등)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제2차 계획부터는 기간산업의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공업 부문에서의 수출지향공업화가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초기의 수출지향공업화는 경공업 제품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중화학공업제품도 점차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제3차 계획부터 경제계획의 기능이 변화하였다.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에서는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제3차 계획부터는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경제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의 기능이 변하면서 경제계획의 작성도 초기에 경제기획원 중심으로 작성하던 것에서부터 점차 정부 관계부처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결과·의의】**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정부시기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계획에 제시한 목표 성장률과 실제의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계획 기간 동안의 연평균 목표 성장률은 7.1%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8.5%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각각 7%와 9.7%였으며, 제3차 계획에서는 8.6%와 10.1%였다. 물론 정치적 변화와 오일쇼크 등 대내외 정치경제가 급격히 변화한 1970년대 후반에는 실적치가 목표치를 하회하여 제4차 계획에서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목표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핵심어】** 제2차 경제개발계획/제3차 경제개발계획/제4차 경제개발계획/자립경제/경제기획원/계획 작성지침/기본목표/중점과제/목표성장률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20년사』(경제기획원, 1982); 강광하·이영훈·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KDI, 2008).

**【사진자료】** 391. 197007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소항목】** 수출제일주의 정책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0억불 수출 달성
● 수출제일주의 정책	울산공업센터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의】** 수출제일주의 정책이란 박정희 정부시기에 수출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취해진 다양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도 포함되며, 또한 금전적 보상과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수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 제도적 요인도 포함된다.

**【배경】**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때는 성장 지향적인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였다. 이때에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를 도입해야 했을 뿐 아니라, 산업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요구되는 중간재, 원료와 연료에 대한 수입을 증대시켜야 했기 때문에 외환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었다. 이런 배경 위에서 박정희 정부하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행】** 수출제일주의 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64~1965년간에 시행된 환율현실화 조치였다. 1961년 2월 1일에 환율은 1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그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변경되지 않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1964년 5월 3일에 환율을 256원으로 인상시킨 것은 시장 실세와 크게 괴리되었던 환율을 시장 실세에 근접시키는 것이었고, 아울러 악화된 수출 경쟁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환율이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이 또한 요구되었다. 재정지원정책에는 관세 감면(1975년 이후에는 관세 환급 포함), 직접세 감면, 간접세 감면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는 데, 이 중에서 관세 감면이 직접세 및 간접세 감면보다 수출지원 규모가 더 컸다. 금융지원정책에는 단기 수출금융과 중장기 수출금융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는 데, 단기 수출금융이 수출지원 효과가 컸다. 이상의 정부 수출지원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것을 수출 1달러 당 보조금이라고 할 때, 그것은 1965년 33원이었고, 그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72년 108

원까지 증대되었다가 그 이후 다시 100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제일주의 정책은 상기한 환율,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에 더해 금전적 지원과는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수출을 촉진한 제도적 요인도 포함된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회의는 1965년 2월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거의 매월 개최되었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개최된 회의 중에서 다섯 차례를 제외하고 매월 참석하였다. 수출 촉진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대통령이 매월 참석했다는 것은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수출 기업에게 수출 증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수출이 빠르게 성장했던 것은 이 회의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결과·의의】** 1961~79년간의 연평균 수출성장률은 39%였는데, 이것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수출액이 2배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의 수출액은 41백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1971년에 10억 68백만 달러로 증가했고, 1979년에는 150억 56백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이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1~79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6%를 기록하였다.

**【핵심어】** 재정지원정책/금융지원정책/수출지향공업화정책/환율현실화조치/관세(조세)감면/수출금융/수출보조금/수출진흥확대회의

**【참고문헌】** 이상철, 「수출주도공업화전략으로의 전환과 성과」, 이대근 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나남, 2007); 최상오,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1960년대 초 이후 급속한 수출 성장 원인에 대한 일 고찰」, 『경영사학』 제25권 제3호(2010); 최상오,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1979-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경영사학』 제25권 제4호(2010).

**【사진자료】** 392. 19771222 100억불 수출의 날 기념식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소항목】**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0억불 수출 달성
수출제일주의 정책	울산공업센터
●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의】** 외자도입정책은 경제개발계획에 제시된 계획사업이나 경제개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기업의 요구가 있는 비계획사업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외국자본을 외자도입법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배경】** 1950년대에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외자는 경제원조를 통해 공급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이후 원조가 감소하면서 원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외환공급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1960년대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 우리 경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은 외국자본에 의해 조달될 수밖에 없었다.

**【시행】** 외국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최초의 외자 관련 법률은 1960년 1월 1일에 ‘외자도입촉진법’(법률 제533호)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실적은 전무하였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1962년 7월 31일에 제정된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호)과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채 도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16호)이었다.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은 민간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자본을 도입할 때, 상환의 불확실성 때문에 차관 도입이 어렵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상환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줌으로써 민간 기업의 차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의 세 개의 법률은 1966년 8월 3일에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으로 통합되었다. 이제까지 공공차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부는 1973년 2월 16일에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519호)을 제정하여 외자도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완비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자 정부는 차관 중심으로 외자를 도입하였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후반은 외자도입정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외국자본을 도입한 이후 기업실적이 악화되어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부실기

업이 발생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도입하려는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3월 2일에 '외국인 투자비율 조정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50대 50의 합작 투자 비율이 정해졌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기간 내내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저조하였다.

민간 기업이 외국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기획원에 사업계획서와 외자도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경제기획원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경제성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자도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결과·의의】** 외자도입 실적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었다. 1962년 외국자본 도입액은 500백만 달러였고, 1970년에는 6억 42백만 달러, 1980년에는 30억 76백만 달러였다. 1962~1980년간의 외자도입 총액은 195억 34백만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차관이 93%를 차지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7%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외국자본은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중화학공업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핵심어】** 외자도입정책/계획사업/비계획사업/외자도입법/차관/외국인 직접투자/경제기획원

**【참고문헌】** 재무부, 『한국경제와 외자도입』(재무부, 1991); 재무부·한국산업은행, 『한국 외자도입 30년사, 1963~1993』(재무부, 1993); 강석인,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범신사, 1995).

**【사진자료】** 393. 1964 사업별 담당관 외자도입 추진상황 보고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소항목】**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0억불 수출 달성
수출제일주의 정책	울산공업센터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시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1~1979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6%였는데, 이것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과 산업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제1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제2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변화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경공업 비중은 줄어들고 중화학공업 비중이 늘어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달성되었다.

**【배경】** 박정희 정부는 두 가지 점에서 이승만 정부 및 민주당 정부와 크게 차이가 있었다. 우선 박정희 정부는 성장 지향적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감소세에 있던 성장추세와는 달리 높은 목표 성장률을 책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전담부서로서 경제기획원을 설립했고, 경제기획원 주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제1차에서 제4차까지 작성하였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집행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개발계획에 제시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자원과 해외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는데, 그것은 일반은행 국유화 조치와 정부 승인 하에서만 외자도입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행】**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과 산업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처음부터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제1차 경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산품의 수출보다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과 같이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을 강조했으나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공산품 수출이 중요하다는 인식 위에서 1964년을 전후하여 공산품 수출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수출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형성된 1960년대 중후반부터 수출책임제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도입하여 그것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결과

1961~1979년間に 연평균 수출성장률은 무려 39%에 도달하였다.

산업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고성장체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였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일부 중화학공업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외환 수요를 줄일 수 있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수출산업을 건설·육성할 수 있었다. 가령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정유공장,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화학섬유공장 등이 건설되었고, 제2차 계획 기간에는 종합제철공장, 석유화학콤비나트 공장 등이 건설되었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건설계획을 통해 기계, 전자, 조선, 화학, 철강, 비철금속 분야가 건설·육성되었다.

**【결과·의의】** 박정희 정부 하에서 매년 빠르게 성장한 결과 경제구조는 크게 변하였다. 국민총생산에서 제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 41%에서 1970년 28%, 1979년 22%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제2차 산업은 각각 17%, 26%, 3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업(제2차 산업)이 성장하는 속에서 특히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중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36%, 1970년 46%, 55%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상의 공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수출상품에서도 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962년에는 26%였고, 1970년에 81%, 1979년에 90%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업제품 중에서는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각각 27%, 16%, 45%로 증가하였다.

**【핵심어】** 수출지향공업화정책/산업정책/경공업/중화학공업/중화학공업건설계획/경제구조/공업구조의 고도화

**【참고문헌】** 강광하·이영훈·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KDI, 2008); 이제민, 「한국의 산업화와 산업화정책」,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예비적 고찰』(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사진자료】** 394. 1960 구로공단 내 가발 수출공장(1960년대)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소항목】** 100억불 수출 달성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 100억불 수출 달성
수출제일주의 정책	울산공업센터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의】** 박정희 정부는 수출성장이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출의 급속한 성장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상정하였다. 그래서 1972년 초부터 10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 수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수출계획안에 따르면 1980년에 1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는 그것보다 훨씬 앞선 1977년에 1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하였다.

**【배경】**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성장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런 전제 위에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9년에 중장기적인 수출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0년 2월에 1971~8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수출계획과 목표달성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69년의 수출액 7억 3백만 달러를 1980년에 53억 56백만 달러로 증가시켜,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20.3%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이 수출계획안은 1972년부터 훨씬 의욕적인 수출계획안으로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100억불 수출계획안이 언제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1970년에 작성한 장기수출계획안을 바탕으로 1972년 초부터 100억불 수출계획안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1972년 11월 30일 제9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시행】** 100억불 수출계획안에 따르면, 1971년에 13억 52백만 달러에서 출발하여 1980년에 100억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기한 1970년에 발표된, 장기수출계획안과 비교해보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수출계획안이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장기수출계획안에서는 1980년에 53억 56백만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불 수출계획안에서는 그것을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로 책정하였던 것이다.

수출목표는 민간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는 이러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방향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출금융과 조세상의 지원정책 등이 포함되는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을 시행했고,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수출목표를 책정하고 그것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던 것도 중요하였다. 이 수출진흥확대회의에는 대통령이 거의 빠지지 않고 매월 참석하여 정부 관료나 민간기업에게 수출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결과·의의】**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빨리 달성하였다. 100억불 수출계획안에 따르면, 1980년에 1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이 목표는 1977년에 달성하였다. 또한 수출실적은 수출목표를 매년 초과달성하여 1980년에는 172억 14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수출계획에 비해 무려 1.7배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수출이 매년 빠르게 성장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을 높게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핵심어】** 장기수출계획안/100억불 수출계획안/수출의 날/경제성장률/수출지원정책/수출진흥확대회의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20년사』(경제기획원, 1982); 상공부, 『무역진흥 40년』(상공부, 1988); 강광하·이영훈·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 결정체계-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KDI, 2008).

**【사진자료】** 395. 19712 광화문 네거리에 만들어진 '100억불 수출의 날' 기념 아치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소항목】** 울산공업센터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0억불 수출 달성
수출제일주의 정책	● 울산공업센터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배경】** 박정희 정부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1950년대 후반부터 원조 감소의 결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던 당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7.1%의 연평균 목표성장률을 채택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종합제철 공장, 정유공장,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화학석유공장, 종합기계제작 공장 등 총 36개의 투자 사업을 계획하였다. 민족자본의 축적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이상의 기간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대기업을 활용하여 상기한 기간산업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61년 8월에 이정립을 단장으로 하는 외자도입 교섭단과 11월에는 이병철을 단장으로 하는 외자도입 교섭단을 각각 유럽과 미국으로 파견하여 기간산업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도입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시행】** 울산공업단지는 미국에 파견된 외자교섭단과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 오간 논의 과정에서 발단이 되었다. 미국 기업인들은 한국 측 교섭단에게 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우선 공장건설을 위해서는 수송, 전력, 공업용수, 교통, 인력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업지구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27일에 '특정 공업지구 결정의 건'(각령 제403호)을 공포하여 울산 공업지구로 지정하였다. 미국 기업인들로부터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를 빨리 조성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센터(후에 울산공업단지로 변경)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이 끝난 이후 1962년 3월에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실업인단에게 초청 전문을 보냈다. 밴플리트 장군을 단장으로 한 미국 경제사절단은 2주일 일정으로 1962년 5월 11일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제너럴 모터스, 다우 케미컬 스탠더드 오일, 웨스팅 하우스,

포드자동차 등 세계 굴지의 기업 대표가 참여하였다. 미국 측 실업인과 울산종합제철공장과 PVC 공장 건설 등 몇몇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이것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추진한, 용량 35,000배럴의 정유공장 건설계획은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외자를 정부보유불로 충당한 결과 공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1964년 5월 7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정유공장은 제1차 5개년계획의 중추사업이었으며, 아울러 울산공업단지에 들어선 최초의 공장이었다.

**【결과·의의】** 그 이후 울산공업단지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초기의 정유공장 이외에도 비료공장, 화학섬유공장, 석유화학 콤플렉스, 비철금속공장, 자동차공장, 조선공장 등 각종 중화학공업 공장들이 계속 입주하여 오늘날에는 한국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62년 제조업 생산액 2억 원, 수출액 26만 달러에 불과하던 울산시 제조업은 2004년에는 각각 74조 7,470억 원과 375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핵심어】** 울산공업단지(울산공업센터)/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정유공장/외자도입교섭단/미국 경제사절단

**【참고문헌】**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엔지니어링 어프로치』 1(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5); 장병익, 『울산 산업사』(울산발전연구원, 2006).

**【사진자료】** 396. 1962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

**【소항목】** 마산수출자유지역

제2차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0억불 수출 달성
수출제일주의 정책	울산공업센터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지원 금융제도	● 마산수출자유지역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0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1970년 3월 16일에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지정 고시되어 그 이후 임해공업단지조 조성·건설된 것을 말한다.

**【배경】**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그 최초의 구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8년 11월에 임해공업벨트지대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1969년 1월 20일에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임해지대에 특수 자유지역을 조성하여 수출을 증대시키자는 주장으로 다시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런 주장에 근거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정부가 민간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는 외자도입정책에 변화를 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외자도입정책은 차관을 도입하여 수입대체 산업이나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1960년대 후반에 차관기업 부실화하면서 차관과 달리 상환의 부담이 없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아울러 고려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행】** 민간과 정부에서 작성된 수출자유지역 건설안은 1969년 6월에 확정되어 동년 7월 3일에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출자유지역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위원회에서는 1969년 8월 5일에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1970년 3월 16일에 마산수출자유지역 제1공구(총 3공구가 있음)를 지정고시하였고, 4월 3일에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진행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의 제1공구는 수출자유지역 지정고시 이후 단지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71년 말에 완공되었고, 이후 제3공구가 1972년 12월 12일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고 단지조성사업이 시작되어 1973년 6월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현황을 보면,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970년에 4

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단지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입주업체 수는 증가하였다. 1971년의 총 입주업체 수는 22개였고, 1973년 115개, 1975년 105개, 1977년 99개, 1980년 88개 업체였다. 이들 입주 업체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1974년 7월 기준), 전자 및 기계기구가 22.3%, 화학분야가 13.5%, 금속분야가 11.2%, 섬유분야 6.7%를 차지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해 보면(1974년 7월 기준), 일본인 단독투자업체가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합작투자업체는 21.3%,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단독투자업체는 4.5%여서 마산수출자유지역에는 일본인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결과·의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르면, 수출자유지역의 설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증대라고 할 수 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한 1971년부터 수출은 이루어져, 1971년 856천 달러였고, 1973년 7천만 374천 달러, 1975년 1억 74백만 803천 달러, 1977년 3억 67백만 918천 달러, 1980년 6억 28백만 100천 달러였다. 이 기간 동안 수출은 무려 804배 증가했고, 이것은 당시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마산수출자유지역/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진흥확대회의/외자도입정책/외국인직접투자/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

**【참고문헌】** 상공부·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수출자유지역15년사』(1987); 이상철,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과정」, 『경제발전연구』 제14권 제2호(한국경제발전학회, 2008).

**【사진자료】** 397. 1970 마산수출자유지역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항목】**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다목적댐 건설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에너지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시가스 건설
경부고속도로	

**【정의】** 1960년대 이래 모색해 온 국토개발전략을 집약하여,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전국의 국토계획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토자원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종합적·장기적인 최초의 계획을 말한다.

**【배경】** 그동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는 국토개발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1960년대의 경제개발은 생산성이 높은 공업부문에 역점을 두어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에만 대규모 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둘째, 경제개발에 따라 수송·전력·통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설확대가 필요하였다. 셋째, 1960년대 이후 공업화과정에서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집중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였고, 넷째 국민소득 증대와 수출확대로 사회경제적인 여건도 변화하였다. 생산시설에 대한 연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요구가 급증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 계획이 추진되었다.

**【시행】** 이 계획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네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제의 능률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둘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개발기반의 확립, 셋째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대규모 공업단지의 개발 때문에 파괴되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며, 넷째 도시문제의 개선과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첫째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공업단지의 개발과 국민총생산의 극대화, 둘째 대도시와 각 지역 및 산업 중심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통·통신·에너지 공급망의 확충 정비와 생산의 능률화를 기하고, 셋째 개발의 편중으로 발생하는 낙후지역(농촌)에 대한 지역기능의 강화 등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거점개발과 권역별 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성장거

접지역(서울과 인천, 부산과 울산 등)의 도시에 투자를 집중하여 도시의 성장을 유도하고 그 후 점차적으로 도시의 성장이 주변지역으로 확산하여 전체 지역을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국을 4대권·8중권·17소권으로 구분하고, 4대권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중심으로 수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도단위 행정구역 중심으로 한 8중권을 개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7소권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자립적인 개발을 이룬다는 계획이었다. 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1970)을 비롯한 많은 관계법령과 제도를 마련하였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도시에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을 지정하였다.

**【결과】** 국토개발 투자실적은 17조 3,790억원(1975년 가격)으로 당초계획보다 24%가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50만원(1975년 기준)을 투자하였다. 주택·전력·도로·통신 등 4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0%이며, 치수사업이나 환경오염방지, 도시의 상·하수도분야 투자비중은 낮았다. 계획기간 중 전반 5년간은 서울 지하철(1974)을 비롯하여 도로·항만정비·철도·공단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에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후반 5년은 주택 및 교육을 비롯한 사회개발분야와 도로·해운·항공 등 수송수단 간의 종합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였다.

**【의의】** 성장거점과 같은 권역별 개발정책을 통하여 공업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채택한 공간 선택적 거점개발방식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집중과 국토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토지자원의 부족현상과 환경오염문제도 야기하였다.

**【핵심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거점개발/권역별 개발방식/개발제한구역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VI(한국개발원, 2010); 국토개발연구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분석』(1982).

**【사진자료】** 398. 1972 한강 유역 개발이 한창인 반포지구 주변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항목】**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다목적댐 건설
●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에너지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시가스 건설
경부고속도로	

**【정의】**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인구의 지방정착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토계획의 기본 구상으로, 국토의 미래상을 전망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배경】** 1960~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발전과 산업 및 사회구조의 기반위에서 도·농간의 불균형성장, 토지이용의 무질서와 부동산 투기, 도시 시가지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 농경지의 지나친 잠식과 자연자원의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하였다. 한편 국제화시대 도래로 새로운 국토개발의 수요가 일어나고 특히 지역 간의 격차문제에 대한 대응, 심화되는 수도권 경제 및 인구집중 억제, 토지공개념 도입, 서해안개발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

**【시행】**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전략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다핵구조화·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통합하는 광역개발방식·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투자의 적정배분·낙후지역의 증점개발·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확대 등 이다.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전국을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세분하여 총 28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거점개발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크고 지역서비스 기능을 갖춘 주변낙후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있는 15개의 성장거점도시를 선정하였다. 다시 이 거점도시 가운데 대전, 광주, 대구 등은 국토의 다핵적 발전을 위한 3대 핵으로서 서울과 부산을 지향하는 인구수용 및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1차 성장거점도시로 개발하고, 나머지 12개 지방도시는 2차 성장거점도시로 도청소재지와 지역중심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이 크고 중심성이 강하여 지방발전과 서비스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에 공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4~1996년)이 수립되어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였다.

**【변천】**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수도권 집중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년)이 수립·시행되었다. 인구와 산업 그리고 각종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침체와 쇠퇴를 거듭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계획에서는 기존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기타권 등의 각 권역의 대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여기에 중추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결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투자실적은 137조7,510억원(1985년 가격)이었고, 국민 1인당 340만원(1985년 기준)을 투자한 액수이다. 집중 투자된 분야는 1970년대와 같이 주택 분야로 총 투자액의 38.5%(53조 870억원)이고, 에너지, 통신, 도로, 도시개발의 순이었다. 이들 5개 부문의 투자가 전체 투자의 71%를 차지하였다. 균형개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투자가 경제적 효율성과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 간의 양극화와 국토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아시안게임(1986)과 올림픽(1988) 개최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땅투기 문제가 노정되어 토지공개념도입과 토지투기억제 노력도 하였다. 또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환경오염(수질오염)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토환경의 쾌적성이 낮아졌다. 이후 국토개발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핵심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부동산투기/토지공개념/환경오염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VI(한국개발원, 2010); 대한민국정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1982).

**【사진자료】** 399. 1973 국토개발사업으로 간척지 조성중인 아산만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다목적댐 건설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에너지 확보
●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시가스 건설
경부고속도로	

**【정의】** 사회간접자본(SOC)이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 ① 산업기반시설(도로·항만·토지개발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공영주택·공원·학교·병원·보육·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치산·치수·해안 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의 앞부분 만을 따서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한다.

**【원인·배경】** 1962년 이후 경제개발은 성장과 개발에 대한 의욕이 가득찬 시기였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은 국가발전의 초석이며, 생산활동을 간접지원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간 분업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경제기반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전력·용수 및 수송 등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전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은 기간산업의 수입대체를 위한 공업화와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섬진강, 동진강 등 주요 하천유역의 관개 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울산정유공장 기공(1963년), 쌍용시멘트공장, 부산화력발전소(1964년), 제2한강교 및 경인복선 개통, 춘천 수력발전소 및 섬진강 다목적댐 준공(1965년), 경북선 개통, 대단위 주택 조성 등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이 시행되었다. 제2차 계획(1966~1971)동안에는 공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1966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계획이 수립되어 다목적댐의 건설이 가속화되었고, 「공업단지개발법」의 제정으로 구미·창원·포항·반월 등지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경인고속도로(1967년), 경부고속도로(1968년) 등이 건설되어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2차계획기간 동안에 건설된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추이를 살펴보면, 첫째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목적댐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둘째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철도 운송 시설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투자가 저조한 도로부문(운송문제)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었는데, 제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산업시설의 지방분산 및 단거리 수송의 기동성 등의 필요로 철도중심에서 자동차 수송체계로 전환하였다. 셋째 상수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사업의 실시와 항만 건설도 추진되었다.

**【결과】** 1962년의 전기·수도·운수·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액(1970년 불변가격)은 449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71년에는 2,377억 원에 달하였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사회간접자본 형성액은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았는데 총고정자본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비중은 대체로 30%를 초과하였다. 이 밖의 넓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인 주택·학교·후생 및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면 총투자에서 5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결과 연평균 성장률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동안에 8.5%, 제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11.4%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사회간접자본 부문 확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성장을 선도한 결과인 것이다. 수송·전력·용수 등 국토건설사업에 중점투자하고 주택·통신·교육·보건위생·과학기술·관광 기타 서비스 순위로 개발을 병행시키는 사회간접자본 주도형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핵심어】**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공업단지/고도성장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김종기, 「사회간접자본투자(1970~85)가 지역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3호(한국개발연구원, 1987).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항목】** 경부고속도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다목적댐 건설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에너지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시가스 건설
● 경부고속도로	

**【정의】** 1968년 2월 1일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약 2년 5개월)에 개통된 서울 제3한강교 남단을 기준점으로 하여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에 이르는 노선 총연장 428km로 최장의 국토중단 간선(幹線)고속도로이다.

**【배경】** 1963년 7월 「국토계획기본구상」을 수립한 이후, 1967년 5월 2일에 수정 보완된 「국토건설계획」에 서울-인천 간 6차선, 그리고 서울-수원 간 4차선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최초로 정부 문서에 명문화되고 1967년 4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고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생산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수송수요와 물동량이 급증하자 기존의 산업철도 중심의 수송수단이 감당하지 못하였고, 도로부문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로 육상수송문제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기간 수송망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시행】** 1967년 12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정식 발족되고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사무소」로 재편되면서 건설현장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고속도로 건설은 시기상조, 부자들의 행락용 도로 등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었다. 기본원칙으로 서울-부산 간 5시간 도달을 통한 1일 생활권화, 중·소도시 경유를 통한 지역의 종합발전, 공사비·통행료·유지비의 최소화, 4차선 규모로 4년 이내 완공, 대전-목포선·부산-광주선과의 연계 등이 고려되어 최종 노선을 확정하였다. 1968년 2월 1일 서울톨게이트(현 서초구 양재동)인 원지동 현장에서 첫 발파가 시작되고, 군·관·민의 연인원 900여만 명, 연장비 동원대수로 불도저 16만대 등 총 165만대, 16개 건설업체, 3개 군 공병대를 투입 총 429억 7천 3백만 원, 총면입토지 629만 평 등으로 1970년 7월 7일 완공된 그 당시로는 최대 토목공사이었다. 재원조달은 ① 일반회계에 계상된 석유류세법 중

휘발유의 세율 2배 인상, ② 95억 원의 도로국채 발행(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③ 대일청구권자금 27억 원, 통행료 수입 15억 원 등으로 330억원의 재원을 충당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용 용지매수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구획정리사업(서울의 과천·성남, 인천 등지)을 통해 무상으로 편입하고, 각 해당 행정단위에 「고속도로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발전을 위해 헌납하거나 싼값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여 매수한 토지는 모두 582만 7천여 평이었는데 그 매수금액이 13억 7,567만 3천 원으로 평당 평균 236원으로 매수하였다.

**【결과】** 1km당 약 1억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아직 1인당 GNP가 142달러(1967년 기준)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이 고속도로 건설장비, 인력 및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속도로시대의 서막을 올린 경부고속도로의 완성은 산업화의 혈맥인 육상운송체계가 갖추어져 각종 산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진입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고속도로 건설의 경험과 기술력의 발전으로 중동건설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무리한 공사일정과 경험부족으로 77명의 인적 손실과, 다소의 부실공사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 시대적 고통을 수반한 단군 이래 대역사(大役事)이었다. 1969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1970년대에 호남·남해·영동·동해고속도로 등이 개통되었고, 1980년대에는 88올림픽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가 추가로 건설되었다. 이후 중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를 완성하면서 고속도로가 국가기간 수송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2010년 말 현재 국내 고속도로는 총 31개 노선에 총연장이 4,000km에 이르러 세계 6위권의 고속도로망을 갖췄다.

**【핵심어】** 고속도로/1일 생활권/국토건설계획/기간수송망/대역사(大役事)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VI(한국개발원, 2010); 손정목, 「경부고속도로건설과 도시체계」, 『도시문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사진자료】** 400. 1968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박정희 대통령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항목】** 다목적댐 건설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 다목적댐 건설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에너지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시가스 건설
경부고속도로	

**【정의】** 홍수조절 및 방지·수력발전·관개(灌溉)·상수(上水)·도용수·공업용수 공급·수운(水運)등의 여러 목적으로 건설된 댐을 말한다. 다목적댐의 역사는 미국의 테네시강 종합개발(TVA)을 위해 윌슨댐 등 많은 다목적댐의 건설에서 비롯되었다.

**【원인·배경】**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자원의 확보와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1965년에 경제계획의 전략부문인 식량증산을 위한 가뭄방지, 공업화를 위한 용수공급, 홍수방지에 의한 국토의 유효이용과 생산증대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계획(1966~1975년)을 수립하였다. 1966년부터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한 유역조사 실시와 함께 수자원의 종합개발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1·2·3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산업구조에 있어서 공업화 추진, 사회구조의 도시화 현상,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용수수요는 급증하고 수요형태도 변화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공업의 고도화와 함께 용수다소비형 공업인 중화학공업육성으로 공업단지의 용수수요가 대량화하였고, 용수 수요형태면에서도 과거의 농업위주 물소비 패턴인 하천중심형에서 도시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합쳐 계절 구분 없이 용수소비가 평준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물수요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수(治水) 및 이수(利水) 목적을 조화시킨 다목적댐을 건설하게 되었다.

**【전개】** 1960년 이전에는 소규모 단일목적댐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전력생산을 위한 수력발전전용댐(충북 괴산)을 건설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4대강 유역의 수자원 종합개발(1965년)과 다목적댐 개발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조직의 일환으로 「특정 다목적댐법(1966년)」이 제정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1967년)가 창립되었다. 1965년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남강댐, 1973년 10월에는 북한강 지류인 소양강 하류에 소양강댐(높이 123m, 길이 530m인 한국 최초의 중앙차수벽식 사력댐)이 완공되었다. 이 댐에서 발전된 용수는 하류에 있는 의암·청평·팔당발전소에서도 이용되어 연간 6,100만kWh의 전

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 후에 안동댐(1977년), 대청댐(1981년), 충주댐(1986년), 합천댐(1989년), 주암댐(1992), 임하댐(1993년), 부안댐(1996년), 보령댐(1998년), 횡성댐(2000년), 용담댐(2001년), 밀양댐(2001년) 등 2005년에 완공된 장흥댐까지 총 15개의 다목적댐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수자원개발이 국토개발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댐건설 기술의 축적으로 많은 다목적댐들을 건설하였다. 한편,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 및 수몰이주민 이주정착금 지원 등 댐주변 지역 지원확대를 위해 1999년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댐의 상·하류 지역 간의 이해조정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확대, 친환경 공간 조성 등 지역과 환경이 조화되는 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과】** 15개소의 다목적댐에서 2005년 현재 홍수조절 용량 24억 6천 8백만t, 연간 용수 공급능력 1백 8억 8천만t, 연간 발전량 2천 3백 52GWh를 확보하고 총저수량은 125억 8천만t을 저장하여 이(利)·치(治)수에서 실질적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댐건설 및 국토개발 등으로 댐건설 적지가 감소되고 댐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와 수몰지역의 이주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대규모 다목적 댐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 유역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핵심어】** 다목적댐/경제개발 5개년계획/식량증산7개년계획/소양강댐/환경영향평가법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VI(한국개발원,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사진자료】**
- 401. 1961 섬진강댐 축조 공사
  - 402. 1969 남강댐 방수로 굴착공사
  - 403. 1990 장마 때 수문을 개방하는 소양강댐
  - 404. 1967 소양강댐을 공사를 돕기 위해 돌을 나르는 주민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항목】** 에너지 확보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다목적댐 건설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 에너지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시가스 건설
경부고속도로	

**【정의】** 에너지란 우리가 생활하거나 기계 등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원을 말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와 풍력, 태양열, 원자력 등에서 공급을 받는다. 현재 화석연료는 고갈되어 가고 있고 지구환경에도 피해를 주어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원인·배경】** 1960년대 이전에 에너지공급능력은 열악하여 장작과 숯(신탄) 그리고 석탄, 유류는 해외원조로 조달되었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최우선 과제였다. 전력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생산력의 극대화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전개】** 제1·2차 경제개발기간 중의 에너지 소비를 보면, 제1차기간 중 연평균 6.1%씩 증가하다가, 제2차기간 중에는 중화학공업 육성 및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9.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석탄의 경우, 비교적 국내의 풍부한 매장량으로 생산증대에 매진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 11월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게 하였다. 휴전후 1954년 6월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지원(총 1,495만 달러)으로 탄광 시설 복구 및 개발지원금을 받아 국내 석탄산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56년 3월부터 국유 탄광의 광업권과 시설을 민간에 불하하는 민영탄광개발정책으로 1955년 약 20여개에 불과하던 민영탄광이 200여개로 늘어났다. 정부의 최초 석탄증산계획은 1956년 「석탄개발5개년계획 및 연료종합5개년계획」이었는데 국내석탄시장의 급변으로 「석탄생산8개년계획(1959~1966)」으로 변경되어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승계되었다. 이러한 석탄증산정책과 민간의 활발한 석탄생산 증가로 1963년에는 거의 자급수준(자급률 98.5%)에 이르고 1965년에 1천만 톤을 생산하여 주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점한다. 석유의 경우, 1966년 겨울 연탄파동을 계기로 주유종탄(主油從炭)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석유류의 소비량도 총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1966년 16.6%에서 1971년 50.6%로 증가하였다. 석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1964년 2월에 울산에 미국 걸프사와 합작으로 일산(日産) 3.5만배럴의 정유

공장을 완성하였다. 1964년 11월에 영국·네덜란드계 로얄 더치 셸과 합작으로 극동석유(5천 배럴/일), 미국칼텍스와 합작으로 여수에 호남정유(6만 배럴/일), 1972년에 한국화약그룹과 미국유니온그룹이 경인에너지(5만 배럴/일)를 각각 설립하였다. 정부의 주유종탄정책과 경제발전에 따라 석유수요는 1966년 연간1,475만 배럴에서 1971년에는 7,101만배럴로 5년사이에 거의 5배가 늘어나 연평균 약 37%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전력의 경우, 전쟁후 훼손된 설비를 미국 등의 원조로 복구하였지만 전력공급의 부족은 계속되었다. 1961년의 경우 총발전설비용량은 36.7만kW로 최대 전력설비수요의 약 15만kW가 부족하였다. 부진했던 발전소건립이 내·외자를 투입하여 발전설비도 대폭 증가하게 된다. 제1차 기간 중 발전설비용량은 43.3만kW에서 76.9만kW로 연평균 20.4%의 증가율을, 제2차 기간 중 발전설비용량은 다시 263만kW로 연평균 27.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발전설비의 수력과 화력 비율은 1962년 33:67이었으나 1966년 28:72, 1971년 13:87로 화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 이와 같이 우리의 에너지산업도 석탄·전력·석유 등 각 부문별로 정부의 개발 의지와 육성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당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석탄의 경우 정부의 주도로 국내부존석탄자원을 개발·생산하는 가운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석유와 전력의 경우 정부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부족한 자본은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핵심어】** 에너지산업/석탄/석유/전력/대한석탄공사/주유종탄(主油從炭)정책

**【참고문헌】** 명성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정책의 변화와 방향」, 『정부와 정책』 제3권 제2호(카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Ⅱ(한국개발원, 2010);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40년』(2001).

**【사진자료】** 405. 19700709 제6해저광구에서의 석유 탐사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항목】** 도시가스건설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다목적댐 건설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에너지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충	● 도시가스 건설
경부고속도로	

**【정의】** 석탄, 코크스(cokes), 나프타(naphtha), 원유, 중유, 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스를 정제·혼합하여 공급 규정에 정해진 소정의 발열량을 조정하여 도시가스사업법(1983.12.31. 법률 3705호)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가스관을 통해 일반 수용가에 공급하는 가스를 말한다.

**【원인·배경】** 6·25전쟁 후인 1956년의 에너지공급을 보면, 장작과 숯 등의 신탄(薪炭: 땀감)이 73.9%, 석탄이 18.7%, 석유류가 5.9%를 차지하여 주로 목재나 나무에 의존하는 비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들어 빈곤의 해결 다음으로 시급한 문제는 연료난의 타개이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연도인 1966년의 경우, 신탄은 35.5%로 감소한 반면 석탄과 석유류는 46.2%와 16.6%로 늘어나 화석연료 중 석탄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1960년 인구조사에서 37%였던 도시화율은 1970년 51%로 크게 늘어 급속한 도시화는 주택문제와 도시 연료난을 부채질하였다. 가정용 연료로 신탄에서 석탄(무연탄)으로 도시 연료가 전환되어 다소 불편을 감소시켰다. 무연탄의 사용 증가는 연탄 제조·취급·연소과정에서 주변 대기의 분진(연간 약 3만 톤)과, 연탄재(고체폐기물 중 약 77.6%: 서울, 1973년 기준)가 오염원으로 등장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공해문제가 대두하고,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함께 부유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이 증가하여 대기오염 및 산성비의 원인이 되어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에 들어 그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여 그 대안으로, 특히 도시의 연료자원으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졌고,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공급과 무연탄 수급사정의 악화 등 국내 에너지자원의 한계 등으로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대체에너지로서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전개】** 1980년대의 환경정책의 첫걸음이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 제정과 1980년 1월

「환경청」 창설로, 청정한 연료사용과 자동차 대기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대도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대안이 바로 저황유 공급 의무화(1981년)와 고체연료사용금지제도(1985년), 1988년 9월부터 시행한 액화천연가스사용 의무화이었다. 액화석유가스(LPG)연료가 먼저 가정에 보급되어, 전국가구수의 10%(1982년)에 달하였고, 도시가스는 수도권지역부터 사용의무화계획을 수립하여 1986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1988년 9월 1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이에 도시가스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였다. 1986년 10월, 5만 7000t의 액화천연가스가 인도네시아에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어 1986년 11월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의 발전용 천연 가스로 처음 공급한 이래, 1987년 2월 수도권에 공급하였다. 1990년 전국 천연가스공급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993년 7월 중부권, 1995년 11월 영남권·호남권, 1996년 부산지역, 1999년 10월 서해권 지역, 12월 남부권 지역에 각각 공급하였다. 2002년 12월 강원권 지역의 주배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총 2,435km의 전국을 하나로 잇는 공급망을 완성하였다.

**【결과】** 도시가스는 분진·유황 등이 없는 깨끗한 무공해연료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사용의 편리함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이로써 1986년 10월 우리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선진국형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어 역사적인 천연가스시대의 막을 열었다.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부존되어 있고 그 매장량이 풍부하여 석유대체에너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핵심어】** 신탄/액화천연가스/무연탄/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업법/화석연료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한국개발원, 2010);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 25년사』(2003).

**【사진자료】** 406. 197807 도시가스 남부공장 준공식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제3공화국의 국제관계

**【소항목】** 남북체제경쟁과 국제외교

● 남북체제경쟁과 국제외교	제3세계 국가외교
베트남 파병	UN 외교

**【정의】**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분단된 이후 남북한 간에 벌어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서로 체제의 우월성을 경쟁하면서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을 무대로 벌어진 치열한 외교전을 말한다.

**【원인,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정치·경제체제를 서로 달리하게 되었다.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적인 공화정체제를 지향하였으며,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호하에 사회주의국가를 주창해 왔다.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양극대결체제의 냉전(冷戰) 구도하에 이념대립의 첨병으로서 체제의 차이는 남북한 간의 심각한 군사대결을 불러 왔다. 이것은 다시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외교전으로 비화되어 유엔을 무대로 날카로운 대립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발발】** 한반도를 둘러싸고 소련은 미영 간의 전후처리의 합의사항인 얄타(Yalta)체제에 도전하고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전후 국제질서와 평화수립을 위하여 현상유지정책을 기조로 모스크바삼상회의(1945년 12월 16~25일)를 거쳐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1차: 1946년 3월 20일, 2차: 1947년 5월 21일)를 개최하였으나 소련이 모스크바협정에 반대하고 반탁(反託)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한반도에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제국주의적 팽창야욕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제2차 유엔총회에 한국문제를 상정하여 소련의 한반도 적화저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소련은 북한을 사주하여 6·25전쟁을 발발시켰으나 우리와 미국은 현상유지정책에 입각하여 유엔회원국(참전 16개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전개】** 1948년 8월 15일 남한은 정부수립을 계기로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의 제195호(III) 결의에 의해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lawful government)로 유엔의 인정을 받았다. 이후 남북한은 6·25전쟁의 상처를 안고 서로 우월한 체제임을 과시하며 한치의 양보 없이 국제무대에서 충돌하였다. 남한은 한미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일본과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 동남아 국가들과도 협의기반조성

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대 이후 외교적인 노력에 힘입어 수출의 비약적인 증대와 교역의 다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대북한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유엔 일반회원국의 냉전문제의 장기토의 기피경향과 16개 참전국중 일부가 이탈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1968년 12월 20일 제2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자동상정 대신 재량상정방식으로 대유엔전략을 변경하였다. 그동안 유엔을 통한 국제외교에서의 활동은 북한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적화통일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은 한미안보체제에 위협의 근원을 두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1961년 중국과 소련과 체결한 우호동맹조약을 바탕으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자본주의세력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제3세계에 외교역량을 집중하여 한때 남한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는데 다소 성공하기도 하였다.

**【결과·의의】**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이 성사되었으나, 분단 이후 남북한 체제경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지만, 남북한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된 경쟁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핵심어】** 남북체제경쟁/자유민주주의/공산주의/알타(Yalta)체제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외교통상부, 2009); 전정환, 「남북한 외교경쟁과 안보문제와의 상관관계」, 『국방연구』 제24권 제2호(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1981).

**【사진자료】** 407. 미의회 지도자들과 접견하는 박정희 대통령

408. 남북조절위원 이북대표단접견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제3공화국의 국제관계

**【소항목】** 베트남 파병

남북체제경쟁과 국제외교	제3세계 국가외교
● 베트남 파병	UN 외교

**【정의】** 1955년 11월 1일에 시작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북베트남이 미국의 비호를 받는 남베트남과 치른 전쟁으로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전장이 되어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한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북베트남군에 의해 함락됨으로서 종전되었다. 월남전쟁이라고도 한다.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관계를 비롯한 중소(中蘇)와의 대립과 참전국 간의 외교 등을 말한다.

**【원인,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현상유지정책을 기조로 한 안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가 1954년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은 6·25전쟁 경험에 비추어 소련과 중국이 동남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필리핀주둔 미군을 증강하고 주변국(라오스, 캄보디아)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동남아집단방위체제(SEATO)를 구축하여 대중국봉쇄정책을 주도하였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장군에게 미국은 민정이양을 요구하며 대한(對韓)군사·경제원조를 지속한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군사혁명정부는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1961년 7월에 북한이 중소와 동맹관계를 맺었고 1964년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의 공산권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었다.

**【발발】** 미국은 1963년 초까지만 해도 남베트남에 친미반공정권을 육성하고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게 하는 제한적인 개입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1963년 말 남베트남의 쿠데타 발생, 베트남세력 급성장, 우방국(NATO, 일본 등)의 무관심 내지 개입반대 등으로 미국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고, 「도미노이론」에 따른 공산권의 확산 위협을 인식한 미국은 존슨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전면적인 개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베트남내전에 대한 개입이라는 국내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1964년 4월에 우방국 25개국에게 참전을 유도하는 자유세계 원조계획의 일환인 「More Flags(남베트남 지원요청서한)」 정책을 추구하여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 내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연합군을 참전시키고자 하였다. 1964

년 8월 2일 「통킹만사건」을 계기로 군사적 개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개】** 한국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국제화과정에서 파병 대상국가로 우선시되었다.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참전요청을 승낙하였다. 1964년 5월 한국은 처음부터 전투병 파병을 원했지만 미국은 비전투병 파병을 요청하였고, 1964년 9월 11일 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66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파병하였다. 1964년 9월 11일 1개 의무중대 및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는 등 후방지원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전투병이 파병되었고, 19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단 및 백구부대 등 1개 군단 병력을 파견하여, 베트남전 참전 8년간 총 31만 2천 853명(최대 연간 5만 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이로써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전쟁에 깊이 개입하였다.

**【결과】** 총 32만여 명을 파병하여 5,099명의 전사자와 11,232명의 부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고엽제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의의】** 한국은 월남전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북한의 남침방지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연기하였으며, 군현대화 등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파병을 결정하여 한국외교정책의 자율성을 결여한 사례로 보는 굴종외교의 결과라는 시각도 있지만, 반전데모 없이 한국정부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파병참여를 위한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심어】** 베트남전쟁/동남아집단방위체제/도미노이론/통킹만사건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외교통상부, 2009); 이선호, 「베트남 전쟁의 재음미와 참전 한국군」, 『한국동북아논총』 제20집(한국동북아학회, 2001).

**【사진자료】** 409. 196607 베트남파병 부대 환송 모습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제3공화국의 국제관계

**【소항목】** 제3세계 국가 외교

남북체제경쟁과 국제외교	● 제3세계 국가외교
베트남 파병	UN 외교

**【정의】** 1954년 평화5원칙과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에서 기본방향(10원칙)이 정립되고, 1961년 9월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25개국이 참가한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의 국가집단(비동맹)을 제3세계라 칭하며,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말한다.

**【원인·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 미·소 양극체제의 냉전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어느 한 진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은 미소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국제문제들을 조정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서,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정치, 경제적 중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단체」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였다. 유엔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비동맹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을 현저히 증대하고 있는 비동맹회원국들에 대해 안보외교에서 비중이 증대하였다. 또한 각종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상품 및 기술의 수출시장으로서도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경제외교적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발발】** 제3세계에 대한 외교강화 필요성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국제혁명혁명력강화라는 외교목표를 내걸고 1970년대 이후 제3세계에 대한 비동맹외교를 강력히 전개하였다. 1975년 「리마」 비동맹외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그 필요성은 증대하였고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전개】** 중립주의의 표방은 남북한 대치상황 속에서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한 제1 공화국에서는 두 차례의 특사(백낙준, 김정렬) 파견 정도이었고, 제2공화국 때에는 대(對)중립국 외교강화를 제시한 적도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였다. 비동맹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을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서 제3공화국부터이다. 1961년 제16차 유엔총회에서 13개 신생국의 지지를 얻은 것을 비롯하여 1962년 이후 정부인사(국무총리, 외무부장관)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지역, 아시아 등지의 제3세계국가들을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순방하

였다. 1968년 이디오피아 황제일행 방한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나갔다. 1970년대에 들어 국제긴장의 완화, 평화공존의 기류 속에 그동안의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ctrine)」을 버리고 경제협력과 원조의 비중을 높이며, 방문·초청외교도 더욱 활성화하였다. 아프리카의 가봉 등 16개국에 의료품 원조와 기술훈련생 초청을 통해 기술원조도 제공하였다. 북한은 비동맹회원으로 가입되고 우리는 좌절된 1975년 「리마비동맹외상회의」 이후에도 방문·초청외교를 강화하면서 다음해인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에서는 공산 측 안이 자진 철회되고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결의내용 점차 온건해 지는 등 친북한 일변도에서 다소 후퇴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비동맹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는 비동맹정상회의에서 열세외교를 탈피하고 한국 측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절대적으로 우위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북대결에서 점점 유리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반도문제 관계조항의 표현들을 보면 더욱 온건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의】** 1970년대 초까지 「할슈타인원칙」과 대미일변도 외교로 비동맹권의 외교는 사각지대이었다. 1970년대 후반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결과 북한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고 1986년 제8차 짐바브웨 하라레 비동맹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꺾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비동맹외교사상 판세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어】** 반동회의/제3세계/할슈타인원칙/리마비동맹외상회의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외교통상부, 2009); 김진철, 「남북한의 외교정책비교-대중립주의외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Vol.2(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972).

**【사진자료】** 410. 19730605 인도네시아 아담 말라크 외상의 한국방문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전시항목】** 제3공화국의 국제관계

**【소항목】** UN 외교

남북체제경쟁과 국제외교	제3세계 국가외교
베트남 파병	● UN 외교

**【정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제3공화국 정부가 국제 외교무대인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국가, 아프리카·중남미 대륙 등 제3세계 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말한다.

**【원인·배경】** 유엔은 한국정부의 수립(1948.8.15)과정과 승인(1948.12.12), 그리고 6·25전쟁(1950.6.25 발발)의 개입 등 한국 외교에서 절대적인 존재이다. 6·25전쟁 직후 유엔은 정치적 타격을 모색한 1954년 4월 26일부터 개최된 「제네바 회담」이 결렬되자 한국문제는 다시 유엔으로 가져갔다. 제24차 유엔총회(1968)까지 매년 제출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원원단(UNCURK) 연차보고가 자동적으로 총회의제에 포함됨으로써 매년 토의하게 되었고, 이른바 「통한(統韓)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여 갔다. 미국에 의존한 대유엔 외교정책이었지만, 1973년에 공식 철회될 때까지 「할슈타인 원칙」하에 유엔에서의 지지를 위해 아시아·아프리카(A·A제국) 신생독립국 및 기타 제3세계 국가와의 유대강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하였다.

**【전개】** 1960년대에 들어 냉전체제의 완화와 더불어 1960년 제15차 유엔총회에서 비동맹을 표방하는 A·A제국의 다수가 가입함에 따라 국제정치세력판도의 변화와 함께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는 전환기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북한과 소련은 「남북한동시초정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급진적인 제3세계국가들을 통해 「북한조건부초청안」을 제안하는 등 대유엔전략의 변화를 거듭하였다. 한편, 1960년대 후반 이후 유엔의 문호를 개방하여 당사국 견해의 공평한 입장청취라는 자세로 변화하여 총회에서 그동안의 우리 단독초청안이 점차 불리해지고 동시초청안으로 기울어져 갔다. 이에 따라 제24차 유엔총회(1968.12.20)부터는 재량상정으로 수정하였다. 1970년대 들어 동서해빙무드의 국제정세 흐름에 맞추어 1972년에 남북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에 앞서 발표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통일 시까지 잠정조치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응하였다. 제28차 유엔총회부터 제26차 유엔총회(1971년)의 전략인 일괄 연기보다는 한국문제 상정 토의에 적극 임하고 절차문제에

서도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북한이 제28차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한국문제 토의에 옵저버자격으로 참가하여 남북한은 UNCURK해제문제와 주한미군철수문제 등으로 정면대결이 예고되었으나, 양측의 막후협상으로 1973년 11월 29일 UNCURK는 한국 내 활동을 종결하였고, 주한미군문제는 한·미 양국의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1975년 8월 리마(Lima)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비동맹내 급진좌경세력의 영향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인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키신저(H. A. Kissinger) 미국무장관의 한국문제에 대해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을 제의하여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 측 결의안(유엔사령부 해체 등)도 제출되었는데, 내용이 상반되는 두 결의안이 함께 통과하는 이변을 낳아 한국문제의 유엔에서 해결은 한계가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대결이나 경쟁은 지양하고 「7·4 공동성명」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1977년 제32차 유엔총회 이래 북한 측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아 우리 정부도 상정 및 토의를 중단하였다.

**【결과·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간의 냉전체제 속에서 1960년대는 유엔 장외에서 치열한 남북한의 대결이었다. 제3세계 세력의 등장으로 판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미국 등의 우방의 협조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외교노력으로, 우리의 실리외교가 이루어졌다.

**【핵심어】** UN외교/UNCURK/A·A제국/4자회담/7·4공동성명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외교통상부, 2009); 문창주, 「한국과 UN: 한국통일외교의 전환기와 한국통일패턴」, 『사회과학』 Vol.9(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0).

- 【사진자료】** 411. 19700928 엘살바도르 공화국 대통령 방한  
 412. 1968 유엔군 호주보병3대대 전투기념비 제막식  
 413. 19700409 조선히otel에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제3차 총회  
 414. 19780101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UN한국위원회의 환영대회  
 415. 19790505 박정희 대통령과 크르트 발트하인 유엔총장과 회담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산업역군의 해외 진출
●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산업의 불모지에서 기간산업 육성을 가져다 준 밑거름이었고 산업발달과 공업고도화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선진기술 추격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한 지 약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자립을 성취한 가운데 이제는 선진기술 추격을 넘어서 기술선도국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후발국의 성공적인 기술발전 모델로 제시되는 산업기술발전은 선진기술의 도입단계에서 도입기술의 내재화단계를 거쳐 핵심요소기술의 창출단계로 원천기술은 해외에 의존하지만 모방을 넘어 혁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나 기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소화·흡수하고 개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차츰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구축되면서 선진기술을 내재화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선진국 기술의 도입과 함께 스스로 기술을 창출하는 단계로 이행해왔다. 모방단계에서는 주로 턴키방식의 일괄기술도입방식을 실시하여 공장운영기술과 설비체화기술 등 선진국의 노후기술에 대한 기술 습득과 완성품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그 설계원리를 탐구하는 역행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모방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기술 도입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과 운영에 관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수입에 의존 제품의 국산화도 앞당기며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기술의 선택과 기술의 소화·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내재화 단계에서는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생산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선진기술을 개량하고 자체적으로 제품과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과학기술 발전과정을 보면 해방 후 1960년대 중반까지는 근대적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던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는 과학기술 인프라가 극히 미약하고 원자력 등 일부 과학기술분야 이외에는 근대적 과학기술이 거의 불모지인 상태에서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기반 조성, 과학기술행정의 개시, 근대적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설립 등이 이루어진 가운데 턴키(turn-key)방식의 기술도입으로 공장건설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자립기반이 조성된 시기이다. 해외기술의 도입과 소화·흡수 촉진, 전략기술분야별 전문연구기관 설립,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능력 확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률·제도 등을 마련, 과학기술 풍토의 조성 등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간산업의 기술 확보가 이루어지고 방위산업기술이 발아되었으며 통일벼 등 농업기술력이 향상되었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과학기술처 발족

●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1967년 4월21일에 발족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과 계획의 종합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행정전담 정부부처이다.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배경】** 1958년 「원자력법」 제정 후, 1959년 10월 과학기술연구 및 정책결정을 전담한 최초의 정부기구인 「원자력원」이 설립되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던 차에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의 입안으로 과학기술 전담행정부처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론되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국내 관련 단체들은 부총리직을 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1967~1971년) 중에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독립부처 설립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6월 경제기획원 내 기술관리과가 확대되어 기술관리국이 되었으며, 처음으로 국 단위의 행정기구가 등장하는 선에서 만족해야만 하였다. 또다시 1966년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7~1971년)에서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독립된 기구의 설치주장이 포함되었고 그 설치시기를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71년쯤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1967년 4월 21일에 과학기술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시행】** 발족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주무부서로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수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해외 기술협력추진, 과학기술교육의 발전 및 고급두뇌의 양성,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조정 및 유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1968년 12월에 과학기술이 나갈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개발장기종합계획(1967~1986)을 수립하여 1980년대까지 중진 공업국가군의 최상위 수준에 목표를 두었고 이를 위해 선진기술 도입의 촉진과 흡수, 과학기술계 인력의 개발과 최대 활용, 민간 기술개발 활동의 강화, 국제분업적이며 특성 있는 기술개발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발족 이후 과학기술 관련 예산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정부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에 그쳤지만 연구품

토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해마다 1억 3천여만 원 안팎의 조사연구사업비를 국내 주요연구기관에 용역계약으로 지급하며 국가적으로 요청되는 당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1967년 이래 5년간 536건에 8억 1,08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이 연구개발투자의 70%가 제2차, 제3차 산업부문에 지급되어 6건의 특허취득과 27건을 출원하였다. 연구개발 비중도 농업분야에서 차츰 과학기술분야의 개발로 옮겨가고 있었다.

**【변천】** 설립과 함께 원자력원은 과학기술처장관 소관의 원자력청이 되었고, 국립중앙관상대, 국립지질조사소를 흡수 관장하였다. 또한 문교부에 신설된 과학교육국과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였으며, 국립과학관, 국립천문대 등의 업무도 관장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설립과 함께 1968년부터 유치사업을 시작하여 첫째 영구귀국자 5명, 일시귀국자 2명을 유치하여 두뇌유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1980년대 말까지 유치된 해외 과학기술자들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기술획득을 통해 경제개발을 이행하는 각료급 과학기술전담부처를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정부주도 과학기술 발전전략 이행의 효과적인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았다. 과학기술처의 출범으로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하고 집행할 수가 있었으며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강력한 과학기술정책집행은 어려웠다.

**【핵심어】** 원자력원/과학기술처/과학기술개발장기종합계획/KIST/두뇌유출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김동현, 「과학기술정책」, 『사회과학』 Vol.22(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1984).

**【사진자료】** 416. 19750217 과학기술처 초도순시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1962년부터 1966년까지 경제기획원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기술계 인적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한 기술인력 수급계획,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외국 기술의 도입 촉진, 그리고 과학기술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등에 대해 입안했던 일련의 계획들을 말한다.

**【배경】** 해방 이후 아직 과학기술의 기반도 열악한 가운데, 1960년대에 들어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본격적인 집행과정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기술과 인적자원이 부족했으며, 과학기술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산업계는 많은 기술·기능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주요 관심사도 기술공 및 기능공의 양적확보와 활용에 있었다. 아직 경공업 육성단계로 과학기술의 수준은 높지 않지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이 최우선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경제기획원 물동계획국 기술관리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40명으로 「과학기술정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약 4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1962년 5월에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시행】** 1962년 1월 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보고에서 기술계 인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계 인적자원과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예측하여, 부족한 인적자원의 확보책을 다루었는데 특히 기술자와 기술공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의 구성비를 1:1.3:33(1961년)에서 1:5:25(1966년)로 개선하는 것이 기술계 인적자원 확보의 구체적인 목표로 도출되었다. 기술자의 확보책에는 기업체별 기술자 정원제 실시와 이공계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 기술공의 확보책으로는 공고 졸업생의 증가와 시설 및 교육내용의 개선, 야간 직업보도부(職業輔導部)를 통한 양성, 직장 자체훈련 양성 등이 시행되었다.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외국기술의 도입촉진을 강조하였다. 1962년 11월

15일(호주 시드니에서 개최) 「콜롬보계획(Colombo Plan)」 자문위원회에 회원국이 되고, 이듬해 1월 29일 제18차 콜롬보계획기술협력이사회 회원국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원조 내지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국기술도입의 유형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내용에는 과학기술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연구활동의 확충·정비, 과학기술의 정보활동 및 국제교류의 강화, 과학기술보급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을 설치하여 과학기술 종합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활동의 확충·정비를 위해서는 연구투자의 규모를 1961년의 5.2억 원에서 1966년의 13.6억 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소득 대비 0.25%에서 0.5%로 제고한다는 것이다.

**【변천】** 이 계획으로 과학기술전담 행정부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6월 기존의 기술관리과가 확대되어 기술관리국이 설치되었으며, 처음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국 단위의 행정기구가 등장하였다.

**【결과】** 최초로 정부가 수립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었다. 기술계 인적자원의 현황과 추계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처음 제시되었는데 특히 경공업 육성을 위한 기술공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실업계고등학교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실업교육과 직업훈련제도 확립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과학기술인력 양성/기술관리국/콜롬보계획/실업교육/직업훈련제도/과학기술정책 자문위원회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송성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사진자료】** 417. 19660519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정부(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천에 따른 기술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조장하기 위해 수립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말한다.

**【배경】**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실시와 과학기술처 발족(1967년 4월 21일)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졌지만, 과학기술 연구여건은 아직 미약하였다. 1968년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에 따르면, 연구종사자 수는 6,698명이었고, 연구개발투자액은 53억 5,700만원으로 GNP의 0.43%에 머물고 있었다.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67개(농학 40개 포함)와 민영연구기관 7개에 불과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과학기술수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서 수립되었다.

**【시행】** 이 계획의 기본 목표는 첫째, 창의력의 원천인 인간두뇌와 생산성의 원천인 기능개발을 극대화하고, 둘째, 연구활동의 촉진으로 과학기술의 자생능력을 배양하고, 셋째, 선진과학기술지식의 효율적인 도입으로 산업발전과 과학기술능력을 제고하며, 넷째, 과학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생활과 사고방식의 과학화를 촉진하는데 있었다. 투자목표는 첫째, 인력개발투자는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과학기술계 인력자원의 배양을 위한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업훈련의 제도화에 두고 둘째, 연구개발투자는 계획기간 중 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연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에 원천적인 과학발전 및 연구능력을 제고시키자는데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의 잠재능력 개발과 국토자원, 해양자원 및 기타 지하자원과 같은 부존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넷째, 고도의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섭취하며, 과학기술정보활동의 적극화, 국립과학관의 완공 및 의료기술 향상과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의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발전의 기반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력개발의 경우, 과학기술자 및 전문직은 공급초과이지만 그 양상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술공은 공급부족, 기능공은 수급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및 이공계 교육의 개편·강화, 과학교육의 강화 및 범국민적 과학진흥운동의 전개, 직업훈련의 보충·강화, 직업안정기능의 확충, 인력관리체제의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과학진흥운동을 일으켜 과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기술조사연구비를 공공재원으로 조성하고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 등에 대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조정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국립공업연구소의 지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술협력의 경우, 시설도입에 수반한 기술도입은 가급적 억제하고 노하우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합적 과학기술행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과】**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자체연구개발보다 선진기술의 도입과 소화·흡수에 치중하였고, 제공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외형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정도로 연구개발비도 1966년에 32억 원에서 1971년에 107억 원으로 액수는 증가하였지만, GNP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공히 0.31%에 머물고 있었다. 다만 1차 계획에 비해 산업기술과 함께 연구개발도 강조하여 계획의 범위가 넓어졌고, 예상보다 빨리 과학기술처가 발족되어 과학기술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핵심어】**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인력개발투자/과학진흥운동/연구개발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 (한국개발원, 2010); 송성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사진자료】** 418. 19670421 과학기술처 신설 현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KIST설립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1965년 5월 18일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1966년 2월 10일에 기초과학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책 종합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설립배경】**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로 1960년대 중반까지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 일반 기업이나 산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공업기술연구소 설립·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의 진정과 개입 계기를 만들어야 했고, 세계적 문제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미국에 정착하는 우수한 두뇌유출현상에 대해 대외기술원조의 최초 반대사례를 만들어 이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였다.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수출둔화, 경제원조 삭감 등 경제적 어려움과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운동 등으로 궁지에 빠진 정치·경제적 난관을 반전시키는 기술원조의 실질적인 지원이었다. 1965년 5월 18일 제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베트남 참전을 약속한 대가로 미국 대통령 존슨(Lyndon B. Johnson)이 한국에 개발차관 1억5천만 달러와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치원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미 공동사업으로 연구소설립이 추진되었다. 1965년 7월 8일 미 대통령 과학기술특별고문 호닉(Donald F. Hornig)이 한국을 방문하여 연구소 설립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 한국 정부의 연구소설치준비위원회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계약을 체결한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를 모델로 산업계와 정부의 위탁연구로 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계약연구체제로 한 운영방식의 연구소 설립이었다.

**【활동사항】** 설립 초기에는 아직 선진국에서 실용화된 기술을 알아내어 이를 소화 흡수하여 개량하는 단계에 있었지만, 폐결핵치료제인 에탐부톨(ethambutol)의 국산화, 누에배합사료의 개발, 전자식사설교환기(EPABX), 등의 새로운 혁신기술도 개발하여 창조적인 연구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장·단기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계획입안에도 참여하여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하여 과학기술진흥장기전망(1967), 장기에너지수급계획(1967), 전자공업육성방안(1968), 중공업육성방안(1969), 기계공업근대화방안(1969), 포항종합제철건설계획(1969~1975) 등 국가정책수립 및 국가연구과제의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도 담당하였다.

**【경과·변천】** 1966년 2월 10일 설립된 이후, 1980년 말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정책에 의해 1981년 1월 5일에는 한국과학원(KAIS)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으로 되면서 본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도 있지만, 1989년 6월 12일에 국가미래과학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분리 다시 재발족함으로써 본래의 이름과 첫 번째 정부출연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도 하였다. 1999년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회체제로 개편되면서 기초기술연구회에 속하게 되었다. 조직도 확장되어 1996년 2월 16일에는 EU와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거점 확보를 위하여 독일 자브리첸(saarbrücken)에 KIST-Europe연구소를 설치하였고, 2003년 5월 1일에는 지방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KIST 강릉분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의의】** KIST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는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자주적인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설립되는 전문분야별 정부출연연구소의 모태가 되었다. 다수의 정부출연연구소의 설립으로 해외 과학자들의 귀국으로 두뇌유출은 점차 완화되었고,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동체제의 본보기가 되었다. 낙후된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핵심어】** KIST/과학기술입국/두뇌유출/KAIST

**【참고문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40년사』(2006); 김근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2권 제1호(1990).

**【사진자료】** 4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개원 기념식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대덕연구단지 조성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1973년 12월 과학기술처가 「제2연구단지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새로운 연구·교육단지로 대전시 인근인 충남 대덕군 탄동면 일대(약 834만 평: 현재 대전시 유성구)에 1974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이후 약 20여 년에 걸쳐 30조 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연구단지이다. 1992년 11월 27일에 기반시설이 준공되었고, 1993년 12월에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단지조성이 완성되었다.

**【설립배경】** 과학기술처 발족 직후인 1968년에 수립된 「과학기술개발장기종합계획」(1967~1986)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1970년 10월 「연구교육단지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이라는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선진 각국의 연구학원도시[일본 쓰쿠바(筑波), 소련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사례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거주형에 초점을 둔 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미 기존의 국·공립연구기관들은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고,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한 곳에 모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를 촉진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1973년 1월 17일 대통령의 지시로 「제2 연구단지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입지후보로 충남대덕(후보지: 경기화성, 충북청원)으로 결정되고 동년 5월 28일에 조성이 결정되었다.

**【경과변천】** 「대덕연구학원도시의 건설」계획은 1973년 9월 4일에 과학기술처 자문기관으로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12월 21일에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건설기간은 1974~1981년의 8년 동안으로 하며 면적은 810만 평, 인구는 5만 명으로 계획되었다. 1976년 4월 14일에 「연구학원도시」라는 명칭은 「전문연구단지」로 바뀌었고, 건설추진기관이 과학기술처에서 청와대비서관실로 이관되었다. 5년간의 조정공사 끝에 1978년 3월 한국표준연구소를 시작으로 4월 한국선박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가 입주하였고 8월에는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충남대학교가 입주하였던 것이다. 민간연구소로 쌍용중앙연구소(1979년 3월), 한양화학중앙연구소(1979년 4월), 럭키중앙연구소(1979년 12월)등이 입주하

였다. 그 외 생활지원시설이 설치되었고 1979년 3월 10일에는 단지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단지관리사무소도 설치하였다. 1979년 10월 다시 과학기술처가 추진 주체가 되었고 1981년 8월 27일에는 건설부가 대덕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지의 개념으로 개발기간도 1981년~1990년으로 계획되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1984년 4월 27일 제1회 기술진흥심의회에서 「혁신기술의 창출 원천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당면대책으로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여 입주자의 생활불편 해소에 초점이 주어졌고, 중기대책으로 1984~1987년에 연구소, 대학, 문화복지시설을 유치·조성하고 1988년 이후에 연구소, 대학, 두뇌집약적 첨단산업을 연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연구 및 교육시설을 증가하기 위해 기본계획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1992년 11월 27일에 준공되었고, 당시 정부기관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15개, 정부투자기관 4개, 민간연구소 8개, 고등교육기관 3개 등 33개의 기관이 입주 내지 이전이 완료되었다.

**【의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력을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연구개발과정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차례의 기본계획 수정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고, 전반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결합한 과학거점에서 연구개발중심으로, 또한 연구개발·생산·상업화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성 후 대덕밸리선포식(2000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2004년)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핵심어】** 대덕연구단지/연구학원도시/연구개발/시너지효과

**【참고문헌】** 송성수, 「과학기술거점의 진화: 대덕연구단지의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제9권 1호(한국과학기술학회, 2009); 문만용, 「KIST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박정희 시대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과 재생산」, 『역사비평』 통권 85호(역사비평사, 2008).

**【사진자료】** 420. 19790222 박정희 대통령이 충남 대전 대덕연구소 시찰 장면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한국과학원 설립

과학기술처 발족	●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한국과학원(KAIS)은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정심(精深)한 이론과 실용적 응용력을 겸비한 고급과학기술자를 배출하여 과학기술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1971년 2월 16일에 서울 홍릉에 설치된 특수 이공계대학원만의 대학이다.

**【설립배경】**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1966년 설립)의 연구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공계만의 대학원을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까지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은 거의 해외유학에 의지했는데, 산업발전에 따라 국내에서 양성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1970년 초 재미 한인과학자 정근모박사에 의해 특수 이공계대학원 설립 문제가 제기되었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사함으로써 설립 작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70년 3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특수 이공계 대학원 신설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가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4월 관계부처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문교부와 경제기획원간의 갈등과 기존 대학들에게 극심한 반발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정부당국은 미국과 교섭하여 1970년 7월 17일에 새로운 이공계 대학원의 설립과 자문을 위해 전 스탠포드대학 부총장이었던 터만(Frederic E. Terman)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국내에 파견되었고, 조사단은 과학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것과 외자자금이 약 6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1970년에 8월에 제정·공포된 한국과학원법에 의하여 1971년 2월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국과학원이 설립되었다.

**【경과·변천】** 1971년 2월 한국과학원은 1973년 3월 7개 학과[산업, 재료, 기계, 화학, 전기, 생물, 기초(응용수학과 응용물리)]에 석사과정(2년) 학생과 전문 석사과정(3년)도 설치하여 106명을 처음으로 선발하였다. 1975년 8월에 첫 번째 석사과정 졸업생 92명을 배출하였으며, 곧이어 9월에 첫 번째 박사과정 학생을 받아들여 1978년 8월에 처음으로 박사학위

자를 배출하였다. 학교기구는 15명의 이사회와 학사·산학의 두 자문위원회가 있고, 원장과 두 사람의 부원장, 그리고 전임교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과학원은 문교부가 아닌 과학기술처 소관으로 설립되어 기존 대학과는 다른 개념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교수진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여 해외의 우수한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을 전임교원으로 유치하였다. 또한 최신의 실험·실습 장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전원 기숙사 생활이라는 혜택을 주었으며, 병역특례까지 조치함으로써 국내 대학들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81년 1월 5일 연구소 통폐합방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되었으나, 1989년 6월 1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다시 분리되었다. 한국과학원을 승계한 한국과학기술원은 처음부터 대학원 과정만 존재했으나, 1989년 7월 4일 대전의 대덕캠퍼스로 이전과 함께 특수 학부과정을 운영하던 한국과학기술대학교와 통합됨으로써 학부까지 갖추게 되었다.

**【의의】** 한국과학원의 교육은 최첨단의 기초과학이 아니라 한국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이공계 고급인력을 배출한다는 원칙 아래 졸업생(2006. 02 기준)들은 국내산업계(7,400여 명), 학계(22,463명), 연구소(2,235여 명)로 진출하여 경제발전의 핵심인력으로 활동 중이며, 개교 이래 학사 7,931명, 석사 16,979명, 박사 6,382명 등 총 31,292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였다. 이 같은 한국과학원의 성공은 국내 대학들이 이공계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

**【핵심어】** KAIS/고급과학기술자/KIST/KAIST/USAID/터만(Frederic E. Terman)

**【참고문헌】** 이상수, 『연구기관소개·국내편-한국과학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71); 카이스트 <http://www.kaist.ac.kr/>;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1997).

**【사진자료】** 421. 19710414 서울연구개발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번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이다. 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7년 6월에 초임계(初臨界: 원자로의 점화)를 한 다음, 각종 시험가동을 거쳐 1978년 4월부터 1호기가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총공사비는 외자 1억 57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약 1428억 원이 소요되었다.

**【설립배경】** 195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을 제창한 이후 1955년 7월 한미 간에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력협정」이 맺어져 원자력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62년 3월 최초의 원자로 TRIGA Mark-II가 가동되었지만 아직 기초연구에 머물고 있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은 우리와 같이 석유와 유연탄의 부존이 없는 나라로서는 원자력 발전이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 적합하다는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다.

**【활동사항】** 고리원자력 1호기가 상업운전에 착수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22번째 원전보유국이 되었고 1970년대에만 모두 6기의 신규원전이 착공 또는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원전건설에 대한 기술과 경험, 산업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했던 우리로서는 원전산업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고리 1, 2호기와 월성1호기는 외국 주계약자가 발전소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관리, 설계, 자재구매, 시공 및 시운전을 수행하는 일괄발주방식(Turn-Key)으로 건설되었다. 우리가 참여한 분야는 부지조성공사, 일부토건자재 공급, 단순노무인력제공 등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전력은 제2연구용 원자로TRIGA Mark-IV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비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보수공단을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 연료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설립하여 원자력사업구조를 세분화·전문화시켰다.

**【경과·변천】**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제2차 석유과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원자력 산업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았다. 1970년대에 착공한 원자력발전소가 속속 준공되면서 1980년에는 총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9.3%로 석탄발전의 6.7%와 수력의 5.3%를 능가하게 되었다.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 이어 영광과 울진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원전비중이 50%를 넘어섰다. 1980년대 중반 한때 전력예비율 과다로 5~6년간 신규 원전건설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전건설은 계속 증가하였다. 처음 가동 당시에는 운영·관리기술·운전·정비 경험의 부족으로 50~60%대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1984년부터는 운전경험의 축적, 상호운전경험 교류 및 운영기술개발로 평균이용률이 70%대 수준을 유지하였고 1990년까지 80%대, 2000년 이후에는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주를 받는 수출수준에 이르고 있다.

**【의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수입 에너지원의 다원화에 의한 안정된 장기 에너지 확보의 길을 열었고, 또 관련된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축적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억제 대신 친환경에너지로 떠오른 원자력은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한 바람직한 대안임에는 틀림없으나, 님비(NIMBY) 현상으로 입지난, 반원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도 엄연히 존재한다. 원전의 건설은 우리와 같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임을 아직은 부인할 수가 없다.

**【핵심어】** 고리원자력발전소/원자로/석유과동/일괄발주방식/님비(NIMBY)현상

**【참고문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50년의 전개과정 고찰』(2007);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40년』(2001);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사진자료】** 422. 19900303 우리나라 최초의 고려원자력 발전소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기능인력 양성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기능인력은 기술공과 기능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술공은 기술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소유자이며, 기능공은 6개월 이상 기술습득을 요하는 기능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미숙련공 이상을 가리키며, 이러한 인력을 모집·선발·교육·훈련 등을 통해 양성하여 각 산업의 적재적소부문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 경제개발 초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농현상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비농업 부문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공급되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연평균 7.1%의 경제성장(2차산업은 14.8%)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당시 정부는 1961년 8월에 조사한 「한국기술계인적자원조사서」를 기초로 인력수급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기술자·기술공·기능공의 이상적인 분포를 1:5:25로 설정하였는데, 조사결과는 1:1.3:33으로 나타나 기술공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발전에 중요한 부문인 금속·기계·전기 등의 주요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경과·변천】** 1974년 12월 26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직업훈련기본법」(1976.12.31)이 제정됨으로써 각종 기능공양성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인양성제도는 문교부가 관장하는 실업계 각급학교와 노동청장이 관장하는 각급 직업훈련소로 이원화되어 기능인을 양성하였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1962~1966)에 소요되는 기술계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공의 양성과 계획시행을 위한 기구 및 제반 법규의 정비와 실업교육의 확충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6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인력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기능공의 경우는 과잉인구로 공급이 초과하였지만 특히 기술공의 경우 2만 4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직업훈련으로 기술공과 기능공을 양성·공급하였다. 아직 가발·신발·합판산업 등의 노동집

약적인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주로 단순기능인력이 필요로 하였지만, 기능인력수급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만, 수출산업부문의 숙련된 기술공과 기능공은 오히려 부족하였다. 70년대에 들어와 수출의 증대와 중화학공업의 중점 육성으로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공업계고등학교와 대기업의 양성훈련시설, 직업훈련원 등의 확장을 통해 기능인력을 공급하여 기능공의 수급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한편으로 중동건설 인력투입으로 기능인력의 해외진출도 추진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광공업부문이 급성장하여 중화학공업종사자는 1976년 1,021천 명(8.2%)에서 1981년 1,645천 명(11.4%)으로 624천 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경공업종사자는 1976년 1,279천 명(10.5%)에서 1981년에 1,665천 명(11.5%)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중화학계열중심 공고의 증설과 국가기술자격증 합격률제고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1973~1981년간의 중화학공업 집중육성기에 중화학직종만 약 6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인력개발정책과 단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실업계학교 확충 및 진학을 제고, 직업훈련의 체계화(기업 내 직업훈련 등) 등의 직업훈련을 강화하였다.

**【의의】** 우리와 같이 자본이 부족한 나라는 풍부한 인력자원의 개발 활용이 국가목표달성에 기본요소가 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인력을 공급해야 가능한 것이다. 당시 기능인력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지만, 한편으로 노사간의 갈등도 내재하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노동력의 무한공급시대는 끝나고 노동공급이 점차 노동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열쇠가 되었다.

**【핵심어】** 이농현상/기능공/기술공/직업훈련/인력개발/경제성장의 주역

**【참고문헌】** 최규남 외 1인, 「정부의 기능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공고교육의 변천-1962~1981년을 중심으로-」, 『대한공업교육학회지』(대한공업교육학회, 1999); 노치숙, 「기능인양성제도의 현황과 과제」, 『가톨릭대학교논문집』 Vol. 10(1979).

**【사진자료】** 423. 기능올림픽 인력양성 현장을 방문한 관계자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

**【소항목】** 기능경진대회

과학기술처 발족	한국과학원 설립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기능인력 양성
KIST 설립	● 기능경진대회
대덕연구단지 조성	

**【정의】** 1966년부터 각 산업부문(기계, 용접, 배관, 자동차, 선반, 전기, 목공, 도장, 봉제, 미용 등 각 기능 분야별)의 우수기술·기능인을 발굴·선발하여 직업능력과 창의력을 증진 시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선도역할을 수행해 온 대회를 말한다. 국제적으로는 각국 기능자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있다.

**【설립배경】** 1965년 당시 김종필 민주공화당 의장이 유럽 순방길에 당시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International Youth Skill Olympics)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국내대회를 개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기능청소년을 참여시킴으로서 기능습득 의욕을 고취하고 산업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1966년 6월 14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15회 대회에 참관인단을 파견하여 회원국 기능선수들의 실력 수준을 직접 확인하였다. 1966년 1월에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설립되고, 같은 해 2월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활동사항】** 한국위원회는 1966년 9월 최초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가졌고, 같은 해 11월 4일부터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파견선수를 선발하여 1967년 7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처음으로 9명의 선수를 파견하였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 사회의 우수한 기능 소지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4월에 시·도별로 열렸으며, 관심도 증대하여 꾸준히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매년 9~10월에 개최되며 지역간 기능 수준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기능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 후보 선수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7년 7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6회 대회에 9명의 선수를 파견한 이후 1977년 제23회 대회(네덜란드)에서 첫 종합우승을 시작으로 2011년 제41회 대회(영국)까지 17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인 성과 못지않게 질적인 면에서도 고무적이었다. 1967년 첫 출전

당시의 우승직종이 양복과 제화 등 조제 부문으로 후진성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우승분야가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직종으로 바뀌었으며, 그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동제어 계통 등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직종에서까지 우승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부산(1978년 제24회)과 서울(2001년 제36회)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경과·변천】** 한국위원회는 설립 당시 보건사회부 소관의 민간단체로 발족하였다. 그 후 1976년 12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기관으로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발족되면서 한국기술검정공단 산하로 이관되었다. 1982년 3월 노동부 산하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 변경)이 발족되면서 한국위원회는 이 공단에 통합 흡수되었고,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기능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1981년에 기능장려금(10억 원)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대회 입상한 선수에게 기능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기능장려기금이 입법화되어, 1989년에 「기능장려법」이 공포되었다.

**【의의】** 세계기능경기의 정상을 차지하여 종래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세계인에게 일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첨단기능 분야까지 채택하여, 과거 기본기능을 중시하던 대회에서, 오늘날 고도기능 분야의 기술을 경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급격히 변천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보여주는 경연장이기도 하다.

**【핵심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장려법/기능장려기금

**【참고문헌】**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http://skill.hrdkorea.or.kr>; 노치숙, 「기능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과제」, 『가톨릭대학교논문집』 제10권(1979).

- 【사진자료】** 424. 196907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선수들  
425. 196907 제18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고 귀국한 선수들의 환영차량  
426. 1978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427. 1978 한국에서 개최 된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식량자급, 생명과학, 통일벼 등

**【소항목】** 통일벼와 식량자급화

● 통일벼와 식량자급화	생명과학
--------------	------

**【정의】**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여러 차례 실험 재배를 통하여 농촌 진흥청(허문회 박사)에서 개발한 벼품종(IR667)으로, 단위당 수확량이 많으며 식량자급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원인·배경】**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수출주도에 의한 노동집약적인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경제구조도 변화하여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의 비중(36.8%/1960→19.0%/1980)이 크게 감소하고 그 중요성도 낮아졌다. 급속한 이농현상으로 도시의 인구집중과 도시화, 농촌의 과소화(過疎化)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식량부족으로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도시근로자의 생활비가 상승하고 임금 상승압력이 거세져 저임금을 토대로 한 국제경쟁력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저임금의 유지와 식량수입에 따른 외화절약의 필요성에 따라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정책이 대두되고 식량자급이 공업화의 선결문제라는 인식 아래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전개】** 농업의 증산과 생산과정의 근대화에 목표를 두고 식량자급을 위한 식량증산에 전력하였다. 자급목표달성을 위해 제3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1962~1966년)을 수립하였고, 주요시책으로는 농지개간·간척사업(영산강·섬진강·동진강) 등을 실시하였다. 60년대 초에는 식량자급률은 70% 내외로, 증산정책이 생산과정에 편중되고 농산물 가격하락과 유통조직의 개선의 미비로 증산의욕을 유발하지 못하였다. 식량사정에 진전이 없자, 1964년 8월 수정한 식량증산 7개년계획(1965~1971년)을 확정·발표하였고 1967년 1월에는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가뭄대책으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여 수리안전답률(58%/1967→81%/1971)이 크게 높아지고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1971년)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들어 농정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식량증산이었다. 이 시기에 주곡 자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새로 개발된 통일벼(IR667)품종의 특성에 알맞은 재배기술(냉해방지를 위한 보온 못자리)을 개발·실천하고, 증산시책(쌀 다수확 시상제)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진한 것에 힘입은 바 컸다. 또한 유흥지에 대한 식량작물재배조치의 발동, 적기적작업(適期適作業)을 위한 시한영농시책의 강력 추진, 지역별 생산책임제 시행 등 특히 영농 준비기부터 수확까지 주요 단계별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증산대책을 추진하였다.

**【결과】** 양곡 총생산량은 1971년의 678만 톤에서 1976년에는 818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중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400만 톤에서 526만 톤으로 30.4%나 증가하였으며, 맥류 생산량 또한 172만 톤에서 185만 톤으로 늘어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쌀의 자급률이 82.5%에서 100.5%로 높아지고, 보리의 자급률 또한 91.8%에서 97.9%로 높아짐으로써 주곡 자급을 달성하였다. 1974년에는 쌀 3,000만 석 시대를 열었고, 1977년에는 4,000만 석을 돌파하여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였으며, 광복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되던 외국산 쌀의 도입을 중단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을 이루었다.

**【의의】** 증산위주의 농정으로 식량 자급을 달성하였다. 한편으로 도시근로자들을 위한 이중곡가제로 인하여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은 갔지만, 농민들에게는 증산의욕을 북돋아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주곡자급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의 양질미 선호추세에 따라 통일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쌀 재고(1,000만 석/1989년)누적, 통일벼재배 억제, 통일벼 수매 중단(1992)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식량자급의 주역이었던 통일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핵심어】** 통일벼(IR667)/이농현상/적기적작업(適期適作業)/시한영농/이중곡가제/식량자급/양곡관리 특별회계/농업증산5개년계획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Ⅱ(한국개발원, 2010); 김태호, 「통일벼와 증산체제의 성쇠: 19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과학기술사적 접근」, 『역사와 현실』 74호(한국역사연구회, 2009);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사진자료】** 428. 통일벼 모내기 광경  
429. 1972 통일벼 모내기를 하는 김종필 국무총리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전시항목】** 식량자급, 생명과학, 통일벼 등

**【소항목】** 생명과학

통일벼와 식량자급화	● 생명과학
------------	--------

**【정의】** 생물이 영위하는 생명현상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의료나 환경보존, 식량증산 등 인간의 생명, 생활, 생존의 모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물의 종합과학이다.

**【배경】** 1950년대 미국원조에 의한 값싼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그때까지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완화하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경쟁력이 약한 소맥과 원면 등 국내 농업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경제가 점차 피폐해져 갔다.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발전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문제, 식량문제, 농산물 가격문제 등을 낳았다. 1970년대 이후 정부는 주곡자급에 의한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조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개발로 「녹색혁명」을 달성하였다. 또한 품종개발은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고급화·다양화해 가는 농산물 소비패턴변화에도 부응하기 위해 생명과학을 통한 품종개발 연구로 농업 전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시행】** 1962년 1월 「주요농작물종자법」이 제정되고 종자갱신사업이 실시되고, 동년 3월 「농촌진흥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발족되었다. 1957년 5월에 설치된 농사원과 각종 농림사업장 등을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시·군에 농촌지도소와 지소를 설치하여 농업생명과학연구와 지도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품종개발에 따른 보급체제도 완비하였다.

**【경과】** 품종개발에 가장 우선을 둔 것은 벼품종 개발이었고, 1970년까지 육성된 품종은 농광, 재건, 신평 등 21개 품종이었다. 1971년 최초로 통일벼(IR667)를 비롯한 통일품종(수원214호, 유신 등 통일형 25개품종)과 자포니카(Japonica)계 5개품종이 개발 보급되었다. 통일품종이 1977년에는 전체 논 면적의 54%에 재배되었고, 10a당 평균생산량 494kg으로 세계최고기록이었고 주곡자급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나 통일품종은 냉해와 병충해, 소비자 기호의 변화로 1992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고 미질이 우수하고 다수확인 일반계 벼품종의 육종으로 전환되었다. 보리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작물인데 1950년대 말 이후 국산

품종인 칠보와 수원 107호(1959년)를 육성하였고, 1970년부터는 영남작물시험장에서 답리작에 맞는 보리 품종을 육성하였다. 1977년에는 맥류 전담기관인 맥류연구소를 설치하여 당시 맥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모내기수확기(6월 14일경)와 겹치는 것을 피하여 수확기를 2주일 정도 앞당긴 조생종 탐골, 조강 등을 육성하였다.

원예부문 중 채소는 원예연구소와 민간 채소종묘회사에 의해 발전되었다. 1970년대 이후 원예작물 재배가 본격화되면서 1974년에 무 원교101호, 조생종 배추 원교201호, 적색물고추 및 건과 겸용인 조생 진홍고추가 육성되었다. 한편 재배기술의 개발로 각종 채소의 다모작도 가능해져 「백색혁명」의 기반을 다졌다.

축산분야의 가축개량과 사양기술 연구를 보면 1960년대 초 한우의 개량방향을 역우에서 육우로 전환하여 순종개량과 교잡개량을 추진하였고, 닭은 산란계의 계통간 교잡에 의하여 국산계 품종인 축시735호와 745호를 육성 보급하였다. 가축의 번식기술은 1961년 정액의 채취와 보존, 냉동정액의 조제와 주입기술을 연구하여 인공수정 기술체계를 확립하였고, 1970년에는 송아지 인공유를 개발하여 한우의 조기육성비육기술을 개발하였다.

**【의의】** 생명과학의 발달로 여러 농업분야에 신품종 육성기술의 발전과 영농기술의 혁신 등을 이루어 농업생산성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통일형 품종의 확대 보급에는 공과도 있었지만, 쌀 자급을 통해 정부가 공업화 및 수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핵심어】** 생명과학/자포니카/농촌진흥청/농촌공동화/녹색혁명/백색혁명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사진자료】** 430. 통일벼와 식량 자급화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 진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 산업역군의 해외 진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역사는 1963년 서독 광부파견을 필두로 베트남전 참전, 그 후 중동건설현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외건설 능력이 배양되고 그에 따라 해외건설 진출이 이루어진 것은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1946~1964년)는 광복 이후 약 20년 동안으로서 외국원조를 재원으로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개발계획이 시도되었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한유엔군의 군사관련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이 축적된 기간이었다. 그 뒤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진출하는데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제2기(1965~1973년)는 1965년 현대건설주식회사가 태국의 도로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막이 오른 이래 삼환기업주식회사가 베트남에서 철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중동진출이 시작된 때까지를 일컫는다. 베트남과병(1965~1972년)과 우리나라 전후 복구사업을 할 때 맺어진 미군 공병단과의 인연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공사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태평양연안 국가들을 비롯하여 알래스카까지도 진출하였다. 한편, 이 기간에 국내에서는 제2차 및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어 농지조성과 수리 및 간척사업·도로·항만·전력·통신·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과 공용·상용 건물 및 주택과 호텔, 그리고 각종 공업시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거나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들 공사가 대부분 외국차관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의 건설능력이 더욱 배양될 수 있었다. 제3기(1974~1981년)는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이 유럽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진출하였고, 특히 중동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어 해외건설수주액이 절정에 달함으로써 양적이 면에서 해외건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건설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베트남전의 종전으로 베트남에 송출되었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이외의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였다. 둘째, 제1차 파동으로 불경기가 심화됨으로써 국내실업이 늘어났으므로 고용의 증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셋째, 1960년대 이후 외채가 누적된 데다 석유파동으로 석유수입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폭이 계속 증대되었다. 끝으로, 외적인 요인으로서 유가(油價)의 폭등에 따른 「중동건설 붐」이 형성되었다. 특히 정부가 「해외건설촉진법」의 제정과 해외건설협의회 설립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급보증과 현지금융 및 조세감면 등 금융·세제 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건설이 급성장하는데 크게 뒷받침되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중동의 주요 국가에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멀리 아프리카와 중남미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파독 광부와 간호사

**【소항목】** 서독 광부 파견

● 서독 광부 파견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방문
서독 간호사 파견	

**【정의】**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까지 서독(독일)의 루르(Ruhr)탄광지역일대 에 광부로서 취업하여 파견된 최초의 해외취업을 말한다.

**【배경】** 1960년대에 들어서 한국경제는 미국의 원조삭감과 박정희 정권이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외국의 막대한 투자자금과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마침 1961년 12월13일 서독과 기술원조 및 경제원조까지 포함하는 「한·독 정부 간 경제와 기술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서독정부는 한국의 기술훈련생 파견을 요청하여 명목적으로 광산기술훈련생의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한편 서독은 이미 1960년경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해 있었고 각 산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동독에 의존하던 중 1961년부터 노동력 유입이 중단되었다. 한국정부도 파독광부의 외화송금(약 3천만 불/1974)을 통해 경제개발 자금을 획득하려고 하였고, 당시 심각한 실업자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서 냉전하에서 인력송출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와 경제적·정치적 연대 속에서 반공대열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발발】** 서독 광부파견문제는 이미 장면정부 때인 1950년대 후반부터 그 가능성을 타진해 오던 중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멘스(Siemens)사와 루르(Ruhr)탄광지역에 한국광부를 고용한다는 각서가 체결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미국대외원조기관(USOM)은 일본광부들이 국내사정으로 1963년 8월 계약연장이 불가능하자 한국광부의 고용을 서독정부에 적극 추천하였다. 1962년 5월 24일 뉘른베르그(Nürnberg)소재 M.A.M. 회사가 주독한국대사관에 한국광부(500~1,000명)를 고용할 의사를 밝혀오자 1963년 2월 1일 주독한국대사관은 1차로 서독 연방보건성 제2국장과의 문제를 토의하였고 이것이 한국과 서독정부 간의 최초의 교섭이었다. 1963년 5월 11일 독일노동성에서 한국광부 250명을 고용하겠다는 정식의사를 전해오므로써 한국정부는 광부파견의 실무에 착수하였다.

**【전개】** 최초의 해외인력송출이었던 당시에는 아직 모집과 송출을 담당할 정부기관이 없었다. 1962년 3월 「해외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증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동년 12월에

보건사회부 주관 아래 인력송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1963년 8월 13일에 「독일과독광부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독광부를 모집하였다. 최초모집에는 2,895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학과필기시험·적성검사·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194명을 선발하였다. 1963년 12월 16일에 한국정부와 서독탄광협회와 제1차 광부협정이 체결되어 1963년 12월 21일~1966년 7월 30일까지 2,519명이 파견되었다. 1965년 5월에는 노무관을 파견하여 광부에 대한 노무관리와 근로자 보호에도 노력하였으며, 1965년 11월 3일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근로자의 해외진출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1967년에는 동백림사건으로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 일시 중지되었다가 1970년 2월 18일에 제2차 광부협정이 체결되었다. 1970년 2월 19일에 1진 243명을 시작으로 재개되어 1977년 10월 22일까지 5,415명이 파견되어 그간 총 7,936명이 독일광산에 취업하였다. 정식노동자는 아니지만 임금(월평균 800마르크/1966)이나 복지 면에서는 독일이나 동독의 광부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결과】** 과독광부 총 7,936명 중 여러 가지 사고로 117명이 사망하였고, 3년의 계약완료 후 이동추이는 약 20%가 독일잔류, 40%가 귀국, 40%가 유럽과 북미 및 기타 제3국으로 진출하였다.

**【의의】** 광부들이 송금한 외화는 가계소득증대와 외화획득에 기여하였고 1966년 말까지 약 1,255만 2천마르크(313만 8천 달러)가 송금되어 왔다. 국내 실업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서독과의 사회적·문화적 교류의 장을 열었다. 베트남, 중동 등 우리 노동력의 해외진출에 밑거름이 되었다.

**【핵심어】** 서독광부/실업자/외화획득/인력송출/해외이민법/한국해외개발공사

**【참고문헌】** (사)한국과독광부총연합회, 『외화벌이의 첫 삼을 뜬 과독광부』(2009);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Ⅱ(한국개발원, 2010).

**【사진자료】** 431. 196312 외화획득을 위해 파견된 과독광부들  
432. 19641210 함보른광산 광부 집견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파독 광부와 간호사

**【소항목】** 서독 간호사 파견

서독 광부 파견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방문
● 서독 간호사 파견	

**【정의】** 1966년 3월 18일부터 1976년까지 서독의 각급 병원에 근무할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원을 집단으로 파견된 것을 말한다.

**【원인,배경】** 1960년대 초반 우리의 경제사정은 1인당 GNP가 100달러를 밑돌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높은 실업률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미국의 경제원조도 삭감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근로의욕이 높은 값싼 노동력은 풍부하였다. 반면 서독은 패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용이 늘면서 소위 3D직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간호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서독은 간호사 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우리나라 간호인력 송출로 새로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외화송금을 통해 경제개발의 원동력이었던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동서냉전하에 서방자유진영인 서독과 정치·외교적 우호관계의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전개】** 처음에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민간주도의 파견이 활성화되자 그 이후 정부가 주도하게 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1966년 1월까지의 민간주도의 비공식적인 파독이었다. 한독 카톨릭교회 간의 알선으로 1957년 주한 독일신부인 파비안 담(Fabian Damm)이 김천 성의여고 졸업생 30명을 선발 간호학생으로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카톨릭 종교단체의 주선, 재독의사인 이종수 박사와 이수길 박사에 의해 개별 주선으로 파독이 이루어졌다. 1965년까지 1,043명의 간호요원(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이 진출하였다. 1966년 3월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모두 한국해외개발공사와 협력하여 파독하였다. 1969년 8월에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서독병원협회 간에 「한독간 간호요원 협정」(제1차 협정)을 체결하여 간호요원을 파견하였으나 197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기한부 협정이었다. 협정내용은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의 비율을 1대 5로 책정하고 있고, 독일병원협회가 병원별 간호원 소요인원을 해외개발공사에 통보하면 병원별 배치인원을 그룹으로 편성하여 3개월간의 어학·교양·소양교육을 시켜 파독하기로 하였다. 그 후 기한만료 전인 1974년 10월 22일에 다시 협정기간 무기한 연장과 내용보강(제2차 협정)을 하여 197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으나,

1975년 8월 14일 서독 연방노동성이 기혼자의 서독병원취업 및 내독금지를 발표함으로써 1976년 62명의 간호요원 파견으로 사실상 끝을 맺었다. 당시 급료는 결혼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첫 급료가 월 700마르크(1마르크: 300원)로 한화로 환산해 보면 21만원 수준인데, 그때 우리나라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월급이 5만원 정도로 4배 이상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3년이었는데 파독광부와는 달리 체류 후 자동연장이 가능하였고, 평균학력이 78%가 고졸로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학력의 우수인력들이었다.

**【결과】** 1960년대 초부터 1976년까지 약 11,057명의 간호요원이 파독되었고, 그중에 5천여 명은 미국 및 유럽 각국으로 진출하였고 일부는 귀국하였다. 현재 약 5천명의 간호사들이 독일에 체류하고 있다. 1965년의 경우 국내송금액이 상품수출액의 10.5%, 무역외수입의 14.6%를 1967년에는 각각 35.9%, 30.6%를 차지하여 외화취득에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가계소득의 증대와 국가적으로 외화획득에 따른 국제수지개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크다.

**【의의】** 여성 전문인력의 최초 집단해외취업으로, 여성이주역사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을 통해 재독교민사회 형성에 토대가 되었고 유럽각지로 진출하여 유럽 교민사회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핵심어】** 파독간호요원/라인강의 기적/3D직종/한국해외개발공사/재독교민사회/한·독간간호요원협정

**【참고문헌】** 오인숙, 「파독간호사-파독간호사의 역사적 의미를 묻다」, 『대한간호』 Vol. 47 No. 3(대한간호협회, 2008); (사)한국파독광부총연합회, 『외화벌이의 첫 삼을 뜬 파독광부』(2009).

**【사진자료】** 433. 1964 서독으로 출발하는 간호원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파독 광부와 간호사

**【소항목】**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방문

서독 광부 파견	●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방문
서독 간호사 파견	

**【정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연방공화국 하인리히 뤼브케(Heinrich Luebke) 대통령의 국빈초청을 받아 1964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친 서독방문 여정을 말한다.

**【원인·배경】**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국토분단이라는 민족 공통의 비극을 유산으로 받은 독일과의 외교관계는 1883년 11월 26일 「한독수호통상조약」으로 시작되었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단절되었다가 1954년 10월 1일 레마겐에 우리 총영사관을 설치하여 재출발한 이후, 1958년 8월 1일 양국 주재대사관(초대 대사: 손원일)으로 승격하면서 정식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국토가 양단된 양국의 공동운명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초석이 되었다. 1958년 1월에 방독당시 서독 에르하르트수상은 이미 내한한 바가 있는 등 양국 간에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민간인(1964년 12월 말, 유학생, 기술습득생, 광부를 포함한 일반교포 등 1,815명) 교류로 유대를 다져온 바 있었다. 서독과의 경제적 유대는 이미 1961년 12월 13일 양국간에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맺고, 총 2억 382만 8천 마르크(5천 95만 7천 달러)의 차관도입을 확정하였는데, 당초 서독은 울산공업센터에 제철과 비료공장의 투자를 제의해 왔지만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지만 그중 7천 5백만 마르크(1,875만 달러)의 재정차관으로 자동전신전화사업, 탄광개발사업 등에 충당하였고, 장기상업차관(7천 5백만 마르크)으로 쌍룡시멘트, 인건사공장건설 등에 투자되었다. 일반상업차관(4천 488만 마르크)으로는 펄프, 신문용지, 송·배전선 등의 공장건설과 원양어선도입에 투자되었다.

**【전개】** 공식·비공식수행원 24명(영부인 육영수여사 포함)으로 구성된 서독방문단은 1964년 12월 6일 오후 1시 40분 서울을 출발하여 홍콩·방콕·뉴델리·카라치·카이로·로마 등의 도시에 중간기착하여 각국의 공항에서 당해 지도자나 촬영인사들과의 환담과 현지 교민들의 접견으로 외교적 노력과 교민의 격려를 함께한 28시간의 긴 여정이었다. 최종중착지인 서독의 수도 본에는 12월 7일 오전 9시 40분(현지시간)에 도착하여 뤼브케 대통령, 에르하르트 수상 등과 많은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도착성명에서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경제적 협력 및 문화교류 등의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방독일정을 시작하였다.

일정중 제일 중요한 에르하르트 수상과의 회담에서 국토통일문제와 경제협력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서독 측에서 한국의 경제자립을 위해 모든 지원과 대외원조에서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특별케이스로 취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통상전시회 교환개최와 한일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아시아에도 NATO와 같은 집단방위체제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항만·철도·체신 등 기본산업시설투자에 원조를 집중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월 7일에 조인된 한독경제협정으로 총 1억 5천 9백만 마르크(3천 9백 75만 달러)의 차관으로 5천 4백만 마르크(1천 3백 50만 달러)의 재정차관과 1억 5백만 마르크(2천 25만 달러)의 단기상업차관이었다. 재정차관으로 부산시 상수도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에 투자될 예정이었고, 단기상업차관으로 나주비료·인천중공업 등의 시설확충자금이 포함되었다. 일정 중 우리광부들이 근무하는 함보른광산회사를 방문하여 광부단과 간호원들을 접견하고 격려하였고, 지멘스공장과 AEG공장을 시찰하여 독일공업의 현장도 방문하였다.

**【결과·의의】** 방독결과,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유럽 방문이었으며, 한독 간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였고, 기착한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외교도 큰 성과라 할 것이다. 초기경제개발 계획에 바탕이 된 투자재원의 확보와 한국에 자본 원조를 제공한 첫 번째 국가이며, 유럽 수출시장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경제성장 배경에는 서독과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핵심어】** 박정희대통령서독방문/한독경제협정/서독차관/한독수호통상조약

**【참고문헌】** 공보부, 『박정희대통령방독록』(1964);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한국개발원, 2010).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베트남진출

●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1964년부터 파리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8여 년간에 걸쳐 자유진영의 우방인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미국과 베트남의 요청에 의해 파병을 한 후 베트남의 전후복구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이룩한 것을 말한다.

**【원인·배경】** 제3공화국이 들어서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안보적인 측면이 강조되지만, 「개발지향형국가」인 한국정부의 경제적인 동기를 배제할 수 없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지름길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활용, 민간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었다. 정부·기업간의 밀착은 베트남전 참전으로 심화되었다. 참전을 통한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신인도가 높아져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에서 차관공여와 한국군의 군수지원 물자의 국내조달과 미군군납에 의한 상품수출 등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진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전개】** 베트남의 전후복구사업에 뛰어 들은 기업들은 주로 건설·운송·섬유부문 등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현대(창업: 1947년)의 경우 기존의 군사시설 건축 및 토목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건설공사를 한국정부의 지원 하에 미국 측과 거의 수의계약형식으로 발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1969년에는 베트남진출 한국건설업체의 총 송금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한국정부의 보호하에 고도의 군사시설 건설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아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성장하였다. 후에 세계 5대 건설업체로까지 성장하였다.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건설특수 이후, 태국·호주 등지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장하였다. 한진(창업: 1945년)의 경우, 1965년 베트남에 육·해상 운송 전문회사를 설립, 주로 미군의 퀴논지역 중심의 전투수행을 지원하는 수송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미양국의 행정적·법적 지원에 힘입어 한국업체로서는 군수물자의 해상수송계약을 독점하여 1966~1970년 기간 중 1천 4백 5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베트남에서의 실적

을 바탕으로 국내 항공 및 해상운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당시 존슨 미행 정부와 내부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의 민간항공회사(대한항공) 설립지원을 받아 1969년 정부소유항공사로 공식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육해상 운송망에 항공운송망까지 보유하게 되어 아시아 굴지의 운송전문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대우(창업: 1967년)의 경우 1967년 이후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을 적용하면 군복 등의 섬유제품의 수출로 급성장하였다. 1967년의 58만 달러에서 1969년 4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품질의 우수성도 인정받아 미국내수시장에까지 진출하였다. 1975년에는 국내기업 중 투자대비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되었다. 차후 신진자동차(지금의 쉐보레), 옥포조선소(현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을 인수 1990년대 중반에는 국내 4대기업이 되었다.

**【결과】** 베트남전을 계기로 급성장한 기업들은 정부의 특혜속에서 이른바 「베트남재벌」로 성장하여 일본의 대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생산기반이 없던 중공업 제품의 수출증가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및 반가공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역조로 일본에의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의의】** 베트남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누적된 외화수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였다. 무역·비무역 부문의 경제적 이득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고 「베트남 달러」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핵심어】** 개발지향형국가/베트남재벌/베트남 달러/Buy American정책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제11권 봄호(한국동남아학회 2001).

**【사진자료】** 434. 1969.8~70.8 “니베” 수상 경찰서 종합 시설 공사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제1차 석유파동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1973년 10월 6일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원유 값이 급등하여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석유파동(oil shock)을 말한다.

**【원인】** 1970년대 초에 1960년대에 세계시장을 지배하던 석유메이저(Oil Major)들의 위세는 점차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산유국들의 지위는 날로 강화되었다. 1970년대 초 석유시장은 산유국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석유메이저와 산유국 간의 협정에 따라 쌍방과점형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아랍산유국들은 석유의 무기화를 내세워 산유량감축, 친미서방국가에의 원유수출금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원유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전 세계를 석유공포로 몰아넣었다.

**【발발】** 아랍의 공격으로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자 1973년 10월 16일 페르시아만의 6개 석유수출국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원유고시 가격을 17%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매월 원유생산을 5%씩 감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1967년에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매달 5%씩 추가 감산하겠다는 것이다.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전개】** 1973년 10월 18일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10% 감산에 이어 리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등 산유국들이 대미 석유금수 및 생산량 감축을 결정하였다. 1973년 11월 15일 OPEC가 25%의 대폭적인 원유감산을 결정하자 전 세계는 석유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초 배럴당 \$2.59였던 중동산 기준원유 값은 1년 만에 \$11.65로 무려 4배 가까이 올랐다. 이를 계기로 산유국들은 석유 국유화를 가속시켰으며 OPEC는 국제석유자본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직접판매(D-D) 원유를 확대

하였다. 당시 해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우리경제는 석유과동 발발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에너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불황속에 극심한 물가고를 겪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심각한 무역적자까지 감수해야 하였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작고 산업형태도 중화학공업 전환 초기단계로 아직은 경공업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결과】** 세계경제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1975년에는 서방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고 각국의 국제수지도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는 원유수입에 따른 외화부담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1974년 원유도입액이 전년대비 262% 늘어난 약 11억 달러에 달하고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원유도입액의 비중도 7.2%에서 16.1%로 급증하여 유가상승이 국제수지적자의 직접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로 수출부진과 원자재 가격양등으로 1973년 약 10억 달러이던 무역적자가 1974년에는 2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1973년 12월에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과 장기적으로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석탄생산을 극대화하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추진한다는 새 에너지정책을 발표하였다. 석유비축기지 건설 추진, 수력발전의 우선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건설 등을 결정하였다.

**【의의】** 제1차 석유과동은 석유가 싼값으로 필요한 양이 공급된다고 믿어왔던 석유수입국들에게 석유공황이라고 할 만한 사태를 초래했다. 각국 정부는 석유의 공급삭감, 민간인에 대한 에너지 절약 등의 조치를 취했다. 1차 석유과동으로 인해 OPEC는 국제석유자본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핵심어】** 제1차 석유과동/제4차 중동전쟁/OPEC/석유무기화/자원민족주의/스태그플레이션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5년사』(2005).

**【사진자료】** 435. 1974 주유소 앞에 줄을 서있는 시민들

436. 197810 석유과동이 예상되자 석유를 구입하기 위해 주유소 앞에 줄을 서있는 시민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원유확보 비상대책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제1·2차 석유파동이나 이란·이라크 전쟁등과 같이 페르시아만(Persian Gulf)에 위기가 닥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어 비상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중동산 원유공급의 차질을 대비하여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말한다.

**【원인·배경】** 제1차 석유파동은 1970년대 중반이후 일단 진정되었으나 1978년 말부터 이란의 국내 혼란과 이슬람혁명을 계기로 다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세계 석유공급의 15% 수준을 점하고 있던 이란은 석유의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석유업자들의 매점매석과 투기성 시장조작까지 횡행하면서 국제 석유시장은 급격히 혼란에 빠져들었다. 1980년 8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는 기준원유가도 30달러대를 돌파했으며 81년 10월 34달러선에서 단일화되었다. 1978년의 12.70달러에서 무려 168% 오른 것이다.

**【전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는 제1차 석유파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제는 제1차 석유파동에 비해 제2차 석유파동에서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 이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기인한다. 1984년 2월 석유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는 4단계의 비상대책을 마련하였다. 1단계로 소비성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및 현물시장에서 원유긴급도입 비축물량 방출, 2단계로 유종별 수급통제 및 민생연료 배급제 실시, 3단계로 유통공급체제 계열화, 4단계로 유종별 가격인상 및 세부통제강화 등이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원유공급이 6개월간 20%감소하면 국민소득은 11.9%, 수출은 12.9%, 수입은 24.1%가 감소하고, 실업자는 135만 명이 신규로 발생하는 등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과】**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① 정유사의 생

산시설 가동률 및 생산수율 제고, ② 적정 수입확보 및 재고유지, ③ 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활용, ④ 석유제품 수송원활화, ⑤ 소비자보호 및 불편요인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1974년 5월에 수정된 석유비축계획에서는 1977년까지 원유는 정부와 정유회사의 비축능력 65일분에 비축물량 25일분, 석유제품은 정유회사가 비축능력 40일분에 20일분 비축으로 조정하고 정부는 석유비축사업을 국가가 관장하고 한국석유공사에 그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 자원외교를 전담할 「동력자원부」를 1978년 1월에 출범시켜 자원행정의 전문화와 집행체제의 효율화를 통해서 소요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였다. 1980년 4월 원유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석유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사시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말 현재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총 122.5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초과하는 물량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9월 기준 약 151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석유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유 추가확보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의의】** 우리나라가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주도하에 단기적인 소비절약과 아울러 석유공급원의 다변화전략 시행, 탈석유정책, 천연가스(LNG)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노력과 석유의 전략비축과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 등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석유가 향후에도 당분간 에너지 수급구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석유공급 부족은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석유위기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핵심어】** 에너지산업/석유/1차·2차석유파동/석유비축사업/동력자원부

**【참고문헌】** 명성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의 변화와 방향: 대상별 정책 환경과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제3권 제2호(카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중동진출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우리나라 해외진출 업체들이 베트남전쟁(1960~1975년)이 끝날 무렵인 1970년대 초에 아직 외교적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중동지역에 진출하여 주로 건설공사를 수주·진출하여 이른바 「중동러시」(rush)를 조성하게 된 배경을 말한다.

**【원인】**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큰 충격을 받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석유위기 사태는 오히려 중동 산유국에게는 기회이었다. 석유파동으로 유가는 대폭 인상되어 전 세계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중동산유국들은 당시 연간 700~8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오일달러를 획득하게 되었다.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업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개발의 기회를 맞았으나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사회기반시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나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도 진출을 모색하여 「중동러시」가 이루어졌다.

**【내용】** 1973년 12월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중동지역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내재적인 조건들이 존재하였다. 첫째는 국내건설업계는 이미 체제정비를 통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약 390여개의 건설업체수가 건설행정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한 1958년 3월(「건설업법」 제정)까지 1,500여개로 늘어났다. 1960년대에 들어와 건설부가 설치되고 건설행정이 정비·강화되면서 전국의 건설업체는 500여개로 정리되어 경제개발과정을 통하여 각종 공사를 정부의 보호아래 독점적으로 시공함으로써 물적·인적 축적을 통하여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해외공사에 필요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57년부터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정책으로 영구진지구축을 위한 미군공사(항만·비행장·도로·막사·교량·창고 등의 신축 내지 복구공사)가 대량 발주되었는데 이들 공사들은 발주자가 외국기관(미군 공병단)이어서 국내공사와는 다른 여러 가지 시공상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외국기술을 터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

았다. 미군은 국제표준계약서식과 국제표준 시방서(示方書) 및 설계도를 응용하고, 계약과 감리에 영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기업(경남기업, 삼환기업, 부영건설 등)들이 국제적인 계약 및 시공기술을 익힐 수가 있었다. 베트남전이 격화되면서 미군 공병단이 베트남으로 이동함으로써 미군 공사가 줄어들었지만 당시 우리 기업들이 미군과 맺은 인연이 그 뒤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진출하는데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60~1970년대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개발계획추진으로 성사된 대규모 차관공사에서 해외차관 공여자들의 각종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접하면서 해외공사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베트남전후 철수한 건설업체들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한국군의 베트남파병(1965~1972년)이 끝남에 따라 이른바 「베트남 특수」는 급냉하기 시작하였고 철수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새로운 건설시장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국내사정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6~1971년)의 종결과 경부고속도로공사(1970년 7월)도 마무리된 시점이고 정부의 경기억제책으로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이었다. 제1차 석유파동 여파로 베트남에서 철수해 온 인력과 장비는 불황을 더욱 심화시켜 경제적·사회적인 부담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가운데 건설기업들은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의】** 이후 우리 건설업체들의 중동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어 1970년 중반 이후 중동 건설수주액이 절정에 달함으로써 해외건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핵심어】** 중동진출/베트남전쟁/미군공병단/베트남 특수/중동러시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조수종, 「중동건설수출에 대한 재조명」, 『한국중동학회논총』 Vol.8(1987).

**【사진자료】** 437. 1976 우리 기술자들의 이란에서의 조선서 건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중동건설공사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 중동건설공사	

**【정의】** 1970년대에 중동지역에 우리의 건설회사들이 인력과 건설기자재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와 철강구조물, 전기통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해외건설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경】**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1차: 1973년, 2차: 1978년) 속에서 오일달러를 획득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의 고갈을 예상하고 경제개발계획 수행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앞다투어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중동 해외건설이 「수입유발 없는 대규모 외화수입원」으로 당시 유가의 급등으로 악화된 국제수지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1971년 건설업법 제정, 1975년 해외건설촉진법 제정)와 베트남 패망(1975년) 이후 유휴 인력 및 장비의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건설업체들이 중동으로 적극 진출하게 하여 이른바 「중동붐」(boom)을 일으키게 하였다.

**【전개】** 1973년 12월 삼환기업을 필두로 1970년대 중반부터 바레인의 조선소 건설공사를 비롯한 초대형공사가 수주되면서 중동진출이 본격화되었다. 1976년에는 주베일항만공사(9.3억 달러) 포함하여 1억 달러 이상의 대형공사를 5건이나 수주하여 약 24.3억 달러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수주액의 누계 8.6억 달러의 약 3배정도의 실적인데 이것은 1966~1975년까지 10년간에 걸친 해외건설수주액 누계 약 15억 달러의 1.6배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1978년에 약 80억 달러의 수주실적으로 피크에 달했다가 다소 주춤한 상태를 보인다. 한편 건설진출에 직·간접으로 부수되는 인력의 해외진출현황을 보면 1980년 6월 말 현재 전체진출인력 147,199명 중 해외취업선원을 제외한 약 86.8%에 해당하는 127,769명이 건설인력이며 對중동진출인력은 전체의 약 78%, 그리고 건설인력의 약 89.9%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내 나라별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1973~1980년까지의 누계에서 사

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이라크·리비아 3개국이 약 83.7%의 수주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는 중동건설의 75.7%, 전체해외건설의 71.8%에 달하여 한국의 해외건설은 중동, 그중에서도 사우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동지역 수주실적을 보면 1973년 2.4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80년에는 78.2억 달러로 불과 8년 만에 약 326배로 증가하여 「중동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급성장을 보이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기술·경영능력을 축적할 수 있었고, 풍부한 양질의 저임(건설근로자급여 월평균 420달러로 일본에 25%, 유럽국가의 10% 정도 낮음)건설 인력을 적기에 조달하고 조직적인 노무관리 등으로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외국의 경쟁업체들을 누를 수 있었으며, 정부의 금융·세제 등의 각종지원,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인과 근로자의 창의적인 개척정신이 결합된 성과이었다.

**【결과·의의】** 1970년대의 중동진출은 국제수지악화에 따른 외환부족을 메우는데 기여하였으며 우리 경제에 석유위기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7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오히려 과열기미를 보이자 외환부문에 통화증발을 보여 중동건설이 한때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83년 이후 세계건설 발주량 감소와 특히 중동시장의 퇴조에 따라 중동에 대거 진출한 우리업체의 수주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저하되어 해외건설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왔다. 다시 1990년대에 들어와 해외건설이 재도약기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중동편중에서 범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핵심어】** 중동건설/오일달러/외화수입원/해외건설촉진법/중동붐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조수중, 「대중동건설진출환경과 경쟁력 요인」, 『한국중동학회논총』 Vol.2(1982).

**【사진자료】** 438. 197310 삼환기업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젓다담수화 주택단지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플랜트 수출

베트남진출	●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생산공장을 건설·가동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하드웨어(hardware)와 기술·노하우(know-how) 등의 소프트웨어(soft ware)가 결합된 종합적인 시스템의 수출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플랜트 뿐만 아니라 댐·교량·항만건설 등 국토개발 플랜트와 주택·학교·병원건설 등 사회개발 플랜트까지를 포함되고 있다.

**【원인·배경】**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기간 중 한국경제는 연평균 42.8%라는 놀라운 신장률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연평균 9.8%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제4차 계획(1977~1981년)기간 중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여건의 변화 속에서 수출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출구조를 플랜트 등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수출품의 주류인 경공업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강화와 후발개발도상국의 해외시장에의 진출 등 수출여건이 점점 어려워져 플랜트 수출은 앞으로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할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수출증대 목표달성과 중화학공업화는 상호보완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플랜트수출 증대는 바로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로 나타나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플랜트무역은 수출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수입국에도 그 수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후진국간 또는 선진국간의 무역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마찰 없는 무역」으로 불려지면서 1970년대 초부터 날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장벽하에서 대안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전개】** 1971년 4월 (주)승리기계가 105만 1천만 달러의 견직물제조설비를 파키스탄에 수출한 것이 최초이며 1977년까지 현대조선의 3건을 포함하여 모두 9건에 254백만 달러를 수출한데 불과하였고 수출지역도 중동·동남아·남미 등의 몇 개 나라에 편중되어 있었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oil shock) 이후에도 투자재 부문의 세계무역은 안정된 성장을 보여 왔는데, 특히 선진국은 축적된 기술과 자본, 그리고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플랜트 수출을 독점하여 왔다. 그리고 플랜트 수출시장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산유국·브라질·한국·알제리·남아연방·멕시코 등이었다. 1973~1975년까지 수출입실적을 비교하면 수입이 2,891백만 달러에 비하여 수출은 359백만 달러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1976년 플랜트 수출실적은 단 2건에 12백만 달러로서 그해 수출실적 7,715백만 달러에 대비하면 약 0.16%에 지나지 않았다. 선진국인 미국이 20%, 일본이 약10%에 비하면 이제 출발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랜트수출의 핵심은 기계공업의 수준에 달려 있는데 1977년 부문별 생산구조를 보면 전기·전자가 44.4% 수송기기가 25.9%로 전체의 약 70%로 치우쳐져 있고 일반기계 11.1%, 정밀기계 4.2%로, 선진국에서는 각 부문 간의 비중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면 저조한 실정에 있었다. 그러나 1978년 12월 15일 「산업설비수출촉진법」(1987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으로 대체)이 제정되고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플랜트수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본 궤도에 올랐다. 이후 성장을 지속하여 플랜트수출액의 총수출액과의 비중은 [2억 달러(1.4%)/1979년→5.2억 달러(3.0%)/1980년→13.9억 달러(4.6%)/1985년]로 증가하였고 수출시장도 다변화되어 1986년에는 50여 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의의】** 1970년대 초 플랜트 수입국으로 출발하였으나, 2009년 말 463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고,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주 등의 성과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핵심어】** 플랜트수출/수출구조 고도화/마찰없는 무역/산업설비수출촉진법

**【참고문헌】** 공영근, 『한국의 플랜트 수출구조 분석과 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이민상, 「우리나라 플랜트수출 증대방안에 관한 고찰」, 『산경연구』 Vol. 3(1987).

**【사진자료】** 439. 20111203 현대중공업 해양 설비 운송 모습

440. 20111130 삼성ENG가 3.3억\$ 규모의 바레인 밥코 정유플랜트를 준공하였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주베일항만공사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현대건설이 수주한 공사로, 1976년 6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동부 최대도시 담맘(Dammam) 북서쪽에 위치한 주베일(Jubail)지역에 건설한 호안(護岸)공사·방파제공사·안벽(岸壁)공사·해상유조선정박시설(open sea tanker terminal) 등의 신항만 건설공사를 말한다.

**【원인·배경】** 주베일항은 페르시아만(灣) 연안에 있으며, 원래 어촌이었으나, 아라비아 반도 내륙부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사우디 공업화 계획의 핵심 도시이다. 1975년 홍해 연안에 있는 안부(Yanbu)시와 함께 산업 도시로 계획되었다. 그 후 급속한 도시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강철·석유화학제품·화학비료·운할유·천연가스 수집시설 등의 주요산업시설이 있고, 부근에 주요 유전들이 산재하고 있었다. 공업화 계획에 따라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로부터 원유수출항으로서 시설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 석유화학산업과 에너지 의존적(energy-intensive) 산업을 추진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산업화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석유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세계 석유화학제품 시장 진출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항만 건설이 결정되었다.

**【전개】** 1970년대 중반 미국의 벡텔사가 새 항구 건설사업을 의뢰받았고, 이 공사는 공사금액만 당시 우리 예산액의 절반에 맞먹는 9억 3,0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4,600억 원)로, 우리의 해외건설의 한 해 수출 규모가 8억 3,0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시기이었다. 당초 입찰자격 기회도 없었던 현대건설은 사우디정부를 설득한 끝에 10번째 응찰자가 되었고, 미국·영국·서독·네덜란드 등 쟁쟁한 세계굴지의 9개 경쟁사를 따돌리고 이를 수주했다. 2,460만 달러의 입찰보증금도 사우디국립상업은행으로부터 얻어냈다. 공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3.48km의 해상 유조선 정박시설을 비롯해 호안·방파제·안벽공사 등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모든 공정이 종합된 대규모 공사이었다. 수심 10m의 바다를 길이 8km, 폭

2km로 매립해 항구와 기반시설을 만들어 길이 500m가 넘는 50만t급 대형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이며, 방파제 축조가 1,068m, 콘크리트로 쌓은 암벽 길이는 무려 2,980m나 되었다. 모든 기자재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해 세계 최대 태풍권인 필리핀 해안을 지나 걸프만까지 대형 바지선으로 운반하는 일이었다. 석유 위기로 침체되었던 울산조선소에도 역할을 주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놓은 발상이었다.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한 특수선단에 주요 철구조물을 실어 운반하는 이 거대한 바지선 운반작업은 19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결과】** 1980년 12월에 현지에서의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성공리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는 연인원 250만 명 이상, 해양구조물을 비롯한 육상장비 46종 1,000여 대, 해상장비 21종 200여 대 등의 장비가 사용되었다. 또한 1983년 기네스세계기록에 세계 최대의 엔지니어링과 건설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현대건설은 이를 계기로 쿠웨이트 슈아이바항 확장공사, 두바이 발전소 등 중동일대 대형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게 됐다. 1975년 중동 진출 뒤 1979년까지 현대는 약 51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건설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이었다.

**【의의】** 현대건설이 항만공사를 수주하여 중동 진출의 계기가 된 공사이며, 당시에 한 업체가 맡은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었다. 이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첫째 육상과 해상에 걸친 토목부문의 모든 시설공사와 전기·건축·설비 부문까지 망라된 종합공사 수행으로 기술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였고, 둘째 해상유조선정박시설과 같은 선진국의 독점분야에 진출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대로서는 공사 규모는 차치하고도 기술과 모든 분야에서 일대 도약의 기점이 되었다.

**【핵심어】** 주베일항만공사/중동건설/해외건설/입찰보증금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현대건설주식회사, 『현대건설 50년사』(1997).

**【사진자료】** 441. 1976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산업항

442. 197606 현대건설이 시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산업항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지역진출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1960년대에 들어와 중동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지역으로 진출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외화획득에 나선 것을 말한다.

**【배경】**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을 시작으로 건설산업은 수출과 더불어 산업진흥의 양대 축으로 성장하였다. 1차 기간 동안에는 기간산업의 수입대체를 위한 공업화와 도로·철도·전력 등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정부의 보호·육성의 정책기조하에서 경제개발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내 대형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참여는 건설산업을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주한 미군의 진지공사에서 터득한 국제수준의 공사경험으로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가운데 베트남전의 격화와 한국군의 참전으로 건설공사가 급증하였고 나아가 동남아 일대로 건설 수출을 확대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내용】** 경제성장과 개발의 진취적인 의욕이 가득했던 1960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건설업이 동남아 지역을 필두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이 시작하였다. 1963년 8월 삼한기업의 베트남 사이공 공사를 시작으로 1965년 11월에 현대건설이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의 첫 관문을 통과하였다. 특히 당시 베트남전의 격화와 한국군의 참전에 따르는 「베트남특수」는 주로 전쟁복구사업이었다. 군 작전과 관련된 건설공사와 전쟁복구공사의 급증으로 건설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일대로 건설 수출을 확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60년대에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등지로 진출하였고, 70년대에는 필리핀·방글라데시 등지로 진출하였다. 이 밖에 아프리카 지역의 진출은 극히 미미하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중동지역에만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아프리카의 건설규모는 나이지리아·아이보리코스트 등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현행 개발계획(1975~1980년)만을 토대로 연평균 250억 달러규모(중동 약 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1974년 동

산토건이 나이지리아에 초자로건설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진출을 시작하였으나 진출 대상국은 1970년대 말 6개국 정도에 주로 설비와 건축공사에 진출하였다. 인력진출 면에서는 고용의 자국인화 정책에 기인하여 그 비중이 0.1~0.6%에 불과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에 비해 아주 미약하였다. 중남미지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건설과 에너지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도미니카(배관공사: 1971년), 에쿠아도르(도로포장공사: 1976년, 에스파란자 댐공사: 1978년), 바하마 등 3개국에 진출하였고 수주액도 57백만 달러에 그쳤으며 해외건설총수주액의 0.3%에 불과하여 거의 불모지대나 다름없었다. 중남미는 천연자원 및 기간산업이 국유화되거나 국영기업형태로 운용되는 나라가 많고 송금액의 제한(년 15%)이나 현지인 고용의무(80~95%) 등 진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결과·의의】** 1960년대 초 베트남 특수는 동남아 진출의 길을 터줬고 중동붐 이전에는 진출무대가 주로 동남아지역이었다. 중동붐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지만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1980년 말 지역별 비중을 보면 중동지역이 전체의 약 94%이고 그 다음이 동남아 지역으로 5%를 점하고 여타 지역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해외건설 주력시장은 다시 중동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건설시장의 확대와 다변화면에서 이들 지역은 성장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핵심어】** 베트남특수/외화획득/건설시장다변화/중동붐/아프리카/중남미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Ⅱ(한국개발원, 2010); 김유철, 『우리나라 건설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동국대대학원 석사논문, 1982).

**【사진자료】** 443. 19780101 가봉의 수도 리브레빌에 우리 손으로 세워진 백화점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전시항목】** 해외건설과 근로자

**【소항목】** 리비아 대수로사업

베트남진출	플랜트 수출
제1차 석유파동	주베일항만공사
원유확보비상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진출
중동진출	● 리비아 대수로 사업
중동건설공사	

**【정의】** 리비아 대수로사업(Great Man-made River Project)은 리비아의 동남부 및 서남부 사막지대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풍부한 수자원(추정매장량 35조 톤: 나일강의 200년간 유수량)을 취수하여 직경 4m의 송수관로로 북부 지중해 연안지역에 농업용수·공업용수·도시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로써 총 5단계로 구성된 사업이다.

**【원인·배경】**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M. Gaddafi)가 1969년 9월에 집권한 이후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자원(매장량 약 26억배럴, 생산량 70~80만 배럴/1일, 세입의 80%, 수출총액의 99%) 고갈 이후, 대체산업으로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수로사업을 계획 추진하게 되었다. 사막에 대량으로 매장된 지하수(미국의 석유탐사회사 발견, 1969)를 퍼 올려 불모의 사막에 물을 대서 풍요한 농경옥토로 바꾸려는 거대 규모의 「녹색혁명」 사업의 일환이었다.

**【전개】** 1980년 리비아가 미국의 브라운 루트(Brown & Root)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유명 건설업체 30여개사와 국내 현대·대우가 참가한 입찰에서 동아건설에 낙찰된 것이다. 한편 리비아정부는 사업을 전담할 특별기구로서 GMRA(Great Man-made River Authority: 위대한 인공강)를 설치 장관급 5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사업을 총괄하였다. 공사의 내용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총공사비는 약 270억 불로 예상되었다. 이중 동아건설은 1·2단계의 시공을 맡았다. 1단계 공사는 동남부 사리르(Sarir) 및 타저보(Tazerbo)취수장에서 북부 아즈다비아(Ajdabiya)저수지를 통해서 벵가지(Benghazi) 및 실트(Sirt)지역에 1일 2백만 톤의 송수능력을 갖춘 직경 4m의 고압철근콘크리트관 25만개를 연결하여 1,872km의 수로를 연장하는 1단계 공사로 공사금액은 1단계가 38억 달러로 당시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고였으며, 1982년에 계약하여 1984년 1월에 착공하여 1991년 8월 28일 통수식(通水式)을 거행했다. 1990년 2월에 수주한 2단계 공사는 서남부 자발(Jabal), 하소우나(Hasouna)취수장에서 수도 트리폴리(Tripoli)까지 연결하여 1일 2백5십만 톤의 송수능력을 갖춘 대토목공사

이다. 취수장에서 트리폴리까지 22만 34개의 관을 연결하여 1,523km 송수관라인을 만드는 공사로 1996년 9월 1일 통수식을 거행했다. 공사금액은 2단계 61억 달러와 1단계의 38억 달러를 포함 약 100억 달러의 초대형 공사였다.

1·2단계 송수량을 합치면 일일 450만 톤으로 당시 서울시민의 210일간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량이다. 송수관 길이는 3,544km로 경부고속도로의 4왕복의 거리이다.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 총량은 2,350만 톤으로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두 곳에 건설할 수 있는 물량이다. 들어간 골재는 2,210만 톤으로 63빌딩 부피의 17배의 양이며 관로굴착과 되메움에 사용된 흙의 총량은 3억 7만 톤으로 여의도전체를 125m 높이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양이었다. 동아건설은 서방제국, 특히 미국과의 외교적 충돌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철수를 종용받은 바 있으나, 이 사업은 평화사업이며 인도적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의 양해를 촉구하였다.

**【결과】** 대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1,000만 명과 550만 대의 장비는 세계 신기록으로 남았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지구상에서 인간이 창조해 낸 가장 위대한 공사로 꼽힌다.

**【의의】** 제1차 석유파동(1973) 이후 중동의 건설경기 붐이 급격히 퇴조하던 1982년 전후에 불황기에 있었던 국내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사기도 크게 고무되었다. 동아건설의 성공은 한국건설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게 되었다. 지도자 카다피의 국가경영능력과 정치적 영도력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핵심어】** 리비아대수로/녹색혁명/카다피/중동건설/GMRA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류양수, 「세계 8대 불가사의 리비아 대수로 역사」, 『군사논단』 제9호(1997).

**【사진자료】** 444. 19910729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산업역군의 해외 진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3년간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 손실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 될 때까지 적대행위의 정지를 의미하였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우려대로전쟁 이전의 불안한 상황으로 복귀하는데 그쳐서, 당시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휴전 후 “어쩌면 전쟁 3년간보다 더 큰 시련을 강요할지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휴전 후 국가안보는 국가안전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방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대책은 국군의 증강과 미국과의 동맹체제의 구축이었다. 1970년대까지 국가안보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였다.

1968년 1·21청와대 기습사건, 1969년 7월 “자국방위의 책임은 자국 스스로 져야한다”는 닉슨독트린에 이어서 1971년 3월 주한 미군 제7사단이 철수하면서, 정부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이라는 기치를 들고 안보태세를 강화하였다. 1971년에는 한국군 증강 및 현대화 계획을 일컫었던 ‘울곡사업’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군현대화는 군사원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 총액을 국내 재원으로 조달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력증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75년 7월 방위세가 신설되어 방위력 증강사업에 도움이 되었다.

국군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미 한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는 전체 군사비가 북한을 앞섰다. 군사력의 운용 및 유지비 외에 전력증강에 대한 투자도 1982년 27%, 1986년 36%, 1990년 36.8% 등으로 늘어나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자주국방을 위해 미국 등지로부터 최신 무기의 구매도 크게 늘어났지만, 무기의 국산화도 추진되었다. 개발 초기에는 우리나라는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기반도 없어서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지하는 형편이었다. 1970년에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점차 각종 병기와 군수장비 등에 대한 기술조사와 연구개발, 시험 등을 주도하여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6·25전쟁 전에는 소총탄환 정도의 제작시설도 없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1990년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여 무기, 탄약, 통신, 수송 등 분야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70%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베트남파병

**【소항목】** 베트남파병

● 베트남파병	
---------	--

**【정의】** 베트남파병은 자유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을 지원한 것으로 1964년 비둘기를 첫 파병한 이래 그 규모는 1973년까지 8년간 연인원 30만 명이 넘었다.

**【배경】**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목표는 군사정변 후 미국과 신뢰구축 속에 자유우방으로서 아시아의 집단안보에 대한 공동책임과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군사원조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데 있었다.

**【전개】** 1964년 4월 하순 존슨 미 대통령은 ‘더 많은 깃발(more flags)’을 표방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청하였다. 국군의 첫 해외파병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미 1962년 5월에 이미 심홍선 소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사절단이 베트남에 파견되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현지 조사하였다.

정부는 1964년 7월 23일 국회에 장병 130명으로 구성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된 태권도 지도요원을 베트남에 파견할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31일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8월 하순에 육군본부 광장에서 ‘주월 한국군사원조단’의 결단식을 거행하여 9월 22일 제1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처음으로 구 사이공에 도착하였고, 이듬해 3월 중순에는 비둘기부대가 사이공 인근의 지안(Di An)에 상륙하였다.

1965년 4월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투 병력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5월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시 1개 전투사단의 파병에 동의하였다. 1965년 8월 중순 국회에서 ‘전투사단 파병안’이 가결되어 10월 9일 청룡부대가 캄란만에 상륙하였고, 같은 달 22일 맹호부대가 쾨년(Qui Nhon)에 도착함으로써 전투부대가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미국에 보다 적극적인 군사와 경제 원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가 국군을 추가로 파병한 목적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차 다짐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경제적 이익이 더 컸다. 한국은 파병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 없는 계속 주둔과 국군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였다.

1965년 12월 중순 존슨 정부는 브라운 대사를 통해 전투부대의 추가파병을 요청하였고, 이듬해 1월과 2월에 방한한 험프리(Hubert H. Humphrey)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증파를 요구하였다. 3월 20일 국회는 추가파병안을 통과시켜 수도사단 1개 연대와 제9사단인

백마부대를 과병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미국정부는 한국군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정부는 1969년 6월 말 이미 과병 병력이 5만 명에 이른데다가, 북한의 대남도발, 베트남 정세 악화, 미국 내 반전공세 등으로 더 이상 베트남전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추가과병을 거절하였다.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연대급 186회, 여단급 이상 34회 등 대부대 작전도 수행했으나, 대개 중대전술기지 단위 작전에서 성공이 많았다. 독코 전투·오작교 작전 등 여러 전투를 통해 한국군은 우방국과 적군으로부터 용감한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알렸다.

**【의의】** 국군의 베트남과병은 광복 이후 해외 첫 과병으로서, 미군의 계속된 증파의 요청으로 5만여 명으로 늘어나서 미군 이외에 한국·호주·뉴질랜드·태국 등 참전국의 병력 68,0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나라가 되었다. 그 결과 국군현대화, 실전능력 향상 등 군사적 성과 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 외에 군사정변 후 박정희 정부의 걸끄러웠던 대미관계가 베트남과병을 계기로 혈맹적 우호국으로 급진되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핵심어】** 이동외과병원/주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맹호부대/청룡부대/백마부대

**【참고문헌】** 최용호, 『베트남전과 한국군』(군사편찬연구소, 2004);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군사편찬연구소, 2008).

**【사진자료】** 445. 196607 베트남과병부대의 환송모습(부산)

446. 19720506 맹호부대 작전 사진

447. 19700925 국군의 베트남 진압 작전 모습

448. 19700410 청룡부대의 작전 모습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자주국방의 확립

**【소항목】**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

●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	방위세법 제정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한미동맹 체제

**【정의】** 북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연이어 도발을 하였으나, 닉슨독트린과 미군 철수,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립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에 변화 가능성과 함께 불안정성이 존재하였다.

**【배경】** 휴전 후 남한보다 일찍 시작한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에서 자신감을 가진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을 내세우고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남한 내 혁명역량의 부식, 국제적 지원혁명역량 획득을 촉구하였다.

**【전개】** 북한의 무력도발은 비무장지대 침범, 소규모의 공작원 및 대규모 무장 게릴라 남파, 남침용 땅굴 축조, 해상침투와 무력충돌, 항공기, 어부와 어선 납치 등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비무장지대에서 특히 1966년부터 1971년까지는 수많은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은 국군의 베트남파병 후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1966년 11월 2일, 존슨(Lyndon B. Johnson) 미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 도발한 적도 있었다. 이때 미군 6명과 국군 1명이 북한군의 매복공격으로 전사하였다. 북한은 우세한 해상전력을 이용하여 수시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였고 조업 중인 어선을 납치하였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간첩 31명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인 ‘1·21사태’에 이어 10월 말에는 북한 무장간첩 120명이 경북 울진군에 상륙한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 속에도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안보 개념이 도입됐다. 1970년대에 강북지역을 억제하는 대신 강남을 주로 개발하고, 도심에 지하상가를 조성한 것도 요새화계획의 일환이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 긴장완화가 이루어지는 듯이 보였으나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1974년 11월 처음 발견된 후 연달아 밝혀진 남침용 땅굴은 북한의 침략의도를 보다 명백히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1969년 7월 5일, 닉슨 대통령은 관에서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을 발표

했다. 그 내용은 “국지적인 침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는 침략행위가 발발할 경우 이 위협을 제거하고 자체방위에 필요한 병력을 제공할 1차적인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직접 개입 없이 남침했을 경우 미국은 한국이 1차 방위를 담당하도록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군철수, 한국에서 미군감축 등이 시작되었다. 결국 1971년 3월 동두천에 주둔해온 보병 제7사단이 철수함으로써 1960년대 말까지 약 62,000명이었던 주한미군 병력은 대략 41,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의 철군 논리도 닉슨 대통령 정책의 연장선이었다. 카터 행정부의 논리는 미군철수가 위험하지만 대응할만한 범위 내의 위험이라는 인식이었다. 카터 대통령은 취임 후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주한미지상군 33,000명을 4~5년 내 철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 의회와 군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반발로 1978년 12월 미 제2사단의 1개 보병대대와 지원 병력 3,400명이 한국에서 철수하는데 그쳤다.

**【의의】** 1960년대 북한의 잦은 도발을 극복하고 데탕트시대를 맞아 주한미군이 감축되면서 한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76년 텀스피리트훈련,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었다.

**【참고문헌】**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군사편찬연구소, 2008).

**【사진자료】** 449. 19670914 판문점 도발사건 현장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자주국방의 확립

**【소항목】**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	방위세법 제정
●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한미동맹 체제

**【정의】** 군 현대화와 방위산업 육성은 양적으로 늘어난 병력을 질적으로 전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을 실현시키려는 과정이다.

**【배경】**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무기의 자급자족에 대한 요구도 강했으나 군사원조를 받는 197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는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이 없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편이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무기의 국산화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전개】** 한 동안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길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더 획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971년 한미 국방각료회담에서 미 국방차관 패커드가 “한국군의 장비는 매우 뒤떨어진 것들로 대부분 2차 대전시 장비였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군의 장비는 낙후되어 있었다. 1970년대 초 닉슨독트린과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국군현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독자적으로도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1969년 7월, “자국방위의 책임은 자국 스스로 져야 한다”는 닉슨독트린에 이어서 1971년 3월 주한 미군 제7사단이 철수하고 나서, 주한 미 지상군의 완전철수에 대비하여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군 현대화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독자적인 전력증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때부터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경제적인 군대를 꾸려가려고 강조하였다. 1971년 2월 군수기지사령부가 창설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 군원이 축소되었으나 예산의 제한으로 군에서는 소요물자의 절대량을 충족할 수 없어서 1970년 1월 하순부터 전투부대를 제1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이어서 전투지원부대 및 지휘부대, 행정지원부대 순으로 보급방침을 정했다.

1·21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이라는 기치를 들고 안보태세를 강화하였다. 1970년 봄 ‘자주국방제도 연구를 위한 이스라엘 국방제도연구단’이 구성되어 이스라엘 힘의 원천을 탐구하였다. 1971년에는 한국군 증강 및 현대화 계획을 일컫었던 ‘울곡사업’이 시작되었다. 울곡사업은 국군이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무기 도입사업으로, “울곡의 10만 양병설과 임진왜란을 기억하면서 자주국방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울곡사업은 제1차 기간('74~81년)에 60억 3천만 달러, 2차 기간('82~85)에 50억 2천만 달러 등 110.5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1990년 말에 끝나는 제3차 울곡사업에는 약 10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1975년 7월 방위세가 신설되어 방위력 증강사업에 도움이 되었다.

국군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미 한국은 1978년 이래 전체 군사비가 북한을 앞섰다. 군사력의 운용 유지비 외에 전력증강에 투자비는 1982년 27%, 1986년 36%, 1990년 36.8% 등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지난 1984년부터 국방비의 1/3분을 군현대화계획에 투입해 왔다. 1974년부터 1981년을 목표년도로 한 제1차 전력증강사업은 후방사단의 전력화, 전방사단의 4각 편제개편, 개인화기의 전면교체, 예비사단 포병부대의 증·창설, 육군항공전력의 대폭증강 등을 추진했다.

청와대 습격 및 울진·삼척 공비침투 등 빈번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장비 및 무기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1990년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여 무기·탄약·통신·수송 등 분야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70%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무렵부터 개발된 국산 신무기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1993년 6월 장보고함이 건조된 데 이어 한국형전투장갑차, 다연장로켓, 견인곡사포, 자주포, 대공포, 고속유탄기관총, 한국형 대잠경어뢰, 반잠수쌍둥함 등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K-200장갑차는 미군의 M2브래들리, K1A1전차는 미군의 M1에이브럼즈나 독일 레오파드에 버금가는 성능을 지녔다. 공군의 KT-1, 초음속 고등훈련기(T-50)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해상무기 KDX-II 구축함을 비롯해 2008년 인도되는 KDX-III 이지스함은 1,000 km 탐지추적능력에 각종 최첨단 미사일 140여 기를 장착해 전방위 전투능력을 갖추었다.

**【의의】** 1974년 울곡사업을 시작할 때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것에 비하면 컴퓨터, 전자, 통신, 정밀기계 등의 집합체인 초음속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핵심어】** 국방과학연구소/울곡사업

**【참고문헌】** 김동규·신용도, 『국가경제와 방위산업』(국방대, 2001);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군사편찬연구소, 2008).

**【사진자료】** 450. 19770413 방위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자주국방의 확립

**【소항목】** 방위세법 제정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	● 방위세법 제정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한미동맹 체제

**【정의】** 방위세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세금(방위세법 제1조)을 의미한다.

**【변천과정】**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패망하고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75년 7월 16일 법률 제2768호로 방위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방위세법은 한시법(限時法)으로 처음에 그 시한이 1980년 말까지 정하여졌으나, 1985년 12월 말까지 5년 연장되었다. 1985년에는 다시 1990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더 연장된 후 폐지되었다.

**【시행】** 1970년대에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재정의 30%에 달하고 있던 과다한 국방비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때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북한의 수역 침범을 계기로 방위성금이 모금된 적도 있었다.

방위세는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의 개념의 목적세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방위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스라엘·자유중국·스위스 등에서 실시되었다.

납세의무자는 관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등 국세와 각종 지방세의 납세자였다. 세율은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과되었다. 방위세도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 징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방위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행 첫해인 1976년도에 2,338억(당시 GNP 2%)이었고, 1977년 3416억 원, 1987년에는 약 2조 3,19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징수된 세액 전부를 전력증강투자비에 사용함으로써 기존 국방운영비(GNP 4%)와 합하여 국방비는 GNP의 약 6%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개년은 방위세 징수계획액 전액을 전력증강투자비로 계상하였

다. 그러나 방위세의 규모가 울곡투자비 재원을 초과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과되는 차액은 시설공사, 장비·물자획득 및 운영유지 등 국방 일반투자사업에 배분 투자되었다.

**【의의】** 방위세는 1975년 8월부터 1990년 말까지 국방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국군현대화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 총액을 국내 재원으로 조달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핵심어】** 자주국방/특별세/목적세/방위성금

**【참고문헌】** 「방위세법: 법률 제2768호」(1975.7.16); 『한국세제사』(재무부, 197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4(군인공제회, 2002).

**【사진자료】** 451. 19750630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회 업무보고

452. 19780826 방위산업 진흥 확대 회의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자주국방의 확립

**【소항목】** 한미동맹체제(한미합동 1군단 창설, 을지훈련,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	방위세법 제정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 한미동맹 체제

**【정의】** 한미동맹체제는 주한미군 주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한미군사위원회회의 등을 포괄하는 군사동맹관계를 의미이다.

**【배경】** 6·25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나아가서 연합방위로서 공동작전으로 방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전쟁 시기나 전후 유엔군사령부에는 미군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국군과의 협조 채널이 없어서 연합체제의 구축이 필요했다.

**【전개】** 유엔군사령부에는 한국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만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미군 측에서는 1965년 중반부터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편성시킬 체제를 연구하였다. 닉슨독트린 후 1971년 3월 주한 미 제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면서, 미군 1개 사단과 군단사령부가 동시에 철수할 경우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약화된 것으로 북한이 인식할 우려가 있어서, 한미 양국은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1971년 7월 1일, 미 제1군단을 개편하여 한미제1군단(1 US/ROK Corps)을 한미연합체제로 창설했다. 한미제1군단은 한국군 제1, 5, 6군단을 작전 통제하게 되었으므로, 1개 군단이 다른 군단을 통제하던 기형적인 한미제1군단은 이후 한미야전군사령부(CFA, ROK/US Combined Field Army)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은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발생한 북한군 도끼만행사건과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하여 연합 및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령부 창설방안을 마련하여, 1978년 11월 17일 한미연합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이제 6·25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오던 것을 연합사의 창설로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휘부, 참모부, 구성군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른 사령부와 달리 지휘의 통일과 연합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가 분리됨으로써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을 수행하고 한미연합사가 한국방위를 책임지게 됨으로써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또한 우리 군은 미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의 시험, 연습 및 향상을 도모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울지포커스렌즈(UFL, Ulchi-Focus Lens)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연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전략적 수준에서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등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유지돼 왔지만, 양국 간의 집단방위를 위해 상호간의 이해증진, 국방태세를 실질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상설기구가 없었으므로 우리 측이 1968년 외상급 회담의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1·21사태와 미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그해 2월 밴스(Cyrus R. Vance) 특사가 방한하여 국방과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각료급 연례국방회의 개최를 논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한미 연례국방각료회담은 197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로 바뀌었다.

**【의의】** 한미동맹체제의 구축으로 한국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그만큼 안보부담을 덜고 경제건설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한미제1군단/한미연합군사령부/군사위원회

**【사진자료】** 453. 19680419 박정희대통령 존슨미국대통령 호놀룰루 회담

**【작성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북한의 안보위협

**【소항목】** 북한의 4대 군사노선

●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포함 피격	대한항공납치 사건
1.21 청와대 기습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정의】**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독자적인 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1962년 12월 부터 채택한 군사정책인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 장비의 현대화 등이었다.

**【배경】** 북한은 1962년 모든 분야에 걸쳐 전쟁을 준비하였다. 정치분야에서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무자비한 숙청과 주민 감시를 통하여 반대세력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란 미명 아래 전쟁준비를 위하여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분야에서는 통제와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전 주민을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세뇌시키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맹신하도록 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4대 군사노선과 동원 체제를 확립하여 군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발발】** 북한의 친중공 노선에 따른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독자적인 전쟁준비가 불가피해지고 1962년 10월의 쿠바사태에서 소련이 미국에 굴복하는 듯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북한은 1962년 12월에 국방자위정책과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전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 내에 북한의 동조세력을 많이 만들어 놓아 혁명여건 조성을 강화하였고, 남한에서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대 군사노선이란 전쟁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요강이었다.

전인민의 무장화: 북한은 중공의 민병대를 모방하여 1959년에 50만 명의 노농적위대를 조직한 바 있는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인 1963년에는 이를 100만 명으로 증강하고 야포와 박격포 등을 지급하여 연대급까지의 군사훈련을 시켰다.

전국토의 요새화: 북한은 전 지역을 방위시설화하여 전국토를 요새지대로 만들어서 공습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군사시설은 물론 생산시설까지 최대한 지하화하려고 하였다.

전군의 간부화: 평시에 전 장병들에게 정치 및 군사교육을 강화시켜 차상급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전쟁발발 시 초급지휘관의 대량 소모를 신속히 보충하여 전력을 최상급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장비의 현대화: 기갑, 포병, 공병, 통신, 유도탄, 해군, 공군 등의 군 장비를 증강시키고 첨단장비로 교체함으로써 공격능력을 크게 증강시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였다.

**【결과】** 4대 군사노선에 따라 북한군은 이후 특수군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였다. 특수 제 8군단은 1969년 초 특수부대인 124군부대(1967.3, 창설)와 군사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원 호송이 주임무인 283부대(1966.3, 창설)로 창설한 저격여단(1969년 초)과 5개 정찰대대로 편성(1965.2)된 17정찰여단 등 2개 여단으로 창설하였으며, 그 뒤로 경보병여단을 편성함으로써 1974년에는 5개 여단으로 증가되었다.

**【의의】**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1962년 남한의 혁명(남한의 공산화) 수행을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혁명역량을 강화시켰다.

**【핵심어】** 전쟁준비/남한의 공산화/무장화/요새화/간부화/현대화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제2집(국방부, 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454. 조선인민군창립 기념행진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북한의 안보위협

**【소항목】** 당포함 피격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 당포함 피격	대한항공납치 사건
1.21 청와대 기습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정의】** 당포함 피격사건은 1967년 1월 19일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북한군의 포격을 받아 한국 해군 함정 당포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배경】** 북한은 1962년부터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남한의 공산화 수행을 위한 혁명기치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높이고 있었다. 북한은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전 분야에서 혁명역량을 강화시켰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 내에 북한의 동조세력을 많이 만들어 혁명여건 조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남한에서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발발】**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보호하던 해군 PCE 56함(당포호, 650톤·승무원 79명)이 1967년 1월 19일 오후에 북한 육상포대로부터 약 20여 분에 걸쳐 200여 발의 집중 포격을 받아 침몰되었다. 당시 북한의 국방자위정책이라는 남한 내의 침공에 관한 결정적 여건이 조성되면 중소의 지원이 없더라도 북한 단독으로 무력적화통일을 강행하려는 전쟁준비정책이었다.

**【전개】** 196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북한의 수원단 동쪽 6마일 해상에 나타난 북한해군 함정 2척이 어군을 따라 해상휴전선을 월북하여 어로 중이던 70여 척의 우리 측 어선단을 납북하려고 하였다. 한국 해군 56함이 이를 발견하고 우리 어선들을 남하시키고자 38선을 넘어 북상하였는데, 수원단 남동 4~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북한의 해안 동굴진지에 거치된 해안포대가 오후 1시 50분에 발포하기 시작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200여 발을 집중 포격세례를 받았다. 56함도 즉각 이에 응전하고 급히 증원된 53함도 대응사격을 가했으나, 56함은 적탄에 맞고 말았다. 56함 당포함은 이날 오후 2시 34분에 동해 해상(북위 38도 39분 45초, 동경 128도 26분 47초)에서 침몰하였다.

**【결과】** 해군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교전에서 56함의 승무원 79명 중 39명(장교 2명, 사병 37명)이 전사하고, 14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무사한 장병은 10명뿐이었다. 당시 북한은 1962년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전쟁을 준비하였다. 정치분야에서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무자비한 숙청과 주민감시를 통하여 반대세력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갔으며, 특히 군사분야에서는 4대 군사노선과 동원체제를 확립하여 군사역량을 강화하였다.

**【의의】** 당포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전쟁기도와 잔학상을 국제사회에 노출시켰고, 이후 한국 해군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핵심어】** 해군 함정/피격사건/동해 근해/해상 휴전선/남북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제2집(국방부, 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455. 19670119 당포함 침몰 현장의 모습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북한의 안보위협

**【소항목】** 1·21 청와대기습사건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포함 피격	대한항공납치 사건
● 1·21 청와대기습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정의】** 1·21 청와대기습사건은 북한이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1968년 1월 21일 특수부대 124부대를 남파시켜 침투한 사건이었다.

**【배경】** 북한은 1960년대 후반 남한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또 한미 연합공동방위를 마련하여 국방태세를 강화하자 부쩍 조바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북한은 그동안 수행한 대남공작마저 별 성과가 없이 끝나자 급기야 국가원수 암살테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발발】** 북한은 대한민국 수반인 대통령을 암살 저격함으로써 일시에 남한 정부 및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려 그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고자 했다. 이는 1968년 1월 21일에 일어난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무장공비의 서울 침투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집단방위체제상의 문제와 북한의 공비침투 및 대계럴라전 대비에 우리나라 국방상 커다란 문제가 대두되었다.

**【전개】** 1968년 1월 21일 북한 제124군부대 특수요원에 의해 자행된 청와대기습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남한을 혼란에 빠뜨려 적화통일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하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31명이 1968년 1월 17일 밤에 비무장지대로 침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 제124군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침투하였다. 이들은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 검문에 걸리자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4대의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져 승객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날 밤 대간첩작전을 지휘하던 서울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을 비롯하여 7명의 군경과 민간인이 북한 무장공비들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에 군은 즉각 제6군단장 책임하에 군·경 합동작전으로 무장공비들을 추격 소탕작전을 펼친 끝에 2월 3일까지 31명의 공비 중 1명을 생포하였고 도주한 2명을 제외한 28명을 사살하였다. 이들 무장공비가 침투한 목적은 대통

령관저 폭파와 요인암살, 주한미대사관, 육군본부의 폭파, 서울교도소 폭파, 북한간첩 대동 월북 등이었다.

**【결과】** 이 사건은 유일한 생존자로 생포된 김신조의 자백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테러대상으로 삼은 사건으로서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폭력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김신조는 그들의 침투한 경로를 1968년 1월 18일 밤 미 제2사단지역의 철조망을 뚫고 통과했으며 서울로 오는 도중 19일 파주군 삼봉산에서 나무꾼을 만난 것 외에는 검문도 받지 않고 예정 코스를 따라 왔다고 진술했다. 이는 침투에 대비한 전방부대의 배치와 수색, 경계가 평소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의의】** 정부는 청와대기습사건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와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 창설, 방위산업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정부는 북한의 남파 게릴라 침투에 대비하여 군내에 공비전담 특수부대를 편성했고, 전방에는 155마일 휴전선에 철책을 구축하였다. 또한 정부정책기조를 경제개발과 동시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강화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핵심어】** 북한 124군부대/청와대 기습/김신조/종로경찰서/세검정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제2집(국방부, 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456. 19680121 청와대를 기습하다 체포된 무장공비 김신조 모습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북한의 안보위협

**【소항목】** 푸에블로호 사건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포함 피격	대한항공납치 사건
1.21 청와대 기습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푸에블로호 사건	

**【정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원산 앞 공해 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82명의 미 해군 인원이 11개월이나 붙잡혀 있다가 이해 12월 23일 승무원들만 풀려난 사건이었다.

**【배경】**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미 존슨 행정부 시절이던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앞 공해 상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던 중 북한 함정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발포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하였다. 미 함정이 공해 상에서 납치되기는 미국사상 10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발발】**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정오경 1척의 북한 초계정으로부터 첫 공격을 받았으며 오후 2시 32분에는 “엔진이 모두 꺼졌으며 무전연락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원산항으로 끌려간다”는 최종보고를 송신하였다. 미 국무부는 함정과 승무원들을 즉각 석방하도록 소련을 통해 접촉하였다. 푸에블로호는 경화물선을 개조한 해군 정보수집함(무게 906톤, 길이 54m, 폭 10m, 속도 12.2노트)이고, 승선인원은 장교 6명, 사병 75명, 민간인 2명 총 83명이었다.

**【전개】** 푸에블로호는 1월 23일 정오경 1척의 북한의 초계정으로부터 무전으로 “국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 소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북한 함정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해 왔고, 미 해군은 “공해 상에 있다”는 답전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약 1시간 후 북한 함정의 지원을 받고 3척의 무장 초계정과 2대의 미그기가 도착하여 포위하였다. 북한 미그기들이 주변을 선회하고 있는 동안 한 척의 북한 초계정이 접근하였으며 무장군인들이 푸에블로호에 승선하였다. 푸에블로호는 “무력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서 원산항으로 끌려간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미국은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향해 중인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3척의 구축함을 진로를 변경시켜 원산만 부근에서

대기토록 하였으며, 25일에는 해공군의 예비역 14,000여 명에게 긴급동원령을 내리는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하였다. 28일에는 추가로 2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1척 및 6척의 잠수함을 동해로 이동시킴으로써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결과】** 이 사건은 30여 차례의 비밀회담 끝에 납치된 승무원들이 325일 만인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납북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 지난 1999년 북한은 김정일 지시에 의해 원산항에서 있던 것을 대동강 '충성의 다리' 근처로 옮겨 반미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의】** 이 사건이 마무리된 불과 4개월 후인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정찰기 EC-121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에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급파하는 등 한반도에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핵심어】** 존슨 대통령/미군 정보함/정찰기/납북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제2집(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사진자료】** 457. 19680123 북한에 납포 된 푸에블로호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북한의 안보위협

**【소항목】**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북한의 4대 군사노선	●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포함 피격	대한항공납치 사건
1·21청와대 기습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정의】**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은 북한이 한국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울진, 삼척 일대에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게릴라전을 전개한 사건이었다.

**【배경】** 북한은 대남공작이 강경파에 의해 주도된 이래 본격적인 게릴라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하조직 및 불순세력의 선동으로 민중봉기를 획책하여 전쟁도발의 구실을 모색하고 지하조직의 사기진작과 직간접 지원으로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무장공비 침투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만큼 투입인원 규모와 그 잔인함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무장공비 침투는 남한 사회를 극도로 혼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조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발발】** 북한은 폭력혁명의 일환으로 무자비한 테러 및 파괴활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상적 중립층의 확대와 당국에 대한 협력을 저지하며, 전후방 동시전투 식의 모택동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군경부대의 분산과 병력소모 및 피로를 촉진시키고, 위조지폐의 대량사용으로 남한의 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려고 했다. 북한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15명씩 조를 편성, 침투시켜 군복·신사복·동산복 등으로 위장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전개】** 무장공비들은 1차로 2개조 30명이 1968년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해안에 침투하였고, 2차로 2개조 30명도 11월 1일 울진군 북면 고포 해안으로 침투하였으며, 3차로 4개조 60명이 11월 2일 삼척 원덕면 월촌리 고포 해안으로 침투하였다. 생포된 무장공비의 진술에 의하면, 2차 침투조는 1968년 7월 9일부터 민족보위성 정찰국 산하 124군부대 1기지에서 부국장의 지시로 15명 2개조 30명이 평양에서 3개월간 유격훈련을 받고 10월 1일 기차 편으로 영산리에 도착, 30일간의 훈련이후 10월 30일 원산에서 배로 출발하

였다. 3차 침투는 해상 및 해안 경계병에게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아군의 조치 미흡으로 침투에 성공하였다. 무장공비들은 11월 3일 새벽 울진 북면 고수동 주민이 울진경찰서에 무장공비 출현을 신고하였다. 내용인 즉 이날 아침 무장공비 30여 명이 산간마을인 고수동에 나타나 주민들을 강제로 집결시켜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데, 이에 반항하는 주민들을 칼로 찌르고 돌로 쳐서 죽였고 또 신고할 경우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노동당, 여성동맹 등에 가입하도록 충점으로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결과】** 공비들은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머뭇거리자 대검으로 찌르는 등 만행을 자행하고 뒤늦게 도착한 주민은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릴레이식으로 신고하여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군경의 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군경과 예비군은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착수,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계속된 작전에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여 침투한 120명 모두를 소탕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측도 군인, 경찰, 일반인 등 20여 명이 사망하는 희생을 치렀다.

**【의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산악지대와 농촌에서의 게릴라 활동 가능성을 탐색해 본 것이며, 한국에서 월남과 같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지를 시험해 본 것이었다. 토벌작전에서 국군은 북한이 아무리 잔악한 공비를 침투시켜도 이를 격멸할 수 있다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실증으로 보여주었다.

**【핵심어】** 울진/삼척/무장공비/북한 게릴라/침투/민족보위성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제2집(국방부, 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458. 19681101 울진삼척무장공비사건, 수색작전에서 신현도 대위가 공비를 압송하는 장면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북한의 안보위협

**【소항목】** 대한항공 납치사건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포함 피격	● 대한항공 납치사건
1.21 청와대 기습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정의】** 대한항공 납치사건은 북한이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와 승무원, 승객을 납치하였다가 65일 만인 1971년 2월 14일 대한적십자를 통해 귀환시킨 사건이었다.

**【배경】** 북한은 민간항공기 납치라는 반인류적·반문명적 테러를 통해 남한의 불안한 상황을 세계에 알려 한국을 고립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발발】** KAL기 납치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12:25분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승객 47명과 승무원 41명을 태우고 대관령 상공을 비행 중 고정간첩인 조창희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동 여객기가 월북한 다음날인 12일 착륙지점을 밝히지 않고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 입북”이라는 간단한 보도만 하였다.

**【전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체와 51명의 탑승객을 감금해 놓고 미리 조작한 각본대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12월 20일 조종사의 기자회견을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즉, 조종사 유병하와 부조종사 최석만은 12월 11일 우연하게도 같은 조로 편성되어 강릉을 갔다 오게 되었으며, 이들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심전심으로 서로 뜻이 통했기 때문에 자진 월북을 강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 기자들의 질문도 한결같이 월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두 조종사는 각본대로 북한 현실의 찬양과 한국 실정의 왜곡선전으로 시종일관하였다. 북한은 승객들을 모두 한 사람씩 평양의 여관방에 격리 수용하고 성분 조사를 핑계로 약물마취와 전기고문을 하였으며 하루 4시간씩 강제 학습을 실시하여 세뇌공작을 했다고 하였다. 당시 승객들은 항공기가 대관령 상공에 이르렀을 때 객석 조창희가 갑자기 조종실로 들어간 직후부터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고, 동해 상공에 이르렀을 때 2대의 북한 전투기가 KAL기를 호위한 것을 보고 나서야 납북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1969년 12월 25일 북한 중앙통신사는 성명을 발표하여 인질외교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성명에서 조종사에 의한 의거 입북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십자사 제3자의 개입없이 그들이 지정한 민간대표들과 직접 소환교섭을 벌이자고 정치적 흥정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즉시 이러한 북한의 공중 해적행위를 규탄하고 기체와 승무원 및 승객전원의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송환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남북행위 자체가 군사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송환교섭도 아울러 전개하였다.

**【결과】** 북한은 1970년 2월 5일 남북승객을 송환하겠다고 국제적십자사에 송환을 통보하고 지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송환하지 않았다. 1970년 2월 14일 오후 5시 탑승자 51명 가운데 39명이 판문점을 통해 남북 65일 만에 다시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날 39명의 귀환승객들은 오후 8시가 넘어 서울에 도착,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KAL기 납북경위와 북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의의】** 북한은 민간항공기의 범죄적 납북을 은폐하기 위해 두 조종사에 의한 의거입북을 주장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을 억류하였으나, 북한의 민간항공기 납북사건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핵심어】** 대한항공/민간인 납북/국제적십자사/군사정전위원회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제2집(국방부, 1997);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459. 19691211 납파간첩에 의해 납치되었다 풀려난 탑승객들이 가족과 상봉하는 모습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북한의 안보위협

**【소항목】**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포함 피격	대한항공납치 사건
1.21 청와대 기습사건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정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작업을 경비하던 미군들이 북한군의 도끼 기습을 받아 희생당한 사건이었다.

**【배경】** 유엔군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군 만행의 발단은 3명의 유엔군 측 장교와 수명의 경비병들이 이날 오전 한국노무단(KSC)의 노동자 5명을 호위하여 유엔군 측의 제3 경비초소로부터 35~40야드 떨어진 곳의 미루나무의 나뭇가지를 치고 있을 때 2명의 북한군 장교와 수명의 경비병들이 작업현장에 나타나면서 비롯되었다.

**【발발】**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측 노무자들이 아군측의 경비의 시야를 가리는 나뭇가지를 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사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던 북한군 30여 명이 노무자들의 작업을 감독 및 경비하던 유엔 측 경비병을 도끼와 곡괭이 등을 휘두르며 잔혹하게 기습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미군장교 2명이 피살되었고, 카투사 5명과 미군 4명 등 유엔군 측 경비병 9명이 중경상을 입고, 유엔군 측 차량 3대가 파손되는 손실을 입었다.

**【전개】** 북한군들은 유엔군 측에 나뭇가지 치는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때 북한군 30여 명이 차량으로 증원되었다. 그리고 북한군 장교가 “저놈들을 죽이라.”고 소리 치자 북한 경비병들이 갑자기 습격해 왔다. 미군 장교 2명이 도끼·곡괭이 등으로 습격하는 30여 명의 북한 경비병에게 두들겨 맞아 살해되었고, 1명의 한국군 장교와 4명의 한국군 사병 및 4명의 미군 사병이 부상당했으며, 유엔군 측 차량 3대가 파괴되었다. 사망자는 중대장 보니라스 대위와 소대장 바레트 중위로서 정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인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결과】** 도끼만행사건은 즉시 유엔사와 미 합참으로 보고되었고, 미군은 전쟁을 상정한

비상을 발동시켰다. 이때의 군사적 상황이 한반도의 가장 큰 위기상황이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휩싸인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파문은 김일성이 유감표시와 함께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남과 북으로 갈라 분할 경비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의의】** 이 만행사건은 북한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이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사건경위에서 드러났으며, 특히 2명의 미군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것은 의도적으로 음흉한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북한은 전쟁에 대비하여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였고, 1966년 8월에는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여 1970년대 ‘남조선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전쟁도발행위를 격화시키고 있었다.

**【핵심어】** 공동경비구역/유엔군/만행사건/비무장지대/보니라스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2(국방부, 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3(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460. 19760818 판문점 도끼만행 현장에서 육박전을 치루는 미군·북한군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국가안보 의식 강화

**【소항목】** 반공의 시대상

● 반공의 시대상	민방위대 조직
향토예비군	

**【정의】** 반공시대상은 분단과정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었고 5·16군사정변 이후 강화되었다.

**【배경】** 반공이 한국에서 중요한 정책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대한민국정부수립부터였다.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 반공의식이 심화되어 반공시대상이 조성된 것은 6·25전쟁 이후부터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중간과 정치세력이 소멸되고 전 국가적으로는 반공을 국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공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냉전구도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이 주요 반공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와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발발】** 1945년 9월부터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반공주의가 서서히 강화되었고, 특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반공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1949년 학도호국단을 창설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반공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국가와 민족의 안보는 반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부는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민의 반공의식을 강행해 나갔다. 당시 좌익세력과 정면으로 맞섰던 이범석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군대 및 경찰조직에 파급되었고, 그 결과 정부의 반공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개】** 정부의 반공정책은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어 갔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로써 제3공화국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반공교육도 일대전환을 가져와서 종전까지의 반공도덕교육이 제도적으로 전 교과과정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반공의식 강화정책은 1960년대의 베트

남과병과 북한의 무장간첩침투사건 등으로 더욱 발전되었으며, 특히 1968년에는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라는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고 대학에서 국민윤리가 필수 교양과목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교육헌장’은 새로운 국민상과 국민교육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1970년대의 제4공화국은 반공 안보교육에 역점을 두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새마을교육이 전개되었다.

**【결과】** 5·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장군이 민간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된 제3공화국의 정책은 군사정부의 반공정책 계승하였고, 이후 1970~1980년대 반공시대상이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모든 남녀 고교생이 교련복을 입고 운동장에 모여 뺨안 먼지를 날리며 훈련을 받고 여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구급교육을 받던 광경, 그리고 군복 차림으로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총검술을 가르치던 교련 교사의 모습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승공만이 살길이다 북진통일 이룩하자, 때려잡자 김일성 물리치자 공산당, 어둠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찾자,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혼란속에 간첩오고 안정 속에 번영한다, 집집마다 멸공정신 마을마다 안보태세, 뿔뿔 뿔뿔 뿔뿔 뿔뿔 정신 빈틈없는 자주국방, 아빠는 안보역군 엄마는 총화역군” 등의 반공표어는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의의】**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반공시대상을 보여주었고 선성장정책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반공주의와 산업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가안보력의 확보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핵심어】** 반공주의/5·16군사정변/박정희/새마을운동/공산주의/국민교육헌장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1954);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사진자료】** 461. 19680121 무장공비 진상을 알리는 간행표지물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국가안보 의식 강화

**【소항목】** 향토예비군

반공의 시대상	민방위대 조직
● 향토예비군	

**【정의】** 향토예비군은 북한의 남침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1968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 3386호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1968년 4월 1일 국방부령 제123호로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면서 창설되었다.

**【설립배경】** 북한은 전쟁에 대비하여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였고, 1966년 8월에는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여 1970년대 ‘남조선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전쟁도발행위를 격화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은 최초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활동사항】** 북한은 1968년 휴전선 근방에서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 공격을 기도하고 잇따라 해상에서도 미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를 비롯한 한국 어선의 납치행위 등을 계속하는가 하면, 같은 해에만 무려 300여 건, 1천여 명에 달하는 무장간첩을 남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 중심의 국방정책을 자주국방태세로 전환하고, 향토예비군 2백 50만 명의 무장화하고, 무기생산 공장의 연내 건설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우리의 안보를 자주국방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기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대한 개정안과 예산운영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그리고 현 체제하에서도 대공태세는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와 여야 간 공방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 게릴라 대비전에 대한 태세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이에 따라 1968년 3월 26일까지 향토예비군 191개 대대, 2천 6백 8개 중대, 478개 직장중대가 편성되어 총 1백 66만 2천 143명으로 조직편성을 완료하고 이 해 4월 1일에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방방위임무를 부여받고 전국토의 방어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호응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경과·변천】** 향토예비군은 단계적으로 정비 강화되어 4백 50만 명에 달하는 막강한 제2의 국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향토예비군의 조직은 당시 북한군 2백 10만여 명의 병력

을 상회하는 우위효과를 주었으며 실질적으로 후방방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 향토예비군은 이해 7월 29일에 무안 허사도에 침투한 무장공비 2명을 사살한 전과를 시발로 군경과 함께 같은 해 11월 2일에 울진·삼척지역에 출현한 무장공비 107명 사살, 7명 생포, 그리고 주문진 무장공비 침투 시 8명을 사살하는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작전과 최근 재해복구 작업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의】** 향토예비군은 1968년 5월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액 1억 달러 추가 군사원조 중에서 M-2 카빈 소총을 비롯하여 탄약 및 부속품을 보급 받아 무장하였다.

**【핵심어】** 북한의 군사노선/전쟁준비/군사도발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1954); 국방부,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사진자료】** 462. 19681030 삼척지역 무장공비 소탕에서 전사한 향토예비군  
463. 19680401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향토예비군 창설식  
464. 19680401 향토 예비군 창설식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경제개발과 산업화

**【키워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전시항목】** 국가안보 의식 강화

**【소항목】** 민방위대 조직

반공의 시대상	● 민방위대 조직
향토예비군	

**【정의】** 민방위대는 법률 제2776호: 민방위기본법을 근거로 1975년 7월 25일 창설되었으며, 전시 일부지역에서 공공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아 조직되었다.

**【설립배경】**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총력안보체제와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975년 7월 9일 제93회 임시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民防衛基本法)을 통과시켜 7월 25일 법률로 제정 공포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9월 1일부터 각 지역별로 민방위대가 편성되었다.

**【활동사항】**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975년 9월 1일부터 각 직장 및 지역별로 편성에 들어간 민방위대는 9월 말까지 편성을 완료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국방부 직장민방위대 발대식을 거행한 것을 비롯하여 10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350여만 명에 달하는 규모를 갖 추게 되었다.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었고, 지역민방위대는 다시 통(統)·리(里) 민방위대와 읍(邑)·면(面)·동(洞) 민방위대로 구분되었다. 내무부에는 민방위전담기구인 민방위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에는 민방위국을, 구·시·군에는 민방위과를, 읍·면·동에는 민방위 담당자를 두며 따로 자문·심의기관인 민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경과·변천】** 민방위대 창설과 동시에 학도호국단이 설치됨으로써 자주 국방력의 강화와 학풍의 쇄신책의 일환으로써 국민적 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학도호국단의 설치는 1975년 6월 7일 호국학생의 국가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공포된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법적인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 후 7월 중에 총력안보를 위해 전국의 대학, 전문학교의 전 학생과 교직원들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여 학교별로 발단식을 완료하게 되었다. 9월 2일에는 4만여 명의 전국 고교 이상의 남녀학생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여의도광장에서 학도호국단 중앙발단식을 거행했다.

**【결과】** 인도차이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민방위법은 미국이나 스위스, 이스라엘 등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한 총력안보체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여기에서 학도호국단의 창설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제기되어왔던 학생군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성과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의의】** 민방위대가 창설됨으로써 학생군사교육의 강화를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국토방위의 결의를 다져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목표하에 1975년 7월 11일 일반 대학생 군사교육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핵심어】** 북한도발/새마을운동/민방위법/학도호국단

**【참고문헌】**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4(군인공제회, 2002).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경제개발과 산업화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새마을운동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나 신흥도시로 이동해 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영남의 신흥공업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들 도시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 도시화에 따른 하층민의 주거생활은 무허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촌, 달동네 등에서 주거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섬유, 잡화, 식품 등 경공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고된 노동을 하였고 임금을 착취당하기도 하였다. 도시화의 진전은 농업인구의 감소를 가져와서 농촌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공동체에 가져다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72년 10월 새마을운동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우리 국민들의 굳은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식개혁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국가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에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졌고, 농민들은 원예·축산 등 영농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난 후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다. 또한 초가지붕 및 담장의 개량, 소하천 정비, 도로확포장, 부엌개량, 화장실 개선, 전기 및 전화보급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정부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진행되었다. 공무원과 학생들도 산으로 나무를 심으러 갔으며 대통령도 나무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73년엔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를 함께 추진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73년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6년 만에 달성되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교통·실업·교육·빈민·공해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 장기 임대아파트 건설, 지하철 건설과 도로망 확충, 의무교육 확대, 사회복지제도 도입, 환경부 신설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로 이주한 가족은 대부분 핵가족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 여기에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중요시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농촌인구의 도시전출은 도시의 주택·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도시의 무질서가 팽배하였고 농촌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도시화는 도시빈민들은 끼니를 걸러 가면서 엄청난 중노동 속에서도 굶하지 않고 저축과 절약을 통하여 부의 증대를 가져왔고 산업역군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문화는 1970년대에 들어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중문화 매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대중들의 오락 지향적 욕구의 상승과 함께 서구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70년대 대중문화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산업화는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동시킴으로써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산업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로 농촌인구를 끌어들이게 되었다. 특히 서울의 인구 성장은 더욱 두드러져서 1960~1970년 사이에는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70~198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분의 44.7%가 서울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과밀화, 도시빈민의 형성, 농촌 노동력인구의 절대 부족, 지방 중소도시의 상대적 침체, 도시의 주택·교통·위생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한편, 정부는 도농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1971년 전국 3만 3,267개 행정리동(行政里洞)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 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첫째는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로 부락민들이 자발적인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낸 경우이고, 둘째는 시멘트의 무상공급을 받았지만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부는 반응이 있는 1만 6,600개 부락에 대하여 또 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사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농촌개발사업을 넘어서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그 정신적 기조로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박정희 정부는 '73년에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를 연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73년에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6년 만에 조기 달성되었다. 새마을운동과 치산녹화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마을 주변의 산림을 주민 스스로 협동하여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공동체 단위의 산림계 활동이 적극화되었다.

**【핵심어】** 도시화/도시새마을운동/이농현상/도시인구집중

**【참고문헌】**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고현출판사, 2003); 신윤표,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론』(대영문화사, 2007); 내무부, 『새마을운동10년사』(내무부, 1980).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도시화의 진전과 생활환경의 변화

**【소항목】**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

●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	아파트문화
강남개발과 한강 다리	핵가족화, 가족계획
신도시 개발	

**【정의】** 이농현상이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배경】** 이농현상은 농민이 농업을 생업으로 농촌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농촌인구를 도시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이농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농현상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농업기반의 약화, 도시취업기회의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문화·복지·교육기회·보건·건강·의료혜택의 차이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농업보다는 2·3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공장을 세우고 산업제반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발발】** 인구가동의 선별적인 특징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침체하게 되고 대도시는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공공복리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전개】** 농민들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도시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도시빈민 등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도시는 농촌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을 정비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농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및 기관 등을 갖추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중공업으로 산업구도가 바뀌었고, 농촌도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에만 해도 도시화율이 39%에 불과하여 전형적인 농경국가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산

업화의 추세를 타고 경제활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을 계기로 도시인구증가의 폭이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1960~198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매 10년 전·후반 동안 각기 2.1%, 1.9%를 기록한 대신 도시인구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5.3%와 6.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도시화율은 1960년대의 33.8%에서 1970년의 49.8%, 1980년대에는 66.7%, 1985년에는 73.8%, 그리고 2010년 현재 82%로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불과 한 세대 남짓한 기간에 전통적인 농경국가에서 명실상부하게 도시화된 국가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결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도시지역이 갖는 인구부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도한 인구와 경제생활의 밀집은 토지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도시의 물리적 수용능력은 많은 위협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증가, 주택난, 도시 내 계층 간 격차심화, 공공시설의 부족,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이 심화되어 도시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대도시 내의 주택부족으로 시민의 기초생활이 불안정하고 위협을 받고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농촌공동체의 해체,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청장년층의 이농현상, 농산물의 생산 감소 등 농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의의】**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은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던 인적 자원의 이동현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농업생산과 농촌사회를 담당할 농업후계자문제, 농촌사회의 발전문제 등이 대두하게 되었고 또한 농촌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여성화되고 있다.

- 【사진자료】** 465. 19780101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2부제 수업 현장  
466. 1963 주택난해소를 위해 건설된 아파트 단지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도시화의 진전과 생활환경의 변화

**【소항목】** 강남개발과 한강 다리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	아파트문화
● 강남개발과 한강 다리	핵가족화, 가족계획
신도시 개발	

**【정의】** 강남개발은 1960년대에 서울 강북으로 인구가 모여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북과 강남을 연결할 수 있는 한강교량을 가설하여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여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배경】**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도시기반시설이 한계에 달하자 서울시의 최대 과제는 강북으로의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강남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이목을 끌게 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신도시개발의 이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강남 지역은 강북시가지와는 6~10km 거리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나 한강이 가로 질러 있어서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넓고 평탄한 개발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였고 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주거 밀집도가 낮았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개발을 하기에 유리하였고 비용도 적게 들었다.

**【시행】** 서울시 강남지역의 개발은 1963년 '서울시도시계획'에서 말죽거리를 6개의 부도심 중 하나로 선정한 데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강남개발은 1976년에 지하철 2·3호선의 건설, 강북 명문고등학교의 이전, 강북 주요 시설의 이전 등에 특혜를 부여하였다. 특히, 강북 명문고교의 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강북 중산층들의 강남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신설된 도시기능들이 상당수 입지함에 따라 강남지역은 서울의 중심업무지구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심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변천】** 오늘날 강남은 원래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과 광주군 언주면 중대면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나,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한강이 가로 놓여있고 강남과 강북 도심에 잇는 연결로가 없어 1960년대 말까지도 한적한 농촌이었다. 강남지역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울의 남쪽 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직전까지 도시화되지 못하고 서울의 배후 농촌지대로 식량을 공급하는 지역이었다. 1970년대 초반에 강남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잠실교, 영동교가 준공되고 남산터널이

개통되면서 강북 도심과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1974년에 주택공사에 의해 강남 최초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 들어 동호대교의 가설과 지하철 2, 3, 4호선의 개통으로 강북 도심과의 접근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내의 교통이 편리해졌다. 1980년대 말 양재대로의 개통으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에 이어 또 하나의 동서축이 만들어졌고, 자동차 교통 위주로 설계된 강남 시가지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말 강남지역은 신주거지, 상업 및 업무지구, 문화지구로 나누어지면서 새로운 시가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과·의의】** 강남개발은 강북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고 한강 남쪽의 넓은 농촌지역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강남개발은 의도적으로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으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성장해 온 기존 시가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60년대 말 군사정권 하에서 시작된 강남개발은 특유의 강한 추진력으로 강남을 단기간에 성숙된 시가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거의 없고 개발 경험이 부족하여 도시구조와 기능에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 강남지역의 투기과열과 강남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특혜로 강남·북 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개발은 한강교량 가설로 강북시가지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상업 및 업무지구, 신주거지, 새로운 문화지구로 발전하였다.

**【핵심어】** 서울/강북/한강/한강다리/강남

**【참고문헌】** 이옥희, 『서울 강남지역 개발과정의 특성과 문제점』(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6, 15~32);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 연역』(서울특별시, 2001); 서울특별시, 『서울의 도시계획』(서울특별시, 1394~2011, 30~33).

**【사진자료】** 467. 1974 반포1단지 아파트 전경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도시화의 진전과 생활환경의 변화

**【소항목】** 신도시 개발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	아파트문화
강남개발과 한강 다리	핵가족화, 가족계획
● 신도시 개발	

**【정의】** 신도시 개발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공업단지를 건설하면서 그 배후도시를 개발하게 되고,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농촌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도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공업단지 배후도시나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과밀화를 해결하기 추진되었다.

**【시행】** 1960년대에 개발된 신도시는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 울산(1962) 및 포항(1968), 그리고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된 성남시(1968)를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 초기의 농촌 경제발전계획에 따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신공업도시가 신도시로 형성되었다. 구미(1973), 창원(1977), 여천(1977), 반월(1978) 신도시는 이러한 신공업기지의 배후도시로 건설된 신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에는 서울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내 신도시 개발로서는 개포(1981), 고덕(1982), 목동(1983), 상계(1985) 등이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서울시 인구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변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주로 민간중심의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공업화정책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규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었다. 이에 1973년에 산업기지개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공공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 이를 신시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그 체계가 전환되었다. 1980년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주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택지개발 가능 토지를 대량으로 취득, 이를 개발하여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공영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점에서는 산업기지개발법과 크게 다

르지 않지만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개발방식이 자연히 퇴조되고,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들이 이 방식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법은 신도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구매하여 일괄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는 자족적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990년대에 신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0년에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결과·의의】**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주거용지와 생활환경의 건설을 통하여 자본축적이 확충되고, 대도시의 인구과잉, 주거, 교통, 교육, 의료·보건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도시구성원의 이질성, 지역 정체감과 공동체의식의 결여, 사회간접자본 설비의 미흡, 출퇴근시의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들은 도시기반이 축적되고 주민생활이 안정되어 독자적인 도시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핵심어】** 도시/도시문제/신도시/신도시 개발

**【참고문헌】** 최병두, 『18C 신도시와 20C 신도시』(말언, 1996, 40~63); 손장권 외, 『신도시의 형성』(백산서당, 2003); 이봉섭, 『도시론』(도시문제연구소, 2002).

**【사진자료】** 468. 199004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도시화의 진전과 생활환경의 변화

**【소항목】** 아파트문화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	● 아파트문화
강남개발과 한강 다리	핵가족화, 가족계획
신도시 개발	

**【정의】** 아파트 문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문화이다.

**【배경】**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은 판자촌 등 심각한 주택문제를 야기하였다. 6·25전쟁 이후 서울시내 산 중턱 곳곳에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도시빈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는 농촌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의 협소화와 인구과밀, 핵가족화와 세대 간의 변화, 여권신장, 중산층의 성장, 도시화와 교외화, 아파트 위주 주택정책, 민간 아파트 건설의 높은 수익성 등은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등장과 함께 아파트를 주거생활의 근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산 중턱에 시민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는 사업과 함께 도심 일원에 주상복합형 상가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였다. 1960년대 말까지 아파트건설은 대부분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외국인을 위한 임대용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로 서민용·소규모 아파트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조성을 계기로 대규모화, 밀집화, 고층화되어 갔다. 정부에 의한 중산층 거주형 대단위 단지 아파트 건설은 1971년 동부이촌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10년 후 서울 강남에 고층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1970년에 발표된 강남개발계획은 중산층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더욱더 촉발시켰다. 1972~1974년 대한주택공사는 동작대교 남단에 반포아파트단지를 건설하였다.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75~1979년 사이에는 잠실지역에 초대형 단지아파트가 들어섰다.

**【발발】**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1970년대 이후 아파트란 중산층 이하 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정착이 되었다. 그러나 서울이 커지게 되면서 서울외곽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주택보급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과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 그리고 신혼 중산층 주택수요자 요구로 고층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은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확산시키게 되었다. 1993년 이후 아파트는 선호도 측면에서 단독주택을 능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본격적인 아파트시대가 도래하였다.

**【결과】** 아파트 주거문화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투자의 집중효과로 인해 상대적 재산가치 상승하면서 선호대상이 되어왔다. 집이라는 것이 한 가족의 생활 근거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활의 중심지이다. 그러므로 주거 형태의 변화는 가족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 지역경제, 지역사회, 문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생활은 이웃 간에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소통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고 주거형태의 일관성으로 인한 획일화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거문화는 편리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현대인의 주거형태임에 틀림없다.

**【핵심어】** 아파트/아파트 문화/공동주택/주거형태

**【참고문헌】** 이옥희, 『서울 강남지역 개발과정의 특성과 문제점』(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6); 온난순, 『1980년대 이후 한국 주거문화에 나타난 근대화의 재평가』(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4); 홍정의, 『신주거문화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2004).

**【사진자료】** 469. 197306 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도시화의 진전과 생활환경의 변화

**【소항목】** 핵가족화, 가족계획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	아파트문화
강남개발과 한강 다리	● 핵가족화, 가족계획
신도시 개발	

**【정의】** 핵가족은 가부장적 대가족제에서 분리되어 가족부부와 미혼의 아들, 딸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가족계획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모자보건(母子保健)과 가정복지의 향상을 추구하고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배경】** 산업화와 더불어 이농현상이 나타났고, 젊은 인구의 도시로의 진출은 확대가족을 핵가족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는 1960년대 이후 인구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자녀가 적은 가구를 적극 장려하였다.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후 전쟁 이후 도시에서는 확대가족주의와 소가족주의가 병행하여 발전하였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가족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핵가족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족이란 개념보다는 가구, 친족, 집, 가정과 같은 용어로 가족을 총칭하고 있어 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핵가족이 출현되기 시작한 1970년대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6·25전쟁 중의 높은 사망률을 제외하면 사망률은 점차 낮아져 1960년대 접어들어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은 형태로 변화하였다. 의료 및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960년대에 출생율은 높고 사망률은 낮은 인구구조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산업화의 속도와 인구증가 속도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과도한 인구증가는 산업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시행】**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도 가구 형태와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하였다. 가족의 구성 형태는 확대 가족이나 직계 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바뀌었다. 가족의 다양한 기능들은 축소되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전문적인 사회제도가 수행하게 되었다.

1962년 3월 보건사회부는 전국 규모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가족계획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를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토록

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1962~1966) 기간에는 시·군 지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 '가족계획계몽원'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계몽 및 피임 보급을 위한 가정 방문과 집단 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1967~1971)기간에는 민간단체인 대한 가족계획협회와 가족계획어머니회를 통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다.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조사·평가 작업을 실시할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창설되었다. 제3차 5개년계획(1972~1976)기간인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 과정에 인구교육을 포함시켰다. 1976년에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법 개정, 의료보험의 분만 급여, 공무원의 자녀 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2자녀로 국한시켰다.

**【변천】** 과거에는 하나의 가족 안에 3대 이상의 직계 친조부·부·자·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던 대가족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족 형태는 산업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외양적으로는 서구화로 인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서 핵가족화가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가족은 기혼 여성의 취업이 급증하면서 가구 생계 양식이 1인 부양 체제에서 2인 부양 체제로 변화하는 등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이나 친족 집단을 중시하던 집단주의적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인화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출산억제시기(1961~1995년)에 인구증가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당시에 슬로건은 “적게 낳아 잘 기르자”(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70년대 후반~80년대)이다. 또한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년)에는 '9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유지됨에 따라 종전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출생성비 균형,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초에 연간 약 100만 명이던 출생아수가 2010년에는 46만 9천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낮아져 2010년에 1.2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지속 발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결과·의의】** 가족 내적으로도 성별, 세대 간 가치관의 괴리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1.17명이라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대, 이혼율의 급증,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등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 온 가족 기능이 붕괴되어 많은 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가족 관계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만큼이나 빠르게 변

하고 있다. 세대, 지역, 학력,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이념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이념은 현대인들이 가족에 요구하는 경제적 기능과 역할이 매우 복잡함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가족 내 지위에 따라 가족에 요구하는 경제적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출산, 사망, 이동 등 인구학적 변화로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 해체와 회피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이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족관계 등 가족의 소중함은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미덕이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가족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구 정책의 결과 1979년 당시 출산율은 몇 년 내 인구증가율이 제로 상태에 이를 만큼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인구정책 덕분에 한국은 1960년대 초 여성 1인당 출산율 4.5명으로 세계 81개 고출산율 국가에서 1990년대 초에는 인구성장률 제로 수준에 도달한 6개 국가 중 하나로 바뀌었다. 한국사회의 가족계획은 높은 출산율을 가져오는 문화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계획을 포괄하고 있었다. 소가족 제도라는 새로운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금공제, 공공주택 우선 분양권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높은 출산율이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가족법을 개정하여 딸도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공교육 캠페인을 통해 남성우위관념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자녀 갖기 운동, 출산장려금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핵심어】** 가족/가구/핵가족/확대가족/가족계획/인구/인구문제/저출산

**【참고문헌】** 여성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여성부, 2004); 손병덕 외 공저, 『가족복지론』(학지사,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족계획』(한국학중앙연구원); 김광동 외, 『한국 현대사 이해』(경덕출판사, 2007);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건복지부(<http://www.mu.go.kr>)).

**【사진자료】** 470. 199007 세계 인구의 날 산하제한 가두캠페인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새마을운동

**【소항목】** 새마을운동

● 새마을운동	농어촌 전화사업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근대화10개년계획

**【정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생활태도와 마음가짐을 혁신하여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생활개선 실천운동이다.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행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농촌의 빈곤과 낙후성, 기업의 불황, 대도시 인구 집중, 주민참여의 부재 등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발발】** 새마을운동은 1969년 8월 즈음에 경상도 지역이 심각할 정도로 수해를 입어 박정희대통령이 현장 시찰을 하고 있던 중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 1리를 돌아보았는데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이 넓혀져 있고, 지붕이 개량되고 담장까지 말끔히 다듬어져 있었다. 이것을 본 박대통령이 이유를 물어보자 “마을사람들이 기왕에 수해로 쓰러진 마을을 복구할 바에야 좀 더 환경을 잘 가꾸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자진하여 협동하여 이루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박대통령은 농민들의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일깨워 전국 농촌을 신도리 마을처럼만 만든다면 간난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일을 구상하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락이 총동원되어 추진하면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도와주겠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그 운동을 ‘새마을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데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전개】**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전국 3만 5천여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마다 335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그 후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직장과 공장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 내무부는 참여도가 낮고 새마을사업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전국 3만 3천여 개 마을을 기초마을(1970~1973

년)로 지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초와 자립마을 중간 정도인 자조마을은 (1974~1976년) 쌀의 증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통일벼가 재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농촌에서도 쌀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자립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마을(1977~1979년)로서 법질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 조성 등 기초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문화 복지사업을 전개하였다.

**【결과】**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고취시켜주었고, 물질적인 측면은 농촌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하였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농촌주민이 부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농간의 격차를 많이 줄여 주었다.

**【의의】**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농촌에서 시작하여 도시와 공장·직장, 그리고 학교로까지 확산·전개됨으로써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에게 협동심을 길러주어 '근대적' 국가와 민족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재조명과 재평가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콩고, 몽골, 중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등에 새마을운동 전수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높여 주고 있다.

**【핵심어】** 새마을/새마을운동/농촌/1970년대

**【참고문헌】** 김수학, 『새마을운동의 결산』(지방행정, 415~431); 김용선, 『1976년도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발전방향』(산림조합중앙회, 1977, 14~50); 새마을운동중앙회, 『2007 국제새마을사업 결과보고서』(2007); 신운표,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론』(대영문화사, 2007).

**【사진자료】** 471. 1976 새마을운동의 현장

472. 197204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새마을운동

**【소항목】** 농촌사회의 변화

새마을운동	농어촌 전화사업
●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근대화10개년계획

**【정의】** 한국사회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농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화 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며 농가의 소득이 증가되는 등 농촌사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배경】** 1960년대 공업위주의 국가발전에 주력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개발이 소홀하게 되어 산업간,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증가되었다. 농촌지역의 낙후는 농촌의 심각한 가난을 야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또한 농촌의 개발격차로 인해 농민의 도시유입현상이 심화되자 농업의 생산력이 떨어져 식량과 원료생산물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은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전개】** 1950년대 농촌은 과잉 인구나 만성적인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4H운동을 확대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1980년대 새마을운동은 시련과 침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모색의 시기였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체제로 전환되어 민간주도 운동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담당하였던 행정기구가 축소 및 폐지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업무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주도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막강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마을운동 추진은 외형상으로는 민간주도라고 하여도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새마을단체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거리 환경을 깨끗이 하고 질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민간 차원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결과】**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도로와 교량 등 교통시설의 개선, 마을회관과 창고 등 공동 시설물 건립, 수리시설 개선, 주택개량, 상하수도 설치, 전기 및 통신 시설의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농민의 의식이 개발지향적으로 바뀌어 농민의 수행

능력이 그 이전과는 구분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의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고취하였다. 물질적인 면의 성과는 전국의 농촌주민이 참여하여 생산기반을 정비하였으며, 그 비용의 49%를 농촌주민이 부담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농 간의 격차를 크게 완화할 수 있었다.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71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마친 후 평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자조정신 함양이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민들은 자조, 협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를 실증하였으며, ‘스스로 하면 된다’는 주민자조 개발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농한기에는 청장년들이 할 일없이 술집이나 사랑방에 모여 음주, 도박하던 습관이 없어지고, 손님접대나 제사를 간소화하고, 절미운동과 분식을 장려하고, 부인이 간이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 농어촌에 검소한 생활기풍이 점차로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일선지방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1970년대 한국농촌은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농민들의 사고방식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되었다. 농촌사회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근대적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핵심어】** 새마을운동/농촌사회/농촌사회의 변화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 <http://contents.archives.go.kr>; 박섭·이행, 『근현대 한국의 국가와 농민: 새마을운동의 정치사회적 조건』(한국정치학회보, 1997, 47~67); 장경근, 『정부와 국민운동과 관계 분석을 통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방향 모색』(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문화공보부, 『새마을운동』(1973).

**【사진자료】** 473. 19780101 농촌의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한 비닐하우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새마을운동

**【소항목】** 농어촌 전화사업

새마을운동	● 농어촌 전화사업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근대화10개년계획

**【정의】** 농어촌 전기사업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전기를 가설하고 동력을 시설하며, 제반 전력시설을 가설하여 일상생활과 영농이나 부업에 편리하도록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배경】** 1965년 당시 전국의 전기공급상황은 총 403만 6천호 가운데 102만 7천호만이 전기가 공급되어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의 전기공급률이 25%에 그치고 농어촌지역의 전기공급률은 매우 저조하여 12%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 미공급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재정융자금을 전기수용자에 용자해 주고 배전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담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시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71년 6월 상공부(현 지식경제부) 내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농어촌전기가설사업은 상공부에서 당해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전기가설 목표 호수와 전기가설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조사설계지침·공사시공 및 검사요령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지침을 전달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해 주었다. 1984년 12월 31일에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수용가의 잔여 용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변천】**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

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벽지의 전기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하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결과·의의】** 그 결과 1964년 말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지역 전기공급률이 1975년 말에는 74%, 1980년 말에는 99.3%를 달성하였고, 1988년 말에는 전기공급률 99.9%를 달성하였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어촌 전기통신사업의 추진으로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고 생산증대와 지방공업육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1970년대 초에 새마을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장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핵심어】** 농어촌/새마을운동/소득증대/전기공급

**【참고문헌】** 내무부지방국새마을과, 『새마을운동길잡이』(광명인쇄공사, 1975);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백서』(2006); 대한전기협회네이버, 『전기연감』(2007); 한국전력공사, 『도서·벽지 주민등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지원사업 수행결과 보고서』(한국전력공사, 2006).

**【사진자료】** 474. 19780101 농민의 삶의 향상을 보여주는 경기도 어느 농가 거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새마을운동

**【소항목】** 농어촌근대화10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농어촌 전화사업
농촌사회의 변화	● 농촌근대화10개년계획

**【정의】** 농어촌근대화계획은 새마을운동에 기초하여 전근대적 사고와 영농방법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인 사고와 기술적인 방법으로 농어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우리나라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의 가난, 젊은층의 도시전출,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커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은 생산성 경쟁에서는 도시에 뒤지지만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식량의 생산, 원료의 공급, 자연 및 문화 경관의 보전 등 농어촌이 담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의 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는 도시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우며, 농어촌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도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면 국민개개인의 정신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어촌 주민은 전통적 가치 관념인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양 체념과 실의 속에서 살아가는 소극적인 생활관과 비생산적인 전통의식이 만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조국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내실 있고 진취성 있는 생활태도로 변화가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시행】** '72년부터 착수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농업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개발에 큰 목표를 두고 식량의 자급자족, 농업 생산기반의 근대화, 농어촌 환경의 극대화, 농가 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농어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변천】** 한국의 도시화·공업화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전통 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것과 결부되어 도시와 농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인구가 급증한 1960년대의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농촌에서 잠재적 실업 상태로 있기 보다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도 도시에서 취업하는 것을 선호했다. 1960년대 이후에도 한국의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용기회가 계속 증가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의 노

동생산성 증가속도가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높아 결국 농촌에 필요한 노동력까지도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밖에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와 농촌 젊은층의 도시문화 선호도 이촌향도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농촌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진행되어 도시로의 인력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근대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60년도 초기부터 시작된 당시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다. 두 번째는 1970년4월22일부터 전개된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로 주민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원으로써 그 의미를 실감케 했다. 세 번째는 1972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영농기업의 새로운 풍토와 수자원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대강유역 개발사업이다.

**【결과·의의】** 이러한 근대화사업은 자립마을을 증가시키고 농가호당 연평균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연 평균소득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 전화사업의 확충을 통한 도시공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농어촌근대화는 국가건설을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농어촌근대화계획은 농촌개발에 있어서 자본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60년대의 경제개발, 특히 공업부문의 놀라운 성장을 가져와 농업 부문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력을 길러주었다.

**【핵심어】** 농어촌/새마을/근대화/농어촌근대화

**【참고문헌】** 정갑진, 『농촌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재조명』(2005); 네이버 백과사전, 『농촌 근대화촉진법』.

**【사진자료】** 475. 19780101 현대화한 오늘의 농촌모습(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산림녹화(치산치수)

**【소항목】** 경지정리사업

● 경지정리작업	주요도시 그린벨트 지정
산림녹화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정의】** 경지정리사업은 농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보전하고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배경】**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논은 불규칙한 밭둑과 관계시설의 미비 그리고 좁은 농로와 미분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불규칙하고 세분화된 경지를 적정규모로 구획을 정하고 정비되지 않은 농로나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개조와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행】** 이 사업은 1964년 경상북도 도 자체계획인 ‘도약 경북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금릉군이 8개 지구 761ha를 가장 먼저 착공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경북에 이어 강원, 충남, 경남에서도 도 자체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농민들은 경지정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이 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였으며, 사업비도 대부분은 지방비와 농민들의 노력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1965년 대통령 연두교서는 농촌근대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경지정리사업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게 되면서 1965년부터 경지정리를 정부계획사업으로 채택하였다. 1970년 1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사업비의 50%는 국고보조와 나머지는 외국차관자금에 의하여 금강·평택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구역 내의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70년도 각 시도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보고를 집계한 1차 대상면적 58만 8,000ha 중 1981년도 말까지 68%인 39만 9,400ha를 정리 완료하고, 그 후 계속 추진되었다.

**【변천】** 당시의 여건 하에서는 농토가 부족하고 농촌인구가 과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시행하게 되면 농가호당 경지면적의 영세화가 더욱 증가되어 간다는 점을 들어 사업시행을 극구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경지정리과정에서 자기소유토지의 이동을 원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농민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 등이 경지정리를 반대하는 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근대화의 새바람과 함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고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1971년부터 국고보조 50%, 지방비 30%(도비 15%, 군비 15%), 농민부담 20%로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1972년부터는 평택, 금강, 영산강 등 지구에서 경지정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70년대 이루어진 농지의 경지정리는 농촌근대화촉진법(1970.1.12 제정)에 근거해 왔으나, 이 법은 현재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다. 정부에서는 1969년 당시에 전국의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총 담면적의 45%에 해당하는 588천ha를 정비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오던 중 농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이앙기, 콤팩트 등 영농기계가 급속도로 보급되어가고, 기계화 영농이 필수적인 단계임에 비추어 대상면적을 1970년대 말에 종전의 588천ha에서 706천ha로 확대·조정하였다. 이후 경지정리 사업은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비현대화가 이루어졌다.

**【결과·의의】** 농어촌근대화계획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였다.

**【핵심어】** 경지정리/경지정리사업/농어촌근대화법/농어촌정비법

**【참고문헌】** 농어촌진흥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총람』(농어촌진흥공사, 1999, 549~579); 네이버 백과사전, 『경지정리』.

**【사진자료】** 476. 1980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산림녹화(치산치수)

**【소항목】** 산림녹화

경지정리작업	주요도시 그린벨트 지정
● 산림녹화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정의】** 산림녹화는 황폐화된 산지에 산림을 조림하고 보호하며 사방공사 등을 통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며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활동이다.

**【배경】** 일제 말기부터 시작된 전쟁물자 조달, 해방 후의 인구증가, 6·25전쟁 그리고 전후복구를 위한 자재수요의 증가, 여기에 국가의 산림관리 기능 실종까지 가세하여 산림 자원이 더욱 황폐하게 되었다. 특히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임산연료 이외에는 대체연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나무를 소비했던 우리나라 특유의 온돌문화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였다. 국민들은 산에서 생산되는 부족한 나무 원료를 극복하기 위하여 솔잎이나 솔방울까지도 땀감으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림은 단순히 치산치수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하였다.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이름의 단체들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행】**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연료림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973년, 100만ha 조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종합화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기본목표를 국토의 녹화에 두고, 새마을 운동을 통한 조림애국사상의 생활화로 녹색혁명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추진되었다. 중점시책은 자연보호에서부터 산림보호,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지력증진, 농촌연료대책 수립, 목재수급의 안정, 국민식수 및 의무조림 강화, 용자제도 개선, 신품종개발, 사방녹화 실시, 국민교육 및 홍보 실시, 시험연구 강화, 조림 사후관리 등이었다. 이 시기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5개년계획(1972~1976)의 국토종합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한 시기로서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던 시기였다.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임산연료를 무연탄 등 대체연료로 바꾸면서 산림보호 및 산림녹화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

**【결과】** 이 계획은 원래 1973년부터 1982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당초 계획

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나무는 산주만이 심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묘목을 길러서 심어 가꾸는 범국민 조림운동을 실시하여 마을·가정·단체·기관 및 학교 등이 일체가 되어 연중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약 108만ha를 조림하였고, 약 421만 3천ha의 육림사업, 4만2,000ha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양묘는 30억 5,400만 본을 생산하였다.

**【결과·의의】** 새마을운동과 치산녹화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마을 주변의 산림을 주민 스스로 협동하여 조림·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공동체 단위의 산림계 활동도 활성화 되었다. 마을권역별로 조림식수가 주민 개개인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속성 유실수 위주의 조림을 우선 권장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잘 살아 보자'는 국민 공동체 의식과 산림녹화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산림녹화사업이 국가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UN의 21세기 세계 최대 조림 성공국가로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을 남겼다. 범국민 조림을 통한 국민의 산림의식 고취와 숙원사업이었던 화전정리사업을 완결시키는 등 우리나라 임업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다.

**【핵심어】** 산림/녹화/산림녹화사업/박정희 정부

**【참고문헌】** 한국행정학회, 『한국의 치산녹화 성공사례 분석』(한국행정학회, 2009, 12~30); 김용선, 『1976년도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발전방향』(산림조합중앙회, 1977, 14~50); 국가기록원, 『산림녹화』(국가기록원); 내무부, 『국토녹화 10개년 계획(기본계획)』(내무부, 1970).

- 【사진자료】** 477. 산림녹화 현장  
478. 산림녹화 이전 헐벗은 산림  
479. 산림녹화 이후 산림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산림녹화(치산치수)

**【소항목】** 주요 도시 그린벨트 지정

경지정리작업	● 주요도시 그린벨트 지정
산림녹화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정의】** 그린벨트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배경】** 1971년 정부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유지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연휴식공간을 확보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주변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고밀화는 지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이용을 집약화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 면적당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건축물이 고층화하게 된다. 이는 도심지역내의 지가급등, 각종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게 됨에 따라 도심은 텅 비어 공동화되고 외곽은 밀집하게 된다.

**【시행】** 당초에 그린벨트의 지정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서울의 안보상의 위치로 인해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그린벨트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린벨트의 지정현황은 1971년 1월 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한 후 1971년 7월 서울 외곽지역에 그린벨트의 지정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구 억제를 위하여 대도시 주변지역에 지정하였다. 그 후 제주는 1973년 6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월에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들에 모두 지정하였다.

**【변천】** 1971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의 지정이 설정된 이후 1977년 여수시를 지정함으로써 총 8차례에 걸쳐 전 국토의 5.4%인 5,397km<sup>2</sup>를 지정하였다. 199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하였다. 2001년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

선에 따라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이와 함께 조정가증지가 대책 및 지역현안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해제되면서 2008년 9월 현재까지 전국 14개 도시권에서 총 1,457km<sup>2</sup>가 해제되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3,904km<sup>2</sup>로 전국토면적의 4% 수준으로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 등 222km<sup>2</sup>가 추가·해제된 예정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주택 6만여 동이 남아있고, 4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결과·의의】** 우리나라는 그린벨트구역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여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전하고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다. 또한 복잡한 도시민에게 탁 트인 개방공간과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에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토지를 보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구역의 지정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초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지방도시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핵심어】** 도시개발/도시주변/개발제한/개발제한구역

**【참고문헌】** 김선희, 『개발제한구역 설정배경과 변천』(도시문제, 2008, 12~22); 김태복,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사진자료】** 480. 19901113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단속현장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전시항목】** 산림녹화(치산치수)

**【소항목】**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경지정리작업	주요도시 그린벨트 지정
산림녹화	●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정의】**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은 홍수와 한해(旱害)를 줄이기 위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에 댐을 만들고 작은 강에는 보(洑)를 만들어 집중 호우 때는 물을 가둬 수해를 줄이고 갈수기 때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배경】**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은 한국 사회가 농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산업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마저 경쟁력이 낮아져 청장년층은 도시로 진출하고 노령층만 농촌에 머물게 되었다. 정부는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은 물 부족·수요량 감소 및 홍수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고, 산업화 시대에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1970년대 초반 전체 국민의 절반이 넘었던 한국의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다. 가뭄이 지속되고 땀별이 내리쬐면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살아왔다. 한해와 홍수의 수해를 벗어나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며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15일에 농림부와 건설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들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강수량이 적은 시기이다. 따라서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내리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지 못하여 가을에서 봄까지 한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시행】** 이를 위하여 정부는 1972년부터 10년간 4대강 유역의 치산과 수계의 개발 사업을 전개하였다. 4대강 유역은 국토의 63.7%, 인구의 62%, GNP의 67%, 경지면적 53.7%, 물 자원 부존량 62.2%, 연평균 홍수피해 69.5%, 가뭄피해 60.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1966년부터 실시된 4대강에 대한 하천유역조사를 바탕으로 홍수 피해 50% 감축, 수해 상습지 해결, 중요하천의 90% 개수, 내수피해 상습지 138개소 삭감, 68만 3,000ha 중 59만 8,000ha를 수리안전담으로 전환, 상수도 보급률 30.6%에서 65%로, 공업용수 3.8배 증산, 4만 1,420ha의 황폐한 산지와 27만 4,016ha에 대한 산림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 하류는

주로 농경지로서 사용되는데 바닷물이 밀려들어올 경우에 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구둑을 건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 당시 정부는 4,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변천】** 이에 한강 유역은 소양강댐 외 1개 다목적댐을 추가 건설하여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낙동강 유역은 안동댐·합천댐·임하댐·영산댐을, 금강 유역은 대청다목적댐을, 영산강 유역은 장성댐·담양댐·대초댐·동북댐 및 영산강 하구언을 건설하도록 했다.

**【결과·의의】**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은 쌀과 보리 중심의 농업을 보다 근대화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자연의존도가 높았던 농촌사회에서는 비가 내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앙을 하였으나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을 통한 댐이 조성되면서 최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 품종개발보급에 의한 단위당 생산성이 제고됨에 따라 영농기법이 달라지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었다. 정부는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연간 내리는 강수량의 62%의 수량이 4대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수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 사회는 4대강 유역 종합개발 사업 기간에 일어난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벼가 개발·보급되어 1975~76년에는 쌀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면서 조와 보리, 감자 등이 주식인 우리 밥상이 본격적으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이 마련되었다.

**【핵심어】** 4대강 유역 종합개발/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참고문헌】** 김인호, 『공존을 위한 한국현대사』(국학자료원, 2008); Weekly 공감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gongam.korea.kr.

**【사진자료】** 481. 19760114 영산강댐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대통령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1970년대 대중문화
●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정의】**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이 존재하였다.

**【배경】**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드러진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62년 5천만 달러이던 수출이 1977년에는 1백억 달러에 이르렀고, 1961년에 81억 달러이던 국민소득이 1971년에는 1,600억 달러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수출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는 공업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가난의 상징인 보릿고개의 아픔도 사라지고 국민들의 의식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단근로자, 버스 안내양, 산업노동자를 비롯한 대중근로자들은 저임금과 노동착취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기술이 전무한 노동자들은 인력시장 등에서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또한 도시빈민은 달동네, 쪽방촌, 청계천 판자촌,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낯을 보내고 있었다.

**【발발】** 도시지역의 근로자들은 기성시가지 내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량주거지역을 형성하여 주거하면서 일용직이나 노점상 등 도시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로 도시빈곤층을 형성하였다.

**【전개】** 정부는 국가경제가 잘 되어야 국민이 잘 살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그들을 ‘산업역군’ 또는 ‘수출역군’으로 추켜세웠다. 근로자들은 경제사정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한 근로자들의 고통과 도시빈곤의 문제는 가려져 있었다.

**【결과】**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미확보와 열악한 임금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70년대 근로자들은 불량주택에 거주하면서 저임금 고노동의 불규칙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은 더욱 낮아서, 남성평균임금의 약 45.4% 정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고, 이들은 각종 도시빈민의 문제를 가중시켰다.

**【의의】** '70년대 한국사회에서 근로대중과 도시빈민층, 그리고 품팔이 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전시항목】** 초기 산업화와 근로대중의 형성

**【소항목】** 노동집약적 산업과 근로대중의 형성

● 노동집약적 산업과 근로대중의 형성	근로자 소득수준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	----------------------

**【정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장비의 화폐적 크기가 작고 기술·생산력 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산업으로서 근로대중을 형성하게 된다.

**【배경】**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에는 저부가 상품 생산의 경공업이었고 농촌에서는 유희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게 되면서 도시노동자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노동의 장소는 가정에서 공장으로 눈에 띄게 이동하였고 값싼 노동력의 필요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농촌과 중소도시를 떠나 대도시로 올라온 여성들은 경제적 상황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만 했다. 여성들은 공장에서의 임금노동자로서 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종다양한 노동에 종사하였다. 버스안내양의 노동조건은 다른 업종의 여성노동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했다. 1960년대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특히 버스안내원 생활은 엄청난 노동강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버스안내양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부터는 버스에 몸을 싣고 하루종일 버스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잠자리에 들게 되는 시간은 보통 11시, 12시를 넘기게 된다.

**【발발】** 농가인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며 자연 증가율까지 감안한 예상 농가인구를 고려할 때 해마다 50~70만 명의 농가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있었다.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은 도시 변두리의 불량주택지역에 거주하면서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남성들은 공장노동자로서 뿐 아니라 고물장사, 청소부, 건축노동자, 모래파기, 벽 쌓기, 취로사업, 구멍가게 등 도시주변에서 일을 하였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로사업, 행상, 건축 잡부 등 허드렛일과 다양한 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 낮은 교육수준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불규칙한 고용형태가 지속되었다.

**【전개】** 도시중심으로 추진된 공업화정책은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대도시에 밀집되며 도

시는 고용과 교육의 기회가 농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유리할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다. 1960년대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의 발달로 노동 시장이 커지면서 고용기회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낮은 교육수준과 특별한 기술 없이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농사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교육수준도 낮은 이들은 산업노동자로서 적응도 어려워 남성의 경우 건축노무자가 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노점이나 행상, 식모 등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전태일 분신사건을 비롯한 70년대 노동운동은 대개 피복, 섬유공업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났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 값싼 노동력에 의하여 저가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산업단계의 노동현실이다. 그 후 중화학 공업화 이후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대부분 노동현장에서 극복되었고, 울산, 거제, 마산 등과 같은 중화학 공업단지의 주민들은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의의】**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농촌 유희인력의 공단근로자, 버스안내양, 산업노동자 등 대중근로자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이들은 근로시간의 착취와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핵심어】** 농촌 유희인력/공단 근로자/버스 안내양/산업 노동자화

**【참고문헌】** 김정화, 『한국근현대 노동운동과 노동자경험: 1960년대 여성노동-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2002); 윤능선, 『산업경제의 이론과 분석』(비봉출판사, 1983); 김정화, 『노동경제 40년사』(1989).

**【사진자료】** 482. 19720830 해외 수출공업단지 가발 공장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전시항목】** 초기 산업화와 근로대중의 형성

**【소항목】** 근로자 소득수준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노동집약적 산업과 근로대중의 형성	● 근로자 소득수준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	------------------------

**【정의】** 산업화의 초기에 한국사회의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저축을 하는 등 생활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배경】** 박정희 정권이 통치하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제일주의가 표방된 가운데 강력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밀고 나갔다.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고 자본을 축적해 갔다. 1960년대 이후 약 30년 간에 걸친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폐쇄경제에서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개방경제이며 세계 10위권에 드는 무역국으로 변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발발】** 정부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우고 수출주도형의 공업화과정을 추진한 결과 1960년에 3천 3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1966년에는 2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 44%의 고속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67년부터는 다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3.7%,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10.7%를 기록하여 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1964년에 가동되기 시작한 울산정유공장, 1969년에 조성된 마산의 수출자유지역과, 1970년 7월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경제개발의 상징이 되었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1977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경제구조에 균형이 잡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1973년 포항제철의 준공과 1978년에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이 시기 중화학공업의 상징적 사업이었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정책이 한계에 이르자 박정희는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 위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임금노동자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결과】** 197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수출 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제발전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수출은 꾸준한 지속되어 1977년에 100억 달러, 1981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

하고, 수출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업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신장률은 연평균 40% 정도, 경제성장률은 8.9%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고도성장을 통하여 과거의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점에서 한국의 산업화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가는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산업자본가의 중점육성을 통해 자본축적을 도모했으며,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에서 오는 부패의 만연, 도농 간의 격차, 도시빈민층의 형성, 공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의의】**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초기 산업화 단계였기 때문에 온 산업현장의 현실과 그나마 임금노동을 위하여 농촌의 유희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노동대중을 형성하게 되었고, 비록 작은 임금이지만 가계에 큰 보탬이 되어 가족의 생계와 학업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한국민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청소년들의 진학률이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가정주부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여자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자료】** 483. 1977 남대문시장의 인파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전시항목】**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의 생활

**【소항목】** 저임금 고노동의 노동현장

● 저임금 고노동의 노동현장	노동운동
도시빈민의 생활	노동탄압
인력시장	

**【정의】** 산업체 부설학교란 천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서 자체 내 근로 청소년 중 진학을 희망하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체에 중·고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 산업체 근무 근로 청소년의 교육이 정규교육체도로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76년 7월 23일에 있었던 청와대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설치에 관한 지시에서 비롯되었다. 이전의 산업체 내 근로자 교육형태는 주로 직업훈련법에 의한 사내 훈련·부녀 및 새마을 교실·사내 자체의 각종 학교 등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를 보다 체계화 시켜 정규 졸업장과 진학의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정부 학교형태로 제도화시키는 것이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산업체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 산업체부설학교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근로청소년들에게 중등교육 수준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 및 노사 간의 원만한 화합과 근로자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는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임금인상의 효과를 거두면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주요기술, 인력의 유인체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시행】** 박정희 정부는 1977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에 의거하여 산업체 부설학교와 산업체 특별학급을 설치하였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가 주도세력이 되어 자체 종업원 중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며, 산업체 특별학급은 인근 기존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야간학교와 같은 형태로 학급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중심, 도시중심의 경제성장은 생산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필요로 하였다. 농촌을 떠난 청소년과 도시빈민계층의 청소년들이 각종 노동현장에 취업하였으며, 이들 근로청소년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체 학교는 근로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산업체의 효과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변천】** 박정희 정권은 1964년에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를 발족시키고, 재건학교를 설립 하였으나, 1976년에는 새마을청소년학교로 명칭을 바꾼다. 새마을청소년학교는 197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사회개혁운동인 새마을운동을 비정규교육 분야에서 운영되었다. 1970년대 후반 공업중심, 도시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농촌을 떠난 청소년과 도시빈민계층 청소년들이 각종 노동현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하여 산업체 부설 학교를 설치하고 산업체 특별학급을 운영하였다. 산업체부설학교는 1997년 발족 당시 불가 5개 학교의 7,00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으나 1980년에는 42개 학교로 학생은 3만에 육박하고 있다. 1980년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 즉, 산업체 학교는 총 141개교의 학생수는 무려 55,712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과·의의】** 산업체부설학교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정규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없었던 농어촌과 도시빈민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교육 욕구를 해소하고 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정규교육은 기층 민중의 상급학교와 사회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어준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산업현장에서 관리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기능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도 있었다. 한국 현대사의 이농과 도시화의 기반이 되었고 단순기능공의 양성으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국가주도 비정규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균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은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주도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핵심어】** 산업체/산업체 학교/근로청소년/여공

**【참고문헌】** 윤형원, 『야간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교육발전논총, 1981, 3~37); 송행희, 『박정희 정권의 비정규교육 정책 연구』(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9).

**【사진자료】** 484. 1972 봉제 작업을 하는 여공들(구로공단)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전시항목】**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의 생활

**【소항목】** 도시빈민의 생활

저임금 고노동의 노동현장	노동운동
● 도시빈민의 생활	노동탄압
인력시장	

**【정의】** 도시빈민의 생활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으로서 경제적인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생활을 의미한다.

**【배경】** 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한 각종 이재민에 의하여 불량촌인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도시미화 위주의 물리적 개선책의 영향으로 달동네, 별집,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불량촌이 확산되게 되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생활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의 소실, 택지의 어려움, 자금조달의 곤란, 건설노임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재해로 인한 파괴, 주택금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공급량이 제한되었다. 또한 극심한 부동산 투기와 정부의 소득계층 중심적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주택보급율이 저하되었고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없는 도시빈민의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도시빈민은 달동네, 쪽방촌, 청계천 판자촌,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발발】** 주택의 절대량 부족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없는 빈민은 무허가주택이나 불량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문제를 유발하였다.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의 수준이하의 주택은 도시의 일정지역에 모여 살게 됨으로써 도시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변천】** 1962년부터 실시된 제1·2차 5개년계획에서의 주택정책은 신규건설 및 공급을 위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불량촌에 대한 정책은 주로 도심지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도심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도시빈민에 대한 근본적인 생활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새로운 불량촌을 형성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다. 제3차 경제계획(1972~1976)부터 주택문제가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향상의 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는데, 1972년에 주택건설 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고 같은 해

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어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되었다. 1973년에 재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도시빈민의 부담으로 무허가정착지를 정상 주거지역화시켜 궁극적으로 중간계층의 주택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빈민의 주거 공간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1981), 소형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1984), 토지공개념의 도입(1989)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공급확대 외에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소형주택의 확대, 임대주택의 공급, 저렴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 20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과밀주거의 완화와 무주택자의 해소를 적극화하였다. 불량촌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에는 대상지구 주민과 건설회사의 공동 노력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결과·의의】**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많은 도시빈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비하여 주택정책은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전개해 온 결과 중산층 위주의 주택당 평균규모, 부대시설 등이 질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없는 도시빈민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도시미관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 주거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다. 도시빈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단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측면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안정의 기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심어】** 도시빈민/주택/주택문제/불량촌

**【참고문헌】** 양윤재,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태연구』(열화당, 1991, 13); 정동익, 『도시빈민연구』(아침, 1989); 김병량, 『도시빈민과 주택정책』(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4, 72~93); 대한국토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집문당, 1987).

**【사진자료】** 485. 19880801 도시화에 따른 과밀화 빈민지역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전시항목】**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의 생활

**【소항목】** 인력시장

저임금 고노동의 노동현장	노동운동
도시빈민의 생활	노동탄압
● 인력시장	

**【정의】** 인력시장은 1960~70년대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공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품팔이 노동자들과 일손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품팔이 흥정이 벌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배경】** 한국의 노동시장은 1970년대를 분수령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의 봉건적인 각종 노동력 공급체계에서 1974년을 필두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인력공급이 매우 저조하게 되자 값싼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경제개발과 공업화의 진전으로 농업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노동자 특히 제조업 노동자수가 급증했다. 1960년대 10년 동안 취업노동자수와 제조업 노동자 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섬유, 전자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위주의 수출정책으로 14세부터 24세까지의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양적 증대와는 별개로 임금 및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성장의 결과인 경제잉여의 노동자 귀속을 나타내는 피고용자 보수구성비가 1959년 38.7%에서 1964년 28.8%로 5년 동안 무려 10%나 하락하다가 1968년에 이르러 겨우 1959년 수준을 회복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층이고 숫자도 늘어난 전문, 기술, 관리, 사무직의 임금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면, 제조업노동자들의 임금은 수치보다 훨씬 열악했다.

**【발발】** 1964년 제조업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3,880원이었는데 가구당 평균 식료품비는 5,130원으로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해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1970년대에는 1인당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973년 8.6시간에서 '80년 9.1시간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상위소득자 2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1970년 41.8%에서 1980년 46.7%로 증가하였다. 전태일의 분신과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반영하고 있었다.

**【결과】** 노동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1970년 최저생계비의 61.5%였던 임금은 1980년 44.6%로 낮아졌다. 1978년 3월 말 모든 노동자 가운데 근로소득세 납부에서 제외되는 5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가 76.7%에 달했고, 전체노동자의 88.6%가 월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3저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외자기업의 철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이나 폐업 등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의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빈곤의 문제는 빈민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운동의 영역이 되고 말았다. 빈민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빈민대중을 생산과정에 끌어들이고, 빈민과 더불어 경영을 시도하는 등 지역공동체 운동이 시도되고 있으나, 빈곤의 근본 원인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다. IMF는 구제금융조건으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인수위 시절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다.

**【사진자료】** 486. 199701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일꾼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전시항목】**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의 생활

**【소항목】** 노동운동

저임금 고노동의 노동현장	● 노동운동
도시빈민의 생활	노동탄압
인력시장	

**【정의】**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 개선과 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부터 노동자와 노동운동은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부독재의 탄압을 받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섬유, 봉제, 가발 산업이 번성하던 시대였다. 청계천변에 자리 잡은 평화시장 역시 소상공인과 소규모의 기업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청계천 복개공사로 판자촌이 철거된 청계천6가에 1961년 연건평 7천 4백여 평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피복제조업자들 및 의류상들이 진출하여 생겨난 시장으로 이후 생겨난 통일상가, 동화시장, 신평화시장과 함께 ‘6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 각종 기성복을 제조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값싸게 채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고, 정부의 근로기준법이 있었으나 많은 회사들은 이를 어겨가며 이익을 추구하였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면서도 침묵만을 강요당해 왔던 노동자들은 스스로도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70년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발발】**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불꽃이 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은 더 이상 자본의 노예로 살지 않고 당당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향해 싸워나가겠다는 인간 선언이었다. 전태일은 죽음으로써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급속히 확산시켰다. 전태일의 죽음은 종교인, 지식인들에게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를 부여했으며, 노동자 스스로에게는 인간임을 자각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한 투쟁에 나설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었다. 전태일의 죽음에 항의하여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들은 직접 노동현장에 노동자로 투신하여 노동운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야학, 교회 등에서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노동운동을 지원하였다.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크리스찬아카데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등은 노동자 교육과 조직적 지원을 통해 동자들이 각성하고 저항과 투쟁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70년대 내내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기본권이 모두 봉쇄된 유신독재 하에서 파업, 농성, 시위 등 집단 행동으로 발전한 노동쟁의는 매년 늘어나 1975~1979년 사이 연평균 109건에 이르렀다.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했던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년 동안 발생한 파업건수 66건의 무려 7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들 파업은 모두 불법이었으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쟁의가 벌어졌다.

**【결과】** 197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은 당시 학생, 재야, 지식인들에게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소외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을 비롯해 민주노동운동의 발달에 단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민중의 삶과 투쟁이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의의】** 한국 노동운동은 산업자본가들이 누려왔던 이익과 특권을 감소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성노동이나 아동노동 등 주변적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태일 분신사건을 비롯한 1970년대 노동운동은 대개 피복, 섬유공업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났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 값싼 노동력에 기반을 두어 저가의 상품을 제조판매 하는 산업단계의 노동현실이라는 측면이 있다. 중화학 공업화 이후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노동현장에서 극복되었고, 오늘날 울산·거제 등과 같은 중화학 공업단지의 주민들은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핵심어】** 노동자/저임금/노동착취/노동운동

**【참고문헌】** 김윤환·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일조각, 1970);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열음사, 1988); 신광영·김현희, 『여성과 노동운동: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회, 1996).

**【사진자료】** 487. 19701113 전태일의 장례식에서 그의 어머니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전시항목】**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의 생활

**【소항목】** 노동탄압

저임금 고노동의 노동현장	노동운동
도시빈민의 생활	● 노동탄압
인력시장	

**【정의】** 노동탄압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행위를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경】** 1970년대 초에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하여 햇볕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루에 열네 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잠 오지 않는 약을 먹고 졸음을 쫓으면서 쌓인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노동자들 대부분은 여성으로서 17세 미만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치 기계와 같은 생활을 지속해 왔다. 1970년대 제3 공화국과 유신정권은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저임금에 기초한 저가상품의 수출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전형적인 원시적 축적을 경제발전 방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고 노동투입을 최대화하는 노동집약적 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못했고, 노동법과 노동행정을 통하여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노동정책이 실시되었다. 1970년대 초(1970~1972년)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대단히 낮아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서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임금이 지속되었다. 노동시간은 주당 53시간 이상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수출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특혜를 받아서 자본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억압해줌으로써 수출기업은 노사문제 해결에서도 국가의 물리적 지원을 받아가며 전제적 노동통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발발】** 그러나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노동탄압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개】** 노동탄압은 섬유를 포함한 의류, 가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로서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탄압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YH무역

여공농성사건은 가발수출업체인 와이에이치 무역 여성근로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벌어졌으며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공 1명이 추락사하였다.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1,000여 명의 경찰이 신민당사에 난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기자와 국회의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숙이 사망하고, 노동자들과 당원들이 강제 연행되었으며, 농성을 배후 조종했다는 이유로 문동환, 인명진 등 8명이 구속되었다. 또한 1978년 동일방직이라는 회사에서 사람 얼굴에 똥물을 끼얹은 사건이 있었다. 동일방직은 여성노동자 1,000여 명 남성노동자가 300여 명으로 여성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1971년 노조집행부 15명 전원을 여성 노동자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일을 해 내었고 이와 같은 시도는 급속히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어용 노조를 앞세워 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 매수 사표강요, 부서 이동 등의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결과】** 그러나 여성 조합원들은 1972~1978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여성지부장을 선출하여 노조를 지켜나갔다. 이 사건으로 섬유노조는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 전원을 제명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동일 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3·10 노동절 행사장 항의 시위, 3·26 부활절 연합예배 시위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후에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과 부마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의의】** 이러한 노동탄압에 대한 근로자들의 투쟁과 희생은 후일에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보호받게 되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리후생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근로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에 단초가 되었다. 또한 6월 민주항쟁 이후 NGO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의식주 및 생활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어】** 노동자/여성/전태일/YH사건

**【참고문헌】** 신현수, 『국어선생님의 시로 만나는 한국 현대사』(북멘토, 2009); YH 사건, 한국어 위키백과.

**【사진자료】** 488. 19790809 회사의 폐업조치에 항의하다 강제 연행되는 여공들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도시화의 진전과 새마을운동	● 70년대 대중문화
성장의 그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빈민	

1970년대는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한 시기이다. 1960~70년대에 진행된 경제 개발과 그에 따른 도시화, 교통·통신 및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문화를 등장시키게 된 조건이 되었다. 이 시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텔레비전의 대중적 보급이다. 1960년대에는 극소수만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에는 TV보급률이 80%에 달하게 된다. 텔레비전의 보급은 다양한 상업방송국과 함께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가를 즐기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대중문화의 발달을 이끌었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반 대중의 인기 정점에 있었다. <아씨>를 시작으로 <여로>, <수사반장> 등이 인기를 끌었다.

텔레비전의 보급은 스포츠에 대한 열기도 고조시켰다. 1970대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한 시기이기도 하다. 고교야구와 축구, 프로레슬링, 복싱이 최고 인기종목으로 대두되었다. 한국 축구가 낳은 스타 차범근은 독일에 진출하여 첫 해외진출 프로선수가 되었다. 또한 이예리사와 정현숙, 홍수환, 양정모, 김진호가 국제적 대회에서 선전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김일로 대표되는 프로레슬링도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특히 김일의 '박치기'와 천규덕의 '당수'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1970년대 대중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포크송과 록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배웠던 세대가 청년문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음악 양식인 포크와 록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 포크송은 윤희주의 <라라라>,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사월과 오월의 <욕심없는 마음>과 같이 소박한 것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솔직과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 록 작품으로는 신중현의 <미인>,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가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시기는 금지곡이 가장 많이 지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금지곡으로는 양희은의 <아침이슬>, 김민기의 <친구>, 송창식의 <왜불러>, <고래사냥>, 이장희의 <그건 너>,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신중현의 <미인> 등이 있다.

1970년대는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중문화를 형성한 시기로서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로 대표되는 청년문화가 지배하였다. 또한 미니스커트의 열풍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와 맥시가 공존했으며 1971년 봄부터는 핫팬츠가 유행해 사회적 물의를 불러 일으켰다. 1974년경부터는 판탈롱(나팔바지)이 등장하여 넓은 바지통이 유행하였다. 당시 멋쟁이들 사이에서는 미니스커트나 핫팬츠에 맥시 코트를 입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선글라스와 머릿수건, 꼭 끼는 부츠나 통굽 구두도 인기였다. 또한 남성들 사이에 장발이 늘어나 미니스커트와 함께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자와 가위를 들고 스커트 길이를 재거나 남성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은 1970년대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참고문헌】** 이범경, 『韓國放送史』(범우사, 1994); 김종, 김성훈, 「한국사회에서 프로스포츠의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18권 1호(한국체육과학회, 2009); 스포츠서울21, 『한국 스포츠총람』(한국스포츠정보, 2001); 박찬호, 『한국가요사』(미지북스, 2009); 김은경, 「유신체제의 음악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1권 2호(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유흥식, 「1970년대 핑크 록이 1990년대의 핑크 패션에 미친 영향 연구」, 『한복문화』 9권 2호(한복문화학회, 2006);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인물과 사상사, 2002); 임영태, 『대한민국사: 1948~2008』(들녘, 2008).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의 시대

**【소항목】** 영화

● 영화	프로 스포츠
음악	드라마
방송	금지곡, 금지도서
패션과 대중	

**【정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은 한국 영화의 전성기이자 르네상스 시기로 불리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연간 100편 이상 꾸준히 제작되어 계몽과 선전의 도구가 아닌 대중 오락으로서의 영화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배경】** 1963년부터 1971년은 연간 100~200편이 넘는 다양한 영화를 쏟아내며 양적, 질적으로 풍성하였던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였다. 특히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중흥은 1950년대 후반에 기술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릉스튜디오, 삼성스튜디오, 안양스튜디오와 같은 촬영소의 건설 등 영화 제작 인프라가 확충되자 영화인들은 과거의 수공업적 제작을 지양하고 할리우드식 스튜디오 제작시스템을 도입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 또한 1960년대 컬러와 와이드스크린이라는 새로운 기술양식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영화는 1969년 233편의 제작편수와 1억 7,800만 명이라는 연간 총관객수를 기록하는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 영화는 대중문화의 핵으로 위치하며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가 5~6회에 이르렀고, 김기영, 이만희, 신상옥, 김수용 등 작가 감독들의 대표작이 쏟아져 나왔다.

**【전개】** 1960년대 영화는 대중문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르였고, 한국의 할리우드라 불렸던 서울의 충무로 3가 일대는 영화인들로 활기가 넘쳤다. ‘황금기’라는 이름처럼 1960년대 영화 제작편수는 1,500편을 넘는 다작이었다. 이러한 다작의 장르는 멜로드라마 그리고 스릴러/액션영화가 압도적이었지만, 코미디, 시대극, 괴기 등 다양한 장르들을 망라하면서 뛰어난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1967년에는 신화를 결합한 괴기영화 <월하의 공동묘지>와 아동영화 시장을 노린 SF/괴수영화 <대괴수 용가리>가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멜로드라마는 1961년부터 1969년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자유부인>처럼 시대풍조가 반영된 멜로드라마가 만들어졌다면 1960년대 전반에는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 강대진 감독의 <박서방>을 필두로 한 가족 멜로드라마가 흥행을 하였다. 이어 1960년대 후반에는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정소영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필두로 신파멜로드라마가 유행하였다. 한편 코미디 장르 역시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스릴러/액션영화 역시 <다이얼 112를 돌려라> 등의 범죄스릴러, <돌아오지 않는 해병>, <빨간 마후라>와 같은 전쟁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할리우드 영화 같은 감각을 맛보게 해주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1960년대 한국영화의 최고 흥행 장르는 '청춘영화'였다. 청춘영화는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기조로 도시 젊은이들의 사랑, 정신적 방황, 성공에 대한 야망과 좌절을 특징으로 하며, 대표작으로 신성일-엄앵란 주연의 <맨발의 청춘>이 있다.

**【결과】** 1960년대 말이 되자 TV라는 뉴미디어가 KBS, TBC, MBC라는 3대 방송국을 통해 전국적인 송출을 시작하면서 영화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였다. 1969년 관객동원 1억 7,800명을 정점으로 영화 관람객수는 감소하는 반면 TV 보급률은 1970년 10.2%에서 1979년 78.5%로 늘어났다. 게다가 5~6회에 이르던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횟수도 1.8회로 줄어들어 대중문화의 주역이 영화에서 TV로 이동하였다.

**【의의】** 오늘날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상으로 말하는 대중상이 처음 시상된 것이 1962년 이고, 1969년의 영화 제작편수 및 연간 총관객수는 2011년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이처럼 산업화·근대화 초기 영화는 당대 대중의 최고의 오락으로 각광을 받으며 대중문화를 선도하였다.

**【핵심어】** 대중문화/멜로드라마/스릴러-액션영화/TV의 등장

**【참고문헌】** 이효인, 『한국 영화사 공부: 1960~1979』(이채, 2004); 정종화, 『한국영화사: 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한국영상자료원, 2008); 김미현,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이순진, 「한국영화사 연구의 현단계」, 『대중서사연구』 제 12호(대중서사학회, 2004).

**【사진자료】** 489. 19600705 영화를 보기위해 영화관 앞에 모인 인파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의 시대

**【소항목】** 음악

영화	프로 스포츠
● 음악	드라마
방송	금지곡, 금지도서
패션과 대중	

**【정의】** 일제시기 탄생한 트로트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1950년대와 달리 1960년대 음악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 스탠더드 팝이라는 서구풍의 양식이 주도적인 양식으로 정립되었으며, 1970년대가 되자 청년문화의 영향으로 포크송과 록이 등장하여 20세기 한국 대중가요의 가장 기본적인 네 양식이 형성되었다.

**【배경】** 1930년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주도적 대중가요 양식인 트로트 양식이 정립된 시기라면, 1960년대는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스탠더드 팝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였다. 스탠더드 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선 일제강점시기 교회나 교육을 통하여 서구 근대음악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학습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축적된 서구 근대음악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소양과 해방 이후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대중음악이 접목되면서 1960년대 스탠더드 팝이라는 양식을 만들어 낸 힘이었다. 또한 1960년대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예술문화의 안정시기였고, 한국 대중문화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였다. 즉 TV 방송의 시작, 상업적인 주간지의 등장, 본격적인 LP의 시대 도래로 인해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탠더드 팝이 60년대 주도적인 대중가요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

**【전개】** 1960년대 미8군 무대 출신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창작자와 가수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작품 경향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스탠더드 팝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린 노래는 1961년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이었다. 미8군 무대에서 주로 미국의 팝을 불렀던 한명숙의 등장은 미8군 출신 창작자와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노래는 트로트 가요에 비해 훨씬 수준 높고 세련된 노래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 시기 노래 중 <초우>, <보고 싶은 얼굴>, <안개>와 같은 부드러운 선율의 노래들이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애창되고,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한국가요를 대표하게 되었다. 1960년대 노래들은 도시 성인 서민들의 삶을 희망적이고 아름답

답게 그리는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가 많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 시기의 노래에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의 삶 속에 희망과 낙관이 있으며, 당대 대중들이 산업화 속에서 도시의 삶에 대해 희망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희망이 있는 노래들은 1960년대가 건전가요의 전성기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마을>, <육군 김일병>, <팔도강산>, <서울의 찬가>과 같은 건전가요는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대중가요의 한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건전가요가 대중가요 속에서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의 대중가요가 서민의 희망을 그려내는 작품이 대다수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과】** 1970년대는 제도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배웠던 세대가 청년문화의 주도적 세력이 되면서 새로운 음악 양식으로 포크와 록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 포크송은 <라라라>, <아름다운 것들>, <욕심없는 마음>과 같이 작고 소박하고 가난한 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 시기 청년문화의 특징인 솔직하고 소박하며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 록 작품으로는 <미인>과 <해변으로 가요>가 큰 인기를 얻었으나, 포크와 같이 청년문화의 주도세력은 되지 못하였다.

**【의의】** 1960~70년대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가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가득 차 있던 시대였다. 그런 까닭으로 1960년대의 스탠더드 팝과 1970년대의 포크, 록은 이러한 대중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핵심어】** 스탠더드 팝/포크/록/서민의 희망/건전가요/청년문화

**【참고문헌】** 전인평, 『한국 음악사』(현대음악, 2000); 박찬호, 『한국가요사』(미지북스, 2009);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민속원, 2006); 박성재, 『한국 대중가요의 정치: 1970년대~1990년대 지배와 저항의 동원』(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 2005);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집(상허학회, 2011).

**【사진자료】** 490.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민기와 양희은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의 시대

**【소항목】** 방송

영화	프로 스포츠
음악	드라마
● 방송	금지곡, 금지도서
패션과 대중	

**【정의】** 일제강점기인 1927년 경성방송국(현 한국방송공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한국의 방송은 1960년대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고, 다양한 민영방송국이 설립되어 대중문화를 확산시켰다.

**【배경】** 1954년 기독교중앙방송국(CBS)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개국하였다. 일제에 의해 운영되던 경성방송국이 1947년 명칭을 서울중앙방송국으로 바꾸고 방송한 지 7년 만에 관영방송체제에서 관·민영방송 공존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 뒤 1956년 한국복음주의 방송국(후에 극동방송)이 개국을 하고, 59년에는 부산문화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하였다.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1956년 '한국 RCA 배급회사(KORCAD)'라는 명칭의 HLKZ-TV이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HLKZ-TV는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에게 인도되었고, '대한방송주식회사(DBC)'로 사명을 바꾸어 방송을 하였다. 이 당시 CBS는 1959년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사상 최초로 청취자의 사연을 극화한 실화극을 방송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KBS와 CBS와 같은 라디오 방송국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 반대로 최초의 TV 방송국이었던 HLKZ-TV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데다가 전반적인 방송문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실패를 하게 되었고, 1959년 2월 발생한 화재로 방송을 중단해야하였다.

**【전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민영방송국을 계속해서 허가해 주었다. 그 결과 한국문화방송국(MBC, 1961), 동아방송국(DBS, 1963), 동양방송국(TBS, 1964)이 개국하여 1960년대 방송을 이끌었다. 다양한 민영방송국의 개국은 당시 중요한 전파매체였던 라디오의 보급을 확대시켰다. 1953년 전국의 라디오 보급대수는 불과 18만대였지만, 민영방송국이 확대된 1963년 이후 166만 6천대로 약 10년 동안 9배가 증가하여 방송의 대중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또한 방송사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와 같은 시사프로그램뿐 아니라 엽서를 통해 사연을 받는 음악 방송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라디오 드라마였다. 라디오 드라마는 1970년대 초까지 텔레비전 방송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연평균 150편 이상이 방송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어지는 홈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다. 라디오 드라마의 대표작으로는 TBS의 <아차부인 재치부인>이 있었다.

**【결과】** 한국방송사에서 본격적인 텔레비전 방송은 정부가 HLKZ-TV를 인수하여 1961년 개국한 KBS-TV이었다. 이후 1964년 12월 최초의 민영텔레비전 방송인 동양텔레비전(TBC-TV)가 서울과 부산에서 개국을 하고, 1969년 MBC-TV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텔레비전 방송 3사가 경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는 TV의 보급이 미미하여 텔레비전 방송이 방송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다. 1966년에 텔레비전 보급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하고, 1960년대 말까지 보급대수가 30만대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1960년대 후반부터 '텔레비전 붐'이 일었고, 1970년대에 이르면 TV 보급률이 80%에 달하게 되어 텔레비전 방송은 국민들의 관심과 여가를 위한 오락매체로서 대중문화의 총아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TBC의 『아씨』를 시작으로 『아빠』, 『갈대』, 『여로』 같은 멜로드라마들이 안방을 사로잡으면서 대중문화를 이끌었다.

**【의의】** 1960년대 라디오의 보급 확대, 1970년대 텔레비전 보급률 증가는 60년대 초 개국한 다양한 상업방송국과 함께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가를 즐기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대중문화의 발달을 이끌었다.

**【핵심어】** 라디오/텔레비전/대중문화/민영방송국/일일연속극

**【참고문헌】** 이범경, 『한국방송사』(범우사, 1994); 강신호·박경환·송영호·전병은, 「한국방송 50년의 뒤안길」, 『신문과 방송』 제63호(한국언론진흥재단, 1976); 조항제, 『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한울아카데미, 2003); 오진곤, 「유신체제기 영화와 방송의 정책적 양상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8권 제1호(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1); 박인규, 「한국 방송의 역사와 유산」, 『현상과 인식』 제27권 1·2호(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3).

**【사진자료】** 491. 동아방송 주파수 변경 기념공연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의 시대

**【소항목】** 패션과 대중

영화	프로 스포츠
음악	드라마
방송	금지곡, 금지도서
● 패션과 대중	

**【정의】** 대중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1950년대 미군 구호물자에 의존하던 패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션이 등장하여 유행을 하였는데, 미니스커트, 판탈롱 스타일, 장발, 청바지가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이었다.

**【배경】** 1960년대는 주간지, TV, 영화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달하였고, 1969년에는 미국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세계적으로도 냉전이 심화되고 있었고, 베트남전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과 미국의 반전운동으로 신좌파와 히피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물질만능과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항의식으로 머리모양, 의복, 습관, 사고방식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한국 역시 4·19의거, 5·16 군사정변, 제1·2차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20세기 후반 한국사회를 결정할 정치·경제적 변화가 시작된 격변의 시기였다. 해방 후 태어난 한글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등장하여 이전 세대와는 다른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을 보였다.

**【전개】** 5·16군사정변 이후 국민생활계몽운동이 펼쳐짐에 따라 생활의 간소화, 합리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남성의 '재건복' 및 단추와 주머니가 많은 작업복 스타일의 스포츠 룩이 등장하였으며, 의류수입이 금지되어 국산화의 길이 다져지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오버 코트나 색 드레스가 유행하였고, 단조로운 디자인과 신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러한 경향이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1967년 가수 윤복희가 국내 최초로 입은 미니스커트는 1968년 이후 폭발적으로 유행하였으며, 무릎 위 20cm까지 짧아졌다. 이와 함께 롱부츠도 크게 유행을 하였다. 미니스커트의 출현은 한국사회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의복 형태의 변화라기보다도 전통사회의 사고에 대한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전후하여 비트족, 히피족 등의 패션도 일부 소개되었다. 1960년대는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고 인조 속눈썹을 붙인 짙은

눈매, 크게 부풀린 후카시 머리의 고데 머리가 각광을 받았으며 가발도 등장하였다. 한편 1960년대는 청춘영화의 전성기여서 영화 <맨발의 청춘>이 인기를 끌며 남성들의 가죽잠바가 유행하였다. 1968년에는 최초의 패션 전문지인 『의상(衣裳)』이 창간되었다.

**【결과】**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1970년대에는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영파위를 형성한 시기로서 청바지, 통기타, 그리고 생맥주로 대표되는 청년문화가 지배하였다. 영패션이 유행하여 젊게 보이려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미니의 열풍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와 맥시가 공존했으며 1971년 봄부터는 핫팬츠가 유행해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1974년경부터는 판탈롱(나팔바지)이 등장하여 바지통 하나로 스커트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것이 유행하였다. 당시 멋쟁이들 사이에서는 미니스커트나 핫팬츠에 맥시코트를 입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선글라스와 머릿수건, 꼭 끼는 부츠나 통굽 구두도 인기 아이템이었다. 한편 청바지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용되면서 통기타와 함께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또한 남성들 사이에 장발이 늘어나 미니스커트와 함께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자와 가위를 들고 스커트 길이를 재거나 남성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은 1970년대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의의】** 패션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패션의 지배적인 특징은 '젊은이의 반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변화로 인하여 대담한 젊은이 패션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당시 대중문화가 확대된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대중문화/젊은이의 반란/미니스커트/핫팬츠/청바지/장발

**【참고문헌】** 진휘연, 「1960년대 미술과 패션: <욕망>의 표출과 반권위의 전통」,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25집(서양미술사학회, 2006); 유홍식, 「1970년대 핑크 룩이 1990년대의 핑크 패션에 미친 영향 연구」, 『한복문화』 제9권 2호(한복문화학회, 2006);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인물과 사상사, 2002).

**【사진자료】** 492. 1967 미니스커트 입은 가수 윤복희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의 시대

**【소항목】** 프로 스포츠

영화	● 프로 스포츠
음악	드라마
방송	금지곡, 금지도서
패션과 대중	

**【정의】**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스포츠와 오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였고, 그 결과 1960년대와 70년대는 고교야구와 축구, 프로레슬링, 복싱이 최고 인기 종목으로 대두되었다.

**【배경】** 제3공화국 시기는 한국 스포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1966년 태릉선수촌 개관, 1970년 국제수영장 개장, 1976년 한국체육대학교 설치 등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엘리트 체육 육성정책에 힘입어 한국 스포츠가 급진적인 발전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엘리트 체육 육성정책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육성을 통해 국위선양과 국가 이미지 제고,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이것은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재벌과 은행 그리고 국영기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수많은 실업팀을 창단하였다. 프로스포츠가 출범하기 전이었던 1960년대 실업팀의 창단은 한국스포츠가 특히 단체종목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가 아닌 실업선수로 바로 입단하여 전문운동선수로 활약할 수 있었으며 은퇴 후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운동에만 전념하게 된 선수들의 기량이 늘어 1960년대와 1970년대 축구, 복싱, 농구 등의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가져왔다.

**【전개】** 이렇게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1964년 동경올림픽에 114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시켰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레슬링의 정창선과 복싱의 정갑조가 은메달, 유도 김의태가 동메달을 차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1969년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킹스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때부터 한국 축구는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또한 남자농구가 사상 처음으로 제5회 아시아농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1970년대 축구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이 시기에 아시아 정상자리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그리고 한국 축구가 낳은 스타 차범근은 78년 독일의 분데스리가(Bundesliga)에 진출하여 첫 해외진출 프로선수가 되었다. 1973년 4월 유고의 '사라예보'에서 열린 세계탁구대회에서 한국 여자탁구가 우승을 차지해 국민들을 열광시켰으며, 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이예리사와 정현숙은 국민 영웅이 되었다. 또한 1974년 7월에는 홍수환이 WBA밴텀급 챔피언을 획득하여 김기수 이후 두 번째 세계제패를 이루었다. 홍수환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는 유행어와 함께 국민 영웅이 되었다.

**【결과】** 1970년대 한국 스포츠의 하이라이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의 금메달 획득이다. 양정모는 레슬링 자유형 페더급에서 금메달을 따 해방 후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또한 79년에는 김진호가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를 차지해 한국을 빛냈다. 70년대에는 이런 스포츠의 국위선양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한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은 스포츠도 있었다. 김일과 천규덕으로 대표되는 프로레슬링이 그것이다. 김일의 '박치기'와 천규덕의 '당수'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사람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고교야구는 가장 많은 관심을 동원하는 스포츠의 하나였다. 그것은 주로 출신교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동문과 그 가족들의 열성에 힘입어 이뤄진 것이었다. 이런 고교 야구의 열기는 80년대 프로야구 출범의 밑거름이 되었다.

**【의의】**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스포츠 육성정책은 국제대회에서의 한국 스포츠의 성공뿐 아니라 스포츠 인프라의 확대, 스포츠 과학화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1980년대 프로스포츠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핵심어】** 엘리트 체육 육성 정책/국위선양/국민 일체감

**【참고문헌】** 임영태, 『대한민국사: 1948~2008』(들녘, 2008); 김종, 김성훈, 「한국사회에서 프로스포츠의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8권 제1호(한국체육과학회, 2009); 스포츠서울 21, 『한국 스포츠총람』(한국스포츠정보, 2001); 김미숙, 「박정희 정권하 한국 여성스포츠에 대한 고찰: 학교·엘리트·사회체육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5권 제2호(한국체육교육학회, 2010); 김천년, 김건철, 「한국체육스포츠 80년사의 시기별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 12(한국사회체육학회, 1999).

**【사진자료】** 493. 19820327 국내 첫 프로야구 출범 개막경기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의 시대

**【소항목】** 드라마

영화	프로 스포츠
음악	● 드라마
방송	금지곡, 금지도서
패션과 대중	

**【정의】** 1960년대 민간상업방송국이 개국을 하고,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라디오 드라마가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방송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이 흐름을 이어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배경】** 1960년대부터 한국방송사는 본격적인 민간방송 시대를 맞이하였다. 즉 KBS 국영방송과 CBS 기독교방송이 있던 상황에서 MBC 문화방송, DBS 동아방송, TBC 동양방송 등 새로운 민간 상업방송국이 개국함으로써 방송사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방송문화가 개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시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과 광고 시장도 성장해 나갔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는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을 하였으며, 텔레비전의 보급도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텔레비전이 80% 이상 보급되었다. 이렇듯 라디오 수신기와 텔레비전 수신기의 원활한 보급과 광고료 수익으로 인해 민간상업방송은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대중매체로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각각 라디오 드라마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서민 대중의 인기 정점에 있었다.

**【전개】** 1956년 10월부터 방송된 KBS의 일요연속극인 <청실홍실>은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의 붐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60년대 각 방송사의 라디오 드라마는 연속극에 치중되었으며, 특히 대개가 애정관계 혹은 도시 풍속도의 단면을 그리는 멜로드라마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어지는 홈드라마가 주를 이루었다. KBS의 경우 1964년에 <<라디오 극장>>과 <<KBS 연속극>>을 편성하여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하였으며, 인기를 얻었던 주요 작품은 <즐거운 우리집>이 있었다. MBC는 1966년 <오늘도 푸른 하늘>과 <우리 아빠 최고>가 청취자의 호응을 얻은 작품을 방송하였다. TBC는 1960년대 초부터 방송된 <아차부인 재치부인>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TBC 드라마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샐러리맨'의 애환을 꾸밈없이 묘사하고 서민의 생활상을 구

석구석까지 파헤쳐 청취자의 공감을 얻었는데, 개국기인 1965년 10월 1일부터 방송되어 1980년 11월 19일 KBS로 통합될 때까지 초창기 포맷을 그대로 5,900여 회를 기록할 정도로 최장수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DBS 역시 멜로드라마나 홈드라마 형식의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하였지만, <기정수 시리즈>라는 ‘한국판 007’ 시리즈를 통해 스릴러 액션물을 방송하여 드라마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었다.

**【결과】** 텔레비전이 보급됨에 따라 1960년대 설립된 텔레비전 방송국이 주요 드라마 공급자가 된 1970년대는 다양한 텔레비전 드라마들이 방송되었다. 이 시기 특징의 하나는 대하물의 등장과 그 유행이다. 1970년 봄 TBC에서 방송된 <아씨>는 한말부터 1·4후퇴에 이르는 최근세에 갖는 파란과 고난 속에서 울며 견디며 살아온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공전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통편을 계속한 끝에 252회로 막을 내렸고, 1972년 봄에 시작한 KBS의 연속드라마 <여로> 또한 211회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 땅에 연속TV드라마 붐을 일으켰다. MBC 역시 주간연속극 <수사반장>, 1975년도 방송대상 대통령상 수상작품인 <신부일기>와 같은 우수한 작품을 방송하였고, 1975년 9월에 시작하여 1975년 한국연극영화상 TV부문 극본상을 수상한 일일극 <집념>을 방송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빛난 연기진으로는 김희준·장옥제·최불암·노주현·신구·전운·윤여정·오지명·최경자·유하나·태현실·홍세미 등이 있다.

**【의의】** 1960년대와 70년대 드라마는 일상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인한 경제발전, 기본권과 자유, 쾌락에 대한 염원을 충족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핵심어】** 라디오 드라마/텔레비전 드라마/멜로드라마/홈드라마

**【참고문헌】** 이범경, 『한국방송사』(범우사, 1994);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조항제, 「1970년대 초기 텔레비전 드라마의 성격」, 『한국텔레비전의 역사와 문화』(한국방송학회, 2007); 윤금선,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 32집(한국극예술학회, 2010); 조항제, 『한국방송의 이론과 역사』(논형, 2008).

**【사진자료】** 494. 박경리의 ‘토지’ 드라마 녹화장 현장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키워드】** 70년대 대중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의 시대

**【소항목】** 금지곡, 금지도서

영화	프로 스포츠
음악	드라마
방송	● 금지곡, 금지도서
패션과 대중	

**【정의】** 금지곡 및 금지도서는 기존의 정치·안보·규범·사상·신앙·풍속 등의 저해를 이유로,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도서의 간행·발매·소유·열람을 금지하거나, 가요의 방송을 금지하는 것으로 1970년대 가장 많이 지정되었다.

**【배경】** 금지곡 및 금지도서(금서)는 일제의 통제정책의 산물이었다. 일제강점기 노래 「레코드취체규칙」이나 「출판법」이 아닌 「치안법」에 의해서 규제되었듯이 해방 이후에도 치안관계법으로 노래를 통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부는 왜색 이외에도 저속한 내용의 노래를 단속하여 새 나라의 건국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방 후 유흥가에서 일본 음반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1961년까지 경찰에 의해 일본 음반이 단속되었다. 금지도서 역시 한말 출판물을 규제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광무신문지법」과 해방 후 미군정 법령 88호가 적용되어 출판물을 규제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출판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산주의와 관계된 서적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하였다. 그 결과 많은 일간지가 정간·폐간되었으며, 좌익사상 확산방지를 위해 반공 이외의 일체의 사상관련 출판물은 금서가 되었다. 1949년 11월의 「월북문인저서 판매금지」조치로 인해 남한에서는 사회주의 관련 출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1960년대까지 판매금지·발매금지 도서가 새로 지정되지 않았다.

**【전개】** 일본가요와 함께 저속가요 시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1958년 공보부는 「방송의 일반적 기준에 관한 내규」를 제정. 시행하였고, 같은 해 KBS는 일본가요 추방과 건전대중가요 육성을 목적으로 가요 66곡을 금지시켰다. ‘일본가요’라는 사유로 금지된 노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대표적이다. 금지곡이 가장 많이 지정된 시기는 유신시기로 1975년 6월 21일에 1차로 43곡을 금지곡으로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심사를 거쳐 같은 해 동안 모두 225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금지곡은 양희은의 「아침이슬」, 김민기의 「친구」, 송창식의 「왜불러」, 「고래사냥」, 이장희의 「그건 너」, 「불꺼진 창」,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패티 김의 「무정한 배」, 신중현의 「미인」,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등이며 당시 유행하던 곡들은 모두 포함되었다. 이 중 「아침이슬」은 1973년 건전가요로 선정될 정도로 발표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란 가사가 문제가 되었다. ‘붉은 태양’이 북한의 지도자를 나타낸 것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금지곡이 되었다. 「거짓말이야」는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울음도 거짓말”이라는 가사가 당시의 정치현실을 빗댄 것으로 비쳐졌고, 「기러기 아빠」는 “아빠가 월남 파병 용사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걸 빗댔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결과】** 금지도서 역시 유신시기가 되면서 대거 양산되었다. 여기에는 박정희 정권의 체제위기와 민주화운동 세력의 성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975년 8월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15종의 출판물이 판금되었고, 유신시기 반공법 및 긴급조치에 의해 지정된 금지도서는 음란도서를 제외하고 대략 50여 종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병익의 『지성과 반지성』(사회비평적 에세이), 김우창의 『궁핍한 시대의 시인』, 김지하의 『황토』·『오적』(긴급조치 위반),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폭력을 정당화), 문병란의 『죽순밭에서』(외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폭력을 정당화),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현실왜곡, 부정), 이영희의 『우상과 이성』·『전환시대의 논리』(현실왜곡, 부정) 등 여러 분야의 서적들이 있다.

**【의의】**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자 「판금도서해제」(1987.10.19), 「금지가요해제」(1987.8.18), 「월북음악가의 곡 해제」(1988.10.27) 등의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작품이 금지대상에서 해제되었다.

**【핵심어】** 금지곡/금지도서/왜색/반공/유신시기

**【참고문헌】** 김은경, 「유신체제의 음악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박성재, 『한국 대중가요의 정치: 1970년대~1990년대 지배와 저항의 동원』(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 2005);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예술, 2004); 김창남,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 『역사비평』 통권 32호(역사비평사 1995);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한국문학」, 『상허학보』 제15집(상허학회, 2005); 조성면, 「금서(禁書)의 사회학, 외설의 정치학-소설 『반노』를 통해서 읽어보는 한국의 7, 80년대」, 『독서연구』 제13호(한국독서학회, 2005).

**【사진자료】** 495. 1973 문화공보부의 불량도서 단속 장면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경제개발과 산업화 변모하는 동시와 농촌	●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	----------------------------------

한국경제는 건국 이후 지난 60년간 세계경제 발전사에 남을 「압축성장」으로 선진국대열의 문턱에 올라섰다. 본격적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 이전에는 일제강점기로부터의 8·15광복, 남북분단,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굴곡 가운데 혼란과 정체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였던 일본인들의 철수와 남북분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공업이 발전했던 북한과의 경제적 단절로 인해 경제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우리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1961년에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채택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말 이후 외국인투자금이 감소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오고 국내시장의 협소와 막대한 자본의 소요 등으로 종래의 수입대체중심의 성장정책에는 한계를 가져와 수출위주의 경공업육성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당시 냉전체제하에서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자본을 외자에서 조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어 국내 저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조달을 통한 외채의존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조건으로 무상원조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제공받았고, 월남전 참전, 서독(독일)으로의 광부 및 간호사의 파견 등의 외화획득은 1960년대 수출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투자재원을 제공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전 세계적 석유수요급증에 기인한 제1차 석유파동으로, 경공업중심의 수출가도를 달리던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공업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철강·화학·비철금속·전자·기계·조선 등의 부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수출상품구조도 1960년대에는 철광석·중석 등 광업비중이 높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 합판·섬유·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비중 크게 높아졌고, 1970년대 말부터는 기계·철강·화학 등 중화학공업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금융·조세면의 지원, 수입규제 등에 힘입어 중화학공업을 의욕적으로 육성하여 연평균 8.9%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금융억압, 중복·과잉 투자 등 일부 중화학공업분야에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도 1971년의 10억 달러에서 1977년에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정책목표인 1백억 달러 수출과 1천 달러 소득을 조기에 달성하였다. 산업구조도 1980년대에 들어와 가전·자동차·조선 등의 가공조립산업으로 질적 변화도 가져오고 1980년대 후반 소위 3저현상(원

유가격 하락, 달러가치의 하락, 국제금리 하락)으로 경제호황을 경험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의 국내외 어려운 사회·경제환경을 잘 극복하며 신흥공업국(NIES)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1990년대 이후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등의 IT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한편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글로벌한 경제발전으로 나아갔다. 1996년 OECD 가입과 한때의 외환위기를 탈출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세계 속에 한국경제의 비중은 점점 높아져 갔다. 최근 적극적인 국제화와 시장개방(FTA 추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 등에 노력하면서 신기술·신지식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친환경녹색 성장의 달성을 통해 선진국에의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동안의 고도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왕성한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질의 인적 자본으로서 국민들의 역할 등의 뒷받침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	--

1950년대 전후복구사업에 치중하던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시작하였다. 수입대체 정책에서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60년경까지 비내구성소비재와 이의 중간재는 수입대체를 완료하였지만 기계류, 내구소비재와 이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대체는 지연되었다. 국내시장의 협소와 막대한 자본의 소요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대체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나서게 되었다. 국내수요를 능가하여 과잉투자된 경공업분야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산업합리화가 필요하였다. 과잉된 경공업의 생산력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고자 했으나 이조차 큰 성과를 못 거두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무상원조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제공받았고, 월남전 참전으로 외화획득은 1960년대 수출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였다. 경제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전 세계적 석유수요급증에 기인한 제1차 석유파동으로,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던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공업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해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철강·화학·비철금속·전자·기계·조선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확고한 정책추진의지를 갖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목표로 한 경제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건설업이 중동으로 진출하여 이른바 중동건설 붐이 일어나던 때이다. 연평균 8.9%에 이르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고 고도성장의 원동력인 수출도 1971년의 1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나 1977년에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정책목표인 1백억 달러 수출과 1천 달러 소득을 조기에 달성하였다.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신흥공업국(NIEs)의 하나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왕성한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질의 인적 자본으로서 국민들의 역할 등이 있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에 빚대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국가기간산업의 성장

**【소항목】** 1970년대 한국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70년대 한국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조선공업 육성
전자산업 육성	철강·기계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의】** 제2차 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할 때 조선·자동차·철강·비철금속·기계·화학·석유·석회제품·펄프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중화학공업이라 하고, 이를 육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배경】** 1970년대에 들어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석유수요급증에 기인한 제1차 석유 파동으로,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던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공업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기조로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인데 좁은 국내시장만으로 적정규모의 생산설비가 어렵고, 둘째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시장을 잠식해 옴에 따라 경공업위주의 수출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수출상품구조가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중화학제품의 자본집약적인 중간재를 국내생산이 필요하였다. 넷째, 선진국들이 조립·가공용, 공해유발형, 에너지다소비형 중화학공업을 후발 공업국에게로 이전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군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확고한 정책 추진의지를 갖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시행】**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1973년 1월 대통령신년회견에서 천명하였다. 이해 5월에 범정부기구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한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강력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동년 12월에는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하여 재정용자지원을 뒷받침하였다. 1973~1981년간 제조업투자의 64%에 달하는 약 2조 9,800억 원(1970년 불변가액)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공업화의 핵심중간재 기간산업인 소재산업과 조선·기계(자동차 포함)·전자 등 대규모 최종재 조립장치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금융과 조세 감면 등의 다양한 우대조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이 분야의 기술인력 공급을 위해 각종 학교 및 연구소 등을 확대·신설하는 등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투자

를 하였다.

**【변천】** 이러한 육성책으로 가장 먼저 발전기반을 갖춘 것은 석유화학산업이었다. 1963년에 세워진 한국나일론의 화학섬유산업이 수출증대를 이루면서 이를 원자재로 쓰는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되었다. 1972년 울산 석유화학복합플렉스를 필두로 1979년에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여천석유화학단지복합플렉스가 구축되었다. 철강산업도 1973년 연산 백만톤의 조강능력을 갖춘 포항종합제철소가 완공되었고, 1974년 현대중공업의 건설로 조선산업도 대형화하면서 뒤이어 대형 조선소(대우·삼성·현대미포)들도 건설되었다. 자동차공업은 고유모델개발과 양산체제를 갖추어 1974년 현대·기아·지엠코리아 3사체제로 개편되었다. 플랜트의 경우, 창원기계공업단지가 건립되고, 기계공업의 급성장과 아울러 자본재의 자급도도 향상되었다. 전자산업은 주도적인 수출산업으로 1974년 컬러TV의 조립생산 등 다양한 육성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선진국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에 힘입어 새로운 제품개발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1966~1979년 기간에는 생산연평균증가율이 47%, 수출연평균증가율 62%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제조업의 고도화와 중화학공업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결과】**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연평균 20.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80년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 수출상품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12.8%에서 1980년 41.5%에 이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시기 우리의 산업 및 수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었다.

**【핵심어】** 중화학공업/수출주도 경제성장/산업구조 고도화/국민투자기금법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강정모 외 2인, 「한국 중화학산업의 성장과 수출지향정책」, 『국제경제연구』 Vol.3 No.2(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사진자료】** 496. 1978 페인트 접착제들을 생산하고 있는 동아석유화학 울산공장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국가기간산업의 성장

**【소항목】** 전자산업 육성

70년대 한국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조선공업 육성
● 전자산업 육성	철강·기계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의】** 전자산업은 각종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용 전자기기 그리고 전자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가정용은 음향기기·영상기기·그 밖의 기기, 산업용은 통신기기·전자응용기기·전자의료기기·전자계측기로, 전자부품은 기본부품·감지부품·능동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경】** 외국원조자금이 1957년 이후 점차 감소되고,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수입대체중심의 성장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원조의 점차적인 감소는 국제수지적자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을 수출주도형 경공업육성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정책을 추진 배경에는 첫째, 1960년경까지 비내구성소비재와 이의 중간재는 수입대체를 완료하였지만, 기계류, 내구소비재와 이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대체는 지연되었다. 둘째,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나서게 되었다. 셋째, 국내수요를 증가하는 과잉투자된 경공업분야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산업합리화이다. 넷째, 당시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는데 유리하였다. 마지막으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로 무상원조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제공받았고 월남전 참전으로 1966~1972년 기간에 10억 2,200만 달러 등의 외화획득은 1960년대 수출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행】** 전자산업에 대한 지원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 시행초기단계의 수입대체산업육성전략에서 다시 수정계획안을 통해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에서는 주요 수입재산업을 비롯하여 특정 공업의 선별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7개의 특정공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당시 재미과학자 김완희 박사(미 컬럼비아대 전자공학과교수)가 완성한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1969년에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1969~1976)에 의해 전자공업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변천】** 우리 전자산업의 효시는 1959년 11월 금성사가 A501호 라디오 50대의 처녀생산한 것이다. 1962년에 국내최초로 홍콩에 수출한데 이어 미국에까지 확대하여 1967년 6월까지 142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이후 금성사는 1966년 9월 국내최초로 일본 히타치(日立)와 기술제휴로 흑백 19인치 TV를 생산하였고, 1967년에는 동남전기공업과 한국마벨이 흑백TV 생산에 동참하였다. 1966년 미국의 시그네틱스사(Signetics Corporation)와 웨어차일드사(Fairchild Corporation) 등의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기업들이 진출하였다. 1966년 10월에 시행된 「외자도입법」의 개정 결과로 유치가 가능했다. 또한 1969년 삼성전자가 금성사설립 10년 후인 1969년에 설립되어 1970년대 이후 럭키금성(LG)과 삼성 간의 전자산업을 둘러싼 첨예한 경쟁체제가 본격화되었다. 1971년에는 전자수출전진기지로서 구미전자공업단지를 착공하였고, 1974년에는 아남산업과 일본 나쇼날(National)전기와 합작으로 국내 최초로 컬러TV를 생산한 이후 1977년에 삼성전자와 금성사 이듬해 대한전선이 가세하게 되었다. 1973년 제1차석유과동속에서도 자동화설비의 도입 등으로 질적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시켜 1976년 최초로 전자산업은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에는 전자산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컬러TV, 전자렌지 등 전자제품 수출국으로 부상하였고 1983년 12월에는 삼성반도체통신이 세계 2번째로 64K DRAM을 개발하여 오늘의 반도체강국의 토대가 되었다. 2009년 우리 전자산업은 세계 4위의 전자 강국으로서 DRAM, 낸드플래시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LCD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2위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핵심어】** 전자산업/수출주도형 공업화/TV생산/DRAM/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사진자료】** 497. 1970 흑백 TV를 생산하는 모습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국가기간산업의 성장

**【소항목】** 자동차산업육성

70년대 한국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조선공업 육성
전자산업 육성	철강·기계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좁게는 수송기기산업이라 불리지만 부품 제조(2~3만개)에 전기·전자·섬유·플라스틱·고무·석유화학 등과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고, 완성차 조립·판매·정비·할부 금융·보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첨단기술의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합기계산업이다.

**【배경】** 1960년대 초까지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아직 수입대체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와 정부가 산업화의 방향을 중화학공업의 수입대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해 수출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었다. 당시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절감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주요 최종재산업의 수출산업화 중심에 자동차산업이 있었다. 이 기간중 고유모델 개발과 양산체제의 구축으로 수출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시행】** 1960년대 초 정부가 「자동차공업보호법」을 제정하여 외제자동차 수입을 규제하고 부품 국산화율 향상을 의무화하는 등 유치산업 보호차원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73년 6월에 1980년대 완전국산자동차 50만 대 생산 및 1억 5천만 달러 수출을 기본 목표로 하는 「자동차공업장기진흥계획」을 세웠다.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산독자모델 개발과 양산체제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본격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변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인 「시발자동차」는 미군용지프를 개조하여 1955년에 생산하였다. 이후 1962년에는 새나라자동차가 경기도 부평에 근대적인 조립공장을 설립하면서 부품국산화를 추진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부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립하는 녹 다운(knock down: KD)생산에 치중하였는데, 영세성을 면치 못했고 부품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상태이었다. 1973년 기아산업은 국내 최초 컨베이어시스템

(conveyer system)이 도입된 일관조립공장을 갖추어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1974년에는 GM코리아가, 1975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종합자동차공장을 건설하면서 한국자동차산업은 근대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976년 현대자동차는 최초의 국산고유모델인 「포니」를 생산하였으며, 에콰도르·베네주엘라 등지에 수출하였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의 성장세로는 외국업체의 견제를 받았으나 오히려 국내업체의 고유엔진모델개발을 촉진하였다. 1985년에 현대자동차가 연산 30만대 규모의 단일모델전용공장을 완성하였고, 대우(현재 쉐보레)와 기아자동차도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 수출하여 양산체제 확보와 수출기반을 확립하였다. 그 후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되자 현대자동차는 캐나다 브르몽에 조립공장을 건설하였고 기아와 대우자동차도 신흥개발도상국에 소규모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한국자동차산업은 세계화시대에 돌입하였다.

**【결과】** 중화학공업육성에 힘입어 자동차공업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동안의 육성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와 부실화가 문제되어 1986년 1월 「공업발전법」의 제정으로 1989년 6월까지 신규투자제한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자동차 대중화에 힘입어 1988년에 국내생산이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10대 자동차생산국으로 부상하였고, 1995년 국내완성차업체는 수출 100만대를 달성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였으며, 대우자동차는 GM에게, 삼성자동차는 르노에게, 그리고 쌍용자동차는 상해자동차에게 매각되었다. 그 후 국내 자동차업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핵심어】** 자동차공업/컨베이어시스템/포니/자동차대중화/자동차공업보호법/knock-down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사진자료】** 498.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포니 자동차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국가기간산업의 성장

**【소항목】** 조선공업육성

70년대 한국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조선공업 육성
전자산업 육성	철강·기계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의】** 선박을 설계하여 건조하는데 관련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선박의 건조는 자동차 또는 전자 제품 등과 달리 주문 생산으로 이루어진다.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마다 표준적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지만 선주의 요구 사항과 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라 완전히 동일한 선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배경】** 1970년대에 들어 그동안 수출에 의존하는 경공업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산업화로 전환하였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언하고 6대 전략산업(철강·화학·비철금속·전자·기계·조선)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중화학공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인데 협소한 국내시장만으로 적정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조선공업은 고용효과가 크고 대규모 초기자본이 필요하며 국방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부분 선진국들도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여왔다.

**【시행】**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조선설비를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 1973년에 설립되어 세계시장에 진입한 현대중공업의 고 정주영회장이 1971년 9월 영국 런던의 버클레이즈(Barclays)은행에서 500원짜리 우리지폐를 꺼내 우리가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하여 현대중공업 설립자금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조선소건립과 동시에 2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ery Large Crude-Oil Carrier(VLCC)]을 진수시킨 사례는 세계조선사에 기록으로 남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와 접목되면서 괄목할 성과를 가져왔다. 조선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조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제정된 「조선공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조선공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70년 2월에 조선공업진흥계획을 추진하여 조선소의 규모를 늘려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나갔다. 이어 1977년에 삼성이, 1978년에 대우조선소

이 군소 조선소를 대폭 통합·계열화하고 대규모자금(재정자금·기계공업육성자금 등)을 지원받았다. 대형선박 건조체제완비로 국내 조선산업이 내수중심의 소규모 산업에서 세계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변천】** 1970년대 집중적인 정책지원 덕택으로 1970년대 말부터 세계 2위 조선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조선설비 확장 이후 불어 닥친 제2차 석유파동과 함께 세계경제의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해운산업의 회복과 선박발주량은 증가하였으나 노사분규와 원화 절상 등 대내적 악재로 성장이 지체되었고 부득이 1989년에 조선산업 합리화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악재의 극복과 함께 설비투자를 규제했던 합리화조치가 1993년에 해제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예상되는 조선산업 호황에 대비하여, 설비를 확충하였고 이러한 확충으로 한때 세계적인 비난도 받았지만, 2000년을 전후한 조선산업 호황기에 최적의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결과】** 1970년대에는 조선산업이 정부차원의 주요 육성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건조능력 측면에서도 충분한 역량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세계시장진입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1979년 우리의 조선능력은 약 280만 톤으로 1970년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하였고, 건조 가능한 최대선박의 크기도 12만 6,000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 10월에 OECD WP6(Working Party6: 제6 조선작업부회)의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여 우리 산업중 최초로 선진국과의 공식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국으로 부상하였다.

**【핵심어】** 조선공업/전략사업/정주영/VLCC/조선산업 합리화조치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사진자료】** 499. 1973 유조선 진수식(울산)  
500. 1970 현대조선의 울산공장의 독크  
501. 19760627 현대조선소 명명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국가기간산업의 성장

**【소항목】** 철강·기계산업 육성

70년대 한국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조선공업 육성
전자산업 육성	● 철강·기계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의】** 중화학공업에 있어서 중간재산업인 철강산업과 이를 원료로 하는 기계산업(조선·자동차·일반기계 등)을 육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경】**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핵심소재인 철강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종합제철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대 초반 강재생산은 겨우 내수를 충족하는 정도이고 제강능력은 빈약하고 제선(철광석을 녹여 무쇠를 만드는 과정) 능력은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아직 종합제철소를 건설할 만큼 자금, 기술, 경험 등을 보유하지 못했고, 수요마저 충분치 못한 상태였다.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자금과 기술이 절실하지만 국내여건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행】** 정부의 제철소건설을 위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을 맛보곤 하였다. 1962년 1차 시도는 국제개발처(AID)가 제철소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로 무산되고, 1966년 2차 시도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을 구성하고 1967년에는 정부와 제철소건설에 대한 기본 협정까지 체결하였으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기술용역단과의 기술적 이견으로 중단되고 그 뒤에 추진된 대미차관에 대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까지 부정적인 견해로 지금까지의 모든 기대가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듯 하였다. 해결의 실마리는 다른 곳에서 풀게 되었다. 정부는 고심 끝에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제철소건설에 착수하였다. 대일청구권 자금 중 7,370만 달러와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5,000만 달러를 합친 1억 2,370만 달러로 제철소건설에 착수하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비(428억 원)에 3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 정부는 산업화초기의 열악한 수급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에 주요 설비에 대한 장기저리 외자도입 지원,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제품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시장의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공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철강산업 관련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간접자본(항만·용수·철도·도로·가스)에 대한 공공요금도 할인해 주고, 설비자금 지원 및 법인세 면제 혜택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 지원방안인 것이다.

**【변천】** 1968년에 포항에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을 창설하여 박태준 전 명예회장이 중심이 되어 1973년에 연산 1백만 톤의 조강능력을 갖춘 포항종합제철소가 완공되고 이후 규모가 확장되면서 자본재산업과 국내 건설,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소요되는 철강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세계적인 산업환경의 변화와 국내철강 생산의 안정과 수출증가에 따라 1981년에는 「철강공업육성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삭제하였다. 1986년에는 동법을 포함한 산업별 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산업정책을 산업별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육성과 지원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전환함에 따라 기업 스스로 체질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결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철강산업은 1973년 포항제철소 제1기 고로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제1기 고로의 성공은 철강불모지에서 스스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1998년에는 철강 총생산능력이 2,700만 톤에 이르고,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세계 1, 2위를 다투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철강업계의 인수합병(M&A)으로 1억 톤 이상을 생산하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철강산업은 포항제철과 전기로업체(현대제철, 동국제강 등)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08년 5,332만 톤을 생산 세계 6위의 위상을 보이고 있다.

**【핵심어】** 철강공업/포항제철(포스코)/대일청구권/종합제철소/철강공업육성법/공업발전법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사진자료】** 502. 19880322 포항제철 용광로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국가기간산업의 성장

**【소항목】** 석유화학산업 육성

70년대 한국상황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조선공업 육성
전자산업 육성	철강·기계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육성	●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의】** 석유화학산업은 석유나 천연가스의 성분인 탄화수소 등을 합성 원료로 하여 연료나 윤활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 등)을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

**【배경】**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석유화학산업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7)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섬유·신발 등 경공업과 비료·시멘트·정유 등 기간산업의 발전기반이 되었고, 이들 산업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 구입이 크게 늘어났다. 석유화학산업육성의 필요성은 1965년 1월 대통령의 상공부 연두순시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경공업 원료의 대일 의존에서 벗어나 원자재 수입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시행】** 1966년 3월 석유화학산업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8~1972)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7월 상공부 제1공업국내 석유화학공업과가 신설되어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육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증가하는 원자재의 수입대체와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잉여나프타(Naphtha)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1968년 울산에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착수하여 1972년 10월에 완공하였다. 일부 원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생산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등 기초 원자재에서 저밀도폴리에틸렌(Low-Density Poly Ethylene: LDPE), 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e: PP), 아크릴로나트릴(Acrylonitrile) 등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갖춘 석유화학 콤비나트 보유국이 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석유화학 산업발전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막대한 건설자금과 기술이 기반 기술이 전무했던 당시 차관도입은 문제는 큰 난관이었지만, 미국의 Gulf, Dow Chemical 및 Skelly와 협업을 이끌어 내었다. 선진국에서 당시 4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석유화학공장을 우리는 2억 4천만 달러로 건설하였으며, 한국의 석유화학공장 규모가 너무 작아 제품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을 것이라는 미국 컨설팅기업(Arthur D. Little, Inc.: ADL)의 예상도 빗나가고 오히려 울산석

유화학단지의 12개 제품의 원가는 수입가격보다 훨씬 낮아 일본 등지에 수출까지 하였다.

**【변천】** 그러나 일본의 노골적인 덤핑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1971년 메탄올공장이 완공되어 생산을 시작하자 톤당 30~70달러에서 30달러로 낮추며 덤핑공세에 시달리기도 하였는데 정부는 일본산 메탄올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년여 후 1973년 1월에 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가동초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연관 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고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100억 달러 수출조기달성을 위한 원료자급계획에 따라 1976년 11월 전남 여천에 제2 대단위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착수하여 1979년 말에 완공되었다. 이로써 석유화학생산능력이 에틸렌 기준 연산 50.5만 톤으로 관련계열공장을 갖춘 세계 15위 생산국이 되었다.

**【결과】** 이러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 신·중설 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시장진입을 규제해온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1986년 6월에 폐지되고 「공업발전법」의 발효로 투자자유화 여건이 조성되고, 중장기 수급전망도 호조가 예상되어 신·중설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양적 팽창은 1970년대 말에 비해 1989년 말에는 115.5만 톤으로 그 배가 넘어섰다. 현재 에틸렌 기준 세계 5위의 석유화학강국이지만 범용제품위주의 생산, 선진국에 뒤지는 기업규모 등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핵심어】**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콤비나트/대일청구권/석유화학육성법/울산석유화학단지/공업발전법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한국개발원,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사진자료】** 503. 196405 울산 석유화학 단지위 위용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성과

**【소항목】** 통계로 보는 경제성장

● 통계로 보는 경제성장	정부·기업·국민의 합작으로 이뤄낸 경제발전
---------------	-------------------------

**【정의】** 1960년대 초부터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는데 그 경제적 성과를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원인】** 한국경제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자립기반구축기인 제1·2차 계획기간(1962~1971년) 동안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채택하여 고도성장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2~1978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였다. 연평균 8.9%의 성장률과 1977년에는 1백억 달러 수출과 1천 달러 소득을 조기에 달성하였다. 1979~1991년은 구조적 전환기로 1970년대 말에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신흥공업국(NIES)으로 탈바꿈하였다.

**【내용】**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추진된 후 1991년까지의 6차례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19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다소의 기복은 있었으나 연평균 8%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GNP규모는 1962년 126억 7천만 달러(1980년 가격)에서 1991년 2천 817억 달러로 증가하여 경제규모가 약 22배로 확대되었고, 따라서 1인당 GNP도 같은 기간 447달러에서 6,518달러로 약 15배로 신장하였다. GNP에 대한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1차산업)은 1962년 36.6%에서 1991년 8.1%로 크게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에 광공업(2차산업)은 16.3%에서 27.9%로 증가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SOC) 및 서비스업(3차산업)은 47.1%에서 64.0%로 확대되었다. 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줄어 든 반면에 2차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취업구조도 반영되어 1962~1991년간에 1차산업은 63.2%에서 16.7%로 크게 감소한 반면, 2차산업은 8.8%에서 26.9%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SOC 및 기타 서비스업도 28.3%에서 56.4%로 증가하였다. 1960년 초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991년 말 총인구 중 1차산업인구 비중은 16.7%, 국민총생산에서의 비중은 8.1%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외적으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상품수출도 1962년 5천 400만 달러(경상가격)에서 1971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1년에는 7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962년에는 0.04%에 불과하던 것이 1994년에는 2.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공업화가 진전되어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공산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962년 1차산품이 63.0%인데 비해 공산품은 27.0%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1994년에는 공산품이 96.0%에 달하였다. 공산품 수출의 구조도 1960년대의 경공업위주의 수출전략으로 1972년에 경공업제품이 74.5%였고 중화학제품이 25.3%에 불과하였다.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추진된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해 1982년 52.8%, 1994년에는 68.7%로 계속 증가하였다. 1960년대 이후 SOC의 확충과 함께 수출에 기반을 둔 대외지향적인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경제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나아가 산업구조도 농림어업 위주에서 공업중심으로 점차 재편되어 갔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 총도로연장은 1962년 27,169km에서 1991년 58,088km로 약 2배로 늘어났고 생산의 기본 동력인 발전설비능력은 1962년 252,500kW에서 1991년에는 9,912,300kW로 무려 40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술개발의 원천인 연구개발비의 경우 1976년에 약 61억여 원에 국내총생산대비 0.44%이었으나 1991년에는 약 4조 원에 약 2%로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의의】**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은 산업의 고도화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신흥공업국으로 등장하였다.

**【핵심어】** 고도성장/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중화학공업화정책/신흥공업국(NIES)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 (한국개발원, 2010); 송병락, 『한국경제론』(박영사, 1992).

**【사진자료】** 504. 19700707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경부고속도로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키워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한강의 기적

**【전시항목】**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성과

**【소항목】** 정부·기업·국민의 협력으로 이뤄 낸 경제발전

통계로 보는 경제성장	● 정부·기업·국민의 협력으로 이뤄낸 경제발전
-------------	---------------------------

**【정의】**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외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고도경제성장 요인들 중에서 각 경제주체(정부·기업·국민)들의 기여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말한다.

**【원인】** 우리 경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고도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48만 원에서 2008년 2,120만원으로 14.3배(2008년 가격)로 증가하였다. 삶의 질도 개선되어 평균 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07년 79.6세로 1.5배 늘어났으며, 영아사망률은 1960년~1965년 출생 1천 명당 70.0명에서 2008년 3.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갔고 이러한 경제성장의 성과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내용】** 한국경제의 기적적인 성장을 초래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경제성장은 소비·투자·수출·수입대체 등의 수요측 요인과 노동·자본 및 기술진보 등의 공급측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과 각종 환경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 등의 상호 복합작용으로 이룩된다. 개발도상국이었던 당시, 시장경제체제 자체의 성장부분도 존재하지만 여타의 부분으로 정부의 정책적 요인과 왕성한 기업가정신 그리고 인적 자본으로서 국민들의 역할을 들 수가 있다. 한국의 경우, 첫째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다. 경제성장정책은 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정부주도형이라 한다. 올바른 성장정책방향의 설정과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이다. 경제성장에 적합한 공업 및 대외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하여 5개년계획을 도합 7차례나 수립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 지도자의 헌신이다. 지도자나 정부의 관료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태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국민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시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협조를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불굴의 모험심이다. 정부와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강한 인식하에서 합심하여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를 키우는데 함께 노력하여 외국에서 한국경제를 「한국형주식회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독창성과 기업의욕이 왕성하고 모험심이 강한 기업가(정주영·이병철 등)들이 많이 탄생하였다는 점이다. 경기가 침체할 때 경기부양의 길은 오로지 기업가들의 「투자마인드」를 회복하는 길인데 강한 「창조적 파괴」의 혁신을 담당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기업가들이 두루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자질이 우수한 국민이다. 한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무엇보다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근로자·경영자·기업가 및 공무원을 배출하였다. 저소득층과 여성인력은 초기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선진외국에 유학 등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선진기술과 경영방법을 익힌 한국의 고급두뇌들이 귀국하여 기업이나 정부 등 각종 조직체의 경영층으로 유능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를 형성하며 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화합과 더불어 기업 등 조직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므로 노사관계도 서구와 달리 협조적이며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의의】** 이들 3자가 합심하여 공동운명체로서 「한국이라는 배」를 폭풍우속에서 항진하여 목표인 고도성장이라는 항구에 안착시켰던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부,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 우수한 자질의 국민들이 합주한 아름다운 3중주이었다.

**【핵심어】** 한강의 기적/고도경제성장/정부주도형/기업가정신/테크노크라트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 (한국개발원, 2010); 송병락, 『한국경제론』(박영사, 1992).

**【사진자료】** 505. 19711012 남대문과 시청앞의 대로변 전경  
506. 1980 고층빌딩이 숲을 이룬 서울의 중심부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경제개발과 산업화 변모하는 동시와 농촌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 ●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	----------------------------------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미 군정을 거쳐 1948년 제헌의회를 구성하면서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사회에 돌입했다. 그러나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치열한 이념갈등이 전개되었으며, 결국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져왔다. 또한 1공화국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헌법파괴와 사회억압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4·19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1969년 3선개헌 이후의 시기는 민주주의의 시련의 역사이면서 민주화운동이 가장 거셌던 시기이다. 이후 민주화운동의 진전과 함께 시민사회가 성장하였으며, 시민들의 민주의식 또한 주체성을 가지고 발전한 시기이다.

3선개헌이 일어난 196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산업화·민주화의 시기였다. 3선개헌,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집권을 시도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신군부의 제5공화국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역행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민주화운동은 정권반대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해결을 위한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1971년 전태일의 분신으로 부각된 노동문제, 가톨릭농민회나 불교계와 결합된 농민운동, 중화학공업화에 의해 초래된 환경문제 등은 민주화운동이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신체제하에서의 운동은 농민이나 노동자, 여성 또는 소비자가 조직되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운동에 나서는 특징을 보이며, 민주화운동의 영역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각 운동주체에게 민주의식을 심어주고 확산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유신체제의 경우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그러한 의식은 자발적으로 생성되기도 했다. 독재와 반민주에 대한 반항은 동아일보 광고사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일보 백지광고투쟁에 동참하면서 민주의식의 일면을 드러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철수 이후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보인 것 또한 민주화운동과 시민의 정치의식이 한데 묶여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킨 것이다.

중산층의 성장과 사회적 자유화 흐름은 정치의식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자연스럽게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1987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항쟁에 참여하였으며, 1987년 6월민주항쟁 당시 환경관련 시민단체, 여성관련 시민단체 등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민주화운동과 자신들의 시민운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민주화 이후 정치적·사회적 자유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교통·교육·경제정의·인권 등의 분야로 확대된 관심과 참여는 각 부문에서 왜곡된 시스템을 개혁하고 민주화되기를 희망했다. 그럼에 따라 시민사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으며, 다양한 시민운동이 펼쳐지는 전기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친 민주화운동은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민주의식과 민주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 들어와 세계정세의 변화로 동서화해 무드가 시작되자 남북한도 대화를 시도하여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내었다. 당시 남북한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당국자 간 대화의 중단으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버렸고, 상호불신의 벽은 더 높아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이전의 "대화 없는 대결 시대"에서 벗어나 "대화 있는 대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남북회담과 상호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나갔고, 그 결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유지해 나갔으나 반세기 동안 쌓인 상호 적대와 불신은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 1980년대 민주화운동	남북관계의 명암
민주주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969년 3선개헌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까지는 민주주의의 시련의 역사이면서, 민주화운동을 통한 투쟁의 시기이기도 하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은 1969년 3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집권을 시도했으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자유마저 박탈당한 현실에 분노했었다. 하지만 1971년 대통령 선거와 5·25 국회의원 선거는 야권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야권의 김영삼 후보는 '40대 기수론'이라는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며,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세 40대 후보간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김대중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과 대등하게 맞서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어 치러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정도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하고, 기존 헌법을 유신헌법으로 대체하였다. 유신헌법의 대표적인 조항인 긴급조치권은 유신체제에 대한 모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명령이었다. 이러한 유신체제 하에서도 동아일보 광고사태, 학생운동의 반유신투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저항이 일어났다. 하지만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유신체제가 무너지자 민주화 바람은 1980년 초반을 달렸지만 12·12군사반란과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계엄군을 동원해 살상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억눌렀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새로 집권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켜 권력기반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중반 들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직선제 쟁취, 민주화, 반독재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1987년 6월 10일 6월민주항쟁이 발발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6·29특별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민주화의 첫 단계를 성취하게 되었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3선개헌과 10월유신

**【소항목】** 3선개헌

● 3선개헌	김대중 납치사건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유신헌법 유신체제	긴급조치 1~9호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의】** 3선개헌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의 6번째 헌법 개정이며, 1960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

**【배경】**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3선개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달 뒤 6월 8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진의를 의심케 했다. 대통령과 공무원이 직접 나서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를 한 것은 이미 3선개헌을 염두에 두고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결과는 개헌선을 상회하는 129석을 확보하는 압승이었다. 이와 함께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내부에서 3선개헌을 반대하는 김종필 계열 인사들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제거하면서 후계자론과 도전세력을 미리 차단했다.

**【전개】** 3선개헌 논의는 1968년 12월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서리의 발언과 1969년 1월 6일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의 개헌논의 발언으로 공식화되었다. 이어 같은 달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개헌을 연말이나 내년 초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발언으로 민주공화당 내 여론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인 신민당은 정치정화법 해금인사들과 함께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지투쟁을 벌였다. 민주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4월 8일 신민당이 제출한 문교부 장관 해임권고 결의안이 여당의 반발표로 통과되는 항명파동이 일어났다. 이에 구주류 중앙위원인 양순직 의원 외 4명을 공화당에서 제명하여 3선 개헌에 반발하는 여당의 여론을 잠재웠다.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문제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해 7개 항목을 여야에 제의하면서 개헌문제를 자신의 신임 문제와 연결시켰다. 이후 민주공화당은 연임금지안 삭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강화 등 3개항을 내

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총회에 참석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신민당의 연주흠, 성낙현, 조흥만 의원이 개헌지지 성명을 발표하였고, 정우회 소속 의원 11명이 개헌안 서명에 참여했다. 1969년 8월 7일 3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13일 헌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되었다. 그러나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자 9월 14일 새벽 민주공화당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을 피해 국회 제3별관 특별위원회실에서 공화당과 정우회, 무소속 의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전원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거센 개헌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77.1%의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65.1%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다.

**【결과】** 확정된 헌법개정안은 “1.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 2.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함, 3.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요건을 엄격히 규정, 4.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3선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투표에 따라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거에 출마해 3선 연임에 성공하였다.

**【의의】**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의 3선개헌의 주된 이유는 ‘중단 없는 경제개발’이었다. 하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편의대로 자주 바꾸는 안 좋은 사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과 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다수 여당의 수에 의지한 정치행태였다. 3선개헌으로 인해 1972년에 들어서는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핵심어】** 3선 개헌/박정희/공화당/국민복지회/신민당

**【참고문헌】**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역사비평사, 2007); 박명림, 「박정희 시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9」, 『한국정치외교사』 제30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사진자료】** 507. 19710623 제7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아치가 설치되어 있는 광화문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3선개헌과 10월유신

**【소항목】** 3선개헌 반대운동

3선개헌	김대중 납치사건
●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유신헌법 유신체제	긴급조치 1~9호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의】** 1969년 10월 17일 3선개헌을 전후로 야당, 재야, 학생들의 3선개헌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을 말한다.

**【배경】**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상당수의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 당했다. 그래도 5·16군사정변 직후 학생들과 일부 혁신계 인사들은 군부 세력에 호의적이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에 함석헌과 같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5·16군사정변 직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군사정변세력을 혁신적 진보주의로 판단하고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한일회담을 추진하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1964년 3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점점 고조되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65년 초 한일협정이 발효되자 학생과 야당의 저항은 더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1967년 5·3 대통령 선거와 6·8 국회의원 선거를 맞았다.

**【전개】**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의 발판은 1967년 5월 3일 대통령 선거와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마련되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공화당이 개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부정선거였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129석을 얻어 45석의 신민당을 압도하며 개헌 의석을 확보하였다. 총선 이후 대학가에서는 6·8부정선거 규탄과 3선개헌 반대, 헌정수호 시위가 일어났다. 당국은 6월 13일, 16일 서울 지역 21개 대학, 전국 31개 대학, 163개 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6월 25일에는 보충수업 금지, 현장 지도, 교외 생활 지도 철거 등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학생, 야당 모두 6·8선거를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선 확보에 있다고 보았다. 6월 12일 서울대생들의 헌정수호성토회를 시작으로 전국 전역에 있는 대학에서 3선개헌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7월 이후에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확산되었다.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1969년 1월 17일 신민당과 재야 각계 인사들이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범야초당기구 설립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3선개헌

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1969년 7월 17일 결성되었다. 한편 6월 20일 밤에는 귀가하던 김영삼 의원이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받았다. 이어 7월 29일과 30일에는 신민당 소속 전국구 의원 3인이 개헌지지 성명을 낸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신민당은 개헌 시도를 막기 위해 9월 7일 긴급 전당대회를 열어 신민당을 해산하고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인 신민회를 결성했다. 해산의 목적은 지지 성명을 낸 자당 소속 전국구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고 나머지 44명의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개헌안 가결 정족수 117명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의 노력은 공화당이 국회 제3별관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소집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어 수포로 돌아갔다.

**【결과·의의】**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재야, 학생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3선개헌은 통과되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되었다. 3선개헌 반대운동은 잠시 소강상태로 빠지긴 했으나 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 반대운동의 주체가 기존의 야당 정치세력이나 학생들에서 노동계, 종교계 등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민주주의나 민족주의 문제에서 노동, 빈민, 농촌 등의 민중문제로 확산되는 분기점이었다. 야당 또한 1960년대 분열되어 있던 상황을 3선개헌과 1971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재집결할 수 있었다.

**【핵심어】** 3선개헌/한일협정/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참고문헌】** 서중석,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통권 제3호(역사비평사, 1988);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역사비평사, 2007); 박명림, 「박정희 시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9」, 『한국정치외교사』 제30집 1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사진자료】** 508. 19691016 효창구장에서 3선개헌 반대유세를 하고 있는 박순천여사

509. 1969 고려대 앞에서 3선개헌에 반대 화형식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3선개헌과 10월유신

**【소항목】** 유신헌법, 유신체제

3선개헌	김대중 납치사건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 유신헌법, 유신체제	긴급조치 1~9호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의】**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10월유신으로 제4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12월 27일 발효 및 공포한 헌법이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체제라고 한다.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0여만 표로 가까스로 이겼다. 이어서 열린 71년 5·25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내적으로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셌으며, 대외적으로는 데탕트라는 새로운 국제정세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남북화해 분위기에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탄생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70년대 초반 경제불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을 맞았다. 경기불황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1972년 초헌법적인 8·3조치를 통해서 부실기업들의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 급속한 산업화,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의 기본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 부문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농현상은 도시빈민과 저임금 노동자를 빠르게 양산하며 사회불안 요소가 되어 갔다.

**【전개·내용】** 1971년 12월 6일에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었으며,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헌법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인 유신헌법이 공고되었으며,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지만, 연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간접선거하도록 했으며,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법률안거부권 등의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개정된 선거법은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임기 6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꿔 여당과 대통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또한 국회회기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모두 합해서 150일을 넘을 수 없었고, 국정감사권도 사라졌다.

**【결과】** 유신헌법에 따라 12월 23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이용해 긴급조치를 9차례나 공포해 체제비판이나 반대세력을 철저히 억압하였다. 혹독한 탄압과 독재권력의 유지는 반대세력을 집결시켰으며, 1978년 12월 제9대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거나 이어 치러진 총선거에서 여당이 지역구 선거에 사실상 패배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국을 초래했으며, 10·26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군부가 집권하여 1980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자 유신헌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유신체제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의의】** 유신체제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체제를 구축했다. 형식적으로나마 입법권, 자유권 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력화되고,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강력한 독재체제와 종신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체제 성격 때문에 사소한 불만이나 비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당했다.

**【핵심어】** 유신헌법/유신체제/통일주체국민회의/7.4남북공동성명/긴급조치/8·3조치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제8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비평』 통권 제32호(역사비평사, 1995); 김태일, 「유신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비평』 통권 제32호(역사비평사, 1995);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역사비평사, 2007).

**【사진자료】** 510. 19721227 유신헌법에 의한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511. 19721124 확정된 유신헌법을 선포하는 주재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3선개헌과 10월유신

**【소항목】** 통일주체국민회의

3선개헌	김대중 납치사건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유신헌법 유신체제	긴급조치 1~9호
●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8호 유신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 중 3분의 1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로 폐지되었다.

**【설립배경】** 1971년 대통령에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은 이어 벌어진 5·25총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집권 연장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집권을 용이하기 위해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었다. 그래서 유신헌법을 초안하면서 간선제를 수행할 기관을 구상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로 구체화되었다.

**【활동사항】**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할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으며, 12월 23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2,359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가 2,357명의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또한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기 3년의 의원 73명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뽑힌 의원들은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지 않고, 따로 유신헌정우회(유정회)라는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강력한 여권을 형성하였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유정회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충성했다. 이후 1978년 5월 18일 제2대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2,581명의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이어 7월 6일 2,578명 투표에 2,577명이 찬성하여 제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했다. 1979년 10·26사건 이후인 12월 6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를 선출하였다. 1980년 8월 27일에는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을 선출하였으며,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자 폐지되었다.

**【경과·변천】** 유신헌법 제3장 제35조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수는 2천 명에서 5천 명 이하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된다는 조항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의장이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수 있으며, 국회가 발의 의결한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의결, 확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일괄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따라 조직과 대의원의 자격, 의무, 지역회의, 사무처 구성을 규정하였다.

**【의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을 통해서 구성되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국회에서 통과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결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 위에 서는 초법적인 기관이었다. 조직에서도 운영위원회, 사무처를 둘 수 있지만 의장의 감독 아래 놓였으며, 대의원 임명과 사직도 의장인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할 만큼 철저히 대통령에 종속된 거수기관에 불과했다.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과 권력 집중을 위해 존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도구였다. 장충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해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핵심어】** 통일주체국민회의/10월유신/유신정우회/제5공화국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제8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사진자료】** 512. 19721223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통령 선거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3선개헌과 10월유신

**【소항목】** 김대중 납치사건

3선개헌	● 김대중 납치사건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유신헌법 유신체제	긴급조치 1~9호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의】** 김대중 납치사건은 미국과 일본에서 반유신·반독재운동을 벌이고 있던 김대중을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동경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0호실 부근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납치한 사건이다.

**【배경】**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94만 표로 석패했다. 김대중은 1972년 10월유신을 접하자 일본에서 일본 언론을 통해 10월유신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하며 반민주적인 유신체제를 규탄하는 활동을 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일본·미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현지 언론을 상대로 강연회, 기자회견, 저술활동을 통해 반유신투쟁을 벌였다. 1973년 3월 미국으로 건너가 그해 7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한민통)’을 결성하고 반독재투쟁을 이끌 구심체로 삼았으며, 7월 13일 일본에서 한민통 지부를 결성하려고 했다. 1971년부터 김대중에 대해 수사공작과 같은 형식으로 집중 동향내사를 벌여온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의 일본 출국 이후의 행적을 현지 파견요원들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은 주일·주미 파견관에게 김대중의 동향 감시를 지시하고 납치공작을 진행시켰다. 이에 따라 이른바 ‘KT공작계획안’이 작성되었다. 1973년 5월부터 부인 이희호를 접촉, 자진 귀국을 설득했으나 여의치 않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중정 직원 이철희 등 3인에게 납치 또는 납치 후 제거라는 두 가지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전개】** 1973년 8월 동경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은 8월 8일 신병 치료차 일본으로 건너와 같은 호텔에서 머물고 있던 양일동 민주통일당 대표를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납치, 감금되었다. 이후 마취약을 투여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판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대판항에 정박해있는 용금호로 이송되었다. 8월 10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루를 대기하다 8월 11일 김대중을 하선시킨 후 앰블런스에 태워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후 8월 13일 납치한 지 닷새 만에 동교동 자택 골목에 풀

어주었다.

**【결과】** 풀려난 김대중은 이후 가택연금과 함께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일본 참의원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으로 망명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납치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벌인 범행이라고 했으며, 1987년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해외망명정부를 수립할 우려가 있어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2007년 <국가정보원과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의의】** 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가장 강력한 야당지도자를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납치한 사실은 유신체제의 정당성의 부재와 불법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적에게 정치테러를 가한 사건이었다.

**【핵심어】** 김대중 납치사건/중앙정보부/이후락/KT 공작 계획안

**【참고문헌】**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주요 의혹사건편 上권(II)』(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삼인, 2011).

**【사진자료】** 513. 197308 유신헌법 공포 이후 납치에서 풀려나 자택에서 기자회견하는 김대중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3선개헌과 10월유신

**【소항목】** 유신반대운동

3선개헌	김대중 납치사건
3선개헌 반대운동	● 유신반대운동
유신헌법 유신체제	긴급조치 1~9호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의】** 10월유신 전후부터 1979년 10·26사건까지 유신체제의 반민주, 독재에 야당을 비롯해 재야, 학생, 노동, 종교계가 광범위하게 저항한 운동을 말한다.

**【원인·배경】**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은 3선개헌 반대운동과 반민주투쟁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제도권 야당 외에 재야가 반민주 진영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이때부터 1960년대 산업화와 수출의존 성장정책, 저곡가·저임금 정책 등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산업 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농에 따른 도시빈민 문제와 저임금 노동문제와 같은 민중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유신반대운동과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전개】** 1969년 6월 서울대 법대생들의 헌정수호성토탈회를 시작으로 1971년에는 대학교수들이 학원의 자주와 자율을 선언하였으며, 학생들은 교련반대시위 등을 벌이며 반체제 운동을 전개했다. 박정희 정권은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변칙 통과시키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다.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학생운동은 학생회와 이념서클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1975년 학도호국단이 부활하면서 학생운동의 무게중심은 점점 이념서클로 옮겨갔다. 서울대의 후진국사학회연구회, 전남대학교의 민족사연구회, 고려대학교의 한맥회 등의 서클들은 중앙정보부와 경찰을 앞세운 정권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을 조직하고 반유신활동을 펼쳤다. 야당을 비롯한 재야 세력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시작으로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1979년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의 조직을 결성하며,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과 연합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해나갔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을 계기로 각계를 망라한 연합운동조직이 결성되고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사형에 대해 규탄시위를 하고, 동아일보 광고 사태에 대한 탄압, 직원 연행 사태를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저

항하였다. 이런 연대의 흐름은 1975년 가혹한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1976년 3월 1일 종교계, 학계, 재야, 정치권 등 각계 인사들이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며 이어나갔다. 윤보선, 김대중, 은명기, 함석헌 등의 12명이 서명한 선언문에서는 유신 철폐와 박정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한편으로 유신체제가 시작되는 1972년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농촌에서는 농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농현상과 소작농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민들은 함평고구마사건(1976)과 같은 분쟁을 일으키고, 카톨릭농민회와 같은 조직과 결합하여 유신체제의 농업정책에 항거했다. 그와 함께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현실이 부각되었고 노동운동이 반체제운동의 한 흐름으로 들어와 노조운동을 비롯한 노동자투쟁을 통해 유신체제의 경제정책에 저항하였다.

**【결과·의의】** 유신체제를 기점으로 반체제운동은 다양한 흐름과 연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연대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거쳐 1978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집결하여 유신철폐,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유신반대운동이라는 단일 목표로 연대하며 민청학련 사건, 동아·조선 기자들에 대한 탄압, YH사건 등에 강력히 맞서왔다. 이러한 흐름은 1978년 12월 12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공화당을 1.1% 앞지른 이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유신체제는 끝났지만, 신군부의 등장으로 1970년대의 반체제 운동은 다시 1980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핵심어】** 유신체제/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회복국민회의/재야/학생운동

**【참고문헌】** 윤선자, 「유신체제하 범국민 민주화운동 선언문」, 『한국근현대연구』 2002년 가을호 제22집(한국근현대사학회); 안병욱 외, 「제2부 반유신민주화운동」, 『유신과 반유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사진자료】** 514. 19741118 유신헌법철폐를 외치는 이대생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3선개헌과 10월유신

**【소항목】** 긴급조치 1~9호

3선개헌	김대중 납치사건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유신헌법 유신체제	● 긴급조치 1~9호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의】** 긴급조치는 1972년 12월 27일 발효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하며,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배경】** 유신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긴급조치권이 발동된 계기는 1973년 12월 24일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가 구성되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개헌에 대한 요구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청원운동본부로 반대세력이 결집할 움직임을 보이고,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며 유신체제가 동요할 기미가 보이자 박정희 정권은 즉시 긴급조치권을 선포했다.

**【시행】** 개헌청원운동에 쐈기를 막고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공포했으며, 바로 이어서 1호 위반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를 심판하는 비상군법회의의 설치를 규정하는 긴급조치 2호를 선포했다. 1, 2호의 선포로 유신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던 장준하와 백기완 등이 구속되었다. 긴급조치 3호는 1월 14일 공포되었으며,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으나 주된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4년 4월 3일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과 ‘지식인·언론인·종교인에게 드리는 글’ 등 유인물을 뿌리면서 일제히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권은 시위 주도 학생들을 체포하면서 이날 밤 10시에 바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그리고 민청학련 가담자는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겠다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았다. 관련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를 비롯해 인혁당 관계자 21명과 일본인 2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 다음날 긴급조치 4호사건으로 구속된 이들 중 인혁당 관계자 7명, 민청학련 관계자 1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5년 4월 7일 2천 명 가량의 고려대 학생들은 총학생회 임원과 운동의 지도부가 연행된 와중에도 시위를 벌이고, 도서관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정권은 1975년 4월 8일 고려대학교를 대상으로 긴급조치 7호를 발동했다. 고려대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교내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었다. 고려대에 내려진 긴급조치는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8호가 공포되면서 해제되었다.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은 반유신운동을 철저히 억누르고자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이나 개정 청원, 학생집회를 금지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인쇄, 배포, 제작, 판매, 소지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위반자가 속한 학교나 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를 해임이나 제적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긴급조치 9호라는 강경한 조치로 인해 학원가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구속, 제적 사태가 속출하였다. 긴급조치 9호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상황에서 학교감시망이 작동하는 학교에서는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가 없었으며, 1976년까지 대규모 시위를 도모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변천】** 유신체제 하의 긴급조치 9호는 10·26사건 이후 최규하가 1979년 12월 6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해제하였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으로 대체되면서 긴급조치권은 헌법에서 사라졌다.

**【결과·의의】** 긴급조치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하지만 대통령이 이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초법적인 권한이 되었다. 사실상 긴급조치권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적 절차나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긴급조치 4호의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순식간에 이뤄진 사형은 당시 외국으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들을 만큼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된 사건이었다.

**【핵심어】** 긴급조치/유신체제/민청학련/인혁당

**【참고문헌】** 「대통령 긴급조치 제1~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비평』 통권 32호(역사비평사, 1995); 이기훈, 「1970년대 학생 반유신 운동」, 『유신과 반유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사진자료】** 515. 19740114 대통령 긴급조치 3호를 발표하는 청와대 대변인

516. 197502 긴급조치위반자로 수감되었다 풀려나는 주교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부마 항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소항목】** YH사태와 김영삼 의원 제명, 부마민주항쟁

● YH사태와 김영삼 의원 제명, 부마민주항쟁	10.26대통령 시해사건
---------------------------	---------------

**【정의】** YH사태는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이 회사폐업 조치에 항의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것을 강제해산하던 중 여공 1명이 추락사한 사건으로 이를 비판한 김영삼 총재를 정부가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자 이를 항의하며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배경】**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에게 힘겹게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한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시위를 도화선으로 반유신운동이 일파만파로 번졌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통해 이를 탄압하였다. 그러나 유신독재는 1979년 5월 30일 김영삼이 이철승을 누르고 다시 신민당 총재로 당선된 것을 계기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김영삼은 총재에 당선되자마자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6월 2일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 6월 11일에는 통일을 위해 김일성도 만날 수 있다고 과감히 발언하였다. 1979년 대한민국 최대 가발 수출업체였던 YH무역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든 데다 1975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1979년 3월 폐업을 공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정상화 방안을 채택, YH무역을 회생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회사 측과 정부 당국이 시종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4월 13일부터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전개】** YH무역 여자노동자들은 8월 9일부터 도시산업선교회의 앞선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감행했다. 경찰은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경 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고, 이러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여성노동자 김경숙(21세)이 숨지고 신민당 의원들과 기자들도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김영삼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에서 팔레비 정권이 무너진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 인터뷰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은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신민당 총재에서 축출하려고 하였다. 1979년 10월 4일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주도로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을 요구하였다.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도 불구하고, 백두진 국회의장이 구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징계동의안을 회부하였다. 이후 3분 후에 소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40초 만에 전격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결과】**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5,000명이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10월 17일 저녁 부산 시민들도 이들의 시위에 적극 합세하였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충무파출소·한국방송공사(KBS)·서구청·부산세무서 등이 파괴되었고, 경찰차량 전소 내지 파손되는 등 한때 무정부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10월 18일 0시를 기해 정부는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1,058명을 연행하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마산에서도 10월 19일 마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고 20일이 되자 공단 근로자 및 고등학생이 시위에 합세하면서 위수령이 선포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일대의 심각한 불경기가 배경을 이루었으나, 이 지역 출신 정치인 김영삼에 대한 탄압이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의의】** 사건 발생 초기 단순히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시위였던 YH사태는 1972년 10월유신 이후 억눌려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마민주항쟁 1주일 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도 종막을 고하였다.

**【핵심어】** YH사건/김영삼 제명/뉴욕타임즈 인터뷰/부마민주항쟁/유신체제

**【참고문헌】** 김일영, 『건국과 부국: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기과량, 2010);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을유문화사, 1992); 정유경, 「부산지역 부마항쟁에 대한 고찰」, 『한국민족문화』 제39호(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이운섭, 『박정희 정권의 역사』(필맥, 2011); 조갑제, 『朴正熙: 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조갑제닷컴, 2007).

**【사진자료】** 517. 197808 회사 실직에 항의, 농성하는 YH무역 여직원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부마 항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소항목】** 10·26 대통령 시해사건

YH사태와 김영삼 의원 제명, 부마사태	● 10.26대통령 시해사건
-----------------------	-----------------

**【정의】** 10·26사건(궁정동 사태)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홍주 등과 함께 박정희대통령, 차지철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배경】**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정당활동이 금지되었고, 비상국무회의가 전권을 장악하였다. 이른바 ‘10월 유신’이 시작된 것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중임 제한을 없앴으며,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체육관 선거로 대체하였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그 출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학생, 언론과 종교계, 지식인과 노동자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화운동과 반체제운동, 생존권투쟁이 전개되었고,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에 이은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정책의 성과와 베트남 패망으로 인한 안보위기, 1975년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살에 따른 동정적 국민정서 등을 배경으로 유신체제전반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위기는 다시 가속화되었다. 야당은 개헌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삼아 공세를 시작했으며, 학생들과 재야운동권의 반체제운동도 격화되었다. 더구나 2차 오일 쇼크와 무리한 중화학공업 드라이브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세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전개】** 1979년 8월 YH사태와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은 유신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학원가의 반유신운동이 격화되었고, 민심도 이반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총재의 제명이 일어나자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부마시위는 시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경찰력으로 진압할 수 없게 되자,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뒤이어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부마민주항쟁으로 시위의 불씨가 전국의 대학으로 퍼져나가자 유신정권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과】**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은 KBS 당진송신소 개소식과 삼교천 방조제 준공식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예계의 젊은 두 여성과 함께 '주연'을 열 때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향해 총을 쏘았다. 즉시 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7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한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0·26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의의】** 항구적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박정희 정권은 정권저항운동에 대한 대처를 놓고 정권의 핵심부 갈등으로 인한 충격 사건으로 인해 종언을 고하였다.

**【핵심어】** 부마민주항쟁/김영삼 제명/정권 핵심부의 갈등/김재규/차지철

**【참고문헌】** 정주신, 「10·26사건의 배경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8권 겨울호(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조갑제, 『朴正熙의 마지막 하루: 10·26, 그날의 진실』(月刊朝鮮社, 2005);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근대 혁명가 朴正熙의 비장한 생애』(조선일보사, 1999).

**【사진자료】** 518. 19791026 10.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소항목】** 12·12군사반란

●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제5공화국 헌법
전국비상계엄확대	제5공화국 출범

**【정의】**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연행한 군사반란이다.

**【배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0·26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979년 11월 6일 10·26사건 수사를 마치고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12월 12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무혐의를 뒤집으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를 조사를 하기 위해 강제 연행 계획을 세웠다. 10·26사건 이후 하나회를 비롯한 일부 정치화된 군대 내 사조직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견제할 목적으로 '인사조치안'을 작성하여 실행하려고 계획하던 중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군부 내에서 배제될 상황에 처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전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에 나섰다.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 영관급 장교들의 동조와 함께 모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훈련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등의 장성들과 협의를 했다. 12월 8일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전달받고, 이를 확정된 후 허삼수, 우경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했다. 12월 12일이 되자 박희도, 황영시, 노태우 등을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30경비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일원 장악 계획을 세웠다. 전두환은 같은 날 오후 6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동시에 허삼수, 우경윤은 오후 7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관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에 항의하고 군의 원대복귀를 주장하던 이건영 3군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에 대해 하극상을 감행하여 무력으로 제압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13일 새벽 4시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태를 유리하게 일단락지었다. 12·12군사반란 이후 신군부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인사를 직접 단행하면서 군을 장악해나갔다.

**【결과·의의】** 12·12군사반란에 성공한 신군부는 이후 집권 시나리오 계획을 세워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월 18일부터 열흘간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해나갔다. 그리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1995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폭로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항쟁의 주동자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이후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검찰은 12·12사건과 5·17비상계엄 확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인사에 대해 5·17사건은 내란혐의로, 12·12사건은 반란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에서 12·12군사반란에 대한 반란죄와 내란죄를 인정함에 따라 군사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신군부를 견제하려 했던 정승화 육군총장을 연행한 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

**【핵심어】** 12·12군사반란/10·26사건/신군부/전두환/노태우/정승화

**【참고문헌】**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문; 「제3호 '12·12', '5·17', '5·18' 사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上권』(조선뉴스프레스, 2011).

**【사진자료】** 519. 19960826 비자금사건 공판장에 들어서는 전두환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1980년 서울의 봄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소항목】** 서울의 봄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 서울의 봄	제5공화국 헌법
전국비상계엄 확대	제5공화국 출범

**【정의】**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로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민주화운동과 민주적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를 말한다.

**【배경】** 10·26사건 이후 12월 6일 출범한 최규하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고,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인사들을 복권시켰다. 또한 유신체제 하에서 쫓겨났던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복교 및 복직시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980년 민주화 열기로 가득찬 서울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개】** 1980년 2월 29일 정부는 윤보선과 김대중 등 687명을 복권시켰다. 그 전인 1월 29일 최규하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헌의 정부 주도 입장을 천명했다.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은 대통령제와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한 반면,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를 형태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했다. 민주공화당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어갔다. 야권은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와 재야세력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김대중이 신민당 입당을 포기하며 서로 분열하였다. 3월에는 해태제과와 청계피복 노조의 분규가 발생했으며, 4월에는 어용노조위원장 문제로 분규가 야기된 사북탄광 노동자투쟁, 부산의 동국제강의 투쟁이 일어났다. 이후 노동쟁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서울의 봄 시기 전개된 노동쟁의만 809건에 달했다. 1980년 봄 학기가 되자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을 전개해나갔다. 학도호국단 폐지와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투쟁에서 학내문제를 넘어 점차 병영집체 훈련 거부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교수단은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함께 학원 내 족벌체제의 타파를 요구했다.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함으로써 신군부의 정치개입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민주화 세력은 조속한 민주

화 일정 제시와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정치권 또한 임시국회 소집과 정부의 개헌작업 중지를 요구하였다. 민주화의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5월 13일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은 14일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생들의 시위는 격렬한 양상을 보여 전국에서 경찰과 학생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경찰버스가 전소되고 파출소가 파괴되었다. 5월 15일의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3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모인 학생 수만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5일 저녁 서울·경인지역의 총학생회장단은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라는 가두시위 철수 결정을 내렸다. 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는 가운데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 시위를 중단하였으며, 18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의 봄은 끝이 났다.

**【결과】** 서울의 봄을 지켜보고 있던 신군부는 5월 17일 김대중, 문익환을 비롯한 재야 세력을 소요 조종 혐의로 연행했으며,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모든 개헌 일정에 대한 논의나 민주화운동은 금지되었으며, 서울의 봄 기간 동안 분출되었던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신군부가 전면에서 정국을 주도했다.

**【의의】** 서울의 봄이 실패한 요인은 중간층이라고 하는 시민의 호응을 끌어들이지 못한 데에 있었다. 서울역 회군을 결정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데 있었으며,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이 정치권과 대학생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핵심어】** 서울의 봄/신군부/비상계엄 전국확대안/서울역 회군

**【참고문헌】**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박철한, 『사북항쟁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영태, 「5·18항쟁의 배경」, 『5·18 그리고 역사』(도서출판 길, 2008).

**【사진자료】** 520. 198005 서울의 봄 당시 서울역 시위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1980년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항목】** 전국비상계엄 확대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제5공화국 헌법
● 전국비상계엄 확대	제5공화국 출범

**【정의】** 전국비상계엄 확대는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이다.

**【배경】** 10·26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로 민주화운동을 억누르던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12·12군사반란을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보안사령부에 폐지했던 정보처를 부활시키고, 신군부의 정치참여에 대해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회유공작, 이른바 K-공작계획을 실시하면서 집권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4월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임함으로써 군과 민간의 양대 정보기구를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전개】** 4, 5월 민주화운동이 격렬해지던 시기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인사들은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 5월 17일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결의하여 대통령 재가를 얻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렸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신군부는 육군본부를 통해 1980년 2월 18일 중경부대 및 후방 주요 부대에 중경훈련 실시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중경훈련의 실시는 개학과 함께 분출될 가능성이 큰 학생 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31개 대학과 136개 보안목표에 계엄군이 배치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군부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로 김종필, 이후락 등의 기성정치인과 ‘사회불안 조성 및 소요의 배후조종 혐의자’로는 김대중, 문익환 등의 재야인사 26명을 연행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으며, 모든 정치적 집회나 활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당했다. 언론·출판·방송 등에서는 사전검열 조치를 취했으며, 각 대학은 휴교령을 내렸다. 5월 18일 광주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하면서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 시내까지 진주시켜 잔혹하게 진압에 나서며, 시민들을 학살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내각을 조종·통제하는 초헌법적 기

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 행세하였으며 공무원, 기자들을 현직에서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해직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K-공작계획을 통해 언론강제통폐합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소요선동 혐의로 구속한 김대중 등의 재야인사에 대해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서 김대중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반대세력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보여주었다.

**【결과】**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집권을 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5·17조치를 통해서 반대세력과 국민여론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억눌렀으며, 모든 권한과 권력은 1980년 5월 31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 집중되었다. 대통령과 내각은 무력화되었으며, 국회는 사실상 활동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980년 8월 16일 하야했다. 이로써 전두환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의의】** 1995년 12월 15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고, 5·18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5·17쿠데타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5·8내란음모 사건으로 두 전직 대통령과 신군부 인사들을 구속 기소했다. 1997년 4월 대법원 ‘내란수괴’, ‘내란 모의 참여’, ‘반란 수괴’ 등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5·17조치는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2007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17조치를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핵심어】** 비상계엄 전국 확대/신군부/5·17조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고문헌】**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제3권(하)(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권정달 검찰 진술서」 1996.1.4, 1996.1.13, 1996.2.26(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사진자료】** 521. 19800517 비상계엄령 당시 국회의사당 앞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소항목】** 5·18민주화운동

12·12군사반란	● 5·18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제5공화국 헌법
전국비상계엄 확대	제5공화국 출범

**【정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또는 5월광주민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봉기한 민주항쟁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낳았다.

**【배경】** 1980년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따라 제7특전여단이 광주에 배치됐다. 최초 5월광주민주항쟁의 충돌은 18일 아침 전남대 교문 앞에서 등교하던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에서 벌어졌다. 계엄군과 투석전을 벌인 학생들을 계엄군은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과격 한 진압에는 “단호한 조치를 보이기 위해 과감히 타격하라”는 등의 상부의 진압명령이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나 일반시민을 향해 진압봉과 총 개머리판을 사용한 과격한 진압은 학생들과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냈으며, 항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 김대중의 구속 소식은 항쟁 기간 내내 ‘계엄철폐’, ‘김대중 석방’을 외쳤던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항쟁에 가담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했다.

**【전개】** 5월 18일 오전 전남대 앞에서 벌어졌던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시내에서 가두시위를 하자 오후 3시부터 계엄군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로 투입되어 도망가는 시위대와 시민을 향해 대검과 진압봉을 휘둘러댔다. 19일과 20일에는 11특전여단과 3특전여단이 증파되었다. 군이 벌인 잔혹한 학살 수준의 진압은 광주시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렸으며, 많은 시민들이 빠르게 시위대에 합류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21일에는 아침부터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금남로 일대를 가득 메웠으며, 일부 시민들은 아세아자동차에서 장갑차와 버스 등 차량을 끌고 나와 계엄군과 대치 중인 시위대와 합류해 ‘계엄군 철수’를 외쳤다.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10분 동안 일제사격을 가했다. 계엄군의 일제 사격에 무참히 살상 피해를 경험한 시위대는 인근 지역 경찰서 무기고와 탄약고를 털어 자체 무장을 하고 시내로 진출해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오후 4시경 철수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일제히 광주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광주시민은 스스로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며 자율적으로 자치공간을 만들어갔다. 한편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진압작전인 '상무중경작전'을 27일 새벽 1시를 기해 개시하여 도청에 남아 항쟁하던 수많은 시민군을 진압하고 5시 10분경 도청을 완전히 장악했다.

**【결과】** 공식통계로 광주민주항쟁은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4명, 부상자 3,310명 등 총 5,063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학생들이 죽음으로 광주시민의 학살에 대해 규탄하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렸으며, 신군부의 만행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따지며 광주와 부산에 있는 미문화원을 방화하기도 했다. 1995년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2·12사건과 5·18사건 관련자인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7년 대법원은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이자 반란죄로 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유네스코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의의】** 광주민주항쟁은 1980년대 내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현재 국내외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의 자위적 무장항쟁이 국민 저항권의 적극적 행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핵심어】**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계엄군/민주수호범국민궐기대회

**【참고문헌】** 「제3호 '12·12', '5·17', '5·18' 사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최영태, 「5·18항쟁의 배경」, 『5·18 그리고 역사』(도서출판 길, 2008); 정재호, 「5·18항쟁의 전개과정」, 『5·18 그리고 역사』(도서출판 길, 2008).

**【사진자료】** 522. 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금난로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1980년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항목】** 제5공화국 헌법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 제5공화국 헌법
전국비상계엄 확대	제5공화국 출범

**【정의】**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돼 10월 27일 공포 발효된 제8차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으로서 대통령 7년 단임제, 국정조사권 부활,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배경】**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통해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광주민주항쟁을 진압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본격적으로 집권 시나리오를 실행해나갔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8월 21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되어 전두환 장군을 국가원수로 추대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군에서 전역하고, 8월 27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은 9월 1일 취임하자마자 바로 헌법개정에 착수했다.

**【시행】** 헌법개정 준비는 이전 최규하 정부에서 구성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활용했다.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작성 작업을 해오던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을 9월 9일 최종 확정하고, 9월 29일 정부의 공고를 거쳐 10월 22일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그 결과 91.6%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0월 27일 공포 발효되었다. 개정헌법은 대통령 중임을 금지하고, 임기 7년의 단임제를 채택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방식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정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했다. 대통령을 정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놓음으로써 정부에서 분리된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위상지운 유신헌법과 차별화했다.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제한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줄였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던 비례대표제와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부활시켰다. 하지만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국회 연회기일수를 150일로 제한했다. 한, 개정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 보호, 환경권, 평생교육, 적정임금보장, 구속적부심 규정을 신설하고 연좌제를 폐지하였으며, 인권과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불가침성을 헌법에 명시했다. 또한 개인의 신체 구속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고문·협박 등의 방법에 의한 진술의 불인정 등이 헌법에 삽입되었다. 개정헌법에 의한 국회가 개원되기 전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립해 정치풍토 쇄신을 위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칙에 헌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는 규정을 붙였다. 이런 측면에서 신군부는 집권을 위해 기존의 정치질서를 자신의 편익에 따라 재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변천】** 제8차 개정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에 전두환이 선출되었으며,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여야 합의로 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져 제5공화국 헌법은 폐지되었다.

**【결과·의의】**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통령 일부 권한과 신체구속에 대한 규정을 제한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유신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했기 때문에 ‘제2기 유신헌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를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로 변경함으로써 직선제가 아닌 제도의 왜곡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유신헌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비상조치권을 통해 대통령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 더욱이 헌법 시행 초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기존 정당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비정상적인 기구를 수립하여 입법기능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고유 입법과정을 침해했다. 인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하면서도 정권하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고문, 강제수사 등은 헌법의 규정과 배치되었다.

**【핵심어】** 제8차 개정헌법/신군부/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 선거인단/6월민주항쟁

**【참고문헌】** 「제8차 헌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사진자료】** 523. 19791227 신민당사에서 열린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공청회  
524. 19801027 제5공화국 헌법공포식(서울세종문화회관)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1980년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항목】** 제5공화국 출범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제5공화국 헌법
전국비상계엄 확대	● 제5공화국 출범

**【정의】** 제5공화국은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1981년 2월 11일 출범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며, 제5공화국이 출범하기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의해 1980년 8월 27일과 새로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1981년 2월 25일 각각 11대, 12대 대통령에 선출되는 과정을 거쳤다.

**【배경】** 5공화국이 출범하기 전 전두환과 신군부는 사회정화와 숙정작업을 통해 기존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공무원, 언론계, 노동계 정화라는 이름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을 해직시킴으로써 집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였다. 또한 ‘사회악 일소’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에서 사회악 사범 6만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시켜 순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집권에 필요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활용하였다. 국회를 해산시킨 상황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입법권까지 부여받아 각종 악법을 제정하며 제5공화국이 출범하는데 초석을 놓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건전 언론 육성이라는 이름하에 언론통폐합을 단행함으로써 언론을 순화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그리고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민주당 등을 조직하여 형식적인 정당정치를 구축함으로써 집권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취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전개】** 이러한 배경하에서 출범한 제5공화국은 1981년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정의당 151석, 민주한국당 57석, 한국국민당 18석이라는 결과를 만듦에 따라 정국운영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집권 초 유리하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야당은 사실상 정권의 정보기관이 창당을 주도했기 때문에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과 권력 집중은 정통성이 결여된 태생적 속성상 집권 내내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그럴 때마다 강경하게 진압에 나서며 정국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갔다. 국민들은 1985년 2월 12일 제12대 총선거에서 신민당에게 사실상의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긴축정책과 국제유가 하락, 달러가치의 하락, 금리의 하락 등 세계적인 3저상황이 이례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호황국면에 들어서자 물가는 한자리 수로 내려갔으며, 수출 성적 또한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호조에 불구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나 1980년대 말 대기업의 계열회사 증가폭이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커졌다. 또한 시장개방정책으로 인해 값싼 외래 농축산물의 수입을 불러왔고 농촌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사회적으로는 정부가 해외여행·교복 자율화와 같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며 이전 시대와는 다른 정책들을 취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또한 이전 정권에 비해 전향적인 시도가 있었다.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며 남북 당국자 회담을 추진했으며, 이산가족상봉 등의 다양한 남북교류가 시도되기도 했다.

**【결과】** 제5공화국 집권 내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 부재와 시비에 시달렸던 전두환 정권은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거센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압력과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 1987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6월 시민까지 참여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마침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의의】** 제5공화국은 출범하면서부터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집권 내내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등에 강경자세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으며, 국민총생산도 성장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강하게 억누르며 경찰·검찰·안기부 등의 공권력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다만 최초로 대통령 단임제를 실천하고 정권이양을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핵심어】** 제5공화국/국가보위입법회의/민주정의당/언론통폐합

**【참고문헌】**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지병문, 『현대한국정치의 전개와 동학』(박영사, 1997);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2005).

- 【사진자료】** 525. 19810115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5공화국 대통령 후보지명대회  
526. 19810303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전두환대통령  
527. 19890303 전두환대통령 취임식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6월 민주항쟁

**【소항목】**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6·29선언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대통령 직선제 개헌
6·10항쟁	

**【정의】**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에 따라 독재와 반민주적인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투쟁을 벌인 민주화운동을 말하며, 1987년 6월민주항쟁의 토대와 동력을 제공했다.

**【배경】** 5·17비상계엄 확대에 따라 신군부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나갔다. 특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광주민주항쟁을 강경진압한 당국의 탄압을 받아 크게 약화되었다.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규제를 당해서 야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시련을 겪고 있었다. 1982년에 들어서면서 정권은 일련의 유화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82년 김대중이 석방되어 신병 치료차 도미하였고, 1983년에는 정치활동 규제가 되었던 정치인들이 해금되기 시작했으며, 12월 말에는 정치적 이유로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허용조치와 공안사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형 집행정지, 특별복권조치 등의 유화조치가 단행되었다.

**【전개】**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는데 계기가 되었다. 정권은 초기의 비상사태를 벗어나 일련의 자유화·자율화 조치를 시행할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추구했다. 유화국면 속에서 1984년에 들어서면 학생운동은 점차 학원자율화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전두환 정권에 대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노동운동은 학생운동의 지원하에 노동조건 민주화, 노동법 개정 등의 투쟁을 통해 확산 강화되어갔다. 유화조치 이후 해금된 야당 정치인들은 1983년 5월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야당 정치인들은 1984년 5월 18일 ‘11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민주협)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민주협을 중심으로 1985년 1월 18일 신한민주당(신민당)이 창당되었으며, 1985년 2·12총선에서 3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67석을 차지하였다. 선거 이후 일부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입당을 해서 102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되었다. 2·12총선은 민주화의 핵심 요구인 대통령 직선제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유화국면 이후 활기를 띤 민주화운동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2·12총선에 힘입어 재야세력은 1985년 3월 29일 민주화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폭넓은 동맹조직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결성하며 구심점을 만들어갔다. 이에 대응해 당국은 본격적인 강경책을 시도하면서 김근태 전기고문사건, 부천시 성고문사건과 같은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까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다. 1986년에 들어서자 정국은 개헌문제에 휩싸였다. 2월 12일 신민당과 민주협이 공동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결정했으며, 3월 5일에는 민통련이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개헌문제는 강경 입장의 재야와 온건 입장의 신민당 사이의 심각한 노선 갈등을 빚게 만들었다. 갈등은 신민당의 5·3인천개헌추진결성대회를 기점으로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열로 나타났으며, 정권의 강경한 탄압정책이 더해져 1986년 말 무렵 민주화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결과】** 5·3인천대회는 정권의 강경진압으로 끝이 났다. 이후 민통련 산하 4개 단체의 간부들이 지명수배되었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봉을 일으켰다. 서울아시안게임 직후 정권의 강경정책은 더욱 노골화되어 '반제동맹사건', '건대사건' 등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었으며,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이 통일국시 발언으로 구속되었다. 이러한 공안정국은 민주화운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낳았지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에 가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의】** 사회 각 부문 간의 연대활동은 민주화라는 단일 목표 아래서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을 활성화시킨 중요 동력이 되었다. 노선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의 외연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세력이 결집함으로써 1987년 초부터 개헌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

**【핵심어】** 유화조치/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민주협)/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참고문헌】** 윤상철,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당대, 1997);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윤석인, 「1986년 상반기 학생운동 내부논쟁 개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죽산, 1989).

**【사진자료】** 528. 19870610 정의구현사제단의 명동성당 집회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전시항목】** 6월민주항쟁

**【소항목】**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6·29선언
●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대통령 직선제 개헌
6·10항쟁	

**【정의】**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6월민주항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배경】**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이 분출하자 1985년 전두환 정권은 유화정책을 강경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2·12총선을 통한 강력한 신민당과 민통련의 등장,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구로동맹파업은 정권에 위기감을 불러왔다. 이어 부천시 성고문사건,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에 대한 전기고문사건이 터졌다. 1986년 5월 3일 당국은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결성대회에 대해서도 강경진압으로 대처했다. 정부의 강경정책은 1986년 10월 ‘건대사건’에 이르러 절정을 이뤘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과도한 강경책은 마침내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의 고문치사사건을 낳았다.

**【전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 박종철은 1987년 1월 공안 당국에 의해 수배된 고교 동창 박종운과의 연계활동 조사로 1월 14일 오전에 연행되었다. 공안당국은 박종운의 소재를 취조하면서 폭행과 함께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했다. 고문 끝에 박종철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1987년 『중앙일보』 기자가 검찰 간부의 “경찰, 큰일 났어”라고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 말에 단서를 잡고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기사를 15일 내보내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오전 10시 50분경 신문을 시작해서 30분만인 11시 20분경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쓰러져서 인근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고 사건경위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초 검안에 참가한 의사의 진술을 확보한 『동아일보』는 물고문 가능성을 보도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물고문 끝에 질식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발표되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범국민추도식 및 시위가 벌어졌다.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이 벌어졌다. 1987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도미사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은폐에는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의 주도 아래 구속된 2명의 경찰관

외에 세 명이 더 있으며, 구속된 2인 외 3명은 계속 경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으며, 5월 23일에는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6월 10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6월 10일 대규모 규탄집회가 열리며 6·10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결과】** 사건 직후 물고문 사실이 드러나자 당국은 신문에 관여했던 두 명의 경찰을 구속하고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을 교체했다.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축소 은폐 조작의혹이 발표되자 전두환 대통령은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5월 26일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사건에 관여한 박처원 치안감을 비롯하여 6명을 더 구속하는 등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16일 미국은 즉각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으며, 2월 7일에는 미 상원의 디콘시니 의원이 고문치사사건을 비난하며 한국민주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의의】**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6월항쟁의 첫 번째 계기가 되었으며, 뒤이은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선언이 맞물려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민주화운동세력과 국민들을 결집시키게 되었다. 더욱이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축소, 은폐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권의 폭력성과 도덕성의 결함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핵심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4·13호헌선언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7년 1월 15일~1월 20일; 「대학생 경찰 조사 받다 사망」, 『동아일보』 1987년 1월 16일; 「수사 경관 2명 검찰 소환 방침」, 『동아일보』 1987년 1월 17일; 「박종철 군 사건은 조작됐다, 정의사제단 “범행경관 따로 있다” 주장」, 『동아일보』 1987년 5월 19일;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사진자료】** 529. 19870207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추모집회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소항목】** 6월민주항쟁

**【소항목】** 6·10항쟁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6·29선언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대통령 직선제 개헌
● 6·10항쟁	

**【정의】** 6·10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6월항쟁, 6·10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6월민주화운동으로도 불린다.

**【원인·배경】** 1985년 하반기부터 강경책으로 전환한 전두환 정권은 1986년 아시안게임 직후 더욱 강경일변도로 나왔다. 그러한 가운데 1987년 1월 14일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터졌다. 고문으로 박종철 군이 사망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3월 3일 49재에 맞춰 대규모 추모집회를 열었다.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모든 개헌논의를 유보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4·13호헌조치는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5월 18일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가 명동에서 열릴 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및 조작을 폭로하였다. 정권의 은폐 시도를 접한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급속히 커지는 가운데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가 결성되면서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를 확대,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구체화되어갔다.

**【전개】** 6월 10일은 민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날로서 이날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루 전인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 빈사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은 6월 10일 대회에 더욱 결집하게 되었다. 6월 10일 오후 6시를 전후하여 성공회 대성당에서 국민대회식이 거행된 가운데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는 대규모 항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날 시위에는 퇴근길의 시민들까지 합류해서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고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 명이 참여했다. 한편 10일 저녁 시위 도중 명동성당으로 밀려들어간 수백 명의 시위대는 이후 15일까지 농성투쟁을 벌이며 6·10항쟁을 지속시키고,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 시위에는 신부와 수녀, 천주교 신자, 근처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6월 18일에는 전국적으로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가 개최되어 항쟁을 이어나갔다. 6·10국민대회보다 참여자가 크게 증가한 이날 대회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150만 명이 참여했다.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19일 난국 타개를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했고, 국본은 20일 4·13호헌조치의 철회, 양심수 전원 석방,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 중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19일은 호남권에서 시위가 격렬해졌다. 20일 밤 광주시위는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6월 23일 국본이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김영삼 총재와 전두환 대통령 간의 24일 회담이 결렬되자 야당 역시 대행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6월 26일 국민평화 대행진에는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여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두환 정권에게 직선제 수용 등 민주화의 마지막 압력을 가했다.

**【결과】** 20일간 국민들의 거센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4·13호헌조치를 고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8개항의 시국수습 특별방안을 발표했다. 직선제 수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으로 20일간의 민주항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의의】** 6월민주항쟁은 4월혁명 이후 최초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 군사독재정권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시민항쟁의 모습을 띠었다. 이로 인해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었으며, 출판·결사·집회·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정착되어 민주주의 이행의 첫 단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핵심어】** 6·10항쟁/박종철/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4·13호헌조치/6·29선언

**【참고문헌】** 윤상철, 「6월민주항쟁의 전개과정」,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당대, 1997); 이영제, 「6월항쟁과 민주주의 이행」, 한국정치연구회 편, 『다시 보는 한국 민주화운동』(선인, 2010);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당대비평사, 2011).

**【사진자료】** 530. 19870610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허수아비 화형식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소항목】** 6월민주항쟁

**【소항목】** 6·29선언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 6·29선언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대통령 직선제 개헌
6·10항쟁	

**【정의】** ‘6·29선언’은 1987년 6월민주항쟁 직후인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야권과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총 8개항의 특별선언이다.

**【배경】**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 6·10항쟁 기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6여 개 시·군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연령층이 참여를 하였으며, 특히 일명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들과 주부들까지 참여하면서 정권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항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은 강은 양면정책으로 이에 대응했다. 한편으로 4당 대표회의, 여야 영수회의 등을 제안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민주당은 6·10 관련 구속자 석방,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의 연금 해제, 민정당의 일방적인 정치일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정당은 18일 조건 없는 노태우·김영삼 회담의 추진, 4·13호헌조치가 유지되는 선에서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부터 시위 참여자가 크게 늘어나고, 참여 지역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전두환 대통령 간의 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으며, 6월 26일에는 국민평화대행진이 전국 36개 시·군에서 일제히 열리는 상황을 맞았다.

**【전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6월 29일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담은 ‘6·29선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6·29선언’의 시국수습방안 8개항은 1.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 2.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 사면·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 석방, 4. 국민의 기본권 강화, 5.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언론기본법 폐지와 제도 정비, 6. 지방자치제 및 대학 자율화·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이다. 이를 뒤인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6·29선언’의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고 천명했다.

**【결과】** ‘6·29선언’에 따라 7월 10일 정부는 김대중 등 2,335명을 사면 복권시키고 357명을 석방했으며, 270명을 수배에서 해제했다. 이어 7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여야 각 4인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을 구성하고 100여 개에 달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서 개헌안 전반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29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헌법에는 ‘6·29선언’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며, 특히 언론기본법의 폐지로 인해 1988년 『동아일보』·『조선일보』 해직기자들을 중심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6·29선언’ 이후 6월민주항쟁에서 얻은 성과로 인해 민주주의는 대세를 이루었다. 9월 5일에는 방송금지곡 500여곡이 해금되었으며, 판금되었던 도서도 431종이나 해금되었다. 이어서 민주화 열망과 함께 1987년 7, 8, 9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7월 중순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은 8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당시 투쟁의 목적은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자율적 노동조합 인정 등 현장에서의 기본권이 주를 이루었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일어난 투쟁은 8월 28일 이후 공권력이 쟁의현장에 투입되면서 9월 들어 일단락되었다.

**【의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집권여당 대표이자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이 선언으로 헌법개정이 불가피했다. 개헌으로 유신체제부터 15년간 지연되었던 입헌민주주의와 직선 대통령제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핵심어】** 6·29선언/노태우/4·13호헌조치/대통령 직선제/6·10항쟁

**【참고문헌】** 윤상철, 『6월민주항쟁의 전개과정』,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당대, 1997);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당대비평사, 2011); 노태우, 『전환기의 대전략, 노태우 회고록(上)』(조선뉴스프레스, 2011).

**【사진자료】** 531. 19870629 6.29 선언 발표에 관한 신문호외를 보고 기뻐하는 시민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소항목】** 6월민주항쟁

**【소항목】**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6·29선언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 대통령 직선제 개헌
6·10항쟁	

**【정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일어난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접 선출에 관한 제9차 헌법개정이며,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6·29선언’으로 수용하였다.

**【배경】** 1985년 2·12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제5공화국 집권 후반기는 직선제 개헌이 주요 쟁점이자 민주화를 위한 최소 조건이었다. 1986년 초부터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 유보, 국회 합의 하 개헌, 호헌조치와 같이 세 차례나 개헌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야당과 재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해 범국민 개헌서명운동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 싸우거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1987년 4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의 이른바 ‘4·13호헌’ 선언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야당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이에 전국민적인 저항 시위가 이어졌으며, 마침내 6월민주항쟁으로 전개되었다.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담은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인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시행·내용】** 헌법개정에 관한 협상을 위한 개헌안 시안은 여야가 각각 마련하여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헌법학 교수 12인도 헌법개정안 시안을 제출하고, ‘민주헌법국민운동본부’도 개헌요강을 제출하는 등 다수의 사회단체들이 시안을 제출했지만, 개헌협상은 양당이 제출한 시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협상은 7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된 여야 각 4인이 참여하는 ‘8인 정치회담’에서 진행했다.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을 얻어 29일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 개정된 헌법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개정사안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선출방식의 변화이다. 전문에는 4·19혁명 정신계승과 ‘조국의 민주개혁’이 언급됨으로써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있

어서는 인권 향상을 기하기 위한 규정들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제를 금지하여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다.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이 명시되었으며 모성보호권이 신설되었다. 노동삼권의 강화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노동삼권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처음으로 재해예방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권력분립에서도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삼권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특히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없애버렸다. 국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권이 신설되어 기존의 국정조사권과 함께 행정부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부에서는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삽입하여 사법부가 대통령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헌법재판소 신설은 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결과·의의】** 개정된 헌법에 따라 민주화 이행의 첫 선거인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1987년 12월 16일 실시되었다.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출마, 경쟁한 끝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6월민주항쟁의 성공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시키고 인권, 여성권,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시하였으며,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핵심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6월민주항쟁/6·29선언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제9호, 제1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당대비평사, 2011).

**【사진자료】** 532. 198712 대통령 직선제 개헌합의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1980년대 민주화운동	남북관계의 명암
● 민주주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산업화와 민주화는 한국사회의 구성을 변화시켰다. 80년대 이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일정 수준에 달한 중산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산층의 성장은 곧 다양한 여가생활과 더 나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려는 욕구로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중산층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등산·골프·수영 등 동호회 활동 등의 여가생활은 제5공화국의 일련의 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해외여행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1981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던 통행금지 해제조치는 국민들의 활동시간을 늘려 좀 더 여유로운 시간관리를 통해 삶을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자유화는 시민의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 표현과 함께 주체적인 정치의식을 함양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6월민주항쟁에 넥타이부대라고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민주화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군인에 의한 통치를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탈권위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데도 고양된 정치의식이 크게 기여를 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키며, 권력에 대한 감시에 나서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정의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에 나서거나 직접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중산층의 성장

**【소항목】** 중산층의 성장

● 중산층의 성장	중산층 문화의 형성
-----------	------------

**【정의】** 중산층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하여 경제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자나 농민들의 수준을 훨씬 넘는 여가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집단으로 1970년대 및 80년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배경】** 중산층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서 그 규모는 달라진다. 경제생활의 안정성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에서도 안정성을 획득했을 때 확보된다. 그러므로 중산층은 일정수준의 소득과 주택과 생활용품(컴퓨터, 자동차, 냉장고 등)을 소유한 집단이다. 대체로 중간계급(경영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종사자)과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시자영상인과 농촌 자영농)가 이러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수출지향적 생산을 근간으로 한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그에 수반된 도시화, 직업분화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해 한국 사회구조를 크게 변형시켜왔다.

**【전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1970년에 26%를 차지하던 농업활동의 비율이 1990년에 9%로 줄어든 사실에서 보이듯이 농업 중심의 사회가 산업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고 더불어 서비스 분야도 팽창해왔다는데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한국 중산층에서 전문가, 지식인, 언론인, 사무직 등 비육체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55년 4.8%에서 1985년 21%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는 비농업 자영업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5년 7.5%에서 1985년 21%로 증가하였다. 자영업 활동의 대부분은 상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져왔지만, 가장 괄목만한 성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났는데 그 대다수는 대기업과 연계된 소규모 하청 생산 활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결과】**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산업 현장으로의 대대적인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교육받을 기회 역시 대폭 향상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전문적 기술을 가진 상대적으로 젊고 현대적 감각의 인재들이 전략적으로 점차 여러 사회 조직과 기관에서 기반을 확대해왔다. 이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도시화 수준의 경우 1960년에

28.5%였던 것이 1990년에는 74.1%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교육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유교적 전통과 빠른 산업화 과정이 맞물리면서 교육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1960년에 35%였던 중등교육기관의 입학률이 1980년대에 이르러 거의 80%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산층의 규모는 산업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큰 규모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 범주를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중산층은 직업, 교육수준, 소득, 주택 등에 따라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은 핵심적 중산층 42.6%, 주변적 중산층이 29.4%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80년 대 이후 IMF 사태가 터지기 전 한국사회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산층의 전체 인구의 70% 가량 이었다.

**【의의】** 1988년 올림픽 이후 자유화가 크게 이루어졌고, 자동차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여가생활과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중산층은 성장하였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리매김을 하게 된 중산층이 1987년 민주화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40년여 간 이어져 온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핵심어】** 생활수준/직업적 지위/교육수준/중산층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김성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 중산층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신광영, 「중산층의 위기, 표준과 상승의 몰락」, 『당대비평』 24집(당대비평, 2003); 조동기, 「한국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사회학회 제3차 포럼 발표집』(한국사회학회, 2005).

**【사진자료】** 533. 아파트 분양추첨장에 몰린 1만여 인파

534. 결혼을 앞두고 혼수품을 고르는 젊은 남녀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중산층의 성장

**【소항목】** 중산층 문화의 형성(여가생활의 확대)

중산층의 성장	●중산층 문화의 형성
---------	-------------

**【정의】**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고도화, 개인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중산층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영역이 급속하게 팽창하여 대중소비시대, '마이카-외식문화-여가'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면서 중산층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배경】** 한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고도성장과 압축적 근대화과정을 경험하면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중소비시대로 진입하였다. 소비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중산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제조업의 생산노동자를 포함한 임금노동자가 크게 증대하게 되었다. 특히 3차산업의 발달은 사무직종의 신중간계급을 양적으로 크게 팽창시켰으며, 정부부문을 비롯한 조직부문의 확대에 의해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와 동시에 중산층의 성장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여가산업을 향유할 여력이 생겨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전개】** 이처럼 중산층의 성장은 중산층만이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선 여가생활은 해외여행, 주말여행, 도시형 레저가 세 축을 이루었다.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자,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이 되었으며, 주말에는 가까운 근교로 놀러가 한 주일의 스트레스를 푸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였다. 도시형 레저는 골프, 수영, 테니스 같은 건강유지형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취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가격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하며 헬스, 운동 등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품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가치소비 성향을 드러내는 특징을 중산층 문화는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중산층의 약 59%가 '능력이 된다면 해외여행이나 골프를 즐기고' 싶어 하며, 55%가 '가격보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사문화를 살펴볼 경우 더욱 잘 드러난다. 식사문화에 있어서는 식도락 지향형으로 바뀌었다. 우선 값이 좀 비싸더라도 서비스가 좋은 곳을 찾았다. 운동 이후에 식사를 하는 활동형 식사가 증가하고 가족동반 외식이 점차 고급화, 패션화되고 있었다. 경제적인 여유와 동시에 생활상의 여유가 끼친 새로

운 현상이었다.

**【결과】** 여가생활 선용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면 ‘가족과 함께 영화관람’을 많이 하고 있다. 영화와 대중음악과 같은 대중문화공연의 관람은 중산층에게 있어 오페라, 연극, 클래식 음악회와 같은 고급예술에 비해 성장기부터 많은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람빈도를 살펴보면 영화관람의 경우 하층계급이 연평균 약 2회로 나타난데 비해 핵심적 중산층이 약 6.1회, 주변적 중산층이 약 3.6회를 관람하는 것으로 보아 중산층 문화의 핵심으로 영화관람과 같은 여가생활 선용이 큰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산층 문화의 한 특징으로 의료서비스의 이용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형태가 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을 찾는 치료중심형 의료서비스인데 반해, 중산층의 경우 헬스·골프·수영·테니스와 같은 건강유지형 운동을 즐기고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여행과 같은 레저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예방중심 의료서비스를 주로 추구한다. 즉 종합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건강에 대한 자문을 자주 구한다는 점에서 서민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의】** 중산층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중산층 문화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억눌렸던 소비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1980년대 후반 과소비 열풍을 일으켰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기도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핵심어】** 중산층의 성장/여가생활/해외여행/영화관람/예방중심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94); 김성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 중산층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신광영, 「중산층의 위기, 표준과 상승의 몰락」, 『당대비평』 24집(당대비평, 2003); 남은영, 『한국사회 변동과 중산층의 소비문화』(나남출판, 2011).

**【사진자료】** 535. 19861217 입시에서 해방 된 학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모습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각 부분의 자유화, 민주화 조치

**【소항목】** 통행금지 해제

● 통행금지 해제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지방자치제 실시
평화적 정권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정의】** 통행금지는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야간통행금지를 일컫는 말로 해방 후 미군정 시기부터 발효되다가 1982년 1월 5일 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37년 만에 폐지되었다.

**【배경】**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 이후로 미 군정청이 공포한 <미군정 포고 1호>에 의해 근거, 서울과 인천에서 밤 8시(20:00)에서 익일 새벽 5시(05:00)까지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었다. 6·25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정부는 6·25전쟁이 끝난 뒤 1954년 4월 내무부 고시 제195호로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통금규정(제1조 제43호)을 만들었다. 안보가 불안하므로 치안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에 따라 1954년 7월 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이 단축되었다가 그 후 0~4시로 4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당시 통행금지는 신정 연휴기간, 광복절, 크리스마스, 제야의 밤 등 특별한 날에만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 통행금지 시간에 통행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해지고, 경찰서 보호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밤 11시(23:00)~12시(00:00)에는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전개】** 야간통행금지는 처음 발효된 후 여러 차례 폐지가 논의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통행금지는 유지되다가 1964년 이후 제주도가 해제되었고, 이듬해인 1965년 충청북도가 해제되었다. 1966년에는 수출산업과 관련된 수송 수단과 일부 관광지가 해제되었다. 통행금지해제는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야간활동 금지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였다. 1988년 열릴 서울올림픽도 영향을 미쳤다. 1981년 11월 19일, 여야는 이른 시일 안에 접적(接敵) 지역과 해안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야간통행 금지를 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합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은 여당이 주도했다.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19층 중식당에서 중진 회동이 시작되자 통금해제안을 갑자기 꺼냈다. 이 건이 없어 4분 만에 논의가 끝났다. 당정이 여러 차례 협의를 마친 뒤라 시기를 정하는 일

만 남았다.

**【시행·변천】** 당시 신문을 들춰 보면 통금해제 이후를 불안해하는 제목이 적지 않게 보였다. “길어질 밤… 기대와 걱정, 청소년 선도 어려워져, 남편 귀가 늦을까 걱정이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범죄가 늘지 않고 시민 귀가가 오히려 빨라졌다는 제주와 충북의 사례를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기사도 등장하였다. 정부에서 논의된 후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하여 전방 휴전선 부근지역과 일부 해안 취약지구 등 안보 및 치안상 특수한 지역인 총 52개 군의 292개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1982년 1월 5일부터 일제히 해제되었다. 그 후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 1945년 9월 이후 무려 37년 만의 일이었다. 비록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자유화조치의 일환이었지만, 해방 후 단 한 번도 폐지되지 않은 야간통행금지 해제는 역사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의의】**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와 치안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의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24시간 조업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농·수산물의 이른 시간의 경매가 가능해졌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으로 향락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핵심어】** 통행금지/야간통행금지해제/통금규정

**【참고문헌】**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동아일보』, 「【책갈피 속의 오늘】 : 1981년 국회 야간통행금지 해제 건의」(동아일보사, 2008.11.8일자 기사); 서은주, 「한국적 근대'의 풍속」, 『상허학보』 제19집(상허학회, 2007); 강만길 외, 『한국사』(한길사, 1994).

**【사진자료】** 536. 198201 통금해제로 인해서 인기를 끄는 포장마차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각 부분의 자유화, 민주화 조치

**【소항목】** 정치민주화(권위주의 청산)

통행금지 해제	경제민주화
● 정치민주화	지방자치제 실시
평화적 정권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정의】** 1987년 6월항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후,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시작된 6공화국 시기에 실시된 권위주의 청산을 말한다.

**【배경】**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87년이 되자 전두환 정권은 정권 이양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해야 했다.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해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불러왔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민주화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은 6월항쟁으로 불리는 민주화투쟁에 굴복하여 6월 29일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시국관련 사범 석방, 인권침해 시정, 언론창달, 지방자치 실시, 대학자율화와 교육자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6·29선언을 내놓았다.

**【전개】**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고, 민주주의는 대세가 되었다. 9월 5일에는 「아침이슬」 등 방송금지곡 500곡이 해금되고, 10월 19일에는 판금도서(금서) 650여 종 중 431종이 해금되었다. 노태우의 6·29선언에 따라 7월 10일 정부는 김대중 등 2,335명을 사면 복권시키고, 357명을 석방했으며, 270명을 수배에서 해제했다. 10월 12일에는 여야 공동 발의로 제출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및 대통령 5년 단임제 외에도 언론·출판의 허가·검열 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등 기본권이 강화되었고, 노동삼권을 보장했으며,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했다.

**【결과】** 1987년 이후 몇 년 동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된 시기였다. 노태우 정권은 인맥 상으로 신군부를 계승하였지만, 권위주의 청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1988년 1월 신군부는 광주 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이나 처벌은 회피했지만,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5공청문회가 개최되어 전두환이 구속되고, 백담사로 은둔을 떠나게 되었으

며, 신군부 비리의 진상을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소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6·29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1991년 3월에는 구·시·군 의회선거를, 6월에는 시·도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선거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조종을 고한 지 꼭 30년 만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6월 노태우 정권이 약속을 어기고 보류했던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줄곧 야당에 몸담다가 신군부와 유신잔당의 동거인 민주자유당 체제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하나회 소속 군인들을 숙정했고, 국가안전기획부도 개혁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고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했다. 1994년 3월에는 전교조 교사 1,000여 명을 4년 만에 복직시켰으며, 지방자치선거를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 정치민주화에 희망을 갖게 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폭로되자, 이들을 구속하고 5·18특별법, 공소시효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의의】** 5공화국이 무너진 후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제정과 5·18특별법, 전·노 재판은 1949년 반민법과동, 1960, 1961년 장면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고, 비슷한 시기의 남미의 군사독재 처리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그렇지만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단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주민주화운동, 12·12쿠데타, 5·17쿠데타의 진상규명도 미흡했다.

**【핵심어】** 6·29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지방자치 선거/하나회 숙정/5·18특별법

**【참고문헌】** 이현희, 『(이야기) 한국사』(청아, 2006); 궂 소사이어티, 『대한민국 60년: 성찰과 전망』(지식산업사, 2008); 김영호 등, 『건국 60년의 재인식』(기파랑, 2008).

**【사진자료】** 537. 6·10 항쟁과 관련 혐의자들의 석방을 맞이하는 김영삼,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각 부분의 자유화, 민주화 조치

**【소항목】** 평화적 정권교체

통행금지 해제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지방자치제 실시
● 평화적 정권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정의】** 1997년 12월 18일에 열렸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배경】**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후보를 결정한 곳은 ‘새정치국민회의’였다. 김대중 후보는 1997년 5월 19일 정대철 부총재를 누르고 무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자민련에서도 6월 24일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다. 신한국당 경선에서는 이회창과 반이회창 구도가 일단 성립되었다. 7월 21일 이회창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따돌리고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다. 경선 이후 신한국당은 내분에 휩싸였고, 경선결과에 불복한 이인제가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편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0월 26일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에 김대중, 총리에 김종필’이라는 ‘공동정권 구상’이 성사되었다.

**【전개】** 11월 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은 ‘야권후보단일화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총재를 단일후보로 추대한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여기다가 7월 24일 포항 북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태준 전 포철회장도 야권단일화에 동참하였다. 한편 조순 전 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은 입지가 좁아지자 신한국당과 합당을 하고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하였다. 대통령 후보는 이회창, 총재에 조순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대선정국은 이회창-김대중-이인제의 3자 구도가 정립되었다. 3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전의 기본 쟁점은 정권교체와 3김청산, 그리고 세대교체였다. 김대중 후보가 일찍부터 내세운 ‘수평적 정권교체론’과 자민련의 ‘내각제를 위한 정권교체론’이 접목되어 김대중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정권교체’가 되었다. 이회창 후보는 “내각제는 3김시대의 연장을 위한 야합의 도구”라면서 ‘3김청산’을 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이인제 후보는 “한나라당도 3김정치의 유산에 따른 수구정당이며 내각제에 동조할 세

력"이라며 진정한 3김청산은 '세대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 92년 YS의 대선자금과 DJ비자금, 11월말에 터진 외환위기 문제가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군 주요한 공방거리로 등장하였다.

**【결과】**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는 커다란 잡음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다. 선거결과는 김대중 후보가 40여만 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승리하였다. 전체 유권자 3천 229만 416명 가운데 2천 604만 2천 633명이 투표를 해 80.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40.3%인 1천 32만 6천 275표를 얻어 38.7%인 993만 5천 718표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1.6%인 39만 557표 앞섰다.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이였다. 이것은 이인제 후보가 492만여 표를 획득하면서 경남지방 표를 분산시킨 것이 가장 큰 변수였다.

**【의의】**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간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핵심어】** 평화적 정권교체/김대중/이회창/김종필/이인제

**【참고문헌】**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삼인출판사, 2010); 임영태, 『대한민국 史: 1948~2008』(들녘,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info.nec.go.kr](http://info.nec.go.kr).

**【사진자료】** 538. 19980225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김대중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각 부분의 자유화, 민주화 조치

**【소항목】** 경제민주화(금융실명제)

통행금지 해제	●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지방자치제 실시
평화적 정권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정의】**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배경】**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비리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었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1988년부터 한국 정부는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시행】**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인 긴급재정 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73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은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 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1993년 8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명령을 심의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었다. 이 조치로 시행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2.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3.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한다.

**【변천】** 실시 후 한동안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유연한 통화공급으로 우려되었던 유동성 과다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유동성은 약 0.3~0.6%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사건의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금융실명제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가 실시되었다.

**【결과·의의】** 금융실명제의 실시 효과는 우선 비실명제의 경제활동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투기성 자금, 부정·부패자금 등의 활동 통로가 되어 실물경제의 발달을 저해하였으나,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 국가재정 확보가 쉬워졌다. 궁극적으로는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제에 끼친 부작용도 나타났다. 먼저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주가가 폭락하였다.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비밀리 자산을 보존하고 싶은 세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또한 대부업체 등 사금융시장이 위축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핵심어】** 금융실명제/긴급재정 경제명령 제16호/금융실명제의 실시 효과

**【참고문헌】** 임영태, 『대한민국사: 1948~2008』(들녘, 2008); 백용호, 『금융실명제』(비봉, 1993); 진광명, 「한국의 금융실명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회, 199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content.archives.go.kr](http://content.archives.go.kr).

**【사진자료】** 539. 금융실명제 실시 후 상업은행 명동지점을 방문한 홍재형 재무장관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각 부분의 자유화, 민주화 조치

**【소항목】** 지방자치제 실시

통행금지 해제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 지방자치제 실시
평화적 정권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정의】**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주화 이후 1995년 6·27지방선거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배경】** 건국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1952년에 와서 비로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장면정부(1960~1961년)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도하였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임시조치법이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에 시행되면서 지방 자치제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 때까지 유예하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고,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었다. 1987년 헌법에 와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그 실시가 1992년 6월 30일까지로 법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지연되었다.

**【시행】** 여야 합의에 의해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기초의회 선거 결과는 당선자 4천 303명 중 민자당 1천 975명(48.7%), 평민당 734명(18.1%), 민주당 25명(0.6%), 무소속 1천 321명(32.6%)로 나타났다. 무소속 가운데 80%가 친여성향이었기 때문에 75% 이상을 여권이 장악하였다. 광역의회 선거는 평민당이 재야세력 일부와 통합해 신민당으로 개편된 후 6월 20일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민자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광역선거 이후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였고, 결국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만인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날 선거는 광역지방자

치단체장,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의원 등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선거였다.

**【결과·의의】** 1995년 지방선거 결과는 한 마디로 민주당의 압승과 자민련의 약진, 민자당의 참패로 요약할 수 있었다. 광역단체장은 15개 가운데 민자당 5(부산, 인천, 경기, 경남, 경북), 민주당 4(서울, 광주, 전남, 전북), 자민련 4(대전, 충남, 충북, 강원), 무소속 2(대구, 제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자당은 총 2백 30곳 가운데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1석을 얻었다. 특히 서울은 25명 가운데 2석 밖에 건지지 못했고, 나머지 23석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부산은 민자당이 16개 구청장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하였으나, 경남에서 10곳, 대구에서 2곳만 승리하였다. 만년 여당지역으로 꼽히던 충북에서도 11곳 가운데 4곳만 건졌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23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43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40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국 84개 지역에서 승리해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 자민련도 충남 15개 지역을 싹쓸이하고, 대전은 5개 가운데 4개를 얻어 전체 23개 기초단체장을 수중에 넣었다. 비록 1995년 처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2010년 6월 2일 제6회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방자치제가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핵심어】** 지방자치제/1995년 지방선거/지방자치법

**【참고문헌】** 조재섭, 『한국 지방자치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info.nec.go.kr](http://info.nec.go.kr).

**【사진자료】** 540. 지방자치선거 토론회 장면

541. 19910311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각 부분의 자유화, 민주화 조치

**【소항목】** 해외여행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지방자치제 실시
평화적 정권교체	● 해외여행 자유화

**【정의】** 정부가 1981년 8월 1일자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여권의 단·복수 구분, 부부 해외여행, 연령제한, 관계부처 추천 및 조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여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의 첫 걸음을 열었으며, 1989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배경】**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취했던 자유화 조치의 일환이었다. 1981년 8월 1일자로 여권법이 개정되어 여권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해외여행 자유화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여전히 ‘관광목적의 여권 발급’이 최초로 시행된 때가 1983년이었으나 그것도 만 50세 이상으로 200만원의 관광예치금을 1년 이상 은행에 예치한 사람에 한해 발급했을 정도였다. 1987년에 민주화가 쟁취된 이후 연령제한이 45세 이상으로 낮춰지는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그것이 다시 1988년 1월에는 40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그 해 7월에는 30세로 낮춰지면서 방문횟수를 연 2회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시행】** 전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시대가 개막된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높아진 국제화 수준에 기인한 결과였다.

**【변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8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지만,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하려고 하여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당시 여권 신청자는 한국관광공사 산하 관광교육원, 자유총연맹, 예지원 등에서 수강료 3천 원을 내고 하루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해외에서의 한국인 납북사례와 조총련 활동 등에 관한 안보교육 등을 받고 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을 손에 쥐 수 있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나 연좌제에 걸려 있는 이들은 여권발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각종 분야에서

민주화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해외여행 역시 제한사항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1992년 6월 1일부터 소양교육이 폐지되고, 신원조회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5일이 걸리던 신원조사를 여권발급 신청 시 전산 확인을 거쳐 즉시 끝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해외여행을 위해 나가려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또한 병역 미필자 남학생의 경우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하려면 '해외연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초청장이나 연수허가서'가 있어야 했지만, 1991년 12월 이후 '소속 학교의 총학장의 추천서'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해졌다. 2000년 이후 출신학교장 추천서를 폐지하고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해외 상사주재원 등으로 파견되는 부모와 동거목적 국외여행 허가 시 제출하던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도 부모의 파견 또는 출장명령서로 대신하도록 개선하였다.

**【결과·의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는 전향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 초기에 일부 무분별한 여행객들이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잦았다. 중국에서의 싸늘이 쇼핑, 동남아시아에서의 보신관광과 성매매, 유럽 및 미주 등지에서의 추태관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따라서 해외여행자유화의 부작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행알선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 내무부와 법무부를 통한 여권사범에 대한 단속강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를 통한 외제물품의 과다휴대 반입자에 대한 특별통관 및 고가품 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외무부를 통한 여권발급 심사강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1인당 휴대반입품이 줄고 공항에서의 정밀 검사량이 줄어드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핵심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소양교육/신원조회/추태관광

**【참고문헌】** 김승열, 「해외여행자유화」, 『월간법제』(법제처, 1989); 연합뉴스, 「해외여행 자유화 20년 흥미로운 이슈 ①」(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해외여행자유화 대책」(content.archives.go.kr); 김진택, 「海外旅行自由化에 對한 國民의 意識構造에 關한 調査研究」, 『관광학연구』 제6호(1982).

**【사진자료】** 542. 1991 대학생들의 배낭여행으로 붐비는 김포공항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전시항목】** 각종 시민단체의 형성

**【소항목】** 시민단체의 형성과 활동

● 시민단체의 형성과 활동	
----------------	--

**【정의】** 1987년 민주화 이후 환경보전, 인권, 소비자보호, 경제정의, 정치개혁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선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배경】**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국가권력이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약하였다. 하지만 민주화와 더불어 1987년 제정된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향상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대변하고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결성된 시민단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전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의 힘과 크기에 제약을 받았으며, 때로는 정치사회의 주도로 관변적인 성격을 띠며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부문별로 환경, 교육 등에 특화되거나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는 계몽운동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전개】** 비정부 민간기구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활동해오거나 제한당해왔다.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민간 비정부기구는 권위주의 아래에서 억눌렸던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 전국빈민연합, 가톨릭농민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단체는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활성화되고 확대되었다.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진전됨에 따라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중산층이 확산되어가자 다양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폭발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새롭게 등장한 '신사회운동'은 환경, 경제정의, 인권, 교육, 소비자운동, 교통, 주거 등으로 관심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1980년대 초에 시작한 공해문제연구소가 1989년 공해추방운동연합으로 발전하였고, 이어 YMCA·YWCA 등 역시 환경문제를 위해 활동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모체로 여러 환경단체들이 연합하여 환경운동연합을 결성하였으며, 1994년에는 녹색연합이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경제정의와 불로소득의 척결'을 목표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결성되었으며, 1994년에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성장은 기존의 각 부문

의 이해를 민주화운동, 민족문제, 통일문제와 연결시키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문에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국가정책 수립뿐 아니라 관련 국가기구의 설립까지 유도해냈다. 인권 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등의 활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부패추방운동은 부패방지위원회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대 이후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 뉴라이트가 등장해 시민사회 내 한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교과서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시민단체만 하더라도 200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로 추산될 정도로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활동양상도 다양해졌다.

**【결과·의의】** 시민운동의 다양성과 성장은 민주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현재 시민운동은 정치개혁, 노동자의 권익향상, 환경운동 등에서 더 나아가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대하여 생산운동과 소비운동을 접목시켜나가는 소비자운동도 다양화된 시민운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농산물 살리기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운동이 대표적이 경우이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거시적인 영역에서도 이제는 기존의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시민 스스로 대체하면서 1인 언론이나 시민 간의 연대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스스로 사회건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민운동이 진화하고 있다.

**【핵심어】** 민주화/시민사회/시민단체/시민운동

**【참고문헌】** 유팔무, 「비정부 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한울, 2001); 편집부, 『한국시민사회연감 2010』((사)시민운동정보센터, 2009.12).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1980년대 민주화운동	● 남북관계의 명암
민주주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 민족의 분단은 어느덧 60여년을 넘기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과제라 할 수 있는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실패하고 결국 민족의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열망했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은 실패하고, 좌우대립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분열은 6·25전쟁을 계기로 반공주의 노선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쟁은 한국사회에서는 반공태세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국가존립이 위태롭다는 믿음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상호 불신과 반목 속에서 체제대결을 펼쳐나갔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와 세계정세의 변화로 동서화해 무드가 시작되자 남북한도 대화를 시도하여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당시 남북한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당국자 간 대화의 중단으로 인해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 버렸고, 상호 불신의 벽은 더 높아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이전의 '대화 없는 대결 시대'에서 벗어나 '대화 있는 대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남북회담과 상호교류(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상호방문)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나갔고, 그 결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경제·사회·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과 교류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여러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및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남북 당국자 간 대화의 지속,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유지해 나갔다. 그렇지만 반세기 동안 쌓인 상호 적대와 불신은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북 간의 오랜 적대와 불신, 그리고 여러 정치적 이유로 많은 난관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민족의 통일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작으나마 통일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그 작은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의 상호 적대와 불신을 해소해 나가면서 민족 동질감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

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역사와 과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하겠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남북적십자회담

●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1971년 8월 12일 적십자회담을 처음 개최한 이래 1992년까지 70여 회(본회담 10회, 예비·실무회담 60여 회)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단 한 차례 각기 151명 규모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성사되었을 뿐이다.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십자회담을 계속 개최하면서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이산가족방문단 추가사업과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배경】** 한국정부는 1953년 7월 휴전 이후,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우선 한국정부는 휴전협정 제3조 59항에 의해 진행된 ‘실향난민 귀향협조위원회’ 회의(1953.12~1954.3)를 통해, 북한지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39명을 넘겨준 대신, 한국으로 귀향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내국인은 한 명도 보내지 않은 채, 외국인 19명만을 넘겨주었다. 북한과의 직접 교섭에 실패한 한국정부는 이어 1954년부터 적십자사 국제위원회의 중개를 통한 ‘남북자 송환교섭’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교섭에서도 수많은 남북자 중 377명의 생존을 확인하는 회담만 받았을 뿐 송환에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전개】** 이런 상황에서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를 후인 8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북은 제1·2차 회담에서 남북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주소 및 생사 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왕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과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의 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만을 계속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남북은 1977년 12월까지 본회담(7회) 및 예비

회담 등 25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1984년 9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갑자기 한국의 수재민을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내겠다는 제의를 해왔고, 한국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실무자 접촉을 계기로 3차례의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1985년 5월 27~30일 열린 제8차 본회담에서 8·15광복 40주년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9월 20~23일 남북적십자 총재(한국: 김상협, 북한: 손성필)는 각기 151명씩의 방문단을 거느리고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후 2차례의 본회담이 열렸지만, 1986년 북한이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함으로써 적십자회담도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1988년 7월 13일 대한적십자사회는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1989년 5월 31일 이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한국이 호응하여 4년 만에 남북적십자 간 접촉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결과·의의】**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합의되어 다시 남북 적십자회담이 재개되어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계속 개최하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총 17차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남북이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어】** 남북적십자회담/이산가족 상봉/예술공연단/대한적십자사/조선적십자회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통일부, 『통일백서 2010』(통일부, 2010).

**【사진자료】** 543. 19720830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의 평양 옥류관 만찬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7·4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1970년대 초 미소관계 및 미중관계의 개선 등 국제사회의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한도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당국 간 비밀접촉과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에 기초한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배경】**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여 남북은 1971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개최하였다. 이후 1971년 11월 19일 당시 개최 중이던 제9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한국 대표의 일원인 정홍진이 북한 대표의 일원인 김덕현에게 적십자 예비회담과는 별도의 실무자 간 비밀접촉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은 제9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다음날인 1971년 11월 20일부터 실무자 접촉을 진행하였다. 남북은 1972년 3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친 실무자 접촉을 통해 정치적 대화를 위한 이후락-김영주 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그 후 실무자 간 비밀교환방문을 통해 우리의 중앙정보부장실과 북측의 조직지도부장실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가설·운영에 합의하여 4월 29일 정식 개통을 보았다.

이와 같은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3명의 수행원과 함께 1972년 5월 2일 판문점을 경유, 극비리에 평양 방문길에 올랐고,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김일성과 2차례, 김영주와 2차례 회담을 가졌다. 이후락의 평양 방문 이후 김일성은 비밀리에 박성철을 서울로 파견했다. 박성철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2차례 회담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1차례 예방했다.

**【전개】** 박성철의 방문 기간 중 남북은 이후락-김영주 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후락,

김영주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기 3~5명의 쌍방대표로 구성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동 위원회 안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 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비밀접촉과 상호방문의 결과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을 통일원칙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발표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 상호 중상비방과 무력도발 중지, 다방면의 제반 교류실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 적십자회담의 적극 추진, 남북조절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조절위원회 회담이 병행되어 남북 사이에는 두 개의 협상 통로가 마련되면서 남북화해 무드가 무르익어 갔다.

**【결과】** 그러나 남북한 정부 모두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회담의 진전을 방해했다. 이후 한국정부는 10월 17일 비상조치를 통해 유신체제를 선포했고,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강화했다. 다시 말해 남북한 정부는 남북대화를 계기로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 양측은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고, 1973년 8월 28일 북측이 ‘김대중 납치사건’과 연계하여 대화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남북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의의】**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문서라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성명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대화 없는 대결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 시대’로 전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심어】** 7·4남북공동성명/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후락/김영주/박성철/남북조절위원회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양영식, 『통일정책론』(박영사, 1997).

**【사진자료】** 544. 19720704 남북조절위원회의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남북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1979년 한국의 10·26사태와 12·12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함에 따라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었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1984년 8월 한국의 수해피해에 대한 북한의 물품지원 제의를 전두환 정부가 수락한 이후 진행된 남북대화 기간 중에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 등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배경】**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민족분단이 시작되었고 6·25전쟁까지 겪었으나 1970년대 들어와 세계정세의 변화로 동서화해 무드가 시작되자 남북한도 대화를 시도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나갔고, 그 결과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경제·사회·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과 교류는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전개】**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1972년 7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위한 실무자 접촉을 진행하였고, 1972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남북 양측은 1972년 11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는 한편 이에 근거하여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가 3차례(1차: 1972년 11월 30일~12월 1일, 2차: 1973년 3월 15일, 3차: 1973년 6월 12~13일) 개최되었지만, 양측의 주장과 제의 내용이 엇갈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1973년 8월 28일 북한이 김영주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화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종료되고 말았다.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한국의 제의로 1973년 12월 5일부터 1975년 3월 1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가 번갈아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1975년 5월 30일 열기로 했던 제11차 부위원장 회의를 무기 연기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회담은 완전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회의 중단 4년 만인 1979년 2월 17일 판문점에서는 남측의 조절위원회와 북측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 간의 변칙적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그리고 1979년 10·26사태와 12·12사태로 한국의 정국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북한은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하였다. 1980년 1월 12일 북한은 신현확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는 이종욱 정무원 총리의 서한을 통해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고, 한국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이 성사되었다. 실무접촉은 1980년 8월 20일까지 10차례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제11차 실무대표 접촉을 이틀 앞둔 9월 24일 북한이 성명을 통해 한국 내 정국상황을 이유로 실무대표접촉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직통전화마저 두절시켰다.

한편, 1984년 8월 북한이 한국에 수해물자를 전달한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경제회담은 1984년 11월 15일부터 1985년 11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남북 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1985년 4월 남북국회회담 제안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고, 1986년 1월 20일 북한이 '북남경제회담 북한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대표단,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북한대표단'의 공동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모든 남북대화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남북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결과·의의】**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1980년대까지 여러 차례 남북회담을 진행하였지만,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만 되고 말았다.

**【핵심어】** 7·4남북공동성명/남북조절위원회/남북총리회담/남북경제회담/남북국회회담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강인덕·송중환 외,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극동문제연구소, 2004).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백서』(서울: 국토통일원, 1988).

**【사진자료】** 545. 19730314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 위해 방북한 최규하 남북조절위원을  
맞이하는 북측대표단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92)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1990년 이후 8차례에 걸쳐 1990년 이후 8차례에 걸쳐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배경】** 1980년대 말 세계사적인 '탈냉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는 공세적인 북방정책에 입각한 '7·7선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전개】** 노태우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 노력에 따라 1990년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총리가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총리가 '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수정·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수락함에 따라 성립되었다. 남북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를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1990년 9월 4일부터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되었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90.9.4~7, 서울)부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91.10.22~25, 평양)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공동합의문 내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마침내 제5차 고위급회담(91.12.10~13)에서 합의문을 타결지을 수 있었다.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하고 이를 채택·서명하였으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8~

21, 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남북정치 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개최 장소와 날짜도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제1장 남북화해에서는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을 담고 있고, 제2장 남북불가침에서는 무력 불사용과 무력 침략포기, 의견대립과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에서는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철도·도로 연결 및 해로·항로 개설, 우편·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 설치·연결 등이다.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1992.5.5~8, 서울)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8·15해방 47주년에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9.15~18, 평양)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인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결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한국이 화랑훈련, 한미연합독수리훈련을 실시하고, '93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은 1992년 12월 21~2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거부함으로써 고위급회담은 결국 중단되었다.

**【의의】**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까지는 우선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민족 사회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자는 합의라고 평가된다.

**【핵심어】** 남북고위급회담/「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노태우 정부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통일부, 『통일부 30년사』(통일부, 1999).

**【사진자료】** 546. 19920915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 남북대표단과 취재기자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남북비핵화공동선언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은 1992년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한 선언이다.

**【배경】** 이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에 대한 한국의 해결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2월 18일 현재 “이 시각 우리나라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부재선언을 먼저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 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이유로 더 이상 핵안전조치협정의 서명과 국제 사찰을 회피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전개】**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논의하였고, 남북은 각기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오직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측은 IAEA의 북한 핵사찰 미흡에 대비해 북측은 미군기지 사찰을 위해 상호사찰에 동의했으나, 남북한은 이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본회

의 13차례, 위원 접촉 8차례를 가졌으나 단 한 차례도 상호사찰을 하지 못했다. 결국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한국이 화랑훈련, 한미연합독수리훈련을 실시하고, 1993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은 1992년 12월 21일~2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거부함으로써 고위급회담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도 이행되지 못하였다.

**【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고 의혹받을 행동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평화적 에너지로서의 이용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북핵문제는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국제적인 현안이 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한국 내에 모든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또한 언제라도 미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언에 대해 신뢰나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의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비해 형식·내용·발효절차 등 모든 면에서 격식을 갖춘 공식문서로서, 남북 분단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 이정표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들은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와 담당기구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실천적 지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남북고위급회담/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통일부, 『통일부 30년사』(통일부, 1999).

**【사진자료】** 547. 19911226 남북 비핵화를 위한 판문점 회담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 최고당국자 간의 회담이었으며, 남북 역사상 최초의 정상 간의 합의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배경】**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과 함께 남북 간의 냉전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명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2000년 3월 9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에서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남북한 간의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및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필요한 농업구조개혁 등의 지원을 위한 남북한 정부 당국 간의 협력을 제의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비공개적으로 한국에 특사접촉을 제의하였고, 이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 부위원장 간의 첫 특사접촉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3월 23일과 4월 8일 두 차례의 특사접촉이 추가로 진행된 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2000년 4월 10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고, 5월 18일 제5차 준비접촉에서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른 주요 실무절차 문제를 타결 짓고 ‘남북합의서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5월 31일에는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30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상회담 선발대가 판문점을 경유, 평양에 도착하여 남북정상회담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통신·보도, 의전·경호 등 실

무적인 문제들을 북한 실무진과 협의·확정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할 본질적인 문제는 임동원 대통령특사가 6월 초 평양을 비공개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 확정했다.

**【전개】** 당초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갖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6월 10일 긴급 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적인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해 왔다. 이에 하루 늦춰진 6월 13일,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남측 일행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환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한 직후 첫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주최 만찬 후 밤 11시 20분경 남북 두 정상은 남북공동선언의 문안을 최종 확인하고, 서명·교환하였다. 그리고 6월 15일 0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5개항의 합의를 담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내외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둘째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셋째 이산가족 방문,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넷째 경제협력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다섯째 이상의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당국자 간 대화 개최 등이며, 이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과·의의】**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비밀송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6·15 남북공동선언’

####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 (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통일부, 『통일백서 2001』(통일부, 2001).

**【사진자료】** 548. 20000613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남북적십자회담	●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4일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어 노무현-김정일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성을 넘어, 양 정상의 협의가 구체적이고 실무화하는 경향을 보여 준 것이었다.

**【배경】**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다. 원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기로 하였으나,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여 한 차례 연기되었다. 또 2000년 열린 6·15남북정상회담에서 다음 정상회담 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개】**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일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의 공유와 남북관계의 미래 구상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8개항(별항 2항 포함 시 총 10항)의 합의를 공동선언 형식(10·4남북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다.

10·4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그 의지를 반영하여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간다.

③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④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순조

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를 건설하며,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또 개성공단의 2단계 건설에 착수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보완하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

⑥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하여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고 서울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한다. 또 2008년 북경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하여 참가한다.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한다.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⑨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 총리회담을 2007년 11월에 개최한다.

⑩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

**【결과】** 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회담으로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렸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1일에는 문산~판문역을 운행하는 개성공단 화물열차가 개통되었다.

**【의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전시켜 온 7년여 간의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부분별로 선언적 수준에 머물거나 또는 실천적인 강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핵심어】** 제2차 남북 정상회담/노무현, 김정일/10·4남북공동선언/남북총리회담

####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부, 『통일백서 2008』(통일부, 2008);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사진자료】** 549. 20071003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남북교류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남북한 정부수립 후 한반도 긴장완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남북한 간의 교류를 의미한다.

**【배경】**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1971년 8월 12일 적십자회담을 처음 개최한 이래 1988년 한국정부가 ‘7·7특별선언’을 발표하기 전까지 당국자 간 회담과 적십자회담만이 이루어져 왔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7·7특별선언’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지원하고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을 더 이상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

특히 7.7특별선언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기능주의적 인식에 따라 이를 위한 실천 조치들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천 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개】** 이를 기점으로 남북 간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보면, 1988년 건수로는 4건, 금액으로는 1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 규모가 1992년에는 건수로는 400여 건, 금액으로는 2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100~200배나 급증하였다. 또한 사회문화계의 대북접촉도 시작되었다. 종교계의 합법적 방북을 비롯해 학술·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남북 직접 교류사업으로 1990년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통일음악회’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의 접촉은 직접적인 왕래보다는 제3국에서의 접촉 형태로 교류가 주로 진행되었다. 뉴욕의 ‘남북영화제’(1990.10), 일본의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대회’(1990.8), ‘환동해 국제예술제’(1991.5), 북경

의 '남북코리아 서화전 및 세미나'(1991.5), '제4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1992.8), 사할린의 '남북통일전통미용풍속제'(1991.8), '통일예술축제'(1992.8) 등이 열렸다.

체육 교류는 남북 간에 이념 갈등이 적고 동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협력분야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분야이며 교류협력의 실현 가능성도 높은 분야이다. 1990년 10월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4)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6) 등에 남북은 단일팀으로 출전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라 할 수 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선 언론분야에서 2000년 9월 북한 조선중앙 TV와 KBS가 처음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공동제작하고 생방송을 했다. 백두산·한라산·KBS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3원 방송이었다. 다시 한 달 뒤인 10월 SBS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29명의 특별취재단을 평양에 파견, 주체탑 앞에 별도로 설치한 세트에서 생방송으로 'SBS 8시 뉴스'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북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남북 교역 규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3억 달러에도 못 미치던 남북한의 총 교역 규모가 2003년에는 7.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위탁가공 교역 또한 1.8억 달러로 증가함으로써 남북한 공동생산이 정착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 주었다.

이밖에 종교·스포츠·예술문화·학술 등 사회문화 교류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평양소년예술단 서울공연(2000.5),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2000.6),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2000.8) 등이 이루어졌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평양 통일탁구경기대회(2000.7),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2000.9), 금강산 성화채화(2000.10),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대표단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결과】** 이렇게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한 당국자 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의】** 남북한 교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것을 의의로 들 수 있다.

**【핵심어】** 적십자회담/7·7특별선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금강산 관광

####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통일부, 『통일백서 2010』(통일부, 2010).

**【사진자료】** 550. 19980616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는 현대그룹 정주영회장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이산가족찾기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합의되어 남북 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고, 그 결과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배경】**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1971년 8월 12일 적십자회담을 처음 개최한 이래 1992년까지 70여 회(본회담 10회, 예비·실무회담 60여 회)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단 한 차례 각기 151명 규모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성사되었을 뿐이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합의되어 다시 남북 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고, 그 결과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전개】** 이후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계속 개최하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총 17차례 성사시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11월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연간 대면상봉인원 400명, 분기별 화상상봉 40가족, 분기별 영상편지 교환 30가족 등 상봉 규모의 확대와 정례화에 합의했다. 남북은 2008년 2월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각각 20가족씩 미리 제작한 영상편지를 교환하였다. 영상편지 교환은 상봉행사를 통해 이미 가족을 상봉하였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감회와 현재 소식 등을 영상으로 담아 전달하는 것으로, 상봉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2008년 초 영상편지 시험교환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9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09.9.26~10.1)이 실시되었다.

**【결과】** 한국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상시 상봉체제 실현을 위해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 결과 2002년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금강산 면회소 공동 설치·운영에 합의한 남북은 2003년 11월 개최된 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건설 관련 제반 사항에 완전합의하고, 2005년 금강산 면회소 착공식(8.31)을 거행하였다. 금강산 면회소는 200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북측의 일방적 공사 중단으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2007년 12월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에 이어 2008년 7월 12일 공사시작 2년 11개월 만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교류 사업이 정기적 방식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봉·교류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할 수도 있었다. 남북은 2000년 9월 적십자회담에서 시범적인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실시에 합의하고 2차례 생사·주소확인사업과 1차례 서신교환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남북 각 20가족씩 영상편지 시범교환사업(2.5)을 실시하였다. 이밖에 2005년 8월 15일 최초로 진행된 화상상봉을 통해 상봉·교류(생사확인) 규모 확대와 함께, 특히 거동이 불편해 대면상봉이 어려운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화상으로나마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의】** 이러한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순수 인도주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이 정치적 사안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의의 및 중요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북한은 남북한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상봉·교류 규모 확대에 소극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 이래 남북 당국회담에 있어 경제적 실익확보에 적극적이며 이산가족 상봉·교류사업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실리추구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북한이 순수 인도적 견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산가족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핵심어】** 남북적십자회담/이산가족방문단 교환/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서신교환사업

####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통일부, 『통일백서 2010』(통일부, 2010).

**【사진자료】** 551. 남북이산가족 상봉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금강산 관광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1998년 10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발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배경】**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되고, 6월 고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였다.

**【전개】** 1998년 10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발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봉래·‘풍악·‘설봉’호가 추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육로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와 함께 현대그룹도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금강산 관광 역시 침체에 빠지면서 중단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에 2001년 6월 정부 산하의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정부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측면을 감안하여 2002년 1월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실시 등 관광 활성화 조치 이행을 위해 당국 간 및 사업자 간 협의를 계속되었다. 정부와 사업자가 북측의 관광 활성화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가운데, 2002년 11월 13일에는 북측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금강산 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현대아산은 금강산 지역에서 50년간 토지 이용권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해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금강산 관광이 2002년 12월 11일 동해선 임시

도로 연결 공사가 완료되면서 육로관광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비무장지대 통과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군사 당국 간 협의로 진통을 겪은 후, 2003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계인사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범 실시됨으로써 육로관광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금강산 임시도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판문점 이외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최초의 남북 간 도로라는 의미를 가진다.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여러 곤경을 겪으면서도 해상에서 시작된 관광이 육로를 이용하게 되었고, 또한 외금강만 관람하던 것이 내금강으로까지 관광지역이 확대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상품이 있고, 관광 코스는 만물상 코스, 구룡연 코스, 삼일포~해금강 코스, 세존봉 코스가 운영되었다. 사업 초기에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나갔다.

**【결과】** 2006년 4월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역 내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과 관광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강산 소방 건물 및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등을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자는 자율 소방대를 설치·운영하였다. 북한도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9개의 하위 규정을 발표하는 등 금강산 관광개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핵심어】** 현대아산/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계약서/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금강산관광지구법

####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통일부, 2005,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사진자료】** 552. 19981122 금강산을 찾은 남한 관광객들

553. 19920903 금강산 남북여성토론회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개성공단

남북적십자회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비핵화공동선언	● 개성공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정의】**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200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330만㎡(100만평)을 개발하여 한국의 입주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과 함께 생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서, 국내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였다.

**【배경】** 개성공단의 개발은 1999년 10월 1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하였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의 서해안공단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롯되었다. 김 위원장이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의향서 수준의 합의를 채택하였다. 이후 현대는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8월 9일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현대-아태 간에 관련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11월에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약을 맺어 공단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키로 합의하고 개성공단 예정지의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북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 약 2,000만 평(공단 800만 평, 배후도시 1,200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 방식은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여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하는 것이다. 3단계로 추진되는 이 개발 사업은 우선 1단계 100만 평 규모의 시범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 제1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에서는 1단계 100만 평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실무접촉에서는 12월 26~30일 사이에 착공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개

성공업지구 통관·통신·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여 착공을 위한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남북 당국 간 협의 진전에 따라 사업자 간 논의도 재개되었다.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리고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북측이 제정하기로 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규정 내용을 협의하고 현대·한국토지공사 및 아태·민경련 간에 4자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결과】** 북한은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통 및 착공식 관련 편의 제공 등에도 성의를 보였으며, 2002년 12월 30일 착공식에 합의하여 양측 사업자들이 착공식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통과에 관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체결되지 못하여 12월 30일 착공식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2003년 1월 27일 군사적 보장 문제 타결됨에 따라 2003년 6월 착공식을 갖고, 이후 개성공단 사업은 꾸준한 진전을 이루었다. 개성공단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 인근지역이 평화산업지대로 변모하였으며, 비무장 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백 명의 인원과 차량이 한국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개성공단 사업은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과 달리 지속되고 있다.

**【의의】**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이며 또한 한반도 평화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미래의 다른 남북협력사업의 준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심어】** 개성공단/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개성공업지구법

#### **【참고문헌】**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통일부, 2005);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5년사』(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

**【사진자료】** 554. 20030825개성공단 시찰을 위해 수속을 하는 기업인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아웅산 테러사건

● 아웅산 테러사건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KAL기 폭파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남침땅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아웅산 테러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원들이 미얀마 아웅산을 친선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원격조종폭탄으로 폭발시켜 서석준 부총리를 포함하여 17명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배경】** 북한 공작원들은 북한군 소장 강창수로부터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묘소에 도착할 때 폭탄을 폭발시켜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1983년 9월 9일 원산을 출발하였으며, 9월 22일 또는 23일경 랑군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린 이들은 북한요원 2명의 안내를 받아 2층집(알론구역 트리엑타 2번가 154/A)에 숨어 있었으며, 2일 후 그 집에서 폭발물을 받았고 범행 3일 전에 아웅산 묘역을 답사하였다.

**【발발】**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은 아웅산 국립묘소 참배를 위해 정부요인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도열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던 중 10시 25분경(현지시간)에 북한 무장공작원들이 묘소 천장에 설치한 원격조종폭탄을 폭발시켜 서석준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요인, 기자, 경호원 등 17명과 미얀마 측 인사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46명이 부상당하였다.

**【전개】** 북한 공작원들은 10월 7일 새벽 3시경 아웅산 묘역의 남쪽 현관의 천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그날 밤 아웅산 묘역 근처의 언덕에서 잠을 잤다. 이 폭발물은 원격조종장치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한국 측 인사들의 도착시간은 한국방송국의 방송을 통해 알았고 조장 진모는 조원들에게 “외국요원들은 보통 미얀마에 도착한 다음 날 아웅산 묘역을 참배한다”고 알려주었다. 일당은 10월 9일 아침 아웅산묘역 부근 위자야 극장으로 가서 남한요원이 자동차로 아웅산 묘역에 도착했을 때 조장 진모가 스위치를 눌러 폭탄을 폭발시켰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 내외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어서 다행히 화를 면했는데 그것은 북한 공작조장 진모가 예정에 없던 연습 진흔 나팔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판단, 일찍 폭파시켰기 때문이었다.

**【결과】** 조장 진모는 경찰관이 자신들이 묵고 있던 집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일당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여 강민철은 신기철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강쪽으로 이동,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야채시장으로 간 다음 임대용 거룻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 오솔길이 있는 강둑을 따라 걸어가다가 강둑 근처에서 잠을 잔 뒤 그 다음날 마을사람들로부터 음식물을 사서 먹었으며 그날 다시 강을 건너갔다. 일당은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 접선장소로 가던 중 생포 또는 사살되었다.

**【의의】** 한국은 북한의 전쟁불사 기도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미국과 협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북한의 테러사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북한은 테러국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핵심어】** 전두환 대통령/서석준 부총리/북한 테러/미얀마 아웅산/폭탄 테러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제2집(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3(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555. 1983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대통령 수행 각료들의 마지막 모습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 KAL기 폭파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남침땅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KAL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의 특수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해 공중폭발하여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배경】** KAL기 폭파사건은 서울올림픽의 안전문제를 세계 여론화하여 참가 예상국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올림픽 자체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1987년 11월을 전후해서 개헌,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둘러싸고 극도로 복잡해진 국내정국을 더욱 혼란시키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켜 민주발전·추진을 저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1984년 7월 부녀공작조로 편성된 범인들은 자본주의 적응을 위한 해외여행실습 등 철두철미한 공작교육을 받았다.

**【발발】** 김현희 등 북한공작원들은 1984년 8월 15일부터 1개월 동안 현지 적응훈련을 위해 비엔나를 거쳐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제네바·파리 등지를 여행하였다. 김현희는 1985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어와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후 1985년 7월~1987년 1월까지 중국본토 광주와 마카오에 파견되어 언어와 생활풍습을 체득하는 등 7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해외공작원으로서의 전문교육과 외국인화 교육을 받았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0월 7일 북한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을 통하여 범인들에게 내린 친필 공작지령에 의해 자행되었다.

**【전개】** 김현희 일행이 평양 출발 2일 전인 1987년 11월 1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은 김정일 친필 지령임을 강조하면서 1987년 11월 28일 23:30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라는 최종 지령을 내렸다. 11월 27일 19시경 별도 열차편으로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최과장으로부터 일제 파나소닉 라디오로 위장한 시한폭탄과 술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넘겨받고 폭발물을 인수한 범인들은 11월 28일 밤 바그다드발 아부다비-방콕경유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에 탑승, 김현희가 쇼핑백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시한

장치 폭발물을 좌석번호 7B와 7C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휴대품만 들고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다.

**【결과】** 방콕을 향해 계속 운행하던 대한항공 858기는 11월 29일 14시 1분(한국시간)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랑군관제소에 “정시 방콕 도착 시간과 위치정상”이란 최후로 교신한 후 14시 5분경 공중폭파되어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의의】** 북한은 전쟁에 대비하여 남조선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전쟁도발행위를 격화시키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북한의 테러사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북한은 테러국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핵심어】** 민간항공기 테러/김현희/전쟁도발/폭탄테러/미얀마 상공/방콕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2(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3(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556. 19970817 괌에서 추락한 KAL여객기 801편 잔해 수습작업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남침땅굴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KAL기 폭파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 남침땅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북한이 1974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지하땅굴을 굴착하여 남쪽으로 병력을 침투시켜 한국 후방을 교란하려 했으나, 1974년 11월 15일 최초로 고랑포 일대에서 발각됨으로써 무위에 그쳤다.

**【배경】** 북한의 제1호 고랑포 땅굴은 폭 1m, 높이 1.2m가량의 콘크리트 슬라브로 구축되었고 220V의 전선에 60W의 전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협궤철도가 가설되었고, 흙 운반용 수레차가 발견되었는데, 터널에는 우회통로와 수레차를 돌리는 지점 및 취침장소와 배수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발발】** 1974년 11월 15일 오전 7시 35분, 한국군 민정경찰 9명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을 순찰 중 지하로부터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뒤이어 국군의 집요한 노력 끝에 1975년 3월 19일, 철원 동북방 중부전선 DMZ 안에서 북한 지하터널(땅굴) 제2호가 마침내 발견되었다. 철원 땅굴(제2호 땅굴)은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발견한 것인데, 고랑포 동북쪽 8km 지점에서 발견된 제1호 땅굴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

**【전개】** 철원 땅굴은 갱도의 폭이 2.1m, 높이 2m로서 험준한 산악지대의 지하 50~160m의 암석층을 남북으로 꿰뚫고 있었는데, 군당국은 이 터널이 남방한계선 남쪽에 출구를 내도록 공사 중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남침용 지하터널을 차단하여 무력화시키기 위한 굴착작업이 곧 시작되었다. 이 차단터널은 1975년 2월에 착공하였는데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약 80m를 굴진해 들어가서 마침내 북한 땅굴과 연결됨으로써 북한의 지하갱도 모습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이어 1974년과 1975년에 이어 북한이 남침용 또는 비정규전용으로 판 땅굴이 1978년 10월 17일에 또다시 발견되었다. 제3땅굴로 명명된 판문점 땅굴은 판문점 공동감시구역에서 군사 정전위원회를 지원하는 유엔군 전진기지인 '캠프

키터호크' 기지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으로 임진각에서 서북쪽 4km 지점이다.

**【결과】** 제1 및 제2땅굴이 발견되고, 귀순자들의 증언이나 항공사진 등에 의한 땅굴굴착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됨에 따라 휴전선 일대에 더 많은 땅굴이 있을 것이란 판단하에 탐색작업을 벌여 땅굴을 찾아냈다. 북한은 남방한계선 남쪽에 여러 개의 출구를 만들어 일단 은폐해 두었다가 유사시 한꺼번에 출구를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귀순자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땅굴은 남침 병력의 투입을 위한 지하터널임이 증명되었다.

**【의의】** 북한의 땅굴을 찾아내어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의 침략의지를 알려 국제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켰으며 또한 사전에 북한의 후방침투 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남침의도/후방침투/DMZ/남방한계선/지하터널/공동감시구역

**【참고문헌】**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 2(2004);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사진자료】** 551. 19781028 북한 땅굴사건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KAL기 폭파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남침땅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강릉 잠수함침투사건은 1996년 9월 18일 1시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도로상에서 택시기사가 얼룩무늬 복장의 거수자 2명을 발견 후 인근 해안 암초에 좌초된 선박을 목격하고 신고함으로써 군경이 출동, 현장 분석결과 북한 잠수함으로 판단, 작전을 전개한 사건이었다.

**【배경】** 1996년 9월 14일 5시경 북한 인민무력부 경찰국 직속 경찰조 3명과 동 소속 해상처 처장 대좌 김동원을 포함한 승조원 및 안내조 등 도합 26명은 소형 잠수함(상어급, 350t)에 승선 함경남도 퇴조항을 출항, 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15일 강릉시 안인진리 앞바다에서 잠망경을 이용하여 침투 위치를 사전 정찰한 후 외해로 이탈하여 해저에 정박 대기하였다. 9월 16일 23시 30분경 전날 정찰한 해안에 접근하여 경찰조 3명 안내조 2명을 침투시켰으나 파고 등 기상 악화로 안내조가 복귀하지 못하자 다시 공해상으로 이탈하여 수심 60m 해저에서 대기하다가 17일 22시 30분경 침투시킨 경찰·안내조 5명을 복귀시키기 위해 해안으로 접근 시도 중 무리한 조함으로 좌초되어, 부득이 잠수함을 불태우고 잔여인원 21명 전원이 상륙 침투하였다.

**【발발】** 9월 18일 1시 17분경 제68사단 제173연대 23소초 근무자(이병 최성재)가 초소 남방 3km 지점 해상에서 미상의 불빛과 연기를 관측하고 소초장에게 보고하자 소초장은 인접 25소초장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1시 35분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7번 국도를 지나던 택시기사(이진규)가 거동수상자 및 의아선박을 발견하고 강동파출소에 신고하였다. 1시 45분경 25소초장이 출동준비 중 강동파출소 허강운 순경과 택시기사가 소초에 도착, 선박 발견사실을 신고하여 대대에 상황보고를 하고 2시경 현장 확인(소초장, 경찰, 택시기사)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9월 18일 12시 10분 강원도 전지역에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선포하였다.

**【전개】** 국군은 특전사 제3여단 2개 대대를 1군사령관 작전통제로 전환하고 제8군단 및 제36사단에 군견 44두를 배치하여 작전을 지원토록 하였다. 16시 30분경 헬기로 수색 중이던 제508정보부대 요원이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청학산 8부 능선에서 공비 시체 11구를 발견, 작전부대에 통보함으로써 제173연대 2대대 병력이 출동하여 사체를 확인하고 중앙합동신문조의 현장 분석결과 공비 11명 모두 두부 관통상에 의해 사망되었고 사체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며,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생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함장이 사살한 후 도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군은 잔당 1명에 대한 수색작전을 계속하였으나 흔적을 발견치 못하고 11월 7일 12시를 기해 작전을 종료하였다.

**【결과】** 국군의 소탕작전 결과 공비 25명을 소탕하였으며 노획장비는 무기류, 탄약, 침투장비, 통신·정찰장비 등 총 367종 4,380점에 이르렀으며, 아군도 전사, 부상 등 58명이 피해를 입었다.

**【의의】** 잠수함침투사건으로 북한이 아군의 전략 요충지인 강릉지역의 비행장·레이더 기지·동해 함대사 등 군사시설의 변화상황을 점검하려 하였으며, 정규·비정규전 작전지원에 활용하고 강릉지역 이외 목호·포항 등을 대상으로 한 실전 정찰활동과 잠수함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핵심어】** 북한인민무력부/정찰국/잠수함 침투/북한군 정찰계획/비정규전

**【참고문헌】** 국방부, 『대비정규전사』 2(19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서울인쇄, 1998); 국방부, 『국방사』 3(19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1995).

**【사진자료】** 558. 1996 강릉 앞바다 북한무장공비침투사건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아웅산 테러사건	●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KAL기 폭파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남침땅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하나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적응능력을 길러주고 생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 7월 경기도 안성시에 개원된 정착교육기관이다.

**【배경】** 1990년대 초 구 소련과 동구권 몰락 이후,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이탈주민은 10명 안팎이었으나, 1994년부터 40~8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312명, 2001년 5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1,138명으로 크게 늘어 2007년에 1만 명, 현재에는 2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립 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국내 입국 탈북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안성의 하나원을 증축하는 한편, 500명 수용 규모의 제2 하나원을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강원도 화천에 건립하고 있다.

**【활동내용】** 하나원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교육과 주거 알선, 가족관계 등록, 정착금 등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 지원을 하고 있다.

주된 활동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8주간의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기르게 되며 2009년 초부터 사회적응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응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 효과를 위해 성별, 연령별 특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 이탈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정착장려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착지원의 목표는 단순한 수혜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있다. 또한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 이후 사회에 편입된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한국토지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에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원 과정 수료 후 각 지역으로 전입하는 '새터민'들은 하나센터에서 3주간의 집중교육과 1년간의 사후 지원을 받는다.

한편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북한 이탈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2만 명 가운데 3,000여 명이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정부는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하나원 안에 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를 1999년 개교하였다.

하나둘학교는 정부가 탈북학생의 교육을 삼죽초등학교와 한겨레중고교에 위탁하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2009년 9월 다시 문을 열었다. 1999년부터 하나 둘 학교를 거쳐 간 탈북 청소년은 총 3,000여 명에 이른다.

**【의의】**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실험장'이었다.

**【참고문헌】**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통일백서』(2009).

**【사진자료】** 559. 20100326 하나원교육생들의 산업현장방문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금강산 총격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KAL기 폭파사건	● 금강산 총격사건
남침땅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금강산 총격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한 여성 관광객 박왕자가 그들의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인민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원인】** 피해자가 산책하던 구역은 군사지역과 가까운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영성한 철조망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민간인이 군사지역인지 민간인 지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북한 측은 피해자가 군사지역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군사지역을 침범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민간인에게 어떻게 총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논란이 많다.

**【전개】** 피해자 박왕자(만 53세)는 금강산 피살 당일 새벽에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북한 측은 사격 직전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간인에 대한 관광지 내에서의 총격 사용의 적절성과 사전 경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 측은 현대아산과 통일부와의 회신에서 북한군이 최소한 한 차례 경고 사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작 두 차례의 총성만이 들렸고 피해자의 신체에 두 개의 총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인민군 측의 경고 사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시신에는 흉부에 총격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이 발견되었는데, 인민군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조준 사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군의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법' 및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에 명시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항을 벗어난 대응이며 총격 그 자체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2004년 체결된 '대한민국 국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 및 체류에 대한 합의서'에 위배된다.

금강산 총격사건이 발생되자, 정부와 현대아산은 이후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아산 측은 일단 개성관광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4차례 가랑 전화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 측은 모두 수신을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 담당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의 진상조사는 불허하며 대책을 세울 때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심지어 “사과를 받을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조선”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남측의 제의를 번번이 거절하였다.

북한은 1947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의 서명국이나, 이 협정에 규정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금지·제한하고 있으며, 총격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에 대한 총격은 북한 국내법 및 남한 정부와의 합의서에 위배된다.

**【의의】** 금강산 총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계기되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중단하기로 하였다.

**【핵심어】** 박왕자/금강산 관광/남북교류사업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2009).

**【사진자료】** 560. 20080715 금강산 관광길에 새벽산책을 나섰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박왕자씨의 영결식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천안함 폭침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KAL기 폭파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남침땅굴사건	● 천안함 폭침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에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이다.

**【원인】** 북한은 핵문제로 2009년 6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 정권은 현재제는 물론 후계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핵 보유에서 찾고, 미국과는 직접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 및 체제 보장을 받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후계자 세습체제 구축과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 요인을 막기 위해 대남 강경노선을 취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전개】** 2010년 3월 26일에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다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km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침몰하였다. 함체는 폭발과 함께 두 동강 나고 정전과 동시에 함체 일부 격실에 기름과 해수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우현으로 90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함미가 먼저 침몰되었다.

침몰당시 승조원 104명 가운데 야간 당직근무자 29명이 함교 등에 위치하여 정상 근무 중이었고, 함장과 기관장 등 비근무자는 평상 근무복이나 간편복 차림으로 각각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되었다. 침몰된 함미 부분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함미 부분의 40%를 차지하는 디젤기관실이 폭발과 동시에 급격히 침몰되었다. 그러나 분리된 함수는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함미에 비해 서서히 침수되면서 부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초기에 북한의 개입 여부에 대해 '북한의 관련성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에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

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이사회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모략극’이라며 사고지점 근처에서 암초가 많다는 점을 들며 좌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함의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을 침몰한 현장 해역에 긴급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UDT 대원 한주호 준위가 작업 도중 실신해 후송 치료 중 순직하였다.

**【의의】** 천안함 격침사건은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침투하여 경계 작전 중인 해군 함정을 기습적으로 피격한 군사적 침략행위였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희생되어,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핵심어】** 천안함/북한 잠수정/남북관계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2011).

**【사진자료】** 561. 20100424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남북관계의 명암

**【전시항목】** 남북대화,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교류

**【소항목】** 연평도 포격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하나원과 탈북주민 정착지원
KAL기 폭파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남침땅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 연평도 포격사건

**【정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 북한군이 황해도 강령군 무도 및 개머리 진지에서 서해 연평도의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 곡사포 그리고 122mm 방사포 등 170여 발을 발사한 도발 사건이다.

**【원인】**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태 원인을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와 인근 지역을 분쟁수역화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북한의 의도적 기습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상한 도발이다. 국내적으로는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강요하고 체제 결속을 유도하려는 내부단속용이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위한 목적일 수 있다.

**【전개】**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우리 군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으로 실시하던 중, 북한군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포격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당일 오전 우리 군이 육·해·공 연합 호국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자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중단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연례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아군의 훈련 종료 후 한 시간 가량 지난 오후 2시 30분경, 북한군은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에서부터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170여 발을 발사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래,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탄을 퍼부은 최초의 사건이다. 한 낮에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의 충격 역시 씻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피난 행렬을 지켜본 국민들도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받았다.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교전수칙에 따라 북측에 경고통신을 보내고 북한 무도 포진지에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잠시 사격을 멈춘 북한이 오후 3시 12분부터 다시

도발을 재개하자, 연평부대는 개머리 진지에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1시간이 넘게 계속된 공격으로 민간인 2명과 작전수행 중이던 해병대 2명이 숨지고, 해병대 16명과 민간인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건물 133동, 전기 및 통신시설 등이 파손되었으며, 10군데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북한 측도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두 차례에 걸쳐 70여 대응사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010년 11월 28일과 12월 1일 서해 인근 우리 영해와 공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 실시된 데 이어 12월 20일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평가】** 과거 서해안의 군사 충돌이 6월 꽃게잡이 철에 발생하여 우발적 충돌이거나 우발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연평도 포격사건은 시기적으로 11월에 발생하였으며 계획적이고도 어떠한 목적을 가진 포격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핵심어】** 북방한계선/해상충돌/연평도

**【참고문헌】** 국방부, 『2010 국방백서』(2010);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상지피앤아이, 2011).

**【사진자료】** 562. 20101126 북한군의 포격 도발 당시 연평도의 불타는 모습

**【작성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	--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10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4일 공식 취임했으며, 1960년 4월 26일 하야하기까지 초대, 제2대, 제3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4·19혁명 후 제5대 국회에서 1960년 8월 12일 선출된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3월 23일 하야할 때까지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어 5·16군사정변을 통해서 군정을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제5, 6, 7, 8, 9대 대통령을 지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26사건으로 사망하자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했으며, 1979년 12월 2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1980년 8월 15일 하야했다. 그 뒤를 이어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이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9월 1일 취임하였다. 이후 새로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인단이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을 선출하였으며, 1981년 3월 3일 정식으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987년 6월민주항쟁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제13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1988년 2월 25일 취임하면서 제6공화국 첫 번째 정부를 출범시켰다.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에 선출된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에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하면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에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에 참여정부를 출범시켰다. 이어서 2007년 제17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이승만

●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이승만(李承晩, 1875년 3월 26일(음력)~1965년 7월 19일)은 대한제국·일제강점기의 개혁가, 언론인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정치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 주석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대, 제2대, 제3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본관 전주(全州), 초명 승룡(承龍), 호 우남(霧南).

**【인물배경】**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에서 아버지 이경선,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897년 배재학당을 졸업했으며, 도미 후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상·활동사항】** 1919년 2월 1일(음) 발표된 무오독립선언문에 민족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3·1운동 이후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19년 8월부터 구미외교위원부에서 활동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임시정부 홍보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외교활동을 했다. 1933년 11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보선되었으며, 1934년 4월에는 임시정부 외무위원회 외교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40년 6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에는 미국정부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선전포고문과 임시정부 승인 요구 공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태평양전쟁이 전개되는 동안 '미국의 소리'라는 초단파 방송망을 통해 고국 동포들의 투쟁을 격려하면서 전쟁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 1945년 광복 후 10월 4일 개인자격으로 귀국했다. 1946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하의 남한 단독선거가 치러지자 동대문갑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초대 제헌국회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7월 20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7월 24일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8월 15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과 반민특위 등의 문제로 국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50년 6

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과 함께 대전으로 피신했으며, 다시 열차편으로 이리·목포·부산으로 정부를 옮겼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전쟁 시기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대통령에 재선되기 위해 1952년 1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1954년 11월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사사오입 개헌)을 시도하였다. 이후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조봉암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접철되자 당일 마산에서 항의시위가 시작되었으며, 4월 19일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상황이 악화되어가자 4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야를 발표했다. 그리고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건너갔으며,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서거하였다. 유해는 7월 22일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왔으며, 7월 27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평가】** 대한민국 초대 제헌국회 의장이자 초대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취약한 정치적 기반 때문에 친일관료를 등용하고, 친일과 청산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헌법을 수시로 바꿨으며, 정적이나 반대세력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아서 주위에 추종세력 외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권력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서를 지낸 윤치영은 “평생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워 온 분이고,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한 인물이었다”고 평했다. 대외적으로는 대북, 대일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미국의 지지와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6·25전쟁 당시 거제포로수용소의 반공포로를 석방시킬 정도로 미국과의 갈등도 불사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평이 있다.

**【핵심어】** 이승만/대한민국임시정부/구미외교위원부/초대 대통령

**【참고문헌】** 최종고, 『우남 이승만』(청아출판사, 2011);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2005); 최상오·홍선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사진자료】** 563. 이승만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윤보선

이승만	노태우
●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윤보선(尹潽善, 1897년 8월 26일~1990년 7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이다. 제3대, 4대, 5대, 6대 국회의원과 제2대 서울 시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본관 해평(海平), 호 해위(海葦).

**【인물배경】**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 출생으로 아버지 윤치소와 어머니 이범숙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1913년 일본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의학부를 중퇴하였다. 1921년 영국으로 건너가 우드부르크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다가 1925년 에든버러 대학교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1930년 12월에 졸업하였다.

**【사상·활동사항】** 1911년 신해혁명 소식을 접하고 자극을 받은 윤보선은 1918년 상해로 건너갔다. 1919년 3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다. 1932년 귀국 후 일제 경찰은 요시찰인물로 분류하고 감시하였으나 은둔생활로 일관했다. 해방이 되자 1945년 10월 미 군정청 농상공 고문으로 미군정에 참여했다. 1948년 12월 초대 서울시장, 1949년에는 상공부장관에 임명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2년 국민방위군사건과 부산정치과동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본격적으로 야당정치인이 되었다. 제3대, 제4대, 제5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민주당 중앙위원을 지냈다. 1960년 4·19혁명으로 탄생한 국회에서 8월 12일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 투표결과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대통령 재임시기 인사문제와 내각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민주당 신파 계열인 장면 총리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의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국대사가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UN군 병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하자 국군 간의 교전과 북한의 남침을 우려해 허락하지 않았다. 1962년 군정세력이 정치정화법을 제정해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1963년 초 대통령 선거에 새로 창당된 민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15만여 표차로 패배하였다. 1964년 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을 결정하자

“한국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했다. 또한 1964년 3월 정부가 한일협상을 위한 일정을 발표하자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참여했다. 1967년 2월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116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유신체제가 들어선 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사건, 1976년 명동 3·1민주구국선언 등의 민주화운동으로 법정에 섰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자 최규하 대통령에게 민주화를 촉구하였으며, 1979년 11월에는 YMCA 위장결혼사건을 통해 민주화 이행을 주장하다 피체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 2월 18일에 최규하 대통령이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할 때 의장에 피선되었다. 서울의 봄 당시 김대중, 김영삼에게 단결을 촉구했지만 실패하였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자 박정희 정권 때와는 달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1981년 4월 국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됐다. 1987년 선거에서는 노태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하였다. 1990년 7월 안국동 자택에서 향년 93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평가】** 민주당 구파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인 윤보선은 민주당 신파인 장면 총리와 2공화국 내내 갈등하다가 1961년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이후 군사독재를 초래했다며 비판을 받았다. 제3공화국부터 유신체제 내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추진하고 베트남전쟁에 참전을 결정할 때에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야당 정치인이었다. 1979년 YMCA 위장결혼사건 당시 80세가 넘는 노구에도 민주화를 위해 솔선수범한 모습으로 학생들과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5공화국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1987년 노태우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천명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어】** 윤보선/4·19혁명/제2공화국/5·16군사정변/박정희

**【참고문헌】** 심지연, 「민주당 결성과 윤보선의 리더십 연구」, 『장면·윤보선·박정희』(백산서당, 2001); 윤보선, 『외로운 선택의 나날들: 윤보선 회고록』(동아일보사, 1991).

**【사진자료】** 564. 윤보선 대통령  
565. 장면 국무총리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박정희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며, 제5, 6, 7, 8, 9대 대통령이다. 호는 중수(中樹)이며, 본관은 고령(高靈).

**【인물배경】**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아버지 박성빈과 어머니 백남의 사이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박성빈은 1892년 동학의 접주로 활동하였다. 대구사범학교, 만주국 신경군관학교, 일본육군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를 나왔다.

**【사상·활동사항】**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해서 1940년 2월까지 재직하였다. 그 후 만주국 신경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1944년 12월 23일 정식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1946년 5월 8일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국방경비대 8연대 소대장을 지냈으며, 육군본부 작전정보국에서 근무하였으나 여순사건 연루 혐의로 강제 예편되었다. 이후 정보국에서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현역 소령으로 복귀했다. 육군본부 작전정보국 제1과장, 제9사단 참모장, 제5사단장, 제6군단 부군단장, 제7사단장, 육군 제6관구사령관, 부산군수기지사령관,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육군사관학교 5기생과 8기생을 주축으로 하는 장교들과 함께 5·16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군사정변 세력은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를 선출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장악하였다. 1962년 3월 구정치인을 처벌하는 '구정치인 정화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발표되자 윤보선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고 하야하였다. 그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1963년 민정이양을 선언하고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1964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에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기 시작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재선되었으며, 1969년 3선개헌에 성공한 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리고

1972년에는 10월유신을 단행해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유신헌법을 채택해 제4공화국을 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2월 15일 제8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제9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5선 연임을 하였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시해함으로써 서거하였다. 집권 18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무리한 3선개헌과 종신총통제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으며,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국내 민주화운동 세력과 반대세력을 억압하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인 7·4남북공동성명을 1972년 발표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근대화의 길은 경제적 자립에 있다고 보고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으며,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1970년대 들어서 새마을운동을 펼치면서 농어촌 근대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적 자립화를 위한 자조 노력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화를 일궈내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평가】** 정치적으로는 장기집권에 따른 권위주의로 인권탄압, 억압적인 통제정책을 통해서 사회·문화 등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억눌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근대화 시책을 통해서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던 국민경제를 탈바꿈시켰으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사회를 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옮겨 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주도적인 시책의 일환으로서 의료보험정책,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또한 7·4남북공동성명은 정치적 의도 여부를 떠나 이후 정권들에게 남북관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의 지평을 열었다.

**【핵심어】** 박정희/5·16군사정변/3선개헌/유신체제/7·4남북공동성명/새마을운동

**【참고문헌】**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책세상, 2000);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역사비평사, 2007); 전인권, 『박정희 평전』(이학사, 2006).

**【사진자료】** 566. 박정희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최규하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최규하(崔圭夏, 1919년 7월 16일~2006년 10월 22일)는 대한민국의 관료이자 정치인이며, 제12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자 서옥(瑞玉), 호 현석(玄石)

**【인물배경】** 본관은 강릉이며,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정 수확하다가 1926년 8세 때 원주보통학교 2학년으로 입학하였다. 1932년 4월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서 1937년에 졸업하였다. 그 뒤 일본으로 유학, 1941년 3월까지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 영문학과를 다녔으며, 졸업 후 만주로 가서 1943년 7월 만주 국립대동학원에서 정치행정 전공으로 수료하였다.

**【활동사항】** 만주 국립대동학원을 졸업한 뒤 광복 때까지 만주국 관리를 지냈으며,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46년 미 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에는 농림부로 자리를 옮겨 농림부 양정과장이 됐으며, 그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지역 미곡위원회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외무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주일대표부 총영사, 주일대표부 참사관을 역임하였으며, 1959년에는 주일대표부 공사, 외무부 차관으로 발탁되었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담당 고문이 되었다. 1967년에는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 외무부 장관에 발탁되었다. 1971년에는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에 임명되었다. 1972년에는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이 되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1975년 국무총리 서리를 거쳐 1976년 3월 국무총리에 기용되었다. 1979년 10·26사건을 맞아 당시 국무총리 신분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이양받았으며, 비상국무회의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같은 해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에 피선되었으며,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선

거에서 당선되어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재직 당시 비상조치를 해제하고, 유신헌법 폐지,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민주정부 선출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전두환을 비롯한 군내 일부 파벌이 12·12군사반란을 감행하는 헌정유린사건을 겪었으며,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고, 1980년 5월에는 신군부의 압력에 떠밀려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의 시국수습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월 27일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으로 추대했다. 1980년 신군부의 압력과 직무수행의 한계를 느껴 1980년 8월 12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2006년 10월 22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등수교훈장(1970), 수교훈장 광화대장(1971), 무궁화대훈장(1979),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1980)을 수여받았다.

**【평가】** 외무부 장관 재임 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외무행정조직의 강화를 꾀했고 통상외교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반면에 외형적으로는 협조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제10대 대통령 재임 시절에 12·12군사반란과 5·17사태를 맞아 대통령으로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안을 막지 않고 수용하는 바람에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신군부가 광주에서 시민을 탄압하고, 국회해산 및 민주인사 체포 등을 통한 민주화의 열망을 좌절시킨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95년 문민정부로부터 신군부가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을 때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 불응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법적 평가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핵심어】** 최규하/비상국무회의/통일주체국민회의/12·12군사반란/신군부/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5·17사태/비상계엄

**【참고문헌】**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역사문제연구소, 2005); 「신현확 검찰 진술서」, 1995년 12월 16일(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자료); 『대한민국 직원록 1952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어판.

**【사진자료】** 567. 최규하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전두환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 전두환	이명박

**【정의】** 전두환(全斗煥, 1931년 1월 18일~생존)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제 11대·제1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호 일해(日海)

**【인물배경】** 1931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아버지 전상우와 어머니 김점문 사이에서 10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1947년 대구공업중학교에 입학했으며, 1951년 2월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51년 육군사관학교 정규 4년제에 입학하여 1955년 9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11기로 육군소위에 임관했다. 이후 1959년 미국 육군특수전학교, 1960년 미국 육군보병학교를 이수했으며, 1965년에는 육군대학을 졸업하였다.

**【사상·활동사항】** 1955년 25사단 소대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육군 대위 신분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군사정변 지지 시위를 주도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의 신임을 받아 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처리담당 비서관으로 선임됐다. 1970년 제9사단 29연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1971년 귀국 후 제1공수특전단장, 1976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거쳐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보임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고 합동 수사본부장에 임명되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으며, 이 당시 하나회 출신 군부세력과 함께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10·26사건 당시 현장에서 방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하면서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군부를 장악했다. 이후 1980년 3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면서 군·민 정보기관을 모두 장악하였고, 한편으로는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기획, 실행에 옮겼다. 5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안'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모든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검열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을 신군부 인사들과 함께 유혈 진압에도 관여했다.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 선출되어 사실상 내각을 관장했다.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을 개정, 공포했다. 1981년 2월 25일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선출되어 제12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집권 과정에서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언론통폐합정책, 국제그룹 해체 등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을 통해 강압적인 국정운영을 시도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재임 중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스포츠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관계는 1982년 북한과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하자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하였으며,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추진하였으며,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의 교류를 지속하였다. 1988년 퇴임 후 제13대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문제가 불거졌으며, 1989년 국회에서 5공청문회가 열리자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증언대에 섰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1996년 1월 24일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이 선고되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에 따라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평가】**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모의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결여되었으며, 집권과정에서 인권유린과 헌정파괴가 자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과거사 청산작업에 의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상당 부분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밝혀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잡고, 수출호조를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했으나 이 시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되었다. 남북관계에서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며, 남북 사이의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교류를 지속하여 이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핵심어】** 전두환/10·26사건/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제5공화국

**【참고문헌】**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1, 2, 3(인물과 사상사, 2006); 박상하, 『그때 그 사람들』(학영사, 2005);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사진자료】** 568. 전두환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노태우

이승만	●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노태우(盧泰愚, 1932년 12월 4일~생존)은 대한민국의 군인이며, 정치인이다. 제 12대 국회의원과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아호 용당(龍黨)

**【인물배경】** 1932년 12월 4일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 팔공산 근처에서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11기로 육군소위에 임관하였다.

**【사상·활동사항】** 1956년 보병 소대장으로 임관하였으며, 그 뒤 방첩부대 방첩과장, 육군본부 정보과장을 역임하였다. 1968년 말부터는 수도사단 1연대 3대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귀국 이후 9공수특전여단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9사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9사단 29연대를 정부중앙청사로 출동시키면서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쿠데타가 성공한 직후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수경사 사령관 당시 5월 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단행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신군부가 실권을 잡는데 기여했다. 이후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81년 예편한 후 내무장관, 체육부장관, 남북한 고위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였다.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로 당선되었다. 1987년 6월 10일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날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개항의 '6·29특별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개정과 민주화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 초래되자 1990년 1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을 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으며, 초대 총재에 추대되었다. 정치적으로는 1988년부터 5공화국 청산을 통해서 이전 정권과 단절하려고 하였다. 한편으로 강경대 타살사건을 비롯한 91년 민주화운동과, 임수경·문익환·서경원·문규원 방북과 같은 통일운동에 직면했으나 그때마

다 강경하게 대응했다.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을 통해 '북방외교'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1989년 동구권 국가 최초로 헝가리와 국교를 체결했으며,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92년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등 사회주의권 국가와 수교하는 등 한국외교의 통로를 다양하게 넓혔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7·7선언'을 통해 남북한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미·북일관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1990년 9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간 대화를 추진했다. 마침내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퇴임 후 문민정부 당시인 1995년에 비자금 수수와 뇌물 조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1997년에는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모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 원을 선고 받았으며, 1997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평가】** 6·10민주항쟁의 요구를 수용하여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화 조치를 실시하여 장기간의 권위주의 독재를 종식시켰다. 1972년 유신체제 이후 15년 만에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며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 또한 받았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외교적으로도 구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했으며,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 노태우 정부하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박정희 정권의 7·4남북공동성명과 함께 정부의 기본원칙으로서 이후 남북관계에 준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었다.

**【핵심어】** 노태우/12·12군사반란/5·17내란모의/6·29특별선언/민주자유당/6·10민주항쟁/7·7선언/북방외교/남북기본합의서

**【참고문헌】**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상, 하권』(조선뉴스프레스, 2011); 노재봉 외, 『노태우 대통령을 말한다, 국내외 인사 175인의 기록』(동화출판사, 2011);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사진자료】** 569. 노태우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김영삼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김영삼(金泳三, 1927년 12월 20일~생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며, 제3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3대, 14대 국회의원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 본관 김녕(金寧), 호 거산(巨山).

**【인물배경】** 1927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와 어머니 박부련 사이에서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세례교인이 되었다. 통영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다.

**【사상·활동사항】** 1951년 장택상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리고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후보로 거제에서 출마해 당선되면서 26세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다. 사사오입 개헌 당시 자유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으나 1970년 신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1, 2차 경선투표까지 간 끝에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는 신민당 총재로서 박정희 정권에 맞섰으며, 1979년에는 의원직 제명까지 당했다. 의원직 제명사건은 사흘 뒤인 부마민주항쟁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10월 26일 박정희 시해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자 가택연금, 정치활동 금지를 당했다.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을 결성하였다. 민추협 인사들과 재야인사들을 결집시켜 1985년 1월 18일 신한민주당(신민당)을 창당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선언' 이후 신민당 내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김대중 등과 함께 신민당을 탈당,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6월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자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또한 1988년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일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제2야당의 위치로 전락하였다. 1990년 1월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3당 합당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창당하고, 대표최고위원

에 선임되었다.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집권 후 신군부와 하나회를 군대에서 숙정하면서 군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했다. 1994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2·12군사반란,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에 세웠으며, 여기에 관련된 신군부 인사들까지 법적 처벌을 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은 15년 만에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국·공유화된 도로·철도·전매사업을 민영화하였으며,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초기에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1996년 10월에는 북한 무장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릉에 침투한 사건이 일어나 대북정책에서는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한편 1996년 12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하지만 1997년 1월 7일 노동법 개정에 대한 연두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노동법파동은 전국적으로 개정 반대 총파업에 부딪혔다. 이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로 도산하고,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국 200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평가】** 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5·16군사정변 이후 32년 만의 민간정부를 수립했다. 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걸어왔던 민주주의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공고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하나회를 비롯한 군내 사조직들을 제거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집권하면서 문민정부를 5월민주화운동을 계승한 정부로 규정하고, 12·12군사반란, 5·17내란모의,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두 전직 대통령과 신군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으로 평가하였다.

**【핵심어】** 김영삼/40대 기수론/민주화추진협의회/문민정부

**【참고문헌】**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 하』(조선일보사, 2001);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역사비평사, 2007);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사진자료】** 570. 김영삼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김대중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김대중(金大中, 1924년 1월 6일~2009년 8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며, 제 5, 6, 7, 8, 13, 14대 국회의원과 제15대 대통령을 지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 본관 김해(金海), 호 후광(後廣)

**【인물배경】** 1924년 1월 6일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에서 아버지 김운식과 어머니 장수금 사이에서 태어났다. 목포공립제일보통학교, 목포공립상업학교를 나왔으며, 러시아 외무성 산하 외교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상·활동사항】** 1954년부터 세 차례 낙선 끝에 1961년 5월 14일 인제에서 치러진 제 5대 민의원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된 후 6대, 7대, 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겨뤘으나 94만여 표차로 석패했다. 유신체제가 들어서자 미국·일본 등지에서 유신반대·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1973년 8월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었다가 닷새 만에 풀려났다. 이후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등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유신정권으로부터 가택연금, 투옥 등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80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로부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대내외적인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선했다. 1988년에는 제13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여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다가 1993년 7월 귀국했으며, 1994년 12월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설립하였다. 1995년 7월 18일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12월 18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어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출범 초기부터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하며 경제재건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가져온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어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체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그리고 1999년 4월에는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였으며,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을 위한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6월 15일 남북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이어졌다. 이 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골자로 하는 통일방향에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햇볕정책’과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헌신해온 공로로 2000년 12월 10일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3년 2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2009년 8월 18일 오랜 투병 끝에 서거하였으며,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2000년 노벨평화상을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민주화운동과 세계평화, 인권향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로로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국제인권연맹 인권상, UN인권협회 인권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평가】** 대한민국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민주적인 제도를 수립·집행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대북송금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한국을 탈바꿈 시키는 등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ASEM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핵심어】** 김대중/국민의 정부/햇볕정책/6·15남북공동선언/노벨평화상

**【참고문헌】**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2』(삼인, 2011); 경향신문·참여연대,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한울, 2009).

**【사진자료】** 571. 김대중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 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노무현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정의】** 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2009년 5월 23일)은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며, 대한민국 제13대, 제15대 국회의원,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 본관 광주(光州)

**【인물배경】** 1946년 9월 1일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에서 아버지 노판석과 어머니 이순례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김해진영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사상·활동사항】**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판사직을 사퇴하고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1년 부림사건의 변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에 선출되어 부산의 6·10대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 제13대 총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1988년 말 '5공청문회'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와 치밀한 추궁으로 '청문회 스타'가 되었다. 1990년 1월 3당 합당이 단행되자 이에 반발하여 민주자유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1995년 부산광역시 시장 선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모두 낙선하였다. 1996년 이부영·김원기·이철 등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97년 11월에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으며, 1998년 7월 21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종로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0년 4월 제16대 총선거에서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부산 북·강서 을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이때부터 떨어질 줄 알면서도 우직하게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한다며 국민들이 '바보 노무현'이라 부르며 지지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이 '노사모'를 조직하였다.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2002년 4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2004년 열린우리당

에 대한 총선지지 발언으로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나,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자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참여정부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제도화시켰다. 또한 정치문화에 탈권위주의를 시도하여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공권력 행사 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려고 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번영' 정책을 근간으로 남북교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합의함으로써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발전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방에서는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였으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OECD 평균성장률을 상회하였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퇴임 이후 최초로 고향으로 귀향하여 정착한 대통령이 되었으나, 2009년 5월 23일 비자금 조사를 받던 중 사저 인근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고향에 안장되었다.

**【평가】** 탈권위주의를 시도하면서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인터넷 선거혁명을 통해 집권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전자민주주의의 확립과 확산에 기여했으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돈이 들지 않는 선거제도를 확립했다.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을 향상시켰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를 열었다. 전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증진시켰으며,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여 동북아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핵개발을 막지는 못했으며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핵심어】** 노무현/제16대 대통령/참여정부/노사모

**【참고문헌】** 노무현, 노무현재단 엮음, 『운명이다』(돌베개, 2010); 노무현, 『성공과 좌절』(학고재, 2009); 오연호,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오마이뉴스, 2009).

**【사진자료】** 572. 노무현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중주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키워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시항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소항목】** 이명박

이승만	노태우
윤보선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최규하	노무현
전두환	● 이명박

**【정의】** 이명박(李明博, 1941년 12월 19일~생존)은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가, 기업인, 정치인이며 14대·15대 국회의원, 제32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다. 본관 경주(慶州)

**【인물배경】** 이명박은 일제강점기 1941년 12월 19일 일본제국 오사카 부 나카카와치 군 가미 촌의 조선인 정착촌에서 아버지 이충우와 어머니 채태원 사이에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귀국하여 경북 포항으로 이사 왔다. 동지상업고등학교를 나왔으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이 둘째형이 된다.

**【사상·활동사항】** 고려대 재학 시절인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해 '6·3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되어 복역한 전력 있다. 1965년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했으며, 29세인 1971년 이사로 승진한 데 이어 1974년에는 35세의 나이로 현대건설의 사장이 되었으며, 1988년 현대건설 회장이 되었다. 1992년 민주자유당 전국구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며, 1996년 제15대 총선거에서 종로에 출마하여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00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3기 제32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7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고, 2005년 10월 5.84km 청계천을 복원하였다. 2004년 7월에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버스 노선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또한 이용 요금은 이동 거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고,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요금 체계, 버스회사의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무소속 이회창을 누르고 49%의 지지를 받으며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의 이른바 '747 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위주의 '녹색성장'을 패러다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물가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2008년부터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환율상승 등 국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통령 재임 초반인 2008년 4월 한미FTA 중 쇠고기 수입재 개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발이 커져 약 3개월간 대규모 대중시위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8년 6월 OECD 서울총회, 2010년 11월 서울 G20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합의를 함으로써 한-아세안의 관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전임 정권의 화해협력 기조와는 다르게 '비핵개방 3000'의 기조를 채택함으로써 집권 기간 내내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2010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거부 등이 맞물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구성된 '6자회담'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

**【평가】** 기업의 CEO 출신 최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자원외교'를 펼치며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외교에 적극 나섰으며, G20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선진국가로의 진입에 가깝게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라는 상황을 맞아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야당, 시민단체,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환경파괴이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핵심어】** 이명박/6·3시위/현대건설/서울시장/747 성장/4대강 사업/비핵개방 3000

**【참고문헌】** 청와대 홈페이지; 이명박,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말과창조사, 2008); 이명박, 『신화는 없다』(김영사, 2005); 김영규, 『이명박 정책 비판』(박종철출판사, 2008).

**【사진자료】** 573. 이명박 대통령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 IV

##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1980년대 이래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스포츠 면에서 86아시안, 88하계올림픽, 2002월드컵,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향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통하여 동서냉전의 해소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통문화와 한류음악으로 대변되는 한류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위시한 문화계·스포츠계의 유명인사들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세계 1위의 반도체를 위시하여 세계최초의 CDMA 서비스를 통한 이동통신, 휴대폰, 조선, 첨단과학기술, 첨단 토목기술 등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드높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걸맞게 건강보험제도를 위시한 4대 국민보험망의 구축 및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교육·주택·자연친화적 환경·생활체육 등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대국을 바라보게 되었다.

전 세계는 현재 세계화라는 구조변화의 와중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세계화로 자본·상품·서비스·기술·정보·인력 등의 국가 간, 지역 간 이동과 교류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국경을 넘는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를 촉진하여 세계시장을 넓혀줌으로 세계화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은 많은 나라들에 경제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경제는 국제위상을 높이면서 경제선진화를 달성하여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다방면에 걸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성장일변도의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형적 확장에만 관심을 두었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는 결국 1997년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였고 그 결과 대외적인 개방과 사회 각 부문의 많은 개혁과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선결과제일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의 도래·환경문제·개도국지원·국제평화적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최근 들어 다문화지원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

한다면 결국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환경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는 포괄적 자연보호운동이나 각종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등이 포함되며, 현재 실시 완성단계에 있는 광역생태축 구축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만 강조하다 보면 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전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사회전체의 생산과 소비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도주의적 정신과 지구촌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 주민의 빈곤퇴치와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 및 인적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자 결과이며 또한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 방면에서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각 부문에서 미래비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즉 과거와 다른 기업의 역할 책임, 북한의 비핵화, 남북 간 상생과 호혜의 경제공동체형성, 남북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3가지 비전 아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수립과 이를 통한 평화적 통일문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정치문화, 공정한 사회의 구현, 미래지도자육성, 교육의 선진화, 문화예술을 통한 일류국가달성, 인류평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학문과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선도, 초일류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강화, 녹색성장 등을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인하여 저임금 의존도 어렵고 국내 노동시장 환경이나 노사관계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선진인력과 첨단 기술, 시스템 생산성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시도하여야 할 기로에 서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다시 높이느냐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하락하고 있는 민간투자율을 어떻게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높은 투자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친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민관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과 세계화·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이다. 경제선진화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변화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축복이란 어떤 과

정을 통하더라도 북한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산업화가 남한 측의 선진경제화, 지식정보경제화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이다. 북한과 남한이 우선 경제 분야에서라도 상생관계를 맺는 것이다. 재앙이란 북의 급격한 변화가 계기가 되어 한반도에 국지적 혹은 전면적 평화 실종이 일어나고, 그 후에 결국 외세의 패권적 개입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재분단을 결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지원·촉진·관리하여 재앙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축복이 될 가능성을 최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가 21세기 남북 모두가 당면한 가장 큰 민족적 과제이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	----------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나라로 변모하였다. 그 첫 계기로는 88서울올림픽을 꼽을 수 있다. 1988년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2번째, 세계에서는 16번째로 올림픽 경기대회 개최국이 되었다. 88서울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160개국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 대회규모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동서양 진영 선수단이 모두 참가하여 동서의 이념분쟁·인종차별로 인한 갈등과 불화를 해소시켜 스포츠 교류를 통해 ‘화합’의 기틀을 다졌고 세계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제17회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두 나라의 공동개최 형태로 치러졌으며, 유럽과 아메리카 이외의 대륙에서 개최된 첫 번째 대회였다. 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서 한국 축구는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자발적 응원단 ‘붉은악마’는 전 세계에 한국의 단결과 신명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세계를 주름잡는 문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문화였다. 그런 현상을 뒤집은 것이 한류, 한국문화 열풍현상이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문화권과 베트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던 이후 일본,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드라마·K-Pop·패션 등 한국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백남준·조소미 등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들도 한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 많은 세계의 열성적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기술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세계화 및 초국적 미디어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나 무엇보다 한국문화의 매력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고대로부터 춤과 노래, 각종 놀이를 즐겼으며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 및 종묘제례악·판소리·강릉단오제·강강술래·남사당·영산재·제주 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가곡·대목장·매사냥을 봐도 알 수 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정상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계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인인 반기문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 세계무대에서 한국인은 큰 활약을 하고 있다. 해외이민 2, 3세대의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종사 비율이 증가하고 활동분야 역시 정치, 경제, 언론, 예술,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박재복,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삼성경제연구소, 2005); [www.unesco.org](http://www.unesco.org).

or.kr; 히라타 유키에,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책세상, 2005); 임재해 외,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지식산업사, 2007).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	--------------

대한민국 스포츠는 국민들의 희로애락과 늘 함께해 왔다. 스포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고난 극복의 과정에서 늘 있어왔고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잠재력은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서화합과 세계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2002년 월드컵 유치와 성공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게 되어 국제 스포츠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한국스포츠 100년의 역사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스포츠영웅은 장창선, 이에리사, 양정모, 차범근, 홍수환, 황영조, 박찬호, 박지성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을 넘어서 스포츠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서울올림픽 유치는 제5공화국 정부가 1980년 12월 24일에 올림픽 유치 후보국 등록을 마치고 일본의 나고야와 올림픽 유치 경쟁을 시작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11월 30일에 유치신청서를 IOC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12월 2일 문교부가 유치신청서를 IOC에 접수하고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과는 크게 동서냉전의 해소, 국위선양, 세계 4위의 경기력, 국민화합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에는 월드컵을 유치하였다. 대한민국은 1988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월드컵 유치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은 월드컵 4회 연속 진출국이라는 자부심과 아시아 축구강국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아시아에서 첫 번째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다. 제17회 2002년 한일월드컵은 아시아에서 개최된 첫 번째 월드컵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로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1일까지 31일간 경기가 진행되었다. 한국은 세계 축구 강호들을 물리치고 월드컵 4강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월드컵 길거리 응원은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에 전국의 광장과 길거리에 붉은 악마 응원단과 붉은 옷을 입은 국민들이 함께 열광적으로 응원한데서 시작되었다. 전국이 붉

은 색 물결로 가득했고, 외신들도 놀라서 월드컵에 대한 대한민국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 등 4대 국제 스포츠 대회 모두를 개최한 이른바 '국제 스포츠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다. 현재 국제 스포츠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4개국뿐이며 러시아가 곧 다섯 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포함하여 세계 4대 국제 스포츠대회 모두를 유치하게 되어 국제 스포츠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스포츠코리아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세계스포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평화와 우호증진에서도 큰 역할이 할 것이다.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스포츠의 영웅들

**【소항목】** 한국 스포츠의 영웅들

● 한국 스포츠의 영웅들	
---------------	--

**【정의】** 한국 스포츠영웅이란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대회와 올림픽, 월드컵 등에서 탁월한 운동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성과를 내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도덕성과 책임감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선수를 말한다.

**【인물배경】** 대한민국 스포츠 100년의 역사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스포츠영웅은 장창선, 이에리사, 양정모, 차범근, 홍수환, 황영조, 박찬호, 박지성 등이 있다.

**【활동사항】** 1964년 동경올림픽 자유형 플라이급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장창선(1943~)은 1966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열린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플라이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 재패였다.

1973년 4월 9일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이에리사(1954~)·정현숙·박미라·김순옥 등이 결승에서 일본을 격파하고 구기 종목 최초로 세계제패를 하였다.

캐나다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1976년 7월 31일 레슬링 자유형 페더급에 출전한 양정모 선수는 마침내 금빛 소식을 조국에 전해주었다.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선지 28년, 손기정선수의 금메달 이후 40년 만의 쾌거였다.

차범근(1953~)은 한국선수 최초로 외국에 진출하였다. 그는 서독 분데스리가에 진출하여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 팀을 유럽컵(UEFA) 챔피언 자리에 각각 올려놓았다. 1980년 세계 축구선수 베스트11, 서독 일간지 선정 1985~86시즌 분데스리가 최우수선수(MVP)가 되었다.

홍수환(1950~)은 복싱에서 두 체급을 석권하고 4전 5기의 신화를 만들었다. 1977년 11월 26일 헥토르 카라스키야와의 경기에서, 2회에 4번 다운을 당하고 3회에 상대를 KO 시켜서 WBA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이 되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1970~)는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이후 56년 만에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몬주의 경기장에 골인, 일제강점기에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었다. 특히 올림픽 마라톤 역사에서

아시아권 선수로서는 손기정과 황영조 둘만이 우승을 차지해 그 가치를 더 하였다. 황영조는 1996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마라톤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1994년 1월 당시 한양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찬호(1973~)가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로부터 1백 2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뛰어 들었다. 박찬호는 2년여의 마이너리그 생활 끝에 다저스 간판투수로 성장하여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두 자리 승수를 올리며 메이저리그 안에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시켰다.

박지성(1981~)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의 주역으로 네덜란드 프로리그에 진출하였다. 그곳을 발판으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라는 명문 팀에서 활약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

**【평가】** 한국의 스포츠영웅들은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였다. 고난 속에서 한국이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핵심어】** 한국스포츠영웅/장창선/이에리사/양정모/차범근/홍수환/황영조/박찬호/박지성

**【참고문헌】** 정희준, 『스포츠코리아 판타지』(개마고원, 2009); 이학준, 『스포츠로 세상읽기』(북스힐, 2009); 조명렬, 노희덕, 나영일, 『체육사』(형설출판사, 1997).

- 【사진자료】** 574.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장면  
575. 홍수환  
576.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황영조 선수  
577. 박찬호  
578. 20100516 대한민국-에콰도르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박지성  
579.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남자수영100미터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선수  
580. 김연아 2010올림픽스포츠 초청 아이스쇼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서울올림픽

**【소항목】** 88올림픽 유치전

● 88올림픽 유치전	88올림픽의 성과
88올림픽 개최	

**【정의】** 제5공화국 정부는 1980년 12월 24일에 올림픽 유치 후보국 등록을 마치고 일본의 나고야와 올림픽 유치 경쟁을 시작하였다.

**【배경】**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11월 30일에 유치신청서를 IOC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12월 2일에 문교부는 유치신청서를 IOC에 접수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올림픽 유치는 곧 정권 차원의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치의 무관심과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올림픽 유치에 나서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이 전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1964년 동경올림픽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올림픽유치단을 구성하여 바로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었다.

**【전개】**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멕시코시티, 뮌헨, 몬트리올, 모스크바, LA에 이어 다음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은 4년 전부터 이미 유치활동에 나선 일본 나고야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1964년에 올림픽을 유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시가 처음으로 유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 역시 개발도상국 한국의 서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나고야 시는 이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작업을 오랜 전부터 실시해왔다. 한국보다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올림픽 개최권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정부는 IOC위원들과 잘 알고 있는 박종규를 올림픽 유치단의 합류시켰다. 박종규는 독일 아디다스사의 회장과 만남을 통해서 서울올림픽이 성사되도록 도움을 청하였다. 아디다스 회장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IOC 위원들에게 서울시를 투표하도록 독려했다. 무역협회장 유창순, 현대 정주영 회장, 동아 최원석 회장 등 기업인들을 유치작전에 참여시켜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였다. 재벌 총수들은 자사의 해외지사망까지 총동원하여 유치 활동에 나서게 하였다. 그 결과 52대 27이라는 투표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결과】**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 들었지만 재벌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올림픽 유치를 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스포츠역사에서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처음으로 유치하게 된 것이다.

**【의의】** 서울올림픽 유치는 개발도상국이며 정치적으로 분단국가 상태에서 세계 160개국이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올림픽들과 차이를 가진다. 그 동안 외교관계가 전혀 없었던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동서화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바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대거 불참을 하였고, 4년 후에 LA 올림픽 역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불참하여 반쪽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양쪽 진영이 모두 참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기개를 세상에 알리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IOC/올림픽 유치단/제5공화국/올림픽 유치전/동서화합

**【참고문헌】** 김경훈, 『서울올림픽사』 1·2·3(국민체육진흥공단, 2000); 조명렬·노희덕·나영일, 『체육사』(형설출판사, 1997); 노희덕, 『세계체육사』(서울대출판부, 1999).

**【사진자료】** 581. 19811001 88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는 유치단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서울올림픽

**【소항목】** 88올림픽 개최

88올림픽 유치전	88올림픽의 성과
● 88올림픽 개최	

**【정의】** 1988년 하계 올림픽(1988 Summer Olympics, Games of the XXIV Olympiad)은 1988년 9월 17일~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배경】** 한국은 1978년 제42회 서울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하여 한국의 대규모 경기대회 개최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대회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1979년 '88서울 올림픽 대회 유치 계획의 사회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국민체육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1979년 9월 21일에 올림픽 유치계획을 확정하였다.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하고, 전두환 장군이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올림픽 유치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 정부는 1980년 12월 24일에 올림픽 유치 후보국 등록을 마치고 올림픽 유치 경쟁을 시작하였다.

**【전개】** 1979년 9월 3일 국민체육진흥심의회에서 제24회 올림픽의 서울 유치계획을 의결하였다. 1979년 9월 21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재가하였고, 1979년 10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제24회 올림픽의 서울 유치계획을 정식 발표하였다. 1980년 12월 4일 IOC는 대한민국 서울, 일본 나고야가 후보도시임을 발표하였다. 1981년 서독의 바덴바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한국은 106명의 외교, 경제, 체육 및 기타 지원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보다 일찍이 올림픽 유치전에 나섰던 일본의 나고야시를 52대 27이라는 큰 표차이로 앞서서 서울시가 제24회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통해서 개최되었다. 12년 만에 IOC 회원국 중 대부분인 160개국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다.

**【결과】**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세계 160개국의 참여를 통해서 동서화합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를 맺을 수 있었다. 서울올림픽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경제발전에 발판을 삼아 도

약하게 되었다. 경기력에서 세계 4위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이후의 올림픽에서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의의】** 서울올림픽은 화합, 문화, 복지, 희망과 번영의 올림픽이었다. 첫째, 냉전이 종식되고 동서의 화합하는 올림픽이었다. 세계 160개국에 참여하였고 그 동안 미수교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가 서울로, 서울이 세계로 향하는 올림픽이었다. 서울올림픽은 운동경기이외도 문화예술 마당이 펼쳐진 올림픽이었다. 각국은 자국의 문화예술단을 파견하여 문화올림픽을 형성하게 하였다. 셋째, 복지올림픽이었다. 서울올림픽이후에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어 세계 장애인들의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끝으로 희망과 번영의 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아시아에서 2번째로 올림픽을 유치하여 경제적 도약을 발판을 마련하였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어 들었다. 또한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대회사상 최대 참가 규모와 경기력의 향상 등의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핵심어】** IOC/올림픽 유치단/제5공화국/올림픽 유치전/동서화합

**【참고문헌】** 김경훈, 『서울올림픽사』 1·2·3(국민체육진흥공단, 2000); 조명렬·노희덕·나영일, 『체육사』(형설출판사, 1997); 노희덕, 『세계체육사』(서울대출판부, 1999).

**【사진자료】** 582.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

583.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에 입장하는 기수단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서울올림픽

**【소항목】** 88올림픽의 성과

88올림픽 유치전	● 88올림픽의 성과
88올림픽 개최	

**【정의】**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과는 크게 동서냉전의 해소, 국위선양, 세계 4위의 경기력, 국민화합에서 찾을 수 있다.

**【배경】** 1980년대에 한국의 현실은 개발도상국에 있었다. 당시 올림픽 망국론이 주창되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일본의 동경올림픽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 올림픽이었다.

**【전개】** 대회 휘장은 삼태극 문양이었고, 대회 마스코트는 상모를 쓴 아기 호랑이를 형상화한 호돌이었다. 1988년 9년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잠실경기장을 중심으로 23개 종목의 금메달 241개 놓고 대회가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질서예절과 자동차 홀짝수 제의 실시 등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남자 100m 달리기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으나, 도핑 테스트 결과 금지 양성반응으로 밝혀져 실격되고 금메달을 박탈당하였다. 미국의 매트 비온디가 수영에서 금메달 5개를 따냈다. 동독의 크리스틴 오토는 여자 수영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 대회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여자선수가 되었다. 탁구가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었고, 테니스는 1924년 대회 이후 64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었다. 태권도가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동독의 크리스티나 루딩-로텐부르거는 지난 1988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그 해 하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 동하계 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딴 최초의 여자 선수가 되었다. 수리남의 안토니 네스티는 수영 남자 100m 접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는 흑인 수영선수 최초로 획득한 올림픽 금메달이었으며, 수리남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획득한 금메달이었다. 체조에서 소련의 블라디미르 아르테모프는 금메달 4개를 획득하였고, 루마니아의 다니엘라 실리바스는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결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경제부흥에 이어 민주사회로의 이행

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자신감이 고취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동서화합의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종합성적 4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팀의 성공비결은 선수 육성정책과 종목별 경기단체에 대한 기업의 지원,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의식변화, 체육부창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의의】** 88올림픽의 의의는 첫째는 개발도상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올림픽은 대부분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둘째는 동서냉전을 해소하는 동서화합의 올림픽이었다. 세계 160개국에 참가하였다.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미수교국(전체 32개국)과의 외교관계를 갖게 되었다. 셋째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서울올림픽은 경제적 효과로 26억 달러와 33만 6천 명의 고용창출을 하였다. 그리고 약 1조 8,000억 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올림픽은 세계신기록 33개, 올림픽 신기록 227개 전체 260개의 신기록 내었다. 특히 경기에서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여 160개국 중에서 4위(비공식순위)를 차지하였다.

**【핵심어】** 동서화해/국위선양/ 4위/88올림픽 성과

**【참고문헌】** 김경훈, 『서울올림픽사』 1·2·3(국민체육진흥공단, 2000); 조명렬·노희덕·나영일, 『체육사』(형설출판사, 1997); 노희덕, 『세계체육사』(서울대출판부, 1999).

**【사진자료】** 584. 제24회 서울올림픽 폐회식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2002 한일월드컵개최

**【소항목】** 2002월드컵 유치전

● 2002월드컵 유치전	월드컵 길거리 응원
2002월드컵 개최	

**【정의】**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어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다.

**【배경】** 대한민국은 1988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월드컵 유치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은 월드컵 4회 연속 진출국이라는 자부심과 아시아 축구강국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아시아에서 첫 번째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전개】** 이미 일본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월드컵 유치를 추진하였다. 대한민국은 1989년 11월에 월드컵 유치를 공식발표 하였다. 1990년 10월에 유치위원회 발기인총회를 열었다. 1991년 6월에 200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었다. 1993년 1월에 월드컵 개최 15개 후보도시가 발표 되었다. 1994년에 정몽준은 아시아 쿼터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1994년 11월에 2002년 월드컵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1996년 6월 1일에 FIFA 이사회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한민국, 일본의 공동개최로 결정하였다. 당초 관심을 표명한 멕시코는 유치를 포기하였다. 일본은 일찌감치 월드컵 유치를 준비하면서 아시아권 최초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뒤늦게 유치를 표명하면서 판세가 양자구도로 재편되었다. 1994년 아시아권 FIFA 부회장 선거에서 정몽준이 승리하면서 판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발발】** 1993년 정몽준 국회의원이 제47대 축구협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정몽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002 월드컵 유치를 선언하였다. 1993년 10월 28일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세계적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1995년 마침내 한국과 일본이 FIFA 사무국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FIFA가 한국과 일본의 유치 준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보다 앞서 일본은 1988년 3월에 월드컵 유치 준비에 들어갔다. 국제축구협회(FIFA) 아벨랑제 회장은 일본 유치를 지지하였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의 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2년 6개월 동안 유치를 위해서 뛰었다.

**【결과】** 1996년 5월 31일 2002년 월드컵 개최지를 결정짓는 FIFA 집행위원회의 막이 올랐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벨랑제 회장은 공동 개최 안을 내놓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제17회 2002년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개최가 결정되었다.

**【의의】**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 다른 스포츠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축구는 더 관심이 높았다. 아시아 최강이라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과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대회 유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월드컵 유치에 대한 열정과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부, 경제인들의 공동 활약으로 일본과 함께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는 아시아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월드컵을 유치하였다는 점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이미지와 홍보효과를 가져왔고 월드컵 4강이라는 축구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핵심어】** 월드컵/축구/대한축구협회/FIFA/아시아/축구강국

**【참고문헌】** 김성원, 『한국축구발전사』(살림, 2006); 이정덕, 『21세기 한국의 문화혁명』(살림, 2004); 안민석, 정준영, 『월드컵, 그 열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 2011); 윤상철 외, 『월드컵 신화와 전설』(한울, 2002).

**【사진자료】** 585. 19960531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결정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2002 한일월드컵개최

**【소항목】** 2002월드컵 개최

2002월드컵 유치전	월드컵 길거리 응원
● 2002월드컵 개최	

**【정의】** 제17회 2002년 한일월드컵은 아시아에서 개최된 첫 번째 월드컵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로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1일까지 31일간 경기가 진행되었다.

**【전개】** 축제의 막이 올랐다. 2002년 6월 4일 오후 8시 30분 부산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여 관중이 붉은색으로 경기장을 꽉 채웠다. 전반 26분 황선홍이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유상철이 한 골을 추가하여 2대 0으로 폴란드전에서 승리하였다. 대한민국에게는 월드컵 첫 승이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첫 출전한 뒤 48년 만에 거둔 감격의 1승이었다. 2차전은 미국과 일전을 치르게 되었다. 결과는 1대 1 무승부였다. 미국이 전반 24분에 매티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33분 안정환 선수는 머리로 동점골을 넣었다. 3차전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였다. 포르투갈은 D조 최강이었다. 후반 30분에 21살의 박지성이 이영표의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은 뒤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 슈트를 쏘았고 골인으로 연결되었다. 대한민국은 1대 0 승리를 얻어 16강을 진출하였다.

2승 1무로 조 1위로 16강에 올라 강호 이탈리아와 연장전까지 가는 힘든 경기에서 연장전 후반 12분 이영표의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에서 올려준 볼을 안정환이 돌고래처럼 뛰어오르며 헤딩슛을 성공시켜 승리하게 되었다. 한국 16강전에서 너무 체력이 바닥이 드러났다. 120분 동안 뛰었기 때문이다. 8강전에서 스페인을 만나 연장전후반을 포함한 120분간의 경기는 득점 없이 끝났다. 승부차기에서 황선홍, 박지성, 설기현, 안정환, 홍명보가 킥을 성공시키고 이운제의 선방으로 4대 3으로 승리를 하였다. 4강 독일과의 경기에서 한국선수들은 체력의 고갈로 인하여 1대 0으로 패했다. 터키와 3, 4위전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해 4위로 한일월드컵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한 여름 밤의 축제는 끝났다.

**【결과】** 2002년 대회의 정식 명칭은 2002년 한일 월드컵(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이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에서 예선 탈락을 하는 이변이 생겨났고, 대신에 아프리카 강호 세네갈과 미국이 8강에, 한국과 터키가 4강에 들게 되었다. 제17회 한일월드컵대회는 2002년 5월 31일~6월 30일까지 열렸다. 총 참가국 수는 지역예선전(199국 참가)을 통제한 5개 대륙의 32개국이다. 20개의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기간 중 총

득점은 64경기 161골이며, 평균 2.52골이 들어갔다. 경기장에서 관람한 총 관중 수는 2,705,197명이며 평균 42,269명이다. 브라질이 통산 5회째 우승을 하였고, 독일이 2위 터키가 3위를 차지하였다. 최다득점 선수로는 브라질에 호나우두(8골)가 차지하였고, 최우수 선수로는 독일의 골키퍼 올리버 칸에게 돌아갔다. 스타 플레이어상은 브라질에 호나우두 선수가 받았다.

**【의의】** 2002년 한일월드컵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월드컵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 등에서 열렸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단 한 번의 월드컵도 개최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은 축구 4강 신화를 만들었다.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월드컵 1승과 16강 진출을 염원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세계적인 강호들은 물리치고 4강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국민화합을 가져왔다.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세대, 계층, 남녀, 지역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월드컵을 통해서 온 나라의 하나로 화합과 통합할 수 있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전국을 덮었고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응원단이 길거리를 매우기도 하였다.

**【핵심어】** 2002 월드컵/빨간색 유니폼/길거리 응원/4강 신화/대한~민국

**【참고문헌】** 김성원, 『한국축구발전사』(살림, 2006); 안민석·정준영, 『월드컵, 그 열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 2011); 윤상철 외, 『월드컵 신화와 전설』(한울, 2002).

**【사진자료】** 586. 2002월드컵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2002 한일월드컵개최

**【소항목】** 월드컵 길거리 응원

2002월드컵 유치전	● 월드컵 길거리 응원
2002월드컵 개최	

**【정의】** 월드컵 길거리 응원은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에 전국의 광장과 길거리에 붉은 악마 응원단과 붉은 옷을 입은 국민들이 함께 열광적으로 응원한데서 시작되었다.

**【배경】** 대한민국 공식 응원단 붉은악마가 주축으로 전국에 국민들이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붉은악마가 되어 길거리에 나와서 함께 응원전을 펼치게 되었다. 전국이 붉은 색 물결로 가득했고, 외신들도 놀라서 월드컵에 대한 대한민국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사항】** 처음에 국가대항전 축구경기에서 시작되어서 월드컵 기간 동안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거대한 길거리 응원으로 이어졌다. 나중에 규모가 확대되고 길거리 응원이 하나의 응원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광장과 길거리 응원은 독일월드컵과 남아공월드컵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독특한 응원문화로 정착 되었다.

**【경과·변천】** 월드컵대회 이전부터 국내에서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국민들의 열원이 뜨겁게 끓어 올랐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월드컵 축구에 참가해서 1승도 얻지 못하였다. 한국은 16강 진출과 1승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 한국과 폴란드전이 시작되었고 응원에 참가한 인원은 약 49만 8,000명이었다. 한국과 미국전의 응원 인원은 76만 9,000명이었고,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에는 278만 명이 응원에 참가하였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에는 420만 명이 길거리 응원에 참여하였다. 한국과 스페인전의 길거리 응원인원은 480만 명이었고, 한국과 독일전의 응원인원수는 650만 명이었다. 한국과 터키와의 응원인원수는 230만 명이다.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많은 관중들이 집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국가대표 경기에 열띤 응원전을 펼쳐보였다. 매 경기마다 전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어갔다. 서울 시청광장에서 비롯된 광장응원은 전국의 응원문화를 변화하게 하였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응원하던 형태에서 광장이나 경기장,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그동안 금기시 해왔던 태극기를 이용한 응원문화와 붉은 색 옷을 입고 동참하는 응원문화는 화려함과 열정을 볼 수 있는 응원이었다. 대

형 TV 화면을 보면서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고, 대한~민국을 큰 소리로 외치며 대한민국 전체를 합성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의의】**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보여주었던 월드컵 길거리 응원은 월드컵 축구역사에 길거리 응원이라는 새로운 응원문화와 그 열정을 기록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동안 경기장과 TV로만 관람과 응원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길거리에 온 국민이 모여서 대형화면으로 중계되는 방송을 보면서 함께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의 월드컵 축구 응원문화는 길거리 응원이라는 하나의 전통으로 정형화되었다. 월드컵이 있는 날이며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광장에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월드컵의 성공은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보여준 길거리 응원은 월드컵의 정신을 잘 구현한 성공적인 응원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축구의 힘이라 할 수 있는 화합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을 통해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만남과 소통의 연대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가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 지역과 세대, 성별을 넘어서는 대동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길거리 응원/응원문화/붉은 악마/붉은 색 유니폼/대한~민국/태극기

**【참고문헌】** 이순형, 『붉은 악마와 월드컵』(서울대출판부, 2005); 신동민, 『축구 서포터스 그리고 붉은악마』(맥스미디어, 2005).

**【사진자료】** 587. 2002월드컵 시청 앞 광화문 거리일대의 응원일과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전시항목】** 대한민국 그랜드 슬램 달성

**【소항목】** 대한민국 그랜드 슬램 달성

● 대한민국 그랜드 슬램 달성	
------------------	--

**【정의】** 한국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 등 4대 국제 스포츠 대회 모두를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다.

**【전개】** 현재 국제 스포츠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4개국뿐이며 러시아가 곧 다섯 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하계 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포함하여 세계 4대 국제스포츠대회 모두를 유치하게 되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1988년 하계올림픽(1988 Summer Olympics, Games of the XXIV Olympiad)은 1988년 9월 17일~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2년 만에 IOC 회원국 중 대부분인 160개국에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다. 서울올림픽은 세계신기록 33개, 올림픽 신기록 227개 전체 260개의 신기록 내었다. 특히 경기에서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여 160개국 중에서 4위(비공식집계)를 차지하였다.

제17회 한일월드컵축구대회는 2002년 5월 31일~6월 30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총 참가국 수는 지역예선전(199국 참가)을 통제한 5개 대륙의 32개국이다. 경기는 20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기간 중 총 득점은 64경기 161골이며, 평균 2.52골이 들어갔다. 경기장에서 관람한 총 관중수는 2,705,197명이며 평균 42,269명이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공식 명칭은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이다. 2011년 8월 27일~9월 4일(9일간)까지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42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하였다. 참가규모는 212개국 6,000여 명(선수 3,500명, 기자단 2,500명)이 참가하였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 국운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선진시민의식을 고취하게 되었다.

**【결과】**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은 전 세계 160개 참가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 세계 신기록(33개)과 올림픽 신기록(227개)이 수립되었다. 2002년 월드컵은 세계 32개국이 지역예선전을 통해서 결전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였다. 2011년 대구세

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철저한 대회 준비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의의】**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제 스포츠대회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스포츠 강국과 선진국으로 그 위상과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세계스포츠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한국은 세계스포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핵심어】** 서울하계올림픽/한일월드컵/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평창 동계올림픽

**【참고문헌】** 정희준, 『스포츠코리아 판타지』(개마고원, 2009); 조명렬, 노희덕, 나영일, 『체육사』(형설출판사, 1997); 안민석·정준영, 『월드컵, 그 열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 2011).

**【사진자료】** 588. 20110707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정

**【작성자】** 이학준(한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21세기는 문화와 관련된 산업이 두드러지는 ‘문화의 세기’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 과거 문화수입국에서 현재 문화생산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국내 문화상품을 수출하기는 고사하고 외국영화와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영하는 문화수입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문화상품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문화권과 베트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던 이후 일본·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중동을 거쳐 아프리카·중남미·유럽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류 열풍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는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을 들 수 있다. 특히 <겨울연가>는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간 문화교류에 새로운 장을 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장금>의 경우 대만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것을 시발로 일본·중국·홍콩·베트남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유럽·아랍·미주까지 진출했다. 최근에는 K-pop 열풍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그 외 캐릭터·전통요리 등 다방면으로 한류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남준·조수미 등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들도 한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한류 열풍에는 전통한국문화의 저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은 고대부터 춤과 노래, 각종 놀이를 즐겼으며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 및 종묘제례악·판소리·강릉단오제·강강술래·남사당·영산재·제주 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가곡·대목장·매사냥을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은 일찍이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미디어혁명을 이끈 민족이다. 한류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유교적 요소를 잘 활용하여 인기를 얻게 되었다. 특히 <대장금>은 유교적 미덕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음식과 의술로 인해 더 빛을 받았다. <대장금>에서 나오는 음식은 『산가요록』(1450), 『음식디미방』, 『동의보감』 등의 문헌을 통해 조리법이 유추되었다. 따라서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재복,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삼성경제연구소, 2005); www.unesco.or.kr; 남운성,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高麗)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直指)"의 인류 문화사적 의미」, 『중원문화논총』 9권(2005);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펜타그램,

2005); 임재해 외,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지식산업사, 2007); 히라타 유키에,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책세상, 2005).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전시항목】**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소항목】** 문화유산,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

● 문화유산,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
----------------------

**【정의】** 세계유산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유산, 이들의 성격을 합한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하는 문화유산이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구전 또는 무형유산이다.

**【배경】** 1950년대 이집트에서 나일 강 하류에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 상류에 있는 누비아 유적지와 역사유물이 침수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한 국가의 범주를 벗어나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국제사회가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1972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면서 세계유산목록을 작성하고 보존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7년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여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같은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시행】** 유네스코는 1976년 설립된 세계유산위원회(WHC)를 통해 세계유산을 선정하고, 승인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5년부터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했다. 한편 1997년부터는 각 국가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등재후보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사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기록유산을 등재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97년 총회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

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2003년에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면서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결과】** 1995년 유네스코 베를린 회의에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등재된 이후로 창덕궁, 수원화성(1997),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하회·양동 역사마을(2010) 총 9점의 한국문화유산이 등재되었다. 그리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2001),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 조선왕조의궤(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日省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이 등재되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歌曲), 대목장(大木匠가),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 짜기(2011)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중부내륙 산성군, 대곡천 암각화군,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강진 도요지, 익산 역사유적지구, 낙안읍성, 남한산성, 외암마을, 전남 신안·영광 염전(문화유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서남해안 갯벌, 우포늪(자연유산)이 유네스코에 상정되어 등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2004년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개성 역사유적지구, 평양 역사유적지구(문화유산), 구장군 일대 동굴, 칠보산(자연유산), 금강산 및 일대 역사유적, 묘향산 및 일대 역사유적(복합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올려놓고 있다.

**【핵심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참고문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홈페이지; 최준식 외 지음,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열두 가지』(시공사, 2010).

- 【사진자료】** 589. 경주 석굴암 본존(국보 제24호)  
590. 2011사적 제6호인 황룡사지에서 바라본 경주 남산  
591.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하회마을 찾은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  
592. 경주 남산의 국보 제312호인 칠불암 마애석불의 설경  
593. 201008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양동마을  
594. 국보 제25호인 태종무열왕릉비  
595. 훈민정음  
596.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 한류

**【소항목】** 한류

● 한류	전통문화와 한류
한류음악(K-Pop)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류 드라마	

한류는 21세기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유통되며 반향을 일으킨 문화현상을 일컫는다. 1990년대 중국에서 <사랑이 뭐길래>의 인기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일본에서 <겨울연가>로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 <대장금> 열풍으로 대세를 굳혔다. <사랑이 뭐길래>는 1억 5천만 명이 시청했으며, 사실상 이 드라마가 1990년대 중국에 방영되면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은 일본에 갔을 때 공항에 5,000명이 넘는 일본 팬이 마중나왔는데 그만큼 환영인파는 사상 처음이라고 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방송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류 소식을 보도하고 있으며, 2002년 NHK가 위성으로 겨울연가를 방송했는데, 시청자 반응이 좋아서 같은 해 12월에 재방송했고 또 시청자의 강한 요청으로 지상파에서 재방송을 또 했다. 시청률은 일본 드라마에서 있을 수 없는 20%가 넘는 비율이었다고 한다. 네 번째로 방송되었을 때는 한국 배우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자막처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일본 길거리 어디가나 겨울연가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현재 한류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교, 불교,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동남아지역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드라마 이외에 가요, 춤, 요리 등 다방면으로 한류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K-Pop 열풍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류’란 말은, 중국에서 HOT 노래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클론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중국 『北京青年報』에서 1999년 11월 19일 ‘한류’라는 용어를 쓰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한류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 많은 중국인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속된 한국정부의 활동보다 HOT의 활동이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일본인들은 <겨울연가>를 보고 나서 일본사회의 공동체 해체, 재일 한국인 문제, 한일 간의 역사 관계,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언론들은 한국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 자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나 한국계 동포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학자들은 한류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함으로써 국가 간 교류 및 평화증진에 기여

한다고 본다. 또한 한류가 매개가 되어 동아시아인들이 유례없이 상호소통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류로 인해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의 다른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류로 조성된 소통의 계기를 잘 살려서 참다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펜타그램, 2005); Ko, Jeongmin, "Trends and Effects of the Korean Wave," *Pop Culture Formation across East Asia*(Jimundang, 2010); 이은숙,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3권 2호(2002); 오기현, 「한류, 그 실체는 무엇인가?」, 『통일한국』(2002년 10월); 정수영, 「열성 한류 팬을 통해 본 한류의 의미 및 한일관계 전망」, 『미디어, 젠더 & 문화』 11호(2009).

**【사진자료】** 597. 20051209 이집트 카이로 아인삼스대학 학생들의 한류 열기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 한류

**【소항목】** 한류음악(K-pop)

한류	전통문화와 한류
● 한류음악(K-Pop)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류 드라마	

한류음악 즉 K-pop은 대중적 인기를 얻는 한국의 유행음악을 일컫는다. 영미권의 대중음악을 팝(pop)이라고 부르고, 영미권 이외의 국가의 대중가요의 경우 국가 이니셜을 붙여 나타내는 데서 K-pop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중가요는 J-pop, 중국의 경우 C-pop, 태국의 경우 T-pop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대중가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된 이후에 K-pop이라는 명칭이 한국 이외 국가에서 한국의 대중가요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최초의 한류음악은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HOT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중국에서는 HOT 음반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클론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중국 『北京青年報』에서 1999년 11월 19일 ‘한류’라는 용어를 쓰면서 한국 대중가요의 인기를 보도했다. 많은 중국 청소년들은 HOT 노래의 선율이나 춤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에도 열광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소녀시대가 ‘Gee’로 일본 오리콘 싱글 차트 일간 1위에 올랐으며, 카라도 오리콘 차트에 오르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현재 한류음악은 중국 등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원더걸스는 ‘Nobody’로 미국 진출을 선언한 뒤, 한국인으로서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 76위로 진입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빌보드차트 내 케이팝(K-POP)차트에서 1위를, 월드앨범 차트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2011년 6월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K-pop 티켓 가격은 최고 111유로(약 17만 원)나 됐지만 르 제니트 드 파리(Le Zenith de Paris) 공연장은 7,000여 팬들로 가득 찼다. 이어 소녀시대·동방신기·슈퍼주니어·보아·샤이니·에프엑스·강타 등이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하여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고 일본 중국 등의 언론도 K-POP 스타들의 뉴욕 공연을 대서특필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K-pop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한국 가수들이 다른 나라 가수와 달리 여러 장르의 음악을 복합적으로 트레이닝 했으며, 춤·외모·노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을 갖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기획된 스타 트레이닝 시스템은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는 것으로 10대 때부터 5년 이상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그같은 노력의 결과 K-pop은 현재 드라마·영화·게임 등 다른 한류 상품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K-pop의 ‘한류지수

(호감도)는 방송·영화·게임은 물론이고 국가 한류지수도 뛰어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의 한류지수는 107로 국가(101)·게임(101)·방송(100)·영화(94)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참고문헌】** 이은숙,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3권 2호(2002); 최준용, 「소녀시대, 日 오리콘 1위 달성. 세 가지 중요한 의미는」, 『아시아경제』, 2010.10.27; 『주간한국』 2011.11.2.

**【사진자료】** 598. 201108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K-POP 콘테스트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 한류

**【소항목】** 한류드라마

한류	전통문화와 한류
한류음악(K-Pop)	한류의 경제적 효과
● 한류 드라마	

아시아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국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방영되면서 한류드라마 열풍이 시작되었다. <사랑이 뭐길래>는 1억 5천만 명이 시청했으며 최고시청률이 15%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외국드라마 시청률이 2%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겨울연가>는 한류드라마의 폭발적 인기를 드러낸 작품이었다. 2002년 NHK가 위성으로 겨울연가를 방송했는데, 시청자 반응이 좋아서 같은 해 12월에 재방송했고 또 시청자의 강한 요청으로 지상파에서 재방송을 또 했다. 시청률은 일본드라마에서 있을 수 없는 20%가 넘는 비율이었다고 한다. 네 번째로 방송되었을 때는 한국 배우 목소리를 그대로 싣고 자막처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일본 길거리 어디가나 겨울연가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주인공 배용준은 '윤사마 신드롬'을 낳았을 정도인데, 그가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일본 팬이 마중나왔는데 그만한 환영인파는 사상 처음이라고 뉴스가 보도했을 정도였다. 2003년 방영된 <대장금>은 중국에서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일본·대만 등 아시아를 넘어 중동·아프리카까지 64국에서 방송되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란에서 <대장금>은 시청률 90%를 넘는 기록을 세웠으며 <대장금>이 방송될 때 거리에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한국드라마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해질 정도이다. 국내에서 저조한 시청률에 머물렀던 드라마가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2011년 6월 28일 종영한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국내 시청률은 저조했지만 중국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면서 화제가 됐다. 대만·중국·일본 등 최초로 한류드라마 붐을 일으켰던 곳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적이 되었다. 대만의 경우,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의 인기순위는 현지에서도 거의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인기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 방송에서 한국드라마 방영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후 중국 팬들은 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가 중국 현지에서도 곧바로 인기를 얻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초기 한류가 주부들 등 중장년층에 퍼져 있었다면 이

제는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극이나 멜로 장르와 더불어 <꽃보다 남자>, <미남이시네요> 등 트렌디한 드라마가 청소년층에서 인기다. <미남이시네요>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첫 방영 후, 재방송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3번이나 재방송됐다. 드라마 속 가수로 열연했던 장근석은 일본 현지에서 가수로 데뷔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새로운 한류 스타로 떠오른 장근석은 '근사마'로 불리며 '포스트 온사마'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문헌】** 안재순, 「한류와 유교」, 『유교사상연구』 24집(2005); Ko, Jeongmin, "Trends and Effects of the Korean Wave," *Pop Culture Formation across East Asia*(Jimundang, 2010); 이은숙,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3권 2호(2002);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공감』 120호(2011.8.10); 『아시아투데이』.

**【사진자료】** 599. 20100312 TV드라마 '겨울연가'의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의 일본인들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 한류

**【소항목】** 전통문화와 한류

한류	● 전통문화와 한류
한류음악(K-Pop)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류 드라마	

한류 열풍의 원인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한 특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한국문화는 해양문화와 대륙문화가 접목되어 이루어진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오랜 변방살이와 험하고 굴곡진 역사로 인해 ‘관계지향’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역동성, 인터넷 쌍방향문화, 역동적인 문화생산력, 서구문화를 중역해낸 경험 등도 한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일본문화의 열풍을 일컫는 ‘일류(日流)’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일류에 비해 한류는 한국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전에 일본은 각국의 현지화 모델에 따라 대중문화를 수출했으나 한류는 ‘한국산’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유교적 요소를 잘 활용하여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다. 한국드라마 등의 주제와 소재가 아시아 현지인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된 것은 아시아적 가치 즉 유교문화를 벗어나지 않아 수용자에게 거부감을 덜 주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대장금>에서 유교의 원형을 보았고 그로 인해 자국의 전통과의 연결을 느낀다고 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한국 드라마가 “진솔한 생활모습, 진한 인정과 세태, 소박한 감정 표현”을 보여준다고 했으며, <사랑이 뭐길래>와 <대장금>은 유교문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대장금>의 경우 절제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줌으로서 온 가족이 모여 같이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드라마라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한국드라마의 장점으로 꼽는 것은 인간 감정에 대한 섬세한 표현,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인간에 대한 따뜻함, 노인과 부모에 대한 공경과 예의,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 복잡한 갈등 상황, 권선징악에 근거한 명확한 결론에 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을 들었다.

한국의 전통음식과 의술도 한류에 보탬이 되었다. <대장금>에서 나오는 음식은 조선 초기의 의관을 지낸 전순의의 『산가요록』(1450), 안동장씨 부인의 『음식디미방』, 허준의 『동의보감』 등 조리서·의서·농서와 같은 문헌을 통해 식재료의 활용이나 조리법이 유추되었다. 무엇보다 『대장금』 스토리의 주제 자체가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왔다. 또한 반대로 한류드라마가 다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즉 <대장금>은 한국의 궁궐·한식·한복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따라서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고문헌·민화·왕릉·의궤·궁중연회 등 기록문화와 유적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통합적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펜타그램, 2005); Ko, Jeongmin, "Trends and Effects of the Korean Wave," *Pop Culture Formation across East Asia*(Jimundang, 2010); 이옥연, 「한류와 동아시아의 미래」, 『창작과 비평』 131호(2006);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한류」, 『중국현대문학』 42호(2007); 서은숙, 「다문화시대 한류의 정체성과 방향」, 『인문콘텐츠』 14호(2009); 『연합뉴스』 2011.11.9.

**【사진자료】** 601. 20070822 외국인들의 사물놀이 배우기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전시항목】** 대중문화 한류

**【소항목】**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류	전통문화와 한류
한류음악(K-Pop)	●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류 드라마	

한류는 한국의 대표적 산업이다. 한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수출 효과 노릇을 특히 해내는 문화산업의 수출 첨병이다. <겨울연가>는 문화관광부(2004)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단일 드라마로 일본·중국·대만 등 10여 개국에 수출되어 총 1,920천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일본에서만 5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장금>은 중동·아프리카·유럽을 포함하여 60여 개국에 수출되었고 광고·음악·캐릭터·한식·한복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 약 3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대장금 테마파크는 2006년 한 해만 35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각지에 한국 드라마가 공식 수출되면서 드라마 한류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류음악, 즉 K-pop도 큰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2011년 6월 10일 프랑스에서 있었던 K-pop 공연 티켓은 최고 111유로(약 17만 원)나 됐지만 르 제니트 드 파리(Le Zenith de Paris) 공연장은 7,000여 팬들로 가득 찼다. 이날 공연을 주최한 기획사는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1년 7월 BBC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삼성·현대·LG 등 대기업에서 한류로 바뀌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BBC는 카라·소녀시대 등 K-pop의 열풍을 예로 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 한류 스타가 모델로 나오는 상품의 매출 증가 등을 자세히 전했다. 2010년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음반 판매로만 1,300억 원의 수입을 올려 일본 내 모든 가수를 통틀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일본 내에서 카라와 소녀시대의 2010년 음반 매출도 300억 원이 넘었다. K-pop 등의 인기에 따른 국가 브랜드 제고, 한국 상품 호감도 상승, 한국 관광 등 경제적 연관효과는 한 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액수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4만 대 판매분과 맞먹는 액수다.

문화관광체육부의 '2010 콘텐츠 산업 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한국은 콘텐츠 산업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역전됐다. 콘텐츠 산업 수출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 규모는 일본이 6억 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5억 8,000만 달러) 동남아(4억 6,000만 달러) 북미(3억 9,000만 달러) 순이었다. 또 2007년부터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동남아 62.7%, 일본 36.3%, 중국 26.8%였고 유럽도 33.9%나 됐다.

캐릭터 상품도 한류 열풍을 이끌며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2009년 총 82개국에 수출된 '뽀로로'는 2,000여 가지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돼 판매 중이다. 지난 해 말까지 해외에서만 1,8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110여 개국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뿌까'는 현재 3,000여개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졌으며,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지난 해 88억 원에 달했다.

한류열풍과 더불어 관광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1년 상반기 동안 433만 명이 한국을 찾았고, 지난 8월에는 외국인 관광객 97만 7,000명이 입국해 사상 처음으로 월 90만 명을 돌파했다.

**【참고문헌】** 신진호, 「중국 내 한류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34호(2005); KDI, 『나라경제』(2009); 『조선일보』 2011.10.13; 『주간한국』 2011.11.12.

**【사진자료】** 602. 200411 도쿄 긴자거리에 걸린 한류스타의 포스터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전시항목】**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인

**【소항목】**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인

●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인	
-----------------	--

**【정의】**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인은 세계 각지로 진출하여 음악·미술·스포츠·정치 및 외교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고, 이들은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위대함을 알렸다.

**【인물배경 사상·활동사항】**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들은 우선 음악의 경우 성악가 조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정명훈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정명훈은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로서 누나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첼리스트 정명화와 피아노 3중주단인 정 트리오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1984년에는 자르브뤼켄 방송 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발탁됐다. 1989년에는 바스티유 감옥 부지에 새로 건립한 오페라극장의 전속 오페라단인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현 파리 국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부임했고, 신축된 오페라극장의 개관 공연에서 베를리오즈의 대작 오페라 ‘트로이인’을 상연해 호평을 받았다. 2000년에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에 취임했고, 이듬해에는 신성일본 교향악단을 흡수해 재구성된 동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특별예술고문으로 초청되었다. 2005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임명되었고, 2010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

스포츠의 경우 우선 독일에서 ‘차붐’ 열풍을 일으킨 차범근 선수를 들 수 있으며 이후 영국 프로축구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들 수 있겠다. 차범근 선수는 1970년대 초반 만 19세로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다. 1977년 한국 대 말레이시아전에서 종료 5분 전 역전 3골의 소나기 골을 넣어 축구의 전설을 만들었다. 그는 세계 최고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가서 큰 활약을 하여 ‘차붐’이란 애칭을 낳았다. 박지성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당시 대표팀 거스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PSV 아인트호벤의 감독으로 이동하자, 그의 부름을 받고 이적하였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박지성은 이후 맨유의 영입제의를 받고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함으로써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청용·지동원 등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였고, 기성용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는 등 후배 선수들의 해외진출에 모범적 사례가 되었을 뿐 아니

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첫 출전한 아시아 선수가 되는 등 한국축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정치 및 외교분야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사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들 수 있겠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1944년에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났으며, 충주중학교와 충주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충주고등학교 재학 시절 미국에 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일로 인해 외교관의 꿈을 품게 되었다. 1970년 2월에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외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3월에 정부 부처인 외무부(현 외교통상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33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2006년 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당선되어 2007년부터 업무를 시작, 현재 재임 중이다. 2011년,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2012년 1월 1일부터 5년간 연임하게 되었다.

**【평가】** 정명훈·조수미·박지성·김연아·반기문 등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인은 세계로 나아가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능력을 발휘하여 세계인에게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핵심어】** 세계 속의 한국인/정명훈/박지성/반기문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정명훈」 [www.naver.com](http://www.naver.com); 다음 백과사전, 「반기문」 [www.daum.net](http://www.daum.net);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및 스탭-박지성」, [www.manutd.kr](http://www.manutd.kr); 피플조선, 「정명훈」, 「박지성」, 「반기문」, [people.chosun.com](http://people.chosun.com); 『동아일보』 2006.11.26.

- 【사진자료】** 603. 2010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604. 199903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605. 200205 월드컵 경축 전야제 무대에서 열창하고 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606. 1983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  
 607. 20040517 세계 첫 히말라야 15좌를 정복한 엄홍길

**【작성자】** 이나미(고려대 강의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서울올림픽과 스포츠 코리아	●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세계 속의 한류, 한국문화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는 300만의 재외국민과 400만의 외국국적동포 등 약 700만 명이상의 재외동포가 흩어져 살고 있다. 1997년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외동포라는 공식용어가 자리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 또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재외동포사회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시대 생존을 위해,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나 나라 밖으로 나간 한인들이로, 한민족의 해외이주사는 수난의 역사였다. 20세기 초반 한국사회는 격변의 시기였다. 국내외 정치세력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동으로 농촌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외세의 침탈로 나라는 국망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한국민은 중국 대륙과 일본, 하와이, 미주본토, 멕시코 등지로 이주하여 나라 밖에 한국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초기 생활이민으로 시작된 중국 동북지역과 시베리아의 동포사회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고 이들 지역의 이주민들은 독립운동 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들의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루었고 기꺼이 독립운동의 자금원이 되었다.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독립의 날을 염원하며 힘겹게 투쟁한 한인들의 정착 목표는 독립항쟁을 준비하며 물질,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급증하자,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귀화한인들에게 생활상의 혜택을 보장하며 귀화와 동화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이주한인들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국내로 진공하여 일제를 한국에서 내몰아 버리고 독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향해 동포사회를 굳건한 민족의식으로 결집시켜 나갔다.

나라 밖으로 나간 한인들은 스스로 자치단체를 만들고 준국가적인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한인들은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하여 교육·산업의 진흥을 꾀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공동체를 이루어나갔다. 이주민 공동체가 정착하면 가장 먼저 근대교육이 이루어졌음은 한인 이주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 근대민족교육은 한국인의 세계관을 넓혀주었고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항일투쟁의 정신적인 기반이 되어주었다.

동북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주로 농사에 종사했으나 미주와 일본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주로 노동에 종사하였다. 낫선 땅에서 도전과 불굴의 정신으로 새

삶을 개척한 한인의 이민사는 인간승리의 역사이다. 그들은 당대가 아닌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였고 자유와 독립이라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다. 자신보다 조국과 민족을, 당대보다 후세를 생각하며 살아간 한인공동체의 삶은 세계에 유래 없는 사례이다. 오늘날 재외동포사회는 식민지적 상황이 종료되고 과거처럼 조국 독립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사라지면서 공동체의 의미 또한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나라밖 재외동포는 한민족사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그리고 미래다. 이들의 존재는 한민족의 열린 시대를 열어나갈 한민족의 자신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이들 재외동포들과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사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중국 동북지방

●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의 3개의 성을 포함한 지역을 말하며 과거 ‘만주’라고 불렀던 지역이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한인의 동북지역 이주는 명말청초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이주는 19세기 중엽부터이다. 이주민들은 백두산정계비문을 근거로 하여 간도일대는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다. 조선정부는 1897년 서북변계관리사를 임명하고 간도지역에는 1903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한인이주민을 관할하였다. 이범윤은 간도지역에서 청국 관리가 한인을 지배하려 하자 층의대를 모집, 사포대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대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7년 8월 용정촌에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설치하고 한인들을 보호를 구실로 간도영유권을 문제 삼고 1909년 9월, 청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체결로 일본은 안봉선(安奉線) 철도부설의 이권을 차지하고 그 조건으로 한국과 청국 간에 두만강 국경을 인정하여 간영유권을 청국에게 넘기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이주한인들은 중국 동북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여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 토지를 빼앗기고 농촌으로부터 유리된 농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동북지역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활동영역이 개척되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위기에 몰린 일제는 만주침략으로 돌파구를 열고 만주국이 건립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내 과잉인구의 해소책으로 한인에 대한 만주집단지주가 요구되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집단이주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안전농촌’, ‘집단부락’의 이름으로 대규모의 이주촌이 형성되었다.

광복 전 동북지역에는 약 230만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약 80만의 한인들이 한반도로 귀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130여만 정도의 한인들이 중국 동북지역에 남아있게 되었다. 중국동포들 대부분은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그중에서 길림성과 길림

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동북지역은 다른 지역 동포들과는 달리 집거구내에서 민족구역자치와 촌민자치를 하고 있다. 동북지역 조선족의 가장 기층단위 집거구인 촌(村)은 거의 대부분 조선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는 연변자치주에 1,000여 개, 흑룡강성에 500여 개, 길림성에 연변을 제외한 산거지구에 300여 개, 요녕성에 260여개, 내몽고자치구에 30여 개의 조선족촌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인구이동이 진행되면서 동북지역의 조선족 집거구가 약해져 해체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북경, 상해, 청도, 대련 등 대도시에는 이주조선족으로 형성된 코리아타운이 성장하고 있다.

조선족 집거구에 인구수가 급격히 줄면서 조선족 민족자치권 문제와 인재유출, 그리고 농촌경제 위기 등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국 내의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이 중국이라는 다민족사회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음은 조선족 집거구를 형성하고 공동체적인 사회, 경제생활을 하며 조선족학교의 민족교육으로 민족언어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동북지역 내에 조선족 학교들이 폐쇄되어가고 전통적인 민족교육은 해체위기를 맞이하였다.

1992년 한국과 중국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이후 한국인과 결혼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조선족이 늘어난 반면, 동북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한국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현규환, 『韓國流移民士 上』(어문각, 1967); 박영석,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일조각, 1982); 김춘선, 「광복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정착과 국내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8(2004); 최우길,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변화, 위치와 역할」(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사진자료】** 608. 1999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민속공연

609. 20071130 제3회 전중국한국인회 회장단교류회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미국, 캐나다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2011년 현재 미국동포 수는 2,176,998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29.95%를 차지한다. 한민족의 공식적인 첫 이민은 미주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미주 하와이로 간 첫 이민단 121명(이중 86명만 상륙)을 시작으로 한국정부가 1905년 7월에 이민을 금지하기까지 총 65척의 선편으로 7,226명의 한인이 하와이로 이민하였다. 이들에 앞서 하와이에 처음으로 입국한 한인은 1899년 인삼장수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 이민국에 중국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민국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기록된 이는 1901년 1월 9일에 하와이에 입국한 류두표였다. 이민선을 타고 온 한인들은 하와이·마우이·오아후·카우아이 등 4개 섬 도처에 산재한 30여 곳의 사탕수수농장으로 분산, 고용되었다. 이들은 한달 평균 25일 중노동했지만 얻은 수입은 고작 16달러 정도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겨운 노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자치조직인 동회(洞會)를 조직해 서로를 격려하며 하와이에 정착하였다. 하와이 농장이민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도시로 진출하였고 나아가 미주본토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미주본토로 이주한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각 지방에 거주하였고 그중에는 동진하여 콜로라도, 덴버, 네브라스카의 링컨, 헤스팅스 등 중부지방에까지 진출하여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았다. 한편 유학을 목적으로 미주본토로 입국한 유학생들은 조국이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위기에 처하자 귀국을 포기하고 미주에 남아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미주에는 1903년 8월 하와이 신민회가 결성된 이래 9월에는 북미 샌프란시스코에 북미상향친목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20여개의 한인 민족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한인단체들은 한인의 자치와 권익을 신장시키고 효과적인 조국광복운동을 펴기 위하여 각종 항일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 광복 이후에 한국인들은 1960년대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이민법이 완화되면서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의 서해안지역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최북단에 위치한 연방국가이다. 한인동포의 수는 2011년 현재 231,492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3.1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가 1963년에 국교를 수립하면서 한국인들의 공식적인 캐나다 이민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 후반부터 선교사를 통해 들어간 캐나다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도 귀국하지 않고 캐나다에 거주한 이민의 사례가 있다. 1960년대에 독일에 갔던 광부들과 간호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대신 캐나다로 건너가 정착한 사례도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 내의 한인은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들도 목사, 의사, 학자 등 주로 캐나다 선교사들과의 종교적인 인연으로 정착하게 된 경우나 소수의 유학생이 대부분이었다. 1967년 캐나다 이민정책이 아시아계 이민자에게 개방되고 점수제 이민이 도입되면서 캐나다 한인동포 수는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약10,000명에서, 1996년에 약 70,000명, 2011년 현재 231,49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1970년대 초 캐나다의 이민법 개정으로 가족 친지의 초청이 가능해지자 1975년과 1976년 간은 한인의 캐나다 이민의 절정을 이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캐나다의 경기가 침체되자 캐나다인의 실직자 보호 측면에서 이민의 문호가 좁아지게 되었다. 가족 초청이 감소되는 대신, 투자이민을 장려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투자이민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주한인의 70% 정도는 영어권 도시에 많이 살고 있으며 기후가 좋은 토론토, 밴쿠버,에 정착하였다. 이 중에도 한인동포의 수가 3만명이 넘는 토론토 시에 형성된 코리아 타운에서 대부분의 한인동포들은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해외자산 반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사업이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주가 시작되어 1994년에 1,565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였고 1995년에는 1,709명이 투자이민으로 입국하였다. 기업인 이민 서열은 세계에서 한국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면적은 한국에 비해 100배나 넓으며 무궁무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이다. 그러나 인구는 한국보다 적은 43,000,000명으로, 앞으로 캐나다로의 한인이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金元龍, 『재미한인오십년사』, Readly Calif(USA, 1958); 玄圭煥, 『韓國流移民史(下卷)』(삼화인쇄주식회사, 1976);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一潮閣, 1990); 김선정, 「한인의 미국 이주 시기 구분과 특징」, 『남북문화예술연구 4』(남북문화예술학회, 2009.6); 김규선, 『Canada 한인이민사회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2008).

**【사진자료】** 610. 20110924 LA한인타운의 코리아 퍼레이드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멕시코, 쿠바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멕시코는 중남미의 관문이다. 면적이 1,953,162km<sup>2</sup>로 한국에 비해 9배나 큰 면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들의 멕시코 이민은 1905년 4월 4일 1,033명이 화물선 일포드(S.S Ilford)호를 타고 멕시코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904년 8월에 네덜란드-독일계의 영국인 메이어스(John G. Meyers)가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대륙식산회사의 경성지부에 파견된 일본인 오바 간이치(大庭貫一)와 함께 서울에서 이민노동자를 모집함으로써 멕시코 이민이 이루어졌다. 멕시코 이민단이 4년 동안 노동계약을 맺고 75일 간의 항해 끝에 태평양연안에 위치한 살리나크루스(Salina Cruz) 항구에 도착해 베라크루스(Veracruz), 유카탄(Yucatan), 메리다(Merida) 등지에 산재한 20여 곳의 에네겐(어저귀)농장으로 분산 수용되었다. 이민단 중에는 대한제국 군인이 2백여 명이었고 그밖에 조각인, 잡역부, 전직 하급관리, 소수 양반, 부랑아, 걸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멕시코 이민노동자들은 하와이 노동자들보다도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혹독한 노동에 종사했다. 선인장의 일종인 에네겐의 역센 가시를 제거하고 잎을 자르는 작업은 무척이나 고된 노동이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한국에 전달되자 대한제국은 1905년 4월 5일자로 대외 이민금지령을 내림으로써 멕시코 이민은 한 차례로 끝나버렸다. 4년의 노동계약을 마치고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은 먹고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이를 수 없었다.

한편 한인들의 쿠바 이주는 1921년에 시작되었다. 멕시코에 이주했던 한인들의 일부가 더 나은 삶을 찾아 재이주한 것이다. 쿠바는 멕시코만 입구를 지나는 북회귀선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카리브해 군도에 위치하며 나라의 면적은 110,861km<sup>2</sup>이다. 한인들이 이주할 당시 쿠바는 중남미지역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다. 멕시코 한인들은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에 일자리를 찾아 카리브해를 건넜다. 그러나 이들이 쿠바에 도착하자마자 국제 설탕가격의 폭락으로 한인들은 멕시코에서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쿠바 한인들도 멕시코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한인국민회 지방회를 결성하고 동포사회의 안녕을 보장하는 일에서 나아가 조국 광복에 앞장섰다.

멕시코 한인들과 쿠바 한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는 매년 3·1절 기념식이었다. 이 날은 한국이민자들의 독립의지를 다지는 날이기도 했지만 퍼레이드를 펼치며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세상에 알리는 날이기도 했다. 한편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들은 가난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대한인국민회 지방회를 결성하여 한인들 간에 단결과 상호이익을 도모했으며 나아가 일체의 침략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한인사회가 형성된 곳마다 국어학교를 세우고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멕시코로 이주한 구한국 군인출신자들은 1909년에 숭무학교(崇武學校)를 세워 고된 노동이 끝난 후에도 군사훈련을 하며 조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멕시코 한인과 쿠바 한인들은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힘들게 벌은 임금을 모아 북미 대한인국민회에 독립의무금을 보내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였다. 특히 쿠바 한인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아바나 중국은행을 통해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에게 직접 독립의연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멕시코에서도 2세의 혈통은 1/2의 혈통이며 3세는 4/1, 그리고 4세는 8/1, 5세는 16/1 정도로 혼혈이 이루어졌고 한국말은 완전 잊혀졌다. 그러나 음식은 고추장, 된장, 김치, 콩나물, 만두, 만두, 지지미(찌개), 콩자반, 장조림, 나물, 미역구, 국수, 빈대떡 등을 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들 음식을 해먹는 등 한국의 음식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멕시코에 한인들이 다시 이민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래 1968년에 서동수가 멕시코의 한 회사 공장의 기술자로 한국에서 파견된 바 있다. 그러나 멕시코 이민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와 1992년에 792명의 한국인이 멕시코로 이주하였고 1997년에 2,168명, 2003년에 17,2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현재 11,800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들이 멕시코로 많이 유입하게 된 이유에는 한국의 IMF 사태로 인한 이민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자본을 가진 외국인 이민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장려정책으로 인해 멕시코로 들어오는 것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졌고 기업의 상업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쿠바의 한인 후예는 약 750명 정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쿠바 경제의 낙후성 때문에 대부분 빈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쿠바의 한인들은 한정한 숫자로 인해 오랫동안 정체성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한국인들끼리 통혼이 어려워지면서 쿠바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져 순수한 혈통의 후손들은 20%에 불과하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이면 한인 혈통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는 잊은 지 오래이나 90% 이상이 한국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중하면 한국어, 역사,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쿠바의 개방정책과 한국의 국력신장이 높아 가면 언젠가는 양국의 국교가 열리고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쿠바 내의 한인후손들이 한민족의 후예로서 정체성을 찾아 미래 한국과 쿠바와의 관계 교류에 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金元龍, 『재미한인오십년사』(Readly Calif., USA, 1958); 임천택, 『쿠바한인 미민력사』(태평양주보사, 1954); 최봉운, 『미국속의 한국인』(종로서적출판사, 1983); 玄圭煥, 『韓國流移民史(下卷)』(삼화인쇄주식회사, 1976);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一潮閣, 1990); 이자경, 『한국인멕시코이민사』(지식산업사, 1998).

**【사진자료】** 611. 20110923 멕시코 한인 후손들의 직업연수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남미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남미는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위치하며 현재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령 가이아나 등 12개국의 국가가 있다.

한인들의 남미이주는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으로 중립국을 택한 북한인민군 76명과 중공군 12명이 인도를 거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1959년 한국은 브라질의 수교를 기점으로 1960년대 초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1959년 남미로 이민권장책을 검토하던 정부는 1961년에 들어와 제3공화국이 들어선 이래로 당시 인구와 식량문제 해결차원에서 1962년 3월 9일에 ‘해외이주법’을 제정, 공포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민지로는 당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지로의 농업이민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1963년 2월 12일에 18세대 92명의 한국인이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항구에 도착하면서 농업이민이 현실화되었다. 이후 농업이민은 198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을 넘어 점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의 남미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이민자들 가운데 농사에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극히 일부분으로, 이민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착하자마자 농장을 나와 대부분 도시로 진출, 정착하였다. 농장으로 간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로 나와 현재의 남미 동포사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자리잡아갔다. 도시로 나온 남미동포들은 행상 또는 구멍가게를 열어 생활했으며 점차 보따리 장사, 의류업, 봉제업, 식당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경제적 기반을 잡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한국이 자본투자는 급증했으나 반면 이민자 수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때 1984년경부터 아르헨티나로의 투자이민이 출현하면서 투자 이민이 주를 이루었고, 또한 과테말라 등 대미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봉제업 등이 한인이주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남미

이주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남미의 한인사회는 1세대의 시대를 지나 이민 2, 3세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민 1세대와 2세대 대부분은 한국어를 사용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남미지역의 재외동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 전체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2011년 현재 남미 전체의 동포수는 111,462명으로, 브라질에 50,773명, 아르헨티나에 22,354명, 파라과이에 5,205명, 에콰도르에 1,300명, 칠레에 2,510명, 페루에 1,305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들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474명인데 반해 남미대륙의 인구밀도는 27명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남미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공업과 수입 대체산업의 발전이 성숙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인 남미에서는 한국식 경제성장을 남미개발의 교과서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신정환, 「중남미 한인 이민 역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국사편찬위원회, 2005); 이광규, 『재외동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전경수, 『세계의 한민족: 중남미』(통일원, 1996).

#### **【사진자료】 612. 20110521 브라질 한인들의 문화의날 행사**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일본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근대에 들어와 일본지역으로 한인이주는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조선이 개항하면서 부터 이루어졌다. 1800년대에는 주로 구주지역의 탄광에 고용되어 노동하였고 1900년대에는 철도건설공사에 투입된 주로 노동이주였다. 일본 유학생의 파견은 1881년부터 시작된 이래 매년 증가했는데,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종전의 관비유학 중심에서 자비유학으로 전환 하게 되었다. 재일유학생들은 유학생단체를 결성하고 국권회복·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10년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하면서 한인의 일본이주는 본격화되었다. 한국의 농촌경제가 붕괴되면서 토지로부터 이탈한 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 공업 노동시장에 잠재적인 노동자군으로 흡수해 들어갔다. 일본 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준외국인으로 취급되었는데, 이들은 명목상으로 일본국적을 보유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본호적에서 배제된, 일본인과는 다른 차별상태 아래 놓여있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이주한인들은 차별과 모순 구조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생활해왔다. 유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또는 외부의 민족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19년에는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른 하층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한인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한인 이주노동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1920년대에 3만 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1923년 관동(關東)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일어나고 정부 불신의 폭동이 번저가자, 일본정부는 한국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켜 약 6천 명의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의 주민자치 치안유지회인 이른바 ‘자경단’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의 증시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의 영향으로 식민지 한국의 경기도 동반 하락하자 취업하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하는 한인의 수는 한층 증가하였고, 1930년대 전반에 30만 명의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1937년 9월 28일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일제는

이른바 총동원체제에서 한인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연행해 갔다. 일제가 벌이는 침략전쟁이 확대되어가면서 전시산업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일제는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을, 이듬해 7월에는 일본 내지에만 적용되었던 '국민징용령'을 식민지 한국에도 적용하고 무수한 한인들을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하였다. 그 결과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123만 명의 한인이 한국을 벗어나 일본으로 이동하였는데, 이중 약 82만 명의 강제징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강제징용당한 한인의 대다수는 석탄광산으로 끌려갔다. 조선총독부와 일본 대정성 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강제연행된 한인들은 구주와 북해도의 탄광에 배치되었고 그밖에 토목, 건축 분야와 금속 광산, 공장 등지에 투입되어 강제노역당하였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혹사당하였고 노동현장을 탈주하거나 동맹파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다.

강도 높은 노동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노동현장을 탈출한 한인 노동자들은 지리에 어둡고 현금이 없어서 붙잡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인노무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하였다. 한편 강제연행 노동자들의 작업장에서는 일제의 황민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과 파업, 태업 등 각종 저항과 투쟁이 일어났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군수공장 등에 징용되었던 수많은 한인들도 이때 같이 희생되었다. 8월 15일 전쟁 종결 시점에서 일본 내에 있었던 한인은 약 240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 중 180여만 명이 6·25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약 6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잔류하였는데 이들 잔류한인들이 오늘날 재일동포 1세대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장문각, 1973); 하야시 에이다이(신정식 역), 『일제의 조선인노동강제수탈사』(비봉출판사, 1982);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글모인, 1995);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한인의 역사』 하(재외동포사 총서 11, 2010).

**【사진자료】** 613. 199711 오사카의 재일동포 축제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연해주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연해주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영토였다. 1858년 청러 간에 아이군조약(Aigun Treaty)과 1860년 북경조약(北京條約)이 체결되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연해주를 점유,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가 연해주지역을 차지하면서 제일 먼저 식민사업에 착수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교통문제 때문에 시베리아 식민은 원활하지 못했다.

한인이 처음으로 연해주에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1863년이다.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크라스키노 인근의 지신허(地新虛)에 정착, 이주한 것이다. 이후 연해주지역에 이주한인들은 매년 증가하여 포시에트 지방, 시치미, 상·하 안치혜 일대에 한인촌락들이 형성되어 나갔다. 한인들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연해주 개척에 큰 기여를 하였다. 러시아가 극동정책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군항을 건설하고 시베리아 철도를 부설하며 시베리아 개척에 주력할 때 한인 이주민들의 피와 땀이 큰 몫을 하였다. 최초로 개척된 한인촌은 개척리(開拓里)로, 이곳에 카레이스카야 스라보드카(高麗人村)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911년 러시아 당국이 강제로 한인의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생긴 마을이 신한촌(新韓村)이다. 한인들의 개척력은 놀라와 당시 원동 사정을 러시아제국에 보고하던 탐사단의 기록에는 습지나 황무지와 같은 농사가 불가능한 땅일지라도 한인들에 손길이 닿으면 생산 가능한 경작지로 변한다며 이주한인의 개척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1910년 국망에 이르자, 애국지사들은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곳을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지로 발전시키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해주지역에는 13도의군, 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 및 국민회 지방회 성명회, 권업회 등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동하였으며 계동학교, 대전학교 한민학교 등 민족주의 교육학교에서 애국교육이 실시되었다.

재러동포들은 장차 있을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대한광복군정부를 창립하고 '광복군'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일본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를 맺자, 일본은 러시아에게 러시아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추방을 요구하였다.

1917년 러시아혁명과 뒤이어 시베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한인들은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백군에 대항하며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하고 시베리아지역에 소비에트화가 진척되면서 연해주 한인사회는 안정되어갔지만 1937년에 소련 스탈린 정권에 의해 연해주 한인들은 2만리 밖의 황무지인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하여야 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총 124대의 수송열차에 18만여 명이 강제집단 이주 당하였고 이 무렵 한인지도자들은 일본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2,500여 명이 재판 없이 처형당하였다.

1990년을 넘으면서 전세계적 추세였던 개방정책이 공산권을 자극하면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은 급속한 해체를 보았다. 이 와중에 1993년 1월, 러시아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에서는 ‘러시아 한인의 명예회복에 관하여’가 제정되어 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강제 이주된 한인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주었다.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199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었고, 자민족 중심주의정책, 즉 타민족에 대한 차별적, 배타적인 정책을 실시하자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일부 한인들 2만 명이 희망을 품고 선조들이 살았던 연해주로 자발적으로 재이주 하였다. 현재 연해주에는 한인 3만 명이 주로 우수리스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독립국가연합」(통일원, 1996); 김 게르만, 「소련방 붕괴 이후 러시아 고려인의 이주 현황」,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인식』(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2004.8.27~28)); 김 떼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집(재외한인학회, 1998).

**【사진자료】** 614. 2005 연해주 한인 재생기금 현판식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사할린

중국 동북지방	●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사할린은 러시아의 연해주 동쪽과 일본의 북해도(北海島) 북쪽에 위치한 섬이며 러시아 영토이다. 2010년 사할린의 현재 총인구는 약 51만명으로 대부분이 러시아인(84%)이며, 한인 동포는 약 30,000여 명이 살고 있다.

사할린은 원나라 이래 청나라 때까지 중국이 통치해오다 17세기 이후부터 사할린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노린 러시아와 일본 간에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다. 제정 러시아는 유배형을 받은 사람들을 사할린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러시아인들을 이주시켰다. 이렇게 하여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사할린에 이주한 러시아인은 20,000명에 달하였다. 1897년 사할린 거주자 28,000여 명 중에 한인이 67명이며 주로 어부들로 기록되고 있다.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포츠머스조약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남부사할린)을 할양받아 지배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할린은 일본령 남부 사할린과 러시아령의 북부 사할린으로 분할되었다. 일본은 사할린의 석탄과 목재자원의 가치에 주목하고 1910년대 초부터 일반 일본인을 대상으로 자유이주를 권장하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인들을 집단이주시켰다.

1937년 강제이주 당시 북부 사할린 거주 한인 1,155명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하였다. 남부 사할린의 한인은 1925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940년에 들어서면서 급증하였다. 그것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침략전선을 확대시키면서 전신노동력과 자원이 부족해지자 한인들을 사할린에 강제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사할린에 30여개 탄광과 벌목장, 비행장, 도로 및 철도 건설현장에 투입된 강제징용 한인의 수는 적게는 6만 명에서 최대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남부 사할린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1946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했던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돌아와 공무원이나 교사로 근무했으며 1946년부터 1949년 시기 동안에는 수산업과 벌목장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오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46년 12월 미소 협정에 의하여 40여만 명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

었으나 한인들은 귀환 대상에서 배제되어 버렸다. 사할린 한인들은 고국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했으나 국제미아가 되어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또한 1956년 일본과 구 소련간에는 '일소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과 그 자녀 2,345명은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1985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소련의 교류가 진척되면서 소련의 태도가 완화되고, 1989년 한일 적십자사 간 '사할린 거주 한인지원 공동사업체 협정서'가 체결됐다. 한일 양국은 일시 모국방문과 귀국 및 정착비용은 일본이, 귀국 후 생계 및 의료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사할린 동포의 본격적인 영주귀국 사업이 진행되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은 1992년 강원도 춘천 사랑의 집을 시작으로 경북 고령군의 대창양로원, 인천의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안산의 고향마을 등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청원, 아산, 화성, 원주, 부산, 김포, 양산, 음성, 오산, 파주, 천안, 제천, 서천, 남양주 등 전국 각지 20개 아파트에 정착했으며, 2011년 6월 현재 3,908명이 영주귀국하였다.

그러나 영주귀국사업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으로 이주 또는 사할린에서 출생한 자에 한해서만 귀국대상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헤어지기를 꺼려 귀국을 포기하고 있다. 사할린의 한인들은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사할린 지도층 곳곳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으로의 동화를 거듭해 한인 2세, 3세에 대한 문화적 지원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김승일, 「사할린 한인 미귀환 문제의 역사적 접근과 제언」, 『한국근현대사연구』 38(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이재혁, 「사할린 한인이주와 인구형성」, 『지리학회 2011년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논문발표집』(대한지리학회, 2011.5); 장석홍,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3(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사진자료】** 615. 20070628 사할린동포 귀국정착 마을의 잔치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중앙아시아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중앙아시아에는 약 30만여 명의 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한인의 기원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난과 학정을 피해 이주했던 한인들이다.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이주한인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으나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어 지속적인 항일투쟁이 이어졌다. 1926년에 소련의 중앙정부는 러시아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소련을 다르지 않는 한인들을 국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주시킨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이주정책은 정치적,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1930년 이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1930년을 시작으로 충성심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한인들을 북쪽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소련당국은 1935년부터 3년 동안 2,500명의 한인지도자들을 ‘일본간첩’이란 혐의로 총살하기도 했다.

1937년 8월 마침내 스탈린은 일본 첩자의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 아래 연해주와 사할린 거주 한인들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켰다. 1937년 10월 25일, 니콜라이 예조프(Nikolai Yezhov)는 극동지역 거주 한인들 171,781명의 36,442가구가 이주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캄차카에 남아 있는 고려인 어부들, 사업차 여행 중인 이들, 숨어서 남아있는 한인들까지 추적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킴으로써 더 많은 한인들이 강제이주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로 이주한 한인들은 황량한 땅에서 상호협력하여 관개 시설을 설치하였고,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이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주한인들은 놀라운 근면함과 개척력으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한국어가 금지됨으로써 모국어를 상실하게 되었다. 살아남아 대를 이어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동화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였다. 그것은 독립한 각 공화국이 자국의 언어를 러시아어 대신 공화국 내의 공식언어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중 언어의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한인이 공식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일부 한인들은 무국적자가 되었다. 그것은 소련 시절 연방이었던 나라들이 러시아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국적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몰랐거나, 서류를 분실하거나, 거주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 구 소련 지역에는 현재 전체 고려인의 10%에 해당하는 약 5만의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신분의 불안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한인들 중 일부는 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로 돌아갔다. 그리고 약 1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의 한인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의 한인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한다. 카자흐스탄의 한인 문화는 이전의 수도였던 알마티(Almaty)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 신문(고려신문)과 한국어 극장이 운영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303,670명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우즈베키스탄 173,600, 카자흐스탄 107,130, 키르기스스탄 18,230, 우크라이나 13,053, 투르크메니스탄 884, 타지키스탄 1,740, 벨라루스 1,343, 몰도바 126, 조지아 40, 아제르바이잔 219, 아르메니아 358)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성장 및 높은 인구성장률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국이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부상한 21세기에 중앙아시아의 한인(고려인)의 존재는 글로벌 전략의 소중한 자산이며 잠재력이 될 수 있다. 소련 시절 고려인 콜호즈(집단농장)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집단농장으로 추앙받았으나 현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마을들은 대부분 와해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인 정착촌 지원, 독일인 자치지역에 대한 독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사업들을 한국정부가 교훈으로 삼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사회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이론과 실천사, 1990); 최한우,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문학과 지성사, 1996); 정성호, 「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과제」, 『한국인구학』 20-2(한국인구학회, 1997); 전신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용인과 정착 현황」, 『한국정책과학회보』 11(한국정책과학회, 2007).

**【사진자료】** 616. 20110128 카자흐스탄 한인 설날 대잔치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코리아타운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정의】** 코리아타운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 밀집지역 또는 한국인 상업지구를 뜻하는 말이다. 코리아타운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등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L.A 코리아타운이다. L.A 코리아타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코리아타운은 뉴욕 맨해튼에 있다. 또한 퀸스 구역에도 큰 한국인 공동체가 있고 델러스,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에도 대규모의 코리아타운이 생겼다. 한편 캐나다의 대도시에서도 어디에나 한국인들이 살고 있지만, 특히 토론토의 코리아타운이 유명하다.

**【배경】** 대표적인 L.A 코리아타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한인밀집지역을 가리킨다. 1962년 한국에서 이민법이 제정되고, 1965년 미국 내의 이민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와 직업기술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한인들이 올림픽가(街)에 정착하여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동서로 버몬트가·웨스턴가, 남북으로 올림픽가와 8번가 사이를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한인이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인 자영업체 분포지역은 동서로 윌턴가와 후버가, 남북으로는 피코가와 비벌리가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월셔가와 웨스턴교차로를 중심으로 3km 범위 내에 형성된 지역을 구(舊)코리아타운이라 하고 후버가-워싱턴가-산타모니카까지 뻗어나간 지역을 신(新)코리아타운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코리아타운 안에는 많은 한인 식품점, 세탁소, 의류제조 및 봉제업체를 포함한 각종 제조업체와 상업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을 비롯하여 L.A 인근 120만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L.A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재미한인체육회, 노인회 등 약 300여 개의 한인단체들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및 신문사, 의료기관 등이 자리하고 제퍼슨가에는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를 기린 도산스퀘어(광장)도 있다.

**【발발】** 한인들이 미국 내에서 이민생활에 적응을 마친 후에는 코리아타운보다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교외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10%로의 한인들만이 코리아타운 내에 거주하고 있다. 1992년 4월 29일에 시작되어 5월 4일까지 이어진 로스앤젤레스 사태(L.A 폭동)로 인해 코리아타운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와 상가 파괴로 코리아타운은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지게 되었다.

**【전개】** 그러나 1995년 L.A시가 코리아타운과 인근의 월서거리를 아우르는 도심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래 1996년 코리아타운 인근에 세 곳의 전철역이 추가 건설 되었고, 2000년엔 버스의 급행노선이 운행되는 등 주거여건의 개선과 뛰어난 도심접근성으로 기업체가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 그 결과 코리아타운의 세수도 늘어났으며, 이것은 다시 지역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코리아타운에 5,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 한편 2006년 한국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제한을 완화하면서 코리아타운에 대한 투자도 대폭 증가했다.

**【결과】** L.A 코리아타운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한국인의 강한 문화적 정체성과 근면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이루었고 본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한인들의 타민족에 대한 포용력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A 코리아타운의 성공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이제 한인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미국정계에 진출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전문직 진출도 활발해지고 업종 면에서 다양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의의】** L.A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사회의 코리아타운 형성에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한인동포들의 상권을 집중화하고 경제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재외동포사회에는 더 많은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운은 경제 집중화의 효력을 가져오고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코리아타운은 한국의 기업의 해외투자나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진자료】** 617. 19961016 LA 한국교민방송 라디오 코리아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재일동포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2011년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의하면 재일동포는 약 904,806명에 이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15광복 당시 일본지역에는 240만 명의 재일동포가 있었다. 광복 직후부터 1946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170만 명의 동포들이 고국으로 귀국하였고 6·25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모두 180여만 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약 600,000명 정도가 일본에 잔류하였다. 당시 미 점령 당국은 귀환한인들의 재산반출을 규제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국으로 환국하려다가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게 된 한인들은 귀환을 망설이게 되었다. 그밖에 생계나 정치적인 문제, 불안한 한반도의 정치상황 등 때문에 귀국을 미루거나 귀국선을 구하지 못해 귀환하지 않고 일본 잔류한 이들이 재일동포 1세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에 이은 6·25전쟁의 혼란이 고착되면서, 일본의 재일동포 사회는 1945년에 좌파의 재일본조선인연맹이 결성되고 1948년에 우파의 대한민국거류민단이 결성되었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은 결성 초기 재일동포들의 귀국, 재산관리, 생활상담, 국어학습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었으나 한반도에 분단정권이 수립되면서 재일동포사회의 분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1955년 5월 조총련이 결성되면서 재일동포사회의 이념적 분단은 구체화되었다. 또한 1965년 한일수교는 재일동포사회의 분단은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재일동포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공식화되었다.

한편 1959년부터 1962년까지 3년 남짓한 기간 사이에 일본정부는 북조선과 협의하여 93,339명의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의 반수 이상의 재일동포가 일본을 떠나 북송되었다.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에게 휴대가 의무화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란에는 두 가지 표기가 가능하다. '대한민국'과 '조선'이 그것이다. '조선'은 해방 직후 자동으로 변경된 국적이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조선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조총련에 가입한 동포들은 일본이 북한과 미수교한 상태이므로 남북한 어느 쪽에서도

외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재일동포들은 일본사회에서 각종 사회적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재일동포들은 지문날인 제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재입국허가제도, 강제퇴거제도 등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및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 시 국적조항 철폐,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보장, 민족 교육 육성 등 다양한 사안의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이른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었으며, 1991년 1월 10일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에서 재일한국인 3세의 영주권 허가, 지문날인제도 철폐,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기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등에 합의를 보게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재일한국인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일본사회의 노골적 차별과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라진 재일동포사회 내의 분열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냉대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

재일동포는 한국에서는 소외된 존재이자 일본사회에서는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아래 놓인 존재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선거권이 없지만, 최근 2009년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내각에서 '재일참정권 부여'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곧 선거권의 부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재외동포에게 선거권 부여가 확정되어 2012년 4월 19대 총선거부터 시작된다. 단, 국내에 거소가 신고되지 않은 재외동포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일본 오사카를 비롯한 긴키지방을 중심으로 이주한 재일한국인들을 올드커머(old comer)라고 지칭하는 반면, 일본의 패전 후부터 특히 1980년대 초반 이후로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재일한국인들을 뉴커머(new comer)라고 부르며 구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재일동포 904,806명 중에 26,671명이 일본에 귀화하였다.

**【참고문헌】**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 광복』(글모인, 1995); 박경식, 「재일조선인사연구의 현대적 의의」, 『在日朝鮮人史研究』 21(1991); 진희관, 「재일동포사회의 문제와 북한관계」, 『韓國史研究』 131(2005.12).

**【사진자료】** 618. 2009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 효고 니시모미야지부에서 열린 전통혼례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형태별 이주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 형태별 이주
연해주	해외봉사단체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700만 규모의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커다란 자산이다. 한편 조국의 불행으로 수난의 역사를 겪어져야 했던 재외동포가 이제는 세계진출의 교두보로서 민족적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한민족 발전의 인적·물적 토대가 되고 주요 거점으로 자리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항일투쟁을 위해 중국 동북지역과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주했으며 일제가 벌인 침략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150만 명 이상의 많은 한인들이 해외로 강제징용, 징병당하였다.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사할린, 남양군도, 태평양의 섬인 괌, 사이판, 중국, 만주, 동남아시아 등등 여기저기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고 전선에 배치되어 희생당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광복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으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결혼한 여성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유학생들의 미국이주가 늘어났고 80년대로 들어와서는 당시 한국보다 경제적 사정이 나았던 남미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형태별 이주상황을 보면, 초청에 의한 연고이주가 447명(50.3%)이고 다음으로 독립이주가 186명(20.9%)이다. 그 외 취업이주 101명(11.4%), 국제결혼 89명(10%), 사업이주(투자) 66명(7.4%) 등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7,268,771명이다. 아시아지역에 385만 명, 북미지역에 240만 명, 구주지역에 65만 명, 대양주지역에 16만 명, 중남미 지역에 11만 명, 중동지역에 2만 명, 아프리카지역에 1만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연도별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004년에 9,759명, 2005년 8,277명, 2006년 5,177명, 2007년 4,127명, 2008년 2,293, 2009년 1,153명, 그리고 2010년 889명으로, 매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재외동포란 이주국의 시민권자와 재외국민(영주권자)을 말한다. 그리고 재외국민으로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그리고 유학생이 포함된다. 2011년 현재 재외국민과 시민권자를 합

한 재외동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재외동포 현황(2011년)

- (1) 아주 지역(55.90%): 일본 904,806(12.45%), 중국 2,704,994(37.21%),  
-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지역 453,420(6.24%): 오스트레일리아(132,287), 뉴질랜드(28,420), 인도(9,887), 베트남(83,640), 파카스탄(608), 필리핀(96,632), 인도네시아(36,295), 태국(17,500), 싱가포르(16,650), 대만(3,968), 동티모르(57), 말레이시아(14,409), 방글라데시(1,095), 스리랑카(948), 아프카니스탄(135), 미얀마(1,408), 몰디브(19), 몽골(2,238), 피지(901), 캄보디아(4,265), 네팔(574), 파푸아뉴기니(212), 라오스(833), 팔라우(104), 부루나이(120), 마셜군조(45), 솔로몬군도(31), 통가(27), 바누아투(57), 마이크로네시아(47), 키리바스(1), 부탄(7).
- (2) 미주지역(34.69%): 미국 2,176,998(29.95%), 캐나다 231,492(3.18%), 중남미 112,980(1.55%)
- (3) 구주지역(9.03%): 독립국가연합(CIS)지역 535,679(7.37%), 유럽지역 121,028(1.67%)
- (4) 중동지역(0.22%): 16,302(0.22%),
- (5) 아프리카지역(0.15%): 11,072(0.15)

해외이주 역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지역 동포사회 내의 세대교체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이 높아감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한편 정부 또한 국제화, 세계화 추진에 따라 전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사진자료】** 619. 2009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재일 체육회 창립60주년 기념식  
620. 2009 재일동포들의 장애인 마라톤 한국선수 격려  
621. 20100211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착교육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키워드】** 나라 밖의 한국 사람들

**【전시항목】** 국가별 해외 한인사

**【소항목】** 해외봉사단체

중국 동북지방	사할린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코리아타운
남미	재일동포
일본	형태별 이주
연해주	● 해외봉사단체

한국의 해외봉사단체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농촌개발,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1950년 6·25전쟁 당시만 해도 원조수여국이었으나 60여 년 만에 원조공여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봉사활동은 1989년 한국정부가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1990년 9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네팔·스리랑카·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에 44명의 해외봉사단원을 최초로 파견한 바 있다. 1991년 4월 정부는 외교통상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창립하고 해외봉사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과 개발도상국과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한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 해외봉사활동의 대부분은 종교단체의 선교목적으로서 의료,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위주로 자원 봉사자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일반인과 대학생을 해외자원봉사자로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 및 CIS, 그리고 중동, 기타 지역에 국가들과 봉사단파견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봉사단에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외봉사활동은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분야 관련, 50여 개의 다양한 직종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파견봉사단원의 수는 연평균 1,600명 내외이며 매년 1,000명 정도 신규단원이 파견되고 있다. 2010년 9월 15일 현재 NGO 봉사단을 포함하여 57개국에 해외봉사단원들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해외봉사단은 한국정부 파견 봉사단과 민간기업의 봉사단, NGO 단체 봉사단, 대학봉사단 등과 정부 각 행정부처에서 분산하여 실시하던 해외봉사단사업이 2009년부터는 통합하여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 브랜드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World Friends Korea'의 이름으로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봉사단체는 한국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 Program, KOV), KOICA-NGO봉사단,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Korea University Volunteer Program, KUV), 대한민국 IT 봉사단(Korea IT Volunteers, KIV),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Korea Techno Peace Corps Program, TPC), 중장기자문단(World Friends Advisers Program, WFA), 퇴직전문가(Korea Senior Experts Program, KSE), 태권도평화봉사단(Korea Taekwondo Peace Corps Program, TPCops) 등이 있다.

'World Friends Korea'는 "나눔과 배움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A better world through sharing and learning)"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과 한국 간에 우호협력 및 상호 이해증진, 개개인은 다문화 이해능력을 키우고 및 빈곤·환경 등 지구촌 문제(Global Issue)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활동은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이 경험한 귀중한 개발경험을 현지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광범한 연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담겨진 나눔과 사랑, 평화와 같은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품격있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을 경험한 개인은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돌아봄으로써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 동등한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개인의 변화와 성장 등 한국민의 미래지향적인 인적 자원의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수진, 「한국해외봉사활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장재홍, 「우리나라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http://kov.koica.go.kr>; <http://www.worldfriendskorea.or.kr>

**【사진자료】** 622. 20050522 대학생해외봉사 동아리인 지구촌대학생연합회(GSU) 회원들

**【작성자】**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
●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배경】**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세계시장 여건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은 세계시장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달성한 성과였다. 초기에는 외국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그것을 생산과정에 직접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세계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거둔 성과였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보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후발 개도국으로부터의 도전과 선발 선진국과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기인한 기술 이전이 지연되는 등, 최근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선진화를 제약하는 대내적 위험요인에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 자유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양극화가 확대되어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문제,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문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 환경, 문화, 여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문제 등에 잘 대처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본축적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기업성장 및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민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 여하에 달려있었고, 민간 기업 차원에서 기술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휴대폰과 같이 세계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 사업 이외에도 기술개발 노력은 우주항공 분야, 생명과학 분야, 원자력기술, 첨단 토목기술, 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사업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제기된 대내적 위험요인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대처해 왔다. 인구 구조와 가족형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1980년대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에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고, 1977년에 처음 실시된 의료보험제도는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다. 경제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함께 심화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 12월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어 1998년 9월에 전 사업장으로 확장되었다. 물론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더불어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제도를 계속 확대되어 왔다.

**【결과·의의】** 1980년대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62년의 수출액은 56백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80년에는 174억 83백만 달러, 1990년에는 648억 37백만 달러, 2000년에는 1,707억 40백만 달러, 2010년에는 4,647억 38백만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 결과 1962년에 83개국 중에서 59위를 차지했던 수출액이 1980년에는 125개국 중에서 24위, 2000년에는 168개국 중에서 12위를 차지했고, 2010년에는 134개국 중에서 7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핵심어】** 경제선진국/기술개발체계/사회양극화/저출산-고령화사회/사회보험제도/사회복지제도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1(총괄편)(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6(사회복지·보건편)(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 첨단기술의 발전 삶의 질 향상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	-----------------

**【배경】** 기업성장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1960년대에는 자본축적이 미약하고, 대규모의 근대적 시설을 갖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하에서 외국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근대기업이 건설·육성되었다. 이 단계에서 기업성장의 주요 문제는 최신식 기계를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외환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0년대 이후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정부 지원의 산업정책은 허용되지 않았고, 국경 없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단계에서 기업성장의 관건은 기업 내부의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경제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행】** 우리 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술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전자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반도체산업에서의 기술추격과정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1984년 10월에 256K D램을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년 뒤쳐져 있었는데, 계속되는 기술개발을 통해 64M D램은 1992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D램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1996년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의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 분야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결과·의의】** 첨단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결과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에도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80년 1,660달러(명목 금액, 이하 동일)에서 1990년 6,303달러, 2000년 11,292달러, 2010년에는 20,759달러였다. 수출품 구조도 크게 변화하여 1980년 공산품 수출액 중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2000년에는 83%로 증가하였다.

**【핵심어】** 기업성장/경제의 세계화/기술개발/경제선진화/첨단기술 개발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1(총괄편)(2010);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3(산업편)(2010).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반도체 기술 1위의 역사

**【소항목】** 반도체 기술

● 반도체 기술	
----------	--

**【정의】** 반도체 제품은 크게 RAM, ROM 등 저장기능이 있는 메모리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등 비메모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로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 세계적인 기술수준 보유, 높은 세계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 등의 확산에 따라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배경】**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1960년대 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모토롤라 등 외국기업들이 주도한 조립생산기지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국내 자체 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 1966년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 반도체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1966년 NPN 바이폴라소자 제작, 1973년 단결정 성장에 의한 발광다이오드 개발, 1970년대 초 탁상전자시계 국산화와 GaAs 및 실리콘 적층재료 개발 등 상당한 연구 결과가 창출되었으나,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연구 성과가 산업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발발】** 전자산업의 씨앗으로 불리는 D램 반도체 개발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반 삼성, 현대, 금성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삼성은 1983년 11월과 1984년 10월에 64K D램과 256K D램을 잇달아 개발하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내외로 단축하였다. 64K D램은 선진업체에서의 기술연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256K D램의 경우에는 기술 도입과 자체개발이 병행되었다. 그리고 이어 삼성은 1986년 1M D램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전개】** 1986년 3월에는 삼성, 금성, 현대 등 반도체 3사가 중심이 되어 반도체연구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1986년 10월부터 과학기술처, 상공부, 체신부가 공동으로 지원한 4M D램 개발 프로젝트가 출범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988년까지 4M D램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성공함으로써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6개월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4M D램 개발의 성공경험은 1989년 4월부터 4년간 16/64M D램 공동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16M D램의 시제품 개발을 1991년 3월에 완료하고, 64M D램은 1992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D램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결과】** 1991년부터 D램을 자체브랜드로 본격 수출하기 시작하여 폭발적인 신장세를 이룩하였다. 당시 일본 D램 업계의 세계시장 장악에 따라 이를 견제할 신흥 세력을 찾고 있던 미국 컴퓨터업계의 이해와 맞아 떨어져, 세계 최대의 D램 수요처인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세계 D램 시장에서 선도적인 존재로 부상하여 메모리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 전체 반도체에서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생산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의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액 규모와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 내 순위를 보면 1992년 약 283억 달러(3위), 1997년 약 1,539억 달러(1위), 2002년 약 947억 달러(2위), 2008년 약 1702억 달러(4위)로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한때 수출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반덤핑제소 등 무역마찰의 심화와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적 공급과잉에 따른 지속적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 3D TV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세계 반도체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과 태블릿 기기의 출시가 시장 확대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동안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시장선도자적 지위를 통해 경험을 구축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새로운 세계시장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핵심어】** 메모리반도체/D램/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반도체연구조합/반도체수출/스마트폰/태블릿기기/삼성전자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반도체 산업의 기적: 삼성 대역전극의 배경」, 『CEO Information』 제9호(199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산업기술백서』(2010).

**【사진자료】** 623. 2009 반도체를 연구하는 모습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소항목】** 국내 최초 개발 휴대폰

● 국내 최초 개발 휴대폰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성장
무선호출기와 시티폰	휴대폰 수출
세계 최초 기술 개발 휴대폰	

**【정의】** 삼성전자는 88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국내 최초로 휴대폰을 자체 제작하였는데 'SH-100'으로 명명된 이 휴대폰은 이듬해 판매가 개시되었다.

**【배경】**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이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은 미국의 세계적인 이동통신 업체인 모토로라가 장악했다. 모토로라가 처음 국내에 출시한 다이내택은 지금의 휴대폰과 비교해 볼 때, 벽돌 같은 덩치와 무게를 지녀 국내에서는 한때 '벽돌폰'으로도 불렸었다. 또한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과 통신환경과는 맞지 않아 통화 품질이 불량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휴대폰을 자체 개발하려는 국내 업체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발발】** 모토로라 일색인 국내 휴대폰 시장에 가장 먼저 국산 단말기를 선보인 회사는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산 휴대폰 SH-100을 선보여 개막식 행사에서 사마란치 당시 IOC위원장 등 47명의 IOC 위원들에게 선물로 줬다. SH-100은 199×69×46mm의 크기에 무게가 700g 가량으로 모토로라 다이내택보다 작고 가벼웠다. 이듬해인 1989년 5월 삼성전자는 이 점을 크게 부각해서 홍보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개시하였지만 모토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개】** 삼성전자는 1992년 약 2만 대의 휴대폰을 판매해 국내 시장점유율 12%로 모토로라에 이어 간신히 2위를 차지했다. 당시는 휴대폰 개발 경험이 부족하여 핵심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크게 샀다. 모토로라가 쌓아온 명성을 삼성전자가 딛고 올라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삼성전자는 모토로라를 이기기 위해 대당 300만 원을 호가하던 모토로라 휴대폰 10여 대를 구입해 철저하게 장단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구입된 단말기는 대부분 테스트 장비로 분해되고 다시 조립되었으며 낙하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떨어지는 수

신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휴대폰에 독자 개발한 2개의 안테나를 넣었다. 또한 배터리 성능을 높이고 디자인을 고급화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1993년 10월 국산 제품으로는 최초로 100g대의 휴대폰인 'SH-700'을 탄생시켰다.

1994년 8월 'SH-700'에 이어 'SH-770'을 출시하면서 '애니콜(Anycall)'이라는 브랜드명을 도입했다. 한국인의 체형과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 맞게 부피를 줄이고 통화성공률을 대폭 향상 시킨 이 모델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결과】**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에서 모토롤라를 맹추격해 결국 정상에 올라선다. 'SH-770'을 출시할 당시인 1994년 10월 삼성전자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25.8%로 모토롤라의 52.5%에 비해 상당히 뒤졌다. 그러나 1995년 8월에는 51.5%의 시장점유율로 42.1%로 내려앉은 모토롤라를 밀어내고 당당히 내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의의】** 삼성전자가 1988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휴대폰을 선보이고 이후 부단한 기술개발 노력을 하여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모토롤라를 제치고 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선 것은 이듬해인 1996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과 함께 이후 전개될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행보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국내최초개발 휴대폰/SH-100/애니콜/삼성전자/모토롤라/88서울올림픽/리버스엔지니어링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주)아이뉴스24, 『2007·2008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2007).

**【사진자료】** 624. 삼성 SH-100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소항목】** 무선호출기와 시티폰

국내 최초 개발 휴대폰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성장
● 무선호출기와 시티폰	휴대폰 수출
세계 최초 기술 개발 휴대폰	

**【정의】** 일명 ‘삐삐’로 불렸던 무선호출기는 휴대용 이동통신 장비의 일종으로 특정 신호음과 함께 숫자나 문자메세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장비로 1982년 12월에 첫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무선호출기가 수신전용인데 비해 시티폰은 발신전용 휴대용 이동통신 장비로 1997년 3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배경】**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통신수요도 점차 증대되어 새로운 통신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1982년 1월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고, 일본 NEC사의 시스템을 들여와 그 해 12월부터 첫 무선호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때 공급된 단말기는 총 300대로, 삐삐 소리만 들리는 신호음 방식이었으며, 서비스 지역은 수도권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전개】** 1984년 체신부는 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해 3월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를 출범시켰다.(한국이동통신은 1994년 민영화되어 현 SK텔레콤이 된다.) 한국이동통신은 무선호출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1984년 5월부터 셀룰러 방식의 차량전화서비스도 개시하게 된다.

1986년 3월부터 신호음과 함께 전화번호를 숫자로 알려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비스 개시 5년만인 1988년 말 가입자가 10만을 돌파하면서 무선호출 대중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1993년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무선호출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한국이동통신과 새롭게 선정된 제2사업자들 간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게 된다. 무선호출 가입자 수는 1997년 말 1,500만 명가량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1997년 등장한 PCS 휴대폰과의 경쟁에 밀려 이후에는 계속 감소한다.

한편 1997년 당시 착발신이 가능한 휴대폰이 서비스 되고 있었지만, 고가의 단말기 가격과 통화료로 인해 통신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미 무선호출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발신전용 이동통신 서비스가 1997년 3월 개시되는데, 이것이 시티폰(CT-2)이다. 시티폰은 휴대전화에 비해 단말기 가격과 통화료가 저렴하고 기존의 전화 부스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확장이 이루어져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었다. 저렴한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로 서비스 개시 초반 순조롭게 가입자 수를 늘려나가 1998년 말 가입자 수는 42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PCS휴대폰에 밀려 계속 감소한다.

**【결과】** 무선호출기의 경우 현재 서울이동통신이 수도권 지역에서 약 2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2013년 전국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때 급격히 쇠락했던 무선호출기 시장이 최근 아날로그 감성의 유행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티폰의 경우 2000년 2월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시티폰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중 가장 단명한 경우로서 휴대폰이라는 대체재 시장의 급격한 발전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의의】** 무선호출기는 주로 20~30대 젊은이들에게 크게 확산되어 숫자를 이용하여 암호 같은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점과 목소리를 녹음해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이들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기도 하였다.

**【핵심어】** 무선호출기/삐삐/시티폰/PCS휴대폰/차량전화/한국이동통신/서울이동통신

**【참고문헌】** (주)아이뉴스24, 『2007·2008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2007); 파이낸셜뉴스, 「스마트 시대 살아남은 '삐삐」(2011.2.14).

**【사진자료】** 625. 용산전자상가 야외광장의 전자제품 벵룩시장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소항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휴대폰

국내 최초 개발 휴대폰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성장
무선호출기와 시티폰	휴대폰 수출
● 세계 최초 기술 개발 휴대폰	

**【정의】**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1996년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의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핸드폰 내에 TV기능을 탑재한 컨버전스 기술폰 SCH-M220을 선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네스북 등재 폰이 되었다.

**【배경】** 1989년 체신부는 국민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이동통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도의 통신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아날로그 이동전화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88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추진하던 디지털 무선통신시스템 개발과제를 확대한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을 국책과제로 선정,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CDMA 원천기술 보유사인 미국 쉘컴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 개발에 나섰다.

**【발발】** 1993년 9월 CDMA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에 CDMA 개발 사업단이 꾸려졌고, 이를 주축으로 LG, 삼성, 현대 등 업체가 장비 개발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시스템 성능 향상에 들어가고 한국이동통신은 통신망 설계에 착수했다. 드디어 1996년 1월 3일,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서비스가 개시되어 그해 4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상용화 9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전개】** 다음해인 1997년 10월 1일부터는 한국통신프리텔(현 KT), 한솔 PCS(현 KT), LG텔레콤 3사가 016, 018, 019의 번호로 개인휴대전화(PCS) 상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민간 시장에 CDMA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1996년 318만 989명이었던 휴대폰 가입자는 1년에 두 배씩 늘어나 1998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1999년 2,000만 명, 2002년 3,000만 명에 이른다. 4,00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은 2006년이다. 2009년 2월 현재 4,598만 8,623명에 달한다.

한편 CDMA 기술의 해외수출도 활기를 얻었다. 삼성전자는 1998년 4월 러시아 브리안스크주 통신운영업체인 에릭슨과 브리안스크의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3,000만 달러 규모의 CDMA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동통신 회사인 허치슨이 추진하는 CDMA 장비 국제 입찰에서 최종 공급자로 낙찰되기도 하였다. 이 계약은 금액이 2억 2천만 달러에 이르러 우리나라 CDMA 관련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 이에 나아가 1999년 6월에는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미국에 수출하는데도 성공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의 성공이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로도 이어진 것이다.

**【결과】** 세계최초 CDMA 상용화 성공은 CDMA 단말기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우위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국내 CDMA 이동통신 산업은 1996~2001년간 연평균 37.2%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같은 기간 동안 누적생산액 42조 원(내수 28조 3천억 원, 수출 13조 7천억 원)을 기록, 대표적인 IT산업으로 성장하였다. 1996~2001년간 CDMA 기술이 국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125조원, 고용유발효과 142만 명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국민경제가 IMF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의의】**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삼성전자는 2001년 세계 최초의 커버전스 기술폰인 TV폰(SCH-M220)을 기네스북에 등재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휴대폰(SGH-Z370), 세계최고 카메라화소 휴대폰(SCH-B600), 세계에서 가장 얇은 휴대폰(SCH-C210)을 기네스북에 올렸다. LG전자도 2011년 세계 최초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옵티머스 2X)을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등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핵심어】** CDMA세계최초상용화/디지털이동통신/퀄컴/한국전자통신연구원/PCS휴대폰/기네스북등재폰/컨버전스폰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주)아이뉴스24, 『2007·2008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2007);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휴대폰 3종 기네스북 올랐다」(2007.9.2).

**【사진자료】** 626. 시티폰 개통시연 장면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소항목】**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성장

국내 최초 개발 휴대폰	●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성장
무선호출기와 시티폰	휴대폰 수출
세계 최초 기술 개발 휴대폰	

**【정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시장 점유율 3, 4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세계적인 기업 모토롤라의 몰락으로 2000년대 후반이후 2, 3위로 뛰어 오르며, 휴대폰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애플의 시장진입에 따른 스마트폰 열풍으로 현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배경】** 지난 10여 년간 세계에서 한국 휴대폰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3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모토롤라를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모토롤라는 아날로그 통신 시대부터 시작해 전 세계 통신시장을 주도해오던 업체이다. 근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토롤라에 도전장을 낸 삼성전자는 1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로 모토롤라를 제치고 2위에 오른 것이다. 당시 시장조사기관 데이터퀘스트는 노키아가 30.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 13.8%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모토롤라는 13.4%로 3위로 밀려났다.

**【전개】** 2005년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판매량 1억 대를 넘어선다. 총 1억 300만 대의 휴대폰을 공급한 데 이어, LG전자 역시 총 5,500만 대의 휴대폰을 공급했다. 팬택계열은 1,840만 대의 휴대폰을 공급해 우리나라 휴대폰 빅3의 세계 시장 출하량은 1억 7,640만 대를 넘어섰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8억 2,000만 대 규모다. 이 중 한국 휴대폰 업체가 공급한 휴대폰 대수는 전체의 21.5%를 차지한다.

2005년과 2006년을 지나며 국내 휴대폰 업체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노키아는 세계 시장에서 3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1위 자리를 이어나갔고 모토롤라는 슬림폰 트렌드를 가져온 '레이저'를 시장에 선보이며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소니에릭슨의 '위크맨폰'도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자 국내업체들은 프리미엄급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세계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벤츠폰’, ‘블루블랙폰’ 등의 휴대폰을 개발하여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하여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한편 GSM 시장 비중을 늘리고, 내수와 수출비중을 2:8 정도까지 늘리는 등 해외수출비중을 크게 늘려나갔다. LG 전자 역시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 ‘삼성’이라는 트렌드를 제시하며 ‘초콜릿폰’과 ‘샤인폰’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2007년 초 ‘초콜릿폰’의 판매량이 1,000만 대가 넘었다.

2007년 들어 세계 휴대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PC와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미국 애플사가 다기능 휴대폰인 ‘아이폰(iPhone)’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모토롤라는 ‘레이저’ 이후 새로운 인기모델을 선보이는 데 실패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새로운 휴대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각 ‘갤럭시’와 ‘옵티머스’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시장에 선보이며 맞서 나갔다. 2011년 1분기 세계 휴대폰시장점유율을 보면 노키아가 여전히 시장점유율 29.2%(1억 85만 대)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토롤라의 추락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18.8%(7,000만 대)로 2위, LG전자가 6.6%(2,450만 대)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토롤라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애플이 5.0%(1,870만 대)로 4위를 차지하였다.

**【결과】** 우리나라 휴대폰 수출은 1984년 이후로 1996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을 구가하였다. 하지만 애플 발 스마트폰 열풍이 시작한 2008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 수출 실적이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도 전반기 휴대폰 수출금액은 85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7%가 상승하였다.

**【의의】** 불모지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휴대폰 산업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시장대응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지만 최근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 변화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1년 들어 다시금 상승추세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이폰을 무기로 한 애플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핵심어】** 휴대폰수출/휴대폰시장점유율/삼성전자/LG전자/애플/스마트폰/아이폰/갤럭시/옵티머스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주)아이뉴스24, 『2007·2008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2007); 전자신문, 「한국 휴대폰 수출실적, 3년만에 반등」(2011.8.8).

**【사진자료】** 627. 다이나텍 8000X 셀룰러 휴대전화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소항목】** 휴대폰 수출

국내 최초 개발 휴대폰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성장
무선호출기와 시티폰	● 휴대폰 수출
세계 최초 기술 개발 휴대폰	

**【정의】** 1995년 삼성전자가 '애니콜 신화'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내수시장 포화에 따라 해외수출로 활로를 모색하여, 2002년 현재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점유율 3, 4위를 차지하는 등 휴대폰 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배경】** 199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내수 휴대폰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국내 시장의 호황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제히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던 휴대폰 제조사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발발】** 삼성전자는 1997년 초 홍콩의 허치슨사에 'SCH-100S'와 'SCH-200'의 단말기 2종을 4만 대 공급한다. 액수로는 2,000만 달러 규모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말기 수출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CDMA 단말기로 시작해 GSM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다.

**【전개】** 이후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1997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휴대폰은 45만 대로, 미국 디지털 휴대폰 시장에서 8%의 점유율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에릭슨, 노키아, 쉘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1998년 10월에는 남미 시장에 진출을 시도한다. 삼성전자는 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999년 3월 현지에 휴대폰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연간 40만 대의 휴대폰을 현지 생산해 브라질과 기타 중남미 국가에 공급했다. 1999년 4월에 베네수엘라의 CDMA 서비스 사업자 텔셀(Telcel)과 1999년 말까지 1억 2,000만 달러어치의 단말기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CDMA 셀룰러 방식의 휴대폰에 이어 PCS도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 수출하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996년 9월 미국 최대의 PCS 통신회사인 스포린트스펙트럼사와 향후 3년간 PCS 단말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997년 30만 대, 1998년 100만 대, 1999년 40만 대 등 총 170만 대 6억 달러 어치의

PCS 단말기가 '스프린트-삼성'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판매됐다.

LG전자도 1997년부터 북미 CDMA폰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어 2001년에는 브라질, 호주 CDMA폰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

중견 휴대폰 업계는 2000년 4월 휴대폰 보조금 폐지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며 국내 시장에서 수요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계열, 모토롤라 등이 내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외 시장 개척에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 세원텔레콤은 2000년 7월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판매하는 비텔콤(Vitelcom)사와 3년간 450만 대, 약 7억 달러 규모의 휴대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기업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팬택은 2001년 모토롤라와 CDMA 단말기 7억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02년에는 미국 오디오박스와 CDMA 단말기 500만 대 수출 계약 등을 맺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본격화했다.

**【결과】** 2002년 현재 세계 휴대폰 시장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9.8%로 3위, LG전자가 3.7%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위인 노키아의 35.1%, 2위인 모토롤라의 16.4%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의의】**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 선도기업인 모토롤라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던 우리나라 휴대폰 산업은 1995년 삼성전자가 내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세계시장으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핵심어】** 휴대폰수출/휴대폰시장점유율/애니콜신화/삼성전자/LG전자/팬택/보조금폐지/리버스엔지니어링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주)아이뉴스24, 『2007·2008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2007).

**【사진자료】** 628. 20040422 핸드폰 찾기 콜센터

629. 2010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한국 휴대전화 광고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첨단기술 개발

**【소항목】** 우주항공산업

● 우주항공산업	첨단토목기술
첨단 과학기술	쇄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생명과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력 기술	

**【정의】** 우주항공산업은 항공기, 비행선,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 및 관련 부속 기기류, 지상지원장비 등을 생산하고 정비하는 산업으로 크게 항공기산업 및 우주산업으로 구분된다.

**【배경】**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의 3사가 1980년대 중반까지 라이선스 생산과 부품 하청을 해왔다.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기존 3사에 더해 현대우주항공이 기체조립에 참여하였고, 199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가 설립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각각 20%씩 출자하는 방식으로 통폐합되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설립되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KAI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KAI와 대한항공 양사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1996년 4월 과학기술부가 수립한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에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 동법에 의거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7년에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기술 획득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우주산업을 진행해 가고 있다.

**【전개】** 항공기부문에서 KAI는 국산 완제기를 자체 제작하다는 목표에서 독자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 공군으로부터 수주 받은 ‘KT-1웅비’ 초등훈련기를 85대 제작하여 2000년 11월 납품하였다. 2003년 8월부터는 고등훈련기 ‘T-50 Golden Eagle’의 양산체제에 돌입하였고, 2030년까지 수출을 포함하여 800대 이상 제조할 예정이다. 라이선스 생산으로는 한국 공군 KFP(한국형 전투기 프로그램)에 선정된 ‘F-16C/D’ 120대, 한국 육군 KLH(한국형 경헬리콥터 프로그램)에 선정된 ‘Eurocopter BO105’ 12대, 군민용 다용도 헬리콥터로 제안되고 있는 삼성/Bell의 ‘SB427’, 현대/가와사끼중공업의 ‘BK117’이 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부문은 1976년 설립되어 휴즈사의 ‘MD500’ 경공격 헬리콥터를 생산하는 등 라이선스 생산에 주력해 왔다. 1991년부터 ‘UH-60P’를 라이선스 생산하여 한국 육군에 납품하였다. 한편 독자 개발 비행기로 1988년 4~5인승의 ‘창공91’로 불리는 경비행기의

설계에 착수하여 1991년 11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다.

위성 개발에서는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1992년, 1993년, 1993년 1999년 및 2003년에 각각 우리별 1호, 2호, 3호 및 과학기술위성 1호를 발사하였다. 1999년, 2006년에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2호를 각각 발사하였다. 민간위성 개발분야에서는 전담사업자인 한국통신(KT)의 무궁화위성(KOREASAT) 1호, 2호, 3호가 각각 1995년, 1996년, 1999년에 발사되어 방송·통신 위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민군겸용 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 5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또 SK텔레콤이 일본 협력업체와 함께 2004년 3월 13일 세계 최초의 DMB전용 위성인 한별위성(MBSat)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위성DMB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사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993년에 개발한 1단형 과학로켓(KSR-I)을 2회에 걸쳐 발사에 성공하여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분포를 측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8년 6월에 2단 중형과학로켓(KSR-II)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02년 11월에는 한국 최초의 액체추진 과학로켓(KSR-III) 발사에 성공하였다. 액체로켓의 개발에서 얻은 기술적 경험과 러시아와의 1단 액체로켓엔진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소형위성 발사체(KSLV-I) 개발을 완료하였다.

**【결과】** 항공기 부문에서는 KAI가 개발한 'KT-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항공기의 수출국이 되었다. 우주산업에서는 'KSLV-I' 발사체(일명 나로호)를 2009년 8월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100kg급 과학기술위성 2호를 탑재하여 발사하였으나, 궤도 진입에 실패하였다.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를 하였으나 1단 연소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하여 또다시 실패하였으며 현재 3차 발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의의】**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규모의 경제가 큰 반면에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체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2년 8월 인공위성 발사체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노력하며 우주산업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

**【핵심어】** 우주항공산업/항공기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대한항공/우주산업/우주개발법/T-50/나로호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한국산업기술연구원, 『2012 항공우주산업연감』(2011); 국민일보, 「나로호 3차발사 본격 시동... 탑재 위성 11월말 완성」(2011.10.31).

**【사진자료】** 630. 20100610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선 나로호 발사장면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첨단기술 개발

**【소항목】** 첨단 과학기술

우주항공산업	첨단토목기술
● 첨단 과학기술	쇄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생명과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력 기술	

**【정의】**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민간기업과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제품 위주의 생산·수출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배경】**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1950년대까지도 과학기술 인프라가 극히 취약하고 원자력 등 극히 일부 과학기술 외에는 근대적 과학기술이 거의 불모인 상태였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본격적인 자체 연구개발능력 구축 노력이 시작되었다.

**【발발】** 과학기술 인력개발의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을 확충하였고, 1970년대 이공계 대학의 인력 공급기능을 확충하였다. 이로서 197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두뇌 유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해외 과학기술자의 국내 회귀를 경험하게 되었다. 기술고도화의 측면에서 정부주도로 중화학공업 육성이 추진된 1970년대에는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제품을 분해하여 역으로 기술 분석을 해 나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주력하였다.

**【전개】** 1970년대 후반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1980년대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학의 연구능력이 매우 취약하였지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등을 통해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공급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전형을 제공해 나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우수연구센터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 두뇌한국(BK)21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동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기술고도화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이전에 도입한 기술의 개량과 함께 국내 기술개발이 촉진되었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신장되고, 기술집약화가 이루어져 핵심 요소기

술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정부공공부문에서는 연구개발의 대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원천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졌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디지털 TV, TFT-LCD, CDMA 이동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필적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로서 1990년대 이후 기존에 국가가 중점 육성하였던 선박, 철강 등 중화학 제품과 함께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산업제품이 중요 수출품목으로 등장하게 된다.

**【결과】** 2009년 현재 주요 수출품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유무선전화기가 2위, 전자집적회로가 3위, 액정디바이스가 4위에 위치하여 첨단산업제품이 주요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제품인 선박이 1위, 자동차가 5위, 석유제품이 6위에 위치해 있다. 1960년대에는 광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제품이 수출상품의 대종을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기술 집약적인 품목 위주의 수출구조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핵심 원천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을 자립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기초·원천연구능력이 중시되는 미래유망기술의 핵심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진국과 상당한 기술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세계적인 과학기술지식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또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세계 과학기술의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지식을 스스로 창출해야 할 단계에 있다. 2008년 기준으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 중에는 서울대학교가 50위, KAIST가 9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이고, 세계 이공계대학의 경쟁력은 2008년 기준으로 KAIST가 34위, 서울대가 43위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세계 과학기술의 프런티어를 개척하기 위한 장기연구 및 심층연구가 활발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과학기술/과학기술인력양성/기술고도화/수출품목변화/리버스엔지니어링/추격전략/경제개발계획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2008); 김인수, 『모방에서 혁신으로』(2000).

**【사진자료】** 631. 2011 지능로봇연구소의 로봇시험 장면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첨단기술 개발

**【소항목】** 생명과학

우주항공산업	첨단토목기술
첨단 과학기술	쇄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 생명과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력 기술	

**【정의】** 생명공학기술이란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유전적인 구조를 변형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게 하는 기술로서 이를 이용하여 의약 등의 분야에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이다.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제약기술을 넘어선 바이오신약 개발 분야가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정부지원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 초에 생명공학기술을 도입했고,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형태를 이루어 빠르게 성장해 왔고, 1992년에는 바이오벤처인 ‘바이오니아’가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다. 1994년 정부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994~2006년)’을 수립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현재는 2006년 수립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년)’이 추진되고 있다.

**【전개】** 2005년에 산업자원부는 2015년 세계 7위의 바이오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와 12대 세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4대 정책목표는 ① 산업화 가능 핵심기술 선점 ②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③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④ 바이오지원제도 등이다. 200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2006년 총 8,27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가운데 연구개발 부문 투자에 6,616억 원, 인프라 부문 투자는 1,541억 원이었다. 한편 2006년 산업계는 8,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증권가의 펀드투자도 점차 확대추세에 있다.

바이오산업 부문에 대한 민·관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공급도 증가하였다. 신규 석·박사 수는 1999년 연간 6,700명에서 2006년 9,700명으로 1.5배 증가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과학분야 국제논문 건수와 기술력 지수는 각각 13위, 14위이며,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국내 1601건, 해외 510건으로 국내 출원 및 등록건수가 월등히 많지만 해외 등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에서도 신약개발에 성과를 나타내서, 국내에서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일양

약품, 일라프라졸), 골다공증 치료제(동화약품, DW-1350), 간질환·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LG 생명과학, LB84451, FACTIVE) 등이 해외로부터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인 이노셀, 이노메디시스, 크레아젠, 엔케이바이오 등이 일본에서 항암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2003년 8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바이오신약을 포함하여, 줄기 세포나 동물의 장기를 이용한 인공간 등 '바이오장기'분야, 혈액 한 방울로 질병 유전자를 찾아내는 '바이오칩'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결과】**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완벽한 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라는 명칭이 붙으며 별도의 임상시험이 필요하여 일반 복제약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신약 개발에 대한 국제 특허 기간은 2020~2025년인데, 2012~13년 대부분 바이오신약의 국제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특허 만료에 앞서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2020년에 905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 등 국내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2010년 11월 바이오시밀러 'HD203'을 터키와 브라질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고, 슈넬생명과학은 허셉틴, 아라네스프 등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의】** 인구고령화로 생명과학분야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들이 미래유망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여 대규모투자를 하는 등 시장경쟁도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IT기술을 발전과 함께 인터넷망과 로봇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 분야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심어】** 생명과학기술/바이오산업/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시밀러/바이오장기/바이오칩/유비쿼터스헬스

**【참고문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산업기술백서』(2010); 윤상욱 외, 『바이오산업과 환경』(2010); 한국경제, 「셀트리온 선점 '바이오복제약'... 삼성 가세로 10년 후 200억弗 시장」(2011.5.31).

**【사진자료】** 632. 20110613 생명과학기술로 복제한 제주 흑우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첨단기술 개발

**【소항목】** 원자력기술

우주항공산업	첨단토목기술
첨단 과학기술	쇄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생명과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 원자력 기술	

**【정의】** 원자력기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서 핵연료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첫 국내 원전을 건설하였으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처음으로 원전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배경】** 1955년 7월 한미 양국 대표가 워싱턴에서 서명한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력협정’이 국회 인준을 거쳐 이듬해 2월 발효됨으로써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원자력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첫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해 10월 우리나라는 UN본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헌장에 서명하였다.

**【발발】** 1956년 문교부에 신설된 원자력과는 전문 연구요원 양성을 위해 1956년부터 7 년간에 걸쳐 약 200명의 연구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훈련하도록 하였고, 1958년 원자력법이 제정되었다. 1959년 2월 최초의 현대적 연구시설을 갖춘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어 국내의 관련 연구자들을 한곳에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등 외국기관 등과의 국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전개】**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계획에 따라 원자로 도입을 적극 지원하였는데, 미국의 35만 달러 재정 원조와 1958년도 정부예산 등 총 72만 달러의 예산으로 1958년 12 월 100kW급 연구용 원자로의 구매계약을 체결, 1962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 ‘TRIGA Mark-II’가 국내에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원자력연구소는 자체기술개발에 착수, 1969년 6월 자체기술로 ‘TRIGA Mark-II’의 출력을 2.5배 증강시키는데 성공하는 한편, 1972년 5월 국산화율 65%를 달성하면서 ‘TRIGA Mark-III’를 준공하게 되었다.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도입이 결정되면서 원자력연구는 1960년대의 학술연구단계의 기초연구를 넘어 본격적인 기술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보유국가가 되었다.

다음 과제는 핵연료를 국산화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1981년에 원자력 국산화계획을 수립했다. 중수로형 핵연료의 경우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핵원료를 모델로 하여 1983년에 시제품을 제작한 뒤 1984년에 월성원전에서 시험장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1989년부터 변환공장을 자력으로 설계·건조하고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중수로형 핵연료 제조공정을 완전히 국산화하게 되었다. 경수로형 핵연료의 경우에는 1985년에 서독의 KWU사와 공동으로 핵연료 설계 및 제조기술을 개발했으며, 1988년에 연간 200톤 규모의 성형가공공장을 가동함으로써 1989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다.

**【결과】** 2010년 말 기준 국내원전은 총 20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설비용량은 17,716MW이다. 원자력 발전설비 점유율은 국내전체 발전설비 용량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8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4기의 원전이 건설 준비 중, 2기의 원전이 건설계획 중이다. 한편 2009년 12월 한국전력공사와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는 2017년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의】** 최근 신흥 개발 국가의 급성장으로 2007~2030년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약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급등으로 원자력이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값싼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어】** 원자력발전/원자력연구소/국제원자력기구(IAEA)/연구용원자로도입/핵연료국산화/원전수출/후쿠시마원전사고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한국수력원자력(주), 『2011 원자력발전백서』(2011).

**【사진자료】** 633. 201112 준공예정 신월성원전1호기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첨단기술 개발

**【소항목】** 첨단토목기술

우주항공산업	● 첨단토목기술
첨단 과학기술	쇄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생명과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력 기술	

**【정의】** 토목공학기술이란 경제성장에 필요한 생산·교통 등의 물리적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개선하려는 기술로서 도로, 다리, 운하, 부두 등의 교통시설부터 댐, 터널, 발전소 등 현대적인 시설의 건설도 포함된다.

**【배경】** 우리나라의 토목공학기술의 발전은 1962년부터 시작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력, 용수 및 수송 등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이라는 시대적 필요성과 산업보호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섬진강, 동진강 등 하천 유역의 관개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1963년 울산 정유공장 기공, 1965년 춘천 수력발전소 및 섬진강 다목적댐 준공, 제2한강교 및 경인복선 개통 등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이 두드러졌다.

**【발발】** 우리나라의 건설업 및 토목공학기술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70년대 석유판동으로 인한 '중동건설 붐'이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OPEC은 석유생산의 감축과 공급 제한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 석유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이른바 석유판동이 발생하여 전 세계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중동 산유국은 당시 연간 700~8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에 중동 산유국은 석유 생산에만 의존하는 기존 경제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게 되었고, 1960년대 국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로 기술을 축적한 국내기업들은 낮은 인건비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동진출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전개】** 해외수주가 1982년 133억 달러로 정점을 지나 '중동건설 붐'의 퇴조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8년 1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까지는 주로 정부에 의한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에 의해 관련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1990년에 도로,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4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8% 수준이었으나, 1996년에는 재정투자액이 17조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로 급증하였다. 한편 해외건설도 1988년까지 수주감소에 추세에 있다가 1989년 이후 다시금 회복세로 돌아서 1990년에는 단일공사로는 사상 최대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동아 건설이 수주하기도 하였으며,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도 진출하는 등 다변화가 모색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국내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중앙고속도로(2000), 서해안고속도로(2004), 인천대교(2009) 등이 건설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활발하여 고부가 가치의 플랜트 중심으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여 수주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결과】**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물산이 주계약자로 건설에 참여하여 2010년 완공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섬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빌딩은 높이 828m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3일에 1층씩 올라가는 최단기간 공기 수행기술과 고강도 콘크리트 기술,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직접 펌프로 쏘아 올리는 기술 등 우리나라 기업의 높은 토목공학기술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완공된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설치된 침매터널이고, 동시에 파도가 심한 외해에 설치된 세계에서 유일한 침매터널로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토목공학기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의의】**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토목산업은 1970~80년대 중동건설 붐을 계기로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 국내의 사회간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해외수주의 증가로 제조업수출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핵심어】** 토목공학기술/중동건설붐/석유파동/부르즈할리파/세계최고층건물/거가대교/침매터널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산업기술백서』(2010); 부산일보, 「거가대교 침매터널 신기록 행진 처음」(2010. 6.26).

**【사진자료】** 634. 20081119 인천대교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첨단기술 개발

**【소항목】** 쇠빙선 LNG 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우주항공산업	첨단토목기술
첨단 과학기술	● 쇠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생명과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력 기술	

**【정의】**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선진국 규모의 대형 조선설비를 갖추고 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1970년대로 이때부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경】** 1960년대에도 국내 최대 조선소였던 대한조선공사가 수출선을 건조한 사례가 있지만, 본격적인 조선업의 시장진입은 1973년 현대중공업이 최초였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회장은 가장 큰 난관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9월 영국 런던의 버클레이즈은행을 찾아간다. 이때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경험이 있다는 얘기로 차관을 얻는데 성공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발발】** 당시 얻은 차관으로 조선소를 건립하여 가장 큰 유조선인 VLCC를 동시에 2척이나 진수시킨 일은 세계 조선사의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초기성공을 발판으로 고용효과가 크고 대규모 초기자본이 필요하며 국가 방위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조선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뒤따랐다. 1970년대 조선산업은 정부 차원의 주요 육성산업으로 채택되면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건조능력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이 시작되었다.

**【전개】** 1970년대 집중적인 정책 지원으로 1970년대 말부터 세계 2위 조선국으로 부상하였으나 당시 주도국이었던 일본에 비하면 기술수준이 크게 뒤쳐져 있었다. 이미 경쟁상대로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기술이 한층 발전하게 된 계기는 현지 업체들에 대한 출장이었다. 원래 현장촬영을 못하게 막았지만 카메라를 몰래 숨겨 들어가 필요한 현장을 촬영했고, 귀국하여 동료들과 토론을 거쳐 현장에 곧바로 적용했다고 한다. 조선산업은 현장과 건조 공정에서 얻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서의 모방과정으로 국내

조선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발전을 통하여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국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 1~9월 기준 선박 수주량은 1,207만 CGT로 세계 시장의 51.2%를 차지하여 중국의 31.2%, 일본의 4.7%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결과】** 선박제조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선도국의 위치에 있다. 삼성중공업은 육상의 저장탱크나 기화시설 없이 액화 천연가스를 선체 내에서 기화시켜 수요지에 바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선박인 재기화 LNG운반선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LNG운반선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을 구축하게 되어 2011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발주량 18척 전량을 수주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영하 45도의 기온에서 1.5미터의 얼음을 깨면서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7만 톤급 쇄빙유조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건조하여 동아시아와 미국 및 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최단항로의 자원 수송로를 개척하였다.

**【의의】** 불모지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민간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0년 기준 국내 1위의 수출산업으로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향후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 크루즈 선박 제조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비중을 높이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계 조선업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핵심어】** 조선업/거북선/대한조선공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재기화 LNG운반선/쇄빙선/크루즈선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산업기술백서』(2010); 연합뉴스(2011.10.19.), 「한국 선박수주 中제치고 세계 1위 유지」.

**【사진자료】** 635. 20061225 세계최초의 양방향 쇄빙선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첨단기술의 발전

**【전시항목】** 첨단기술 개발

**【소항목】**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주항공산업	첨단토목기술
첨단 과학기술	쇄빙선, LNG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
생명과학	●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력 기술	

**【정의】** 우리나라는 1976년 최초의 국산 완성차 모델을 개발, 수출한 이래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석유자원의 고갈과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경】** 미국에서 대형 승용차의 생산 붐이 일고 있던 1955년에 우리 자동차업계는 미 군용 지프를 개조해 최초의 국산차인 시발자동차를 생산하였다. 1962년에는 새나라자동차가 부평에 공장을 건설하여 근대적인 조립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였다. 이후 수공업적인 국산차 조립생산은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국내 자동차업계의 창업이 뒤따랐다.

**【발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현지조립형 반제품(KD) 생산에 치중하였으며, 부품 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973년 기아산업은 국내 최초로 컨베이어시스템을 갖춘 일관조립공장을 경기도 광명에 건설하였다. 미국의 포드사가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뒤 59년만의 일이었다. 1975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종합자동차공장을 울산에 건설하면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근대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므로써 부품업체들도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부품 국산화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1976년 현대자동차는 최초로 국산 고유모델인 포니를 본격 생산하였으며, 최초로 베네수엘라에 수출하였다.

**【전개】**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은 양산체제의 확보와 수출기반을 확립하였다. 현대자동차는 1985년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단일 모델 전용공장을 완공하였으며 1986년에 미국시장에 포니엑셀을 수출하면서 자동차 강국으로서의 신화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의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1988년 국내 생산이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겪기도 하였지만 국내 자동차업계는 세계화와 기술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오늘날 국내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자 그린 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인 그린 카 기술은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하이브리드차가 가장 현실성 있는 친환경차로 평가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인 엔진과 전기모터의 장점을 혼합한 자동차로서 시동 시 전기모터를 통해 엔진을 시동함으로써 시동 초기의 연료소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엔진의 배기가스를 극소로 줄일 수 있는 병렬 하이브리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기술개발 협력으로 2009년 고유의 LPi 하이브리드차가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결과】** 2011년 5월 현대·기아차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에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차 시대를 열었다. 이들 차종은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미국 시장에도 출시하여 급변하는 자동차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업계와의 기술격차로 인해 판매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의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이 성장하여 세계 10대 자동차생산국이 되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오늘날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0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3만 9천대가 판매되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이 47.9%, 미국이 39.3%, 유럽지역이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2,000만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그린 카 기술수준은 완성차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76%에 불과하며 10년 후에는 88%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 개발비용으로 2015년까지 3조 1,000억 원, 일본은 2012년까지 3조 2,0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의 지원총액이 2,74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첨단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원천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소비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보조금지급 등 보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핵심어】** 자동차산업/시발자동차/포니/그린카/하이브리드차/쏘나타하이브리드/K5하이브리드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20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산업기술백서』(2010); 매일경제, 「현대차, 하이브리드 전략 재점검」(2011.10.24).

**【사진자료】** 636. 20090916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첨단기술의 발전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 삶의 질 향상	

**【배경】**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위협요인에 대응하고,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요가 확대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소비되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직면한 위협요인은 세계화와 정보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 고용 불안정,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에 의해 초래되는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출산율 제고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더 풍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가, 주택, 환경, 문화, 체육,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행】** 성장과 분배가 상호 대체적인 관계로 인식되었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선 성장 후 분배' 철학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동원 가능한 재원을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하였다. 물론 초기 단계부터 소득분배와 사회복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부조와 의료보험 등의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입법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이 사문화되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현실이었다. 사회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1980년대부터이며 이때부터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사회보험제도는 처음에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확대되었다.

**【결과·의의】** 짧은 기간 동안에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제도에서의 빠른 성장이 있었지만, 경제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어】** 경제선진국/사회통합/생활수준 향상/선 성장 후 분배 철학/공공부조제도/사회보험제도/사회복지제도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6(사회복지·보건편)(2010).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복지제도의 변화

**【소항목】** 의료보험제도

● 의료보험제도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국민연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기타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정의】** 의료보험제이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통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전 국민으로 의료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배경】**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기원은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의 틀을 마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는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지 못하여 당장 실시하지는 못하였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자 비로소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다.

**【시행】**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2차 개정을 통해 1977년 최초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는 의료보험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적용범위가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한정되었다.

**【변천】**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이후에 연금제도와 함께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하나로 묶어 실시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자 1979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우선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직장의료보험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전체 국민 대비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이 21.2%로 상승하였다.

1980년에는 군인 가족, 1981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군인 퇴역연금 수급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나갔다. 한편 농어

촌 및 도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의료보험도 실시되어 1980년대 초반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래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로써 1977년 제도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는 1977년부터 의료급여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의료보험대상을 직장과 지역에 따라 분리하여 독립적인 보험방식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인 수직적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1998년 10월부터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 조합들 간의 재정이 통합되었다. 이후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공단(공교공단), 직장조합의 관리조직을 통합하여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2002년 1월 재정통합을 끝으로 실질적인 통합이 마무리 되었다.

**【결과·의의】** 1977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단일 관리운영방식으로 통합한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보험 재정의 안정성, 취약한 보장성 등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핵심어】** 의료보험/건강보험/의료보험법/지역의료보험/공교공단/직장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5(2010);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백서』(2004);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1997).

**【사진자료】** 637. 19970701 의료보험실시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복지제도의 변화

**【소항목】** 국민연금

의료보험제도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 국민연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기타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정의】** 국민연금이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월 소득액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하여,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가 1999년 전 국민으로 국민연금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다.

**【배경】** 연금방식의 소득보장제도가 소개되기 이전까지는 소득 불확실성의 장기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 스스로 저축하거나 가족에게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산업재해와 같은 각종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의 도입이 절실했다.

**【시행】** 19세기 말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일정기준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금제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1960년 공무원, 1963년 군인,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른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었다. 이는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제수준이 높지 못하여 비교적 재원조달이 쉬웠던 고용이 안정적인 사업장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변천】** 1980년대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5~9인 사업장, 1995년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 순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적연금이 소개된 지 약 40년 만에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9년 4월에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적용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납부능력이 없다고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추가적인 정부의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로 인해 집단 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많은 적립금이 쌓이지만,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의 성숙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급여구조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수정적립방식을 택하였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성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2002년 3월 설립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수지 적자가 처음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요구가 절실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2007년에 드디어 재정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 급여제도 개선, 기관운영과 관련된 조문이 개정되었다.

**【결과·의의】**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현재 약 5만 8천개 사업장의 443만 명이 가입하였으나, 점차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2008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1,83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군인연금을 제외한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를 보더라도 2008년 말 기준 1,962만 명으로 총인구의 40.8%, 경제활동인구의 81.6%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아직도 다수의 국민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핵심어】**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공적연금/국민연금재정안정화/국민연금법/국민연금관리공단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5(201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20년사』(2008);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 방안』(2003).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복지제도의 변화

**【소항목】** 기타복지제도

의료보험제도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국민연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 기타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정의】** 노인복지는 노화로 인한 취약성에서 발생하는 노인의 주요 관심사인 빈곤·질병·고독과 무위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정책, 건강보호 관련정책,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정책,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의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각각 14%, 20%가 넘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2018년, 2026년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자녀 수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혼의 증가 등 전통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오던 가족을 둘러싼 변화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노인에게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개】** 노인복지정책의 법적 기반은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의 행정기구로서 1981년 11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가정복지의 일부로서 노인복지정책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정책 초기인 1980~90년대에는 1987년 재가노인복지 시범사업 실시, 1989년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 1990년 노인승차권지급제도 실시(1996년 현금지급제도로 전환되었다.) 등 노인복지 정책이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노인복지정책이 체계화 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1998~2000년) 부터이다. 1999년 노인보건과가 신설되었고, 1999년에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현세대 노인을 위하여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 기간에는 노인복지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적 어젠다로 확정되어,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아이 도입되어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당당한 노후생활 지원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2007년 기준 11만 6천개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장애복지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인 대응으로서 소득보장, 각종 재활사업,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장애복지는 노인복지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었는데 그 법적 기반은 1981년 공포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이의 정책기구로서 보건사회부 내 재활과가 신설되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장애인올림픽’이 열리게 됨으로써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각종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설의 현대화를 비롯한 직업재활대책 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복지정책의 외연을 꾸준히 확장하여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사회활동과 개인 활동에 있어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장애인대상의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의 조기교육 욕구,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국가가 주도하여 영유아에게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져 왔다. 2008년 말 현재 33,000여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38%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재정 지원도 확대되어 2008년 기준으로 보육아동 중 약 68%인 73만 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었고, 2009년 7월부터는 보육아동의 50%가 보육료 기준액을 전액 지원받게 되었다.

**【결과·의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사회복지가 확충되고 성숙되어 이제 정립단계로 진입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의 불충분성과 사각지대 존재,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 부족한 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가 완성되기 위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핵심어】** 노인복지/장애인복지/영유아보육/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고령화사회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5(2010);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2008); 통계청, 『장애인구추계』(2006).

- 【사진자료】** 638. 200810 노인의날 가을축제  
639. 20090914 양천구의 실버식당  
640. 20090610 광주 노인건강타운

- 641. 20080911 서울 종로구 구기동 청운노인요양원
- 642. 20060414 장애인의 날 행사
- 643. 19980712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수영장
- 644. 20110908 강남구 공동육아 나눔터
- 645. 20101013 수원시 보훈복지타운의 독립운동가
- 646. 20110422 양양의 경로잔치
- 647. 국가유공자 보훈복지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복지제도의 변화

**【소항목】**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의료보험제도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국민연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기타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정의】**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시작되었다.

**【배경】**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비해 장시간으로 나타난다. 취업자 기준으로 볼 때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뉴질랜드 등에 비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길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약 600~700시간 길다. 물론 근로시간이 장기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주요 OECD 국가들이 기록했던 감소 추세와 비교할 때 감소속도는 느린 편이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근면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동양적인 근로문화, 신규 고용보다는 초과근로를 선호하도록 만드는 노동시간의 경직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기본적으로 토요일 휴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다.

**【시행】** 우리나라는 1953년 5월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처음으로 법정근로시간의 개념을 명시하였는데,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3월 1주 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한시적으로 주 46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1991년 10월부터 주 44시간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변천】**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대량 실업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차원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주요 노동정책의 결정을 맡게 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근로시간위원회, 2000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0년 10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휴일제도를 국

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내용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및 통과가 계속 지연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이 주5일 근무제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법 개정과 별개로 2002년부터 임금단체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를 협상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업들이 등장하였다. 2003년 들어서도 주5일 근무제가 단체협상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경영계가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게 되고, 이에 맞춰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법안 개정이 가속화 되었다.

드디어 2003년 8월 오랜 진통 끝에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업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각종 비용 상승 완화조치를 함께 명시하는 한편 기존의 월차휴가규정을 삭제하였다.

**【결과·의의】**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이 여가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 국민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가활동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여 본인이 대부분의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여가활동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프라 제공이 동반될 경우,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사회발전, 가족 단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주5일 근무제/주40시간 근무제/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노사정위원회/여가산업/여가문화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5(2010); 김승택 외,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2002); 한국관광연구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향』(2001).

- 【사진자료】** 648. 20031817 주5일 근무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649. 20110403 주말농장  
650. 20050730 외식업계의 호황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복지제도의 변화

**【소항목】**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의료보험제도	●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국민연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기타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정의】** 정부는 최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존의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배경】**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로 정의되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에 4.53명에서 2008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을 한참 밑도는 1.1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총인구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산업화된 구미 선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선진국들은 각종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들을 도입하여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는 출산율이 다시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산전후휴가 등 각종 일·가정 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 여성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도입 당시에도 존재하였지만, 그것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은 2001년 기간이 90일로 확대되면서부터이다. 한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변천】** 현행 산전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60일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단 500인 이하 규모의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휴가 사용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급여 전액을 고

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의 무급휴가를 남성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구미 선진국에 비해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배우자 출산 시 1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출산 시 3일, 이후 6개월 동안 14일의 추가휴가가 주어진다. 최근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 확대하고 이 중 3일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1년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는 기존의 전일제 휴가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였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의 기준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생후 1년 미만이었다가 2006년부터는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10년부터는 만 6세의 이하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 육아휴직의 탄력적인 사용을 보장하였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결과·의의】** 산전후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2002년 22,711명에서 2008년 68,52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61%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빈도가 적다. 이는 산전후휴가 급여의 60일분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휴가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기업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2년~2008년 기간 동안 7.7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1년의 휴가기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평균 사용기간은 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출산휴가 제도 등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핵심어】** 출산휴가/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일·가정양립정책/모성보호/합계출산율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5(2010); 국회입법조사처,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9); 연합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2011.9.6).

**【사진자료】** 651. 20060712 출산 간호휴가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복지제도의 변화

**【소항목】**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의료보험제도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국민연금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기타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한편 자립·자활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경】** 생활권적 기본권의 일환으로 기초보장을 최초로 법제화한 것은 1948년 7월 제정된 「제헌헌법」 제19조로 “노령·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2년 1월부터 「생활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으나 연령 조건(18세 미만, 65세 이상)을 바탕으로 한 범주적 공공부조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대량실업이 야기되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시행】**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1998년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적 틀을 만들고 제정을 추진하여 1999년 8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초보장과 자활 조성이라는 양대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빈곤의 책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도 있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자활사업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보호’, ‘피보호자’ 등 시혜적 문구를 사용한 반면 이를 ‘보장’, ‘수급자’로 바꿔 기초보장을 권리의 하나로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고실업·저성장 시대의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하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천】** 노무현 정부 들어 ‘참여복지’라는 이념 하에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환산제가 시행되었다. 법 제정 당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는데 2005년 2차 법 개정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전에 소득은 거의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선정하는 체계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이상의 초과재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하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러한 기본재산액을 인상하여 약 1만 5천명 가구가 새로운 수급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 정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9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신청 가구의 81.5%인 57만 4천 가구에 대해 4,40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 정도이다.

**【결과·의의】**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2009년 3월 현재 약 200만 가구 410만 명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근로의욕 저하, 소득의 하향 신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절대빈곤선이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에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핵심어】** 기초보장제도/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근로장려세제/절대빈곤층/IMF 경제위기/참여연대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5(2010); 국세청, 「2009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보도자료)(2009);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년도.

- 【사진자료】**
- 652. 20090114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
  - 653. 20051114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 654. 200809 농협보험과 서울대학교병원이 무료진료 봉사활동
  - 655. 20110404 배우지 못한 성인을 위한 교육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복지제도의 변화

**【소항목】**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의료보험제도	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변화
국민연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변화
기타복지제도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주5일 근무확산과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문화	

**【정의】**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사후 구제적인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직업훈련제도를 결합한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 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시행】**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1960년대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업부조적 성격의 제도만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기업에 주는 부담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높지 못하여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이 유보되었다. 1980년대 초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통적인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하여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실제 제도 도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1992년 김영삼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고용보험법안 작성이 진행되었는데 1993년 12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한편 산재보험은 이미 196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500인 이상 규모의 광업과 제조업 64개 사업장에 대한 8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범한 이래,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왔다.

**【변천】**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된 이래 2011년 11월 현재 30차례나 개정되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빈번했던 것은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여건이 고용보험 시행 이후 급변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새로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시켜 근로자 및 실업자 보호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동법을 개정하여 1998년 1월부터 기존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1998년 3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자 1998년 9월 다시 법을 개정하여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였다. 2001년 8월 개정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제도가 새로이 고용보험사업에 추가되기도 하였다.

「산재보험」 역시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98년부터 사업장 현장의 연수생 학생 및 직업훈련생과 해외 파견자에게 확대 적용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4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금융·보험업까지도 확대하였다. 2000년 7월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포괄하게 되는데 이로서 전 사업장에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급여 수준도 꾸준히 상승되었으며 2000년 7월에는 중증장애 근로자를 위한 간병급여제도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결과·의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IMF 경제위기 이후 고실업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고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제도개선을 단행하였으며, 고용보험 제정의 건실한 운용에 있어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산재보험역시 재해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산재장애자에게 현금보상을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더불어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그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오늘날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한층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고용보험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선하고 훈련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한편, 산재보험 역시 현금보상 이상의 재활 위주의 보상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기도 하다.

**【핵심어】** 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4대보험/IMF경제위기/직업훈련제도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5(2010);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1993); 노동부, 『노동백서』 각 년도.

**【작성자】** 최상오(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연구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국민생활의 변화

**【소항목】** 교육

● 교육	문화
주택	경제
환경	체육

**【정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교육의 환경개선을 비롯한 교육의 양적 변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육비 투입 측면의 경우 교육비의 정부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고 민간 부담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GDP 대비 학교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투입 지표들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학을, 입학률 등 교육 기회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학습환경과 관련한 지표들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발】** 정부와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은 평균 GDP의 5.8%를 학교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GDP의 5.1%)를 국가가 부담하고 약 12%(GDP의 0.7%)는 민간(학부모와 사학)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1%를 정부와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약 41%에 해당하는 금액(GDP의 2.9%)이 민간부담이고 약 59%에 해당하는 금액(GDP의 4.2%)만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재원에 대한 공교육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31위이며 교육 부문은 GDP의 8%가 공교육비로 약 40조, 사교육비로 30조가 투자되지 만 놀랍게도 지식 경쟁력은 40위 교육 경쟁력은 80위 수준이다.

**【전개】** 박정희 정부(1961~1979)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었고,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공교육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근대화를 추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시기로 학교 밖에서는 새마을 교육이 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 최규하 정부(1979~1980)는 교복자율화를 실시한 것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전두환 정부(1980~1987)의 교육정책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기조가 지속되었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컴퓨터 교육을 도입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1988~1992)는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전교조가 결성되고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1993~1997)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성 과외 방송을 시작하였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실시하여 고등교육이 과잉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국민학교를 일제의 잔재라 하여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어 인적자원 개발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었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교원노조가 합법화 되고 대학 3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였다. 2002년에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7)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승계하여 인기 영합을 목적으로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학교 밖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다.

**【결과】** 우리의 교육은 엄청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30여 년 간에 걸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정착되었고 198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이제 정착단계에 있으며, 1974년 이후 추진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여건의 격차가 크게 완화되었다.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이 99.5%에 달할 정도로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가져왔고 대학 진학률도 74.2%에 이르러 대중화 단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또한 국민의 평균 교육 연수가 10.6년에 이르고 있고, 25세 이상 인구의 고졸 이상 학력 구성비가 72.8%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교육연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의】** 교육과정 개편을 비롯해서 교육의 방법이나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교육정보화를 추진하여 각종 첨단기자재 확충도 이루어지는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현대화되고 있다. 학급 당 학생수를 비롯해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교사의 수업 부담도 줄어들고 있으며 처우수준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핵심어】** 교육/고등교육/공교육/교육수준

**【참고문헌】** 권대봉, 『대한민국 60년』(지식산업사, 2008); 허경옥, 『삶의 경제』(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국민생활의 변화

**【소항목】** 주택

교육	문화
● 주택	경제
환경	체육

**【정의】** 주택은 가족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 할 수 있는 휴식의 장소이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배경】** 우리나라는 주택을 거주하는 장소로 생각하기보다는 소유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 왔기 때문에, 개별 가정으로 주택의 소유 여부가 가장 큰 경제적 문제의 하나이며, 사회적으로도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문제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단독가구의 증가 등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주택보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발발】**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995년 전국 평균 86.1%에 머물러 있으며, 주택의 보유율은 이보다 낮아서 53.3%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지역적인 차이가 커서 대도시의 주택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태이다. 시 지역의 1995년 주택보유율은 1990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1975년 이래 1990년까지는 주택 보유율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결혼 후 처음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점점 늘어나서 1987년 8.4년이 소요되었으나 1992년에는 9.1년, 1997년에는 10.9년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6월 1일(정부는 2003년 1월)부로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가구 중 1가구는 내 집이 없으며,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2.2%를, 2006년 10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보유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개】**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및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개별가정의 주택비용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택난도 심각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주택은 사회계층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주택을 소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주거계층이 형성되었다. 어디에 있는 몇 평의 아파트에 거주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계층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나서, 최근에는 이러한 주거계

층이 사회계층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통적 주거는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기후, 풍토 등 자연적인 환경과 그 시대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무질서하고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은 주택난, 토지가격 상승을 가지고 왔으며 고층고밀도의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에서 집단 주거 형태인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택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거환경의 추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형식으로 또는 저층보다는 고층고밀의 집합주택 형식으로 주택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결과】** 아파트는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재고의 50% 이상이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이고 또한 매년 건설되는 주택 중 80% 이상이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자와 고령노인들을 위한 전원주택과 주말의 휴식을 원하는 주말주택 펜션 등이 산촌이나 바닷가 마을에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처하면서 건강한 주생활을 위한 웰빙 개념의 생태주택도 나타나고 있다.

**【의의】**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변화, 설비의 고품질화, 건축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주거문화와 주거의 형태를 형성해 갈 것이며, 또한 기존의 주거와 주거단지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핵심어】** 주택/주거/주거문화/아파트

**【참고문헌】** 이문섭, 『새로운 주거의 형태』(기문당, 2010); 조희금 외, 『가정생활복지론』(신정출판사, 2002).

**【사진자료】** 656. 20080601 삼성 래미안 에코팰리스(과천)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국민생활의 변화

**【소항목】** 환경

교육	문화
주택	경제
● 환경	체육

**【정의】**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은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공업화를 거치면서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어온 측면이 있다. 환경문제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 기반의 악화와 추가비용 증대로 기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 건설, 하천, 농업, 식생활 등 일상생활 전부분에 걸쳐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가뭄, 홍수, 폭염, 생태계 파괴 등의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재앙은 인명 손실, 재산 피해 등 우리에게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발발】** 따라서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 양측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고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와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녹색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버스·지하철·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을 둔 교통효율화를 추진한다.

**【전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미래의 먹을거리가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서 친환경 그린산업, 녹색기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고탄소형 경제 체질을 바꾸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삼은 것은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 그에 못지않게 경제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경제의 질을 높이려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성장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자동차·전자·조선·철강·석유화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므로 새로운 저탄소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의 맹렬한 추격을 감안하면, 녹색성장으로 대변되는 신성장동력 발굴은 경제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유럽과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3년이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은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관건이 되었다. 세계기후협약에 미온적인 미국도 '탄소중독 탈피'를 선언할 정도로 저탄소 경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의의】** 녹색성장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고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길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게다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려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양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탄소 경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미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는 중이다. 우리도 무한히 지체할 수는 없다.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녹색성장을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경제발전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핵심어】** 환경/녹색성장/친환경/신성장동력

**【참고문헌】** 박효종 외,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문화체육관광부, 2011);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http://www.greengrowth.go.kr)).

**【사진자료】** 657. 20041013 친환경 우리농산물 대축제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국민생활의 변화

**【소항목】** 문화

교육	● 문화
주택	경제
환경	체육

**【정의】** 지방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아 공유된 형태로 몸에 배어 공통의 가치를 지닌 고유한 생활양식으로서 전통 지향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배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를 특정계층이나 부유계층이 향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발전하면서 일반시민도 문화의식의 변화로 문화 향유의 욕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양적, 물질적 성장위주의 정책과 주5일제 근무로 지역주민의 여가시간 증가와 문화향유 욕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화시설은 서울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접근하기 곤란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속에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문화 축제 및 공간이 지방에도 필요하게 되었다.

**【발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문화 축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개】** 1960년 이후 1975년까지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문화축제도 증가하여 30개까지 증가하였다. 1981~1985년까지는 지역문화축제가 61개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88년은 전세계인의 문화축제인 88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의 지역문화축제보다는 아시아인과 세계인들의 축제를 준비하느라 많은 축제가 펼쳐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1995년까지의 지역문화축제는 150개 열려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의 억눌려왔던 국민에 의한 지역문화축제가 대 성황을 이루는 문예부흥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358개로 2배 이상의 지역문화제가 열려 문화축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지방자치가 실

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지역문화축제를 만들어 지역문화 축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2001~2005년까지는 394개로 약간 증가한 지역문화축제가 열렸다. 2006년은 726개 2007년 716개 2008년 926개 2009년 921개의 지역문화축제가 열렸다.

**【결과】** 지역문화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는 지역주민을 정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자칫 부정적인 차원의 임기 중의 치적 쌓기, 선심성 행정 등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지역문화축제를 이용함으로써 그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지역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지역문화축제가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내실 없는 프로그램 진행, 홍보부족 등으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결과】** 지역문화축제는 여행객에게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춤, 음식, 민요, 전통공예품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하고, 문화축제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에게는 지역문화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축제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축제를 창조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핵심어】** 문화/지역문화/지역축제/지역문화축제

**【참고문헌】** 홍민선,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전략』(한국행정사학회, 2011); 고숙희 외, 『문화정책연구보고서』(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행정사학회, 1999).

**【사진자료】** 658. 20110321 함평나비축제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국민생활의 변화

**【소항목】** 경제

교육	문화
주택	● 경제
환경	체육

**【정의】** 경제란 희소성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교환·분배·소비와 관련되는 사회 질서와 인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경】**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와 선진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1960~1970년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근대화를 이루었고, 1980년대 이후 시장자율의 확대와 개방을 통한 선진시장경제 체제구축에 노력해 왔다.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동안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 기간에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60달러 3000달러로 비약하였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모했으며, 현재는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2007년 9월 5일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약 2만 달러 정도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인 국내총생산(GNP)은 세계 11위, 환율은 1달러당 940원이다.

**【전개】**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한국문화의 발굴, 보존, 복원, 진흥이 이루어졌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잃어 가던 한국의 전통문화가 다시 살아나 빛을 보았으며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새마을 운동으로 대변되는 ‘하면 된다’는 국민의식이 불같이 일어나고, 한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대한민국의 존재가 세계 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 농업 위주의 1차 산업구조에서 공업을 통한 2차 산업 국가로 변모하였다. 문학 작품이 쏟아져 나왔고, 영화는 황금기를 이루었고, 연극도 많이 공연되었으며, 대중음악은 폭발적으로 발전하였고, 미술과 공예 등 다방면으로 문화가 진흥되었다. 또 사라질 위기에 있던 전통 무형문화재가 모두 살아나는 등 문화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국민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으며, 거의 모든 국민이 신나게 일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최대한 교육시켰다.

각종 가전제품이 일반화되어 주부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두 명당 한 대를 보유하고, 각 가정에 적어도 한 대 이상의 PC가 보급되는 등 지식 정보 사회 진입에 성공하였다. 높은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국은 OECD 가입, 유엔 이사국 진출 '88서울 올림픽과 '93과학박람회, 2002한일월드컵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역마다 국제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부산아시아영화제, 경주문화엑스포, 이천도자기엑스포, 광주비엔날레,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안동국제탈춤축제, 고양시세계꽃박람회 등 지방에서 다양하게 열리는 국제 행사가 그 예이다. 그러나 1996년 말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로 시작하여 1977년 한 해 동안 11개의 재벌이 파산하였고 이 중 3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재벌도 5개에 달하였다. 이러한 징후는 1997년 12월 3일 IMF와 긴급구제금융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경제가 위기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과】**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과 또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에 따라 해외 원조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수출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1954~1961년 8년간 미국 등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총 21억 달러로서, 동기간의 평균 국민총생산(GNP)이 17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1년치 GNP보다 더 많은 액수의 원조를 받았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받은 원조는 6·25전쟁 후 한국이 스스로 일어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혼신의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IMF를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가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D램 세계 생산 1위, 선박 건조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5위, 휴대폰 생산 2위, 컴퓨터 모니터 생산 1위, 철강 생산 5위 등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가까운 장래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핵심어】** 한국경제/경제개발/경제발전/선진국

**【참고문헌】** ګ ㅅㅅㅅㅅㅅㅅ, 『대한민국 60년 성찰과 전망, 경제관련』(지식산업사, 2010); 김동석 외,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 1963~2000』(한국개발연구원, 2002).

**【사진자료】** 659. 2010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한국기업 광고

660. 2010 모스크바의 한국기업 광고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향상

**【전시항목】** 국민생활의 변화

**【소항목】** 체육

교육	문화
주택	경제
환경	● 체육

**【정의】** 생활체육은 개인의 전 생애에 있어 체육활동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꾀하고 급격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복지사회의 체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현대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삶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정책을 넘어 국민 모두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생산적 일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여가를 선용하며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남성과 엘리트선수 중심의 스포츠문화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스포츠문화로 바뀌고 승리·경기력 향상 중심의 활동에서 즐거움·사교·건강증진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그 스포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발발】** 이러한 생활체육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경제성장 및 여가시간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9년 발족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게 하였으며 1991년에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인 생활체육진흥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개】** 우리나라의 체육은 1950년대까지는 민간부분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1960년대부터는 상당부분 정부가 주도해 왔다. 1962년 9월 법률 제114호로 제정, 발표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사회, 경제적 여건상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1980년대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1985년을 기점으로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정책 시행의 추진내용을 포괄하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함과 동시에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 왔다. 1990년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1993년 체육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진흥책인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발표했으며, 88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생활체육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올림픽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의 향상되면서 생활체육의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1998~2003)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복합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참여정부는(2003~2008)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명박 정부(2008~현재)는 '신나는 한 국민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생활체육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추구로 출발하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며, 직장에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를 밝고 건전하게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또한 생활체육은 정부가 지향하는 21세기의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 생활체육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의의】** 오늘날 청소년들의 신체 변화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그 동안 한국사회의 발전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어】** 체육/생활체육/국민생활체육/신체변화

**【참고문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이 생활체육이다』(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7); 『2009 체육백서』(문화관광부); 하니, 「생활체육의 관리운영 시스템 탐색」(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사진자료】** 661. 20110612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한 제2회 제주국제자전거챌린지대회  
(제주)

**【작성자】** 정우열(경운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첨단기술의 발전	●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면서 경제선진화를 향해 글로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발전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성장우선주의와 은행의 방만한 경영, 정경유착과 그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간과하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입각하는 공정한 경제제도의 수립이 미흡하였으며, 경상수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기업은 단기자금위주의 차입에 의존하면서 국제자본의 변동성을 직시하지 못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국경제는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 등에서 많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으며,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여 은행역사상 처음으로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제고 등의 개선을 추구하여 경제체질을 변화시켰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WTO체제에 위반하는 무역보조금의 철폐와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철폐, 조정관세 대상품목수 축소, 수입인증 절차의 간소화 등 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영합하는 대외개방 조치들을 취하였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그동안 개방의 예외로 취급되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도를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허용, 외국인직접투자(FDI) 적극적 유치 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추세에 부응하는 개방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각 분야에서 시행된 개혁 및 개방화의 영향으로 무역의존도(GDP 대비 무역비중)는 1998년 79.3%에서 2008년 92.3%로 크게 높아졌고 수출에서도 2007년 기준 개발도상국과의 교역 비중은 약 22%(중국 제외)로 미국·EU 15개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교역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등 개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말 이후 지역주의(regionalism)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2002년 10월에 타결된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EFTA·ASEAN·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EU·인도와의 타결되었으며 페루·GCC 등과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일본과 중국과의 협상향배에 따라 동아시아의 FTA 허브인 통상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키워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전시항목】** 경제선진국으로의 성장

**【소항목】** 세계 속의 한국경제

● 세계 속의 한국경제	
--------------	--

**【정의】**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1세기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면서 경제선진화를 향해 글로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배경】**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경제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형적 확장에만 관심을 두었다. 성장우선주의와 은행의 방만한 경영, 정경유착과 그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간과하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입각하는 공정한 경제제도의 수립이 미흡하였다. 또한 자본자유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체제가 불안정해진 대외적 환경변화 속에서도 경상수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기업은 단기자금 위주의 차입에 의존하면서 국제자본의 변동성을 직시하지 못했다. 대외채무에 의존한 경제발전전략은 지속적 성장과 해외자금의 원활한 확보가 항상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하여 다자간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구하며 「한지붕 지구촌」을 향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새로운 글로벌시대를 맞게 되었다.

**【전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 등에서 많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부채/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낮추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5대 그룹의 계열기업 수는 1997년 52개에서 2001년 41개로 감축되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여 은행역사상 처음으로 5개 은행(동남·대동·동화·경기·충청)이 퇴출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이행하였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제고 등의 개선을 추구하여 경제체질을 변화시켰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WTO체제에 위반하는 무역보조금의 철폐와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철폐, 조정관세 대상품목수 축소, 수입인증 절차의 간소화 등 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영합하는 대외개방 조치들을 취하였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그동안 개방의 예외로 취급되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도를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허용, 외국인직접투자(FDI) 적극적 유치 등 세계경제의 글로벌

화추세에 부응하는 개방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지역주의(regionalism)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WTO의 UR이나 DDA 등 다자협상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양자간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추진으로 통상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2002년 10월에 타결된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EFTA·ASEAN·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EU·인도와도 타결되었으며 페루·GCC 등과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일본과 중국과의 협상향배에 따라 동아시아의 FTA 허브인 통상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외환위기 이후 각 분야에서 시행된 개혁 및 개방화의 영향으로 무역의존도(GDP 대비 무역비중)는 1998년 79.3%에서 2008년 92.3%로 크게 높아졌고 수출에서도 2007년 기준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은 약 22%(중국 제외)로 미국·EU 15개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교역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개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의의】** 급속한 개방화정책에 따라 국내 피해자집단의 지원제도(무역조정지원제도 등)와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글로벌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핵심어】** 성장우선주의/글로벌스탠다드/무한경쟁시대/글로벌시대/지식기반경제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Ⅲ(한국개발원, 2010); 김명호 외 1인,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FTA 협상전략」, 『한국비즈니스리뷰』 Vol.1 No.1 (2008).

- 【사진자료】** 662. 19980212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  
663. 20040416 자원절약을 위한 폐지 재활용  
664. 19880114 주부교실회원들의 금모으기 운동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21세기 한국사회는 국제위상을 높이면서 경제선진화를 달성하여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다방면에 걸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성장일변도의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형적 확장에만 관심을 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는 결국 1997년 외환위기라는 결과를 맞이하였고 그 결과 대외적인 개방과 사회 각 부문의 많은 개혁과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선결 과제일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환경문제·개도국지원·국제평화적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등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최근 들어 다문화지원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한다면 결국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돌출된 환경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는 포괄적 자연보호운동이나 각종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등이 포함되며, 광역생태축 구축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전체의 생산과 소비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적절히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도주의적 정신과 지구촌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 주민의 빈곤퇴치와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 및 인적 지원을 하고 있고 장차 더 많은 몫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 방면에서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각 부문에서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많은 준비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즉 과거와 다른 기업의 역할 책임, 북한의 비핵화, 남북 간 상생과 호혜의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3가지 비전 아래 상생과 공

영의 대북정책을 수립과 이를 통한 평화적 통일문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정치문화, 공정한 사회의 구현, 미래지도자육성, 교육의 선진화, 문화예술을 통한 일류국가 달성, 인류평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학문과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선도, 초일류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강화, 녹색성장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 대한민국의 미래	
------------	--

21세기 한국사회는 국제위상을 높이면서 경제선진화를 달성하여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다방면에 걸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성장일변도의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형적 확장에만 관심을 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는 결국 1997년 외환위기라는 결과를 맞이하였고 그 결과 대외적인 개방과 사회 각 부문의 많은 개혁과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선결 과제일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환경문제·개도국지원·국제평화적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래하고 있는 다문화화정의 증가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최근 들어 다문화지원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한다면 결국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돌출된 환경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는 포괄적 자연보호운동이나 각종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등이 포함되며, 광역생태축 구축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전체의 생산과 소비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적절히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도주의적 정신과 지구촌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 대하여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제공하여 개도국 주민의 빈곤퇴치와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 및 인적지원을 하고 있고 장차 더 많은 몫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 방면에서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각 부문에서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많은 준비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즉 과거와 다른 기업의 역할 책임,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상생과 호혜의 경제공동체형성, 남북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3가지 비전 아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수립과 이를 통한 평화적 통일문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정치문화, 공정한 사회의 구현, 미래지도자육성, 교육의 선진화, 문화예술을 통한 일류국가달성, 인류평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학문과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선도, 초일류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강화, 녹색성장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요약】** 21세기 한국사회는 국제위상을 높이면서 경제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래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개도국 지원 그리고 글로벌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적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등에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세계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각 부문에서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통일문제 등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다문화사회

**【소항목】**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과제

●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과제	
------------------	--

**【정의】**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home)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국제결혼 가정·외국인노동자 가정·북한새터민 가정)으로 한국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배경】**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국제노동력이동 증가는 한국의 이른바 3D업종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국내 출산율의 저하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급증을 낳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 높은 경제성장이 알려지면서,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싼 임금으로 고용되었다. 또한 1997년 IMF 이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 인구 구성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1980년대 종교단체(통일교)에 의한 국제결혼과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에 의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이탈 주민인 새터민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행】**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에 따라 2006년 「다문화가정교육 지원대책」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2007년 다문화정책 수행의 기반구축을 위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을 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여성과 가족구성원의 사회 적응지원을 위해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결혼이민자 여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가족정책실아래 다문화가족과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변천】** 1990년대부터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와 출생 성비의 격차,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여성독신자 증가와 세계화 등의 요인에 의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내결혼시장에서 소외된 남성을 중심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이 펼쳐지면서, 중국동포와 중국한족과의 결혼이 급증하였다. 최근에 국제결혼의 양적증가(167,090명/2009년→ 181,671명/2010년)와 함께 다양한 국적(베트남·필리핀·

태국 등)의 사람들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40.4만 명(2007년)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여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과】**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7년 8월에 100만 명을 넘어선 후, 약 114만 명(2010년)에 이르러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급속한 다문화현상은 초기에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여 탈·불법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정책에서 나아가 이민정책(동화주의, 차별주의)으로 변화되었다. 다문화가정들이 겪고 있는 제 문제점(경제적 어려움,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 대한 부적응,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심리적 문제,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의 소외, 자녀교육, 국적취득)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의 각 부처별, 지자체 별로 실시하고 있다. 취학률이 저조한 다문화 2세대들이 잠재적인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추정통계에 의하면, 2020년이면 한국 사회 신생아 3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로 인해 미래에 야기될 사회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다문화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포용한다면 이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핵심어】** 다문화가정/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다문화지원정책/다문화가족지원법

**【참고문헌】** 박은숙,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10); 김계선,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0).

**【사진자료】** 655. 20110831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656. 20110901 결혼이민자 친정가족 초청행사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환경을 위한 노력

**【소항목】** 자연보호운동

● 자연보호운동	녹생성장
대체에너지 개발	생태계 복원
친환경 유기농업	

**【정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즉 식물·동물·미생물·토양·암석·물, 또 산악·하천·해양·대기 등을 물리적·화학적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그 파괴의 원인을 규명하고 미연에 방지하며, 더 좋은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인류의 생명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 자연환경은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주는 반면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고 조화의 질서를 혼돈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50년대에 6·25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파괴와 사회혼란과 극심한 빈곤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며 1960·70년대의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폐기물이 증가하여 자연환경의 파괴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을 가꾸고 정화함으로써 자연의 조화를 지속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시행】** 1970년대에 경제개발과정에서 자연파괴가 심화되면서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되었다. 민간단체로 1975년 9월 10일 「한국환경보호협회의」가 설립되었고, 본격적인 시작은 1977년 10월 5일에 범국민운동(궐기대회에 24,199개의 자연보호회와 131만 8천여 명 참가)이 제창되고 1977년 11월 대통령령 제8738호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연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이다. 생태학적인 보호의 견지에서 1977년 12월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국민에게 자연환경을 리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제정·선포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 2월 내무부에 전담기구인 자연보호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전국의 통·반에 이르는 자연보호회가 조직되었다. 1980년에는 환경청이 발족되어 자연에 악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오염을 조사·규제하게 되었다.

**【변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1991.12.31, 법률 4492

호)을 제정하고, 이를 기본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법과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 등 건축관계법 및 자연공원법·산림법·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각 단행법과의 긴밀한 관련 하에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제반 규제 및 시책이 실시되었다.

1998년에는 자연보호행정이 내무부(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자연보전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생태계보호지역과 자연자원경관보호지역으로 나누고,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특정도서(독도 등)·천연기념물보호구역·천연보호림·수산생물보호수면·자연공원·도시공원·명승지 등을 지정하였다. 야생동식물 보호에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과 보호야생조수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지역은 다른 목적으로 개간·개발·사용이 금지되고 지정된 동식물은 벌채·포획·수렵·수출입 등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국제습지조약(Ramsar Convention, 1997.7.28)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93.7.9)등에도 가입하고, 민간단체로 환경운동연합이 주도가 된 환경단체 등이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 시화호 매립반대, 영월 동강댐건설 백지화 등 생태계를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과·의의】** 자연보호는 생태계로서의 보호를 말하지만, 특정의 생물적 자연보호만으로는 자연보호 본연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생태계 보호로서는 자연림과 같은 자연생태계가 주된 대상이지만, 개발이 크게 진척된 오늘날에는 반자연(半自然) 생태계의 보호도 중요하다.

**【핵심어】** 자연보호운동/자연보호위원회/자연환경보전법/환경단체/Ramsar Convention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VI(한국개발원, 2010); 김보현, 「자연보호운동과 전국토공원화운동」, 『지방행정』 Vol.48 No.543(1999).

**【사진자료】** 667. 20060322 송파구 시민들의 자연보호 운동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환경을 위한 노력

**【소항목】** 대체에너지 개발

자연보호운동	녹생성장
● 대체에너지 개발	생태계 복원
친환경 유기농업	

**【정의】** 기존의 화석연료의 변환이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으로서 태양열발전·태양광발전·바이오·풍력·소수력·지열에너지·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수소에너지 등의 신에너지를 말한다. 최근에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서의 재생에너지·신에너지·미래에너지 등을 의미한다.

**【배경】** 1970년대의 제1·2차 석유파동 이후 화석연료의 매장량 한계로 고갈위기·가격폭등·공급중단 등 에너지 위기의 재발가능성과 1990년대에 들어와 기후변화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가장 위협적이며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 따른 화석에너지의 사용제한이 가시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1997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법적의무를 지는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국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체할만한 경제성 있는 대체에너지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문제는 에너지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지속적으로 소비(동력·생활소비)증가가 불가피한 반면, 경제성장의 지속과 이산화탄소 억제(저탄소)라는 상충된 선택에 직면하였다.

**【시행】** 1980년대 들어와 태양열·풍력분야의 기초연구가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체제가 확립되었다. 즉, 태양열, 태양광 등 11개 분야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88~2001년)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기후변화협약으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었다. 국제환경규제로 대체에너지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대체에너지,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기술개발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확대정책은 10년마다 「제1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10개년 계획」(1997~2006년)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2003년에 수립된 2차 기본계획(2003~2012년)에서는 기술개발과 보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었다.

2008년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2009~2030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녹색성장 동력 산업화 방안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및 지원방안,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변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1997년 12월 13일에 전문이 개정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 확정되어, 대체에너지이용 권고제·시범사업·보조 및 용자·세제지원·국공유 재산이용·대체에너지이용 확대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다시 일부개정하면서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명시하였고, 2004년 12월 31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었다.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국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수립·진행 중에 있다.

**【결과·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2009년에 총 1차 에너지의 2.5%이다. 앞으로 2015년 4.3%, 2030년 11%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체에너지 3대 중점분야(태양광·수소/연료전지·풍력발전)와 폐기물 이용 등의 실용화·보급에 연구개발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차세대 녹색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비중: 27.5%/1998년→34.2%/2015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대체에너지 개발 문제는 경제성(풍력, 태양광 발전의 경우: 최소 2~15배 고가), 환경성(부지면적), 에너지비중(보조 수단)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핵심어】** 대체에너지/지구 온난화/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저탄소

**【참고문헌】** 명성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정책의 변화와 방향: 대상별 정책환경과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제3권 제2호(201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VI(한국개발원, 2010).

**【사진자료】** 668. 20080926 대한민국 기후변화 박람회  
669. 영덕풍력발전단지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환경을 위한 노력

**【소항목】** 친환경 유기농업

자연보호운동	녹생성장
대체에너지 개발	생태계 복원
● 친환경 유기농업	

**【정의】** 친환경 유기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생장조절제·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윤작(輪作), 농·수·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농업외적 유기물, 천연광물, 생물적 방제기술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배경】**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양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부문은 1970년대 말부터 개방농정으로 인한 식량자급율의 하락·농업노동력의 격감과 고령화·농지잠식 등으로 농업생산은 위축되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2008년에는 31.8%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상업농체제로의 전환은 대규모 영농으로 생산성제고에 바탕을 둔 농약과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하였다. 다수확 개량품종·관개·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구성하는 일련의 농업기술체제로 특히 화학비료나 농약의 대량투입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환경훼손형 농업으로 변질되었다. 기본적으로 화석연료·화학비료·농약·유전자변형농산물(GMO)·공장형 축산·성장호르몬·항생제사용 등에 의존하여 농촌생태계 자체가 황폐화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식탁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시행】** 우리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카톨릭농민회에서 생산농민들에게 화학농법을 대신할 효소농업을 보급하면서 시작되었고, 최초의 유기농업 생산자 단체는 1976년에 설립된 「정농회」이다. 카톨릭·한국기독교농민회 등이 「생명공동체운동」을 병행하면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에 노력하였다. 민간에서 시작된 친환경농업은 1994년 12월에 농림부에 친환경 농업과가 신설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친환경 농업정책이 시작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변천】** 2001년 1월에는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을 총 농산물생산량의 5%로 확대

하는 등의 정부는 매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중장기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수립 추진하였다. 2001년 1월 26일에 법률명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2002년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유기농업 육성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친환경 농업직불제(2003년), 친환경 축산직불제(2004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정책 결과, 2008년말 현재, 친환경농업(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로 細분류)현황을 살펴보면, 농가호수가 172,533호이며 면적은 174,107ha이다. 이는 2001년(4,678호, 4,554ha)과 비교하면 각각 약 40배가 상승한 것이며, 농가호수 비중으로 보면 2008년 총 농가호수(1,212,050호)의 14.2%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친환경농업농가 중 70%가 저농약이고, 유기농업농가는 전체 친환경농업 면적의 7% 정도, 친환경농업 농가호수의 5%정도이며, 전체 농가호수와 비교하면 0.7%로 아직 1%에도 못 미친다.

**【의의】** 친환경유기농업은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가져오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되면 일반 관행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고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개방속도와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다.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 아직 관행농업에 적용되는 생산력주의와 경쟁력주의에 머물러 있어 양적 지표의 성장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핵심어】** 환경훼손형농업/생명공동체운동/정농회/친환경농업육성법/농가소득증대

**【참고문헌】** 윤병선,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농촌사회』 제20집 제1호 (2010); 이규승,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업」, 『식품저장과 가공산업』 Vol.3 No.1(2004).

**【사진자료】** 670. 20071014 친환경 유기농업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환경을 위한 노력

**【소항목】** 녹색성장

자연보호운동	● 녹색성장
대체에너지 개발	생태계 복원
친환경 유기농업	

**【정의】** 환경친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용량을 유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배경】** 지구촌은 각종 기후재앙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기후변화로 환경위기와 고유가의 자원위기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2006년 스텐 보고서(Stern Review)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체제가 지속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과 가격상승을 가속화할 것이다. 기존의 요소투입위주의 경제성장시스템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조이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여 기존의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은 2008년 8월 15일 정부가 '미래 60년의 국가비전, 저탄소녹색성장정책' 발표에서이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2009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2020년까지 세계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 세계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2009~2013년)을 발표하였다.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중기 온실가스감축목표로 2020년도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상충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며,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탈석유 및 에너지 자립 강화·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산업구조의 고도화·녹색경제 기반 조성(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국토 및 녹색교통 조성·생활의 녹색혁명·세계적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고도 물처리·LED 응용·그린수송시스템·첨단그린도시) 확충, 기업 경쟁력(친환경기업 육성)제고와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다. 저탄소 녹색교통, 건축(친환경주택),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녹색금융)과 사회시스템을 포함하여,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결과·의의】**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206조원의 생산효과를 도모하고 156~1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의 강점인 IT·BT·NT 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산업구조로 전환하여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감축정책으로 인한 2020년의 GDP 손실을 1.03~2.12%로 추정되고 상당기간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환경정책의 강화는 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전략의 추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두 가지 임무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

**【핵심어】** 스톤 보고서/저탄소 녹색성장/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기술

**【참고문헌】** 김은경,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정책」, 『여성경제연구』 제7집 제1호(2010);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사진자료】** 671. 청송 주산저수지의 왕버들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환경을 위한 노력

**【소항목】** 생태계 복원

자연보호운동	녹생성장
대체에너지 개발	● 생태계 복원
친환경 유기농업	

**【정의】** 생태계란 여러 생물군집들이 물·공기·토양 등의 무생물적 요소를 바탕으로 태양에너지와 타 생물군집 등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기후 등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유지 체계를 말하며, 복원이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훼손된 중요한 서식처나 생물종을 훼손 이전 또는 유사한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의미한다.

**【배경】** 1960~19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 누적돼온 환경문제가 많은 매체와 경로를 통하여 가시적인 문제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다. 도시의 인구증가는 생활하수와 폐기물, 분뇨 등의 배출이 늘면서 수질 악화와 대기 오염을 심화시켰다. 대기오염은 자동차 및 공장(화학·석유화학·금속제련 업체), 발전소, 가정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황산화물·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오존·메탄가스·중금속·프레온가스) 등이 문제가 되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통해 산성비, 질소산화물·프레온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댐 건설, 삼림파괴 등으로 강과 호수의 어류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건물·교량 및 구조물 등의 부식, 식물의 수분흡수 억제,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났다.

**【시행】** 1967년 3월 「공원법」 제정으로 12월에 자연생태계의 거점으로서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3개소(경주·계룡산·한려수도)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1980년 환경청이 설치되고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86~1990년)까지 실시하여 낙동강하구 등 3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최초로 지정하였다. 1990년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기존의 사후관리행정에서 사전예방행정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작되었다.

**【변천】** 생태계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보호와 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1997년 8월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생태계보전지역을 생

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핵심·완충·전이구역 등으로 세분하여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1997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그동안 지정된 8개소의 보전지역을 국가(낙동강하구, 지리산, 대암산, 우포늪)와 시·도(대덕산·금대봉, 광양 백운산,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 거제시 고란초서식지)로 분리하여 관장하였다. 논란 끝에 영월댐 건설 백지화와 동강 생태계보전으로 결말을 본 환경분야의 큰 변혁을 겪으면서 생태계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다. 2001년 1월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면제대상이던 공공사업에까지 확대하고 협력금반환제도(2001년)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제도(2007년)도 신설하여 생태복원 강화와 대규모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지리산 반달곰·월악산 산양 등) 생태계 복원 및 보전에 기여하였다. 난계획과 난개발을 사전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국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작성하여 신도시건설에 적용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강화하여 왔다.

**【결과·의의】** 지난 30여 년간의 노력으로 임목축적량의 3배 증가,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각종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이 절실하다. 주요 생태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생태축 구축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과 대간·정맥을 잇는 블루-그린-네트워크(Blue-Green Network)를 형성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을 강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생태계/오염물질/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지역/블루-그린-네트워크

**【참고문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VI(한국개발원, 2010); 이은엽, 「생태계 복원의 개념과 이해」, 『토지와 기술』 제18권 제3호(2005).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개도국 지원

**【소항목】** 개도국 지원

● 개도국 지원	
----------	--

**【정의】** 인도주의적 정신과 지구촌 공동체 속에 운명을 함께 한다는 상호 의존성의 인식에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 대하여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제공하여 그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최빈국 주민의 빈곤퇴치와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지원을 말한다

**【배경】** 국제개발협력 참여는 원조수원(受援)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경제발전과정에서 총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1957년을 정점으로 무상원조는 1959년 말 유상원조로 대체되었고, 이후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이 시작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원조수혜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차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고 200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원조공여는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지원하에 개도국 연수생초청사업과, 1977년 외교부가 1백만 달러(9억 원)상당의 기자재를 공여함으로써 최초로 물자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인 국제개발 교환프로그램(IDEP)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원조사업이 개시되었다.

**【시행】**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하고자 300억원을 출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1년 1월 외교부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으로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였다. 1987년부터 확대시켜 온 결과, 2000년도에 2.12억 달러에서 2009년도에는 8.16억 달러(ODA/GNI 0.1%)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GNI 대비 ODA규모는 다른 23개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과 비교하면 DAC회원국 평균 0.33%에 비해 1/3미만 수준이며 규모면에서도 하위권(19위)에 해당한다. 2003년도부터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를 능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양자간 무상: 양자간 유상: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4.5:2.5:3으로 DAC회원국의 원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변천】** 2009년 11월 25일 DAC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9년 12월 29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까지 GNI대비 0.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지원단을 통해 전기·전자·산업설비·생명공학 등 과학기술분야의 젊은 이공계인력으로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 등에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중동지역이나 개도국의 농업개발을 위한 농업기술지원단의 파견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의료시설 미비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개도국 어린이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해외사업과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보급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의의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외국인 새마을 교육·해외청년봉사단 활동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과·의의】** 우리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국제적 책임에 걸맞는 ODA규모의 증액과 질적 개선(무상원조비율의 상향과 언타이드화의 단계적 실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년개발목표(MDGs)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형 원조기반의 구축,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의 발전 등을 통해,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ODA 증대를 통한 협력강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핵심어】** 개도국지원/공적개발원조(ODA)/한국국제협력단(KOICA)/양허성차관/유무상원조/과학기술지원단/농업기술지원단/세이브더칠드런/새마을운동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2009);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III(한국개발원, 2010).

- 【사진자료】** 672. 20091231 탄자니아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물 저장 탱크  
673. 20030605 이라크 파병 제마부대 장병들의 무료 의료봉사  
674. 20091114 레바논 파견 동명부대의 UN 메달 수여식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

**【소항목】**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	--

**【정의】** 국제연합(이하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은 평화를 위협하는 국지적인 분쟁과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소규모의 군대를 현지에 파견하여 교전자간의 정전이행 감시 및 군사력철수 감독·외국군철수 감독·완충지대 설립·군대분리 및 해산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사태의 진정을 도모하는 유엔의 활동이다. 이에 각국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파병한 병사를 유엔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이라 한다. 푸른색의 헬멧이 특색이며 「블루헬멧」이라고도 불린다.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았다.

**【배경】**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7년 그리스 북부국경지대 분쟁사태의 조사와 평화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발칸문제특별위원회」(UNSCOB)가 시초이다. 이후 이스라엘·보스니아·소말리아 등 여러 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다. 냉전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유엔헌장 1조 1항)」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탄생하고 발전해 왔다. 종래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과 동의를 전제로 파견되었지만, 냉전종식 후에는 인도상 필요에 의거하여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예도 있다.

**【시행】**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극심한 분쟁에 휘말린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 활동을 결의할 수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 활동이 결의되면 유엔평화유지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이러한 평화유지 활동에 분쟁의 억제를 위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평화유지군을 결성할 수 있다. 국제연합은 상시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은 임무마다 각국의 자발적인 파병으로 결성된다.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은 세 가지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첫 번째 통제자는 유엔사무총장으로 해당 임무의 공식적인 지도자이다. 다음이 해당 임무에 의해 결성된 평화유지군의 사령관이다. 마지막으로 평화유지군의 보급과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평화유지군의 임무에 관여하게 된다.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에 처음으로 파견하여 유엔PKO 임무단에 합류하였다.

**【변천】** 유엔의 PKO 신속 참여노력과 함께, 우리도 1995년 2월 유엔상비체제에 약 800여 명의 한국군요원을 참여시킨다는 방침 아래 「신속배치주도그룹」 26개국의 일원으로 유엔의 신속대응능력강화에 기여하였다. 1993년 소말리아에 250여 명의 공병대대(상륙수 부대)를 파견한 이래, 1994년 9월 서부사하라에 의료지원, 1995년 10월 앙골라에 인도적 재건 지원과 정전감시, 1999년 1월 동티모르의 독립정부수립지원과 선거감시, 2002년 2월 사이프러스에 유엔특사 보좌 사령관 1명 파견, 2004년 9월 브룬디에 정전감시 군옵저버 2명 파견 등의 참여 실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2008년부터 인도·파키스탄·그루지아·라이베리아·아프가니스탄·수단·동티모르·네팔 등 평화유지부대에 27명의 군 옵저버를 파견하고, 레바논(UNIFIL)에 359명 규모의 보병부대(동명부대)를 파견하는 등 8개 PKO 임무단에 4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2008년 7월 레바논에 파견한 동명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됨에 따라 중동지역 평화정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결과·의의】** 한국은 유엔에 대한 PKO 분담금 10대 기여국이며, 인적 참여에 있어서는 119개 PKO 파병 국가 중 38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개 유엔PKO 임무단에 참여하였다. 2008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PKO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다.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유엔 PKO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관련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유엔내 PKO논의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한국의 실질적 기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핵심어】** PKO/국제평화/유엔안전보장이사회/소말리아/PKO 국제회의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2009); 김희오, 「탈냉전시대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윤리연구』 Vol.48 No.1(2001).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글로벌 지도력

**【소항목】** UN 사무총장

● UN 사무총장	G20정상회의
-----------	---------

**【정의】** 국제연합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은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인 사무국의 수장이다. 주요 권한은 1만 6천여 명의 사무국 및 산하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총 4만 명에 대한 인사권과 국제연합 내 모든 기관과 협의하며 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국제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업무도 맡고 있다.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원수 내지는 행정수반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외교관 이상의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공식 연봉은 22만 7천 54달러이다.

**【원인·배경】** 1991년 9월 18일 유엔에 가입한 우리 정부는 유엔외교를 강화하여 유엔 산하기구의 이사국과 주요 회의 의장단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가입 4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역임뿐만 아니라, 1992년에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진출하여 4차례의 이사국을 역임하였고 그 외에 각종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개발계획(UNDP) 등의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등 활발한 유엔활동을 전개하였다. 2001년에는 제56차 총회 의장직에 한승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진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전개】** 지역별 순환이라는 유엔 사무총장 선출 관행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중반부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선출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40년에 가까운 외교관 경력과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 등 유엔 관련 경험, 외교장관으로서 관리자적 역량 등 개인 자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10월 우선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진출 교섭을 추진해 나갔다. 2005년 9월 제60차 유엔총회, 2005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05년 12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료회의, 200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등을 활용하여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국들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공식적인 출마선언 이전에도, 반 장관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부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하였다.9이런 가운데 2006년 2월 14일 반기문 외교장관은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물밑 교섭을 추진하는 가운데

데,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순방, 반기문 외교장관의 아르헨티나, 페루 공식 방문 및 아랍연맹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및 중남미 지역의 지지세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06년 4~5월 덴마크·그리스·카타르·탄자니아 방문, 2006년 7월 아프리카 연합(AU)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결과】** 2006년 7월 안보리 내 1차 예비 투표를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친 예비투표에서 반 장관은 계속 최고 득표로 앞섰다. 9월 14일 2차 투표와 2주 후에 실시된 3차 투표에서 점점 득표수를 벌이자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기 시작하였다. 10월 3일 안보리에서의 4차 투표 결과,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찬성 14표, 기권 1표를 얻은 반기문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2006년 10월 13일 만장일치로 반기문 장관을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임명하고, 반 장관이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여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 되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6년 12월 14일 취임 선서식을 갖고, 2007년 1월 1일자로 공식 임기를 개시하였다.

**【의의】**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직 진출은 국가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제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 연임이 확정되어 2016년 말에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핵심어】** 유엔사무총장/반기문/유엔외교/국가적 위상/APEC/세계경제포럼(WEF)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2009); 박치영,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적 기능」, 『평화연구』 Vol.4 No.1(국제평화연구소, 1984).

**【사진자료】** 675. 20070128 반기문 사무총장의 콩고 킨샤샤 아동병원 방문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글로벌 지도력

**【소항목】** G20정상회의

UN 사무총장	● G20정상회의
---------	-----------

**【정의】**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2010 G-20 Seoul summit)는 20개국의 세계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모인 다섯 번째 모임(Group: G)으로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현안에 관한 주제를 토의하고자 2010년 11월 11일 및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G20 회원국은 기존의 G7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에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그리고 EU 의장국(순번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인·배경】** G20은 오일쇼크를 계기로 선진경제국들이 경제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1973년 조지 슈츠(George P. Schultz) 미국 재무장관의 제의로 개최된 G5(미, 프, 영, 독, 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출발이었다. 이후 1975년 이탈리아, 1976년 캐나다가 참가하여 7개국(G7)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 러시아가 정식가입 G8체제를 완성하였다. 그간에 G7 외에 지난 30년간 주요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지만 국제금융체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들 국가를 포괄하는 국제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 금융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6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선진국 금융위기의 여파가 신흥개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공조와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시스템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침내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G20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0년 11월 11~12일 이틀간 한국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이틀간 G20 회원국과 5개 비회원 초청국(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국제연합(UN)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합의내용은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인 「서울액션플랜」을 마련하였고, 국제금융기구 개혁문제로 IMF 쿼타 및 지배구조개혁 방안 마련과 IMF에 이행상황을 재무장관회의 때마다 보고하도

록 요청하였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IMF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제도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금융규제 개혁으로 은행의 자본·유동성 규제(BaselIII)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무역에 있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 공감과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 개발컨센서스」에 합의하였다.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하여 유기적 네트워크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신설하고, 에너지분야 향후 추진과제(화석연료 보조금, 에너지가격 변동성, 해양환경보호)에 합의하였다.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G20의 적극적 참여의지 재확인과 녹색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 공조 방안에 합의하였다. 반부패 국제공조를 위한 행동계획의 합의와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개최를 환영하고,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결과】** 의제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의 본문」 채택과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3개 부속서(Annex),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약표」인 1개 첨부문서(Supporting document)에 합의하였다.

**【의의】**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G20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Premier Forum으로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비(非)G7국가로서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개최하여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논의의 주도 경험을 쌓는 소중한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였다.

**【핵심어】** 서울G20정상회의/G5/서울액션플랜/서울 개발 컨센서스/비즈니스 서밋/G7/DDA

**【참고문헌】**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서울G2 정상회의 개최결과 보도자료』, 2010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 『한국외교의 60년: 1948~2008』(2009).

**【사진자료】** 676. 20110520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대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중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 대한민국의 미래

**【전시항목】**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소항목】**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 건설

● 자본주의 4.0 시대	● 문화예술의 세계 일류국가
● 남북통일	● 인류평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 선진정치문화	● 학문과 과학기술의 세계선도
● 공정사회, 투명정령사회	● 초일류 기업, 중소기업의 강화
● 미래지도자 육성	● 녹색성장과 자연친화적 삶
● 창조성 개발, 교육의 선진화	● 공동체문화 발현

**【정의】** 후손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추구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와 과제들을 선정하여 설명한 것이다.

**【배경】**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급속한 산업화·정보화·지식화를 통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압축적 발전」을 이루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정치적·사회적·인종적 다원성은 높아졌으나 그에 따른 공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사회적 대통합의 과제 해결에 직면하고 있다. 장차 사회통합·복지·환경보호·안전한 사회 등을 갖추어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미래사회 전망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국가적 비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인 것이다.

**【내용】**

**1. 자본주의 4.0 시대**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가 주장하였는데, 고전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신자본주의(3.0)로 발전해 온 자본주의는 이제 빈곤층(18.1%: 2009년)을 최대한 줄이는 자본주의(4.0)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되 기업의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신자본주의(3.0)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 한계(빈곤층 심화 내지 양극화)에 도달하였다. 빈곤층의 감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생과 상호공존·동반성장을 통한 「따뜻한 자본주의」로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 기업들은 성장하여 부를 취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미래에는 기업이 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에 나눔의 문화(기부·봉사·배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 677. 20091218 기업들의 사회봉사

## 2. 남북통일

분단(1945년 8월 15일) 이후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제냉전종식이라는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평화통일을 점진적으로 달성해간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왔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6자(한국·북한·미·일·중·러)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과 경제력 격차 축소를 통한 남북의 경제통합,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통일에 이르는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잘 추진하여 남북 간 상생과 호혜의 경제공동체형성, 남북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678. 20110617 수녀들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기원행사

## 3. 선진정치문화

한국의 정치문화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권위주의적 속성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로 인하여 다양성·자율성이 무시된 가부장적인 위압적인 정치문화로 불신(표리부동)과 한(恨)의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객관적인 가치추구, 이견을 가진 집단 간의 타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사고, 흑백논리, 비다양성(대량화·규격화)이 과거 산업사회를 리드할 수 있었지만, 미래사회에는 권위주의통치 형태를 청산함과 동시에 도덕적 사명감, 한의 정치(도덕적 허무주의·정치적 냉소주의)를 청산하고 자유와 책임, 정당한 분배, 참여와 양보, 타협의 정치문화를 확립하여 정치문화 선진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679. 20090401 시민들의 정치참여 운동

680. 20110726 선거연수원,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개최

## 4. 공정사회, 투명청렴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보장,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키움과 나눔의 조화를 만들어 이를 통해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윤리적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승복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특권과 편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기업 등 모든 사회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공정하고 투명·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681. 20090424 네팔 선거위원회 관계자의 선거 참관

## 5. 미래 지도자 육성

21세기 지식사회와 전문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친 유능한 인재의 발굴과 양성은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양성이야말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첫째 미래에 닥칠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의 육성과, 둘째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여 각 부문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의 배양, 셋째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적 차원의 미래인재 및 지도자 양성기관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창조성 계발, 교육의 선진화

창조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육성에 교육계가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창조성 개발의 교육방법은 교사중심방법의 강의식이나 주입식·암기식 지식전달교육에서 벗어나 고등정신능력(사고력·협동력·문제해결력·창의력) 개발의 목적에 따라 경험적 활동의 행동변화가 되며 발견하고 탐구하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입시위주의 비본질적 교육형태를 시정하여 교육자적 사명감의 회복과 같은 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자들의 사기양양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아울러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단의 선진화 작업도 병행해가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682. 20110815 어린이들의 DNA실험

## 7. 문화예술의 세계 일류국가

국내적으로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배려·국가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 반영·녹색생활 문화기반 확충 및 사회적공감대 형성·콘텐츠수출 기반조성 및 저작권 보호 강화·여가활동 공간 확충 등의 정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들 목표가 달성될 때 대한민국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자료】 683. 20110817 광주 지역학생들의 아시아 문화주간행사

684. 20080920 시드니한인들의 한가위 축제

## 8. 인류평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

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실업자·노인과 모자(母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복지도 불가결한 것이다. 국민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사회통합·지속가능성 확보·일자리창출 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의 목표를 달성하여 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자료】 685. 20081229 서울 서초구 국립디지털 도서관

### 9. 학문과 과학기술의 세계선도

교육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시너지효과를 활용한 체계적 과학기술인재양성을 통하여 세계 선진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을 결합) 사고능력을 배양, 둘째 교사·학생 대상의 현장연수·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첨단기기·장비에 대한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 및 수업모델의 개발, 셋째 세계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생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제의 구축과 R&D능력개발, 넷째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도입 등을 마련하여 세계선도의 과학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686. 20091230 전기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이온전지 연구

### 10. 초일류 기업, 중소기업의 강화

선진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일류기업과 상생관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체질강화가 중요하다. 기업은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인류사회에 공헌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원리에 입각한 단기적인 순간의 이익집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많은 강한 중소기업과 상생관계를 통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과 창조적 혁신능력의 배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내수기반 및 수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대·중소 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의 완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1. 녹색성장과 자연친화적 삶

녹색성장이란 경제·환경의 조화를 통한 균형된 성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측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국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둘째 저탄소형 국토개발·생태공간 조성 확대·녹색교통체계·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을 확립하여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셋째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녹색가교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일류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야 할 것이다.

- 【사진자료】** 687. 20101001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권장행사  
688. 20071216 태안기름유출 피해 지역 봉사활동

## 12. 공동체문화 발현

21세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성공여부는 공동체문화를 잘 발현시켜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간의 사회적 갈등의 증폭·지역 및 집단이기주의·질서의 문란 등은 사회전반에 걸친 개인주의의 팽배 내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사익추구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함께 개별구성원의 이익이 균형·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체정신(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상생하며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통합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의의】** 미래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관계의 재편과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개인의 정체성 및 존재감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의 합리적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여 대통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개인 차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하여야 세계선도국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압축적 발전/자본주의 4.0시대/남북통일/선진정치문화/공정사회/미래지도자/교육의 선진화/세계일류국가/복지향상/초일류기업/녹색성장/공동체문화

**【참고문헌】** 여의도연구소,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건국 60주년 기념토론회』(2008); 이승중, 「사회교육으로서의 시민공동체운동위 추진모형」, 『시민교육연구』 Vol.22 No.1(1996).

- 【사진자료】** 689. 20110315 구제역 방역활동에 대한 횡성주민 보은잔치  
690. 201009 김제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을 위한 마을회관

**【작성자】** 한상인(경일대 교수)

**【감수자】** 강규형(명지대 교수)